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기획조정실, 무역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2026. 1.



산업통상부

목 차

I. 세 입 3

<일반회계>

(1) 토지대여료	7
(2) 건물대여료	11
(3) 기타재산이자수입	14
(4) 과태료	16
(5) 과징금	19
(6) 가산금	21
(7) 기타경상이전수입	24
(8) 기타잡수입(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	27
(9)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수입)	29
(10) 기타유가증권매각대	31

II. 세 출 33

<일반회계>

(1)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7133-301)	41
(2) 인건비 (7101, 7102)	49
(3) 기본경비 (7111, 7118)	55
(4)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7132-303)	62
(5)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7142-317)	76
(6)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7131-501)	85

2. 무역위원회 101

<일반회계>

- (1) 무역구제지원사업 (1233-301) 104

3. 국가기술표준원 117

<일반회계>

- (1)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3736-301) 122
- (2) 신기술제품인증 (3731-301) 170
- (3) 국제표준활동지원 (3731-302) 194
- (4)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 (3736-302) 214
- (5)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ODA) (3731-303) 236
- (6)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3732-303) 259
- (7)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 (3736-304) 278
- (8) 안전제도기반조성 (3732-304) 293
- (9) 한국인 인체데이터 조사 및 활용기반 구축 (3731-304) 311
- (10)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R&D) (3731-305) 329
- (11)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3731-306) 375
- (12)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 (3732-306) 393
- (13)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3731-307) 408
- (14)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 (3732-307) 421
- (15)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 (3731-308) 437
- (16) 국가표준활성화 (3731-309) 457
- (17) 제품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 (3732-310) 485
- (18)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 (3731-312) 509
- (19) 한국제품안전관리원지원 (3732-312) 528
- (20) 해외인증지원체계기반구축 (3731-328) 545

(21)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R&D) (3731-330)	574
(22) 국제표준기반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R&D) (3731-331)	589
(23) 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및실증(R&D) (3731-339)	600
(24)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 (7134-301)	612
(25) 기술표준정책 (7134-302)	620

기획조정실

세 입

세입예산 총괄표(기획조정실)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결산	2025예산		2026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예산	정부안	확정(B)	(B-A)	%
운영지원과	155,387	188,767	188,767	175,074	175,074	△13,693	△7.3
<일반회계>	155,387	188,767	188,767	175,074	175,074	△13,693	△7.3
51 관유물대여료	27,855	22,536	22,536	27,929	27,929	5,393	23.9
토지대여료 (51-511)	23,260	18,178	18,178	23,515	23,515	5,337	29.4
건물대여료 (51-512)	4,595	4,358	4,358	4,414	4,414	56	1.3
54 기타이자수입 및재산수입	38,119	23,939	23,939	15,066	15,066	△10,805	△45.1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38,119	23,939	23,939	15,066	15,066	△10,805	△45.1
56 벌금,몰수금및 과태료	1,541	1,120	1,120	1,244	1,244	124	11.1
과태료 (56-563)	191	364	364	158	158	△206	△56.6
징계부과금 (56-564)	2	-	-	-	-	-	-
과징금 (56-565)	1,348	756	756	1,086	1,086	330	43.6
57 변상금 및 위약금	5	-	-	-	-	-	-
변상금 (57-571)	5	-	-	-	-	-	-
58 가산금	1	12	12	8	8	△4	△33.3
가산금 (58-581)	1	12	12	8	8	△4	△33.3
59 기타경상이전 수입	86,927	131,758	131,758	86,838	86,838	△44,920	△31.1

구분	2024결산	2025예산		2026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예산	정부안	확정(B)	(B-A)	%
(59-596) 기타경상이전수입	86,927	131,758	131,758	86,838	86,838	△44,920	△41
69 잡수입	6	902	902	921	921	19	2.1
기타잡수입 (69-691)	916	902	902	921	921	19	2.1
84 유가증권매각대	0	8,500	8,500	45,000	45,000	36,500	429.4
기타유가증권 매각대 (84-843)	0	8,500	8,500	45,000	45,000	36,500	429.4
15 자산매각대	21	-	-	-	-	-	-
매각대 (72-721)	21	-	-	-	-	-	-

(1) 토지대여료

51 - 51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토지대여료	23,260	18,178	18,178	23,515	23,515	5,337	29.4

가.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등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를 외화로도 표시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2(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44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가격을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①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게 임대한 토지 임대료

다. 2026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	본예산	18,17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투자지역 : $7,254,585.04\text{m}^2 \times 1,352.10\text{원} = 9,809\text{백만원}$ ▪자유무역지역 : 예상임대면적$\times$예상단가=7,82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산 : $630,127.17\text{m}^2 \times 5,736\text{원} = 3,614\text{백만원}$ - 군산 : $927,482.9\text{m}^2 \times 1,176\text{원} = 1,090\text{백만원}$ - 대불 : $936,862.5\text{m}^2 \times 1,092\text{원} = 1,023\text{백만원}$ - 동해 : $152,721\text{m}^2 \times 949\text{원} = 145\text{백만원}$ - 울춘 : $211,127.5\text{m}^2 \times 1,488\text{원} = 314\text{백만원}$ - 김제 : $601,541.2\text{m}^2 \times 840\text{원} = 505\text{백만원}$ - 울산 : $404,488.1\text{m}^2 \times 2,798\text{원} = 1,131\text{백만원}$ ▪ 미수납건 예상수납액 : 547백만원
	추경		
2026예산		23,51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투자지역 : $7,368,386.72\text{m}^2 \times 1,352.1\text{원} = 15,716\text{백만원}$ ▪자유무역지역 : 예상임대면적$\times$예상단가=7,79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산 : $630,127.17\text{m}^2 \times 5,736\text{원} = 3,614\text{백만원}$ - 군산 : $927,482.9\text{m}^2 \times 1,188\text{원} = 1,102\text{백만원}$ - 대불 : $936,862.5\text{m}^2 \times 1,008\text{원} = 944\text{백만원}$ - 동해 : $144,683\text{m}^2 \times 829\text{원} = 120\text{백만원}$ - 울춘 : $217,562.7\text{m}^2 \times 1,500\text{원} = 326\text{백만원}$ - 김제 : $594,265.9\text{m}^2 \times 864\text{원} = 513\text{백만원}$ - 울산 : $404,488.1\text{m}^2 \times 2,796\text{원} = 1,130\text{백만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17,480	17,480	17,480	22,798	21,036	120.3	92.3	1,762	
2023	17,779	17,779	17,779	18,784	16,607	93.4	88.4	2,177	
2024	18,162	18,162	18,162	25,931	23,260	128.1	89.7	2,671	
2025	18,178	18,178	18,178	25,614	21,948	120.7	85.6	3,666	
2026	23,515	23,515	23,515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조성욱 팀장		윤지경
		044-203-5080		044-203-5086

(2) 건물대여료	
51 - 512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건물대여료	4,595	4,358	4,358	4,414	4,414	56	1.3

가.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②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44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가격을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 ①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 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자유무역지역의 표준공장, 물류창고 및 청사·업무지원동 입주기업에 부과한 건물임대료

다. 2026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	본예산	4,35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무역지역) 예상임대면적 × 예상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산 : 215,260.27㎡ × 9,839원 = 2,118백만원 - 군산 : 77,064.63㎡ × 7,250원 = 558백만원 - 대불 : 62,289.56㎡ × 8,215원 = 512백만원 - 동해 : 34,913㎡ × 6,816원 = 238백만원 - 울춘 : 10,272.19㎡ × 8,181원 = 84백만원 - 김제 : 35,149.78㎡ × 10,704원 = 376백만원 - 울산 : 39,776.53㎡ × 8,157원 = 324백만원 ▪ 미수납건 예상수납액 : 148백만원
	추경		
2026예산		4,41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무역지역) 예상임대면적 × 예상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산 : 233,105.63㎡ × 9,976원 = 2,225백만원 - 군산 : 77,064.63㎡ × 6,556원 = 505백만원 - 대불 : 62,289.56㎡ × 7,298원 = 455백만원 - 동해 : 34,913㎡ × 5,632원 = 197백만원 - 울춘 : 12,359.12㎡ × 8,088원 = 99백만원 - 김제 : 36,810.5㎡ × 10,893원 = 400백만원 - 울산 : 41,392.89㎡ × 10,542원 = 436백만원 ▪ 미수납건 예상수납액 : 97백만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5,378	5,378	5,378	4,497	3,880	72.1	86.2	617	-
2023	5,378	5,378	5,378	4,931	3,934	73.1	79.7	996	-
2024	4,915	4,915	4,915	5,488	4,595	93.5	83.7	894	-
2025	4,358	4,358	4,358	5,092	3,705	85.0	72.8	1,387	-
2026	4,414	4,414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 · 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조성욱 팀장		윤지경
		044-203-5080		044-203-5086

(3) 기타재산이자수입

54 - 546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재산이자 수입	38,119	23,939	23,939	28,200	13,134	△10,805	△45.1

가.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세입 개요

- 출연금, 보조금 사업비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다. 2026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	본예산	23,939,000	$\square$ '24년 사업비 총액 $\times$ 예상 이자수익율(최근 3개년 이자수익율 가중평균) = 5,009,586백만원 $\times$ $\{(0.16\% \times 0.2) + (0.3\% \times 0.3) + (0.71\% \times 0.5)\}$ = 23,939백만원
	추경		
2026예산		13,134,000	$\circ$ ('25년 사업비 총액 - '25년 이체 사업비 총액) $\times$ {최근 3개년 이자수익율(수납액/사업비) $\times$ 가중평균} = 2,006,808백만원 $\times$ $\{(0.3\% \times 0.2) + (0.71\% \times 0.3) + (0.76\% \times 0.5)\}$ = 13,134백만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장수결장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20,891	20,891	20,891	12,437	11,974	96.2	96.2	462	-
2023	15,102	15,102	15,102	32,864	32,825	217.3	99.8	38	-
2024	12,774	12,774	12,774	38,127	38,119	298.4	99.9	7	-
2025	23,939	23,939	23,939	34,162	33,945	141.7	99.3	217	-
2026	13,134	13,134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 · 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조성욱 팀장		윤지경
		044-203-5080		044-203-5086

(4) 과태료	
56 - 56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과태료	191	364	364	268	158	△206	△56.6

가. 법적 근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8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2. 제2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4.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게 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자
 - 2의2. 제21조의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실태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3.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4.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무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 5. 제27조를 위반하여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명날인을 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녹색경영체제의 인증 등)
 - ① 녹색경영체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사업의 인정을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다.
 - 1. 녹색경영체제 인증사업

⑧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 수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등)
- ② 환경경영체제인증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준용한다.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제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증기간·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나. 세입 개요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인증제품 재제조 표시 위반, 품질보증기간 미고지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위반(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거짓신고, 엔지니어링 사업 관련 명의 대여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다. 2026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	본예산	36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개년('21~'23년) 수납액 × 가중평균 = 110백만원 $\times [(220 \times 0.2) + (68 \times 0.3) + (92 \times 0.5)] = 110\text{백만원}$ ▪ 미수납건 예상수납액 : 254백만원
	추경	-	-
2026예산		15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개년('22~'24년) 수납액 × 가중평균 = 137백만원(A) $\times [(68 \times 0.2) + (92 \times 0.3) + (191 \times 0.5)] = 137\text{백만원}$ ▪ 미수납건 예상수납액 : 131백만원(B) ▪ 이체부서 최근 3개년('22~'24년) 수납액 × 가중평균 = 110백만원(C) $\times [(67 \times 0.2) + (51 \times 0.3) + (163 \times 0.5)] = 110\text{백만원}$ <p>⇒ 전체부서예상액(A) + 예상미수납액(B) - 이체부서예상액(C) = 137백만원 + 131백만원 - 110백만원 = 158백만원</p>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600	600	600	195	68	11.3	34.8	127	-
2023	600	600	600	243	92	15.3	37.8	151	-
2024	150	150	150	433	191	127.3	44.1	242	-
2025	364	364	364	197	175	48.0	88.8	21	-
2026	268	268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 · 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조성욱 팀장		윤지경
		044-203-5080		044-203-5086

(5) 과징금
56 - 565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과징금	670	756	756	1,112	1,086	330	43.7

가. 법적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한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1조(과징금) ①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거래 금액이 없거나 거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 불공정무역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다. 2026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	본예산	756,000	▪최근 3개년('21~'23년) 수납액 산술평균 × 가중평균 = 756백만원 * [(294*0.2) + (962*0.3) + (818*0.5)] = 756백만원
	추경	-	
2026예산		1,086,000	▪최근 3개년('22~'24년) 수납액 산술평균 × 가중평균 = 1,112백만원(A) * [(962*0.2) + (818*0.3) + (1,348*0.5)] = 1,112백만원 ▪ 이체부서 최근 3개년('22~'24년) 수납액 산술평균 × 가중평균 = 26백만원(B) * [(78*0.2) + (35*0.3) + (0*0.5)] = 26백만원 ⇒ 전체부서예상액(A) - 이체부서예상액(B) = 1,112백만원 - 26백만원 = 1,086백만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장수결장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1,251	1,251	1,251	8,090	963	76.9	11.9	7,127	-
2023	509	509	509	7,959	818	160.7	10.2	7,140	-
2024	670	670	670	8,459	1,348	201.2	15.9	7,110	-
2025	756	756	756	11,833	4,702	612.9	39.7	7,130	-
2026	1,112	1,112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 · 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조성욱 팀장		윤지경
		044-203-5080		044-203-5086

(6) 가산금
58 - 58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가산금	1	12	12	8	8	△4	△33.3

가. 법적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6(가산금) 법 제11조의3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3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② 무역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과징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도록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까지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③ 무역위원회가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그 과징금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과 가산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 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할 과징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세입 개요

-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미납부 시 가산금 부과
-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미납부 시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부과 후, 기한 내 미납부 시 가산금 부과

다. 2026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	본예산	1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개년('21~'23년) 수납액 산술평균 × 가중평균 = 12백만원 * $[(16 \times 0.2) + (0 \times 0.3) + (0.7 \times 0.5)] = 4$백만원 ▪ 미수납건 예상수납액 : 8백만원
	추경	-	-
2026예산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개년('22~'24년) 수납액 산술평균 × 가중평균 = 1백만원 * $[(0 \times 0.2) + (0.7 \times 0.3) + (1 \times 0.5)] = 1$백만원 ▪ 미수납건 예상수납액 : 7백만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18	18	18	256	0.2	1.1	0.07	256	-
2023	18	18	18	257	0.8	4.4	0.3	256	-
2024	6	6	6	256	1	16.7	0.4	255	-
2025	12	12	12	226	1	8.3	0.4	225	-
2026	8	8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 · 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조성욱 팀장		윤지경
		044-203-5080		044-203-5086

(7)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경상이전 수입	86,927	131,758	131,758	131,758	86,838	△44,920	△34.1

가.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유재산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세입 개요

- 출연금,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및 기타 반납금, 연체료 등

다. 2026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	본예산	131,75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사업비 총액 × 예상 반환율(최근 3개년 반환율 가중평균) $= 5,009,586\text{백만원} \times \{(3.53\% \times 0.2) + (2.71\% \times 0.3) + (1.80\% \times 0.5)\} = 121,280\text{백만원}$ ▪ 미수납건 예상수납액 : 10,478백만원
	추경	-	-
2026예산		86,83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사업비 총액 - '25년 이체 사업비 총액) × 최근 3개년 반환율(수납액/사업비) 가중평균 $= 2,006,808\text{백만원} \times \{(2.71\% \times 0.5) + (1.8\% \times 0.3) + (1.74\% \times 0.2)\} = 45,053\text{백만원}$ ▪ '22~'24년 평균 실적 고려 추가수납액 : 41,785백만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장수결장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163,595	163,595	163,595	111,161	106,214	64.9	95.5	4,946	-
2023	142,660	142,660	142,660	84,764	83,437	58.4	98.4	1,327	-
2024	120,302	120,302	120,302	88,244	86,927	72.3	98.5	1,317	-
2025	131,758	131,758	131,758	104,998	98,744	74.9	94.0	6,253	-
2026	86,838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 · 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조성욱 팀장		윤지경
		044-203-5080		044-203-5086

(8) 기타잡수입(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

13 - 69 - 69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잡수입	6	32	32	31	31	△1	△3.1

가. 법적 근거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거나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따라 수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징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입주업체의 전기·수도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등

다. 2026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	본예산	32,000	▪최근 3개년('21~'23년) 수납액 산술평균 × 가중평균 = 20백만원 * [(19×0.2) + (38×0.3) + (10×0.5)] = 20백만원 ▪ 미수납건 예상수납액 : 12백만원
	추경	-	-
2026예산		31,000	▪최근 3개년('22~'24년) 수납액 산술평균 × 가중평균 = 14백만원 * [(38×0.2) + (10×0.3) + (6×0.5)] = 14백만원 ▪ 미수납건 예상수납액 : 17백만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21	21	21	39	38	180.9	97.4	1	-
2023	34	34	34	12	10	29.4	83.3	2	-
2024	26	26	26	8	6	23.1	75.0	2	-
2025	32	32	32	25	24	75.0	96.0	1	-
2026	31	31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 · 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조성욱 팀장		윤지경
		044-203-5080		044-203-5086

(9)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수입)

14 - 69 - 69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잡수입	910	870	870	890	890	20	2.3

가. 법적 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안의 공동시설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 ①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는 각 입주기업체가 해당 공동시설을 이용하여 얻은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별로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비용 전체에 대하여 입주기업체의 건물면적·대지면적 또는 종업원의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권자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자유무역지역 내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공동부담금

다. 2026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	본예산	870,000	■최근 3개년('21~'23년) 수납액 산술평균 × 가중평균 = 870백만원 * [(871*0.2) + (869*0.3) + (871*0.5)] = 870백만원
	추경	-	-
2026예산		890,000	■최근 3개년('22~'24년) 수납액 산술평균 × 가중평균 = 890백만원 * [(869*0.2) + (871*0.3) + (910*0.5)] = 890백만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807	807	807	1,056	869	107.6	82.2	187	-
2023	864	864	864	1,108	871	100.8	78.6	236	-
2024	867	867	867	1,134	910	104.6	80.2	224	-
2025	870	870	870	1,080	780	89.6	72.2	299	-
2026	890	890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 · 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조성욱 팀장		윤지경
		044-203-5080		044-203-5086

(10) 기타유가증권매각대

84 - 84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유가증권 매각대	-	8,500	8,500	45,000	45,000	36,500	429

가. 법적 근거

- 산업집적법 제47조(자금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에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15(공단·의 사업) 제7호
 - 7.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한 자금의 조성·운영 및 투자에 관한 사업

나. 세입 개요

- 수입 내용 : 산업단지환경조성(3333-305) 사업의 내역사업인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 중 산단환경개선펀드로 2016년 취득한 유가증권(수익증권)의 매도
- 수입 금액 및 납기일정 : 유가증권 매도에 따른 수입을 2026년 말까지 국고에 수납

다. 2026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	본예산	8,500,000	2015년 산단환경개선펀드 유가증권 매도 : 8,500,000
	추경	8,500,000	2015년 산단환경개선펀드 유가증권 매도 : 8,500,000
2026예산		45,000,000	2016년 산단환경개선펀드 유가증권 매도 : 45,000,000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장수결잔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2023	-	-	-	-	-	-	-	-	-
2024	-	-	-	-	-	-	-	-	-
2025	8,500	8,500	8,500	8,500	-	-	-	-	-
2026	45,000	45,000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5년 청산 예정인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의 회수 예상자금 일부를 기타유가증권 매각대에 신규 반영 필요(예결위, 2025년 예산)
-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25년 청산 예정인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의 회수 예상자금 일부(8,500백만원)를 기타유가증권매각대에 신규 반영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이재석	김일호	장미란
		044-203-4430	044-203-4432	044-203-4434

세 출

세출예산 총괄표(기획조정실)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결산	2025예산		2026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예산	정부안	확정(B)	(B-A)	%
운영지원과	1,324	1,965	1,965	1,776	1,776	△189	△9.6
<일반회계>	1,324	1,965	1,965	1,776	1,776	△189	△9.6
7100 산업통상자원 부행정지원	1,324	1,965	1,965	1,776	1,776	△189	△9.6
산업통상자원 정책지원 (7133-301)	1,324	1,965	1,965	1,776	1,776	△189	△9.6
구분	2024결산	2025예산		2026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예산	정부안	확정(B)	(B-A)	%
정책기획관	159,142	168,670	168,670	156,187	156,444	△12,226	△7.3
<일반회계>	159,142	168,670	168,670	156,187	156,444	△12,226	△7.3
7100 산업통상자원 부행정지원	159,142	168,670	168,670	156,187	156,444	△12,226	△7.3
국가기술표준원 인건비 (7102-101)	15,548	19,137	19,137	18,428	18,428	△709	△3.7
본부인건비 (7101-101)	95,972	97,729	97,729	85,793	85,793	△11,936	△12.2
광업등록사무소 인건비 (7102-102)	1,515	1,767	1,767	1,801	1,801	34	1.9
마산무역원 인건비 (7102-103)	3,594	3,837	3,837	3,846	3,846	9	0.2

구분	2024결산	2025예산		2026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예산	정부안	확정(B)	(B-A)	%
군산무역원 인건비 (7102-104)	2,236	2,329	2,329	2,598	2,598	269	11.6
광산안전사무소 인건비 (7102-105)	2,008	2,236	2,236	2,262	2,262	26	1.2
대불무역원 인건비 (7102-106)	1,925	2,184	2,184	2,257	2,257	73	3.3
동해무역원 인건비 (7102-107)	1,373	1,579	1,579	1,581	1,581	2	0.1
울촌무역원 인건비 (7102-108)	1,227	1,439	1,439	1,454	1,454	15	1.0
울산무역원 인건비 (7102-109)	1,605	1,741	1,741	1,694	1,694	△47	△2.7
김제무역원 인건비 (7102-110)	1,366	1,412	1,412	1,506	1,506	94	6.7
국가기술표준원 기본경비(총액) (7118-201)	607	669	669	680	680	11	1.6
본부기본경비 (총액) (7111-201)	2,687	2,847	2,847	2,871	2,871	24	0.8
본부공익근무 요원운용 (7111-203)	27	29	29	29	29	-	-
무역투자실 기본경비(총액) (7111-204)	386	518	518	547	547	29	5.6

구분	2024결산	2025예산		2026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예산	정부안	확정(B)	(B-A)	%
산업정책실 기본경비(총액) (7111-205)	180	177	177	177	177	-	-
산업기반실 기본경비(총액) (7111-206)	178	155	155	155	155	-	-
광업등록사무소 기본경비(총액) (7118-208)	65	73	73	77	77	4	5.5
자원산업정책국 기본경비(총액) (7111-208)	44	30	30	30	30	-	-
원전산업정책국 기본경비(총액) (7111-209)	41	30	30	12	12	△18	△600
마산무역원 기본경비(총액) (7118-211)	58	67	67	67	67	-	-
무역위원회 기본경비(총액) (7111-211)	46	40	40	52	52	12	30.0
통상정책국 기본경비(총액) (7111-214)	80	86	86	86	86	-	-
군산무역원 기본경비(총액) (7118-215)	35	39	39	41	41	2	5.1
동부사무소 기본경비(총액) (7118-218)	23	23	23	23	23	-	-
중부사무소 기본경비(총액) (7118-221)	20	20	20	20	20	-	-
남부사무소 기본경비(총액) (7118-224)	26	26	26	26	26	-	-
서부사무소 기본경비(총액) (7118-227)	15	18	18	18	18	-	-

구분	2024결산	2025예산		2026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예산	정부안	확정(B)	(B-A)	%
대불무역원 기본경비(총액) (7118-230)	36	37	37	39	39	2	5.4
동해무역원 기본경비(총액) (7118-232)	5	6	6	6	6	-	-
울춘무역원 기본경비(총액) (7118-233)	4	6	6	6	6	-	-
울산무역원 기본경비(총액) (7118-234)	12	13	13	13	13	-	-
김제무역원 기본경비(총액) (7118-235)	31	33	33	35	35	2	6.1
국가기술표준원 기본경비 (7118-251)	3,337	3,112	3,112	3,076	3,076	△36	△1.2
본부기본경비 (7111-251)	5,098	7,278	7,278	6,181	6,438	△840	△11.5
본부전산운영 경비 (7111-252)	1,157	1,149	1,149	1,145	1,145	△4	△0.4
무역투자실 기본경비 (7111-254)	725	827	827	820	820	△7	△0.9
산업정책실 기본경비 (7111-255)	1,399	1,113	1,113	1,121	1,121	8	0.7
산업기반실 기본경비 (7111-256)	772	849	849	837	837	△12	△1.4
광업등록사무소 기본경비 (7118-258)	158	171	171	168	168	△3	△1.8
마산무역원 기본경비 (7118-261)	281	344	344	342	342	△2	△0.6

구분	2024결산	2025예산		2026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예산	정부안	확정(B)	(B-A)	%
무역위원회 기본경비 (7111-261)	186	407	407	401	401	△6	△1.5
통상정책국 기본경비 (7111-263)	1,606	1,605	1,605	1,613	1,613	8	0.5
자원산업정책국 기본경비 (7111-264)	955	718	718	802	802	84	11.7
군산무역원 기본경비 (7118-265)	237	258	258	256	256	△2	△0.8
원전산업정책국 기본경비 (7111-265)	995	749	749	285	285	△464	△620
동부사무소 기본경비 (7118-268)	139	136	136	168	168	32	23.5
중부사무소 기본경비 (7118-271)	131	134	134	134	134	-	-
통상협력국 기본경비(총액) (7111-271)	57	67	67	67	67	-	-
통상교섭실 기본경비(총액) (7111-272)	109	139	139	139	139	-	-
남부사무소 기본경비 (7118-274)	85	109	109	108	108	△1	△0.9
통상협력국 기본경비 (7111-274)	483	687	687	700	700	13	1.9
통상교섭실 기본경비 (7111-275)	638	1,064	1,064	1,065	1,065	1	0.1
서부사무소 기본경비 (7118-277)	164	142	142	149	149	7	4.9

구분	2024결산	2025예산		2026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예산	정부안	확정(B)	(B-A)	%
대불무역원 기본경비 (7118-280)	232	246	246	245	245	△1	△0.4
동해무역원 기본경비 (7118-282)	135	162	162	161	161	△1	△0.6
울춘무역원 기본경비 (7118-285)	175	147	147	149	149	2	1.4
울산무역원 기본경비 (7118-288)	261	240	240	239	239	△1	△0.4
김제무역원 기본경비 (7118-289)	183	197	197	210	210	13	6.6
행정능률향상 및능력개발 (7132-303)	1,917	1,898	1,898	1,509	1,509	△389	△20.5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정보화) (7142-317)	1,825	1,407	1,407	1,140	1,140	△267	△19.0
산업통상자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7131-501)	2,730	2,983	2,983	4,727	4,727	1,744	58.5

사 업 명
(1)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71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운영지원과	0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3	301
명칭	산업통상부행정지원	본부정책수립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산업통상자 원정책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	정권 과장	조성욱 팀장	김고운 주무관
		재무팀	044-203-5050	044-203-5080	044-203-508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산업통상자원정책 지원	1,393	1,965	1,965	2,034	1,776	258	△9.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93	1,393	1,324	0	69	1,965	1,965	1,912	1,965	1,912	0	53	1,776
· 무기계약직 보수 등	40	40	36	0	4	42	42	35.4	42	35.4	0	6.6	45
· 업무보고 준비 및 시책홍보	771	771	771	0	0	1,342	1,342	1,307	1,342	1,307	0	35	1,219
· 차량, 통산시설 유지 보수 등	107	107	100	0	7	107	107	100	107	100	0	7	107
· 해외파견자 임차 지원 등	280	280	273	273	7	280	280	280	280	280	0	0	280
· 연구용역	71	71	28	0	43	71	71	66	71	66	0	5	-
· 정책지원 우수부서 포상 등	22	22	22	0	0	22	22	22	22	22	0	0	22
· 업무협의 여비	80	80	73	0	7	80	80	80	80	80	0	0	80
· 산업통상자원정책 지원 간담회	22	22	22	0	0	22	22	22	22	22	0	0	22
○ 비목별 분류(합계)	1,393	1,393	1,324	0	69	1,965	1,965	1,912	1,965	1,912	0	55	1,776
· 상용임금(110-03)	33	33	32	0	1	34	34	32	34	32	0	2	37.2
· 일반수용비(210-01)	528	528	528	0	0	676	676	675	676	675	0	1	557.8
· 임차료(210-07)	338	338	330	0	8	338	338	337	338	337	0	1	338
· 유류비(210-08)	30	30	25	0	5	30	30	26	30	26	0	4	30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9	19	17	17	1	19	19	17	19	17	0	2	19
· 복리후생비(210-12)	0.4	0.4	0.3	0	0.1	0.5	0.5	0.4	0.5	0.4	0	0.1	0.5
· 일반용역비(210-14)	0	0	0	0	0	423	423	423	423	423	0	0	662
· 국내여비(220-01)	80	80	73	0	7	80	80	80	80	80	0	2	80
· 사업추진비(240-01)	22	22	22	0	0	22	22	22	22	22	0	0	22
· 일반연구비(260-01)	314	314	270	0	43	314	314	275	314	275	0	38	0
· 포상금등(310-03)	22	22	22	0	0	22	22	22	22	22	0	0	22
· 고용부담금(320-09)	7	7	4	0	3	6	6	3	0	3	0	3	7.3
· 공사비(420-03)	0.1	0.1	0	0	0.1	0.1	0.1	0	0.1	0	0	0.1	0.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393	1,393	1,324	0	69	1,965	1,965	1,912	1,965	1,912	0	55	1,776
· 무기계약직 보수 등	40	40	36	0	4	42	42	35.4	42	35.4	0	5.1	100
-상용임금(110-03)	32.5	32.5	32	0	0.5	34	34	32	34	32	0	2	37.2
-복리후생비(210-12)	0.4	0.4	0.3	0	0.1	0.5	0.5	0.4	0.5	0.4	0	0.1	0.5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고용부담금(320-09)	7	7	4	0	3	6	6	3	6	3	0	3	7.3
· 업무보고 준비 및 시책홍보	771	771	768	0	3	1,342	1,342	1,307	1,342	1,308	0	34	1,219
-일반수용비(210-01)	528	528	528	0	0	676	676	675	676	675	0	1	557.8
-일반용역비(210-14)	0	0	0	0	0	423	423	423	423	423	0	0	662
-일반연구비(260-01)	243	243	240	0	3	243	243	210	243	210	0	33	0
· 연구용역	71	71	30	0	41	71	71	65.5	71	65.5	0	5.5	0
-일반연구비(260-01)	71	71	30	0	41	71	71	65.5	71	65.5	0	5.5	0
· 차량·통신·시설지원 등	107	107	100	0	7	107	107	100	107	100	0	7	107
-임차료(210-07)	58	58	58	0	0	58	58	58	58	58	0	0	58
-유류비(210-08)	30	30	25	0	5	30	30	26	30	26	0	4	30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9	19	17	0	1	19	19	17	19	17	0	2	19
-공사비(420-03)	0.1	0.1	0	0	0.1	0.1	0.1	0	0.1	0	0	0.1	0.1
· 해외근로자임차지원 등	280	280	273	0	7	280	280	280	280	280	0	0	280
-임차료(210-07)	280	280	273	0	7	280	280	280	280	280	0	0	280
· 정책지원 우수부서 포상 등	22	22	22	0	0	22	22	22	22	22	0	0	22
- 포상금 등(310-03)	22	22	22	0	0	22	22	22	22	22	0	0	22
· 업무협의 여비	80	80	73	0	7	80	80	80	80	80	0	0	80
-국내여비(220-01)	80	80	73	0	7	80	80	80	80	80	0	0	80
· 산업통상자원 정 책지원 간담회	22	22	22	0	0	22	22	22	22	22	0	0	22
-사업추진비(240-01)	22	22	22	0	0	22	22	22	22	22	0	0	2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산업통상부 정책의 원활한 수립과 추진을 위해 각 실국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
- 특히, 타 부처에 비해 부족한 기본경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책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확대가 불가피

-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등을 위한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활동도 필요
- 아울러, 서울 등 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이 절실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발전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등
- 대외무역법 제1조, 제4조, 제7조, 제8조 등
- 에너지법 제1조, 제4조, 제12조, 제16조 등

② 추진경위

- '10~12회계연도 19억원 예산규모 편성
- '13회계연도-전년 대비 1억원 삭감, '14회계연도-전년 대비 2.3억원 삭감되는 등 2회계연도 동안 총 3.3억원 삭감되어 정책추진 활동 지원 애로
- '15, '16, '17회계연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나, '18회계연도에 일반수용비 1.2억원 등 총 1.6억원 삭감되어 재정 지원 애로
- '19, '20년도 13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동 예산규모로는 각 실국의 정책추진 활동의 적극적 지원이 어려운 실정
- '21회계연도 예산규모는 일반수용비 3억원, 일반연구비 2.3억원 등 총 5.6억원 증액편성되었으나, '22회계연도에 일반수용비 3억원, 일반연구비 2.6억원, 여비 0.8억원 등 총 7.2억원 삭감되어 지속적인 사업추진 활동 지원 애로
- '23회계연도는 주요 정책 홍보 강화 등을 위해 2.4억원 증액 편성 되었으며, '24회계연도는 산업·통상·자원 정책의 원활한 수립과 정책활동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하였으나 대국민 홍보 강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34	1,391	1,393	1,965	1,77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부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무기계약직 보수 등: ('25) 42→ ('26) 45백만원, +7%

- 산출내역

- 무기계약직 상용임금 1명 × 12개월 × 3.1백만원 = 37.2백만원
- 무기계약직 복리후생비 1명 × 0.5백만원 = 0.5백만원
- 퇴직금 등 고용부담금 1명 × 7백만원 = 7백만원

② 업무보고 주요 사책 홍보 지원 등: ('25) 1,342→ ('26)1,219백만원, -9.1%

- 산출내역

- 업무보고 등 3건 × 36백만원 = 108백만원
- 부처업무평가, 국정과제 평가 등 5건 × 8.2백만원 = 41백만원
- 주요사책 홍보 등 자료인쇄 3건 × 20백만원 = 60백만원
- TV, 라디오, 전광판, 열차 등 정책광고 6건 × 49.1백만원 = 275백만원
- 온라인 콘텐츠 제작 위한 연간 라이선스 구매 = 25백만원
- 방송통신사 저작권 확보 등 (방송 3사 × 6백만원) + (통신 3사 × 10백만원) = 48백만원
- 정책 홍보영상 제작 관련 용역 1건 × 243백만원 = 243백만원
- 카드뉴스 제작 및 SNS 관리 용역 1건 × 180백만원 = 180백만원
- 디지털콘텐츠 홍보 및 광고 관련 용역 1건 × 239백만원 = 239백만원

③ 차량 및 통신시설 유지보수 지원 등: ('25) 107→ ('26) 107백만원, 전년동

- 산출내역

- 장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차량 임차 4대 × 14.7백만원 = 59백만원
- 부내 행사차량 임차 8회 × 0.5 = 4백만원
- 관용차량 유류 지원 14대 × 2.1백만원 = 30백만원
- 차량유지보수 14대 × 0.6백만원 = 8백만원
- 통신시설유지보수비 11백만원
- TF조직 등 긴급 소요 칸막이 공사비 등 0.1백만원

④ 해외파견자 임차지원 등: ('25) 280→ ('26) 280백만원, 전년동

- 산출내역

- 국제기구 파견관 주택임차 지원 4명 × 평균 70백만원 = 280백만원

⑤ 정책지원 우수부서 포상 등: ('25) 22→ ('26) 22백만원, 전년동

- 산출내역

- 우수부서 포상 12회 × 1.8백만원 = 22백만원

⑥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25) 80→ ('26) 80백만원, 전년동

- 산출내역

· 근무지내·외 여비 12개월 × 6.7백만원 = 80백만원

⑦ 산업통상정책지원 간담회: ('25) 22→ ('26) 22백만원, 전년동

- 산출내역

· 산업통상 정책지원 간담회 등 12회 × 1.8백만원 = 2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메세지 제작, 재무결산 용역 수행 · 해외파견관 임차료 및 장·차관 차량 임차료 지급 등
2023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메세지 제작 등 · 해외파견관 임차료 및 장·차관 차량 임차료 지급 등
2024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메세지 제작 등 홍보 관련 용역 수행 · 해외파견관 임차료 및 장·차관 차량 임차료 지급 등
2025	· 산업통상부 정책메세지 제작 등 홍보 관련 용역 수행 · 해외파견관 임차료 및 장·차관 차량 임차료 지급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카드뉴스 제작, SNS 관리, 홍보영상 제작 등 산업통상부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한 정책지원 강화
- 해외파견관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해 국제기구 활동 및 외국정부와 교류 활성화 등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구분	주요업무	수행 주체
추진방향 설정	전반적인 연간 추진방향 설정	각 실국
추진계획 수립	당해연도 연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수립	각 실국
사업 수행	계획에 따라서 각 건별로 사업 수행	각 실국
소요 예산 요청	각 건별로 예산지출 요청	각 실국
예산 지출	각 개별 건별로 예산 지출	재무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3.93	16.65	17.76	16.89	17.73	
2025~2029		16.65	17.76	22.70	23.83	25.0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산업통상부 정책 홍보 및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정책지원 강화 계속 추진
- 해외파견관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국제기구 활동 및 외국정부와 교류 활성화 등에 기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146	△12	1,134	63			1,197	1,145	101.0	95.7	20	32
2023	1,391	-	1,391	20			1,411	1,341	96.4	95.0	-	70
2024	1,393	-	1,393	-			1,393	1,324	95.0	95.0	-	69
2025	1,965	-	1,965	-			1,965	1,910	97.2	97.2	-	5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단위: 백만원,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2) 인건비 (7101, 71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담당관	0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1 / 7102	101 101~110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본부인건비 소속기관인건비	인건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송 주 호	조 기 훈	김 종 호
		정책기획관			
	사업시행주체	기획조정담당관	044-203-5520	044-203-5516	044-203-5518
		산업통상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인건비	128,368	135,390	135,390	123,220	123,220	△ 12,170	△ 9.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34,853	134,707	128,368	0	6,339	135,390	132,349	121,877	132,349	121,877	0	0	123,220
· 인건비	134,853	134,707	128,368	0	6,339	135,390	132,349	121,877	132,349	121,877	0	0	123,220
- 보수 (110-01)	121,487	121,343	116,431	0	4,912	121,392	119,451	110,978	119,451	110,978	0	0	109,234
- 기타직보수 (110-02)	12,402	12,402	11,215	0	1,187	13,064	12,088	10,889	12,088	10,889	0	0	13,100
- 연가보상비 (110-05)	964	962	722	0	240	934	810	10	810	10	0	0	88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산업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 기관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한 인건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산업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0,319	130,558	134,853	135,390	123,22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 |
|---|
|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140,842백만원 |
|---|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 |
|----------------|
| -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
|----------------|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30,502	△189	130,319	0	0	0	130,319	123,645	95	95	0	6,674
2023	130,558	0	130,558	0	△323	0	130,235	125,412	96	96	0	4,823
2024	134,853	0	134,853	0	△146	0	134,707	128,368	95	95	0	6,339
2025	135,390	0	135,390	0	0	0	132,349	121,877	90	92	0	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액 감안하여 감액(22년 추경)
2023	- 본부기본경비(7111-251), 본부기본경비(총액)(7111-201), 기술표준정책(9134-302)로 323백만원 자체전용(청년인턴 채용)
2024	- 우주항공청 신설로 인한 인건비 146백만원 이체
2025	-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인한 인건비 3,698백만원 이체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3) 기본경비 (7111, 711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담당관	0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 7118	201~275 201~289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소속기관기본경비	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송 주 호	조 기 훈	김 종 호
		정책기획관			
	사업시행주체	기획조정담당관	044-203-5520	044-203-5516	044-203-5518
		산업통상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기본경비	26,491	28,637	28,637	25,591	25,848	△ 2,789	△ 9.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7,289	27,289	26,491	0	0	28,637	28,447	23,373	28,447	23,373	0	0	25,848
· 기본경비	27,289	27,289	26,491	0	0	28,637	28,447	23,373	28,447	23,373	0	0	25,848
- 상용임금 (110-03)	1,205	1,205	1,119	0	0	1,246	1,080	955	1,080	955	0	0	1,357
- 일용임금 (110-04)	21	21	21	0	0	21	21	9	21	9	0	0	21
- 일반수용비 (210-01)	8,677	7,508	7,418	0	0	8,768	8,018	6,752	8,018	6,752	0	0	7,142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642	1,547	1,492	0	0	1,660	1,586	1,412	1,586	1,412	0	0	1,633
- 피복비 (210-03)	74	79	78	0	0	74	78	76	78	76	0	0	91
- 급식비 (210-04)	6	6	3	0	0	6	6	3	6	3	0	0	6
- 특근매식비 (210-05)	1,013	1,015	973	0	0	1,012	993	964	993	964	0	0	907
- 일숙직비 (210-06)	56	54	41	0	0	56	54	41	54	41	0	0	56
- 임차료 (210-07)	965	973	807	0	0	970	920	644	920	644	0	0	869
- 유류비 (210-08)	122	115	63	0	0	109	95	79	95	79	0	0	109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291	342	340	0	0	254	334	294	334	294	0	0	251
- 재료비 (210-11)	3	3	1	0	0	3	2	0	2	0	0	0	1
- 복리후생비 (210-12)	1,265	1,265	1,265	0	0	1,365	1,331	1,246	1,331	1,246	0	0	1,376
- 일반용역비 (210-14)	261	578	562	0	0	261	318	248	318	248	0	0	282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관리용역비 (210-15)	456	476	475	0	0	461	480	442	480	442	0	0	461
- 기타운영비 (210-16)	685	685	675	0	0	685	656	641	656	641	0	0	591
- 국내여비 (220-01)	2,306	3,123	3,044	0	0	3,006	3,136	3,028	3,136	3,028	0	0	2,384
- 국외업무여비 (220-02)	2,746	2,774	2,739	0	0	3,246	2,842	1,935	2,842	1,935	0	0	3,015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1,366	1,366	1,362	0	0	1,548	1,502	1,472	1,502	1,472	0	0	1,372
- 직책수행경비 (250-02)	1,361	1,386	1,378	0	0	1,361	1,325	1,325	1,325	1,325	0	0	1,181
- 특정업무경비 (250-03)	72	72	70	0	0	72	71	68	71	68	0	0	66
- 일반연구비 (260-01)	244	244	240	0	0	244	244	112	244	112	0	0	252
- 배상금 (310-02)	0	0	0			0	9	9	9	9			0
- 포상금 (310-03)	4	4	3	0	0	4	4	3	4	3	0	0	261
- 연금지급금 (320-03)	38	38	30	0	0	38	38	27	38	27	0	0	38
- 고용부담금 (320-09)	410	410	358	0	0	417	417	254	417	254	0	0	448
- 공사비 (420-03)	625	640	639	0	0	355	374	318	374	318	0	0	366
- 자산취득비 (430-01)	1,324	1,307	1,293	0	0	1,344	1,148	1,000	1,148	1,000	0	0	1,269
- 무형자산 (440-00)	50	52	2	0	0	50	41	0	41	0	0	0	41
- 반환금및손실금 (710-03)	1	1	0	0	0	1	17	16	17	16	0	0	1
합 계	27,289	27,289	26,491	0	0	28,637	28,447	23,373	28,447	23,373	0	0	25,84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산업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 기관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한 경상운영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산업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2,800	24,126	27,287	28,637	25,84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5,848**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집행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3,379	△579	22,800	-	△14	-	22,786	21,284	93	93	-	1,502
2023	24,126	-	24,126	-	293	-	24,419	23,435	97	96	-	984
2024	27,287	-	27,287	-	-	-	27,287	26,490	97	97	-	797
2025	28,637	-	28,637	-	△1,497	-	27,140	23,374	82	86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4)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71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116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정책기획관	0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03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임채욱	조수연	김태훈
		정책기획관			
	사업시행주체	혁신행정담당관	044-203-5530	044-203-5565	044-203-5536
		산업통상부	혁신행정담당관	김태훈 주무관	044-203-5536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1,917	1,898	1,898	2,020	1,509	Δ389	Δ20.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76	2,492	1,917	210.6	364.4	1,898	2,033	1,859	1,822	1,656.7	105.5	68.6	1,509
· 변화관리 및 혁신 교육	340	381.3	269.3	90	22.5	363	453	432	363	348.5	6	15	363
· 규제개혁 및 갈 등 관리 지원	99	99	66.2	-	32.8	99	99	63	99	63	30.9	5.1	78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100	10	81.8	6	18.2	-	6	6	-	-	-	-	-
· 정책지원 연구	393	393	327	46	19.7	212	258	240.9	212	196.8	-	17.1	156
· 자체평가 및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원	240	309	227.2	68.6	12.8	240	309	228	240	159.4	68.6	12.4	215
·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28	28	17	-	11	28	28	15	28	15	-	13	48
· 청년인턴 운영	1,109	1,109	861.6	-	247.4	889	813	807	813	807	-	6	598.6
· 2030자문단 운영	67	67	67	-	-	67	67	67	67	67	-	-	50
○ 비목별 분류(합계)	2,376	2,492	1,917	210.6	364.4	1,898	2,033	1,859	1,822	1,656.7	105.5	68.6	1,509
· 일용임금(110-04)	976	976	792	-	184	748	704	703	704	703	-	1	505.1
· 일반수용비(210-01)	276.2	186.2	230.4	-	45.6	149	149	134.5	149	134.5	-	14.5	171.1
· 일반용역비(210-14)	246.7	378.3	179.3	96	13	335	431	412.1	335	322.6	6	12.9	365
· 국내여비(220-01)	63	63	17		46	51	51	47.5	51	47.5	-	3.5	31
· 사업추진비(240-01)	8.5	8.5	8		0.5	8.5	8.5	6.4	8.5	6.4	-	2.1	8.5
· 일반연구비(260-01)	726	795	621.4	114.6	59	506	620.6	489	506	376.2	99.5	32.5	354
· 정책연구비(260-02)	-	6	6	-	-	-			-		-	-	-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포상금(310-03)	16	16	16	-	-	16	16	16	16	16	-	-	16
· 고용부담금(320-09)	63	63	47	-	16	84	52	50.5	52	50.5	-	1.5	57.9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376	2,492	1,917	210.6	364.4	1,898	2,033	1,859	1,822	1,656.7	105.5	68.6	1,509
· 변화관리 및 혁신 교육	340	381.8	269.3	90	22.5	363	453	432	363	348.5	6	15	363
-일반수용비(210-01)	112	22	13	-	9	6.5	6.5	6.5	6.5	6.5	-	-	26.5
-일반용역비(210-14)	207	338.3	235.3	90	13	335	425	406.1	335	322.6	6	12.9	315
-사업추진비(240-01)	8.5	8.5	8	-	0.5	8.5	8.5	6.4	8.5	6.4	-	2.1	8.5
-포상금(310-03)	13	13	13	-	-	13	13	13	13	13	-	-	13
· 규제개혁 및 갈등 관리 지원	99	99	66.2	-	32.8	99	99	63	99	63	30.9	5.1	78
-일반수용비(210-01)	45	45	39	-	6	45	45	43	45	43	-	2	45
-일반연구비(260-01)	54	54	27.2	-	26.8	54	54	20	54	20	30.9	3.1	33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100	106	81.8	6	18.2	-	6	6	-	-	-	-	-
-일반수용비(210-01)	20	20	1.8	-	18.2	-	-	-	-	-	-	-	-
-일반용역비(210-14)	40	40	34	6	-	-	6	6	-	-	-	-	-
-일반연구비(260-01)	40	40	40	-	-	-	-	-	-	-	-	-	-
-정책연구비(260-02)	-	6	6	-	-	-	-	-	-	-	-	-	-
· 정책지원 연구	393	393	327	46	19.7	212	258	240.9	212	196.8	-	17.1	156
-일반용역비(210-14)	-	-	-	-	-	-	-	-	-	-	-	-	50
-일반연구비(260-01)	393	393	327	46	19.7	212	258	240.9	212	196.8	-	17.1	106
· 자체평가 및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원	240	309	227.2	68.6	12.8	240	309	228	240	159.4	68.6	12.4	215
-일반연구비(260-01)	240	309	227.2	68.6	12.8	240	309	228	240	159.4	68.6	12.4	215
·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28	28	17	-	11	28	28	15	28	15	-	13	48
-일반수용비(210-01)	25	25	14	-	11	25	25	12	25	12	-	13	45
-포상금(310-03)	3	3	3	-	-	3	3	3	3	3	-	-	3
· 청년인턴 운영	1,109	1,109	861.6	-	247.4	889	813	807	813	807	-	6	598.6
-일용임금(110-04)	976	976	792	-	184	748	704	703	704	703	-	1	505.1
-일반수용비(210-01)	7	7	5.6	-	1.4	6	6	6	6	6	-	-	4.6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국내여비(220-01)	63	63	17	-	46	51	51	47.5	51	47.5	-	3.5	31
-고용부담금(320-09)	63	63	47	-	16	84	52	50.5	52	50.5	-	1.5	57.9
· 2030자문단 운영	67	67	67	-	-	67	67	67	67	67	-	-	50
-일반수용비(210-01)	67	67	67	-	-	67	67	67	67	67	-	-	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부내 조직문화개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등 변화관리 활동 지원을 통해 조직 생산성 제고 및 직원역량 강화 도모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지원) 규제비용·편익분석, 자체규제개혁위원회 및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등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기반 마련
- (정책지원 연구) 재정, 조직관리 등 정책 지원 분야의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
- (부내 및 기타공공기관 평가업무 지원) 평가단 구성 및 평가기준 마련 등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부내 자체평가 업무수행
-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부내 직원 및 국민대상 각종 지원 제도 기반 구축
- (청년인턴 운영)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청년의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과정 경험 및 참여를 통해 국정 전반에 청년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
- (2030자문단 운영)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20대와 30대로 구성된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국가공무원법 제50조(교육훈련), 제53조(제안제도)

제50조 (교육훈련) 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이 될 자는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과 관리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일상업무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 직원의 능력을 발전시킬 책임을 진다.

제53조 (제안제도) ①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 제도를 둔다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지원

- (규제개혁)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하여 신설·강화규제 도입 시 규제심사 및 기존규제 정비를 추진

<행정규제기본법상 관련 조항>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 영향 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 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 후 정비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상 관련조항>

제2조(설치) 산업통상부에 「산업통상부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른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의2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
3. 기존 규제의 자체 정비, 규제정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갈등관리)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부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중 관련 조항>

제11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갈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당해 기관의 장이 판단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자체평가 및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원

-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산업통상부 소관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 지원근거 : 「산업통상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 ▶ 산업통상부는 경영편람 작성과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기술적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설치할 수 있음

- (자체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3조

※ 지원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3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 ②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업무의 일부를 평가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18조

※ 지원근거 : 「적극행정 운영 규정」

- ▶ 제8조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 제11조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둔다
- ▶ 제14조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 ▶ 제18조 ②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청년인턴 운영

- 「청년기본법」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30 자문단 운영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제21조의2(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의 채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② 추진경위

○ 변화관리능력개발(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경제안보·디지털 전환·ESG)에 따라 산업부 고유 업무에 대한 실무자 역량개발·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확대 절실
- 대내외 환경 변화로 산업정책에 대한 기대치가 전례없이 높으나, 직원 사기저하와 업무회피 성향 강화로 조직활력 제고책 마련 필요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지원

- **(규제개혁)**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98.2.28)되어 규제 신설·강화시 '규제심사'가 필수 절차로 정착됨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3.20.) 이후 '규제개혁신문고'가 설치되었으며, '규제비용총량제'가 시행됨('16~)에 따라 비용-편익 분석 등 제도관련 예산수요 증대됨, 아울러 산업부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규제개혁 교육·홍보 등 실시 필요
- **(갈등관리)**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07.2.12)에 따라 산업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 * 밀양송전선로 건설 등 대규모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갈등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이에 산업부는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및 갈등관리심의 등을 추진

○ 자체평가 및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원

- (기타공공기관) '13.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이후, 기타공공기관의 경영 개선을 위해 주무부처에서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14.3.20)하여 매년 경영평가 실시
- (자체평가) '01.5.1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공포되어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본격 실시
-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01.9.24)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 실시

○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 정부는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 발표('19.3.14.)하고, 후속조치로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정('19.8.6.)
- 이와 따라, 산업부는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중

○ 2030 자문단 운영

- 청년기본법에 의거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달하고 소통하기 위해 청년보좌역 채용 및 청년 정책자문기구 운영, ①정책모니터링, ②정책 제언, ③청년여론 수립 및 전달, ④정책 참고 사항 발굴 및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98	<p>①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25요구) 363백만원</p> <p>□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및 현장에 집중할 수 있는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운영을 통한 민간과의 네트워크 형성, 연속성 있는 전문 강연 설치 등 변화관리 활동 지원을 통해 조직 생산성 제고 및 직원역량 강화 도모 <p>□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및 혁신교육: 24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24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비) 35개교×4백만원 = 144백만원 * (기본교육) 상하반기(2회)×5백×3개분야 =30백만원 * (현장방문) 10명×7백=70백만원 협업행정을 위한 소통촉진 프로그램: 10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업프로그램 지원: 10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업행사) 5백만원 × 10회(기관·실·국) = 50백만원 * (부내협업) 동호회주간 10개 동호회 × 3.5백만원= 35백만원, 크로스미팅 0.5백만원 × 12회= 6백만원 * (네트워킹) 40건(10실× 연 4회) × 0.2백만원 = 8.5백만원 * (협업성과 홍보) 6.5백만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 13백만원 우수부서 및 산업통상자원인 선정: 1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만원×10명×4분기+50만원×1개국×4분기+100만원×3개과 <p>②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지원: ('25요구) 99백만원</p> <p>□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규제 발굴·개선 수요 대응 <p>□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개혁, 갈등관리심의, 제안 및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41.2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37.2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13명×12회×0.15백만원 * (안건 인쇄 및 회의 준비 등) 1.151백만원×12회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10명×2회×0.125백만원 * (안건 인쇄 및 회의 준비 등) 0.25백만원×2회 - 제안 및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4명×2회×0.1백만원 * (회의진행경비 등) 0.1백만원×2회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교육 및 홍보: 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료 0.5백만원×2회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반기 2회×1.5백만원 규제개혁 및 창의혁신 연구용역: 5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강화 및 폐지·완화 규제비용, 편익분석: 2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건(예상 분석대상 건수)×1.8백만원 - 민간활동 저해 핵심규제 개선방안 연구: 2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연구 3개 분야×9백만원 <p>③ 정책지원 연구: ('25요구) 212백만원</p>	1,509	<p>①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26요구) 363백만원</p> <p>□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및 현장에 집중할 수 있는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운영을 통한 민간과의 네트워크 형성, 연속성 있는 전문 강연 설치 등 변화관리 활동 지원을 통해 조직 생산성 제고 및 직원역량 강화 도모 <p>□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및 혁신교육: 23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23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비) 35개교×4백만원 = 144백만원 * (기본교육) 상하반기(2회)×5백×3개분야 =30백만원 * (현장방문) 10명×6백=60백만원 협업행정을 위한 소통촉진 프로그램: 11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업프로그램 지원: 11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업행사) 5백만원 × 10회(기관·실·국) = 50백만원 * (부내협업) 동호회주간 13개 동호회 × 3.5백만원= 45.5백만원, 크로스미팅 0.5백만원 × 12회= 6백만원 * (네트워킹) 40건(10실× 연 4회) × 0.2백만원 = 8.5백만원 * (협업성과 홍보) 6백만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 13백만원 우수부서 및 산업통상자원인 선정: 1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만원×10명×4분기+50만원×1개국×4분기+100만원×3개과 <p>②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지원: ('26요구) 78백만원</p> <p>□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규제 발굴·개선 수요 대응 <p>□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개혁, 갈등관리심의, 제안 및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41.2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37.2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13명×12회×0.15백만원 * (안건 인쇄 및 회의 준비 등) 1.151백만원×12회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10명×2회×0.125백만원 * (안건 인쇄 및 회의 준비 등) 0.25백만원×2회 - 제안 및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4명×2회×0.1백만원 * (회의진행경비 등) 0.1백만원×2회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교육 및 홍보: 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료 0.5백만원×2회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반기 2회×1.5백만원 규제개혁 및 창의혁신 연구용역: 3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강화 및 폐지·완화 규제비용, 편익분석, 및 민간활동 저해 핵심규제 개선방안 연구 : 3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건(예상 분석대상 건수)×1.8백만원 ** 규제 연구 2개 분야×8.5백만원 <p>③ 정책지원 연구: ('26요구) 156백만원</p>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div>☐ 요구<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조직관리, 국민인식 제고, 대내외 정책 홍보지원 등 정책분야 역량강화</div> <div>☐ 산출<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지원 연구: 212백만원- 재정사업 자율평가, 조직실태진단 등 운영관련 용역비: 212백만원* 정책홍보, 재정사업평가, 실태진단 등 운영 관련 용역 5건 × 42.4백만원</div> <div>④ 자체평가 및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원: ('25요구) 240백만원</div> <div>☐ 요구<ul style="list-style-type: none">○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검증된 전문가 평가단 구성 및 구체적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div> <div>☐ 산출<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평가 및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원: 240백만원* 자체평가 용역 140백만원 +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용역 100백만원</div> <div>⑤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25요구) 28백만원</div> <div>☐ 요구<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직원 및 국민 대상 각종 지원 제도 기반을 구축할 필요</div> <div>☐ 산출<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및 대국민 홍보: 15백만원-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10백만원* 5회×2백만원(위원수당 1.4 + 운영비 0.6)- 적극행정 대국민 홍보: 5백만원* 카드뉴스,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5백만원○ 적극행정 면책관련 소송비 지원: 10백만원* 적극행정 징계절차 지원 5백만원 + 소송비용 지원 5백만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3백만원* 4회(분기별)× 3명 × 0.25백만원</div> <div>⑥ 청년인턴 운영: ('25요구) 889백만원</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건비: 748백만원○ 일반수용비: 6백만원○ 국내여비: 51백만원○ 고용부담금: 84백만원</div> <div>⑦ 2030자문단 운영: ('25요구) 67백만원</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체 운영 및 외부활동 지원: 67백만원- 2030자문단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운영: 54백만원* 6개월×20명×15만원+12개월×20명×15만원- 청년 정책간담회, 청년 관련 행사 포함 참여: 13백만원</div>			<div>☐ 요구<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조직관리, 국민인식 제고 등 정책분야 역량강화</div> <div>☐ 산출<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지원 연구: 156백만원- 재정사업 자율평가, 조직실태진단 등 운영관련 용역비: 156백만원* 재정사업평가, 실태진단 등 운영 관련 용역 4건× 39백만원</div> <div>④ 자체평가 및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원: ('26요구) 215백만원</div> <div>☐ 요구<ul style="list-style-type: none">○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검증된 전문가 평가단 구성 및 구체적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div> <div>☐ 산출<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평가 및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원: 215백만원* 자체평가 용역 120백만원 +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용역 95백만원</div> <div>⑤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26요구) 48백만원</div> <div>☐ 요구<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직원 및 국민 대상 각종 지원 제도 기반을 구축할 필요</div> <div>☐ 산출<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및 대국민 홍보: 25백만원-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16백만원* 8회×2백만원(위원수당 1.4 + 운영비 0.6)- 적극행정 대국민 홍보: 9백만원* 카드뉴스,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9백만원○ 적극행정 면책관련 소송비 지원: 20백만원* 적극행정 징계절차 지원 10백만원 + 소송비용 지원 10백만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3백만원* 4회(분기별)× 3명 × 0.25백만원</div> <div>⑥ 청년인턴 운영: ('26요구) 598.6백만원</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건비: 505.1백만원○ 일반수용비: 4.6백만원○ 국내여비: 31백만원○ 고용부담금: 57.9백만원</div> <div>⑦ 2030자문단 운영: ('26요구) 50백만원</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체 운영 및 외부활동 지원: 50백만원- 2030자문단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운영: 48백만원* 자문단 및 전문가 수당 : 12개월×20만원×20명- 청년 정책간담회, 청년 관련 행사 개최 경비 : 2백만원</div>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표명 (단위:)	목표						기재부 지침에 따라 성과관리 대상 제외		
	실적				-	-			
	달성도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조직 구성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변화관리 교육 실시(계속) : 약 900명
2023	조직 구성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변화관리 교육 실시(계속) : 약 1,000명
2024	조직 구성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변화관리 교육 실시(계속) : 약 1,000명
2025	조직 구성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변화관리 교육 실시(계속) : 약 1,200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2026	조직 구성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변화관리 교육 실시(계속) : 약 1,300명
------	---

7) 사업 집행절차

구분	주요업무	수행 주체
수행방향 설정	당해연도 수행방향 설정	산업부
▼		
계획 수립	당해연도 계획 수립	산업부
▼		
사업 수행	계획에 따라서 사업 수행	산업부
▼		
실적 관리	수행 결과를 지식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관리	산업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376	2,514	2,644	2,781	2,926	
2025~2029		1,898	1,974	2,052	2,135	2,19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내역사업 증액이 필요한 경우 추가증액할 것이 아니라 세부사업 내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적정예산 반영, 편성예산은 적시에 집행하도록 할 것 (상임위,24결산)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정책대상과의 소통 및 현장중심의 업무수행을 중요시하는 업무분위기 형성과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조직구성원의 역량 강화 도모
-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규제에 대한 규제심사 강화
- 객관적인 평가기반을 구축하여 부내 및 기타공공기관 평가업무의 신뢰도 제고
- 적극행정문화 정착화 및 관련 지원 활성화로 급변하는 행정환경 대응 및 법·제도와 현장간 괴리 극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47	-	847	120.3	-	-	967.3	826.8	97.6	85.5	100.1	40.2
2023	1,333	-	1,333	100.1	20	-	1,433	1,286	96.4	89.7	115	30.8
2024	2,376	-	2,376	115.9		-	2,492	1,917	80.6%	76.9%	210.6	364.4
2025	1,898	-	1,898	210.6	58	-	2,033	1,859	97.9	91.4	105.5	68.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월: 100백만원,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과 연구용역 완성도 증가를 위해 이월 - 불용: 40백만원, 연구용역의 낙찰차액 발생 등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 11백만원, 변화관리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반용역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조정 - 전용: 20백만원,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정책 수단 발굴 소요 제기에 따라 공모전 개최 예산 중 일반용역비를 정책연구를 위한 정책연구비로 전용 - 이월: 115백만원,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과 연구용역 완성도 증가를 위해 이월 - 불용: 30백만원, 연구용역의 낙찰차액 발생 등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 90백만원, 현장방문 등 조직 소속감 및 직원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일반 용역비로 조정 - 이월: 210백만원, 계약체결 지연 및 연구용역 완성도 제고를 위해 이월 - 불용: 364.4백만원, 청년인턴 계획모집 인원 미달 및 연구용역, 일반 용역 낙찰차액 발생 등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58백만원, '25년 본부 공무원 인건비 부족(5,889백만원)으로 일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일부를 승인전용하여 집행(총액인건비제 하 인건비 비목 활용) - 이체: 17백만원, 기후부 이체인원 4명(10월~12월분)의 일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이체 - 이월: 105.5백만원,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과 연구용역 완성도 증가를 위해 이월 - 불용: 67.5백만원, 연구용역, 일반용역 낙찰차액 발생, 적극행정 면책관련 소송비 지원금액 불용(적극행정 소송 無) 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단위: 천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2.9.)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7132-303)	일용임금 (110-04)	28,000	본부인건비 (7101-101)	보수 (110-01)	'25년 본부 공무원 인건비 부족 (5,889백만원)으로 청년인턴 일용 임금 일부를 자체전용하여 집행 (총액인건비제 하 인건비 비목 활용)
전용 (2025.12.16.)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7132-303)	고용부담금 (320-09)	30,000	본부인건비 (7101-101)	보수 (110-01)	'25년 본부 공무원 인건비 부족 (5,889백만원)으로 고용부담금 일부 를 승인전용하여 집행 (총액인건비제 하 인건비 비목 활용)
이체 (2025.9.30.)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7132-303)	일용임금 (110-04)	15,819	본부인건비 (7101-101)	보수 (110-01)	기후부 이체인원 4명(10월~12월분) 의 일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이체
		고용부담금 (320-09)	1,475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5)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7142-31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2	기획조정실		110	116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정책기획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42	317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오재열	전수하	이기성	
		정보보호담당관	044-203-5590	044-203-5597	044-203-5569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1,825	1,407	1,407	1,140	1,140	△267	△18.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84	1,884	1,825 [1,825]	-	59	1,407	1,407	1,406 [1,406]	-	-	-	1	1,140
· 사이버안전시스템 운영	1,460	1,460	1,414 [1,414]	-	46	1,407	1,407	1,406 [1,406]	-	-	-	1	1,140
· 사이버안전세시스템 고도화	424	424	411 [411]	-	13	-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1,884	1,884	1,825 [1,825]	-	59	1,407	1,407	1,406 [1,406]	-	-	-	1	1,140
· 일반수용비(210-01)	10	10	10 [10]	-	-	5	5	5 [5]	-	-	-	-	5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578	578	541 [541]	-	37	492	492	492 [492]	-	-	-	-	225
· 관리용역비(210-15)	872	872	863 [863]	-	9	910	910	909 [909]	-	-	-	1	910
· 자산취득비(430-01)	424	424	411 [411]	-	13	-	-	-	-	-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884	1,884	1,825 [1,825]	-	59	1,407	1,407	1,406 [1,406]	-	-	-	1	1,140
· 사이버안전시스템 운영	1,460	1,460	1,414 [1,414]	-	46	1,407	1,407	1,406 [1,406]	-	-	-	1	1,140
- 일 반 수 용 비 (210-01)	10	10	10 [10]	-	-	5	5	5 [5]	-	-	-	-	5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578	578	541 [541]	-	37	492	492	492 [492]	-	-	-	-	225
- 관 리 용 역 비 (210-15)	872	872	863 [863]	-	9	910	910	909 [909]	-	-	-	1	910
· 사이버안전세시스템 고도화	424	424	411 [411]	-	13	-	-	-	-	-	-	-	-
- 자 산 취 득 비 (430-01)	424	424	411 [411]	-	13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 o 산업·통상 분야 산하기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안전을 확보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 o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보안관제 효율을 극대화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이버안전시스템 고도화 구축
-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침해사고 대응, 취약점분석을 위한 최신 보안 솔루션을 발굴·구축하여 사이버안전센터의 기능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 「국가사이버안전 관리규정」 제10조의2,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제1항, 「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칙」 제2조

-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 :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보안관제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부보안관제체계와 연계된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직접 설치하지 않고 다른 기관의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 o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2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이하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o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제1항 : 금융·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 정보공유·분석센터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 o 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조 :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무역 등 산업통상 분야 사이버공격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MOTIR-CSC(Ministry Of Trade, Industry & Resources-Cyber Security Center), 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추진경위

- '06.5월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의장 : 국가정보원장) 의결
 - * 기존의 국방, 금융, 행정, 통신, 안보분야 외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5개 핵심분야(에너지, 교통, 교육, 보건, 외교)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분야별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결정
- '07.7월 산업자원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립 계획수립
- '07.12월 산업자원 사이버보안센터 운영규칙 제정(훈령 제128호)
- '08.8월 사이버안전시스템 구축 및 센터 개소(28개 기관)
 - '10.1월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14개 기관)
 - '11.1월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7개 기관)
 - '18.9월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3개 기관)
 - '18.10월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1개 기관)
- '10.1월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58호)
- '12.2월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91호)
- '13.6월 정부조직개편으로 미래부 이관(ETRI, 한국생산기술연구원, NIPA)
- '14.12월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59호)
- '16.8월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102호)
- '19.6월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154호)
- '25.10월 정부조직개편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이관(에너지 관련 21개 공공기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285	2,225	1,884	1,407	1,14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부
- 사업 수혜자 : 산업통상부 소관 공공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안전시스템 운영(1,40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유지보수(91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유지보수 계약으로 예산 실링액에 따른 산출금액 - 전용회선 임차(49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3개 회선 사용으로 예산 실링액에 따른 산출금액 - 소모품비(5백만원) 	1,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안전시스템 운영(1,14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유지보수(91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 유지보수 계약으로 예산 실링액에 따른 산출금액 - 전용회선 임차(22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개 회선 사용으로 예산 실링액에 따른 산출금액 - 소모품비(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보안관계 정탐율 (단위: %)	목표	98.3	98.3	98.4	98.5	98.6	최근 3개년간 평균 추이를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사이버공격 정 탐건수/ 총사이버공격 탐지통보건수) *100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관리시스템 (SCMS)
	실적	98.41	98.57	98.62	-	-			
	달성도	100	100	100	-	-			
관계시스템 안정가동율 (단위: %)	목표	99.5	99.5	99.5	99.5	99.5	최근 3개년중 실현 가능한 목표치로 설정 (정보시스템은 내·외부적 환경요인에 의한 장애 발생으로 100% 가동율은 불가 99.5%의 가동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	(가동 계획시간 - 관제서비스중단시간) / 가동계획시간 * 100	관계시스템 장애복구 보고서 및 월별 서비스 수준협약(SLA) 보고서
	실적	99.57	99.58	99.59	-	-			
	달성도	100	100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PN접속 이상행위 탐지시스템” 특허 등록 및 품질분임조정경진대회 대통령 금상 수상(11월) ○ 회원기관 홈페이지 위변조 감시 대상 확대(57개→18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7개(회원기관 53개+ 부처홈페이지 4개(산업부1개, 국표원2개, 부산엑스포1개)) ○ 오픈소스 활용 빅데이터 관제시스템 구축으로 비용 절감 및 독자기술 확보(7억/년 절감) ○ 회원기관 대상 인터넷망·업무망 모의해킹 실시(21개 기관) ○ 산업부 및 소관 공공기관 악성 이메일 모의훈련 실시(산업부5회, 공공기관 5회) ○ 산업·무역·에너지 분야 13개 주요 공공기관 합동으로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실시(7.4) ○ 제10회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개최(11.1~2, 26개 기관 36개팀 참가) ○ 제14회 산업부 정보보안 컨퍼런스 개최(12.15, 53개 기관 200여명 참가)
------	--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관제센터 운영기관 대상 보안관제 전문교육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과정(5.17~19, 8개 기관), 심화과정(10.23~26, 6개 기관) ○ 회원기관 대상 인터넷망·업무망 모의해킹 실시(23개 기관) ○ 산업부 및 소관 공공기관 악성 이메일 모의훈련 실시(산업부 4회, 공공기관 6회) ○ 산업부 및 소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백업복구 훈련 실시(6.12~16, 21개기관) ○ 제11회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개최(3개분야 26개기관 37개팀 참가, 7.6~7) ○ “VPN접속 이상행위 탐지시스템” ‘23년 국제품질분임조대회 금상수상(중국,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국내대회 금상수상 자격으로 국제대회 참가 ○ 탐지구칙 개발 및 악성코드 분석을 위한 “모의 침해사고 분석시스템” 구축 (12월)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장애 사전 대비 보안장비 및 전용회선 이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이벤트 수집, 탐지구칙 배포용 3중보안관제 핵심 보안장비 이중화 * 11개 기반시설 기관 전용회선 이중화 완료(3월) ○ ‘24년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 중 산업·무역·에너지 분야 사이버 위협 선제 대응을 위한 보안관제시스템 개선 과제 채택 ○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등 대국민 디지털 서비스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8개 홈페이지 대상 웹위변조 감시, 상시 비상 연락망(온라인 상황실) 운영 ○ 차세대 지능형 보안관제 전략 수립을 위한 벤치마킹(4~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공공·민간분야 6개기관 현장 방문 및 벤치마킹 결과 분석 ○ 산업부 및 소관 공공기관 악성 이메일 모의훈련 실시(산업부 3회, 공공기관 2회) ○ 제12회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개최(3개분야 31개기관 42개팀 참가, 6.26~6.27)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안전센터 관제시스템 노후 설비 교체(빅데이터 시스템) ○ 제13회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개최(3개분야 30개기관 41개팀 참가, 8.26~8.27) ○ 소관 공공기관 임직원 정보보안 의식 향상을 위해 해킹메일훈련 5회 실시 ○ 차세대 보안관제 전략 수립 및 및 파일럿 서비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지 이벤트 판단을 신속하기 위해 관제 지원 서비스를 개발 및 차세대 보안 관제 전략 수립으로 보안관제 요원 업무 효율 극대화 ○ 정부조직개편(‘25.10월)에 따라 센터 명칭, 규정, 매뉴얼 등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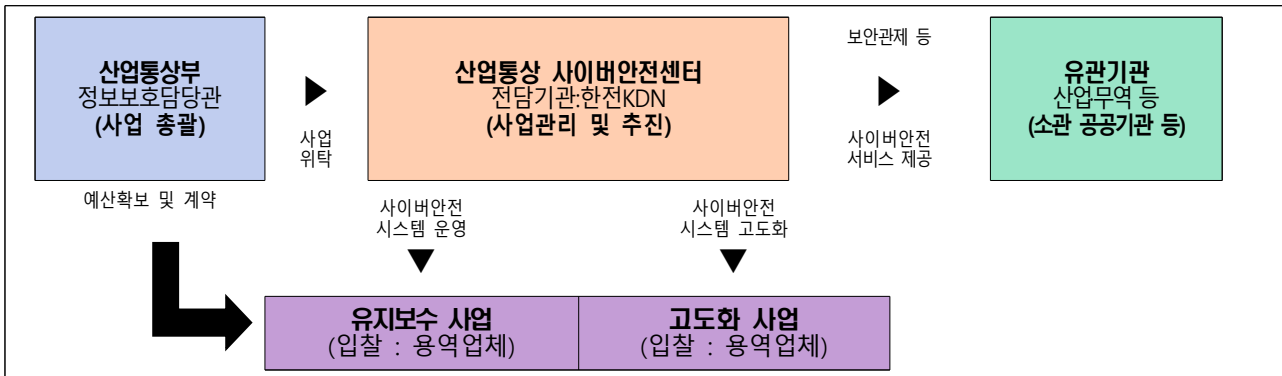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사이버안전센터를 기반으로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산업·무역 등 산업부 소관 기관 사이버안전을 확보 함으로써 국가 경제안보에 기여
 - 365일 24시간 보안관제 및 사이버공격 탐지
 -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피해확산 방지 및 긴급복구
- 차세대 지능형 보안관제 전략수립으로 조직적 대규모 사이버공격 증가, AI를 악용한 공격기법 지능화 등 보안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
 - ①사이버위협 억제예방 ②인텔리전스 보안관제 ③침해사고 신속대응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884	1,407	1,140	2,302	2,318	
2025~2029		1,407	1,140	1,986	2,015	2,03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사이버위기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관제시스템 고도화
 - AI챗봇 활용 초동 분석 시간 단축 및 자연어 질의방식 관제 빅데이터 검색
 - 고품질의 웹서버 취약점 보고서 자동 생성 및 회원기관 제공
 - 위협정보 데이터 등 RAG* 데이터 품질향상 및 성능 최적화
 - *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AI가 답변을 생성할 때 참고하는 외부 지식 데이터
-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공격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대국민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지속 강화 추진
 - 급증하는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등급분류 후 보안관제시스템에 지속적으로 편입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정부 사업평가, 국회,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이 없으며, 집행률, 성과달성도 등이 우수함에 따라, 사업구조개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우려 증가로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안전 확보는 절실, 특히 본 사업은 산업부 유관기관 및 주요기반시설도 포함하고 있어 정책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사업목적도 명확
-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에너지, 무역, 산업분야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한 센터 구축, 운영은 사업의 중요성, 명확성, 사업추진 방식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성과 달성도도 높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285	2,285	2,285	-	-	-	2,285	2,270	99.3	99.3	-	15
2023	2,225	2,225	2,225	-	-	-	2,225	2,215	99.5	99.5	-	10
2024	1,884	1,884	1,884	-	-	-	1,884	1,825	96.9	96.9	-	59
2025	1,407	1,407	1,407	-	-	-	1,407	1,406	99.9	99.9	-	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사유 : 공개입찰에 의한 낙찰 차액(15백만원)
2023	- 불용사유 : 공개입찰에 의한 낙찰 차액(10백만원)
2024	- 불용사유 : 공개입찰에 의한 낙찰 차액(22백만원) (전용회선 사용료) 회선 해지 등에 대한 미사용액 발생(37백만원)
2025	- 불용사유 : 공개입찰에 의한 낙찰 차액(1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6)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7131-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1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110	116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1	501
명칭	산업통상자원행정지원	산업통상자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산업통상자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산업통상자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 열 규	정 정 식	김 지 영
		정보관리담당관	044-203-5550	044-203-5552	044-203-5559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산업통상자원행정 정보시스템구축 (정보화)	2,749	2,983	-	4,727	4,727	1,744	58.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749	2,849	2,730 [2,730]	109	10	2,983	3,282	3,056 [3,056]	3,173	2,947 [2,947]	103	123	4,727
· 정보시스템 고도화	612	712	595	109	8	230	339	317	230	208	22	-	266
·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및 운영	1,430	1,430	1,428	-	2	1,286	1,286	1,278	1,286	1,278	-	8	1,207
· 정보보호체계구축	707	707	707	-	-	719	719	628	719	628	81	10	1,232
· 공 공 데 이 터 이 용 활성화	-	-	-	-	-	100	100	100	100	100	-	-	100
· 온북 시스템 구축	-	-	-	-	-	648	838	733	838	733	-	105	715
· 무역구제 시스템 구축	-	-	-	-	-	-	-	-	-	-	-	-	1,207
○ 비목별 분류(합계)	2,749	2,849	2,730	109	10	2,983	3,282	3,056	3,173	2,947	103	123	4,727
· 일반수용비 (210-01)	-	-	-	-	-	20	20	20	20	20	-	-	20
· 일반용역비 (210-14)	-	-	-	-	-	40	40	40	40	40	-	-	40
· 관리용역비 (210-15)	1,475	1,475	1,473	0	2	1,331	1,331	1,319	1,331	1,319	-	12	1,252
· 사업추진비 (240-01)	6	6	6	-	-	6	6	6	6	6	-	-	6
· 일반연구비 (260-01)	453	515	465	43	7	376	419	274	376	231	17	95	849
· 자산취득비 (430-01)	815	853	786	65	1	1,210	1,465	1,351	1,400	1,285	86	15	2,56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749	2849	2,730	109	8	2,983	3,282	3,056	3,173	2,947	103	123	4,727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정보시스템 고도화	612	712	595	109	8	230	339	271	230	162	22	-	266
- 사업추진비 (240-01)	6	6	6	-	-	6	6	6	6	6	-	-	6
- 일반연구비 (260-01)	453	515	465	43	7	168	211	161	168	118	17	-	110
- 자산취득비 (430-01)	153	191	125	65	1	56	121	105	56	39	5	-	150
·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및 운영	1,430	1,430	1,428	-	2	1,286	1,286	1,278	1,286	1,278	-	8	1,207
- 관리용역비 (210-15)	1,430	1,430	1,428	-	2	1,286	1,286	1,278	1,286	1,278	-	8	1,207
· 정보보호체계구축	707	707	707	-	-	719	719	628	707	628	81	10	1,232
- 관리용역비 (210-15)	45	45	45	-	-	45	45	41	45	41	-	4	45
- 자산취득비 (430-01)	662	662	662	-	-	674	674	587	662	587	81	6	1,187
· 공공데이터이용 활성화	-	-	-	-	-	100	100	100	100	100	-	-	100
- 일반수용비 (210-01)	-	-	-	-	-	20	20	20	20	20	-	-	20
- 일반용역비 (210-14)	-	-	-	-	-	40	40	40	40	40	-	-	40
- 일반연구비 (260-01)	-	-	-	-	-	40	40	40	40	40	-	-	40
· 온북 시스템 구축	-	-	-	-	-	648	838	733	838	733	-	105	715
- 일반연구비 (260-01)	-	-	-	-	-	168	168	73	168	73	-	95	152
- 자산취득비 (430-01)	-	-	-	-	-	480	670	660	670	660	-	10	563
· 무역구제 시스템 구축	-	-	-	-	-	-	-	-	-	-	-	-	1,207
- 일반연구비 (260-01)	-	-	-	-	-	-	-	-	-	-	-	-	547
- 자산취득비 (430-01)	-	-	-	-	-	-	-	-	-	-	-	-	6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 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양질의 對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 (정보시스템고도화, 유지보수 및 운영) 산업부 정보시스템(업무포털, 홈페이지 등) 고도화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직원들의 정책업무 지원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 (정보보호체계구축) 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사이버 침해사고로부터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의사결정 활용을 위한 데이터 분석 실시,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발굴로 데이터행정 기반 구축 및 산업부 데이터 기반행정 중장기계획 수립
- (온북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 팬데믹 이후 다변화된 업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장소에 관계 없이 하나의 PC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환경 구축
- (무역구제 시스템 구축) 신속하고 효율적인 무역위원회 사건조사를 위해 운영 중인 조사시스템 개편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5조의2, 제30조, 제52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1조, 제24조, 제29조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령)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② 추진경위

- 'e-산자부 선언('00), 산자부 중장기정보화추진전략 수립('01)
- 산업자원 지식행정체제 확대 중장기정보화추진계획 수립('03)
- 산업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05), 산업자원 데이터웨어하우스 정보전략계획 수립('06)
- 산업자원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적용 기본계획 수립('07)
- 지식경제부 정보화전략 수립('08)

- 중장기 정보화계획 수립('12)
-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보유 공공데이터 민간에 개방('13~)
-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17)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 시행('20)
-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2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1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265	3,007	2,749	2,983	4,72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및 부내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1) 정보시스템 고도화 : (2025) 230백만원 → (2026요구) 266백만원, +15.7%

①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 266백만원

가. 홈페이지 AP이전 및 기능개선(110백만원)

- (주요내용) 클라우드 B존* 폐쇄에 따른 S존 AP이전, 웹개발 표준 적용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화면 디자인 개선 및 웹 아키텍처 변경 등
 - * '29년까지 산업부 B존 입주 시스템 단계적 이전 진행
 - AP이전(국회업무시스템 등 2종) WEB/WAS/DB 환경 재구성, DB분리 및 재설계,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고도화 등
 - 웹개발 표준 적용을 통한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효율성 개선
- (산출내역)
 - 국회업무 및 업무연락 시스템 클라우드 AP 이전 등 기능 개선

업무활동		등급별 투입공수(MM)		
		IT PM	응용SW개발자	UI/UX개발자
투입인력		3	7	1
노임단가		9,145,473	6,643,457	5,176,203
인건비		27,436,419	46,504,199	5,176,203
제경비	직접인건비×15%	4,115,462	6,975,630	776,430
기술료	(인건비+제경비)×10%	3,155,188	5,347,983	595,263
부가세	(인건비+제경비+기술료)×10%	3,470,707	5,882,781	654,789
합 계		110,000,000		

나. 업무자동화(RPA) 연간 라이선스 구입(56백만원)

- (주요내용) 단순, 반복적 업무를 로봇이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여 비용, 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혁신
 - 로봇엔진 라이선스 구입
- (산출내역)
 - 로봇라이선스 구입

품명	수량	단가	금액
RPA 관리용 웹페이지	2	13,200,000	26,400,000
자동화 설계 프로그램	1	4,950,000	4,950,000
자동화 실행 프로그램(봇)	4	6,050,000	24,200,000
합 계			56,000,000

다. 노후화 망분리 장비 교체(46백만원)

- (주요내용) 11개 소속기관의 망분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장비 기술지원 EoS*(23.12.31.) 및 장비 노후화**에 따른 신규 망분리 장비 구매

* 서비스 종료(End of Service) 이후 '24.12월 지원 종료

** '15.11월 및 '19.12월 구매한 장비로 「물품관리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내용연수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6년)초과

○ (산출내역)

- 신규 망분리 장비 구입

품명	수량	단가	금액
NetSplitter V3.0 NSG-500B(망분리 장비)	2	23,000,000	46,000,000
합 계			46,000,000

라. 광업정보시스템 서버 고도화(48백만원)

○ (주요내용) 광업정보시스템 업무망/인터넷 WAS 서버 OS 및 시스템 S/W 기술지원 종료 (EoS)*로 인한 유지보수 차질, 취약점 발생 등 운영상 문제점 개선 필요

* EoS 시점 : Oracle Linux 7.9('24. 12월), Jboss 5.2('16. 11월), JAVA 1.7('22. 7월)

- 업무망/인터넷 WAS 서버용 H/W 및 OS, 시스템 S/W 최신버전 구매

○ (산출내역)

- H/W 및 시스템 S/W 구매 (구축비(추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체대상)

품명	수량	단가	금액(단위: 원)
업무망/인터넷 서버 H/W(OS 포함)	4	6,000,000	24,000,000
시스템 S/W(WAS S/W)	4	6,000,000	24,000,000
합 계			48,000,000

② 정보화 협의체 운영 : 6백만원

○ (주요내용)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간의 시행계획 수립, 시스템 관리 및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등의 업무협의를 위한 정보화 협의체 운영

○ (산출내역) 산업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등 정보화 협의체 운영(0.3백만원×20회)

(2) 행정시스템 유지보수 : (2025) 1,286 → (2026요구) 1,207백만원, △6.1

① H/W 유지보수 : 148백만원

* 행정정보시스템(76식): 148백만원(보안장비 35식, 네트워크 장비 20식, 서버 관련 장비 21식)

구분	HW		
	도입가	요율	유지보수 비용 (백만원 미만 절사)
행정정보시스템	2,123,665,800	7%	148,000,000
합계	2,123,665,800		148,000,000

② 상용 S/W 유지보수 : 210백만원

* 행정정보시스템(80식): 175.5백만원, 디지털도서관(3식): 22.5백만원, 광업정보시스템(14식): 12백만원

구분	상용 SW		
	도입가	요율	유지보수 비용 (십만원 미만 절사)
행정정보시스템	2,382,000,000	7.37%	175,500,000
디지털 도서관	273,000,000	8.24%	22,500,000
광업정보시스템	197,067,000	6.09%	12,000,000
합계	2,852,067,000		210,000,000

③ 개발 S/W 유지보수 : 722백만원

* 행정정보시스템(18식): 589백만원, 원자재상시경보통제시스템(1식): 15백만원, 광업정보시스템(1식): 118백만원

구분	상용 SW		
	구축비	요율	유지보수 비용 (백만원 미만 절사)
행정정보시스템	6,340,000,000	9.29%	589,000,000
원자재상시경보통제시스템	237,000,000	6.3%	15,000,000
광업정보시스템	1,520,000,000	7.76%	118,000,000
합계	8,097,000,000		722,000,000

④ 위탁운영비 : 59백만원

가. 광업정보시스템 위탁운영: 59백만원

- 사용자 업무지원, 민원대응 등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기술자 1인)

* 광업정보시스템은 광업권 관련 130개 기관의 업무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시스템으로, 주요 이용자인 광업권자의 노령화(평균연령 60.3세)로 인하여 민원대응 인력 상주 필요

업무활동		직무별 투입공수(MM)		
		IT프로젝트관리	IT시스템관리	IT시스템기술지원
투입인력		0	0	12
평균임금		9,525,983	9,095,496	4,493,456
인건비		0	0	53,921,472
직접인건비합계		53,921,472		
제경비	직접인건비×10%	5,392,147		
기술료	(인건비+제경비)×10%	5,931,362		
부가세	(인건비+제경비+기술료)×10%	6,524,498		
합 계		71,769,479		
할인율	17.7%	59,000,000		

⑤ 기타 운영비 : 68백만원

- 원자재상시경보통제시스템(WACS) 데이터 및 분석 자료 구매: 68백만원

* 국제 원자재 시장의 산업 관련 주요 16개 품목별 원자재 지수 데이터 및 분석 자료를 전문 분석기관을 통하여 제공받음

(3) 정보보호체계구축 : (2025) 719 → (2026요구) 1,232백만원, +71.3%

① 정보보호 프로그램 구입 : 237백만원

- 산업부 내·외부망 PC 및 서버 대상 바이러스 감염 방지 및 운영체제 최신 패치 등 보안기능 유지
-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보호체계 구축을 통한 지능화·고도화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 대응 필요
- * 사용자 및 서버용 내·외부망 보안 프로그램 연간 라이선스 유지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백신	1,500	26,667	40,000,000
내PC지키미	1,500	20,000	30,000,000
패치관리시스템(PMS)	1,500	20,000	30,000,000
Microsoft GA Subscription	600	228,334	137,000,000
합 계			237,000,000

② 노후화 장비 교체(망간자료전송) : 170백만원

- 외부 악성코드 유입 및 내부자료 무단 유출을 방지하는 장비의 노후화로('17년 도입) 속도 저하 및 잦은 오류 발생 중이며, 운영체제의 보안 지원이 중단되어 보안취약점 존재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망간자료전송-SW	2	50,000,000	100,000,000
망간자료전송-사용자 라이선스	500	52,000	26,000,000
망간자료전송-서버	4	11,000,000	44,000,000
합 계			170,000,000

③ 노후화 장비 교체(망연계 솔루션) : 72백만원

- 망분리된 시스템 간 데이터 전송을 통하여 내부에서 외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 노후화로 인해 운영체제의 보안 취약점 존재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망연계-SW	1	50,000,000	50,000,000
망연계-서버	2	11,000,000	22,000,000
합 계			72,000,000

④ 노후화 장비 교체 : 294백만원

- OS 업그레이드에 따른 노후 장비 교체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인터넷 자료저장 방지	1	13,000,000	13,000,000
통합로그시스템	2	51,000,000	102,000,000
접근통제보안감사	2	10,000,000	20,000,000
악성문서탐지시스템	1	71,000,000	71,000,000
접속기록관리 솔루션	2	15,000,000	30,000,000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1	58,000,000	58,000,000
합 계			115,000,000

⑤ 네트워크 접근통제 관리 라이선스 : 117백만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네트워크 접근통제 관리 라이선스	130	900,000	117,000,000
합 계			117,000,000

⑤ 보안나라 전산장비 교체 : 267백만원

- 노후화('14년도 도입)로 성능이 저하된 보안나라 전산장비 교체

구 분	수량	단가	금액
국가암호장비 전산자료보호용 VPN	1	13,000,000	13,000,000
DBMS서버	2	56,000,000	112,000,000
WAS서버	2	49,000,000	98,000,000
웹 서비스 관리툴	1	44,000,000	44,000,000
합 계			267,000,000

⑥ 개인정보관리 솔루션 구입(30백만원)

- 개인정보를 보관중인 무역위 무역구제시스템 및 위원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기록 관리를 위한 솔루션 구입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에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에 따른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

품명	수량	단가	금액
WEEDS Trace Series	3식	10,000,000	30,000,000
합 계			30,000,000

⑦ 정보보안 수준 강화(45백만원)

- 지능화·고도화되는 해킹 시도 및 보안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부 및 공공기관 웹 사이트 점검
- *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보안강화를 위해 비표준 기술 제거, 유해 게시물 등록 차단, UI/UX 최적화 등 주기적 점검 진행

품명	수량	단가	금액
공공 웹사이트 점검	1식	45,000,000	45,000,000
합 계			45,000,000

(4)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 (2025) 100 → (2026요구) 100백만원, 전년동

①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 40백만원

-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20백만원

내역	금액
공모전 개최, 상금 지급, 홍보 및 수요조사 등	20,000,000
합 계	20,000,000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개방·품질관리 용역: 20백만원

내역	금액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품질관리, 오픈API 개발, 표준화 및 이용 활성화 전방에 대한 용역	20,000,000
합 계	20,000,000

②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체계 기반 마련 : 60백만원

- 산업부 협업부서 지원을 위한 과학적 데이터 분석: 40백만원

내역	금액
과제 발굴 및 전문가 분석: 20백만원x2개 과제 또는 40백만원 x1개 과제	40,000,000
합 계	40,000,000

- 민·관 데이터 전문가 연구협의회 운영: 20백만원

내역	금액
협의체 구성·운영·심사·강의 등 16백만원 + 인쇄비 등 4백만원	20,000,000
합 계	20,000,000

(5) 온북 시스템 구축 : (2025) 648백만원 → (2026요구) 715백만원, +10.3%

-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현장행정 강화 등 스마트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2PC(업무망PC, 인터넷 PC)를 1PC(업무용 온북 노트북)로 전환

구 분		내 용	내역			비용 성격
			단가	수량	금액	
온북 단말기	노트북	온북 단말기(노트북)	19.5	200	390	-
보안 인프라 구축	보안게이트웨이 구축	보안 인증 장치	-	-	-	1,000유저 한도
	보안게이트 라이선스	보안 인증 장치 라이선스	0.066	600개	39.6	신규 노트북 당 3개
구름플랫폼 및 단말가상화	GPMS	단말기 관리·정책 통제 시스템	0.0154	200개	3.08	노트북 당 매년 1개 갱신
	구름OS	클라우드 기반 OS 라이선스	0.044	200개	8.8	노트북 당 매년 1개 갱신
	구름OS 설치서비스	구름 OS를 온북에 설치하는 초기 서비스	0.055	200개	11.0	신규 노트북 당 1개
	단말가상화	클라우드 상에서 가상 단말 제공 (PC 대체)	0.55	200개	110.0	신규 노트북 당 1개
구축 개발 및 운영	구름연동 및 커스터마이징	온북과 구름 시스템의 연동 개발	20.79	2식	41.58	-
	구축 및 운영지원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인건비 등	55	2M/M	110	-
합 계		-	715백만원			-

(6) 무역 구제 시스템 구축 : (2026요구) 1,207백만원, 순증

- 신속하고 효율적인 무역위원회 사건조사를 위해 운영 중인 조사시스템의 개편 추진

내역	금액
시스템 개발비	547,000,000
응용 SW 구입비	536,000,000
서버 등 인프라 구축	124,000,000
합 계	1,207,000,000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983	<p>< 정보시스템 고도화 230백만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224) · 정보화 협의체 운영지원(6) <p><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1,286백만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W 유지보수(108) ·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25) · 상용 S/W 유지보수(250) · 개발 S/W 유지보수(722) · 위탁운영비(113) · 기타운영비(68) <p>< 정보보호체계구축 719백만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 S/W 구입(237) · 보안장비 구축(437) · 정보보안 수준 강화(45) <p><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100백만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40) · 데이터기반 행정체계 기반 마련(60) <p>< 온북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648백만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구축(480) · 구축 개발 및 운영(168) 	4,727	<p>< 정보시스템 고도화 266백만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260) · 정보화 협의체 운영지원(6) <p><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1,207백만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W 유지보수(148) · 상용 S/W 유지보수(210) · 개발 S/W 유지보수(722) · 위탁운영비(59) · 기타운영비(68) <p>< 정보보호체계구축 1,232백만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 S/W 구입(237) · 보안장비 구축(803) · 네트워크 접근통제 관리 라이선스(117) · 개인정보관리 솔루션 구입(30) · 정보보안 수준 강화(45) <p><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100백만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40) · 데이터기반 행정체계 기반 마련(60) <p>< 온북 시스템 구축 715백만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북 단말기(390) · 구름플랫폼 및 단말가상화(173) · 구축 개발 및 운영(152) <p>< 무역구제 시스템 구축 1,207백만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개발비(547) · 응용 SW 구입비(536) · 서버 등 인프라 구축(124)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정보시스템 이용자만족도 (단위:점)	목표	86.80	83.80	82.70	82.70	82.70	최근 3년간 실적을 바탕으로 상향조정하여 설정	정보시스템 이용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 후 만족도 측정	부내 직원 및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실적	79.13	78.82	81.55	-	-			
	달성도	91.2	94.1	98.6	-	-			
행정정보시스템 이용률 (단위:건)	목표	54.00	54.80	60.58	70.19	70.19	최근 3년간 실적을 바탕으로 상향조정하여 설정	(Σ연간 업무포털 이용자수:총인원)X100 =시스템 활용율)	접속로그 분석
	실적	54.82	70.11	75.60	-	-			
	달성도	101.5	127.9	124.8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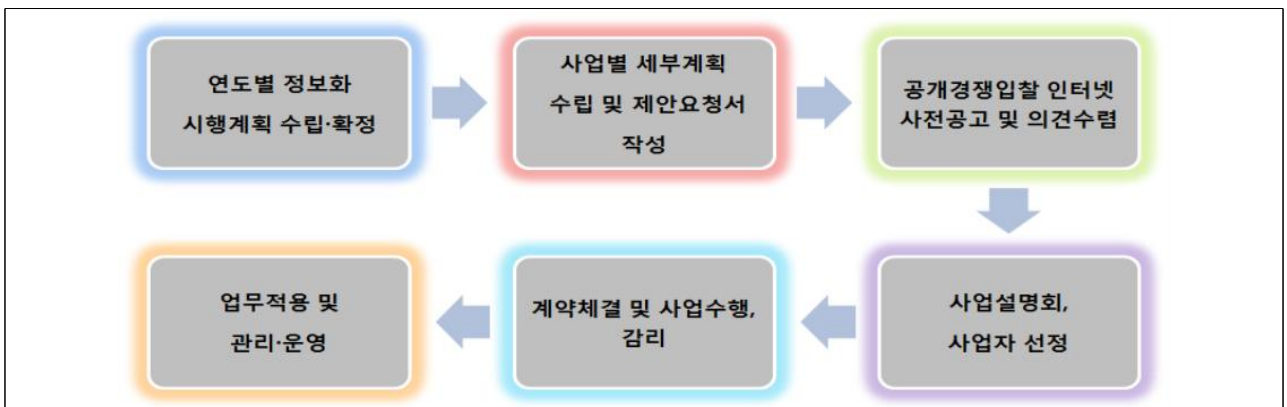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부내 행정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기능 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
- 정보보호체계 보안환경 등 인프라 강화로 사이버 침해사고 시 효과적인 대응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749	4,123	4,974	6,332	3,498	
2025~2029		2,983	3,952	4,523	4,083	4,08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산업통상부 직원들의 원활한 행정·정책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기능 고도화
- 홈페이지 등 안정적 운영으로 대국민 서비스의 고객만족도 제고
-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및 품질제고 사례 발굴,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혁신성장 기반 일자리 창출에 기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13) 부처 건의사항

- 산업부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정책업무 지원, 대국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기 운용한 정보시스템의 단계별 고도화 필요
- 나날이 지능화·복잡화되고 있는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보안 대응체계 강화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265	-	3,265	54	-	-	3,319	2,976	91.1	89.6	215	128
2023	3,007	-	3,007	215	-	-	3,222	3,031	100.7	94.1	100	91
2024	2,749	-	2,749	100	-	-	2,849	2,730	99.3	95.8	109	10
2025	2,983	-	2,983	109	190	-	3,282	3,056	102.4	93.1	103	12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128백만원) : 집행잔액 - 이월(215백만원) : 계약체결 지연에 따른 이월액 발생
2023	- 불용(91백만원) : 광업정보시스템 HW·SW 구매예산 48백만원, 행정시스템 고도화 28백만원 등 집행잔액 91백만원 불용 - 이월(100백만원)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준공일 미도래에 따라 사업비 잔금 100백만원 이월
2024	- 불용(10백만원) : 집행잔액 - 이월(109백만원)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51백만원),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58백만원) 준공일 미도래에 따라 109백만원 이월
2025	- 불용(123백만원) : 낙찰차액(114백만원), 집행잔액(9백만원) - 이월(148백만원)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67백만원), 비밀관리시스템(81백만원) 준공일 미도래에 따라 148백만원 이월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5.12)	본부전산운영경비 (7111-252)	430-01	190	산업통상자원행정 정보시스템구축 (7131-501)	430-01	온북 시범 구축 사업 추진 관련 자산취득비 부족

무역위원회

세출예산 총괄표(무역위원회)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결산	2025예산		2026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예산	정부안	확정(B)	(B-A)	%
무역위원회	1,749	1,793	1,793	1,722	1,722	△71	△4.0
일반회계	1,749	1,793	1,793	1,722	1,722	△71	△4.0
1200 무역구제	1,749	1,793	1,793	1,722	1,722	△71	△4.0
무역구제지원 사업 (1233-301)	1,749	1,793	1,793	1,722	1,722	△71	△4.0

<div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10px;">사 업 명</div> <div style="font-size: 1.1em;">(1) 무역구제지원사업 (1233-301)</div>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110	113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무역 및 투자유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3	301
명칭	무역구제	무역구제지원	무역구제지원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무역구제 지원사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무역위원회	이민영		김솔잎
		무역조사실			
	사업시행주체	무역구제정책과	044-203-5850		044-203-5854
		무역조사실			
		무역구제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무역구제지원사업	1,749	1,793	1,793	1,722	1,722	△ 71	△ 4.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93	1,793	1,749 [1,749]	-	43.9	1,793	1,793	1,747 [1,747]	1,793	1,747 [1,747]	15	31	1,722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경쟁력강화	749.0	749.0	749.0 [749.0]	-	-	749.0	749.0	727.7 [727.7]	749.0	727.7 [727.7]	-	21.3	823.0
- 일반수용비(210-01)	680.8	680.8	680.8 [680.8]	-	-	680.8	680.8	659.5 [659.5]	680.8	659.5 [659.5]	-	21.3	758.8
- 국내여비(220-01)	18.6	18.6	18.6 [18.6]	-	-	18.6	18.6	18.6 [18.6]	18.6	18.6 [18.6]	-	-	18.6
- 국외여비(220-02)	42.6	42.6	42.6 [42.6]	-	-	42.6	42.6	42.6 [42.6]	42.6	42.6 [42.6]	-	-	38.6
- 사업추진비(240-01)	7.0	7.0	7.0 [7.0]	-	-	7.0	7.0	7.0 [7.0]	7.0	7.0 [7.0]	-	-	7.0
· 무역구제진흥	281.0	281.0	281.0 [281.0]	-	-	281.0	281.0	281.0 [281.0]	281.0	281.0 [281.0]	-		281.0
- 일반수용비(210-01)	281.0	281.0	281.0 [281.0]	-	-	281.0	281.0	281.0 [281.0]	281.0	281.0 [281.0]	-		281.0
· 산업경쟁력조사 및 제도·현안연구	450.0	450.0	436.8 [436.8]	-	13.2	450.0	450.0	430.2 [430.2]	450.0	430.2 [430.2]	15	4.8	336.0
- 일반연구비(260-01)	450.0	450.0	436.8 [436.8]	-	13.2	450.0	450.0	430.2 [430.2]	450.0	430.2 [430.2]	15	4.8	336.0
· 무역구제 국제협력	313.0	313.0	282.2 [282.2]	-	30.8	313.0	313.0	308.1 [308.1]	313.0	308.1 [308.1]	-	4.9	282.0
- 일반수용비(210-01)	34.0	34.0	34.0 [34.0]	-	-	34.0	34.0	34.0 [34.0]	34.0	34.0 [34.0]	-	-	30.0
- 일반용역비(210-14)	244.0	244.0	222.0 [222.0]	-	22.0	244.0	244.0	239.1 [239.1]	244.0	239.1 [239.1]	-	4.9	222.0
- 국내여비(220-01)	3.0	3.0	3.0 [3.0]	-	-	3.0	3.0	3.0 [3.0]	3.0	3.0 [3.0]	-	-	3.0
- 국외여비(220-02)	28.0	28.0	19.2 [19.2]	-	8.8	28.0	28.0	28.0 [28.0]	28.0	28.0 [28.0]	-	-	23.0
- 사업추진비(240-01)	4.0	4.0	4.0 [4.0]	-	-	4.0	4.0	4.0 [4.0]	4.0	4.0 [4.0]	-	-	4.0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비목별 분류(합계)	1,793	1,793	1,749	-	43.9	1,793	1,793	1,747 [1,747]	1,793	1,747 [1,747]	15	31	1,722	
·일반수용비(210-01)	995.8	995.8	995.8 [995.8]	-	-	995.8	995.8	974.5 [974.5]	995.8	974.5 [974.5]	-	21.3	1,069.8	
·일반용역비(210-14)	244.0	244.0	222.0 [222.0]	-	22.0	244.0	244.0	239.1 [239.1]	244.0	239.1 [239.1]	-	4.9	222.0	
·국내여비(220-01)	21.6	21.6	21.6 [21.6]	-	-	21.6	21.6	21.6 [21.6]	21.6	21.6 [21.6]	-	-	21.6	
·국외여비(220-02)	70.6	70.6	61.8 [61.8]	-	8.8	70.6	70.6	70.6 [70.6]	70.6	70.6 [70.6]	-	-	61.6	
·사업추진비(240-01)	11.0	11.0	11.0 [11.0]	-	-	11.0	11.0	11.0 [11.0]	11.0	11.0 [11.0]	-	-	11.0	
·일반연구비(260-01)	450.0	450.0	436.8 [436.8]	-	13.2	450.0	450.0	430.2 [430.2]	450.0	430.2 [430.2]	15.0	4.8	33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목적) 덤핑,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무역구제 기반 강화 추진
- (사업내용) 불공정무역행위·국내산업피해 조사(조사→판정→제재 또는 제재 건의), 무역구제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연구·개선, 홍보, 국제협력 등 추진
 - ①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 강화)** 덤핑,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심의·판정을 위한 현지 조사, 법률 자문, 무역위원회 운영, 행정소송 대응 등
 - ② **(무역구제진흥)** 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 등을 위한 세미나, 대학(원)생 논문대회/경연대회, 무역구제지 발간, 홍보, 시장 조사·상담 지원 추진
 - ③ **(산업경쟁력조사 및 제도·현안 연구)** 국내산업 피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동향 모니터링 운영, 산업피해 예상품목의 산업경쟁력 조사, 제도/현안 연구 등 추진
 - ④ **(무역구제 국제협력)** 對韓 수입규제 대응,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주요국과의 무역구제 협력·협상 참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5조, 제15조, 제25조)

제5조(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 결정) ① 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신청)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면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해당 특정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 무역위원회는 외국으로부터의 물품 수입이나 서비스 공급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무역협정의 체결이나 국제무역제도의 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대외무역법(제33조)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 관세법(제51조, 제57조, 제65조)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①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이하 "피해의 구제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87년 무역위원회 설립(근거 : 대외무역법)
- '89~'99년 무역구제 세미나 매년 개최(「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행사로 발전)
- '93년 반덤핑 조사개시결정 권한 이관(재무부 ⇒ 무역위원회)
- '95년 반덤핑 및 보조금 조사업무 이관(관세청 ⇒ 무역위원회), 제도운용 일원화
- '01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제1회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무역구제 소식지 '무역구제지' 창간
- '02년 산업경쟁력조사 실시
* 미국 ITC의 개별산업 경쟁력조사 및 무역정책연구(美 관세법332조) 벤치마킹
- '03년 제1회 한·EU 무역구제협의회 개최
- '05년 제1회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 개최
- '06년 무역구제포털시스템 구축
- '07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최초 개소(시계, 의류, 시계 등 3개 업종단체)
- '14~'15년 무역위원회-WTO 협력 양해각서 체결(「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 WTO 후원)
제1회 한·미 무역구제기관간 기술협의회 개최
- '14년 무역위-관세청 업무협력 MOU 체결
- '18년 한-인도 무역구제협력 MOU 체결 및 제1차 무역구제협력회의 개최
- '19년 무역위-경찰청 간 업무협력 MOU 체결, 무역구제 수입동향시스템 구축
- '20년 관세법/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고시 등 법규 재정비
- '21년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덤핑·상계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 세부운영규정 개정
- '22년 과징금제도 개선을 위한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개정(11월)
상계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절차 세부운영 규정 제정(6월)
- '23년 '23년 제3차 무역구제진흥 기본계획 수립(4월, 무역위 안건 상정)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관세법 개정, 2023.12.31. 공포, 2025.1.1. 시행)
- '24년 무역위-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업무협약(MOU) 체결(5월)
무역구제제도 효과성제고방안 마련(7월)
- '25년 무역위원회 조직 확대개편(2개과 신설, 정원 43→59명 확대, 3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47	1,644	1,793	1,793	1,72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 사업 수혜자 : 국내기업, 대학 유관 협단체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무역구제지원사업 : (2025 본예산) 1,793백만원 → (2026 예산) 1,722백만원, 71백만원 감액

- ①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 강화 : (2025 본예산) 749백만원 → (2026) 823백만원, 74백만원 증액
 - (요구) 조사신청 증가, 신규 조사수요 등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비용 74백만원 증액
 - (산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활동 703백만원, 무역위원회 운영 120백만원
- ② 무역구제 진흥 : (2025 본예산) 281백만원 → (2026) 281백만원, 전년동일
 - (요구)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쟁력 회복 지원 및 무역구제제도 홍보 강화를 위해 전년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학술세미나 26백만원, 논문발표/경연대회 74백만원, 무역구제지발간 50백만원, 무역구제 제도홍보 99백만원, 무역구제조사·상담지원 32백만원
- ③ 산업경쟁력조사 및 제도·현안연구 : (2025 본예산) 450백만원 → (2026 요구) 336백만원, 114백만원 감액
 - (요구) 우회덤핑, 상계관세 등 新수요 대응 및 선진 조사기법 도입 등 추진하기 위해 114백만원 감액된 예산 요구
 - (산출) 산업경쟁력조사 및 제도·현안연구 176백만원, 수입동향모니터링 100백만원, 산업피해품목 경제분석 60백만원
- ④ 무역구제 국제협력
 - : (2025 본예산) 313백만원 → (2026 요구) 282백만원, 31백만원 감액
 - (요구) 서울국제포럼 개최,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전년대비 31백만원 감액된 예산 요구
 - (산출) 서울국제포럼 222백만원, 국제협력 6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93천원	<p>○ 일반수용비(210-01) : 995,800천원</p> <p>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경쟁력 강화(680,8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활동(현지조사, 자문감정, 소송비용 등) : 18,950천원×27건(조사 등)=511,800천원 · 무역위원회 운영 : 9,000천원×12회=108,000천원 · 안건 인쇄비 등 : 3권×1,694천원×12회=61,000천원 <p>나. 무역구제진흥(281,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세미나 : 13,000천원×2회(하계-동계)=26,000천원 · 논문발표대회·경연대회 : 74,000천원 · 무역구제지 발간(계간지) : 12,500천원×4회=50,000천원 · 홍보 : 25,000천원×4건=99,000천원 · 무역구제 조사·상담 : 3,200천원×10건=32,000천원 <p>다.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국제협력 업무협의 등 (34,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문회의자료 번역 및 제작 : 1,000천원×10회=10,000천원 · 소모품 구입 등 운영경비 : 400천원×10회=4,000천원 · 동시통역비(한-영) 등 : 2,000천원×1명×10회=20,000천원 <p>○ 일반용역비(210-14) : 244,000천원</p> <p>가.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244,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사 용역 : 244,000,000원×1회=244,000천원 	1,722천원	<p>○ 일반수용비(210-01) : 1,069,800천원</p> <p>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경쟁력 강화(758,8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활동(현지조사, 자문감정, 소송비용 등) : 19,660천원×30건=589,800천원 · 무역위원회 운영 : 9,000천원×12회=108,000천원 · 안건 인쇄비 등 : 3권×1,694천원×12회=61,000천원 <p>나. 무역구제진흥(281,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세미나 : 13,000천원×2회(하계-동계)=26,000천원 · 논문발표대회·경연대회 : 74,000천원 · 무역구제지 발간(계간지) : 12,500천원×4회=50,000천원 · 홍보 : 25,000천원×4건=99,000천원 · 무역구제 조사·상담 : 3,200천원×10건=32,000천원 <p>다.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국제협력 업무협의 등 (3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문회의자료 번역 및 제작 : 600천원×10회=6,000천원 · 소모품 구입 등 운영경비 : 400천원×10회=4,000천원 · 동시통역비(한-영) 등 : 2,000천원×1명×10회=20,000천원 <p>○ 일반용역비(210-14) : 222,000천원</p> <p>가.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222,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사 용역 : 222,000,000원×1회=222,000천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p>○ 국내여비(220-01) : 21,600천원</p> <p>가. 무역구제조사, 무역위원회 참석 85,000원*10명*24회 =20,400천원</p> <p>나. 국제협력 업무협의 및 회의 등 참석 : 85,000원*3명*6회 =1,530천원</p> <p>다. 조정재원 (-330천원)</p> <p>○ 국외업무여비(220-02) : 70,600천원</p> <p>가. 덤핑 해외 현지조사(52,561천원) • 항공료(5급) : 1,200천원*2명*5회=12,000천원 • 일비 : \$30*14일*2명*5회=5,628천원(\$4,200) • 숙박비 : \$137*13일*2명*5회 =23,865천원(\$17,810) • 식비 : \$59*14일*2명*5회=11,068천원(\$8,260)</p> <p>나. WTO 등 회의 참석(7,900천원) • 항공료(5급)+실무자 기증 : 2,500천원*2명*1회=5,000천원 • 일비 : \$30*6일*2명*1회=482천원(\$360) • 숙박비 : \$137*4일*2명*1회=1,469천원(\$1,096) • 식비 : \$59*6일*2명*1회=949천원(\$708)</p> <p>다. 무역구제협력회의 등 회의 참석(10,599천원) • 항공료(5급) : 1,200천원*2명*2회=4,800천원 • 일비 : \$30*6일*2명*2회=965천원(\$720) • 숙박비 : \$137*4일*2명*2회=2,937천원(\$2,192) • 식비 : \$59*6일*2명*2회=1,879천원(\$1,416)</p> <p>라. 조정재원 (460천원)</p> <p>○ 사업추진비(240-01) : 11,000천원</p> <p>가. 무역구제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등(2,100천원) • 오·만찬비 등 : 30천원*10명*7회=2,100천원</p> <p>나. 무역위원회 운영 등(5,040천원) • 오·만찬비 등 : 30천원*14명*12회=5,040천원</p> <p>다. 무역구제 국제 협력회의 등 (4,000천원) • 오/만찬비 50천원*20명*3회=3,000천원 • 기념품 구입 등 33천원*10명*3회=1,000천원</p> <p>라. 조정재원 (-140천원)</p> <p>○ 일반연구비(260-01) : 450,000천원</p> <p>가. 산업경쟁력조사 및 제도·현안 연구(250,000천원) • 연구용역 : 25,000천원*10개 과제=250,000천원</p> <p>나. 수입동향시스템 활용 연구(100,000천원) • 산업영향조사 : 100,000천원*1건=100,000천원</p> <p>다. 산업피해 조사·조치품목 경제분석(100,000천원) • 품목 경제분석 : 50,000천원*2건=100,000천원</p>		<p>○ 국내여비(220-01) : 21,600천원</p> <p>가. 무역구제조사, 무역위원회 참석 85,000원*10명*22회 =18,700천원</p> <p>나. 국제협력 업무협의 및 회의 등 참석 : 85,000원*4명*9회 =3,060천원</p> <p>다. 조정재원 (-160천원)</p> <p>○ 국외업무여비(220-02) : 61,600천원</p> <p>가. 덤핑 해외 현지조사(38,600천원) • 항공료(5급) : 1,042천원*2명*8회=16,672천원 • 일비 : \$30*5일*2명*8회=3,312천원(\$2,400) • 숙박비 : \$137*4일*2명*8회 =12,100천원(\$8,768) • 식비 : \$59*5일*2명*8회=6,513천원(\$4,720)</p> <p>나. WTO 등 회의 참석(7,986천원) • 항공료(5급)+실무자 기증 : 2,500천원*2명*1회=5,000천원 • 일비 : \$30*6일*2명*1회=497천원(\$360) • 숙박비 : \$137*4일*2명*1회=1,512천원(\$1,096) • 식비 : \$59*6일*2명*1회=977천원(\$708)</p> <p>다. 무역구제협력회의 등 회의 참석(14,958천원) • 항공료(5급) : 1,000천원*2명*3회=6,000천원 • 일비 : \$30*6일*2명*3회=1,490천원(\$1,080) • 숙박비 : \$137*4일*2명*3회=4,537천원(\$3,288) • 식비 : \$59*6일*2명*3회=2,931천원(\$2,124)</p> <p>라. 조정재원 (56천원)</p> <p>○ 사업추진비(240-01) : 11,000천원</p> <p>가. 무역구제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등(2,400천원) • 오·만찬비 등 : 30천원*8명*10회=2,400천원</p> <p>나. 무역위원회 운영 등(5,400천원) • 오·만찬비 등 : 30천원*15명*12회=5,400천원</p> <p>다. 무역구제 국제 협력회의 등 (4,000천원) • 오/만찬비 50천원*10명*5회=2,500천원 • 기념품 구입 등 30천원*10명*5회=1,500천원</p> <p>라. 조정재원 (-800천원)</p> <p>○ 일반연구비(260-01) : 336,000천원</p> <p>가. 산업경쟁력조사 및 제도·현안 연구(176,000천원) • 연구용역 : 22,000천원*8개 과제=176,000천원</p> <p>나. 수입동향시스템 활용 연구(100,000천원) • 산업영향조사 : 100,000천원*1건=100,000천원</p> <p>다. 산업피해 조사·조치품목 경제분석(60,000천원) • 품목 경제분석 : 30,000천원*2건=60,000천원</p>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무역구제조사 결정 (단위: 건)	목표	38	39	17	18	20	최근 3년간의 평균실적을 고려하여 설정	(‘23년 이전) 무역위원회 상정된 조사개시결정+ 예비판정+최종 판정+공청회+기술 합의회개최간수합계	무역위원회 안전, 회의록 등
	실적	38	42	21	-	-		(‘24년 이후) 무역위원회 상정된 조사중단+예비판정 +최종판정 간수합계	
	달성도	100.0	107.7	123.5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무역구제조사 · 반덤핑 : 조사개시 5건, 작년말 신청건 포함 6건(13국) 조사진행 · 불공정무역행위 : 조사개시 8건, 총 10건 조사 진행
	- 무역구제진흥(홍보 등) · 무역구제 학술세미나(하계 6.17., 동계 11.11), 대학생 논문대회(11.11), 모의무역위원회(11.23),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12월) · 무역구제지 발간(4회), 무역구제 홍보영상 제작(9월), 제17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2.10) 등
	- 연구용역 · 산업경쟁력조사 및 제도/현안 연구 9개과제 추진
	- 국제협력 · 양자 협력 : 한·이집트 무역구제 협력 MOU 체결 추진 (1월), 한·중국 무역구제 협력회의·FTA 이행위(4월), 한·EU FTA 무역구제 작업반(6월), 한·WTO 고위급 면담(위원장사무차장, 6월), 한·EU & 한·영국 무역구제 기관 대표 면담(9월),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FTA 이행위(11월, 잠정) · 2022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10.12.(수)~14(금))
2023	- 무역구제조사 · 반덤핑 : 조사개시 7건(신규 1, 재심6), 최종판정 6건(조사종결 1), 덤핑관세부과 5건 · 불공정무역행위(지재권 침해 등) : 조사개시 10건, 최종판정 5건 · 무역구제조사 기반 강화 : 제3차 무역구제기본계획 수립(4.20),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관세법 개정)
	- 무역구제진흥(홍보 등) · 무역구제 학술세미나(하계 6.16., 동계 11.17), 대학생 논문대회(11.10), 모의무역위원회(11.2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세미나(11.12) · 무역구제지 발간(4회), 지역별 통상진흥기관 협의회와 연계하여 무역구제제도 홍보, 업계·전문가 대상 간담회 지속 추진 및 현장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경쟁력 조사, 제도현안 연구 등 연구용역 추진 (14건) - 국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10.12.(목)~14(토), COAX 아셈볼룸) · 무역구제회의 개최·참석 : WTO 무역구제 기관장회의(5월),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FTA 이행위(11월), 한-베트남 FTA 공동위(12월) · 고위급 면담(5월) :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의장, 호주 반덤핑위원회 위원장(5.3), 영국 무역구제청 청장, 인도 무역구제총국 부국장(5.4), 중국 무역구제 부국장(10.13) · FTA 무역구제분야 협상 참여 및 타결: (타결)걸프협력이사회(GCC)·아랍에미리트(UAE)·에콰도르·과테말라, (협상중)한-몽고 EPA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구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덤핑 : 조사개시 10건, 최종판정 7건(조사종결 1건) · 불공정무역행위(지재권침해 등) : 조사개시 13건, 최종판정 14건(조사중단 1건) - 무역구제조사 기반 강화 : 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방안 마련(7월) - 무역구제진흥(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구제 학술세미나(2회), 대학생 논문대회(7.4) 개최, 무역구제지 발간 · 무역구제 조사·상담 사업 5건 지원 · 지역별 통상진흥협의회와 협력, 무역구제제도 설명회 4회 진행(100여개 기업 참석) ·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 설립 고시 개정(6.26) · 대응 지원센터 설립 간담회 개최(7.19), 대응 지원센터 4개 기관 신규 지정 - 연구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구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 연구용역 추진 (16건) - 국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행사 : 2024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24.7월, COEX) · 다자회의 : WTO 반덤핑위원회 및 반덤핑 작업반 참석("24.4월, 10월) · 양자협력 :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FTA이행위, 무역구제 세미나 개최("24.11월) · 고위급 면담 : 美상무부 부차관보, 美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면담("24.2월),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의장, 中무역구제국 부국장 등 면담("24.7월)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구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덤핑 : 조사개시 11건, 최종판정 9건 · 불공정무역행위(지재권침해 등) : 조사개시 8건, 최종판정 9건(조사종결 6건) - 무역위원회 조직 확대개편("25.3월, 4개과 → 6개과, 정원 43명 → 59명 확대) - 무역구제진흥(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구제 학술세미나(2회), 모의무역위(9월), 논문대회(11월) 개최, 무역구제지 발간 · 무역구제 조사·상담사업 4건 지원 · 지역별 통상진흥협의회와 협력, 무역구제제도 설명회 5회 진행 - 연구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구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 연구용역 추진 (16건) - 국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행사 : 2025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25.6월, COEX) · 다자회의 : 기관장회의(6월), 조사관회의(6월), WTO 규범 정례회의 참석("25.10월) · 양자협력 : 한-중,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FTA이행위, 양자회의(8건) 등 · 고위급 면담 : 한-EU, 한-캐, 한-호주(6월, 위원장), 한-미, 한-일(상임위원) 면담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덤핑, 지재권 침해 등 해외기업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신속·공정한 조사, 실효적인 무역구제조치로 국내산업피해 예방 및 국내산업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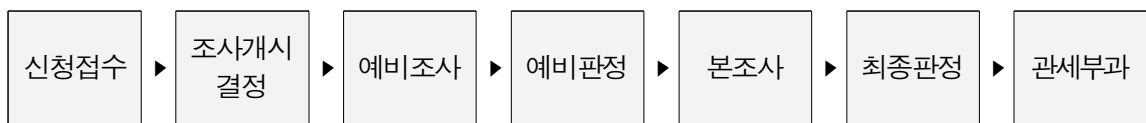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 직접 수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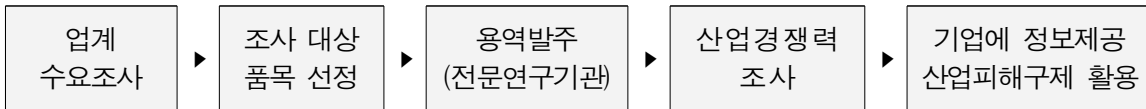
◦ 무역구제조사(덤핑)



◦ 무역구제진흥



◦ 산업경쟁력 조사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793	1,793	1,722	2,175	2,283	
2025~2029		1,793	1,722	3,769	4,145	4,56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내산업 피해 구제 효과성 제고)** 덤핑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판정, 선진 조사기법 적극 도입, 우회덤핑 조사범위 확대 등을 통한 조사기반 강화
- **(무역구제제도 기반 강화)** 수입동향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덤핑 의심사례 사전감지, 조사관련 효과적 기록·사건 관리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중소·중견기업 컨설팅 지원 확대
- **(국제협력)** 중국, 베트남 등 양자 무역구제 협의회 개최 등 양자 협력 채널 활성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715	△68	1,647	-	-	-	1,647	1,564	94.9	94.9	26.4	56.6
2023	1,644	-	1,644	26.4	-	-	1,670	1,619	98.5	96.9	-	51.5
2024	1,793	-	1,793	-	-	-	1,793	1,749	97.5	97.5	-	43.9
2025	1,793	-	1,793	-	-	-	1,793	1,747	97.4	97.4	15.0	31.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2022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와 관련하여 항공요금(초청경비)이 연초 대비 대폭 인상됨에 따른 '서울국제포럼' 예산 증액(세목간 조정 : 210-01 △39.1백만원 → 210-14 +39.1백만원) - (불용)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현지조사 미실시(31백만원), 낙찰차액 (5백만원) 등 - (이월) 연구용역(2개) 과제비 잔금 이월(하반기 연구용역 추진시 유찰로 인한 재공고 등으로 10월에 계약체결, 과제기간('22.10~'23.3월)을 감안하여 잔금 이월(26.4백만원)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 해외 현지실사 미실시(26백만원), 행사·용역 낙찰차액(15.5백만원) 등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 국제협력 회의 취소*(8.8백만원), 행사·용역 낙찰차액(35.1백만원) 등 * 한-베 FTA공동위('24.12.12~12.13), 한-중 경제공동위('24.12월)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 행사·용역 낙찰차액 등(31백만원) - (이월) 연구용역 과제비 잔금 이월(사업계획기간 연장('25.9~'26.4월)으로 잔금 이월(15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국가기술표준원

세출예산 총괄표(국가기술표준원)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결산	2025예산		2026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예산	정부안	확정(B)	(B-A)	%
국가기술표준원	99,139	110,833	118,233	126,929	126,929	16,096	14.5
<일반회계>	99,139	110,833	118,233	126,929	126,929	16,096	14.5
3700 산업기술표준및 제품안전관리	96,595	108,564	115,964	124,517	124,517	15,953	14.7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3736-301)	7,769	6,688	14,088	6,628	6,628	△60	△0.9
신기술제품인증 (3731-301)	2,429	2,734	2,734	2,748	2,748	14	0.5
국제표준활동 지원 (3731-302)	3,051	3,558	3,558	3,173	3,173	△385	△10.8
기술규제개혁 선진화체계구축 (3736-302)	1,040	1,133	1,133	1,120	1,120	△13	△1.2
개도국표준체계 보급지원(ODA) (3731-303)	2,890	2,019	2,019	2,020	2,020	1	0.1
제품시장감시 역량강화 (3732-303)	1,860	4,364	4,364	4,374	4,374	10	0.2
IT기반기술표준 정보화체계구축 (정보화) (3736-304)	2,366	806	806	1,328	1,328	522	64.8
안전제도기반 조성 (3732-304)	7,211	1,685	1,685	1,635	1,635	△50	△3.0
한국인인체 데이터조사및 활용기반구축 (3731-304)	1,686	1,849	1,849	1,849	1,849	-	-
국가표준기술 개발및보급 (R&D) (3731-305)	42,187	53,100	53,100	56,486	56,486	3,386	6.4

구분	2024결산	2025예산		2026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예산	정부안	확정(B)	(B-A)	%
국제적합성 평가기반구축 (3731-306)	2,003	1,620	1,620	1,533	1,533	△87	△5.4
제품사고조사 및수입제품 안전관리 (3732-306)	3,881	1,527	1,527	1,474	1,474	△53	△3.5
국가인증제도 혁신기반구축 (3731-307)	946	758	758	969	969	211	27.8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생태계조성 (3732-307)	1,652	1,247	1,247	1,272	1,272	25	2.0
법정계량선진화 기반구축 (3731-308)	1,509	1,161	1,161	1,157	1,157	△4	△0.3
국가표준활성화 (3731-309)	5,971	6,278	6,278	6,338	6,338	60	1.0
제품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 (3732-310)	1,529	592	592	589	589	△3	△0.5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 (3731-312)	4,755	3,818	3,818	3,778	3,778	△40	△1.1
한국제품안전 관리원지원 (3732-312)		5,657	5,657	7,646	7,646	1,989	35.2
해외인증지원 체계기반구축 (3731-328)	1,860	1,070	1,070	1,060	1,060	△10	△0.9
국가전략기준 물질개발(R&D) (3731-330)		3,300	3,300	6,800	6,800	3,500	106.1
국제표준 기반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R&D) (3731-331)		3,600	3,600	5,170	5,170	1,570	43.6

구분	2024결산	2025예산		2026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예산	정부안	확정(B)	(B-A)	%
제품안전관리 기술개발및실증 (R&D) (3731-339)				5,370	5,370	5,370	100.0
7100 산업통상자원 부행정지원	2,544	2,269	2,269	2,412	2,412	143	6.3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 (7134-301)	1,655	1,469	1,469	1,550	1,550	81	5.5
기술표준정책 (7134-302)	889	800	800	862	862	62	7.8

<div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10px;">사 업 명</div> <div style="font-size: 1.1em;">(1)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3736-301)</div>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 기업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6	301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무역기술장벽대응기반강화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술규제대응국	전민영	김용태	
		기술규제정책과	043-870-5520	043-870-5524	
	사업시행주체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TBT종합지원센터	오기수 센터장	02-3487-611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7,770	6,688	7,400	6,628	6,628	△ 60	△ 0.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869	7,884	7,770 [7,770]		114	6,688	14,088	14,060 [14,060]	14,088	14,060 [14,060]		28	6,628
· 해외기술규제조사 분석 및 대응지원	6,039	6,039	6,039 [6,039]		-	5,133	12,533	12,533 [12,533]	12,533	12,533 [12,533]		-	5,133
· WTO/FTA TBT 및 기술규제 애로협상	230	230	167 [167]		63	196	196	185 [185]	196	186 [186]		10	153
· FTA TBT 협상 및 이행강화	186	201	197 [197]		4	158	158	150 [150]	158	148 [148]		10	158
· FTA TBT 종합 지원	1,414	1,414	1,367 [1,367]		47	1,201	1,201	1,192 [1,192]	1,201	1,193 [1,193]		8	1,184
○ 비목별 분류(합계)	7,869	7,884	7,770 [7,770]		114	6,688	14,088	14,060 [14,060]	14,088	14,060 [14,060]		28	6,628
· 일반수용비(210-01)	150	110	66 [66]		44	136	93	91 [91]	93	93 [93]		-	93
· 임차료(210-07)	50	50	40 [40]		10	30	30	30 [30]	30	30 [30]		-	30
· 일반용역비(210-14)	386	386	378 [378]		8	383	383	383 [383]	383	383 [383]		-	366
· 국외업무여비(220-02)	75	115	85 [85]		30	75	118	108 [108]	118	108 [108]		10	75
· 사업추진비(240-01)	12	12	12 [12]		-	12	12	12 [12]	12	12 [12]		-	12
· 일반연구비(260-01)	1,071	1,086	1,064 [1,064]		22	833	833	817 [817]	833	815 [815]		18	833
· 사업출연금(350-02)	6,125	6,125	6,125 [6,125]		-	5,219	12,619	12,619 [12,619]	12,619	12,619 [12,619]		-	5,219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가능비목별 분류(합계)	7,869	7,884	7,770 [7,770]		114	6,688	14,088	14,060 [14,060]	14,088	14,060 [14,060]		28	6,628
· 해외기술규제조사 분석 및 대응지원	6,039	6,039	6,039 [6,039]		-	5,133	12,533	12,533 [12,533]	12,533	12,533 [12,533]		-	5,133
- 사업출연금(350-02)	6,035	6,035	6,035 [6,035]		-	5,129	12,529	12,529 [12,529]	12,529	12,529 [12,529]		-	5,129
- 사업추진비(240-01)	4	4	4 [4]		-	4	4	4 [4]	4	4 [4]		-	4
· WTO/FTA TBT 및 기술규제 애로협상	230	230	167 [167]		63	196	196	185 [185]	196	186 [186]		10	153
-국외업무여비(220-02)	75	115	85 [85]		30	75	118	108 [108]	118	108 [108]		10	75
- 임차료(210-07)	50	50	40 [40]		10	30	30	30 [30]	30	30 [30]		-	30
- 일반수용비(210-01)	97	57	34 [34]		23	83	40	39 [39]	40	40 [40]		-	40
- 사업추진비(240-01)	8	8	8 [8]		-	8	8	8 [8]	8	8 [8]		-	8
· FTA TBT 협상 및 이행강화	186	201	197 [197]		4	158	158	150 [150]	158	148 [148]		10	158
- 일반연구비(260-01)	186	201	197 [197]		4	158	158	150 [150]	158	148 [148]		10	158
· FTA TBT 종합 지원	1,414	1,414	1,367 [1,367]		47	1,201	1,201	1,192 [1,192]	1,201	1,193 [1,193]		8	1,184
- 일반연구비(260-01)	885	885	867 [867]		18	675	675	667 [667]	675	667 [667]		8	675
- 일반용역비(210-14)	386	386	378 [378]		8	383	383	383 [383]	383	383 [383]		-	366
- 일반수용비(210-01)	53	53	32 [32]		21	53	53	52 [52]	53	53 [53]		-	53
- 사업출연금(350-02)	90	90	90 [90]		-	90	90	90 [90]	90	90 [90]		-	9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현황)**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무역기술장벽(TBT*)이 국가간 무역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며, 이에 WTO 통보 및 미통보 규제건수 증가추세에 있음

* Technical Barriers to Trade(무역기술장벽)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비관세장벽)

** WTO TBT 통보문 추이: '19)3,337건→'20)3,354건→'21)3,966건→'22)3,896건→'23)4,079건→'24)4,337건

** WTO TBT 미통보문 발굴 추이: '19)550건→'20)570건→'21)662건→'22)925건→'23)1,208건→'24)1,732건

- 외국의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①규제정보를 수집·분석(기초/심층)·전파하고, ②WTO/FTA TBT등 협상(양자/다자, 현지방문 협상)을 통해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③TBT 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

-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국가들에 대한 표준 분석 및 컨설팅, TBT 교육등수행

- **(내역사업 ① 해외 기술규제 조사, 분석 및 대응지원)** WTO 통보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우리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통보문 입수 및 분석(기초분석 및 심층분석)을 통해 관련 규제내용을 수출기업에 전파

- 규제대상의 범위, 제개정 주요내용, 국가간 규제내용 과도성 비교, 문제점 및 대응방안 마련, 산업계 의견수렴(정부/TBT종합지원센터/업계/시험분석기관/업종별 협단체, 무역유관기관등)

- **(내역사업 ② WTO/FTA TBT 및 기술규제 애로협상)** 양자협상, 다자협상 및 타국 공조를 위한 전문가 협의 등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

- WTO TBT 위원회(3,6,11월)에 참석, **다자협상**을 실시하여 우리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FTA TBT 위원회(예: 한-중국, 한-베트남), 현지 규제당국 직접방문 등 **양자협상**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TBT 애로 현안을 적기 해소

- **(내역사업 ③ FTA TBT 협상·이행 강화)** 상대국의 규제현황, 법, 제도 및 기술규정 등을 분석하기 위한 사업비로 사용

- 분석된 협상 당사국의 규제정보를 사용하여 협상시 우리 국익에 최대 반영

- * 협상 전후시 상대국의 각종 기술규제 법령, 제도 등을 충분하게 알고 있어야만 우리의 TBT 협상/이행시 국가이익을 반영할 수 있음

- (내역사업 ④ **FTA TBT 종합지원**) (중국 및 베트남 등으로 수출 지원 확대)

- 최근 중국의 환경규제, 제품성능 규제 등 기술규제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베트남, 인니, 인도 등 수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기술규제 및 인증 애로 해소를 위한 **표준분석, 컨설팅 및 TBT 교육, 설명회** 등 정보제공 필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제1항]** 정부는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국제표준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를 도입할 경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 ① 정부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및 국내·외 협력
 2.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3.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교육·훈련·조사·연구·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국가표준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2. 제7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국제협력

- 9의2.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보급 및 국내외 협력

9의3.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관련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9의4.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훈련·조사·연구·개발 및 홍보

- **[WTO/TBT 협정('95) 제10.1조]**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및 다른 회원국국내의 이 해당사자로부터의 모든 합리적인 문의에 응답할 수 있고 아래에 관한 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문의처가 존재하도록 보장한다. (이하 생략)

- 발효된 FTA 양자협정에서 규정(현재 22개*)

* 한-칠레 FTA, 한-EU FTA, 한-미국 FT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등

- (예시) **한-미 FTA 협정('07) 제9.6조 (투명성)** 3항 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그 제안을 통보할 때에, 이와 동시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미합중국 질의처, 또는 이 장의 부속서 9-가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② 추진경위

- '06. 6 FTA/TBT 협상 및 TBT 업무를 관장하는 기술규제대응과 신설
- '07. 4 OECD 보고서 관련 국무조정실에 TBT 중앙사무국 운영 계획보고
- '08. 9 TBT 중앙사무국 개설 후 무역기술장벽(TBT)을 전담 대응중
- '13.12 WTO/FTA-TBT 협상·이행 및 TBT 업무를 관장하는 기술규제대응국 신설
- '15. 5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既定 FTA 국내보완대책」 중 한-중 FTA 종합지원사업 추진
- '17. 5. 대선 10대 공약[주변 4국(중·일·러 등)과의 협력외교 강화 및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통상외교 역량 강화(국익우선 협력외교 2, 3)]
- '17. 8 국정과제 34-6, 미래시장진출을 위한 국가표준·인증 혁신
(무역기술장벽대응 지원 및 기술규제 개혁 선진화 체계 구축)
- '18. 6 범부처 협의회 구성·운영근거 및 출연금 지급 근거 마련(국가표준기본법)
- '19.11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418	8,474	7,869	14,088	6,62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방식, 출연방식(일부내역사업한)
- 사업시행주체 : 국표원, (참여기관) TBT종합지원센터(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시험분석 기관 KTR, KTC, KCL, KOTITI, 업종별협단체 KEA, KEAA, KCFA 등
- 사업 수혜자 : 국내 수출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외기술 규제 조사·분석 및 대응지원등	출연	TBT 종합 지원센터 (시험인증 산업협회)	5,219백만원	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제1항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2. 제7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국제협력 9의2.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u>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보급 및 국내외 협력</u> 9의3.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u>무역기술장벽 관련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u> 9의4.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u>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훈련·조사·연구·개발 및 홍보</u>

3)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1) 해외 기술규제 조사·분석 및 대응 지원 : (2025 추경) 12,533

→ (2026 예산안) 5,133백만원, - 59.0%

◇ WTO 통보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우리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통보문 입수 및 분석(기초분석 및 심층분석)을 통해 수출기업 지원

(2025 본예산 5,133백만원 → 제1회 추경 12,533백만원)

- WTO TBT 통보문(미통보문) 기초분석 및 심층분석 : 4,358백만원 [350-02 사업출연금]
 - * WTO TBT 통보문(미통보문) 기초분석 : 358백만원(4475건 × 0.08백만원)
 - * WTO TBT 심층분석(통보문+미통보문+해외기술규제 최종안) : 4,000백만원(800건 × 5백만원)
- 신산업, 신기술 기술규제 분석 : 250백만원 [350-02 사업출연금]
 - * 규제 모니터링, 기술동향 및 표준 분석 : 150백만원(30건 × 5백만원)
 - * TBT 메가트랜드 보고서 발간 : 100백만원(20건 × 5백만원)
- 지역연합(체)의 기술규정 및 표준분석: 110백만원 [350-02사업출연금]
 - * 기술규정 및 표준의 모니터링/분석 : 110백만원(11건 × 10백만원)
- TBT 대응전략 및 방안 마련 : 411백만원 [350-02 사업출연금]
 - * 해외기술규제 조사 및 전파 : 385백만원 (20개국×20개품목×0.9625백만원)
 - * 개도국 규제대응 현지 거점 체계구축 : 26백만원 (1건 × 26백만원)
- 해외기술규제 조사·분석 대응회의체 운영 : 4백만원 [240-01 사업추진비]
 - * 10명× 25천원 × 16회 = 4백만원

(2) WTO/FTA TBT 협상 및 기술규제 애로협상 : (2025) 196 → (2026요구) 153백만원, -21.9%

◇ 양자협상, 다자협상 및 타국 공조를 위한 전문가 협의 등 수행

- WTO/FTA TBT 협상 및 애로 협상 여비 : 75백만원 [220-02 국외여비]
 - * 12건 × 2명 × 3.125백만원 = 75백만
- 국제회의, 간담회, 포럼 등 회의장 임차 : 30백만원 [210-07 임차료]
 - * 3회 × 10백만원 = 30백만원
- TBT 대응 전문가 회의비, 법률자문, 인쇄·홍보, 통·번역 등 : 40백만원 [210-01 일반수용비]
 - * 6회(전문가 회의) × 1백만원 = 6백만원
 - 1건(법률자문) × 10백만원 = 10백만원
 - 1건(인쇄·홍보) × 10백만원 = 10백만원
 - 1건(통·번역) × 14백만원 = 14백만원
- 무역기술장벽 국제협력 대응회의체 운영 : 8백만원 [240-01사업추진비]
 - * 8건 × 1백만원 = 8백만원

(3) FTA TBT 협상 및 이행 강화 : (2025) 158 → (2026요구) 158백만원, 전년동

◇ 상대국의 규제현황, 법, 제도 및 기술규정 등을 분석

- FTA TBT 제도분석 : 37백만원 [260-01일반연구비]
 - * 1건 × 37백만원 = 37백만원
- FTA TBT 기술규정 분석 : 76백만원 [260-01일반연구비]
 - * 2건 × 38백만원 = 76백만원
- FTA TBT MRA 연구 : 45백만원 [260-01일반연구비]
 - * 1건 × 45백만원 = 45백만원

(4) FTA TBT 종합지원 : (2025) 1,201 → (2026요구) 1,184백만원, -1.4%

◇ 중국 신남방국 등의 기술규제 및 인증 애로 해소를 위한 표준분석 컨설팅 및 TBT 교육 설명회 등 정보제공

- 기술표준 분석 : 675백만원 [260-01 일반연구비]
 - * 기술표준분석 : 665백만원 (133종 × 5백만원)
 - * 규제맵 제작 : 10백만원 (2건 × 5백만원)
- FTA TBT 종합지원 포털 운영 : 90백만원 [350-02 사업출연금]
 - * 1식 × 90백만원
- 현지 대응체제 구축·운영 : 110백만원 [210-14 일반용역비]
 - * 애로 접수 및 대응 현지 상담실 운영 : 80백만원(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각 20백만원)
 - * 현지 설명회(간담회) 개최 : 30백만원(2회 × 15백만원)
- FTA TBT 애로 해소 지원 : 189백만원 [210-14 일반용역비]
 - * 맞춤형 컨설팅 63건 × 3백만원 = 189백만원
- 기술표준 교육 및 홍보 : 120백만원
 - 기술표준 교육 : 45백만원 [210-14 일반용역비]
 - * 교육 9건 × 5백만원 = 45백만원
 - SNS 온라인 광고 : 22백만원 [210-14 일반용역비]
 - * 2건 × 11백만원 = 22백만원
 - 기술규제 교육 교재 및 팸플렛 인쇄 : 53백만원 [210-01 일반수용비]
 - * 5.3건 × 10백만원 = 53백만원

○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일반연구비(260-01) : 833,000천원(833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833,000천원(833백만원)
	1. FTA/TBT 협상 및 이행 강화 158백만원		1. FTA/TBT 협상 및 이행 강화 158백만원
	가. FTA/TBT 제도분석		가. FTA/TBT 제도분석
	1*37,000천원= 37,000천원		1*37,000천원= 37,000천원
	나. FTA/TBT 기술규정 분석		나. FTA/TBT 기술규정 분석
	2*38,000천원= 76,000천원		2*38,000천원= 76,000천원
	다. FTA/TBT MRA 연구		다. FTA/TBT MRA 연구
	1*45,000천원= 45,000천원		1*45,000천원= 45,000천원
	2. FTA/TBT 종합지원(중국 및 신남방 주요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675백만원		2. FTA/TBT 종합지원(중국 및 신남방 주요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675백만원
	가. 기술표준분석 675백만원		가. 기술표준분석 675백만원
	표준 133종*5,000천원(665백만원) + 표준분석규제맵제작 2건 *5,000천원(10백만원)		표준 133종*5,000천원(665백만원) + 표준분석규제맵제작 2건 *5,000천원(10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383,000천원(383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366,000천원(366백만원)
	1. FTA/TBT 종합지원(중국 및 신남방 주요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1. FTA/TBT 종합지원(중국 및 신남방 주요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가. FTA/TBT 애로 해소 지원		가. FTA/TBT 애로 해소 지원
	컨설팅 63건*3,000천원= 189,000천원		컨설팅 63건*3,000천원= 189,000천원
	나. 기술표준 교육		나. 기술표준 교육
	11건*5,000천원= 55,000천원		9건*5,000천원= 45,000천원
	다. SNS 온라인 광고		다. SNS 온라인 광고
	2건*14,500천원= 29,000천원		2건*11,000천원= 22,000천원
	라. 현지대응체제 구축/운영 : 110,000천원(110백만원)		라. 현지대응체제 구축/운영 : 110,000천원(110백만원)
	- 애로접수 및 대응 현지 상담실 운영		- 애로접수 및 대응 현지 상담실 운영
	20,000천원*4개국= 80,000천원		20,000천원*4개국= 80,000천원
	- 현지 설명회(간담회) 개최		- 현지 설명회(간담회) 개최
	2건*15,000천원= 30,000천원		2건*15,000천원= 30,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36,000천원(136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93,000천원(93백만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 WTO/FTA TBT 협상 및 기술규제 애로협상 83,000천원 • TBT 대응 전문가 회의비 등 14회*10,000천원= 14,000천원 • TBT 대응관련 외국법률 자문 2건*10,000천원= 20,000천원 • 무역기술장벽보고서 인쇄 및 홍보물 제작 2.5건*10,000천원= 25,000천원 • 통역 및 번역 등 1건*24,000천원= 24,000천원 2. FTA TBT 종합지원(중국 및 신남방 주요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53,000천원 - 교육용 교재 및 팸플렛 인쇄 5.3건*10,000천원= 53,000천원 ○ 임차료(210-07) : 30,000천원(30백만원) - 국제회의 간담회 포럼 등 회의장 임차 3회*10,000천원= 30,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75,000천원 12건*2명*3,125천원= 75,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12,000천원 가. 해외기술규제 조사분석 대응회의체 운영 10명*25천원*16회= 4,000천원 나. 무역기술장벽 국제협력 대응회의체 운영 8건*1,000천원= 8,000천원 ○ 사업출연금(350-02) : 12,619백만원 1. 해외 기술규제 조사분석 및 대응지원 12,529백만원 가. WTO TBT 통보문 기초분석 7,100건*80천원= 568백만원 나. WTO TBT 심층분석(통보문+미통보문+해외기술규제 최종안) 1,998건*500,000천원= 9,990백만원 다. 신산업 신기술 기술규제 분석 250백만원 - 규제 모니터링 기술동향 및 표준 분석 30건*5,000천원= 150백만원 - TBT 메가트렌드 보고서 발간 20건*5,000천원= 100백만원 라. 지역연합(체)의 기술규정 및 표준 분석 110백만원 - 기술규정 및 표준의 모니터링/분석 11건*10,000천원= 110백만원 마. TBT 대응전략 및 방안 마련 1,611백만원 - 해외기술규제(환경안전 등) 조사 및 전파 35개국 * 40개 품목 * 989.3천원 = 1,385백만원 - 개도국 규제대응 현지 거점 체계구축 1건*26백만원= 26백만원 - 중요 해외기술규제 기업 컨설팅 등 : 200백만원 규제 대응 가이드라인 맞춤형 컨설팅 186백만원 (62회*3,000천원 = 186백만원) 해외기술규제 설명회 및 간담회 14백만원 (35회*400천원 = 14백만원) 2. FTA TBT 종합지원(중국 및 신남방 주요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 FTA/TBT 종합지원 포털운영 90백만원 1식*90,000천원= 90,000천원		1. WTO/FTA TBT 협상 및 기술규제 애로협상 40,000천원 • TBT 대응 전문가 회의비 등 6회*10,000천원= 6,000천원 • TBT 대응관련 외국법률 자문 1건*10,000천원= 10,000천원 • 무역기술장벽보고서 인쇄 및 홍보물 제작 1건*10,000천원= 1,000천원 • 통역 및 번역 등 1건*14,000천원= 14,000천원 2. FTA TBT 종합지원(중국 및 신남방 주요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53,000천원 - 교육용 교재 및 팸플렛 인쇄 5.3건*10,000천원= 53,000천원 ○ 임차료(210-07) : 30,000천원(30백만원) - 국제회의의 간담회 포럼 등 회의장 임차 3회*10,000천원= 30,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75,000천원 12건*2명*3,125천원= 75,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12,000천원 가. 해외기술규제 조사분석 대응회의체 운영 10명*25천원*16회= 4,000천원 나. 무역기술장벽 국제협력 대응회의체 운영 8건*1,000천원= 8,000천원 ○ 사업출연금(350-02) : 5,219백만원 1. 해외 기술규제 조사분석 및 대응지원 5,129백만원 가. WTO TBT 통보문 기초분석 4,475건*80천원= 358백만원 나. WTO TBT 심층분석(통보문+미통보문+해외기술규제 최종안) 800건*500,000천원= 4,000백만원 다. 신산업 신기술 기술규제 분석 250백만원 - 규제 모니터링 기술동향 및 표준 분석 30건*5,000천원= 150백만원 - TBT 메가트렌드 보고서 발간 20건*5,000천원= 100백만원 라. 지역연합(체)의 기술규정 및 표준 분석 110백만원 - 기술규정 및 표준의 모니터링/분석 11건*10,000천원= 110백만원 마. TBT 대응전략 및 방안 마련 411백만원 - 해외기술규제 조사 및 전파 20개국*20개 품목*0.9625백만원= 385백만원 - 개도국 규제대응 현지 거점 체계구축 1건*26백만원= 26백만원 2. FTA TBT 종합지원(중국 및 신남방 주요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 FTA/TBT 종합지원 포털운영 90백만원 1식*90,000천원= 9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외국과의 협상 건수 (단위: 건수)	목표	140	150	155	170 (360)	173	*최근 3년(22~24년) 평균실적(165건) 대비 5% 증가한 173건으로 설정	TBT 관련 외국과의 협상 건수 = $\sum(\text{서면대응 건수} + \text{WTO TBT 다자대응건수} + \text{FTA TBT 양자대응 건수} + \text{해당국 방문협상 건수})$	국가기술 표준원 통계
	실적	155	170	171					
	달성도	110%	113%	110%					
무역기술장벽(TBT) 협상의제 관련 기업대상 만족도 (단위: 점수)	목표	-	-	-	-	80	'26년 신규 지표로 편성, 설문조사 문자형 척도기준 만족에 대응하는 숫자형 척도를 기준 80점으로 설정	기업 설문조사 평균값 (기업 설문조사 총점 / 기업수)	기업 설문조사 결과
	실적	-	-	-	-				
	달성도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p>① 불합리한 해외 기술규제의 발굴·분석/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조사) WTO TBT 통보문(3,896건)을 조사·번역하여 해당 업계에 전파하고, 적용대상, 파급효과 등에 대한 기초 조사 실시 ○ (미통보 TBT 발굴·대응) 해외규제기관 및 규제 전문사이트 모니터링등을 통해, WTO 사무국에 통보되지 않는 숨은 해외 기술규제 925건 발굴·대응 ○ (심층분석) WTO에 통보된 규제와 미통보된 규제 4,821건(3,896+925) 중 아국에 영향 미치는 주요 규제 941건에 대해 심층분석 수행 <p>② 해외규제 상대국과의 TBT 다자·양자 협상 등을 통한 수출 애로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TBT 위원회) 정기회의(연3회)를 계기로 다자·양자 협상을 통해 기술규제 애로 해소 (155건 협상, 60건 해소) * 인도 플라스틱포장제 폐기물 규제 대응으로, 규제가 개선되어 약 268억불 규모의 전자제품 수출장벽 해소 <p>③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 컨설팅)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요청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업종별 협단체(전기전자/정밀화학/건설기계/소프트웨어등)를 통해 기초상담(409건) 실시 - 표준/시험/인증 분야의 전문가가 심층컨설팅을 실시(338건) ○ (TBT 설명회) 중소/중견기업의 TBT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TBT 설명회(38회) 실시 <p>④ 해외 기술규제대응 역량기반 구축</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기업간담회) 대·중소 기업관계자와 TBT현안 논의 및 신속대응을 위한 민·관 소통채널(2회) 운영 ○ (TBT 홍보) WTO TBT 위원회 성과, TBT 논문공모전 안내 등 SNS 게시(13건), 기획 보도/기고(4회) 유튜브 범퍼애드, TBT 종합지원센터 네이버 브랜드광고, 전자신문 지면 하단광고(3회) ○ (간행물 발간)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1건), 기업애로 해소사례집(1건), TBT 대응 가이드 리플릿(1건) 발간 및 배포
2023	<p>① 불합리한 해외 기술규제의 발굴·분석/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조사) WTO TBT 통보문(4,079건)을 조사·번역하여 해당 업계에 전파하고, 적용대상, 파급효과 등에 대한 기초 조사 실시 ○ (미통보 TBT 발굴·대응) 해외규제기관 및 규제 전문사이트 모니터링등을 통해, WTO 사무국에 통보되지 않는 숨은 해외 기술규제 1,208건 발굴·대응 ○ (심층분석) WTO에 통보된 규제와 미통보된 규제 5,287건(4,079+1,208) 중 아국에 영향 미치는 주요 규제 1,229건에 대해 심층분석 수행 <p>② 해외규제 상대국과의 TBT 다자·양자 협상 등을 통한 수출 애로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TBT 위원회) 정기회의(연3회)를 계기로 다자·양자 협상을 통해 기술규제 애로 해소 (170건 협상, 62건 해소) * 총 375억 달러 규모의 수출 애로해소(미국 메인주 PFAS 오염중지를 위한 법안 대응(약 222억 달러), 사우디 기계류 안전 규정 정보제공(약 45억 달러) 등) <p>③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 컨설팅)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요청한 수출 중소기업에 업종별 협단체(전기전자/정밀화학/에너지기계등)를 통해 기초상담(161건) 실시 - 표준/시험/인증 분야의 전문가가 심층컨설팅을 실시(155건) ○ (TBT 설명회) 중소기업의 TBT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TBT 설명회(12회) 실시 <p>④ 해외 기술규제대응 역량기반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기업간담회) 대·중소 기업관계자와 TBT현안 논의 및 신속대응을 위한 민·관 소통채널(2회) 운영 ○ (TBT 홍보) WTO TBT 위원회 성과, TBT 설명회 개최 안내 등 기획보도(4회), 지면광고(4회), 기고(2회), SNS 카드뉴스 (13회),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콘텐츠 광고(4회), SNS 이벤트(3회), 메타네트워크 광고(2회), 구글(GDN)광고 (노출 11,570,949회), 네이버 브랜드 광고(노출 14,400회), 리플릿 발간 (1회), SRT 차내 영상광고(4개월) ○ (간행물 발간)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1건), TBT 대응가이드북(1건) 발간 및 배포
2024	<p>① 불합리한 해외 기술규제의 발굴·분석/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조사) WTO TBT 통보문(4,337건)을 조사·번역하여 해당 업계에 전파하고, 적용대상, 파급효과 등에 대한 기초 조사 실시 ○ (미통보 TBT 발굴·대응) 해외규제기관 및 규제 전문사이트 모니터링등을 통해, WTO 사무국에 통보되지 않는 숨은 해외 기술규제 1,732건 발굴·대응 ○ (심층분석) WTO에 통보된 규제와 미통보된 규제 6,069건(4,337+1,732) 중 아국에 영향 미치는 주요 규제 1,361건에 대해 심층분석 수행 <p>② 해외규제 상대국과의 TBT 다자·양자 협상 등을 통한 수출 애로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연3회) 및 양자 협상을 통해 기술규제 애로 해소 (171건 협상, 63건 해소)

	<p>* 총 97억 달러 규모의 수출 애로해소(사우디 대기전력 기술규정 시행일정 및 전자파 적합성(EMC) 규제 준수절차 정보제공(약 29.9억 달러), 인도 폴리프로필렌(PP) 재료 BIS 인증 시행유예(약 0.6억 달러) 등)</p> <p>③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컨설팅)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요청한 수출 중소기업에 TBT종합지원센터, 업종별 협단체(전기전자/기계에너지 등) 및 시험분석기관(KCL, KTC 등)을 통해 기업컨설팅(310회) 실시 ○ (해외 기술규제 설명회) 중소기업의 TBT대응 역량강화 및 인식제고를 위하여 해외 기술규제 설명회(6회) 실시 <p>④ 해외 기술규제대응 역량기반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간담회) 우리나라의 해외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 논의, 지역 산단 입주 기업 등 수출기업 대상 대응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기업간담회(2회) 개최 ○ (TBT 홍보) WTO TBT 위원회 성과, 해외 기술규제 설명회 개최 안내 등 기획보도(3회), 기고(1회), 지면광고(3회), 시사프로그램(1회), 뉴스보도(1회), 언론홍보(6회), SNS 카드뉴스(21회), SNS 이벤트(6회), 프로모션(1회), 메타 광고(2회), 네이버 브랜드 광고(1회), 리플릿 발간(1회) ○ (간행물 발간)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1건), 대응 가이드북(1건) 발간 및 배포
2025	<p>① 불합리한 해외 기술규제의 발굴·분석/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조사) WTO TBT 통보문을 조사·번역하여 해당 업계에 전파하고, 적용대상, 과급효과 등에 대한 기초 조사 실시 ○ (미통보 TBT 발굴·대응) 해외규제기관 및 규제 전문사이트 모니터링등을 통해, WTO 사무국에 통보되지 않는 숨은 해외 기술규제 발굴·대응 ○ (심층분석) WTO에 통보된 규제와 미통보된 규제 중 아국에 영향 미치는 주요 규제에 대해 심층분석 수행 <p>② 해외규제 상대국과의 TBT 다자·양자 협상 등을 통한 수출 애로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연3회) 및 양자 협상을 통해 기술규제 애로 해소 <p>③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컨설팅)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요청한 수출 중소기업에 TBT종합지원센터, 업종별 협단체(전기전자/기계에너지 등) 및 시험분석기관(KCL, KTC 등)을 통해 기업컨설팅 실시 ○ (해외 기술규제 설명회) 중소기업의 TBT대응 역량강화 및 인식제고를 위하여 해외 기술규제 설명회 실시 <p>④ 해외 기술규제대응 역량기반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간담회) 우리나라의 해외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 논의, 지역 산단 입주 기업 등 수출기업 대상 대응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 ○ (TBT 홍보) WTO TBT 위원회 성과, 해외 기술규제 설명회 개최 안내 등 기획보도, 기고, 지면광고, 시사프로그램, 뉴스보도, 언론홍보, SNS 카드뉴스, SNS 이벤트, 프로모션, 메타 광고, 네이버 브랜드 광고, 리플릿 발간 ○ (간행물 발간)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 대응 가이드북 발간 및 배포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수출기업의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대응력 제고

- 제·개정되는 해외 기술규제 신속 입수·분석* 및 전파**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응력 향상

* WTO TBT 사무국 통보 및 미통보 기술규제: '20) 3,924→ '21) 4,628→ '22) 4,821→ '23) 5,287→ '24) 6,069

** 해외기술규제 분석 보고서(연례보고서등) 제공, KnowTBT 포털 등 온-오프라인으로 정보제공

○ 불합리한 해외기술규제 발굴 및 해소

- WTO TBT 정례회의(3,6,11월 연3회) 및 FTA 공동위 등 채널을 통한 협상 실시
- 필요시 해외기술규제 당국과의 직접협상을 실시, 애로 해소(완화)

○ 국내 수출기업의 TBT 대응역량 제고

- 해외 기술규제 정보제공 및 TBT 정책 활용 방안 소개 등 기업컨설팅 실시(24년 310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표원 직접수행 : 국외여비, 연구용역, 수용비 등

국가
기술표준원
(사업 총괄)

- 정부채널의 외교적 TBT 협상 총괄
- WTO/TBT 위원회 협상(연3회)
- FTA/TBT 위원회 협상(수시)
- 양자 애로 협상(수시)

- 산업부(국표원) → TBT종합지원센터(사업출연금) → 업종별 협단체 및 시험분석기관
- TBT종합지원센터(시험인증산업협회): WTO/TBT 통보문 분석을 근간으로 정례적·상시적 WTO/TBT 대응업무등 수행

※ TBT 종합지원센터 주요 업무(기능)

- WTO/TBT 통보문 입수, 기초분석, 심층분석, 대응방안 수립
- WTO/TBT 미통보문 입수, 기초분석, 심층분석, 대응방안 수립
- 규제분석서 작성, 통보문 산업계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발굴
(기업 간담회, 품목/규제유형별 협의회)
- 연간 정례(3회) WTO/TBT 위원회 대응, 양자회의(수시) 협상 지원
등(특정무역현안 발굴, 현안에 대한 산업계대응방안마련)
- TBT통계, 주요 통보문동향, TBT대응사례 등 정기 리포트 제공
- 기술규제종합포털(KnowTBT) 운영('22년 이후~)

사업추진 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7,869	6,688	9,486	10,415	11,435	
2025~2029		6,688	7,350	8,077	8,877	9,75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 예결위 : 중국·신남방국가의 기술 표준분석 확대, 중국 현지 상담실 기업 애로를 고려한 지원 필요
-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 3) 자체평가 : '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우수, '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통, '24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통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최근 3년('22~'24년)간 외국의 기술규제가 증가하고 있어서, 해외 기술규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 정보 분석(기초/심층) 후, 업계에 정보제공을 통해 기업애로를 사전 해소
 * WTO 통보증가 : ('19) 3,337건 → ('20) 3,354건 → ('21) 3,966건 → ('22) 3,896 → ('23) 4,079 → ('24) 4,337
- 증가하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통보문 기초분석 및 의견수렴, 국내업체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제동향분석, 국내제품 수출현황 분석, 기업대응 및 협상전략 마련 등을 위해 규제 심층분석(최종안 심층분석 실시) 확대 실시
- 신산업/신기술 및 화학물질분야의 규제도입전 표준동향 분석 및 지역연합체의 기술 규정 분석
- 중소·중견 기업은 TBT 인력·정보력 부족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TBT 애로기업을 찾아가는 시험/인증분야 전문가의 맞춤형 현장컨설팅 실시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1)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24년 “보통”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우수
사업계획이 적절성 및 집행 효율성, 성과 우수하며,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적 노력 필요
-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
사업목적에 맞는 평가 항목을 제시하였으며 목표 대비 적절한 수행 실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 정량적 목표 판단을 위한 성과지표 추가와 측정 방법에 대한 제시는 자체 환류개선 방안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
자체 만족도조사를 통해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루고있다고 여겨짐. 성과지표로써 TBT(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상 건수는 적절, 정책 효과성 분석 및 개선 방안 강구 노력에 대한 점검이 필요, 성과지표 설계 및 개선 방안도 포괄적으로 점검 필요

13) 부처 건의사항

- ☐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사업은 우리 수출기업에 장애가 되는 해외 기술규제(제/개정)내용을 입안 초기단계부터 조사·입수·분석하여, 관련 업계에 그 분석(기초/심층)내용을 전파(온/오프라인)하고,
- WTO 다자협상(3월 6월, 11월), 양자 협상(필요시 현지규제당국자 방문 협상) 등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를 사전에 제거(또는 완화)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수출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임
 - 외국의 기술규제를 분석(기초/심층)하여 업계에 전파하고, '21년부터는 TBT종합지원센터(시험인증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시험분석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총력 대응하고 있음
 - 이후 동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건의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474	△56	7,418	-	±600	-	7,418	7,231	97.5	97.5	15	172
2023	8,474		8,474	15	±45	-	8,489	8,379	98.9	98.7	15	95
2024	7,869		7,869	15	±40	-	7,884	7,770	98.7	98.6	-	114
2025	6,688	7,400	14,088	-	±43	-	14,088	14,060	99.8	99.8	-	28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4,887	4,887	4,887	4,887	-	4,887	4,887	-	-	100
2023	5,886	5,886	5,886	5,886	-	5,886	5,886	-	-	100
2024	6,125	6,125	6,125	6,125	-	6,125	6,125	-	-	100
2025	5,219	12,619	12,619	12,619	-	12,619	12,619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사유 : 기재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존 일반연구비 편성 권고, 디브레인 시스템상 권고 미반영에 따른 출연금을 일반연구비로 전용(600백만원)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추정 편성 사유 : 기본성 경비에 대한 제2회 추정 감액 조정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중국 현지 코로나 봉쇄로 인해 공동 연구수행기관간 시험 재료 이동이 불가하여 수행기간 종료 시점을 '23.3월로 연장함에 따라 15백만원 이월 발생, 국외여비 및 일반수용비 코로나19로 38백만원, 일반용역비 및 일반연구비 집행잔액(조달낙찰차액) 등 134백만원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사유 : WTO 3차 정례회의 및 기술규제대응 활동 등에 필요한 국외업무여비 45백만원 전용(일반수용비 45백만원 감액)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중국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일정 지연으로 사업기간 종료 시점을 '24.4월로 연장함에 따라 15백만원 이월 발생, 일반수용비 및 국외여비 등 집행잔액으로 18백만원, 일반용역비 및 일반연구비 집행잔액(조달낙찰차액) 등 76백만원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사유 : WTO 3차 정례회의 및 EPA TBT 협상 참석 등에 필요한 국외업무여비 40백만원 전용(일반수용비 40백만원 감액) - 불용 사유 : 일반용역비 및 일반연구비 조달낙찰차액 및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으로 114백만원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사유 : WTO 3차 정례회의 및 한-베트남 TBT 협상 참석 등에 필요한 국외업무여비 43백만원 전용(일반수용비 43백만원 감액) - 불용 사유 : 일반용역비 및 일반연구비 조달낙찰차액 및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으로 28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7.21.)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3736-301)	210-01	43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3736-301)	220-02	WTO 3차 정례회의 및 한-베트남 TBT 협상 참석 등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애로해소 우수사례 ('24)

◆ 對필리핀 수출 애로해소 ◆

- ▶ 최신 국제표준이 반영되지 않은 시험요건 및 현지 시험소 부재 등으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이 해소됨에 따라, 약 8백만 달러 규모의 수출시장 유지

1. 규제개요

- 필리핀 에너지부(DOE)는 국제표준(IEC 60456:2010)을 참조하여, 「세탁기 에너지효율 라벨링 제도의 이행 규격」 개정('23.12.)
 - (적용대상) 세탁기(HS Code : 8415)
 - (주요내용) 모든 시험은 PNS IEC 60456:2013에 따라 진행되며, 향후 적용 시 최신 버전의 표준을 적용

2. 기업의 애로사항

- 동 규격이 참조하는 국제표준이 개정(IEC 60456:2010/AMD1:2022)됨에 따라, 시험 시 사용 중인 세탁세제* 대체 필요

* EU REACH 규제 대상 물질인 붕소가 포함된 세탁세제 A를 채택

구분	세탁세제 명	세탁세제
PNS IEC 60456:2013 (=IEC 60456:2010)	세탁세제 A(Detergent A)	- 과붕소산나트륨 4수화물 20%
IEC 60456:2010/AMD1:2022	세탁세제 IEC-P (Detergent IEC-P)	- 과탄산소다 15%

- 현 규격에 따라, 시험이 가능한 필리핀 현지 시험소 부재

3. 주요 대응사항

- WTO TBT 위원회 특정무역현안(STC) 제기('24.03., '24.06.)를 통해, 최신 국제표준에 대한 부합화 및 현지 시험소 부재로 인한 규제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관련 요구사항이 개선되어 애로 해소

참고 2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사업 주요성과 (‘24)

① 불합리한 해외 기술규제 입수·분석

- (통보문) WTO TBT 통보문(4,337건)을 입수·분석하여, 해당 업계에 전파
- (미통보문) 해외 규제기관 및 기술규제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WTO TBT 사무국에 통보되지 않는 해외 기술규제 1,732건 입수·분석

* C2P(www-6.compliance2product.com)

- (심층분석) 통보·미통보된 규제 6,069건(4,337+1,732) 중 아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규제 1,361건에 대해 심층분석 수행, 기업의견 수렴

② 당국과의 양·다자 협상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

- WTO TBT 위원회 및 협력 채널 등을 통한 171건 협상, 63건 해소

* 사우디 대기전력 기술규정 시행일정 및 전자파 적합성(EMC) 규제 준수절차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약 29.9억 달러 규모의 수출 장벽해소

○ 경제동반자협정(EPA) 및 신통상 규범(디지털) TBT 협상

- (한·조지아) 한-조지아 EPA TBT분과 협상을 개최(‘24.2, ‘24.4)하여 핵심 조항*을 반영한 협정문 합의

* ①적합성평가 결과의 수용 근거, ②투명성 절차 준수 의무 및 ③내국민과 비차별 대우 등

- (한·태국) 한-태국 EPA 협상을 개최(‘24.7, ‘24.9, ‘24.12)하여 우리측이 제안한 TBT 협정문(12개조*) 중 1개 잔여쟁점(공동협력*)을 제외하고 문안 합의

* ①적합성 평가 인정의 내국민 대우 및 ②기술규정 입안 과정에서 상대국 참여자 비차별 등

**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전기전자기기 적합성 시험·인증(IECEE-CB) 수용 촉진

- (한·몽골) 한-몽골 EPA 협상을 개최(‘24.5, ‘24.9, ‘24.11)하여 우리측이 제안한 TBT 협정문(11개조*) 중 1개 잔여쟁점(비차별)을 제외하고 문안 합의

* ①투명성 절차 이행 및 ②TBT 관련 사안에 대한 기술논의 등

- (디지털 통상) 한-EU 디지털통상 협정*, WTO 전자상거래 및 IPEF 디지털 챕터 등 TBT 관련 조항 문안 제시 및 협상 참여(‘24.2)

* 사전협의 및 ‘디지털 경제를 위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 조항 및 적합성 평가를 위한 소스코드 접근 문안 협상(공식협상 2회) 참여 및 문안 합의

○ **FTA 既체결 주요 수출국과의 전략적 FTA TBT이행 협력 확대**

- **(WTO TBT 위원회)** 수출기업 우려 해소를 위한 STC 제기* 및 대응, 기타 TBT 관련 양자협약** 실시 ('24.3, '24.6, '24.11)

* 7개국에 대해 22건의 STC를 제기 및 지지하여 사우디 대용량 에어컨 성능요건 시험, 인도 세탁기 품질관리 명령 등 관련 애로 해소 또는 부분해소.

** 주요 교역국과 양자협약을 통해 캐나다 DBDPE 규제 등 수출 기업 애로 해소

- **(한·중 FTA TBT 위원회) 제8차 FTA TBT 위원회를 개최('24.4)하고, TBT 현안* 및 협력방안** 논의**

* (한)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간소화 버전 수용기간 연장 등 6건, (중) 제기 의제 없음

** 리콜제도 등 제품안전관리 동향 공유, 제품으로 인한 상해 등 정보 교류를 위한 소통 채널 구축 합의

- **(한·중 적합성평가소위) 제21차 소위원회를 개최('24.12)하여 양국 인증제도의 개정 동향* 및 숙련도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상호인정 분야 협력방안** 논의**

* (한)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인증제도 개요, (중) 중국강제인증(CCC) 품목 확대 등

** ①인증 절차 애로사항 공유, ②작업반 등 정보교류 채널 확대 및 ③공장심사 협력 강화 등

- **(한·베트남) 제7차 FTA TBT 위원회를 개최('24.11)하여 한국 의약품에 대한 미국·EU와 동등 대우를 요청하고, 기술규정 연구개발 경험 등에 대하여 논의**

* (한) ①한국 의약품에 대한 미국·EU와 동등 대우 요청(식약처), ②한-베트남 전기안전 적합성 평가 상호인정협정(MRA) 이행

(베) ①계량분야 협력 제안, ②기술규정 연구개발 경험 공유 등 협력

③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 **(기업컨설팅)**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요청한 수출 중소기업에 TBT종합지원센터, 업종별 협단체(전기전자/기계에너지 등) 및 시험분석기관(KCL, KTC 등)을 통해 **기업컨설팅(310회)** 실시

- 중소기업의 TBT대응 역량강화 및 인식제고를 위하여 **해외 기술규제 설명회(6회)** 실시

④ **FTA TBT 종합지원 내역사업 주요 성과**

- 수출 주요국의 WTO 통보·미통보 기술규제(5개 분류: 정책, 법규, 시험·인증 제도, 강제표준, 품질검사)에 대한 적시대응을 위해 주요 규제 기관(34개소) 모니터링 실시

- 中 시장감독관리총국(SAMR), 인도 표준원(BIS) 등 주요 규제발행기관을 국가별 선정, **일일(11개소), 주간(11개소), 월간(12개소)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을 통하여 신규정보를 발굴(115건)*하고, 분석 보고서 발간**

* (CN) 소형리튬전지의 CCC 편입, 중국로봇인증(CR)고도화, (IND)탄소배출권 거래제도, (VN) 근거리 무선장치 규제, (IDN)에너지 절약에 관한 2023년 정부규정 등

** 신규 규제정보 발굴 및 게시판 업로드 115건, 심층분석 30건, 월간 뉴스레터 9건

○ 우리기업의 주요 수출 제품, 기술규제 애로 품목 등에 대한 **‘기술표준 분석*(160건)’**을 완료하고, 수출기업의 실질적 수출 사전대응 지원을 위한 **‘수출기업을 위한 TBT가이드북(6건)’**으로 발간하여, 기술규제대응 Know TBT포털에 업로드하고, 12,800여 기업에 뉴스레터를 전파

* (CN) 에너지효율, 사이버보안관련, 전기차, 노트북 등 제품, (IND) LED 등기고, 전기차 충전기, 정수기, TV 등 (VN) 안전유리, 도로, 케이블 등 (IDN) 할랄, LED, 전자제품 등

** ① 중국 IoT규제동향, ② 전기전자부품 중국 TBT 가이드북, ③ 화학제품의 對 베트남수출을 위한 TBT 가이드북 ④ 도네시아 TBT 가이드북(가전기기 에너지효율 규제편) ⑤ 인도 TBT 가이드북(화학제품 시장 현황편) ⑥ 인도 TBT 가이드북(전기차 충전기 규제편)

○ **(TBT 교육/설명회, 간담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 규제설명회’** 및 TBT 대응 기업간담회 개최를 통한 규제애로를 지원하여 업계의 TBT 대응역량 제고

* CCC 인증제도 최신동향, 인도 전기차 충전기 규제설명회, 베트남 해외규격인증 교육, 인니 SNI 제품인증제도 소개 등 규제설명회 개최

- 교육구성 방식을 다양화 하여 전문가 초빙 대면 설명회, 인도 현지 온라인 연결 웨비나(ZOOM활용)등으로 다양화하여 사용자 규제교육의 접근 편의성 제고

- 지원국 현지 상무관, 코트라 무역관, 현지 규제기관 등과 협업하여 TBT 간담회, 규제설명회를 **5회 개최**(중국 상해·심천, 베트남, 인니, 인도 각 1회씩, 현지진출 우리기업 기술규제 지원)

⑤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 대응지원을 통한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 신산업·신기술 분야 중심의 대응방안을 마련을 위한 대응지원체계 구축

- 규제의 신설·강화가 예상되는 5대* 분야의 정보 교류회 구성 및 발족

* 에코디자인, 배터리, 인공지능, 탄소중립, 화학물질

- 신산업·신기술 분야별 정보교류회 운영
 - 총 4회의 분야별 정보 교류회를 통해, 주요 규제동향과 이슈사항, 대응성과 등을 발표하고 해외전문가를 초청하여 글로벌 TBT 포럼 개최*
 - 분야별 교육 지원, 설명회 개최, 정보교류회 확대 등 기업 소통 체계 구축
- **(홍보 및 전파)** 동향보고서 발간, 설명회, 수출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해결 가이드 마련
 - * WTO TBT 통보문 및 미통보문의 동향을 전파하는 월간동향보고서 발간 (12회)
 - * 주요 국가별 기술규제 이슈 사항을 종합분석하고 대응 필요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사점 및 대응전략을 포함한 규제 동향보고서 발간 (12종)
 - * 국내 수출기업의 TBT 애로발굴 및 기업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지역 TP,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된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12회)
 - * 주요 수출 품목별 협의회를 운영하여, 선제적인 TBT 현안 발굴, 긴급이슈 대응 등 기업 애로해소 지원 확대 (50회)
 - * 기업 애로 접수 전담창구(온/오프라인) 설치·운영, 정기 애로조사 등을 통한 기업 대상 TBT 애로 접수채널 운영(상시)

참고 3 '24년 TBT 대응 애로해소 수출 기대효과

No	국가	규제명	기대효과 ¹⁾	
			백만 달러	십억원 ²⁾
1	사우디아라비아	SABER 인증 플랫폼 및 품질마크(SQM) 규제	2,992.3	4,054.6
2		전기자동차 인증절차 및 에너지효율 규제		
3		전기·전자제품 관련 기술규정		
4	GSO	기계류 관련 규정 최종안	2230.4	3022.1
5		YSMO GSO 2530:2020 규제		
6		Gulf Committee 기업 가입 가능여부 정보 요청		
7		GSO & SASO & MoIAT(UAE) 전기차 인증 입회 평가 통합 건의		
8	사우디아라비아	3.5톤 초과 트럭 및 트레일러 안전 펜스 규제	1452.4	1967.9
9		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		
10	중국	리튬이온배터리 중국의 수출 제한	498.7	675.7
11	인도	가정용 전자제품 85개 품목 품질관리명령	471.8	639.3
12	미국	특정 물질이 포함된 플라스틱 포장 금지 법안	354.1	479.8
13	중국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안전 요구사항	329.7	446.8
14	이라크	아랍어 및 영어 병기 표시 규제	291.4	394.8
15	인도	자동차용 용융 합금화 아연도금강판 BIS 인증	280.6	380.2
16	튀르키예	건설제품 수입검사 제도 (비도로이동기계류수입검사공문)	210.3	285.0
17	유럽연합	실외용 장비 소음 측정기준 2000/14/EC 개정	105.5	143.0
18	인도	자동차 램프 법규	95.6	129.6
19	인도	폴리프로필렌(PP) 제품 BIS 인증	58.6	79.4
20	아랍에미리트	가정용 냉장고 에너지 효율 라벨링 규제(3차)	58.5	79.3
21	사우디아라비아	SASO 2874: 대용량 에어컨 - 성능 요건 및 시험방법	55.1	74.6
22	인도	에어컨 완제품 및 부품(압축기, 열교환기)에 대한 BIS인증	53.7	72.8
23	인도네시아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함유 제품의 산업적 사용 금지, 규정 제41/2014	36.4	49.3
24	우즈베키스탄	가전제품 통관 애로 (3월 협력 채널)	16.7	22.6
25	인도	가정용 세탁기 품질관리 명령 최종안	16.6	22.6
26	프랑스	포장재 EPS 금지규제	12.6	17.1
27	칠레	전기 제품의 안전 시험 프로토콜	9.4	12.8
28	이라크	이라크 품질마크 규제	9.2	12.4
29	필리핀	의류 세탁기 에너지라벨링 프로그램 이행지침	7.8	10.6
30	인도	배터리 폐기물 규제	2.4	3.3
31	쿠웨이트	냉장고 제품 에너지 라벨링 규제	2.1	2.8
32	우크라이나	소비자 보호, 법률 번호 3153-IX, 2023	1.3	1.8
33	중국	상업용 가스연소기기 강제 제품 인증(CCC) 시행규칙	1.3	1.7
34	바레인	상업용 에어컨(칠러) 에너지효율 규제	1.2	1.6
35	오만	세탁기 및 냉장기기 에너지효율 규제	0.4	0.5
36	바레인	조명 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기능 및 라벨링 요구사항	0.4	0.5
37	사우디아라비아	전자기기 충전기의 USB TYPE-C 표준화 요건	0.2	0.3
38	바레인	전기 의류 건조기 에너지 성능, 시험 및 라벨링 요구사항	0.2	0.2
합계			9,656.9	13,085

1) 산출 근거 : 규제 해당품목별 수출무역 통계(관세청, 전년 기준)

2) 환율 기준 : '24년 평균 USD 매매기준율(1USD = 약 1,355원)

※ '24년 TBT 대응지원 활동(총 171회) : TBT질의처 공식서한(45회), WTO/TBT위원회 STC제기 (38회), 협력채널(33회), 민간 질의서한(24회), WTO/TBT위원회 양자회의(20회), FTA/TBT 양자 회의(6회), 컨설팅 연계(4회), 분석기관 정보제공(1회)

참고 4

국가/품목별 시행중 인증제도·기술기준 조사/제공

□ 배경

- '24년 WTO TBT 통보건수는 4,337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 특성상 기술규제 대응책·전략마련의 중요성 높음
 - ¹⁾글로벌 통상환경 불안장기화, ²⁾미·중 무역분쟁, ³⁾친환경 그린장벽 등 우리기업의 수출애로 多大 ⇒ 규제정보 부족으로 수출대응력 약화
- 다양한 규제정보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데이터 최신화 및 홍보활성화 필요
 - '20년부터 해외기술규제맵 서비스 DB 구축 및 운영개시(~ 현재)

< 해외기술규제맵 20개국 40개 품목 >

구분		'21년 선정기준	'22년 선정기준	'23년 선정기준	'24년 선정기준
정보 수집 대상	국가	수출상위국, EU,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등 연합국, 신흥국기준	중소·중견기업 수요실적, TBT통보, 정부정책 등 반영	'20-'22년 선정 국가 유지 / 신규 10개 산업군 추가	이집트, 튀르키예 등 신흥국 추가 및 산업군 지속확대(10개)
	품목	수출상위, 규제빈도, 중소기업 중점품목, 코로나19, 4차산업혁명, 그린뉴딜 등 정책반영	중소기업 수요 기반의 품목 중 안전, 에너지 등 글로벌 강제 규제 빈도 높은 품목 중점 반영	기존에 제공되지 않은 규제 분야 및 탈탄소 관련 기업수요 반영	신규 81개 인증제도 DB구축 및 기존 383개 인증, 153건 기술기준 정보최신화
		15개국 25품목	20개국 35품목	20개국 40품목	25개국 40품목
선정결과		(신규 5개국) 독일, 러시아, 칠레, 사우디, UAE	(신규 5개국) 인니, 호주, 홍콩, 태국, 브라질	'20-'22년 누적 20개국 유지	(신규 5개국) 캐나다, 이집트, 튀르키예, 남아공, 영국
		(신규 15개 품목) 스마트세탁기, 스마트 식기세척기, 저장식 냉온수기, 무선 진공청소기, 개인용 플라즈마 피부관리기 등	(신규 10개 품목) 전기비데, 실내 헤어드라이어, 전기매트, 블렌더, 인덕션(휴대용), 유아용물티슈 등	(신규 5개 품목) 로션(FACE), 유아용섬유, 생분해성플라스틱 등 (신규 10개 산업군) 국제공통, 식품의약품, 자동차, 태양광 등	(신규 10개 산업군) 전기전자, 통신, 의료기기, 식품, 의약품, 화장품, 자동차, 선박, 철강, 유해물질관리(RoHS)
DB범위		- 규제매핑: 품목별/국가별 인증, 기술기준 매핑테이블 제공 - 인증정보: 인증명, 인증개요, 법령, 법령출처, 규제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규제품목, 인증절차 - 기술기준: 기술기준번호, 기준명(원문/국문), 공표년도, 출처, 유사국제표준			
10대산업군 ('23년~)		①국제공통(IECEE-CB, IECEx, IECQ), ②식품의약품, ③태양광, ④풍력, ⑤유기농 식품, ⑥유기농 섬유, ⑦친환경, ⑧철강, ⑨자동차, ⑩선박			

□ 주요 내용

- (정보확대) 신규 5개국 10대 주요 산업에 대한 수출 시 요구되는 강제 규제 및 제품 임의인증제도 등 정보 확대
 - 기 20개국 신산업, 탈탄소 규제 등 통상환경과 선진국 규제 시류를 반영한 주요 인증제도 지속 구축
 - 해외 인증제도 통합검색 시 사용자 검색 편의성의 극대화를 위한 DB 확대
 - (정보최신화) KnowTBT 사이트 내 구축된 정보의 최신화
 - '20년 구축한 우리나라 중점 수출 10개국의 주요 강제인증제도 정보를 전면 재검토하여, 제·개정 사항 반영 및 최신화
 - 기 구축된 주요 10대 산업군*의 인증제도 최신화
- * ①국제공통(IECEE-CB, IECEX 등), ②식품의약품, ③태양광, ④풍력, ⑤유기농 식품, ⑥유기농섬유, ⑦친환경, ⑧철강, ⑨자동차, ⑩선박
- (시스템 개편) KnowTBT 사이트 내 해외인증정보에 대한 사용자 수요 파악을 위한 '해외인증 조사신청' 메뉴 신설 등
 - 해외인증 조사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선정 등의 절차 마련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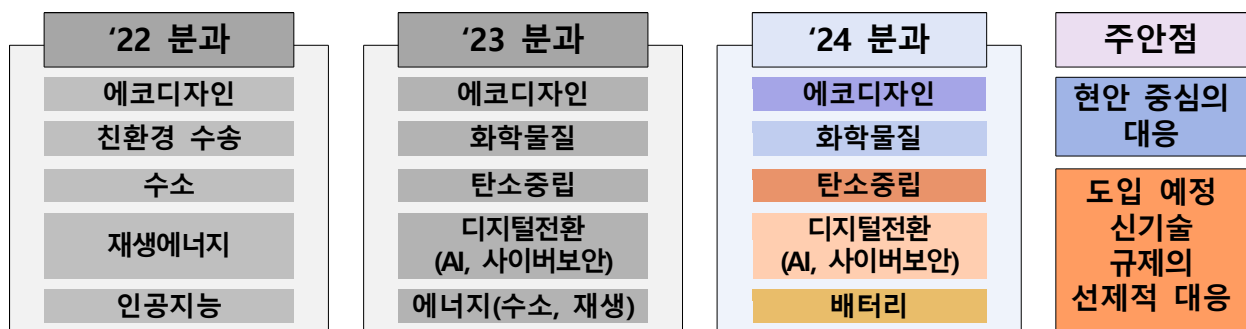
- (산업적 효과) 정확한 기술규제 정보 기반으로 우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이를 통한 혁신촉진, 수출시장확대 및 정부정책수립 기반마련
- (경제적 효과) 수출 소요 비용·기간 단축으로 효율향상 및 이를 통한 우리나라 기술경쟁력 제고 및 수출증대로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

참고 5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 선제적 대응

□ 규제동향 조사·분석 대응 필요성

-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新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첨단산업 육성도구로서 각국의 기술규제는 복잡·정교화되고 있음
- 또한,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 에너지효율 및 화학물질 등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임
 - * EU 에코디자인 개정안 발효('24.7.), AI Act 발효('24.8.), EU 배터리 재활용률 및 재료 회수율 산정 등
- '25년 발효가 예상되는 위임규정 및 지침에 실효적 대응을 위해
 - 사전 기업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분야별 논의 주제 선정 및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 공유
 - 주제 논의 후 관련 기업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후속조치

< '23년 ~ '24년 교류회 구성 >



* (21년)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드론/로봇, 5G/6G 융합, 미래차, 에코디자인, 그린에너지

□ 추진 내용

① 조사·분석

- **(규제 모니터링)** 글로벌 시장 현황, 기술개발 동향 및 관련 표준화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조사·분석 보고서 발간
 - 규제를 선도하고 있는 선진국(EU, 미국)의 에코디자인, 배터리 등 규제 및 적용표준 모니터링
 - 분야별 규제 도입 시기, 기준 및 기업이 사전에 필요한 사항 등

< 주요 신산업·신기술 규제 >

구분	관련 산업	주요 규제명	주요국
에코디자인	순환경제, 우수재활용인증 등	- 에코디자인 규정(ESPR) - 디지털제품여권(DPP) 등	EU
배터리	배터리	- 배터리법 - 에너지저장장치 규제(ESS) 등	EU, 중국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네트워크 보안 등	- AI Act - 사이버보안법 등	미국, EU, 중국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수소, 친환경 수송 등	-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 넷제로 산업법(NZIA) 등	EU
화학물질	화학물질	- 과불화화합물(PFAS) - DP 및 DBDPE 금지 등	미국, EU

② 기업 지원

- **(이슈리포트)** 분야별 이슈사항 확인 시 관련 사항을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발간·배포
 - 주요 수출국의 분야별 정책·기술규제 동향을 검토하고 개요, 경과, 규제동향 및 현안, 산업계 대응 방안 및 시사점 등으로 구성

< 분야별 이슈리포트 발간(안) >

구분	분과	내용	시기
이슈리포트	에코디자인	주요국(EU, 미국 등)의 에코디자인 관련 정책 현황	1분기
		EU 에코디자인 Directive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 방안	2분기
	화학물질	...	...
		EU REACH, 미국 TSCA 등 주요국의 규제 동향	1분기
		신기술 발전에 따른 신규 화학물질 규제 전망	2분기
		...	...
	...	...	...

- **(동향보고서)** 분야별 주요 이슈를 종합한 보고서 발간·배포
 - 규제·정책·표준 동향 등을 분석하고 산업계 대응방안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작성한 이슈리포트를 종합한 보고서 발간·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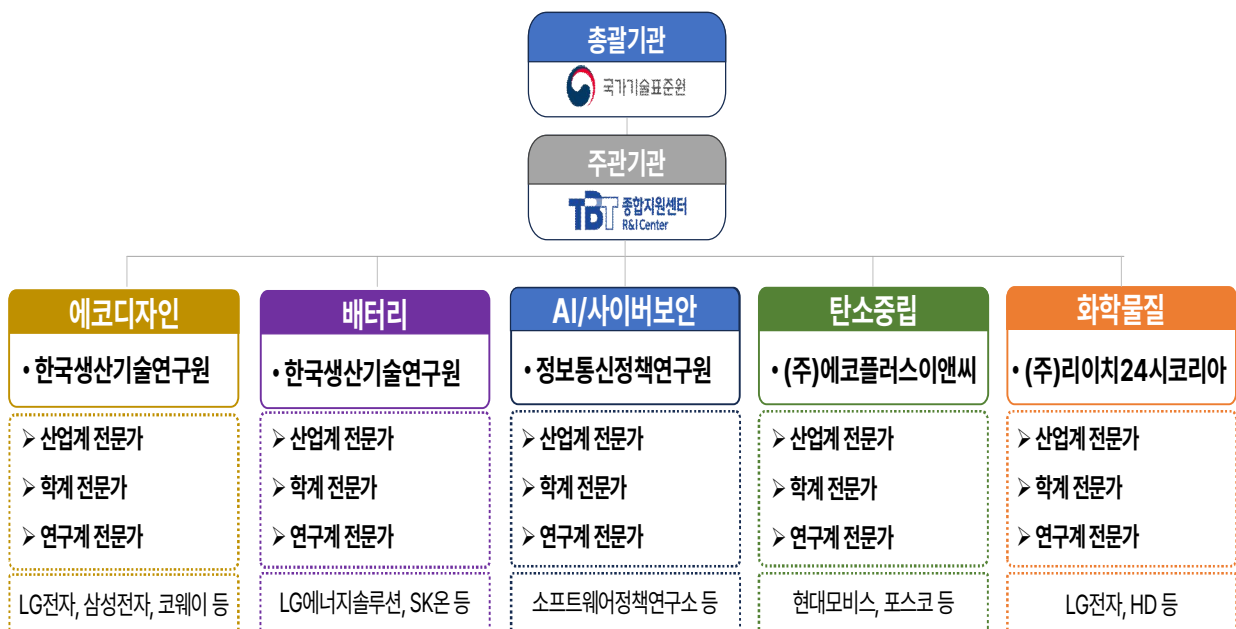
< 분야별 동향보고서 발간(안) >

구분	분과	내용	시기
동향보고서	에코디자인	에코디자인 규제의 발전 방향 및 우리나라의 역할	4분기
	화학물질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 강화 추세에 따른 대응 전략	4분기
	...	...	...

- **(정보전파)** KnowTBT포털 및 이메일 등 온라인 전파, 정보교류회 및 품목별 협의회 등을 통한 오프라인 전파

③ 기업 소통

- **(정보교류회)** 분야별 정보 제공 및 기업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정보교류회 운영
 - 필요시 분야별 상시 정보교류회 운영을 통해, ①정보 제공 ②기업 의견수렴 ③애로 사항에 대한 정부지원 연계 등
- **(전문위원회)** 분야별 산·학·연 기술·표준 전문가 위촉 및 TBT종합지원센터 담당자를 지정하여, 발효가 예상되는 위임규정 및 지침에 실효적인 대응 방안 마련
 - 분야별 관련 기업의 수출 애로 사항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긴급 대응 현안 논의 및 대응전략 마련
 - 대응전략을 도출하여, WTO/FTA TBT 위원회, 현지 규제당국 등 협상채널을 활용한 선제 대응 지원



< 전문위원회 운영 체계(안) >

□ 기대효과

- **(산업적 효과)** 규제 대응이 시급하거나 중·장기적인 대응준비가 필수적인 신기술·신산업 규제에 관한 정보를 입수·조사·분석·전파하는 전주기 대응체계 구축으로 **수출 기업 지원 효과**
 - 주요 TBT현안에 대한 대외 협상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 시 활용 가능하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무역 역량 및 국가적 TBT 기업지원 기반 강화
- **(경제적 효과)** 신기술·신산업 관련 도입이 예상되는 규제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수출기업의 TBT 애로를 해소하고 원활한 수출에 기여
 - 탄소중립, AI(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배터리 관련 수출액은 약 23.1조원
 - * (탄소중립) 약 63조원: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에 해당하는 HS Code 4자리
 - *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약 15조원: HS Code 85
 - * (배터리) 약 1.8조원: HS Code 8506, 8507
 - 에코디자인, 화학물질 관련 수출액은 약 132조원
 - * (에코디자인) 약 89조원: 에코디자인 규정의 경우 해당품목은 전제품임(식품, 의약품 제외), 에코디자인 지침의 경우 약 26조원: 해당품목은 에너지관련 제품으로 HS Code 84, 85
 - * (화학물질) 약 43조원: HS Code 28, 29
 - * 對전세계, '24년 수출액 기준
- **(정책 홍보 및 TBT 인식 제고)** 신기술·신산업 규제 대응에 대한 정책 홍보 강화 및 최신 트렌드 제공을 통한 인식 제고
 - 이슈리포트 및 동향보고서 발간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설명회 및 컨설팅 등을 통한 수출 지원

참고 6 지역연합(체)의 기술규정 및 표준 분석 필요

□ 필요성

- (대외적 배경) 최근 지역연합(체) 주도의 기술규정 및 표준 통합이 가속화되는 추세로, 역내 시장 통합과 산업 보호를 위한 공통 기술 규정과 인증제도를 운영 중

No	경제 통합 단계	주요 특징	대표 지역연합(체)		
1	자유무역지역 (Free Trade A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내 관세 철폐 · 독자적인 대외관세 유지 			
			ASEAN	SICA	AfCFTA
2	관세 동맹 (Customs Un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내 관세 철폐 · 대외 공동관세 부과 			
			MERCOSUR	GCC	CARICOM
3	공동 시장 (Common Mark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내 관세 철폐 · 대외 공동관세 부과 · 역내 생산요소 자유로운 이동 			
			EAEU	ECOWAS	
4	단일 시장 (Single Mark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내 관세 철폐 · 대외 공동관세 부과 · 역내 생산요소 자유로운 이동 · 공동시장 + 제도·정책 통합 · 국가적 기구 설치·운영 			
			EU		

※ 비 고

-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중미 통합체(SICA, Sistema de la. Integracion Centroamericana)
-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 남미공동시장(MERCOSUR)
-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 카리브 공동체(CARICOM, Caribbean Community)
-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 경제 통합 단계 및 지역연합(체) >

- **(중동지역)** GCC를 중심으로 공통 기술규정·표준화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국과 상이한 적합성 평가 체계와 인증 요건이 적용되고 있어 사전 규제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이 필수적
 - (주요 규제대상) 전기전자, 기계, 파이프, 압력장치, 압력용기 제품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이 대부분 GSO 인증 규제 대상에 해당
 - (규제 동향) GSO를 통해 다수 품목에 대한 공통 기술규정을 제정 중이며, G-Mark 인증을 통한 국가 간 인증 상호인정 체계 확대 중
- **(중남미지역)**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메르코수르는 역내 통합을 위한 공통 기술규정 및 표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에 대해 강제인증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예정
 -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對메르코수르 수출액은 약 66억 달러규모로 자동차 부품, 반도체가 약 99%를 차지
 - (주요 규제대상)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계장비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제품군이 강제 인증 대상에 해당
 - (규제 동향) '22년부터 공통 기술규정 도입을 확대 중이며, 각 회원국 내 동일 인증 절차 정비 진행 중
- **(유라시아지역)** 경제성장과 산업 다각화에 맞춰 품질·안전·환경보호 등을 위해 공동 기술규제와 단일 인증제도(EAC) 도입·추진
 - * EAC(Eurasian Conformity)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내 5개국에서 통용되는 제품규격과 생산에 대한 인증서
 - (주요 규제대상) 전기전자, 자동차, 건설중장비, 타이어, 화학제품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이 강제인증 대상에 포함
 - (규제 동향)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제품 등 주요 수출품 대상 단일 적합성평가 체계를 적용 중이며, 총 48개 이상의 공동 기술규정이 이미 발효되었거나 준비 중

- **(아프리카지역)** 관세동맹, 공동 시장 설립, 단일 인증제도 도입 등을 확대하며, 역내 규제 통합 진행 중
 - (주요 규제대상) 식품·농식품·의약품 관련 TBT 통보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전기전자, 건축자재 등으로 규제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
- **(대내적 배경)** 국내 수출기업은 공통 기술규정, 표준 및 단일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적합성 평가 대응역량 미비 등으로 인한 시장 진입과 수출애로 다수 제기
 - 국내 산업계는 중점 대응이 필요한 해외 기술규제 분야로 지역연합 규제(35.4%), 신흥시장국 대상 규제(35.4%) 대응을 요구('24년 기준)

□ 주요 추진 내용

- **(장기 미해소 규제 해소)** 장기 미해소 기술규제에 대해 WTO/FTA TBT 위원회, 양자회의 등 공식절차를 통해 규제 애로 해소(8개국 정보제공 5건, 규제개선 3건, 시행유예 2건, 유권해석 1건 애로 해소)

지역연합	국가	규제명	기업애로 해소 성과	협의결과	'24년 수출 (백만불)
GSO	바레인	상업용 에어컨(칠라) 에너지효율 규제	ISO 17025 인증 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 국내 시험이 가능해짐	규제개선	1.2
		전기 의류건조기 에너지효율 규제	의류 건조기의 에너지라벨 규격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으로 기업 애로 해소	정보제공	0.2
		조명 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가전제품 부품용 조명은 규제 면제 대상임을 확인 받아 기업애로 해소	정보제공	0.4
	사우디아라비아	대용량 에어컨 성능 규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용량 에어컨 성능 시험방법이 국제 표준(ISO)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어 기업애로 해소	규제개선	55.1
		전자기기 충전기의 USB TYPE-C 표준화 규제	규제 시행일이 '24.8.1.에서 '25.1.1로 유예되어 기업의 대응 준비기간 확보	시행유예	0.2
	아랍에미리트	가정용 냉장고 에너지효율 규제	2024년 9월부터 제품 등록 시스템(MoiAT)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받아 기업애로 해소	유권해석	58.5
	쿠웨이트	냉장고 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규제 시행일이 '24.10.7.에서 '25.3.1로 연기되어 기업의 대응 준비기간 확보	시행유예	2.1
ASEAN	오만	세탁기 및 냉장고 에너지효율 규제	'24.4.3.부터 제품 등록 시스템(HAZM)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받아 기업애로 해소	정보제공	0.4
	필리핀	의류세탁기 에너지라벨링 규제	ISO 17025 인증 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 국내 시험이 가능해짐	규제개선	8
	인도네시아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함유제품 사용 금지 규제	HCFC를 함유되지 않았음을 표시하는 로고의 크기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기업애로 해소	정보제공	36.4
EU	유럽연합	실외용 장비 소음 측정 기준	외부소음측정방법 시 적용되는 표준(EN 12053:2001+A1:2008) 정보제공으로 기업애로 해소	정보제공	105.5

- **(개선사례, 유럽연합)** 지게차의 외부 소음 측정과 관련하여 참조 표준이 EN 12053으로 개정되었으나, 동 표준은 차량 내부 소음 측정에 관한 내용으로 관련 기업 애로 발생. 이에 규제 당국에 해당 표준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 제공을 요청하였고, 이후 외부 소음 측정 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기업애로 해소
- **(개선사례, 아랍에미리트)** 냉장고 에너지효율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시험 기준치가 기존 인증 플랫폼(MoIAT) 시스템 상 업데이트 되지 않아, 신규 제품 등록이 필요한 관련 기업애로 발생. 이에 규제 당국에 조치를 요청하였고, 시행 3개월 전 관련 기능이 적용되어 애로 해소
- **(규제 투명성 강화)** 지역연합(체)와의 협력채널을 통해, 신설 규제·인증 요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대응역량 제고

국가	규제명	기업애로 해소 성과	협약결과	'24년 수출 (백만불)
사우디아라비아	전기·전자제품 관련 기술규제	대기전력 기술규정 및 EMC 규제 시행 일정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기업애로 해소	정보제공	2,992.3
	전기자동차 인증 절차 및 에너지효율 규제	전기자동차 인증 관련 기술규제 개정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기업애로 해소	정보제공	
	SABER 인증 플랫폼 및 품질마크(SQM) 규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인증 플랫폼(SABER) 사용에 대한 세부 정보제공으로 기업애로 해소	정보제공	
	3.5톤 초과 트럭 및 수소 연료 전지차 규제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인증제도에 대한 세부 정보제공으로 기업애로 해소	정보제공	1,413.5
	에어컨 에너지효율 및 인증 규제	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에 대한 세부 정보제공으로 기업애로 해소	정보제공	38.9
GSO	기계류 관련 규정 최종안	기계류 관련 지침(Machinery Directive) 최종안 발표 시기에 대한 선제적인 정보제공	정보제공	2,230.4
	에어컨 에너지효율 라벨링 및 최소 에너지 성능기준(MEPS)	WTO 회원국에 통보되지 않은 에어컨 에너지효율 라벨링 및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에 관한 걸프표준(GSO 2530) 원문 제공	정보제공	
	걸프 위원회(Gulf Committee) 관련 정보	걸프 위원회에 일반 기업도 가입이 가능하며, GSO 표준 개발 시 초안 단계부터 의견제시가 가능함을 안내 받아 기업애로 해소	정보제공	
	전기자동차 인증	GSO, SASO, MoIAT(UAE)에서 중복으로 요구되는 전기차 인증 입회 평가결과 상호인정에 대한 협의	정보제공	

- **(한-ASEAN 기술규제 협력 세미나)** ASEAN 국가와 협력 세미나를 개최하여, 규제 현황 정보 공유 및 협력관계 강화

□ 차년도 발전 방향

- **(신흥연합 협력 정례화)** 중동, 중남미 및 유라시아 등 시장성이 큰 지역연합(체)에 대해 정례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속적인 정기적 교류를 통한 TBT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기존		정례화 (신설)	신속 애로해소 (신설)	협력프로그램운영
신흥 지역연합 규제분석 중심	+	매년 Action Plan 선정 및 정례안건 협력	협력 기반 양자회의를 통한 능동적 규제해소 규제 Q&A Hot-line 활성화	<div>[우리측 방문 시] 최신 규제정보 상호교류 현지 기업간담회 등</div> <div>[상대측 방문 시] 국내 규제자 초청 설명회 및 기업-규제자 차담회 등</div>

- **(애로해소 채널)** Action Plan을 근거로 양자회의 개최 등 정기적 교류를 기반으로 신속·정확한 규제 애로 해소 채널로 활용
- **(홍보·전파 강화)** 규제당국과의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기업에서 발생가능한 기술규제장벽을 선제적으로 대응
 - * 규제자 초청 직접 질의응답의 장 마련, 對지역연합 한국 수출기업 정기 Q&A레터 발송 및 회신 체계 구축, 현지 방문 시, 현지 기업(해외지사, 인증대리인 등) 간담회 개최 및 최신 규제정보 공유·정책홍보 등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 강화

□ 기대효과

- 지역연합(체)의 제·개정되는 기술규정에 대한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 채널 기반 강화를 통한 관련 기업의 대응역량 제고
- 지역연합(체)와의 상호 우호적인 협력관계 형성을 통한 국가 간 공조 및 협력 확보
- 최신 기술규제를 제공하여 대·중소기업의 기술규제 해소·완화 및 국내 수출기업의 기술규제 관심도 및 참여 증대

참고 7 인도, 중국 및 아세안(베트남, 인도네시아) 표준분석

1. 주요수출국·수출유망국 진출지원을 위한 제품표준분석·정보제공

- 인도표준(ISI)분석 및 중국, 아세안 등 통상·정세 변화에 선제대응 위한 제품별 기술요구사항 '표준분석 정보' 제공

예시) 인도 전기차 충전기 관련 IS표준

제 품	분 야	IS표준번호
전기차 충전기	안전일반요구	17017-1 : 2018
	전자파 요구	17017-21-2 : 2019
	산업용 AC충전장치	17017-22-1 : 2021
	휴대용 충전장치	17120 : 2019
	DC 충전기	17017-23 : 2021
	DC충전기 디지털통신제어	17017-24 : 2021

- 우리기업의 수출유망, TBT애로해소 필요, 신산업 대응 등 통상규제 수요를 다각도로 반영, 지원국별 맞춤형 제품의 표준정보 제공
 - (1) 중국표준분석 :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전기자전거 배터리 등 CCC인증 갱신 및 신규 적용 품목
 - (2) 베트남표준(TCVN)분석 : 건강기능식품 등 주요 수출식품 표준
 - (3) 인도네시아표준(SNI)분석 : 전기차 배터리, 가스미터 등 도시발전으로 인한 다수요 품목
 - (4) 인도(ISI) 분석: 가정용 전기기기, 배터리, 식품, 화장품 등 전반적 표준

국가(표준명)	24년 주요 표준분석 품목
중 국(GB)	(강제성 규제적용제품) 에어컨, 온수기, 공기청정기, 냉장고, 세탁기, 교류 환기팬, 압력솥 등 CCC인증 갱신 예정 전자제품* * GB 4706 표준의 갱신에 따른 인증서 갱신대상제품(97종 중 선정) (신산업) 전기오토바이 및 전기자전거 배터리, 차량용 배터리 재활용 등 CCC인증 신규 편입 제품
베트남 (QCVN, TCVN)	(주요 수출품) 식품, 야채 및 과일주스, 보충제, 영유아 조제식품, 인삼, 건강기능식품, 할랄식품 등 주요 수출제품
인도 네시아 (SNI)	(신산업) 전기차배터리, 전기차 충전인프라, 전자파, 가스미터 및 수도 미터, 전력량계 등
인도 (ISI)	(강제규제) 냉장고, 다리미, 전기기기, 전기주전자, 온수기, 전기토스터, 전기믹서, 전기면도기, 가정용 오븐, 세탁기 쿠커 등 (주요 수출품) 식품(두유, 흰빵, 녹차, 커피), 화장품(립스틱, 치약, 스킨크림, 염모제, 샴푸, 파운데이션, 비누 등) (신산업) 차량용 사이버보안 및 관리시스템, 치과용X-선 장비, 배터리, 드론 등

1 인도 표준 및 기술규정 현황

- **(표준화기관)**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은 1947년 설립된 ISI(Indian Standards Institution)에서 BIS Act 의해 1986년 개칭된 정부기관
- **(표준개요)** 인도표준국에 의해 국가표준인 IS(Indian Standards) 표준 22,700여건을 운영 중임('24년 3월 현재)
- **(표준분야)** 화학, 의료기기, 공학, 전자기기, IT, 식품, 섬유, 생산, 경영, 시스템, 서비스 등 분야의 표준이 있음
 - * 국제표준인 IEC, ISO와 IS표준 간 조화비율은 전체의 26% ('18년 3월 5049건)
- **(인증제도)** 대표적 인증으로는 ISI 인증(Mark Scheme)*과 CRS 강제등록 (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을 운영하고 있고, 대상 제품 수는 각 Shcheme I 604개, Shcheme II 73개 제품임(인증기간 2년)

- 외국산 제품은 인도 FMCS(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Scheme) 절차에 따라 ISI 인증을 획득하여야 함

* Scheme I : 시멘트, 가전기기, 배터리, 식품,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등 352개 품목

** Scheme II : AV, IT기기, 태양광 발전시스템, 저전압 스위치 등 75개 품목

인증스킴	명칭	해당품목	품목개수
Scheme I	ISI 마크인증	시멘트, 가전제품, 배터리, 식품 및 관련제품,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변압기, 전동모터, 가정용 온수기, 주방용품, 에어컨 등	604종
Scheme II*	CRS 강제등록	AV, IT기기, 태양광 발전시스템, 저전압 스위치 등	73종
Scheme IV	적합성 인증서	변압기의 스템핑 / 라미네이션 / 코어 자전거용 역반사 장치	2종

- 그 외 강제인증으로는 통신인증(TEC), 무선승인(WPC ETA), 에너지효율 (BEE), RoHS 인증(EPR), 차량부품 안전인증(AIS),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인증(CDSCO) 등이 있음
- **(기업애로)** 인도의 시험기준은 국제기준 채용정도가 낮고, 현지 시험소 시험결과만 인정
 - 인증 획득 시 현지대리인이 요구되고, 인증비보다 과도한 컨설팅비 및 인증 취득기간 소요(6개월 이상) 등 정보부족 및 과도한 규제운용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가 발생

2 중국의 표준 및 기술규정 현황

- **(표준화기관)** 중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 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China)에서 표준의 제·개정 예고, 의견수렴 등 전반적 표준화작업 관리감독 수행
- **(표준개요)** 국가적 공통요구사항인 국가표준, 산업표준, 단체표준 등의 표준체계를 가지며 국가표준인 GB(Guojia Biaozhun) 표준43,920여건을 운영 중임('24년 3월 현재)
- **(GB표준)** 국가표준은 제품에 요구되는 기본안전요구사항으로, 제조자는 **GB 표준의 안전요구에 상응**하는 제품의 품질을 갖춰야 함(中 표준화법 규정)
 - 국제표준과의 조화도는 전기전자제품분야 일부 등에 국한되는 등 자국 고유의 공고한 표준체계를 기반으로 적합성평가제도 구축·추진
 - 최근 전기안전, 환경, 방폭, 화장품, 식품, 의약품 등 제품품질제고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강제표준 제·개정 중
- **(인증제도)** 전기전자, 공산품 분야 CCC인증(중국강제성제품인증)과 NMPA 등록·허가제(화장품,약품, 의료기기), 화학물질 등록제, 에너지효율라벨, 무선 통신규제(SRRC, NAL등) 등 산업 전분야 제품 품질 확보를 위한 적합성 평가 제도 운영 중
- 최근 주요 산업분야 표준화 업무 추진내용('24년 규제동향 발췌)

규제명	세부내용
신산업 표준화 시범프로젝트 실행('2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산업 표준화 시범프로젝트 실행계획(2023~35)를 발표, 메타버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양자정보, 휴머노이드 로봇, 생성형 AI, 바이오제조, 미래 디스플레이, 미래 네트워크, 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 등 9대 분야 표준화 추진 ● 기술혁신 및 사업화, 대표제품 개발, 산업 주체 육성, 응용 확대, 표준화 로드맵 및 국제표준화, 인력양성 등 기반 강화
미래산업 혁신발전추진 (‘2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 정보통신, 소재, 에너지, 공간, 바이오의료 등 6대 분야 미래기술 관련 별도 정책 수립 및 재정지원 확대, 5년 후 미래산업 상용화 목표로 집중 투자 강화
국가표준화 발전요강 행동계획 (2024~25) (2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화 및 과학기술 혁신 간 상호작용 강화를 위해, 핵심 기술 분야 표준화 강화 ● 집적회로, 반도체 소재, 생명공학, AI, 스마트 커넥티드카, 6G 및 블록체인 ● 핵심 기초 부품 범용 기술표준 제개정을 통한 산업 기초표준체계 개선

3 베트남 표준 및 기술규정 현황

- **(표준화기관)** 품질기술원(Directorate for Standards)과 기술표준원(STAMEQ, Metrology and Quality of Vietnam)은 베트남의 표준화, 측정, 품질관리분야 담당
- **(표준개요)** 강제사항인 기술기준(QCVN,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802건 및 국가표준(TCVN, National Technical Standards) 13,220건 등 총 14,000여 건의 표준을 운영 중임

* 관련법률 : No: 68/2006/QH11: On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s Appendix-1

- **(표준분야)** 제품 및 상품(연료, 헬멧, 장난감, 전기전자, EMC, 철강, 건축자재 등), 서비스 및 프로세스, 환경, 사회경제활동 등 총 5개 분야가 해당

* 국제표준인 IEC, ISO와 베트남 강제표준 간 조화비율은 전체의 약 38%이고, 자국언어로 표준을 발행함에 따라 별도의 표준내용 확인 필수

- **(인증제도)** 대표적인 강제인증으로는 CR Mark인증(안전 및 EMC)이 있고, 대상 품목군은 현재 12개 품목군*임(인증기간 3년) 102종제품**에 해당

* (1) 가솔린 바이오 및 디젤, (2) 헬멧, (3) 장난감, (4) 전기제품, (5) 콘크리트 철골 구조물 (건축자재), (6) LPG, (7) 전자파 제품(EMC), (8) 시멘트 클링커, (9) 시멘트와 콘크리트용 혼화제, (10) 비료, (11) 식품, (12) 가축사료 등 12개 품목

** 102종 제품의 경우, 12개 품목군에 적용되는 TCVN(TCVN이 없는 경우 상위강제규정인 QCNV기준) 기준 제품군 수 산출

- CR Mark인증에서 요구되는 품목군별 기술규정은 52종이고, 각 규정 내 적용표준 수는 1~20건으로 제품마다 상이
- 그 밖의 강제인증으로는 에너지효율(VNEEP), 통신(VNTA), 의료기기허가(MOH) 등이 존재

- **(주요 기업애로)** 인증제도의 복잡성*, 既 제공 중인 규제정보의 부정확함** 등 수출에 필요한 규제 정보 자체의 물리적 부족으로 기업애로 부상

- 베트남어 규제제공 등 정확한 규제파악에 애로

* CR마크 인증 취득 형식이 제품별 1-8단계로 구분, 취득절차 상이

** 규제도입 신흥국으로 에너지 효율, 무선통신, 유해물질제한(RoHS) 등 제품 별 다중분야 규제 적용 추세이며 매년 새로운 규제의 도입, 기존규제의 개정이 활발히 진행

4 인도네시아 표준 및 기술규정 현황

- **(표준화기관)** 국가표준화기구(BSN,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of Indonesia) 는 대통령령 (President Decree) No. 12/1997)에 의해 설립된 정부기관
 - 인도네시아의 표준 개발 업무를 담당하여 계측, 표준, 시험 품질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 규격을 개발
- **(표준개요)** 국가표준화기구(BSN)에 의해 국가표준(강제)인 SNI(Standard Nasional Indonesia)를 운영 중에 있고, 14,249건으로 집계(‘24.3월)¹⁾
- **(표준분야)** 일반, 서비스, 환경 및 안전, 산업(전기전자, 통신, 철도, 선박, 비행기, 건축자재, 화학, 의료 등), 제품 및 서비스, 시험방법 등 총 42개 분야가 해당
 - * 국제표준인 IEC, ISO와 SNI표준 간 조화비율은 전체의 16%이하(1,955건)
- **(인증제도)** 강제인증인 SNI인증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 품목군은 현재 306개 품목군* 내외(인증기간 3년)로, SNI인증에서 요구하는 품목군별 기술 규정은 302종이고, 각 규정 내 적용 표준은 1건~20건으로 제품마다 상이함.
 - * 농업 및 식품, 철강, 비료, 화학, 신발, 가죽, 전기전자, 섬유 및 의류 등 302개 품목
- 그 외 강제 인증으로는 통신승인(SDPPI), 할랄인증(Hallal), 의료기기허가(DOH) 등이 존재
- **(기업애로)** 국제표준인증 미인정 및 국외 시험인증 진행 불가*등 인증취득에 제약이 많아, 기업애로 부상
 - 인도네시아어 규제제공 등 정확한 규제파악에 애로

* IEC CB등 국제표준규격인증을 취득했더라도 SNI 강제 취득 대상이면 인도네시아 현지 LSPRO 시험기관을 통해 인증을 취득해야 수출 및 유통 가능, 이에 비용·시간 부담이 증가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CB성적서 불인정으로 인해, 오로지 현지 시험결과만 인정

1)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정보사이트 : <http://sispk.bsn.go.id/SNI/DaftarList> 검색

참고 8 FTA TBT 종합지원 ‘표준분석’ 실적

□ 최근 5년('20~'24) 표준분석 실적

() : 중국실적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TBT 지원국가	중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
표준분석(종)	130	160 (110)	186 (111)	186 (86)	160 (40)	822종 (477)
TBT 가이드북(권)	5	6 (4)	5 (2)	6 (2)	6 (2)	28권 (15)

□ '24년 표준분석 주요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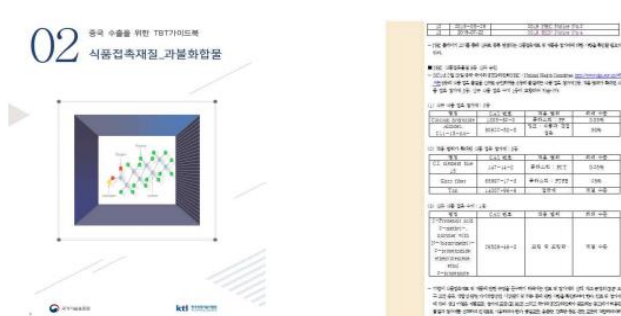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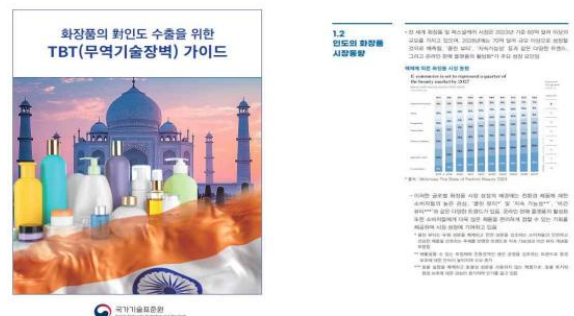
'24년 사업 주요 성과		
기술규제·표준 분석	분석 대상표준(GB) 및 비교표준(KC등), 중국 규제 조사	160종
	TBT 가이드북	6권

- '22년도 수출기업 TBT 애로 수요조사, 강제규제 동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선정기준(시급성/파급성/의존성/시장성 등)를 고려하여 분석 순위 선정
-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의 160종 표준을 분석하여 규제포털(KnowTBT)에 제공하고, 주요 주제별 가이드북을 제작/배포(6종)

< '24년도 분석대상 품목 인도 예시 >

제품군명	세부 제품명
전기전자제품	온수기, 전기팬, 전기토스터, 가정용 믹서, 세탁기, 쿠키, 커피메이커 등
식품	두유, 요구르트, 흰빵, 녹차, 커피 등
에너지	태양광발전용 2차전지 및 배터리, ESS 등
화장품	립스틱, 염모제, 헤어오일, 샴푸, 비누, 파운데이션, 스킨크림 등

< 표준분석 결과물 예시 >

가이드북①- 중국/식품접촉재질	가이드북②-인도/화장품
 <p>중국 수출을 위한 TBT7기요령 식품접촉재질·과불화합물</p> <p>02</p> <p>중국 수출을 위한 TBT7기요령 식품접촉재질·과불화합물</p> <p>1. 개요</p> <p>2. 분석대상 품목</p> <p>3. 분석대상 품목의 분류</p> <p>4. 분석대상 품목의 분석 방법</p> <p>5. 분석대상 품목의 분석 결과</p> <p>6. 분석대상 품목의 분석 결과</p> <p>7. 분석대상 품목의 분석 결과</p> <p>8. 분석대상 품목의 분석 결과</p> <p>9. 분석대상 품목의 분석 결과</p> <p>10. 분석대상 품목의 분석 결과</p>	 <p>화장품의 인도 수출을 위한 TBT(무역기술장벽) 가이드</p> <p>1.2 인도의 화장품 시장동향</p> <p>1. 인도의 화장품 시장 동향</p> <p>2. 인도의 화장품 시장 동향</p> <p>3. 인도의 화장품 시장 동향</p> <p>4. 인도의 화장품 시장 동향</p> <p>5. 인도의 화장품 시장 동향</p> <p>6. 인도의 화장품 시장 동향</p> <p>7. 인도의 화장품 시장 동향</p> <p>8. 인도의 화장품 시장 동향</p> <p>9. 인도의 화장품 시장 동향</p> <p>10. 인도의 화장품 시장 동향</p>

참고 9

국내 FTA TBT 추진 현황 ('25.6월 현재)

단 계	FTA	관련 위원회
발효된 FTA (22개)	- 한-칠레('04.04.)	o 한-칠레 표준 관련 조치 위원회
	- 한-싱가포르('06.03.)	o 한-싱 FTA TBT 공동 TBT 위원회
	- 한-EFTA('06.09.)	o 없음(한-EFTA FTA 공동위원회 운영)
	- 한-ASEAN('09.05.)	o 없음(한-ASEAN TBT 작업반)
	- 한-인도(CEPA, '10.01.)	o 없음(한-인도 CEPA 개선협상 TBT/SPS 공동작업반)
	- 한-EU('11.07.)	o 없음(전기전자규제대화체, TBT Coordinator지정)
	- 한-페루('11.08.)	o 한-페루 FTA TBT 위원회
	- 한-미('12.03.)	o 한-미 FTA TBT 위원회
	- 한-튀르키예('13.05.)	o 없음(한-터키 FTA 공동위원회 운영, TBT Coordinator지정)
	- 한-호주('14.12.)	o 없음(TBT Coordinator 지정)
	- 한-캐나다('15.01.)	o 한-캐나다 표준 관련 조치 위원회
	- 한-중('15.12.)	o 한-중 FTA TBT 위원회
	- 한-뉴질랜드('15.12.)	o 한-뉴질랜드 FTA TBT 위원회
	- 한-베트남('15.12.)	o 한-베 FTA TBT 위원회
	- 한-콜롬비아('16.07.)	o 한-콜롬비아 FTA TBT 위원회
	- 한-중미('21.03.)	o 한-중미 FTA TBT 위원회
	- 한-영 ('21.01.)	o 없음(TBT Coordinator 지정)
	- RCEP ('22.02.)	o 없음(국가간 접촉선 지정)
	- 한-이스라엘 ('22.12)	o 한-이스라엘 FTA TBT 위원회
	- 한-캄보디아 ('22.12)	o 없음(상품 챗터 내 TBT 관련 조항 규정)
	- 한-인니('23.1.)	o 없음(상품 챗터 내 TBT 관련 조항 규정)
	- 한-필리핀('24.12.)	o 없음(상품 챗터 내 TBT 관련 조항 규정)
타결된 FTA (4개)	- 한-UAE('23.9.~)	o 한-UAE FTA TBT 위원회
	- 한-GCC('08.07.~)	o 한-GCC FTA TBT 위원회
	- 한-에콰도르('16.01.~)	o 한-에콰도르 SECA TBT 위원회
	- 한-조지아('24.1.~)	o 없음(국가간 접촉선 지정)
협상진행 FTA (6개)	- 한-중-일('13.03.~)	-
	- 한-메르코수르('18.09.~)	-
	- 한-말레이시아('19.07.~)	-
	- 한-우즈베크('21.04.~)	-
	- 한-몽골('23.12.~)	-
	- 한-태국('24.7.~)	-
재개, 개시 여건조성 (4개)	- 한-탄자니아('24.6.) : 협상개시 선언	
	- 한-세르비아('24.9.) : 협상개시 선언	
	- 한-방글라데시('24.11.) : 협상개시 선언	
	- 한-파키스탄('25.1.) : 협상개시 선언	

참고 10 '24년도 中상해 TBT대응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현지대응

□ '24년 사업 주요 내용

- (사업명) 중국 상해 TBT 대응지원센터 운영 및 현지 간담회·설명회 개최
- (범위) 中기술규제 정보의 신속 파악 및 현지진출기업의 애로 대응지원을 위한 상설 대응 협력체계 구축·운영
- (목표) 상시기업애로접수·지원, 규제대응 협의회 개최·운영 및 中정부간 협력채널 구축·운영

구분	내용	비고
기업애로지원	- 상시 접수지원·대응 : 5건	- 중국 갈륨통제 및 화장품 QR코드 관리, 알로에음료 규제 등 애로지원
현지 정기 협의회 개최·운영	- 간담회: 2회(10월, 11월) - 설명회: 2회(10월, 11월)	- COVID-19종료로 현지 대면 운영
홍보	- 2회(5월, 11월)	- 6월, 11월(뉴스레터)
협력채널 운영	- 네트워크관리카드(5건)	- 방문기관 및 관련 유관기관 조사 사항 반영

□ '24년도 중국 현지대응 업무 성과

- 중국 전기안전 및 환경, 소비자안전 등 지속적인 중국 표준 및 인증제도 갱신 등 최신동향에 대해 현지 전문가 강연 및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을 실시



상해 TBT규제 설명회('24.10)



상해 TBT규제 설명회('24.10)



심천 TBT규제설명회/간담회('24.11)



심천 TBT규제설명회/간담회('24.11)

참고 11 '24년도 '인도 현지 TBT 대응 협의체' 운영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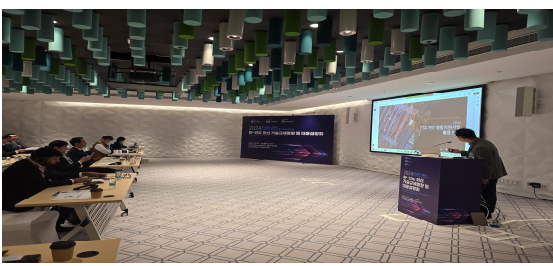
□ '24년 사업 주요 내용

- (사업명) 인도 TBT 대응지원센터 구축 및 현지 간담회·설명회 개최
- (범위) 최근 기술규제 지원 수요가 급증하는 인도의 TBT지원을 위한 현지 TBT대응지원 협의체 구축추진
- (목표) TBT 대응지원 소개, 현지기업대상 기술규제 지원간담회 개최, 규제정보 전파를 위한 TBT설명회 개최 등 활동전개

구분	내용	비고
현지 간담회 개최	- 기업간담회 : 1회(11월 대면형식)	- 기업간담회 : 1회(24.11.21. 아소부미전시장) - 대사관, 기업 등 33명
현지 설명회 개최	- 설명회 : 1회(11월 대면형식)	- 설명회 : 1회(24.11.22 아소부미전시장) - KOTRA, 기업 등 140명
인도 규제기관 네트워크 확보	- 인도정부 : 도로교통부, 철강부, 신재생에너지부, 통신공학센터 등	- BIS, BEE, ARAI 등 5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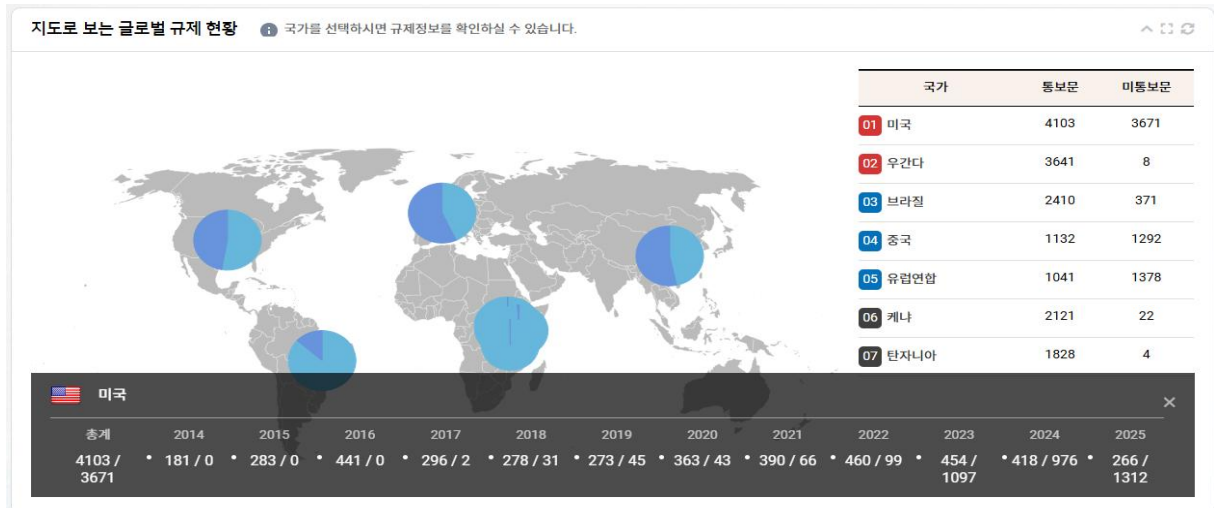
□ '24년도 인도 현지대응 업무 성과

- 인도 BIS인증 대상의 급증 및 인증 획득 지연, 중국·아세안 제품 수입 연기 등 인도 현지진출기업의 애로에 대해, BIS 측의 전문가 강연 및 답변을 통한 기업 애로해소 지원
- 대한민국산업전시회(KOINDEX)와의 연계 행사를 통해, 국내 수출기업 애로 통합 지원

	
인도기업간담회('24.11)	BIS 전문가 접견('24.11)
	
인도 TBT규제설명회('24.11)	인도 TBT규제설명회('24.11)

참고 12 knowtbt 포털 운영

- 사용자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인화 서비스(국가별, 품목별) 구현으로 기업(사용자)의 취급 품목에 적용되는 맞춤형 기술규제 정보 선제적 제공



사용자 맞춤형 개인화 서비스 화면

□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업무지원 서비스

- 체계적인 업무이력관리 및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으로 데이터 기반의 빠른 의사결정 지원

규제 상담 관리

☞ KnowTBT > 규제 대응지원 관리 > 규제 상담 관리

등록일: to 등록일: to 진행상태:

상담 수행기관: 상담 수행기관 전체: 전체:

총 3806건의 상담신청이 있습니다.

번호	수출국가	품명	구분	제목	기업명	상담수행기관	등록일	현황	진행상태
3806		전자전기제품	기초	사우디아라비아 RoHS 규정 개정안 심층분석 요	LG전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2025-08-06		답변대기
3805		전자전기제품	기초	중국 RoHS 강제규제(GB26572-2025) 심층분석 요	LG전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2025-08-06		답변대기
3804		컨설팅	기초	웨르키에, 브라질 피막물질 규제 문의	CRCP	한국화학산업진흥회	2025-08-06		답변대기
3803		NAPHTHA	심화	NAPHTHA에 EU에 등록하려고 합니다.	대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025-08-06		답변대기
3802		PP(폴리프로판렌)	기초	PP 제품 인도 BIS 인증 취득	에스오업	한국화학산업진흥회	2025-08-06	2025-08-05	답변완료
3801		산업용 센서류, 측정기기류	심화	EU 디지털화 관련 문의	오토닉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25-08-06	2025-08-06	답변완료
3800		굴착기(Excavator), 블로터(W-...	기초,심화	건설기계의 유럽 내 EU(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은 국가의 CE marking 필요...	HD현대사이드시스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025-08-05		답변대기
3799		전자전기제품	기초,심화	유해물질 규정한 2025년 관련 정보제공 요청	LG전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25-08-05	2025-08-06	답변완료
3798		베트님 화장품관리제 관련 영...	심화	베트님 화장품관리제 관련 법령안 초안 (Draft Decree on the Management o...	한국화학	KOTIT시험연구원	2025-08-01		답변대기
3797		Automatic door operator	심화	인도 BIS, BIS SCHEME X 관련 문의	(주)리츠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25-07-31	2025-08-06	답변완료

« < 1 2 3 4 5 6 7 8 9 10 > »

업무이력관리 및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 무역기술장벽(TBT) 정책 품질 제고와 정책지원을 위한 통계정보 제고

- TBT 관련 해외 규제 당국과 협상·협력 이력 등 TBT 대응 현황, 기업 TBT 애로 해소사례 등을 종합 관리하여 정책 품질 제고

해외기술규제 조사 분석 현황					
- (요약) 규제 66건 검토 1건, 대응중 24건, 모니터링 8건, 해소 20건 (일부해소 2건 포함), 기업수용 9건, 철회 4건 - (대응 건수) 규제 45건, 요지 129건 24년 대응 요지가 있는 것으로 한정 - (해소 건수) 규제 20건(일부해소 2건 포함), 요지 35건					
(단위: 건)	구분	통보		미통보	
		주간	누적	주간	누적
1 입수·발굴	공산품	63	1,550	194	3,716
	식의약품	40	673	3	50
	농수산물	27	400	0	2
	합계	130	2,623	197	3,768
2 기초조사	완료	130	2,623	198	3,768
3 심층분석	완료	20	414	84	481
4 전파 (KnowTBT)	완료	2,623		2,696	
5 기업애로 대응	검토	0	0	0	1
	대응진행 중	0	10	0	14
	모니터링	0	4	0	4
	종결	해소	0	8	12
		수용	0	3	6
		철회	0	3	1
	합계	0	28	0	38

* 미통보문 기초조사를 통해 규제 중립발표 등을 제외한 이유로 미통보문 입수·발굴 수와 상이

3 기관별 컨설팅 현황표					
- KnowTBT 포털 접수 건 취합 사항					
NO	기관명	목표	당월 실적	누적 실적	달성률(%)
1	KOTICA	30	1	15	50.0
2	KTC	30	1	13	43.3
3	KCL	30	0	13	43.3
4	KTR	30	5	21	70.0
5	KOTITI	30	0	9	30.0
6	KEA	40	8	47	117.5
7	KEAA	40	4	19	47.5
계		310	28	176	56.7

해외 기술규제 컨설팅 세부 현황표(당월)

No	기업명	일자	컨설팅 결과	담당기관
1	HD현대인프라코어	2025-07-01	포장 밀봉제 기술규제 관련 정보 제공	KTR
2	안전성평가솔루션	2025-07-02	EU의 화X09) 개정 초안 안내 및 화장품 업계의 예상...	KCIA
3	LG전자	2025-07-02	해당 물질 포인트 확인 후, 관련 매일 전송 및 회신 ...	KEA
4	(주)제이비피코리아	2025-07-02	수출 관련 규제정보 전달	KTR
5	LS엠트론	2025-07-03	향후 품5 내용에 대한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 하기로...	KEAA
6	(주)한성지티	2025-07-03	답변 회신 및 관련 자료 송부함	KTC

업무이력관리 및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참고 13

해외 기술규제 조사·분석비 산출내역

심층분석	<p>□ 심층분석 : 5,000천원/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원문 번역비* : 1,400천원/건 - 인건비** : 3,600천원/건 (14MD/건 소요) <p>* 인건비 산출내역</p> <p>1) 통보 : ①WTO TBT 통보문 입수, ②분석(규제대상 범위, 제.개정 주요내용, 국가간 규제내용 과도성 비교, 문제점 및 대응방안), ③산업계 의견수렴·대응, ④ 규제내용 전파 등</p> <p>2) 미통보 : ①미통보 규제 발굴(규제당국 모니터링, 해외규제 포털 모니터링 등), ②분석(규제대상 범위, 제.개정 주요내용, 국가간 규제내용 과도성 비교, 문제점 및 대응방안), ③산업계 의견 수렴·대응, ④규제내용 전파 등</p>
	<p>* 통보/미통보 심층분석과 최종안의 인건비 산출이 동일한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안은 통보/미통보의 분석 내용에 없는 인증절차, 인증기관, 시험소, 사후 관리, 유의사항 등의 정보조사가 포함되므로 동일하게 인건비 산출됨

* 인건비 기준 : '25년 기재부 학술연구용역 단가 기준 MD당 단가 : 258,331 (원/MD)

사 업 명
(2) 신기술제품인증 (37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1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신기술제품인증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세부사업) 신기술제품인 증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이용현	-	지새한울
		인증산업진흥과	043-870-5500	-	043-870-558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신기술제품인증	2,461	2,734	2,734	2,759	2,748	14	0.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61	2,461	2,429 [2,429]	-	32	2,734	2,734	2,727 [2,727]	2,734	2,727 [2,727]	-	7	2,748
· 신기술인증 등 지원	1,896	1,896	1,864 [1,864]	-	32	2,139	2,139	2,132 [2,132]	2,139	2,132 [2,132]	-	7	2,153
· 인증제품 판로지원 및 확산	281	281	281 [281]	-	-	231	231	231 [231]	231	231 [231]	-	-	231
·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 증 지원	284	284	284 [284]	-	-	364	364	364 [364]	364	364 [364]	-	-	364
○ 비목별 분류(합계)	2,461	2,461	2,429 [2,429]	-	32	2,734	2,734	2,734 [2,727]	2,734	2,734 [2,727]	-	7	2,748
· 일반수용비(210-01)	58	58	58 [58]	-	-	28	28	28 [28]	28	28 [28]	-	-	28
· 사업추진비(240-01)	1	1	1 [1]	-	-	1	1	1 [1]	1	1 [1]	-	-	1
· 일반연구비(260-01)	18	18	18 [18]	-	-	18	18	18 [18]	18	18 [18]	-	-	18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2,384	2,384	2,352 [2,352]	-	32	2,687	2,687	2,687 [2,680]	2,687	2,687 [2,680]	-	7	2,70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461	2,461	2,429 [2,429]	-	32	2,734	2,734	2,727 [2,727]	2,734	2,727 [2,727]	-	7	2,748
· 신기술인증 등 지원	1,896	1,896	1,864 [1,864]	-	32	2,139	2,139	2,132 [2,132]	2,139	2,132 [2,132]	-	7	2,153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819	1,819	1,787 [1,787]	-	32	2,092	2,092	2,085 [2,085]	2,092	2,085 [2,085]	-	7	2,106
- 사업추진비(240-01)	1	1	1 [1]	-	-	1	1	1 [1]	1	1 [1]	-	-	1
- 일반연구비(260-01)	18	18	12 [12]	-	-	18	18	18 [18]	18	18 [18]	-	-	18
- 일반수용비(210-01)	58	58	58 [58]	-	-	28	28	10 [10]	28	10 [10]	-	-	28
· 인증제품 판로지원 및 확산	281	281	281 [281]	-	-	231	231	231 [231]	231	231 [231]	-	-	231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281	281	281 [281]	-	-	231	231	231 [231]	231	231 [231]	-	-	231
·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 지원	284	284	284 [284]	-	-	364	364	364 [364]	364	364 [364]	-	-	364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284	284	284 [284]	-	-	364	364	364 [364]	364	364 [364]	-	-	36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신기술인증 등 지원) 국내 개발 신기술(NET), 신제품(NEP), 우수재활용제품(GR)의 평가인증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유도 및 인증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
- (인증제품 판로지원 및 확산) 신제품(NEP)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 설명회, 구매상담회, 판매 실적 조사 등을 통한 인증제품 판로개척 추진
-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지원) 융합신제품에 대한 별도의 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Fast-Track(6개월 이내)으로 적합성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적시 시장출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① 정부는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이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
2.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의 양성
3. 사업화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 촉진
4.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후속개발 및 기술금융의 활성화
5. 기술력평가에 따른 기술담보대출의 활성화
6. 그 밖에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으로 본다.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의2(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

제16조(신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

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인증신제품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2. (생략)

3.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생산되는 산업기술혁신·재활용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

제57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제5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기관 위탁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등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총괄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평가기관과 총괄지원기관이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①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 사본을 즉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산업융합 신제품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산업융합 신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인증 심사의 대상 여부와 심사에 걸리는 예정 기간 등을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한 제조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통지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통지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적합성 인증 심사) ①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합성 인증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심사를 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을 위한 적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적합성 인증 기준 등 적합성 인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2.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95.05.10 : 제15회 「신경제 추진회의」에서 기계류·부품·소재에 대한 품질인증 업무를 시행토록 결정
- '04.11.25 : 각부처의 유사기술 및 제품인증에 대한 정부인증제도 통폐합(5개 부처, 7개 신기술 인증 업무를 신기술·신제품 인증으로 통합 정비)
- '06.10.30 : NEP제품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화(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 '07.10.29 : 공공구매제도 주관부처가 산자부에서 기술표준원으로 변경
- '08.02.29 : 정보통신부에서 수행하던 IT분야 신제품 (NEP)인증 업무 및 과기부의 신기술(NET) 인증업무를 기술표준원으로 이관
- '11.10.06 : 산업융합촉진법에 근거,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제도 도입
- '16.02.17 :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을 위한 신속 시장진입지원체계로서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센터” 구축 등 보고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5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320	3,425	2,461	2,734	2,74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민간위탁사업(공모)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전 산업분야 인증업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신기술인증 등 지원

: (2025 본예산) 2,139백만원 → (2026) 2,153백만원, 14백만원 증액

- NEP, NET, GR 인증 평가위탁에 따른 인증평가비용 및 제도 운영 예산으로,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육성 및 K-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증액 필요
- (산출) 신제품(NEP), 신기술(NET),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1,731백만원
NET·NEP 신산업 전략품목 발굴·지원 165백만원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기준 개발 210백만원
인증제도 효율화를 위한 조사·분석 1백만원
연구용역비 18백만원
법률자문 등 일반수용비 28백만원

② 인증제품판로지원 및 확산

: (2025 본예산) 231백만원 → (2026) 231백만원, 전년동

- 인증 신제품(NEP)의 판로지원과 공공기관 의무구매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산출) 의무구매 실적 및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80백만원
공공구매 설명회, 현장방문 상담회, 정부포상 등 151백만원

③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 지원

: (2025 본예산) 364백만원 → (2026) 364백만원, 전년동

-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산출) 적합성인증 제도운영 344백만원
제도이용유도 및 활성화 2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734	(1) 신기술인증 등 지원 : 2,139백만원 (1-1) NEP, NET, GR, 재제조 인증 : 1,717백만원 - 정기인증평가 892건 × 3.85백만원 × 0.5	2,748	(1) 신기술인증 등 지원 : 2,153백만원 (1-1) NEP, NET, GR, 재제조 인증 : 1,731백만원 - 정기인증평가 899건 × 3.85백만원 × 0.5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 NEP, NET 100대 신산업 전략품목 발굴·지원 : 165백만원 - (신산업 지원) 80백만 + (사후관리) 59건x1.44백만원 (1-3) 우수재활용(GR)인증기준 개발 : 210백만원 - 기준개발 10건 x 21백만원 (1-4) 인증제도 효율화를 위한 조사분석 : 1백만원 - 6명 X 18천원 X 9회 (1-5) 연구용역비 :18백만원 - 연구용역 1건 X 18백만원 (1-6) 법률자문 등 일반수용비 : 28백만원 (2) 인증제품 판로지원 및 확산 : 231백만원 (2-1) 의무구매 조사 및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80백만원 - 의무구매 관리 및 종합정보시스템운영 : 80백만원 (2-2) 공공구매, 현장 방문 상담회 정부포상 등 : 151백만원 - 상담회 등 20회 X 4.8백만원 + (정부포상) 55백만원 (3)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 지원 : 364백만원 (3-1) 제도운영 및 인증조사·분석 : 344백만원 - (수요발굴)16건 X 3백만원 - (분석 및 인증관리)8건 X 27백만원 - (기준제정)1건 X 80백만원 (3-2)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홍보 : 20백만원 - 홍보 1회 X 20백만원		(1-2) NEP, NET 100대 신산업 전략품목 발굴·지원 : 165백만원 - (신산업 지원) 80백만 + (사후관리) 59건x1.44백만원 (1-3) 우수재활용(GR)인증기준 개발 : 210백만원 - 기준개발 10건 x 21백만원 (1-4) 인증제도 효율화를 위한 조사분석 : 1백만원 - 6명 X 18천원 X 9회 (1-5) 연구용역비 :18백만원 - 연구용역 1건 X 18백만원 (1-6) 법률자문 등 일반수용비 : 28백만원 (2) 인증제품 판로지원 및 확산 : 231백만원 (2-1) 의무구매 조사 및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80백만원 - 의무구매 관리 및 종합정보시스템운영 : 80백만원 (2-2) 공공구매, 현장 방문 상담회 정부포상 등 : 151백만원 - 상담회 등 20회 X 4.8백만원 + (정부포상) 55백만원 (3)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 지원 : 364백만원 (3-1) 제도운영 및 인증조사·분석 : 344백만원 - (수요발굴)16건 X 3백만원 - (분석 및 인증관리)8건 X 27백만원 - (기준제정)1건 X 80백만원 (3-2)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홍보 : 20백만원 - 홍보 1회 X 2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공공구매품목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목표	71.7	72	72.5	72	72	'12년도 성과지표 설정 후 장기간 큰 폭으로 상승 한 점, 만족도는 일정 수준 이상 증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공공기관(419개 기관) 구매담당 자를 대상으로 공공구매 만족 도 평균 점수	외부 전문 기관의 만족도 설문 조사
	실적	71.4	72.6	73.6	-	-			
	달성도	99.6	100.4	102.2	-	-			
기관별 의무구매 이행률 (단위: 점)	목표	48.7	43	42	42	42	최근 3년 실적을 감안, 목표 산출. '22년 도입된 신 규지표로 실적 추이 관찰 필요	인증 산제품(NEP)의 의무구매 실적에 있는 공공기관 중 법정 구매비율(20%)을 준수한 기관의 비율	조달청 나라장터 구매시스템 기관별 재정시스템 등 온라인 조사
	실적	43	42	41.3	-	-			
	달성도	94	97.7	98.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기술 인증 평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제품(NEP) 인증(신청 424건/인증 53건), 신기술(NET) 인증(신청 533건/인증 91건) -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신청 164건/인증 112건) ② 인증제품 판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1회, 설명회 6회, 구매상담회 8회, 현장방문 상담회 27회 ③ 인증제품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사후관리 대상 건 완료(NEP: 50건, GR : 102건) ④ 융합신제품적합성 인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로지원건수 64건, 인증건수 5건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기술 인증 평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제품(NEP) 인증(신청 372건/인증 57건), 신기술(NET) 인증(신청 479건/인증 68건) -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신청 190건/인증 131건) ② 인증제품 판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1회, 설명회 6회, 구매상담회 7회, 현장방문 상담회 16회 ③ 인증제품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사후관리 대상 건 완료(NEP: 53건, GR : 114건) ④ 융합신제품적합성 인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로지원건수 63건, 인증건수 1건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기술 인증 평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제품(NEP) 인증(신청 389건/인증 46건), 신기술(NET) 인증(신청 365건/인증 55건) -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신청 213건/인증 163건) ② 인증제품 판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1회, 설명회 6회, 구매상담회 6회, 현장방문 상담회 16회 ③ 인증제품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사후관리 대상 건 완료(53건) ④ 융합신제품적합성 인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로지원건수 89건, 인증건수 5건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기술 인증 평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제품(NEP) 인증(신청 179건/인증 21건), 신기술(NET) 인증(신청 185건/인증 18건) -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신청 107건/인증 92건) ② 인증제품 판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1회, 설명회 2회, 구매상담회 2회, 현장방문 상담회 7회 ③ 인증제품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사후관리 대상 건 완료(14건) ④ 융합신제품적합성 인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로지원건수 21건, 인증건수 2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중소기업 성장 기여) 2024년 한해 공공기관이 구매한 인증신제품(NEP)의 구매총액은 3,892억원, 한 개 제품 당 평균 구매액은 24.5억원으로 중소기업 신제품의 초기 판로개척에 기여하고 있음

<최근 3년 NEP 의무구매 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22년	'23년	증감률	'24년	증감률
NEP제품 구매액	2,845	3,488	22.6	3,892	11.6
품목당 구매액	16.7	20.9	25.1	24.5	17.2

- (일자리 창출) 국내 기업이 ①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 취득을 위해, ② 인증 취득 후 생산·관리를 위해 기술 및 행정 전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

<신기술, 신제품 인증의 일자리 창출 효과>

(고용실시기업(%) / 고용규모(명))

구 분	① 인증 취득 전 [인증 취득을 위한 고용]	② 인증 취득 후 [생산·관리를 위한 고용]
신기술(NET) 인증	48.8% / 4.0명	52.4% / 4.3명
신제품(NEP) 인증	60.6% / 2.9명	48.5% / 2.6명

※ 조사 대상/기간 : 신기술·신제품 인증 취득 중소기업 175개사 / '18.8.~'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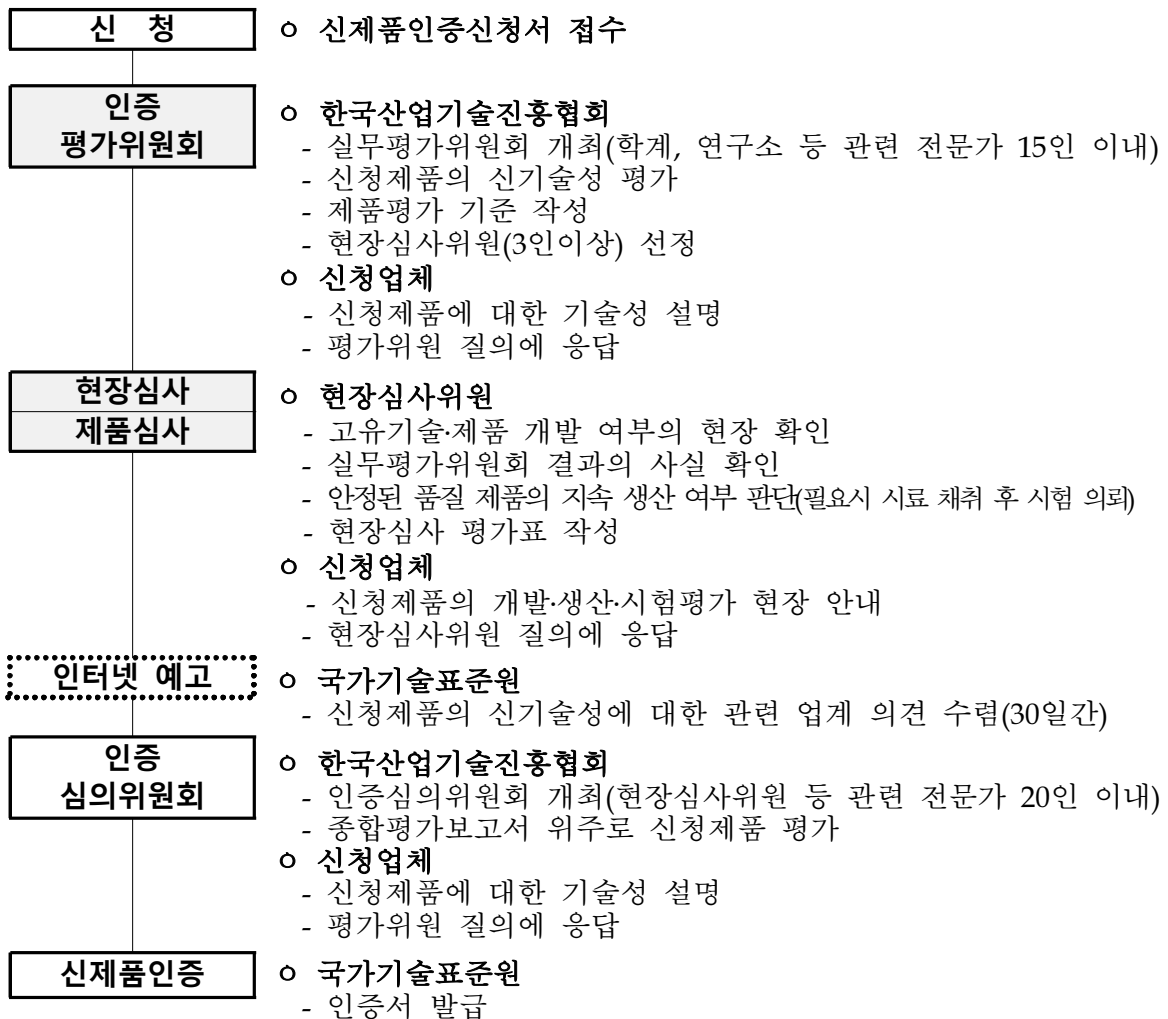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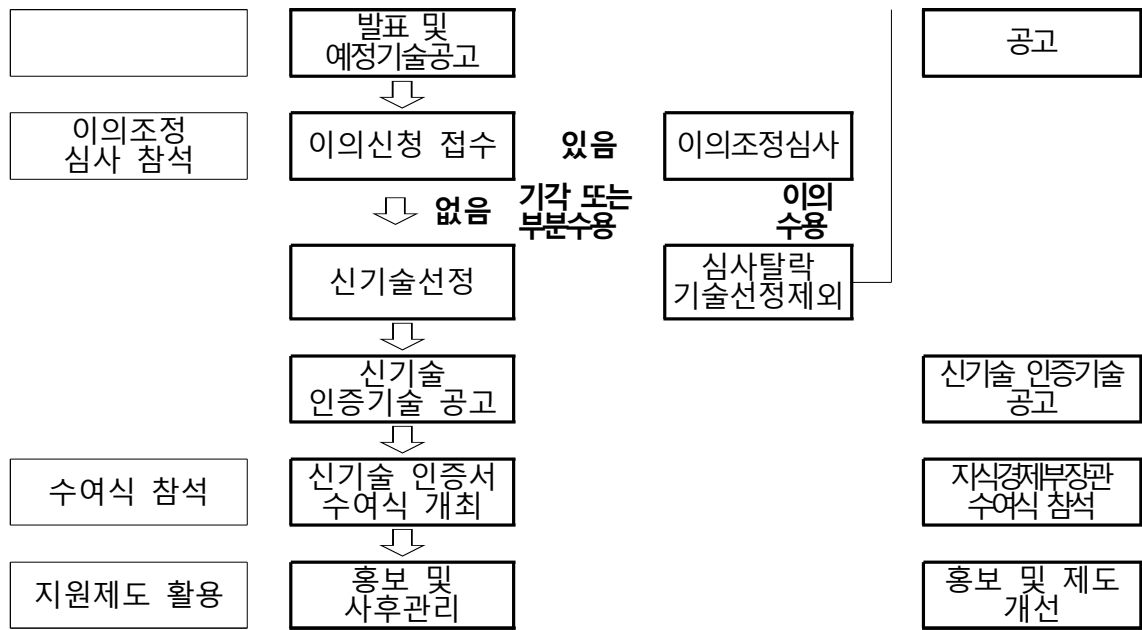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수행기관 공모·선정	국가기술표준원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② 위탁사업비 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모 선정된 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③ 사업 수행	보 조 사 업 자	각 내역사업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④ 사업 점검 및 평가	국가기술표준원	사업 실적 및 집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① NEP인증 집행절차(소요기간 : 9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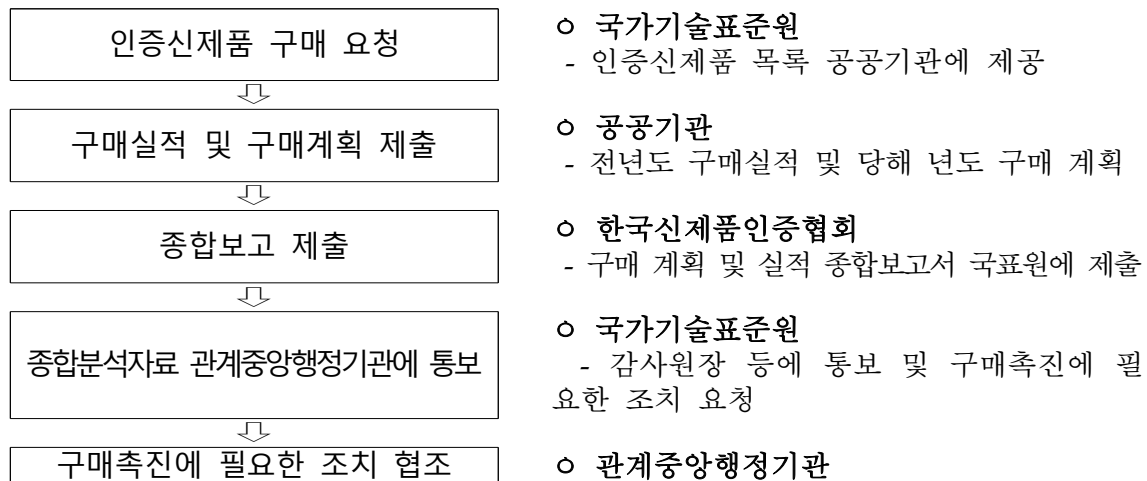


② NET인증 집행절차(소요기간 : 1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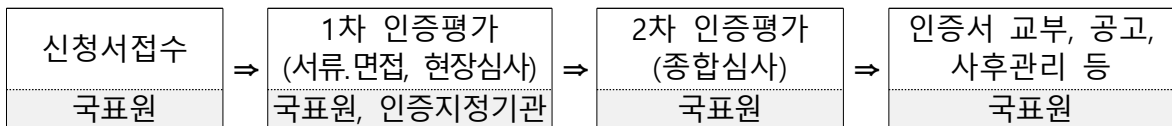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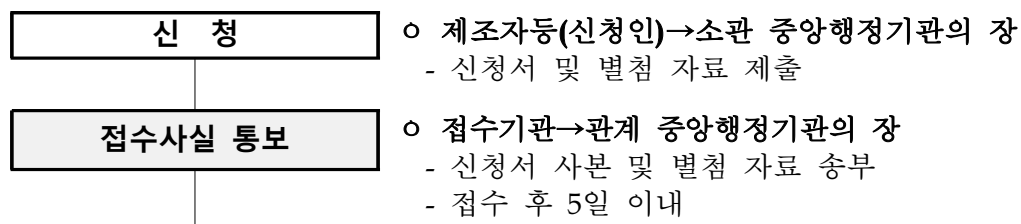
③ 인증제품 판로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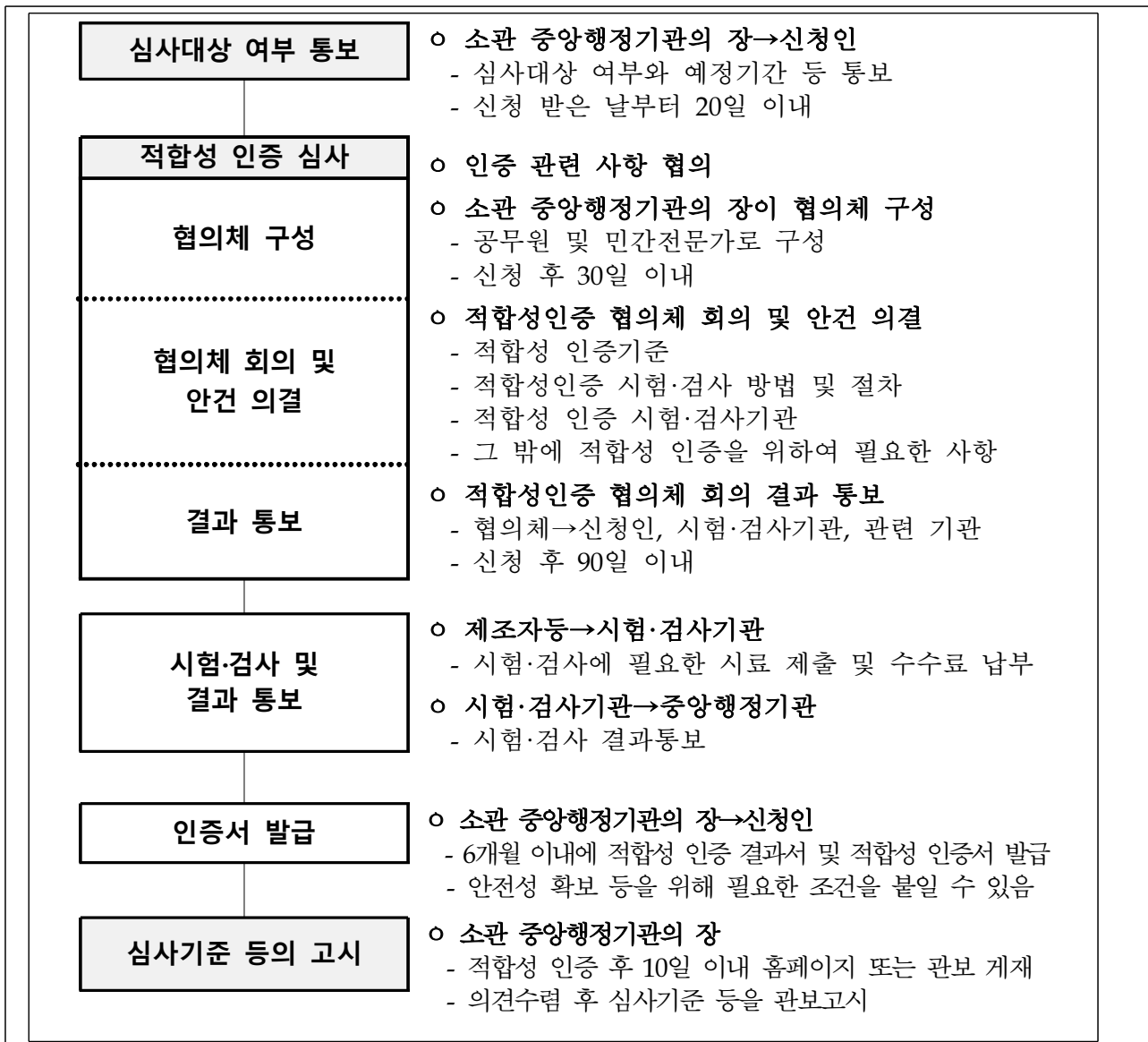


④ GR인증 집행절차 (소요기간 : 90일)



⑤ 산업융합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소요기간 : 6개월)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461	2,734	2,748	6,686	6,819	
2025~2029		2,734	2,748	3,629	3,738	3,85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NET, NEP, GR,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통한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활성화로 기업 경쟁력 강화, 신시장 개척, 고용 창출 등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마련 도모
- 신산업 분야의 NET·NEP 인증품목을 전략적으로 발굴하여 신산업 분야 육성
- 우수 제품 인증을 통해 인증 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의 구매 만족도를 제고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개척 지원
- 탄소중립 실현과 해외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인증기준개발 확대 등 우수재활용제품 인증(GR) 활성화 추진
- 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인증애로 발굴 통로 다각화 및 적합성 인증제도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의 인증 관련 애로지원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보조사업 연장평가('21년)

- 사업방식변경, 79.3점
- 신기술제품 20% 의무구매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동 사업의 예산 대부분이 인증소요 비용인 만큼, 심사절차 개선 등을 통해 소요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 동 사업의 특징점이 혁신조달이라는 점을 감안 공공 구매비율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25년, 보통)

- 공공구매제도를 통한 안정적인 초기시장 형성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기여가 인정
- 사업운영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구매에 대해 온라인 상담, 1:1 구매상담회, 공공기관 책임자 워크숍 등의 대응 노력을 함
- 타 사업과의 연계 노력·실적은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 할 수 있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상황 및 보조금 집행 적정성을 점검하며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예산 집행관리 수행 및 상시점검 수행
 - 매년 사업종료 후 외부전문기관(전문회계법인)에 의해 회계감사 수행으로 집행 적절성 확보
-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 정부 효율성에 대한 관심과 정부혁신 요구가 증대되고, 공공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해 신기술·신제품 및 재활용제품을 공공구매 형식으로 기획·도입·활용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발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요구됨
-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320	-	3,320	-	-	-	3,320	3,320	100	100	-	-
2023	3,425	-	3,425	-	-	-	3,425	3,425	100	100	-	-
2024	2,461	-	2,461	-	-	-	2,461	2,429	98.7	98.7	-	32
2025	2,734	-	2,734	-	-	-	2,734	2,727	99.7	99.7	-	7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3,179	3,179	3,179	3,179		3,179	3,179	-	-	100
2023	3,284	3,284	3,284	3,284	-	3,284	3,284	-	-	100
2024	2,384	2,384	2,352	2,352	-	2,352	2,352	-	32	98.6
2025	2,687	2,687	2,680	2,680	-	2,680	2,680	-	7	99.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2023	-
2024	- 불용 : 32백만원 (민간위탁사업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
2025	- 불용 : 7백만원 (민간위탁사업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참고 1

신제품(NEP) 인증



□ 제도개요

-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인증함으로써, 판로 확대 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
- 신제품인증은 제품인증이며, 최초 개발(개선) 기술을 적용 상용화에 성공하고 동종 제품과 비교하여 성능이 우수한 제품이 인증 요건
- * (근거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등

□ 인증현황

- 인증평가는 3차례 평가(서류→현장→종합)로 구성되며, 획득한 인증은 3년간 유효(3년 연장 가능)

<연도별 신제품(NEP) 인증 현황>

(단위 : 건)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건수	362	50	431	69	424	53	372	57	389	46

< 신제품(NEP)인증 평가 절차(90일 이내) >

신청	→	접수	→	서류면접심사	→	현장심사	→	종합심사	→	인증서 발급
신청인		평가기관		평가기관 (1차심사)		평가기관 (2차심사)		평가기관 (3차심사)		국표원

- * (평가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57조(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공모를 통해 선정한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신제품(NEP)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 수행

□ 주요 지원 제도

- 공공기관 구매 지원(의무구매, 우선구매, 수의계약 등)
- 기술금융 지원 사업, 정부 R&D 사업 신청 시 우대 등

참고 1-1

인증신제품(NEP) 공공구매제도

□ 제도개요

- (의무구매)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NEP제품이 있는 경우 일정 비율(20%)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 (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업부장관 고시에 따른 공공기관(시행령 제22조)

* 의무구매 대상기관 현황 (419개 공공기관, '23년 기준)

(기관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총 계
47(11.2)	243(58.0)	17(4.1)	112(26.7)	419(100.0)

□ 추진현황

- 신제품(NEP) 공공구매 이행 실적 및 구매계획 조사

* 감사원 등 5개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통보,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및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공고 실시, 구매실적 우수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정부 포상 추진

- 신제품(NEP) 공공구매 촉진 홍보 지원

* 신제품(NEP) 공공구매 이행력 제고 및 인증제도 안내를 위한 워크숍, 설명회, 구매상담회, 현장 방문 상담회 등 진행

- (의무구매 현황) '23년 한해 공공기관이 구매한 인증신제품(NEP)의 구매 총액은 3,488억원, 한 개 제품당 평균 구매액은 20.9억원으로 중소기업 신제품의 초기 판로개척에 기여

<연간 의무구매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1년	'22년	증감률	'23년	증감률
NEP제품 구매액	2,441	2,845	16.7	3,488	22.6
품목당 구매액*	15.5	16.7	7.7	20.9	25.1

* 유효인증품목 수 : '20년(131품목) → '21년(157품목) → '22년(170품목) → '23년(167품목)

□ 제도개요

- 국내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의 조기 발굴 및 인증을 통한 신기술 개발 및 개발기술의 상용화 촉진 기반 조성
 - 신기술인증은 기술인증이며, 국내 최초 개발(대체) 기술로써 2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하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 요건
 - * (근거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등
- 신기술인증은 현재 우리부를 포함하여 8개 부처에서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총 11개 분야에 대해서 시행 중
 - * 산업부(산업), 국토부(건설, 교통, 물류), 복지부(보건), 농림부(농식품, 농기계), 산림청(목재), 행안부(방재), 환경부(환경), 해수부(해양수산, 물류)

□ 인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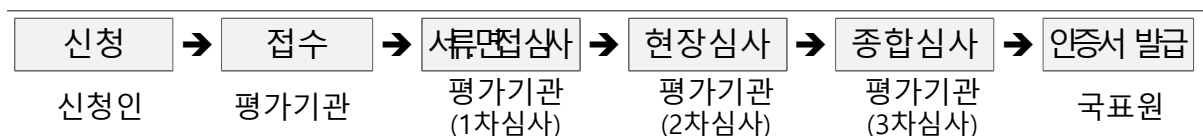
- 인증평가는 3차례 평가(서류→현장→종합)로 구성되며, 획득한 인증은 3년 이내 유효(3년 연장 가능)

<연도별 신기술(NET) 인증 현황>

(단위: 건)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건수	499	86	438	97	533	91	479	68	365	55

<신기술(NET)인증 평가 절차(120일 이내)>



- * (평가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57조(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공모를 통해 선정한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신제품(NEP)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 수행

□ 주요 지원 제도

- 공공기관 구매 지원(우선구매, 수의계약 등)
- 기술금융 지원 사업, 정부 R&D 사업 신청 시 우대 등

참고 3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 제도개요

- 국내 폐자원을 주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인증 제도로 재활용 산업 발전을 통한 탄소중립·순환경제 실현
 - 재활용 원료 사용, 제품 품질의 우수성, 품질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품질의 재활용제품에 GR 인증을 부여하고 판로 등을 지원
- * 예) 재생신문용지 : 폐지 40%이상 사용, 재활용 플라스틱제품 : 폐플라스틱 80%이상 사용
- (근거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및 시행령 제17조제1항의3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생산되는 산업기술혁신·재활용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

「재활용촉진법」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의무 대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표지인증, 2. 환경성적표지인증, 3. 우수재활용제품인증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 예) GR 인증 인쇄용지(GR M 7002) 국정교과서 납품 등

□ 인증현황

- '97년 대통령주재 “긴급경제장관회의”에서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도를 통산부(현 산업부)로 추진한 후, 국립기술품질원(현 국표원)에 위임
 - * '97.10월 GR 제1997-01호 대한제지 전자복사용지 등 7건 최초인증
- ('24년) 재활용 종이팩류, 양극재 분말에서 추출되는 원료에 대한 신규품목 발굴(26건) 및 폐배터리 재활용 황산코발트 등 품질인증 기준 재·개정(7건)
 - * (누적) 18개 분야 359품목 지정, 279개 품질인증기준 제정

□ 목 적

- (순환경제 실현)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경제 실현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0)」, 「K-순환경제 이행계획(‘21.12)」 등 자원의 재활용 및 재생원료 이용 확대 강조
 - GR 인증을 통해 철강산업 등 탄소 多배출 기업의 ESG 경영 지원
 - * 철강산업 온실가스 배출량('19) : 1.17억톤(국가배출량의 17%, 산업부분의 30% 차지)
- (재자원화) 자원 재활용 기술혁신을 통한 천연자원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실현하여 국부유출 방지에 기여
 - 폐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미래 폐자원에서 금속물질 추출 → 고순도 배터리소재로 재활용
 - * 폐배터리 물질 재활용을 위한 표준물질, 시험방법 개발 및 GR 인증기준 마련 필요
- (해외환경규제 대응) 핵심 순환자원 수출기업 해외규제 대응 지원을 위한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 활성화 추진
 - 배터리 재생원료 원자재 등 EU배터리규정 內 순환자원 관련 규제 대응 기준 제·개정
 - * 재생원료 의무사용 최소기준(코발트 16%, 납 85%, 리튬 6%, 니켈 6%), 폐배터리 생산 자책임 재활용 의무 조항 등
 - 재활용제품* 제조공정의 전과정 탄소배출량 및 감축효과 산정 방법론 개발 중
 - ☞ 페플라스틱 등 쏘분야 표준화 확대 및 단계별 배출량 및 원인 분석을 통한 탄소감축 방법론 지속 개발
 - * 페플라스틱 열분해유, 산업용 PET 플레이크, 종이팩 재활용 펄프 표준화 예정('24)

참고 4

재제조제품 품질인증(REMAN)

□ 현황

- (사업개요) 재제조 부품의 신뢰성 향상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08년에 국가 품질인증 제도 도입, 국표원에서 제도 운영 중('06년 시행)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사업>

- ▶ 【인증분야】 자동차, 전기·전자, 건설·산업기계의 3개 분야로 구분·운영
 - ▶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산업부 산업환경과)
 - ▶ 【유효기간】 최초 인증시 4년 + 유효기간 연장시 4년
 - ▶ 【운영주체】 산업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제도운영·관리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수행
- ※ ①평가·심사업무(자원순환산업인증원), ②전문연구 및 인증지원(청정생산지원센터)

- (인증현황) '08년 이후 인증실적은 연평균 4건, 총 68건 인증完

<연도별 재제조 품질 인증 현황>

구분	'08 ~ '19	'20	'21	'22	'23	'24	계
인증(건)	33	4	12	8	3	8	68

* '24.1월, 유효 품질인증 : 총 24개(자동차 11, 전기전자 13)

- (인증기준 현황) 총 51건의 인증기준 제정(자동차 36, 전기·전자 9, 건설기계 6)

<연도별 재제조 품질 인증기준 현황>

구분	'08 ~ '16	'20	'21	'22	'23	'24	계
기준제정(건)	45	3	-	6	-	-	51

□ 관련 법령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24조 등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235호)

□ 인증제도 운영

- 품질인증기준 제·개정, 품질인증평가 등 :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
- 재제조 제품 품질의 평가방법 및 기준 개발 : 생기연 청정생산지원센터

□ 인증제품의 지원

- 녹색구매법(약칭) 제2조제2호에 의한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요청可

참고 5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다부처 규제개선 제도]
先적합성인증, 後표준제개정

- **(배경)** 초격차 기술 선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융합 신제품은 기존 기준에 맞지 않아 초기 시장진출 어려움* 발생

* 기준 제개정 평균 2~3년 소요 ⇨ 적시 국내외 시장 출시 실패 ⇨ 글로벌 선점 실패*

※ 수출국 기술기준 부재 시, 수출국에서 국내인증 취득 여부 및 판매실적 확인

사례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 기존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PEMFC) 대비 효율이 40%이상 향상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기술 개발
애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분야 한국산업표준(KS) 부재
성과 적합성인증 획득(KS마크 부착) ⇨ 사업화 성공 ⇨ 표준 개정



- **(법령)**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 **(특징)** 융합 제품에 적합한 별도 인증기준을 신속 제정(90일, 소관부처), 심사 후 기존 인증(KS·KC 등)과 동일 효력의 적합성인증 부여(6개월)
- **(신청대상)** 시장진출 시 필요한 기존 인증(KS, KC 등)에 맞지 않아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개발완료 단계의 산업융합 신제품
 - **(지원내용)** 국내외 시장출시에 요구되는 안전성 및 성능 확보를 위해 전문가협의체를 통해 제품별 인증·심사기준 제정* 지원
- * 제정된 적합성 인증기준은 소관부처에서 유사제품 및 기존 인증 제개정 시 활용
- **(인증효과)** 인증규제 해소 ⇨ 시장 출시 ⇨ 기존 인증 제·개정(규제개선) 촉진

주체	신청인	소관부처*			시험기관	소관부처		
기한	D-day	~D+2주	~D+30일	~D+90일	60일(+α)	~D+6개월	10일	-
절차	신청	대상여부 통보	협의체 구성	기준 제정 (협의체회의)	인증심사 (시험·검사)	인증결과통보 (인증서)	인증결과 공고	행정예고 및 기준 고시

- **(현황)** 법시행('11.10) 이후, 산업융합 신제품 시장출시에 대한 애로사례 발굴 530건('14년~'24년) 중 494건의 애로해소 완료
- 494건 중 137건이 적합성 인증을 접수하여 인증 부여 49건 (누적 인증률: 36%), 진행 중 8건, 신청철회 등 종결 37건
- * 인증접수(최근 5년) : ('20) 18, ('21) 4, ('22) 4, ('23) 6, ('24) 52건

- **(인증활성화)** 인증수요 본격 확대를 위한 국표원 차원의 활성화 추진 중
- **(24년)** 「적합성인증 제도 수요확대 방안(24.10)」 수립 후 「인증닉네임 (융합특레인증)」 도입 및 「'24년 인증기업 인증서 수여식」 개최(24.12) 등

융합특레인증 인증서 수여식 개최
- 인증기준 부재했던 3개 융합신제품의 시장출시·수출에 날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권용욱)은 12월 18일(수) 「융합특레인증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융합특레인증은 기술기준이 부재한 융합신제품에 대해서 새로운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시험·평가를 통해 최단하는 인증을 조기에 부여함으로써 제품이 적기에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기존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의 약칭

이번에 융합특레인증 인증서를 취득한 3개의 융합신제품은 다음과 같다.

- ① LED 전입과 저시동(냉장전류) : LED 광원을 활용한 항공기 콕핏 저시동으로써 기존 할로겐 광원 제품보다 내구성, 시인성 및 에너지 효율효과가 뛰어나지만, 기술기준 부재로 KS인증 받음 수 없어 시장 출시에 애로 겪고 있었으나 이번에 융합특레인증(KS인증과 동일효과)을 확보함으로써 국내공항 설치뿐만 아니라 인도-유럽공동 등 해외 공항으로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 * 국내 주요공항 및 해외 공항(인도, 몰디브, 튀르키예 등) 계약 추진 중
- ② 온수관 내 냉수 결빙이 가능한 속설 수도꼭지(냉열회수장치) : 현행 속설 수도꼭지 기술기준이 냉·온수 조절 기능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미온수 배수 기능이 추가된 해당 제품은 KS를 받을 수 없었으나, 새로운 인증기준 마련과 인증 취득으로 국내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 설치 가능해졌으며, 가정에서 버려지던 미온수 수돗물 일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25년 4월 제2차 개정된 아파트 건설 현장 공급 추진 중
- ③ 선반 높이가 조절되는 가경용 사다리(세이벨레터) : 기존 제품에는 없던 선반 높이 조절기능을 추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C인증기준 부재로 국내시장 출시를 물론 해외수출에도 난항을 겪었으나, 이번 인증 취득을 통해 국내시장 출시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시장 진출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 미국 CES 2025 전시회 참가 후 미국, 캐나다, 유럽 등 해외시장 공략계획 추진 예정

장상용 적합성정책국장은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융합 신제품이 시장까지 않고 적기에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합한 인증기준 마련 등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공공구매제도와 연계한 초기 판로개척 지원과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이름, 융합특레인증으로 한 발 더 다가갑니다.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의 핵심을 담은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십시오.

융합특레인증으로, 기업 혁신을 더 빠르게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융합특레인증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혁신성과 우수성이 뛰어난 융합신제품들이 융합특레인증을 통해 인증의 벼를 넘어선 만큼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으로의 활발한 진출이 기대됩니다.

- **(23년)** 「적합성인증 단기 인증수요 확대방안(23.11)」 수립 및 적합성 인증 운영에 관한 「국표원-시험기관(9개) 상호협력 MOU 체결(23.12)」

「적합성인증」 단기 인증수요 확대방안 세부 추진계획(안)
- '23. 11. 24(금), 인증산업진흥과 -

세부 추진계획(안) 개요

- **(인증절차 개선 : 현원료)** 품목별로 분산된 소관업무를 단일부서로 일원화
 - 현재 인증신청 대기(4~5주)를 신속 신청처리 예정(12월초)
- **(절차개선)** 신규 신청·접수 전·후부터 인증산업진흥과에서 주관·확대 운영하되, 협의체 구성 및 인증기준 개발단계에서 타켓인증 소관과 업무 협조
 - * 기존 신청·접수 전은 기존 소관과에서 심사완료 후 인증산업진흥과로 이관 조치
- **(공공조달 연계 강화 : 협의체)** 혁신조달, 조달우수 관련 소관부처·산업부 상임 기술시장혁신과,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협의 → 조달정책심의위 심의·의결 추진
 - (혁신조달)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조(정의) 「혁신제품에 적합성 인증제품 포함(신규 추가 또는 4회 인정)」
 - (조달우수) 「우수조달제품 지정 관리 규정」 [별표1] 나. 신청제품 4. 기술설명 자료 또는 「품절소명자료(시험성적서 제출 포함)」로 인정
- **(협력체계 구축 : 협의체)** 안정적 수요 발굴을 위해 관련기관간 상호협력 체계 및 인증 관리시스템 구축 → 적합성인증 공동운영 협력기반 마련
 - (상호협력체계) 우리원과 KTL, KTR, KTC, KCL, KATRI, FITI, 에너지공단, 표준협회 등 8개 시험·지원기관 및 운영기관(생기화)과 협력 MOU 체결(12.19)
 - * 융합신제품 인증 수요·애로 발굴, 제도 운영 및 개선 협력, 제도 활성화 협력 등
 - (인증관리시스템) 적합성 인증제품 현황(인증유료 여부, 적합성 인증기준 등), 인증절차 예로 지원,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적합성인증 관리시스템」 구축
 - * '24년 신기술인증제도사업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지원」 내역사업 중(12.04~12.31)에 포함
- **(수요발굴 홍보 확대)**
 - 인증 지원제도 운영기관, ■ 시험기관 및 ■ 우수기업별 전방위 제도 홍보 실시 → 홍보를 통한 인증활용도 확대
 - (타 인증·지원제도) 적합성 인증성과(적합성 인증기준, 인증서) 활용성 제고를 위해 타인증·지원제도 담당자 대상 제도 안내 및 유관기관(TP 등) 합동 설명회 개최
 - * NEP인증, 성능인증, 다수인증원스마트서비스, 1381 센터 등
 - (시험기관) KS KC 시험기관의 시험담당자 및 R&D 참여자 등에게 「적합성인증 활용 기회」 안내를 위한 순회 설명회 개최
 - (우수기업) 분야별 우수·융합기업 대상 제도 안내 및 상담회 개최
 - * '24년 코리아 나비잡터 엑스포, 대한민국 신기술 R&D 대전 등 참가기업

1 적합성 인증절차 일원화 → 인증산업과가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품목별로 분산된 소관업무를 단일부서로 일원화하여 인증절차 단순화

□ **현황** → 인증 연계 지원 및 인증 피로감 가중으로 인증수요 감소

- **(인증 연계 지원)** 사전 검토회의(주관: 소관과) 대폭 축소와 장기간 사전 검토로 인해 인증 연계 지원
 - * 수요 대비 사전회의 비율: (19) 75.8% → (20) 60.9% → (21) 34.3% → (22) 6.2% → (23) 1.8%
- **(인증 피로감 가중)** 인증절차별 분산된 소관과의 반복 검토 및 결정 지연 등으로 인증 피로감 가중

인증 절차

현황

수요발굴

신청 접수 및 대상 여부 통보

협의체 구성 및 기준 개발

인증심사 (시험기관)

적합성 인증서 발급

인증 결과 공고 및 기준 고시

사후관리

소관과(운영팀, 표준과, 안전과 소관과, 산업정책혁신과)

□ **세부 추진내용 및 일정**

◆ 신규 신청·접수 전·후부터 인증산업진흥과에서 주관·확대 운영하되, 협의체 구성 및 인증기준 개발단계에서 타켓인증 소관과 업무 협조

- * 기존 신청·접수 전은 기존 소관과에서 심사완료 후 인증산업진흥과로 이관 조치

< 인증산업진흥과 주관 확대·운영방안 >

- (사전검토 단계)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극적지원 통해 인증절차 확대
- (협의체 운영단계) 기업 심사 부담 완화를 위한 중대심사 면제 논의 등

세부 추진내용		추진일정
① 인증절차별 소관과 업무 이관(소관과 → 인증과)		완료
② 인증신청 대기(5주) 신속 신청(인증과)		12월(4주) '24.1월(1주)
③ 인증절차별 운영 및 인증기준 개발 등 본격 운영(인증과)		'24.1월~

사 업 명
(3) 국제표준활동지원 (37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기술표준원		110	117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표준정책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2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국제표준활동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국제표준협력과	배진석 과장		성시균 연구사
국제표준 활동지원			043-870-5350		043-870-5358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국제표준활동지원	3,177	3,558	3,558	3,173	3,173	△ 385	△ 10.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232	3,232	3,177	-	55.4	3,558	3,558	3,387	3,558	3,387	-	171	3,173	
· 국제표준화회의 개최·지원	655	655	654.6	-	0.4	1,040	1,040	1,031	1,040	1,031	-	9	655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184	184	182	-	2	184	184	184	184	184	-	-	184	
· 사실상표준포럼 지원	534	534	525	-	9	500	500	495	500	495	-	5	500	
· 국제표준화선도 정책연구	100	100	95	-	5	100	100	96	100	96	-	4	100	
· 국제의장·간사활동 지원	1,159	1,159	1,139	-	20	1,234	1,234	1,103	1,234	1,103	-	131	1,234	
· 한·아세안 표준협력	600	600	581	-	19	500	500	478	500	478	-	22	500	
○ 비목별 분류(합계)	3,232	3,232	3,177	-	55.4	3,558	3,558	3,387	3,558	3,387	-	171	3,173	
· 일반수용비 (210-01)	144.5	144.5	144.3	-	0.2	144.5	144.5	144.5	144.5	144.5	-	-	144.5	
· 임차료(210-07)	462	462	461.9	-	0.1	462	462	461	462	461	-	1	462	
· 일반용역비 (210-14)	-	-	-	-	-	385	385	377	385	377	-	8	-	
· 국외업무여비 (220-02)	184	184	182	-	2	184	184	184	184	184	-	-	184	
· 사업추진비 (240-01)	43.5	43.5	43.5	-	-	43.5	43.5	43.5	43.5	43.5	-	-	43.5	
· 일반연구비 (260-01)	1,234	1,234	1,201	-	33	1,100	1,100	1,069	1,100	1,069	-	31	1,100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159	1,159	1,139	-	20	1,234	1,234	1,103	1,234	1,103	-	131	1,234	
· 자산취득비 (430-01)	5	5	4.9	-	0.1	5	5	5	5	5	-	-	5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232	3,232	3,177	-	55.4	3,558	3,558	3,387	3,558	3,387	-	171	3,173	
· 국제표준화회의 개최·지원	655	655	654.6	-	0.4	1,040	1,040	1,031	1,040	1,031	-	9	655	
- 일반수용비 (210-01)	144.5	144.5	144.3	-	0.2	144.5	144.5	144.5	144.5	144.5	-	-	144.5	
- 임차료(210-07)	462	462	461.9	-	0.1	462	462	461	462	461	-	1	462	
- 일반용역비 (210-14)	-	-	-	-	-	385	385	377	385	377	-	8	-	
- 사업추진비 (240-01)	43.5	43.5	43.5	-	-	43.5	43.5	43.5	43.5	43.5	-	-	43.5	
- 자산취득비 (430-01)	5	5	4.9	-	0.1	5	5	5	5	5	-	-	5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184	184	182	-	2	184	184	184	184	184	-	-	184	
- 국외업무여비 (220-02)	184	184	182	-	2	184	184	184	184	184	-	-	184	
· 사실상표준포럼 지원	534	534	525	-	9	500	500	495	500	495	-	5	500	
- 일반연구비 (260-01)	534	534	525	-	9	500	500	495	500	495	-	5	500	
· 국제표준화선도 정책연구	100	100	95	-	5	100	100	96	100	96	-	4	100	
- 일반연구비 (260-01)	100	100	95	-	5	100	100	96	100	96	-	4	100	
· 국제의장·간사활동 지원	1,159	1,159	1,139	-	20	1,234	1,234	1,103	1,234	1,103	-	131	1,234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159	1,159	1,139	-	20	1,234	1,234	1,103	1,234	1,103	-	131	1,234	
· 한·아세안 표준협력	600	600	581	-	19	500	500	478	500	478	-	22	500	
- 일반연구비 (260-01)	600	600	581	-	19	500	500	478	500	478	-	22	5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국제표준화 활동 및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표준 협력·대응 체계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기업·제품의 수출경쟁력 제고, 무역기술장벽(TBT) 해소, 신산업·기술 핵심 분야 표준 선점 등 전략적 표준외교 추진 및 수행

-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지원)** ISO/IEC 정회원국으로서 국제회의(기술위원회 총회 등) 유치 및 개최, 국제표준화 대응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입지 구축을 통해, 국내 기술·제품 국제표준 제안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와 협력 확보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우리 정부대표단의 국제표준화기구·지역협력기구 등 국제기구 회의(기술위원회·포럼·세미나 등) 참가를 통해, 국제표준 제안·협의, 양자/다자 간 표준협력 강화 등 글로벌 표준화 협력·대응 체계 구축
 - **(사실상표준포럼 지원)** 급변하는 시장의 요구사항 및 기술의 발전 등으로 사실상 표준 규격*의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사실상표준화기구별 포럼/컨소시엄 구성, 전문가 인력풀 확보 등의 대응·협력체계를 구축을 통해 신산업 및 주력사업 관련 핵심기술 국제표준화 선점, 국내기업 대응 역량 제고 등 추진
- * 사실상 표준 : 빠르게 다양화, 융합화, 고도화되는 산업과 기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정 산업 분야의 구성원(개인 혹은 기업·단체)을 중심으로 제정된 민간부문 표준규격
- **(국제표준화 선도 정책연구)**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24.5월, 국표원)」 등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표준화기구 대응 방안, 핵심 산업분야 국제표준화 전략 도출 등의 정책 수립 기반 자료 조사·연구 수행
 - **(국제 의장·간사활동 지원)** 국제표준화기구 임원(의장, 간사, 컨비너 등 직책 수임 인원) 등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을 통해, 표준화기구 내 영향력 확대 및 표준외교 역량을 확보하여 국제표준 제안·선점, 상임이사국 진출 등 추진
 - **(한-아세안 표준협력)** 한-아세안 공동 표준개발 및 전략적 표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표준을 아세안으로 보급·확산하여, 각 국가 간 상이한 표준으로 발생하는 기술장벽을 사전 해소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원활한 아세안시장 진출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표준기본법 >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산업표준화법 >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국제표준의 조사·연구·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 WTO/TBT 협정 >

- 제2조, 제4조, 제5조 - WTO 회원국의 국제 표준화 및 적합성 활동 명시
- 제10조, 제11조 - WTO 회원국 간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② 추진경위

- '95년, WTO 출범에 따라, 자국의 기술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등록하여 세계시장 진출과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려는 세계 각국의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할 필요성 증대
- '02년, 국내 국제표준화 활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정책위원회, 기술위원회 등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동 사업을 추진
- ISO·IEC의 국제표준화는 회원국간 합의와 투표(1국 1투표권)로 진행되며, 기술위원회(TC), 분과위원회(SC), 작업반(WG) 회의를 통해 각국 전문가가 참여하여 논의하는 과정(약 3~5년)을 거치므로 국제표준의 제안뿐만 아니라, 회원국 간 지지·협력도 중요
- '17년도,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 산업 경쟁력 증가에 대하여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추진
- '19.4월,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과 '19.6월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을 마련하여 스타트업·중소기업 등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 * DNA, Big3 등 핵심분야에서 '23년까지 국제표준 300종 제안, 의장단 60명 확대

- '20.6월,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해 「K-방역 3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을 발표, '20~23년까지 18종을 국제표준 제안 추진
- '21.2월, 우리산업의 글로벌 시장경쟁력 강화, 신시장 창출을 위해 산업별 저탄소 기술, 시험평가 등에서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표준화 추진
- 반도체, 배터리, 자율차 등 시장환경이 급변하는 분야의 사실상 표준활동 지원을 통해, 국제표준 선점으로 수출경쟁력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추진
 - '22.1월, 사실상표준화기구와의 파트너십 형성 및 국내창구 단일화로 사실상 표준화활동 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실상표준포럼운영 추진('22.1.1.)
-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표준외교 역량 강화 기반 마련
 - '22.9월,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 당선(임기 '24~'25년도) 및 '23.9월 ISO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국 진출, '23.10월 IEC 이사국 진출, 이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에 주도적 참여를 통해 표준강국으로의 기반 마련
- '23.8월, '한-미 표준협력 포럼' 개최를 통한, 핵심·신흥기술분야 미래지향적 표준 파트너십 구축
- '24.2월, 양자기술 공동기술위원회(JTC3) 신설 및 의장국 수임, '24.3월 영국 표준협회(BSI)와 양자기술분야 MoU 체결
- '24.5월,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안한 중전압직류(MVDC) 배전망 기술이 IEC 미래 표준 백서 주제로 채택, '24.10월 기술위 신설 제안 등을 통해 향후 국제표준화에 주도적이고 유리한 입지 확보
- '24.6월, 한-미 표준협력 포럼 개최, 국표원-NIST 표준협력활성 MoU 체결
- '24.11월, 한-아세안 표준협력 네트워크(AKSCN) 출범 및 공동 워크숍 개최
- '25.8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 및 AI 표준 콘퍼런스 개최
- '25.12월, 제1회 국제AI표준서밋 ISO·IEC·ITU와 공동 개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497 (2,482)	3,052	3,232	3,558	3,17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공모사업자
- 사업 수혜자 : 국내 기업 및 소비자(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제표준화회의 개최지원

- : ('25) 1,040백만원 → ('26) 655백만원, (385백만원 감액)
- 국제표준회의(총회·기술위원회(TC)·분과위원회(SC) 등) 유치·개최 비용, 국제표준활동 지원 등을 위한 예산 반영
- (산출) 655백만원
 - 회의장 임차비 : 약 22회 x 21백만원(1회 평균 임차비용) = 462백만원
 - * ('24-25) 1회 평균 행사장 임차 21백만원 소요
 - 통역비 및 자료 구비·인쇄 등 : 연평균 소요 약 30건 x 평균 단가 약 3.5백만원 = 104.5백만원
 - 주요 표준기관(ASTM, ASME, DIN 등) 표준자료 구입비 등 : 40백만원
 - 회의 준비·운영 장비(노트북 등) : 5백만원
 - 국제회의 개최 시 업무 협력비 : 43.5백만원 (조정 : △0.5백만원)

②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 : ('25) 184백만원 → ('26) 184백만원, (전년동)
- 우리 정부대표단의 국제표준회의(총회·기술위원회(TC)·분과위원회(SC) 등), 양자·다자간 표준협력 활동 참석 및 수행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
- (산출) 184백만원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 약 42회 x 4.4백만원(1회 출장여비) = 184백만원

③ 사실상표준포럼 지원

- : ('25) 500백만원 → ('26) 500백만원, (전년동)
- 사실상표준 동향 파악 및 대응 포럼 운영, 사실상 표준 제안 등 대응·협력체계 구축하여 국내 산업계 대응 역량 제고하고자 예산 반영
- (산출) 500백만원
 - 포럼사무국 운영 : 전문가활용 및 위원회 운영 60백만원 + 운영·관리비(여비, 통신비, 유인물 비 등) 5백만원 = 65백만원
 - * 전문가 활용 회의비 : 150,000원(국표원 전문가 회의수당 기준 책정) x 10인 x 15회 = 22.5백만원
 - * 사무국 및 위원회 운영 : 운영인원 2인 x 3.1백만원 x 12개월 x 참여율 50% = 37.5백만원
 - 사실상표준 개별 포럼 구성·운영 : 사실상 표준규격·기구 대응 9개 분야 x 45.5백만원 = 410백만원
 - 회의(간담회, 자문회의 등) 및 컨퍼런스 총회 임차료 : 25백만원

④ 국제표준화 선도 정책연구

- : ('25) 100백만원 → ('26) 100백만원, (전년동)
- 국제표준화기구 정책 대응, 신기술·산업 핵심 분야 국제표준화 전략 도출, 국제표준 동향 및 국제표준화 협력 방안 조사·연구를 위한 예산 반영
- (산출) 국제표준 대응 정책·전략 조사연구 : 3건 x 약 33.3백만원 = 100백만원

⑤ 국제 의장·간사활동 지원

- : ('25) 1,234백만원 → ('26) 1,234백만원, (전년동)
-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직책 수입 인원(의장·간사·컨비너)의 국제표준회의(기술위원회(TC)·분과위원회(SC)·워킹그룹(WG) 등) 참가,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표준활동 지원 등을 위한 예산 반영
- (산출) 1,234백만원

- 국제의장·간사·컨비너 활동 지원 : 약 228회 x 4.4백만원 = 1,003백만원
- * ('25) 국제표준화기구 수임 인원 : 약 280명
(인당 연평균 1-2회의 국제표준회의 참가, 이를 고려한 예산 필요)
- ISO 회장 고문 출장 지원 : 3회 x 15백만원 = 45백만원
- 전문간사 인건비 : 5명 x 3.1백만원 x 12개월 = 186백만원

⑥ 한-아세안 표준협력

: ('25) 500백만원 → ('26) 500백만원, (전년동)

- 한-아세안 공동 표준개발 및 협력 플랫폼을 통해 국내 표준을 아세안으로 보급·확산하여, 국가 간 상이한 표준으로 발생하는 기술장벽을 사전에 해소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원활한 아세안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
- (산출) 한-아세안 표준협력 500백만원 : 4개 분야 x 125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558 백만원	<p>○ 일반수용비(210-01) : 144,500천원</p> <p>가 통역비, 자료인쇄 등(105,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회×3,500천원= 105,000천원 <p>나. 주요국 표준 기관(ASTM, ASME, DIN) 자료구입 등(4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 기관×5,000천원= 40,000천원 <p>다. 조정재원(△500천원)</p> <p>○ 임차료(210-07) : 462,000천원</p> <p>가. 국제표준화회의 국내 개최(462,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개최 행사장 임차 21,000천원×22회= 462,000천원 <p>○ 일반연구비(210-14) : 385,000천원</p> <p>가. 행사장 임차료(197,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구성 152,000천원 • 동시통역 기자재 20,000천원 • 영상음향장치 25,000천원 <p>나. 연사초청 여비(27,000천원)</p> <p>다. 행사운영대행 및 진행요원 활용 비용(146,000천원)</p> <p>라. 책자인쇄 등 비용(5,000천원)</p> <p>마. 기타 경비(10,000천원)</p> <p>○ 국외업무여비(220-02) : 184,000천원</p> <p>가.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및 국제기구 표준협력(184,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400천원×42명= 184,800천원 <p>나. 조정재원(△800천원)</p> <p>○ 사업추진비(240-01) : 43,500천원</p> <p>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 관계자와 간담회(14,5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품 구입 등 : 30천원×200개= 6,000천원 • 오·만찬비 등 : 85천원×100명= 8,500천원 <p>나. 국제표준화 참가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14,5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품 구입 등 : 30천원×200개= 6,000천원 • 오·만찬비 등 : 85천원×100명= 8,500천원 <p>다. 국제표준화회의 국내개최 관련 간담회 개최(14,5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만찬비 50천원×100명×2회= 10,000천원 • 기념품 45천원×100명= 4,500천원 	3,173 백만원	<p>○ 일반수용비(210-01) : 144,500천원</p> <p>가 통역비, 자료인쇄 등(105,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회×3,500천원= 105,000천원 <p>나. 주요국 표준 기관(ASTM, ASME, DIN) 자료구입 등(4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 기관×5,000천원= 40,000천원 <p>다. 조정재원(△500천원)</p> <p>○ 임차료(210-07) : 462,000천원</p> <p>가. 국제표준화회의 국내 개최(462,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개최 행사장 임차 21,000천원×22회= 462,000천원 <p>○ 국외업무여비(220-02) : 184,000천원</p> <p>가.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및 국제기구 표준협력(184,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400천원×42명= 184,800천원 <p>나. 조정재원(△800천원)</p> <p>○ 사업추진비(240-01) : 43,500천원</p> <p>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 관계자와 간담회(14,5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품 구입 등 : 30천원×200개= 6,000천원 • 오·만찬비 등 : 85천원×100명= 8,500천원 <p>나. 국제표준화 참가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14,5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품 구입 등 : 30천원×200개= 6,000천원 • 오·만찬비 등 : 85천원×100명= 8,500천원 <p>다. 국제표준화회의 국내개최 관련 간담회 개최(14,5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만찬비 50천원×100명×2회= 10,000천원 • 기념품 45천원×100명= 4,500천원 <p>○ 일반연구비(260-01) : 1,100,000천원</p> <p>가. 국제표준화 선도 정책연구(10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건 × 33,000천원= 100,000천원 <p>나. 사실상표준포럼 지원(50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럼사무국 운영 : 65,000천원 • 사실상표준 개별 포럼 구성운영 : 6분야 x 68,300천원 = 410,000천원 • 회의(간담회, 자문회의 등) 및 컨퍼런스 총회 임차료 : 25,000천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p>○ 일반연구비(260-01) : 1,100,000천원</p> <p>가. 국제표준화 선도 정책연구(10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건 × 33,000천원 = 100,000천원 <p>나. 사실상표준포럼 지원(50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럼사무국 운영 : 65,000천원 사실상표준 개별 포럼 구성운영 : 6분야 × 68,300천원 = 410,000천원 회의(간담회, 자문회의 등) 및 컨퍼런스 총회 임차료 : 25,000천원 <p>다. 한-아세안 표준협력(50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개 분야 × 125,000천원 = 500,000천원 <p>라. 조정재원 (+3,000천원)</p> <p>○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234,000천원</p> <p>가. 국제의장.간사.컨비너 출장지원(822,8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7명 × 4.4백만원 = 822.8백만원 <p>나. 전문간사 인건비(186,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명 × 3.1백만원 × 12월 = 186백만원 <p>다. ISO회장 출장지원(225,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회 × 15백만원 = 225백만원 <p>라. 조정재원 (+200천원)</p> <p>○ 자산취득비(430-01) : 5,000천원</p> <p>가. 국제표준화회의 지원장비 구축(5,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장비 구축 : 5백만원 × 1회 = 5백만 		<p>다. 한-아세안 표준협력(50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개 분야 × 125,000천원 = 500,000천원 <p>○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234,000천원</p> <p>가. 국제의장.간사.컨비너 출장지원(1,003,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8회 × 4.4백만원 = 1,003백만원 <p>나. 전문간사 인건비(186,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명 × 3.1백만원 × 12월 = 186백만원 <p>다. ISO회장 고문 출장지원(45,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회 × 15백만원 = 45백만원 <p>라. 조정재원 (+200천원)</p> <p>○ 자산취득비(430-01) : 5,000천원</p> <p>가. 국제표준화회의 지원장비 구축(5,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장비 구축 : 5백만원 × 1회 = 5백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표준화기구 (ISO/IEC) 기술위원회 P멤버 가입수 (단위: 건, 누적)	목표	735	738	740	742	750	국제회의 참석 예산 증감분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목표설정	$\sum B$ (B: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P멤버 가입수)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 통계자료
	실적	736	742	745	748	-			
	달성도	100	100	100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 81건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가입 : ISO 71.4%(578개), IEC 73.8%(158개) ▪ 국제표준화 투표 처리 : 11,296건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 82건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가입 : ISO 70.5%(582개), IEC 73.7%(160개) ▪ 국제표준화 투표 처리 : 10,796건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 93건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가입 : ISO 70.5%(593개), IEC 71.4%(162개) ▪ 국제표준화 투표 처리 : 12,466건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 78건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가입 : ISO 73.1%(604개), IEC 70.4%(162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국제표준화활동 증대에 따른 표준역량 제고 기대

- ISO 발표, '24년도 대한민국 국제표준화활동 순위*는 세계 8위
 - * ①간사수임(20%), ②정회원(P멤버) 가입률(20%), ③분담금(60%)으로 책정
 - 간사수임 8위, 정회원(P멤버) 가입률 8위, 분담금 납부 9위
- 국제표준화기구 회장 및 정책이사회 등 임원 수임 중

구분	직책	구성	성명	임기
ISO	President(회장)		조성환	'24~'25
	Council(이사회) 위원	20개국	김세종	'24~'26
	TMB(기술관리위원회) 임원	15개국	문영준	'23~'25
	COPOLCO(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	132개국	문은숙	'24~'25
IEC	IB(이사회) 위원	15개국	이정준	'24~'26
	SMB(표준화관리이사회) 위원	15개국	권대현	'24~'26
			이응로	'24~'26
	CAB(적합성평가이사회) 위원	15개국	조규식	'25~'27
			최갑홍	'25~'27
	MSB(시장전략이사회) 위원	15개업계	김태균	'23~'26
			이창희	'22~'25

→ 국제표준 무대에서 표준리더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여, 국제표준화 전략 수립 및 표준외교 역량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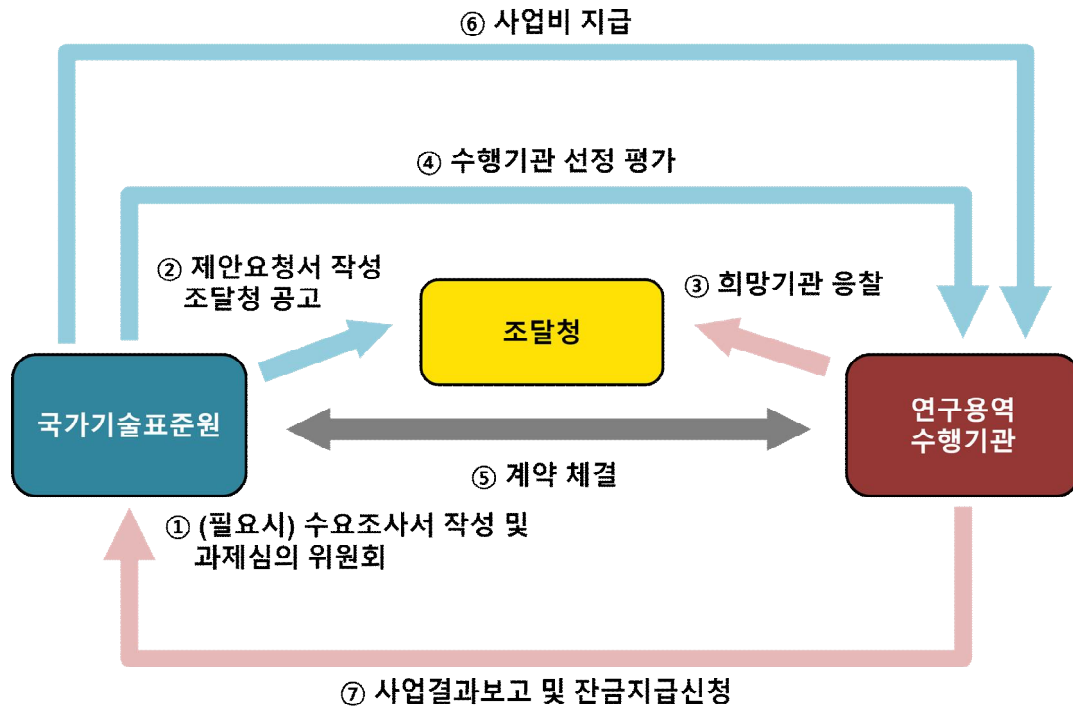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국가기술표준원 직접수행】

- ① 국가기술표준원 내, 국제표준화 활동 수요조사(전년 11월)
- ②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계획 확정 및 각과 통보(12월)
- ③ 연중 사업시행 및 사업수행결과 분석 및 평가 (1월-12월)

【연구용역 및 민간위탁사업】

- ① 사업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1월)
- ② 사업계획 심의확정(1-2월)
- ③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2-3월)
- ⑤ 사업비 교부 및 사업수행(연중)
- ④ 사업 결과 평가 및 정산 처리(12월-다음해 2월)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232	3,558	3,950	4,148	4,355	
2025~2029		3,558	3,807	3,997	4,197	4,40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최근 지적사항 반드시 업데이트
- 지적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요망
- 보고서명·감사명 등 출처 기재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일반연구비 경쟁입찰 확대 필요(제도개선) - (산중위,24결산)
 -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감사 : 재정사업 자율평가 : '24년도, "보통" ('22년 보통, 23년 보통)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일반연구비 경쟁입찰 확대 방안 검토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우리나라는 '15년 「ISO 서울총회」, '18년 「IEC 부산총회」, 20년~23년 「한-미, 한-독 표준포럼」, '25년 「국제AI표준서밋」의 성공적 개최 및 '19년, '20년, '23년 ISO 이사국 선임, '22년 우리나라 최초 ISO 차기 회장 당선(9월)과 '22년 IEC 시장전략 이사회(MSB) 이사, 양자기술 표준화평가그룹(SEG) 의장 선임, ISO 기술관리이사회 이사국 재진출, '23년 IEC 이사국 선임 등을 계기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표준화 역량을 인정받고 있음
 - 탄소중립 표준화, 반도체, AI 등의 신산업·신기술 핵심 분야에서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중소·대기업)들이 공적표준화기구(ISO, IEC 등) 등에서 국제표준화 무대에 전면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에서 국내 전문가/임원 진출 확대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주도를 위한 신규 국제표준 제안 확대 추진
 - *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우리나라 임원 수
'20년 237명 → '21년 243명 → '22년 250명 → '23년 263명 → '24년 277명
 - 산업통상부는 제조 및 표준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ISO 및 IEC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
 - * 現 ISO/IEC 상임이사국(6개국) :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영국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13) 부처 건의사항

□ 전략적 표준외교 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

- 美·中·EU 등 주요국들, 미래 핵심기술 주도 및 新시장 선점·확보를 위해 국가표준화전략을 수립하여 표준개발역량 집중 중
 - * (美) 「핵심 신기술에 대한 미국 국가표준전략」 (백악관, '23.5월)
 - (中) 「신산업 표준화 및 시범사업 실시방안」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등 4개 부처, '23.8월), 「국가표준화발전계획」 (국무원, '21.10월)
 - (EU) 「EU 표준화 전략」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2.2월)
 - (日) 「지적재산추진계획 2025 (AI,양자 등 새로운 국가 표준화 전략)」 (경산성, '25.6월)
 -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도구로 표준을 활용하면서 적극적 통상 정책과 표준화 활동 강화
 - * 美-EU는 통상·기술위원회(TTC)를 출범하고 기술 표준을 포함한 협력 강화('21.10월)
 - * 中은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 수임('15),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회장 수임('20)
 - 우리나라도 신산업 핵심 기술분야 및 탄소중립 표준화 분야에서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진행 중임
 - (표준 선점) 첨단기술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국제표준 개발 기구(IEC, ISO) 및 사실상(de facto) 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 신규 제안
 - * 첨단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 분야는 IEC 양자기술 표준화평가그룹 의장 수임('22.6월)을 통해 우리 산업기술 반영 및 국제표준화 로드맵 개발 등 추진
 - (리더십 강화)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화 정책·전략을 리드하는 ISO 회장직에 한국 기업인 진출('22.9월 ISO 회장 당선)
 - * 그간 국제표준화 성과(ISO 국가별 순위 8위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 3대 국제표준 개발 기구(ISO, IEC, ITU)의 회장직에 우리나라는 진출 경험 전무
 - (국제 협력) 美·獨 등 기술 강국과 양자기술, AI, 자율차, 반도체 등 분야에서 표준 공동개발 및 정보교류 등 전략적 국제 협력 추진
 - * '한-독 표준협력대화, 한-미 표준협력대화 등 정례 회의체 운영
- ⇒ 자국 기업·제품·기술의 표준 선점을 위해 각국의 표준 전략이 점차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품·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국내 기업에 용이한 표준 제안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표준활동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497	△15	2,482	-	△80	-	2,402	1,990	80.1	82.8	-	412
2023	3,052	-	3,052	-	- (125)	-	3,052	3,019	98.9	98.9	-	33
2024	3,232	-	3,232	-	-	-	3,232	3,177	98.3	98.3	-	55
2025	3,558	-	3,558	-	-	-	3,558	3,387	95.2	95.2	-	17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110	1,110	1,110	1,110	-	1,110	857	-	-	77.2
2023	1,510	1,510	1,385	1,385	-	1,385	1,385	-	-	91.7 (100)
2024	-	-	-	-	-	-	-	-	-	-
2025. 12월기준	-	-	-	-	-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 412백만원(집행잔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일반수용비(210-01) 잔액(58백만원)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임차료(210-07) 잔액(308백만원)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국외업무여비(220-02) 잔액(42백만원) 일반연구비(260-01) 잔액(4백만원)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제표준화회의가 연기 및 취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코로나 확산방지 정책에 따른 국제표준화 국내 회의 취소로 불용 발생 ○ (전용) 국제표준화활동지원 일반연구비에서 국가표준화성화 시험연구비로 전용(80백만원)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 33백만원(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일반수용비(210-01) 잔액(2백만원)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임차료(210-07) 잔액(5백만원)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국외업무여비(220-02) 잔액(13백만원) 일반연구비(260-01) 낙찰차액 및 잔액(12백만원) ○ (전용) ISO 전략대응팀 사무소 계약(집행) 주체가 한국표준협회에서 산업부(국표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제표준화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임차료로 예산 비목 변경(125백만원)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 55백만원(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일반수용비(210-01) 잔액(0.2백만원)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임차료(210-07) 잔액(0.1백만원)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국외업무여비(220-02) 잔액(2백만원) 일반연구비(260-01) 낙찰차액 및 잔액(33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320-02) 낙찰차액 및 잔액(20백만원) ○ 일반연구비 경쟁입찰 확대 필요(제도개선)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 171백만원(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임차료(210-07) 잔액(1백만원)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일반용역비(210-14) 낙찰차액 및 잔액(8백만원) 일반연구비(260-01) 낙찰차액 및 잔액(31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320-02) 낙찰차액 및 잔액(131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붙임 1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조직 현황

□ 기구별 현황('24년 말 기준)

기구명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전기통신연합)
설립연도	1947	1906	1865
담당분야	전기전자(IEC), 전파통신(ITU)을 제외한 모든 기술 분야	전기전자 기술 분야	전파통신 기술 분야
지위	비정부간 국제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	정부간 국제기구
회원국	172개국 (정회원 128, 준회원 40, 통신회원 4)	174개국 (정회원 62, 준회원 28, 준회원국 8)	193개 회원국 (약 900개 민간회원, 학계전문가 20,000여명)
표준 수	25,799종	12,046종	6,208종
위원회 수	TC: 268개 SC: 496개 WG: 2,506개	TC: 113개 SC: 113개 WG: 773개	ITU-R, SG: 6개 ITU-T, SG: 11개 ITU-D, SG: 2개

□ 국제표준화 필요성



세계시장 선점

무역 및 수출의존도가 높은 (GDP 대비 무역비율 104.2%)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을 통해 세계 시장 선점 및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무역기술장벽 대응

WTO/TBT 협정 제2조4항에 따라 수출 대상국은 국제표준을 자국 기술규정으로 채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우리기술의 표준 선점 실패 시 수출경쟁력 저하 불가피



환경규제 대응

우리나라 무역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은 각종 환경규제를 시행하여 우리 산업에 큰 부담, 따라서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해 이러한 규제에 적기 대응하는 표준개발 필요

□ ISO/IEC 표준개발위원회 구조 및 의장·간사·컨비너 역할



TC (기술위원회)

SC (분과위원회)

WG (작업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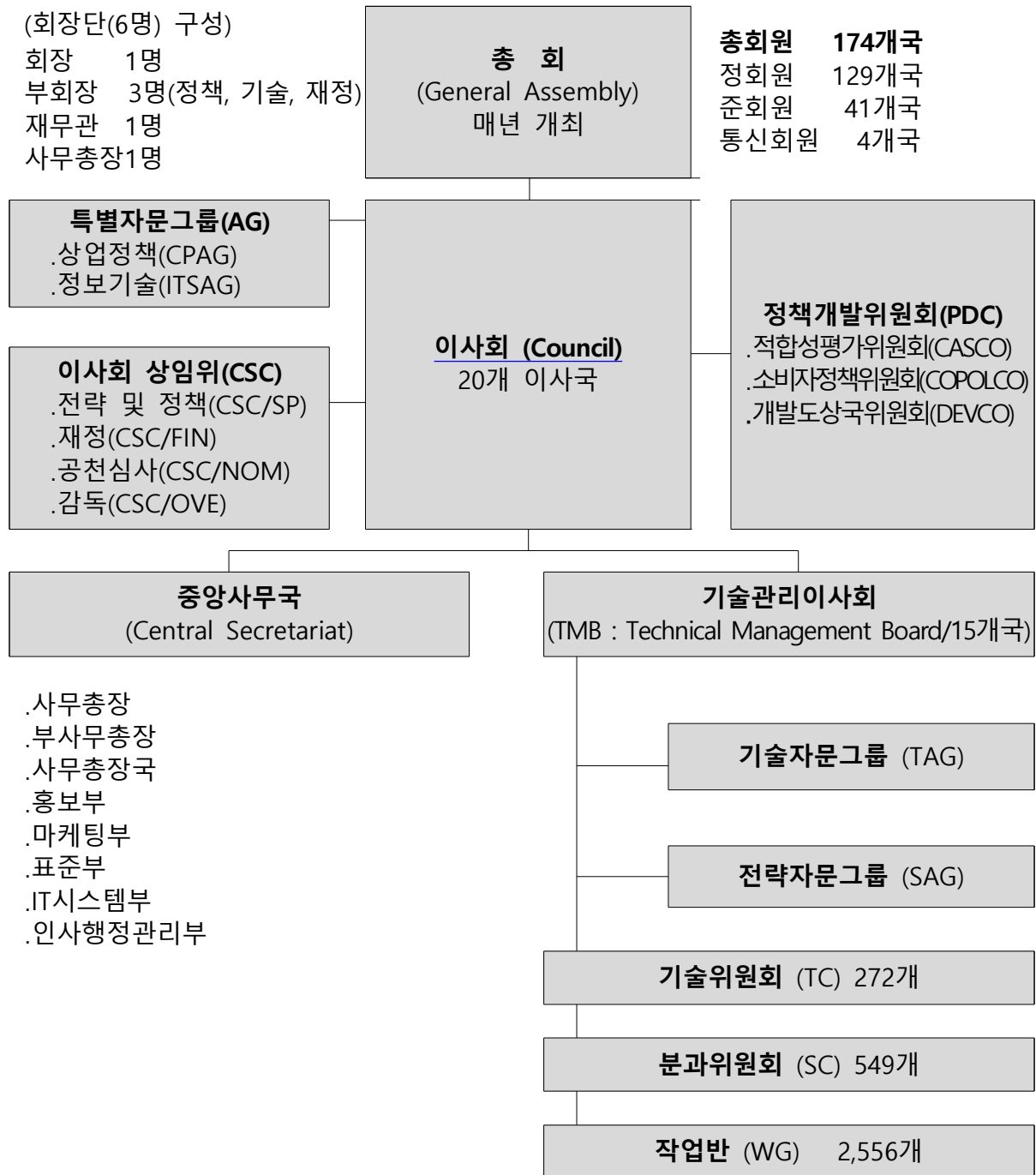
STRUCTURE
ISO/IEC는 기술 분야별로 TC를 설립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TC는 기술 분야를 세분화하여, 다수의 SC를 둘 수 있으며 표준안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해당 기술 분야를 더욱 세분화 하여, 다수의 WG 운영 가능

OFFICERS
의장은 위원회 운영과 표준개발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며, 간사는 위원회 내 개발하는 모든 표준 관리 등 운영 전반을 책임. 컨비너는 WG의 장으로서, 국제표준제안 및 개발을 주도하고 참여

□ ISO 조직도

(회장단(6명) 구성)

회장 1명
부회장 3명(정책, 기술, 재정)
재무관 1명
사무총장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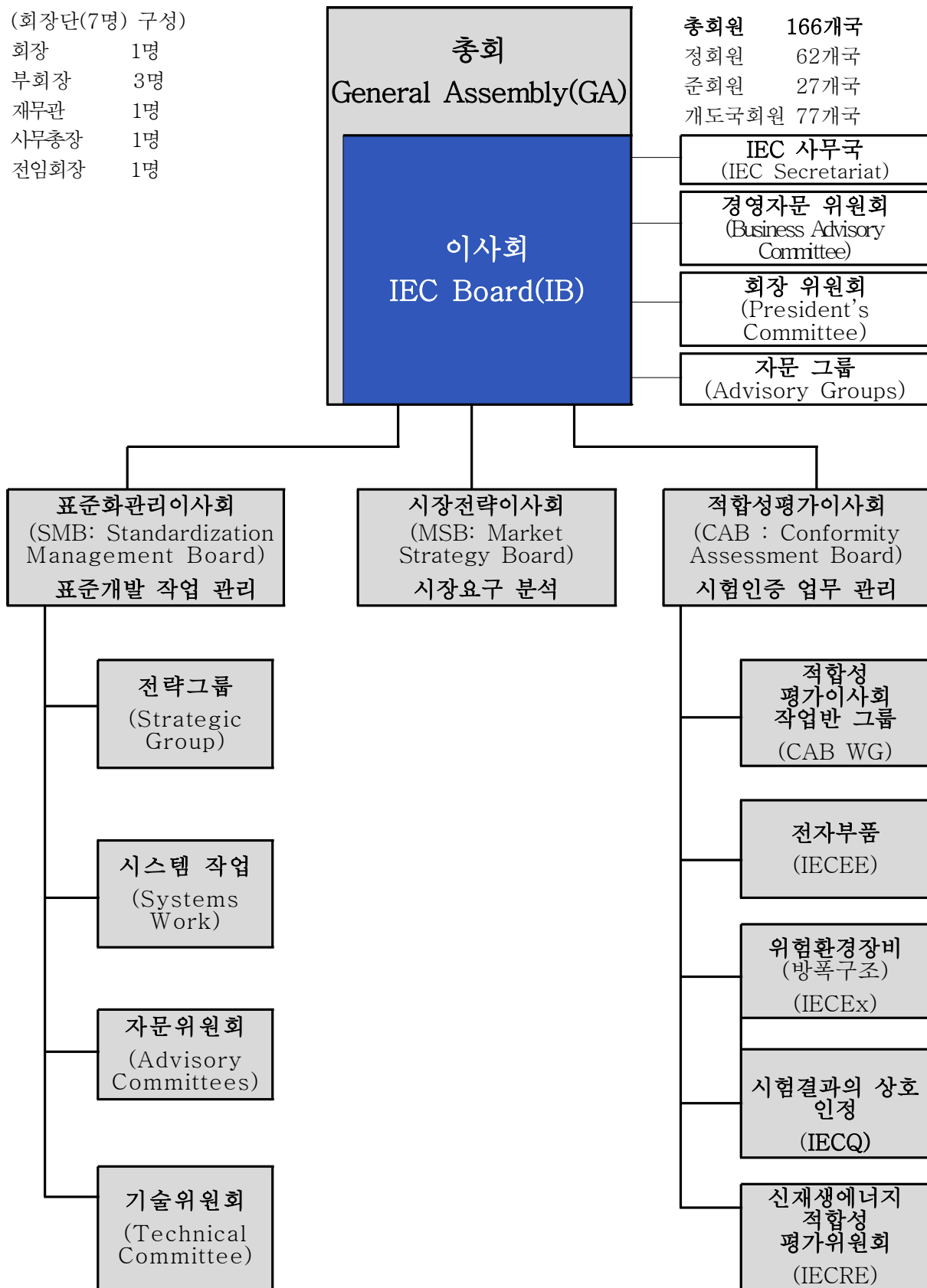
CASCO	Committee on Conformity Assessment	(적합성평가위원회)
COPOLCO	Committee on Consumer Policy	(소비자정책위원회)
DEVCO	Committee on Developing Country Matters	(개발도상국위원회)
TAG	Technical Advisory Group	(기술자문그룹)
SAG	Strategical Advisory Group	(전략자문그룹)

★ ISO 중앙사무국 직원 현황 : 28개국 162명

□ IEC 조직도

(회장단(7명) 구성)

회장	1명
부회장	3명
재무관	1명
사무총장	1명
전임회장	1명



□ 개요 및 현황

-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른 반도체, 미래차 등 분야*에서는 국제표준보다 민간 표준(사실상 표준)을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 형성

* SAE(미래차), ASTM(첨단소재), 3GPP(통신), SEMI (반도체), IEEE(전자) 등

- ISO, IEC 등 국제 표준화기구는 시장 장악에 성공한 사실상 표준을 Fast Track을 통해 국제 표준으로 신속 제정(Dual-Logo 정책)

로봇		ASTM F2866	⇒	IEC/ASTM 62885-7	로봇청소기 평가 표준 (한국이 선점한 표준을 대체)
통신		IEEE 802.3	⇒	ISO/IEC/IEEE 8802-3	유선 네트워크 표준 (케이블, 데이터 전송방법 등)
미래차		SAE J3061	⇒	ISO/SAE 21434	자동차의 사이버 보안 요건 표준

□ 사실상 표준 협력 강화

- 민간 차원에서 사실상 국제표준화 대응을 위해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 구성 및 조직적 대응 필요
 - 국내기업에 첨단산업 기술선점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중심의 지원 확대
 - 산업계 중심의 사실상 표준화 활동 대응을 위해 산업 분야별 포럼 구성 및 운영 활성화
 - 사실상 표준 개요 등 사실상표준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실상표준화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개설

▶ ASTM, IEEE, SEMI, SAE 등 주요 사실상 표준화 기구 대응 (산업계 중심 포럼 운영 등)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

붙임 3

국제표준화 관련 현황('24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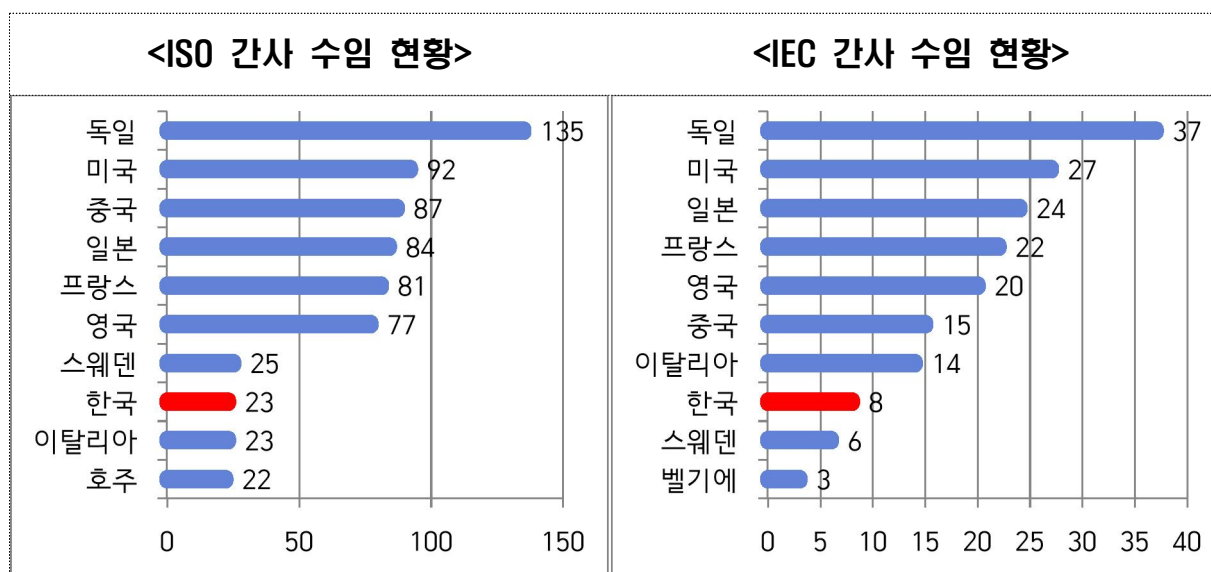
○ ISO/IEC 기술위원회 국제간사 및 의장 수임현황

구분(명)	국제의장	국제간사	컨비너	계
ISO	19	23	147	189
IEC	7	8	73	88
계	26	31	220	277

○ ISO/IEC 기술위원회 가입 현황

구분	기술위원회 수			우리나라 가입									P 멤버 가입율
				P 멤버			O 멤버			계			
	계	TC	SC	계	TC	SC	계	TC	SC	계	TC	SC	
ISO	841	270	571	593	203	390	149	50	99	742	253	489	70.5%
IEC	227	115	112	162	95	67	23	17	6	185	112	73	71.4%
합계	1,068	385	683	755	298	457	172	67	105	927	365	562	70.7%

○ 간사국 수임 순위 : ISO 8위, IEC 8위 ('24년 기준 해당기구 집계순)



사 업 명						
(4)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 (3736-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6	302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무역기술장벽대응기반강화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술규제개혁 선진화체계 구축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김태완	신명철	
		기술규제조정과	043-870-5550	043-870-5559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기술규제개혁 선진화체계구축	1,040.4	1,133.0	-	1,120.0	1,120.0	△13.0	△1.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60.0	1,060.0	1,040.4 [1,040.4]	-	19.6	1,133.0	1,133.0	1,126.4	1,133.0	1,126.4	-	6.6	1,120.0	
· 기술규제영향평가	529.0	529.0	524.6 [524.6]	-	4.4	650.7	650.7	650.2	650.7	650.2	-	0.5	650.7	
· 중소중견기업 애로 기술규제 발굴	161.0	161.0	148.2 [148.2]	-	12.8	101.2	101.2	95.4	101.2	95.4	-	5.8	101.2	
·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370.0	370.0	367.6 [367.6]	-	2.4	381.1	381.1	380.8	381.1	380.8	-	0.3	368.1	
○ 비목별 분류(합계)	1,060.0	1,060.0	1,040.4 [1,040.4]	-	19.6	1,133.0	1,133.0	1,126.4	1,133.0	1,126.4	-	6.6	1,120.0	
· 일반수용비(210-01)	33.0	31.5	20.0 [20.0]	-	11.5	34.0	34.0	34.0	34.0	34.0	-	0.0	34.0	
· 임차료(210-07)	10.0	11.5	11.2 [11.2]	-	0.3	10.5	10.5	4.7	10.5	4.7	-	5.8	10.5	
· 국내여비(220-01)	4.0	4.0	4.0 [4.0]	-	0.0	4.0	4.0	4.0	4.0	4.0	-	0.0	4.0	
· 사업추진비(240-01)	9.0	9.0	9.0 [9.0]	-	0.0	9.0	9.0	9.0	9.0	9.0	-	0.0	9.0	
· 일반연구비(260-01)	1,004.0	1,004.0	996.2 [996.2]	-	7.8	1,075.5	1,075.5	1,074.7	1,075.5	1,074.7	-	0.8	1,062.5	
○ 가능비목별 분류(합계)	1,060.0	1,060.0	1,040.4 [1,040.4]	-	19.6	1,133.0	1,133.0	1,126.4	1,133.0	1,126.4	-	6.6	1,120.0	
· 기술규제영향평가	529.0	529.0	524.6 [524.6]	-	4.4	650.7	650.7	650.2	650.7	650.2	-	0.5	650.7	
- 일반수용비(210-01)	4.0	4.0	2.5 [2.5]	-	1.5	4.0	4.0	4.0	4.0	4.0	-	0.0	4.0	
- 사업추진비(240-01)	4.0	4.0	4.0 [4.0]	-	0.0	4.0	4.0	4.0	4.0	4.0	-	0.0	4.0	
- 일반연구비(260-01)	521.0	521.0	518.1 [518.1]	-	2.9	642.7	642.7	642.2	642.7	642.2	-	0.5	642.7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중소 중견기업 애로 기술규제 발굴	161.0	161.0	148.2 [148.2]	-	12.8	101.2	101.2	95.4	101.2	95.4	-	5.8	101.2
- 일반수용비(210-01)	29.0	27.5	17.4 [17.4]	-	10.1	30.0	30.0	30.0	30.0	30.0	-	0.0	30.0
- 임차료(210-07)	10.0	11.5	11.2 [11.2]	-	0.3	10.5	10.5	4.7	10.5	4.7	-	5.8	10.5
- 국내여비(220-01)	3.0	3.0	3.0 [3.0]	-	0.0	3.0	3.0	3.0	3.0	3.0	-	0.0	3.0
- 사업추진비(240-01)	2.0	2.0	2.0 [2.0]	-	0.0	2.0	2.0	2.0	2.0	2.0	-	0.0	2.0
- 일반연구비(260-01)	117.0	117.0	114.6 [114.6]	-	2.4	55.7	55.7	55.7	55.7	55.7	-	0.0	55.7
·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370.0	370.0	367.6 [367.6]	-	2.4	381.1	381.1	380.8	381.1	380.8	-	0.3	368.1
- 국내여비(220-01)	1.0	1.0	1.0 [1.0]	-	0.0	1.0	1.0	1.0	1.0	1.0	-	0.0	1.0
- 사업추진비(240-01)	3.0	3.0	3.0 [3.0]	-	0.0	3.0	3.0	3.0	3.0	3.0	-	0.0	3.0
- 일반연구비(260-01)	366.0	366.0	363.6 [363.6]	-	2.4	377.1	377.1	376.8	377.1	376.8	-	0.3	364.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사업) 국내기업의 기술규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기술규제의 신설·강화를 사전방지
내역사업:기술규제영향평가하고 지속 검토·관리 내역사업:중소중견기업애로기술규제발굴·인증제도실효성검토를 통해
주기적 기술규제 합리화 추진
- (내역사업① 기술규제영향평가) 정부입법 신설·강화 법령 중 기술규제(기술기준, 시험 등)의 적절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최선의 대안 제시
- (내역사업② 중소기업 기술규제기업애로발굴) 기술규제정책포럼, 전문분과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불합리한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발굴 및 개선하여 기업부담 완화
- (내역사업③ 인증제도 실효성검토) 의원입법규제에 대한 검토·의견제시, 정부 법정인증제도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한 존속·개선·폐지 등 실효성 검토를 3년 주기(약79건/연)로 실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기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7.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8.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9.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10.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1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폐지·완화가 필요한 기존규제 대상
 12.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30호)

제2조(설치 등) ①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2. 산업통상부: 기술규제개혁작업단
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

② 각 작업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 각 작업단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 각 작업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와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2. 기술규제개혁작업단: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 인증분야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3.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규제 관련 민원처리,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규제개혁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2.12.12.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개혁작업단 TF팀 신설
- '12.12.13. 국무총리실, 국무총리훈령 개정
- '13. 1. 1.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개혁작업단 TF팀,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 '13. 2. 국정과제 '137.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합리화'에 '137-5. 기술 규제영향평가 등을 통한 기술인증제 합리화' 포함
- '13. 4.15.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국무총리훈령 제601호로 개정
- '18. 3. 국정과제 '34-6. 미래시장 창출을 위한 국가표준·인증 혁신'에 포함
- '18. 6.12.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검토 조항을 신설한 국가표준기본법 개정
- '18.12.24. 국무총리훈령 제730호로 개정
- '23. 7.1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기술규정·적합성평가 시행 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48	1,178	1,060	1,133	1,12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해당없음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국민(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기술규제영향평가

: ('25) 650.7백만원 → ('26) 650.7백만원, 전년동

- 신설·강화 법령 중 기술규제(기술기준, 시험, 인증 등)의 적절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최선의 대안 제시를 위한 전년 수준 예산 소요
- (산출) ① 기술규제 영향평가 전문가 분석 : 642.7백만원*(283건 x 2.2백만원/건)
- ② 감사기관 운영비 : 4백만원(전년동)
- ③ 사업추진비 : 4백만원(전년동)

* (물량동일^{283→283건}) 전년 수준 유지 / (단가동일^{2.2→2.2백만원}) 전년 수준 유지

② 중소·중견 기업애로 기술규제 발굴

: ('25) 101.2백만원 → ('26) 101.2백만원, 전년동

- 국내·외 규제와 비교하여 기준이 과도하거나 절차가 불합리해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전년 수준 예산 소요
- (산출) ① 기술규제 기업애로 전문가 분석 : 55.7백만원*(50건 x 1.11백만원/건)
- ② 기술규제기업애로개선지원단 운영비 : 6백만원(전년동)
- ③ 기술규제위원회·전문분과위원회 회의비 및 자문비 : 24백만원(+1백만원, 15만원 X 16인 X 10회)
- ④ 기술규제위원회 등 임차료 : 10.5백만원(+0.5백만원, 1.5백만 X 7회)
- ⑤ 국내여비 / 사업추진비 : 3백만원(전년동) / 2백만원(전년동)

* (물량동일^{50→50건}) 전년 수준 유지, (단가동일^{1.1→1.1백만원}) 전년 수준 유지

③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 ('25) 381.1백만원 → ('26) 368.1백만원, △3.4%

-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검토 3주기('25~'27년) 관련 26년 예정 인증제도 80건에 대한 전문가 분석을 통한 통합·폐지·개선사항 발굴,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는 의원입법 인증제도검토 및 의견제시(1주기('19~'21년) 186개 → 2주기('22~'24년) 222개 → 3주기('25~'27년) 246개)
- (산출) ①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전문가 분석 : 314백만원(22.1백만원 증액*, 83건 X 4.1백만원/건)
- ② 의원입법 인증제도 전문가 분석 : 23.0백만원(35.1백만원 감액**, 35건X 0.7백만원/건)
- ③ 국내여비 : 1백만원(전년동)
- ④ 사업추진비 : 3백만원(전년동)

* (물량감소^{257→83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 협업으로 당해연도 限 물량 증가(전전년도 물량복귀)
(단가증가^{1.2→4.1백만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 지원사항으로 일시적 단가 축소(전전년도 물량복귀)

	'23년	'24년	'25년	'26년
검토건수	79건	79건	257건	83건
검토단가	3.6백만원	4.0백만원	1.2백만원	4.1백만원

전년대비 변경상세사항 : (검토건수-감소) 257→83건,

(검토비용-증가) 1.2→4.1백만원(검토일수 예년수준 확보 2.3→8.0일)

** (물량감소^{87→35건}) 3년 실적 평균 감안 물량 감소, (단가동일^{0.7→0.7백만원}) 전년 수준 유지

전년대비 변경상세사항 : (검토건수-감소) 87→35건(3년 실적 평균 반영)

○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33,000	<div>○ 일반수용비(210-01) : 34,000천원</div> <div>가. 간사기관운영비 (4,000천원)</div> <div>나. 기술규제기업애로개선지원단 운영비(6,000천원)</div> <div>다. 기술규제위원회 전문분과위원회 회의비 및 자문비(24,000천원)<ul style="list-style-type: none">150천원x16명x10회 = 24,000천원</div> <div>○ 임차료(210-07) : 10,500천원</div> <div>가. 기술규제기업애로개선지원단 워크샵, 기술규제위원회 개최 (10,500천원)<ul style="list-style-type: none">회의 개최 행사장 임차 7회x1,500천원=10,500천원</div> <div>○ 국내여비(220-01) : 4,000천원</div> <div>가. 전문문과 위원회, 기술규제위원회 등 참석(4,000천원)<ul style="list-style-type: none">80회x50천원=4,000천원</div> <div>○ 사업추진비(240-01) : 9,000천원</div> <div>가. 전문분과 위원 면담, 기업 애로 간담회 개최 등(9,000천원)<ul style="list-style-type: none">오찬, 만찬비 등 : 36회x10명x25천원=9,000천원</div> <div>○ 일반연구비(260-01) : 1,075,500천원</div> <div>가. 기술규제영향평가 전문가 분석(642,650천원)<ul style="list-style-type: none">283건'x2,278천원"'=644,674천원* 수량 : 5년간('19~23년) 영향평가 평균 건수** 단가(검토비용) : ('25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기술사 평균 임금^{3년간연평균증가율6.7%적용} 507천원x4일)+ 자료비 250천원 = 2,278천원재원조정(-2,024천원)</div> <div>나. 기술규제 기업애로 전문가 분석(55,700천원)<ul style="list-style-type: none">50건'x1,114천원"'=55,700천원* 수량 : 3년간(21~23년) 하향추세를 반영(107건/21년 → 96건/22년 → 89건/23년)한 기업애로 검토건수** 단가(검토비용) : ('25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기술사 평균 임금^{3년간연평균증가율6.7%적용} 507천원x2일)+ 자료비 100천원 = 1,114천원</div> <div>다. 의원입법 인증제도 전문가 분석(58,150천원)<ul style="list-style-type: none">87건'x668.4천원"'=58,150.8천원* 수량 : 3년간(21~23년) 의원입법 검토건수** 단가(검토비용) : ('25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기술사 평균 임금^{3년간연평균증가율6.7%적용} 507천원x1.2일)+ 자료비 60천원 = 668.4천원재원조정(-0.8천원)</div> <div>라.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319,000천원)<ul style="list-style-type: none">257건'x1,235.1천원"'=317,420.7천원* 수량 : '25년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건수** 단가(검토비용) : ('25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기술사 평균 임금^{3년간연평균증가율6.7%적용} 507천원x23일)+ 자료비 69천원 = 1,235.1천원재원조정(1,579.3천원)</div>	1,120,000	<div>○ 일반수용비(210-01) : 34,000천원</div> <div>가. 간사기관운영비 (4,000천원)</div> <div>나. 기술규제기업애로개선지원단 운영비(6,000천원)</div> <div>다. 기술규제위원회 전문분과위원회 회의비 및 자문비(24,000천원)<ul style="list-style-type: none">150천원x16명x10회 = 24,000천원</div> <div>○ 임차료(210-07) : 10,500천원</div> <div>가. 기술규제기업애로개선지원단 워크샵, 기술규제위원회 개최 (10,500천원)<ul style="list-style-type: none">회의 개최 행사장 임차 7회x1,500천원=10,500천원</div> <div>○ 국내여비(220-01) : 4,000천원</div> <div>가. 전문문과 위원회, 기술규제위원회 등 참석(4,000천원)<ul style="list-style-type: none">80회x50천원=4,000천원</div> <div>○ 사업추진비(240-01) : 9,000천원</div> <div>가. 전문분과 위원 면담, 기업 애로 간담회 개최 등(9,000천원)<ul style="list-style-type: none">오찬, 만찬비 등 : 36회x10명x25천원=9,000천원</div> <div>○ 일반연구비(260-01) : 1,062,500천원</div> <div>가. 기술규제영향평가 전문가 분석(642,650천원)<ul style="list-style-type: none">283건'x2,278천원"'=644,674천원* 수량 : 5년간('19~23년) 영향평가 평균 건수** 단가(검토비용) : ('25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기술사 평균 임금^{3년간연평균증가율6.7%적용} 507천원x4일)+ 자료비 250천원 = 2,278천원재원조정(-2,024천원)</div> <div>나. 기술규제 기업애로 전문가 분석(55,700천원)<ul style="list-style-type: none">50건'x1,114천원"'=55,700천원* 수량 : 3년간(21~23년) 하향추세를 반영(107건/21년 → 96건/22년 → 89건/23년)한 기업애로 검토건수** 단가(검토비용) : ('25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기술사 평균 임금^{3년간연평균증가율6.7%적용} 507천원x2일)+ 자료비 100천원 = 1,114천원</div> <div>다. 의원입법 인증제도 전문가 분석(23,000천원)<ul style="list-style-type: none">35건'x680.4천원"'=23,814천원* 수량 : 3년간(21~23년) 의원입법 검토건수** 단가(검토비용) : ('26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기술사 평균 임금^{3년간연평균증가율6.7%적용} 517천원x1.2일)+ 자료비 60천원 = 668.4천원재원조정(-814천원)</div> <div>라.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341,150천원)<ul style="list-style-type: none">83건'x4,136천원"'=343,150.8천원* 수량 : '26년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건수** 단가(검토비용) : ('26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기술사 평균 임금^{3년간연평균증가율6.7%적용} 517천원x8.0일) = 4,136천원재원조정(-2,138천원)</div>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술규제 영향평가 의견반영률 (단위: %)	목표	73	73	-	-	-	(기존 '20~'21년 실적치의 평균인 74.6%을 반영하여 '23년 대비 1% 상향	기술규제영향평가 의견반영률 = 의견수렴건수 /검토의견제시건수 x 100	국가기술표준원 내부자료 (국무조정실)
	실적	79.7	72.5	-	-	-			
	달성도	109	99.3*	-	-	-			
기술규제 영향평가 의견제시율 (단위: %)	목표	-	-	32**	40***	50***	신규지표이므로 '24년 목표와 동일하게 설정 (10년 평균 실적은 약 28%임)	기술규제영향평가 의견제시율 = 검토의견제시건수 /검토건수 x 100	국가기술표준원 내부자료 (국무조정실)
	실적	33.0	57.8	68.6	64.8	-			
	달성도	-	-	-	-	-			

* 전년대비 의견 제시건수는 전년대비 184% 수준(59건 '22년 → 109건 '23년)으로, 의견 반영 건수는 전년대비 168% 수준(47건 '22년 → 79건 '23년)으로 증가

** '24년부터 의견반영률 → 의견제시율로 목표가 변경되었으며, '24년 목표는 32%임
(각 부처의 제개정 법령·기준 등에 대한 분석 및 합리화 제안이 본 사업의 목표이므로, 사업 목표에 더욱 적합한 '의견제시율'로 성과지표를 수정함)

*** 의견제시율의 '25년 및 '26년 목표는 각각 전년대비 25% 상향 조정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기술규제 영향평가 : 226건 검토(조정 의견 제시 59건 → 반영 47)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검토(96건) → 개선 추진(18건) - 의원입법 기술규제 검토 : 35건 -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 64개(통·폐합 11개, 개선 39개, 존속 14개)
2023	- 기술규제 영향평가 : 169건 검토(조정 의견 제시 109건 → 반영 79)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검토(89건) → 개선 추진(14건) - 의원입법 기술규제 검토 : 44건 -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 79개(통·폐합 20개, 개선 37개, 존속 22개)
2024	- 기술규제 영향평가 : 150건 검토(조정 의견 제시 103건)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검토(33건) → 개선 추진(18건) - 의원입법 기술규제 검토 : 38건 -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 257개
2025	- 기술규제 영향평가 ^{'25.11월 기준} : 128건 검토(조정 의견 제시 83건)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검토(41건) → 개선 추진(33건) - 의원입법 기술규제 검토 : 27건 -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 79개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기술규제영향평가)** 정부입법 신설·강화 법령 중 기술규제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기술규제 도입을 사전에 방지하여 기업 부담완화
- **(중소중견 기업애로 기술규제 발굴)** 기업현장에서 불합리·과도하다고 느끼는 기술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한 기업 애로해소 및 기업환경 개선
-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범부처 인증제도(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하여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당위성, 완성도, 적절성 측면 분석 검토를 통한 불필요한 제도는 폐지, 유사제도는 통합하여 국민(기업) 부담완화 및 의원입법 인증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제시로 불합리한 제도 신설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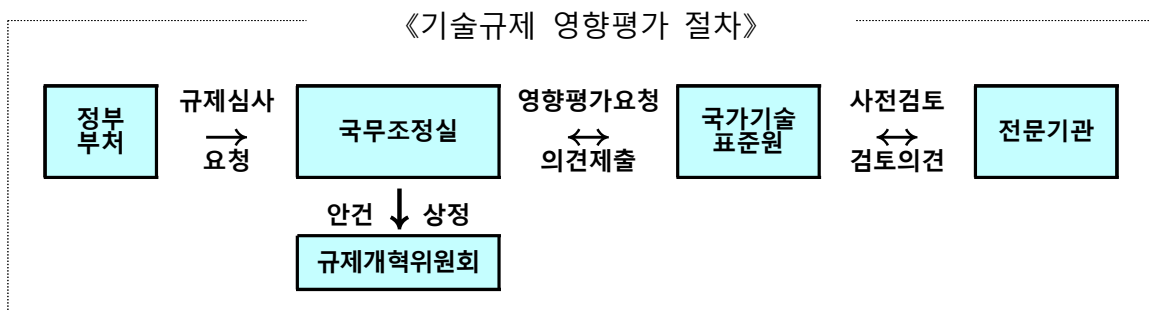
* 79건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로 인증 유효기간 확대, 수수료 완화 등의 간접효과 예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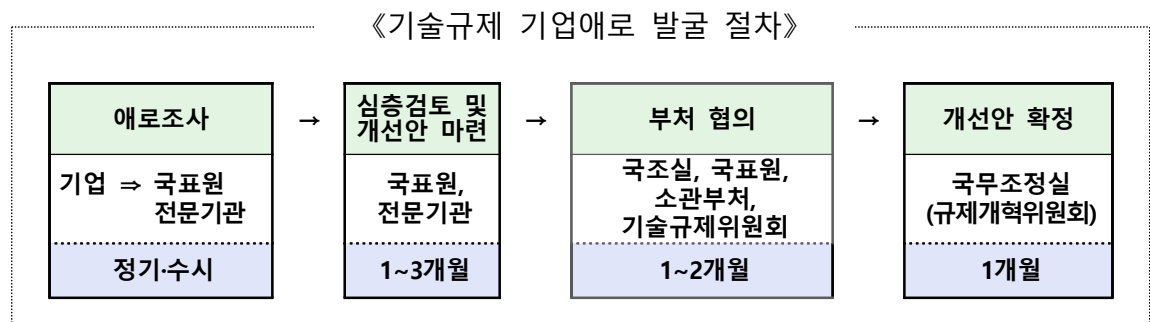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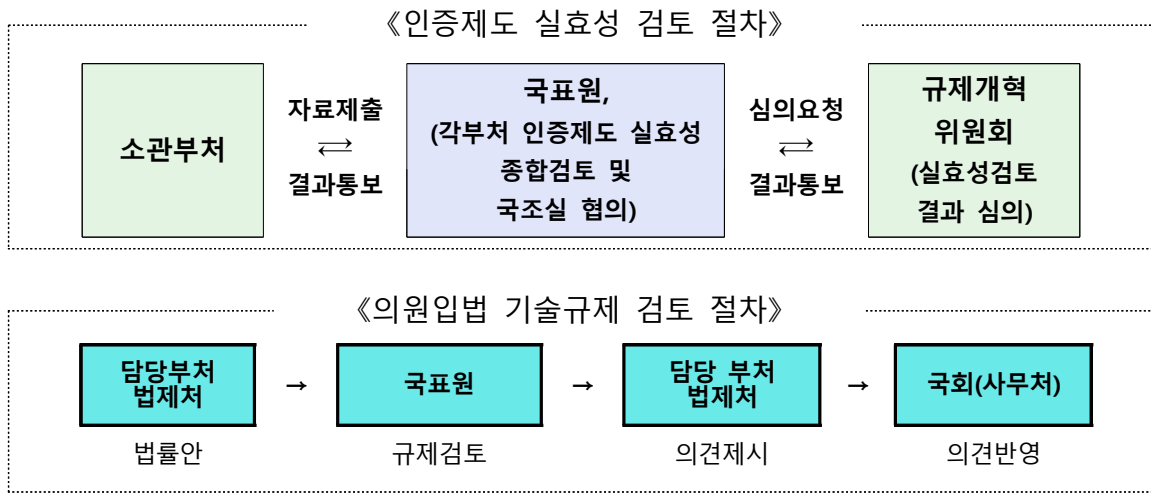
① 기술규제영향평가



② 중소중견기업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



③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060	1,133	1,221	1,285	1,359	
2025~2029		1,133	1,242	1,368	1,495	1,63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기술규제 신설·강화 사전 방지

- 全 부처의 법령 등 제·개정 시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대해 사전 심의·조정을 위한 의견제시
- 신설 인증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제개정 단계부터 신설 인증에 대한 기술 규제 영향평가 강화 추진

○ 기술규제 사후 정비 및 개선

-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발굴하여 타당성·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업계 의견 수렴,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선
- 대표적 기술규제인 법정인증제도에 대해 매 3년 주기로 실효성을 검토하여 개선, 통합, 폐지 등 제도 정비
- '25년은 全 인증제도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현황점검 추진

○ 기술규제의 신설·강화를 사전 방지하고 사후 제도정비·개선 등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기술규제위원회·전문분과위원회 운영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148	-	1,148	-	-	-	1,148	1,144	99.6	99.6	-	3.6
2023	1,178	-	1,178	-	-	-	1,178	1,170	99.3	99.3	-	8
2024	1,060	-	1,060	-	-	-	1,060	1,040	98.1	98.1	-	19.6
2025	1,133	-	1,133	-	-	-	1,133	1126	99.4	99.4	-	6.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 일반연구비(조달청 계약 과정에서의 수의시담에 의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2023	- 불용 : 일반연구비(조달청 계약 과정에서의 수의시담에 의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2024	- 불용 : 일반연구비(조달청 계약 과정에서의 수의시담에 의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 전용 : 기술규제위원회 추가 개최 등을 위한 임차료 전용 실시
2025	- 불용 : 일반연구비(조달청 계약 과정에서의 수의시담에 의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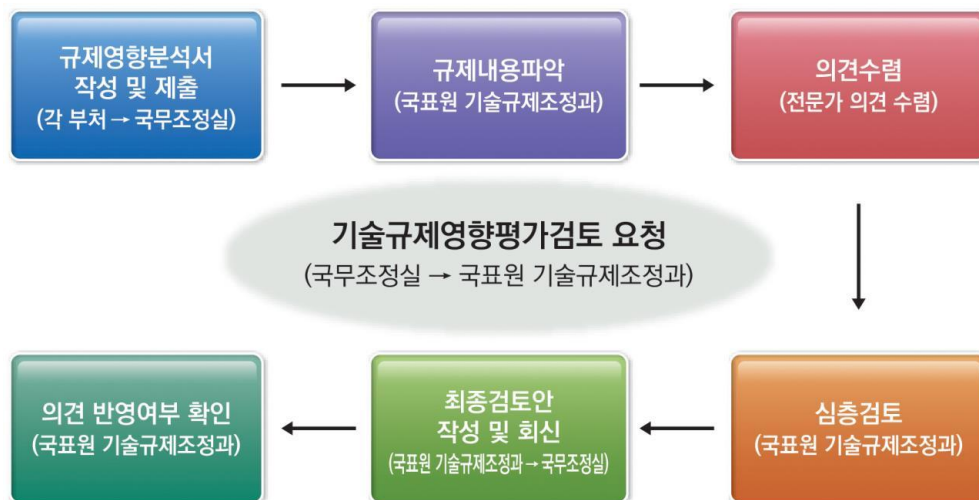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기술규제 영향평가 설명자료

- **(기술규제영향평가)** 각 부처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개정 시에 기존 유사제도와 중복성 여부 및 국가표준(KS, KCS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여부 등을 파악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
- **(목적)** 각 부처의 기술규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의 비용, 편익, 파급효과, 규제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
 - **(절차)** 부처에서 입법·행정예고를 마친 규제안을 국무조정실로 송부 하면,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안을 검토하여 각 담당기관에 경쟁영향평가, 중소기업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의뢰
 - 이때 규제안을 검토하여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여부 판단임
 - **(대상)** 법령 등에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시험·검사·인증 등)에 대해 실시

< 기술규제영향평가 절차 >



1. 추진배경

- 적합성평가란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평가·증명하는 것으로, 인증, 검사, 형식승인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

* 법률적인 용어로 적합성평가(표준·기준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평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인증제도”로 통용. '224월 기준 222개 법정 인증제도 운영중

- 인증제도는 국민안전, 환경보호, 산업육성 등 다양한 정책 목적 달성 수단으로 활용되며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 등 순기능 제공

안전(제품)	환경보호	보건(식품)	산업육성
			
			
전기용품 무선통신기기	건축물	유기농 식품	건설신기술 교통신기술

- 그러나,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기준 등으로 기업의 비용·시간적 부담 초래, 시장 진입규제로 작용 등 기업 애로를 유발

- 정부는 이런 유사·중복, 불합리한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 인증제도를 3년에 걸쳐 전수조사·검토하는 제도 도입*

* 관계부처 합동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 마련(규제개혁위원회 보고, '14.8월)

- 이에 따라 법정 인증제도의 존속 필요성 검토 조항을 신설한 「국가표준기본법」('18.6.12) 및 동법 시행령 개정('18.12.21)

< 국가표준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

- ① 기존 법정 적합성평가제도(인증 등) 존속 필요성 검토 근거 규정 신설
- ② 규제개혁위원회를 기존 적합성평가제도의 존속 필요성 검토·심의 기구로 규정
- ③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하여 통보한 사항에 대해 부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

※ 산업부(국표원)가 사전검토하여 규개위에 보고토록 국무총리 훈령 정비('18.12)

2. 추진체계

- 적합성평가제도가 부처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필요성·적절성·완성도 측면에서 분석·검토

필요성	적절성	완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활성화 및 존치 타당성 ▶ 시장에서의 인증수요 ▶ 유사·중복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국제 표준과의 조화 ▶ 유효기간, 비용 등 유지부담 ▶ 적합성 평가기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평가절차 범위 등의 명확성 ▶ 시장진입의 방해요소로 작용 여부 ▶ 사후관리 등 관리 절차

※ 2주기 실효성 검토('22~'24)는 1주기 검토와 차별화하여 과감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므로 심층 분석·검토가 가능하도록 기준 설정함

- 전문가·이해관계자의 검토 및 분석,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기술 규제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종합의견서(안) 도출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개선안을 확정하고 담당 부처에서 이행계획을 마련한 후 이행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



3. 검토 대상

□ **(검토 대상) 2주기 검토대상은 1주기에 존치된(186개중 20개 통·폐합) 166개 제도에, 신규 대상 56개* 제도를 추가한 총 222개 제도임**

* 신규대상 56개 제도 : ①1주기 기간중 신설된 25개 제도, ②1주기대상에서 제외(우수문화상품지정 등) 또는 누락(실내공기우수시설인증 등)되었던 31개 제도

○ 안전, 환경, 보건 등과 관련된 **의무인증이 89개 제도(40%)**이며 제품, 서비스, 조직의 품질 등과 관련된 **임의인증이 133개 제도(60%)**임

* 이중 제품과 관련이 없는 경영체계, 서비스, 시설 등과 관련된 임의인증은 55개 제도(전체의 25%)임.

□ **(연도별 계획) 1주기 검토연도와 연계하고 연간 부처별 검토* 및 유사제도 등을 고려하여 '22년 64개, '23년 79개, '24년 79개 제도를 검토**

* 국토부(35개), 해수부(30개), 환경부(24개), 산업부(23개), 농축산부(19개)의 5개 부처의 인증 제도가 131개(59%)이며 부처 부담을 고려하여 연도별 적정배분

< 참고 : 연도별 검토대상 기본원칙 >

① 1주기 존치제도(168개)는 1주기와 동일한 연차에 검토(1주기 1차년도('19) 검토한 제도는 2주기 1차년도('22)에 검토) 하되, 부처별로 연간 균등배분을 위해 일부 조정

* 부처가 제출한 희망 검토연도에서 조정된 제도는 14개(6%)

② 신기술인증 등 유사제도, 상호 연관성*이 큰 제도는 가급적 동일 연도에 검토

* KS인증(산업부), 전기용품 KC인증(산업부), 환경표지인증(환경부) 등을 '22년 동일연도에 검토

③ '22년은 검토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64개, '23~'24년은 각각 79개를 배정

4. 검토 중점 방향

- (제도 통폐합을 원점에서 재검토) 새 정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인증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도는 과감히 통폐합 유도
 - ① 단순 홍보 수단의 인증, ② 소수 기업만 획득하는 인증, ③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인증 등은 원칙적으로 통폐합을 전제로 검토

< 법정 인증제도 통폐합 검토대상 >

- ① 국민안전, 환경보호 등과 반드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인증과 달리, 인증 마크를 단순 홍보 또는 비즈니스 수단으로 활용하여 실효성이 낮은 인증제도
 - * 특히, 경영체계, 서비스, 시설 등과 관련된 55개 임의 인증제도에 대해 집중 분석
- ② 3년이상된 제도임에도 소수 기업만 인증을 획득하여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정부의 정책적 지원없이 인증 활성화가 사실상 불가)
 - *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필요성이 낮은 인증이 '인증'을 위한 인증으로 변질화될 우려를 사전 차단
- ③ 해외에 유사 인증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인증제도
 - * 1주기에 존치된 166개 인증제도중 43개 제도(26%)가 해외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

- (품목단위 규제개선) 제도 존치가 필요한 경우, 기업이 개선결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인증방법 및 비용 등을 혁신적으로 완화
 - 제도별 품목단위까지 심층 분석을 통해, ① 인증품목 축소, ② 인증 기간 및 비용 절감, ③ 인증 유효기간 확대, ④ 기준 완화 등을 검토
 - ※ 특히, 20년 이상된 제도*(75개, 전체의 33%)와 다수 인증으로 애로를 겪는 LED 등의 품목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제완화 강구

< 인증방법 등 규제 완화 검토대상 >

- ① 정부가 지속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품목 제외 등 인증대상 축소
- ② 시험 적체로 제품출시가 지연되거나 인증비용에 과도한 부담이 있는 분야는 기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요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방안 마련
- ③ 파생모델 면제범위 확대, 유효기간 확대 등을 통해 유지관리 부담 완화
- ④ 인증기준은 원칙적으로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에 일치화

- **(절차 간소화)** 유사 인증제도간 상당부분 중복적 요소가 있거나 획일화된 절차*로 불합리성이 있을 때, 절차를 대폭 간소화 강구

* 로봇과 같은 소량 다품종 품목에 대해 공장심사를 적용할 경우 애로 발생

- ①유사 인증제도와 연계한 면제제도 도입, ②공장심사 등 일부 심사체계 제외, ③시험성적서 수용범위 확대 등 절차적 간소화를 검토

< 인증 절차의 간소화 방법 검토대상 >

- ① 타 제도의 제품, 공장, 경영체계 등의 심사 결과를 포괄적으로 수용(면제)
* 예, '전기용품 KC 안전인증(의무)'은 'KS 인증(임의)'을 취득하면 면제 혜택을 부여중
- ② 품목 특성에 따라, 공장심사 없이 제품시험만으로 인증하는 방안 마련
- ③ 일정요건*을 갖춘 자체 시험성적서나 해외발행 시험성적서 등을 수용
* 예, 국가공인시험기관(기업내 시험소도 포함)이나 상호인정 체결된 해외 시험기관
- ④ 기타, 신청 구비서류 감축, 신고절차 간략화, 심사원 자격 완화 등

- **(규제 입증책임제 적용)** 실효성이 낮은 인증제도의 폐지 등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부처가 존치 필요성을 기술규제위원회 등에서 입증*

* 법정제도에서 제외할 경우,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객관적으로 입증 의무

- 제도상의 규제완화,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도 중요 쟁점사안이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제를 적용하여 부처 입장을 입증
- 필요 시, 산업·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쟁점사안이 있을 경우, “인증제도 규제 청문회(가칭)” 등을 개최하여 쟁점을 해결 모색

* 청문회는 사안에 따라 ‘국조실’ 또는 ‘기술규제개혁작업단’ 주관으로 운영

- **(유관단체와의 협력)** 기업 현장의 애로 발굴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 유관 경제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국조실(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정비과), 중기음부즈만, 기술규제개혁작업단(기술 규제 애로발굴 부서) 등의 제도개선 사항도 연계하여 심층 검토

5. 기대효과

- (경제적 기대효과) 폐지로 규개위 안전 상정 예정인 4개 제도로 인한 기업의 직·간접비 감소만 연간 160억* 이상으로 예상됨

* (직접비) 인증수수료 절감에 따른 직접비용 감소 27억, (간접비) 매출증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 133억

- 불합리한 인증제도 정비를 통한 기업·국민 불편 해소

- 필요성이 낮거나, 인증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 없는 제도는 폐지하여, 기업의 잠재적인 부담 해소 및 행정력 낭비 방지
- 인증대상 축소, 인증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절차 간소화 등 제도별 맞춤형 정비를 통해 기업·국민에게 체감도 있는 불편 경감

- 인증제도 실효성검토로 부처의 적극적 규제개선 노력 촉진

- 부처 자체검토와 함께 외부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술규제 위원회의 객관적·전문적 검토 등 소통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
- 모든 인증제도는 3년 주기 재검토하여, 산업·정책 환경변화 등에 따른 합리적이고 진전된 기술규제 정비 지속 추진

참고 3-1

불합리한 국내 기술규제 통합·폐지, 개선 사례

□ 인증제도 통합·폐지 사례

-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과감히 통합·폐지

① 유사·중복

✓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인증 (국토부)

현행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나 **우수물류기업 인증**과 제도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

개선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인증'을 '우수물류기업 인증'에 통합

② 타 제도 대체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과기부)

현행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인증을 부여하여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실 안전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통해 안전관리가 가능해 별도의 인증을 취득하는 것은 연구소 등에 이중부담으로 작용하여 폐지

✓ 우수 종축업체 인증 (농식품부)

현행 종축업체의 전문화·청정화, 우량 종축 확보, 고능력 종축 보급률 제고를 위하여 운영

개선 가축검정제도와 정액품질확인으로 대체 가능하며, 해외 유사사례가 없어 폐지

③ 낮은 실효성

✓ 전국호환 교통카드 인증 (국토부)

현행 철도, 도로, 지하철, 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한 장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교통카드의 전국호환 규격통합이 이루어진 현시점에서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

✓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 (농식품부)

현행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과정을 평가하는 제도로 해외에서는 주로 민간·지자체에서 운영 중

개선 도농교류 교육은 국가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보다, 지자체 특성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인증 폐지, 지자체 자율운영 지원

□ 인증제도 개선 사례

- 인증방법 개선 및 비용 완화, 절차 간소화, 유효기간 연장

① 인증기간 및 비용

✓ 환경표지 인증 (환경부)

현행 기존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이나, 인증심사 수수료 이외에 **인증마크 사용료** 부과, 인증심사시 제품 내구성·안전성 등 **환경과 무관한** 평가항목 시험을 실시

* (예시) 광주 A가구 제조업체 환경표지인증 수수료('19년 제품수량 80개 기준)
▲ 갱신수수료 4,020,060원 ▲ 인증마크사용수수료 3,463,419원

개선 환경표지 **사용료 폐지**, 환경과 **무관한 인증기준 삭제**

② 중복검사 면제

✓ ICT 융합품질인증 (과기부)

현행 ICT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품질 검증을 통해 제품의 안정적인 시장진출 지원하는 제도이나, **파생모델 인증기준이 없어** 제품을 일부변경한 유사제품도 신규 인증과 **동일한 인증 절차** 진행

개선 파생모델의 경우 **시험검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인증절차, 방법 등 파생모델 인증기준 등 제도 정비

✓ 전승공예품 인증 (문화재청)

현행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제작한 전승 공예품을 인증하는 제도이나, 유사제도인 **우수공예품 지정**(문체부)과 **시험항목이 일부 중복**되며, **유해성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개선 우수공예품과 **동일항목 시험은 면제**, 유해성검사는 **국가·국제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를 수용하여 절차 간소화 추진

③ 시험성적서 수용 확대

✓ 저발화성 담배의 화재방지 성능 (소방청)

현행 저발화성 담배의 화재방지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자체 시험 결과만 인정**

개선 국제표준인 ISO 12863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성적서를 수용**

4 유효기간 연장

◆ 유효기간 연장으로 기업의 인증 재시험·재심사 부담 경감

✓ **성능 인증** (중기부)

현행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품질·성능을 인증하여 개발제품 구매 및 R&D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성능인증 제품은 우선구매지원 대상이 되어 중소기업 판로개척에 도움

개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 → **4년으로 연장**

✓ **소방장비인증** (소방청)

현행 품질이 우수한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소방장비의 품질을 혁신하기 위한 소방장비에 대한 인증으로, 인증심사를 서류, 제품, 현장 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인증 비용이 건당 950만원 수준으로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개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2 → **3년으로 연장**

✓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복지부)

현행 안전하고 질높은 고령자 대상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로써 소비자 안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인증 유효기간이 2년으로 인증제도 평균보다 짧음

개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2 → **4년으로 연장**

✓ **녹색인증** (산업부)

현행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인증을 통한 시장창출 지원을 위한 제도로, 녹색인증 제품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중기부 우선구매, 특허청 우선심사 등 공공시장 진출시 다양한 혜택 부여

개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 → **4년으로 연장**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산업부)

현행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이 일정기준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취득시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액감면 등 혜택

개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 → **4년으로 연장**

✓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공정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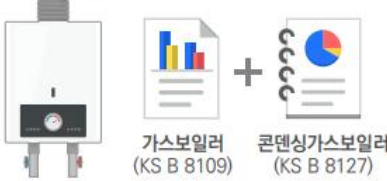
현행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용역 등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로,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 등 혜택

개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2 → **3년으로 연장**

참고 3-2

기술규제 영향평가 및 기업애로 개선 사례

<기술규제 영향평가 개선 사례>

 <p>가정용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p> <p>개정전</p> <p>기체연료 2등급 보일러의 시험방법으로 가스온수 보일러 관련 표준만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콘덴싱 방식에 대응하기 어려움</p> <p>개선</p> <p>기체연료 2등급 보일러 시험방법으로 KS B 8127 (콘덴싱 가스온수보일러)를 추가해 콘덴싱 보일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p> <div data-bbox="331 734 719 913">  <p>가스보일러 (KS B 8109) + 콘덴싱가스보일러 (KS B 8127)</p> </div>	 <p>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 개정안</p> <p>개정전</p> <p>살균제 및 살조제 사용가능 주성분 함량기준 중 기존 시험법으로 분리 측정이 어려운 항목*이 있어, 기준 합리화가 필요함</p> <p>* 살균제 주성분 중 수산화칼륨과 수산화나트륨 살조제 주성분 중 차아염소산나트륨과 차아염소산칼륨 등</p> <p>개선</p> <p>기존 시험법으로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기준 변경</p> <div data-bbox="979 719 1289 913">  </div>
--	---

<기술규제 기업애로 개선 사례>

 <p>전국호환교통 카드인증 (국토교통부)</p> <p>개정전</p> <p>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 기준이, 모바일을 사용하는 결제시스템에 대응하기가 어려워 기준 개선 필요</p> <p>개선</p> <p>모바일 기술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인증기준을 보완하고 관련 인증기관을 추가로 지정함</p> <div data-bbox="347 1375 703 1563">  </div>	 <p>승강기검사 (행정안전부)</p> <p>개정전</p> <p>승강기 심사 설계심사 시 보완요청에 대한 조치기간이 1개월로 정해져 있으나, 보완을 반영하기에 실질적으로 시간이 부족함</p> <p>개선</p> <p>설계심사 보완기간을 2개월로 늘리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보완</p> <div data-bbox="868 1397 1257 1570">  </div>
---	---

사 업 명
(5)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ODA) (37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협력과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3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ODA)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개도국표준 체계보급지원 (ODA)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표준정책국	배진석		장준규
	사업시행주체	국제표준협력과	043-870-5350		043-870-5402
		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	에너지본부 공기환경센터	이경수	043-753-3181
		한국표준협회	표준협력센터	조서영	02-6240-4593
		FITI 시험연구원	기반활용센터	정우엽	02-3299-8226
		KATRI 시험연구원	해외협력단	문창헌	02-3668-2851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국제개발사업센터	최상협	031-428-757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개도국표준체계 보급지원(ODA)	2,890	2,019	2,019	2,020	2,020	1	0.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890	2,890	2,890 [2,890]	-	-	2,019	2,019	2,019 [2,019]	2,019	2,019 [2,019]	-	-	2,020
·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 효율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 지원	760	760	760 [760]	-	-	594	594	594 [594]	594	594 [594]	-	-	-
·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제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사업	630	630	630 [630]	-	-	480	480	480 [480]	480	480 [480]	-	-	620
· 리오스 국가표준 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 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	700	700	700 [700]	-	-	515	515	515 [515]	515	515 [515]	-	-	300
· 베트남 K-건물에너지 태양광 실증단지 및 국제공인시험소 구축 지원	-	-	-	-	-	-	-	-	-	-	-	-	500
· 표준체계전수협력	800	800	800 [800]	-	-	430	430	430 [430]	430	430 [430]	-	-	600
○ 비목별 분류(합계)	2,890	2,890	2,890 [2,890]	-	-	2,019	2,019	2,019 [2,019]	2,019	2,019 [2,019]	-	-	2,020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2,890	2,890	2,890 [2,890]	-	-	2,019	2,019	2,019 [2,019]	2,019	2,019 [2,019]	-	-	2,02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890	2,890	2,890 [2,890]	-	-	2,019	2,019	2,019 [2,019]	2,019	2,019 [2,019]	-	-	2,020
·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 효율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 지원	760	760	760 [760]	-	-	594	594	594 [594]	594	594 [594]	-	-	-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760	760	760 [760]	-	-	594	594	594 [594]	594	594 [594]	-	-	-
·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제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사업	630	630	630 [630]	-	-	480	480	480 [480]	480	480 [480]	-	-	620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630	630	630 [630]	-	-	480	480	480 [480]	480	480 [480]	-	-	620
· 라오스 국가표준 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	700	700	700 [700]	-	-	515	515	515 [515]	515	515 [515]	-	-	300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700	700	700 [700]	-	-	515	515	515 [515]	515	515 [515]	-	-	300
· 베트남 K-건물일체형 태양광 실증단지 및 국제공인시험소 구축 지원	-	-	-	-	-	-	-	-	-	-	-	-	500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	-	-	-	-	-	-	-	-	-	-	-	500
· 표준체계전수협력	800	800	800 [800]	-	-	430	430	430 [430]	430	430 [430]	-	-	600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800	800	800 [800]	-	-	430	430	430 [430]	430	430 [430]	-	-	6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제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사업)** 미세먼지 대응 제품(공기 청정기, 에어필터, 마스크)의 시험·인증 체계 수립, 시험실무자 및 품질담당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라오스 국가표준 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 라오스 전기용품 제품안전제도와 정량표시상품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인력 및 조직 역량 강화와 시험검사 인프라 지원
- **(베트남 K-건물일체형 태양광 실증단지 및 국제공인시험소 구축지원)**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국제공인시험소 및 품질관리제도 구축, 태양광 실증단지 현지 구축 및 기업진출 지원, 역량강화 및 전문가 양성
- **(표준체계 전수협력)**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자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표준, 인증 제도, 법정계량 등의 표준체계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최근 급증하는 개도국의 기술규제를 완화 또는 사전대응 할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음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 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 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 협력촉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제표준의 조사·연구·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29조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WTO 출범 이후, 자국의 기술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등록하여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려는 세계 각국의 국제표준화활동 강화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02년부터 추진된 「국제표준화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비정기적으로 개도국과 협력 사업을 진행

- 하지만 최근 개도국은 국가필수인프라의 표준인증체계의 부재로 불량제품 유통 등으로 인한 자국민의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무역활성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표준 체계 확립을 위해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여 해외사업 확대 추진

- * 우리 기업들도 개도국이 표준화, 적합성평가 등의 표준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시장 진입·확대에 어려움 직면
- 또한, 동 사업은 2010년 12월 21일 발표한 ODA 선진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 (2011~2015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이행과 관련된 공익사업으로, '11년 기획재정부에서 심의·승인되었고, 기재부의 요구의 따라 2012년부터 「국제표준화활동지원사업」의 내역사업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추진
- * OECD 개발원조위원회 신규 공여국이자, G20 서울 정상회의 의장 수입국으로써, 개도국에 한국의 선진화된 표준체계를 보급하는 공적원조사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2~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143	2,036	2,890	2,019	2,02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보조사업자(공모)
- 사업 수혜자 : 개발도상국 정부 및 시험기관, 우리 수출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 제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사업	보조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 원	62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라오스 국가표준 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	보조	한국표준 협회	300	100	
베트남 K-건물 에너지효율성 향상사업 시험소 구축지원	보조	공모	500	100	
표준체계 전수협력	보조	공모	600	10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 제품 시험 인프라 구축 사업 :

(2025) 480 → (2026) 620백만원, +29.1%

- (요구)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 제품(공기청정기, 에어필터, 마스크) 시험 인증 체계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품질관리 체계 구축 지원
- (산출) ('26) 620백만원(4차년도 사업비)

* 에어필터 시험인프라 구축	('26) 370백만
* 컨설팅 및 인건비 등 사업운영비	('26) 156백만
* 교육 프로그램 운영	('26) 56백만
* 국제공동세미나 개최	('26) 38백만

○ 연도별 사업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계
소요예산	300	630	480	620	2,030

(2) 라오스 국가표준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 :

(2025) 515 → (2026) 300백만원, △41.7%

- (요구) 제품안전 및 정량인증제도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라오스 유통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기반 마련
- (산출) ('26) 300백만원(4차년도 사업비)

*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제도 개선(파견·초청교육, 교육자료 개발 등)	('25) 110백만
* 제품안전 인증 시험·검사장비(제품안전 장비 구입 및 이전비 등)	('25) 100백만
*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정책홍보 지원 등)	('25) 90백만

○ 연도별 사업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소요예산	500	700	515	300	300	2,315

(3) 베트남 K-건물일체형 태양광 실증단지 및 국제공인시험소 구축지원 :

(2025) 0 → (2026) 500백만원, 순증

- (요구)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국제공인시험소 및 품질관리제도 구축, 태양광 실증단지 현지 구축 및 기업진출 지원, 역량강화 및 전문가 양성

- (산출) ('26) 500백만원(1차년도 사업비)

* 건물형태양광발전시스템(BIPV) 현지 실증 및 기업진출 지원	('26) 20백만
* BIPV 국제공인시험소 구축 컨설팅	('26) 75백만
* 시험장비 구축 및 시스템 운영	('26) 370백만
* 역량강화 및 전문가 양성	('26) 35백만

○ 년도별 사업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6)	2차년도 (2027)	3차년도 (2028)	4차년도 (2029)	5차년도 (2030)	계
소요예산	500	1,195	1,080	1,010	800	4,585

(4) 표준체계전수협력 : (2025) 430 → (2026) 600백만원, +39.5%

- (요구) 국내 초청교육, 교육자료 제작비, 차량임대료, 통역료, 기타관리비용 등 '26년 표준체계전수협력 내내역사업 신규(1개) 및 계속(3개) 지원
- (산출) ('26) 600백만원

(단위: 백만원)

내내역사업명	구분	'25 예산	산출내역
페루 수소산업 분야 시험인증 및 정책 역량강화 지원	신규	100	○ 시험인증정책 전문역량 분석 및 계획 수립 : 30 ○ 전문가 파견 : 20 ○ 수소산업 표준인증 기술교류회 개최: 30 ○ 사업운영비 : 20
르완다 섬유·가죽 분야 시험·검사 역량강화 지원	계속	200	○ 전문인력 양성 교육 : 100 ○ 세미나개최 등 사업홍보 : 35 ○ 사업운영비 : 65
우즈베키스탄 섬유분야 표준·인증 역량강화 지원,	계속	100	○ 전문인력 양성 초청교육 : 30.5 ○ 세미나개최 등 현지교육 : 51.0 ○ 사업운영비 : 18.5
인도네시아 전기차 충전기 관리시스템 역량강화 지원	계속	200	○ 전문인력 양성 초청교육 : 57.3 ○ 세미나개최 등 현지교육 : 84.38 ○ 사업운영비 : 58.32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19	<p>○ 민간경상보조(320-01) : 2,019,000천원</p> <p>1.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 시험소 설립 지원(594,000천원) 가. 인건비 : 127,500천원 나. 시험장비 및 시스템 구축 : 388,000천원 다. 표준컨설팅 및 전문가 현지파견 : 31,000천원 라. 역량강화 및 제도컨설팅 : 47,500천원</p> <p>2.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 제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사업 (480,000천원) 가. 기업 네트워크 프로그램 및 운영비 : 31,000천원 나. 표준컨설팅 및 현지파견 : 84,600천원 다. 한국형 시험인프라 구축 : 330,200천원 라.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 34,200천원</p> <p>3. 라오스 국가표준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515,000천원) 가. 제도개선방안/시험소 운용요령 개발 등 정책컨설팅: 70,000천원 나. 정량인증/제품안전 장비구입 및 이전 : 177,000천원 다. 전문인력 양성교육: 116,000천원 라. 사업운영비 및 제도홍보 지원: 152,000천원</p> <p>4. 표준체계전수협력(430,000천원) 가. 르완다 섬유, 가죽분야 시험, 검사 역량강화 지원 : 130,000천원 나. 우즈베키스탄 섬유분야 표준, 인증 역량강화 지원 : 130,000천원 다. 인도네시아 전기차 충전기 관리시스템 역량강화 지원 : 170,000천원</p>	2,020	<p>○ 민간경상보조(320-01) : 2,020,000천원</p> <p>1.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 제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사업 (620,000천원) 가. 에어필터 시험인프라 구축 : 370,000천원 나. 컨설팅 및 인건비 등 사업운영비 : 156,000천원 다. 교육프로그램 운영 : 56,000천원 라. 국제공동세미나 개최 : 38,000천원</p> <p>2. 라오스 국가표준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300,000천원) 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제도 개선: 110,000천원 나. 제품안전 인증 시험/검사장비 : 100,000천원 다.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90,000천원</p> <p>3. 베트남 K-건물일체형 태양광 실증단지 및 국제공인시험소 구축지원(500,000천원) 가. 건물형태양광발전시스템(BIPV) 현지 실증 및 기업진출 지원 : 20,000천원 나. BIPV 국제공인시험소 구축 컨설팅 : 75,000천원 다. 시험장비 구축 및 시스템 운영 : 370,000천원 라. 역량강화 및 전문가 양성 : 35,000천원</p> <p>4. 표준체계전수협력(600,000천원) 가. 페루 수소산업 분야 시험인증 및 정책 역량강화 지원 : 100,000천원 나. 르완다 섬유, 가죽분야 시험, 검사 역량강화 지원 : 200,000천원 다. 우즈베키스탄 섬유분야 표준, 인증 역량강화 지원 : 100,000천원 라. 인도네시아 전기차 충전기 관리시스템 역량강화 지원 : 200,000천원</p>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프로젝트 지표	상대국 표준체계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달성률 (단위: %)	목표	-	-	100	100	100	전년도 확정된 사업 수행년도 ODA시행계획에 따른 프로젝트 사업 세부계획을 고려하여 산출	프로젝트 사업 당해년도 시행계획(인프라, 시험장비 구축) 대비 달성률	해당국 기관자료
		실적	-	-	100	-	-			
		달성도	-	-	100	-	-			
공통 지표	상대국 표준체계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단위: 건)	목표	-	-	10	10	10	전년도 확정된 사업 수행년도 ODA시행계획 에 따른 협력대상 국가 수를 감안하여 산출	ODA 협력국의 관리자·실무자 대상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건수	초청연수 전문가파견 결과보고서 등
		실적	-	-	17	-	-			
		달성도	-	-	170	-	-			
	국내기업 상대국 진출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단위: 건)	목표	-	-	3	3	3	전년도 확정된 사업 수행년도 ODA시행계획 에 따른 협력대상 국가 수를 감안하여 산출	ODA 시행계획에 따른 국내기업 상대국 진출 지원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등 프로그램 운영 건수	네트워크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등
		실적	-	-	7	-	-			
		달성도	-	-	233	-	-			
	상대국 표준체계 제도도입 준비 및 완료 (단위: 건)	목표	7	7	7	6	7	전년도 확정된 사업 수행년도 ODA시행계획 에 따른 협력대상 국가 수를 감안하여 산출	ODA 협력국의 표준제도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 및 마스터플랜 수립·제도 도입 건수	해당국 기관자료
		실적	7	7	8	-	-			
		달성도	100	100	114	-	-			
	성과평가 종합점수 (단위: 점)	목표	13	13	14	14	14	종합점수가 '성공적' 등급으로 평가되는 14점을 기준	해당년도 성과분석 진행한 국가의 종합점수 평균	성과분석 및 수원국 만족도 조사 보고서 등 「ODA 평가등급제 시행지침」 기준
		실적	16.2	17.0	17.3	-	-			
		달성도	125	130	124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년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p>▶(표준체계 전수협력) 4개국 대상 협력사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르기스스탄) 법·제도 정착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시장조사 시뮬레이션 실시 및 결과 피드백, 섬유제품 시험·분석 능력 구축 지원 등 - (에티오피아) 섬유분야 표준화정책 개선로드맵 개발, 전문인력 시험역량강화 교육, 시험인력 양성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 등 - (인도네시아) 계량공무원(중앙/지역) 적합성평가 심화교육, OIML 기준 시험실 컨설팅, 산업계 이해관계자 대상 법정계량 활동 전파 등 - (베트남) 공동합의체 구성·운영, 시험·인증 제도 기초(안) 마련, 연구원 운영 인력양성(초청), 태양광모듈 시험인증센터 운영 컨설팅 등 <p>▶(협력타당성조사)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2개국과 신규협력사업 기획 및 타당성 조사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에너지효율 건물설계기준 보급 지원 기획 및 타당성조사 - (베트남) 유해물질 관리표준화 역량강화 기획 및 타당성조사 <p>▶(국제공인 시험센터 구축)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표준 및 에너지효율등급제도 컨설팅) 에어컨 관련 국제표준(또는 한국산업표준) 도입 및 에어컨 에너지효율등급제도 개정 컨설팅 - (시험장비 구축 지원) 시험소 실시설계 및 기초 인프라 시공 컨설팅,장비 및 기자재 세부 구축계획 수립 지원, 장비 및 기자재 발주·입찰 - (전문인력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 관리자 및 실무자 초청연수(10명 규모), 시험 장비·기자재 검수 및 시운전을 위한 전문가 파견
2023	<p>▶(표준체계 전수협력) 3개국 대상 협력사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티오피아) 섬유분야 표준화정책 개선로드맵 개발, 전문인력 시험역량강화 교육, 시험인력 양성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 국제공인시험기관 획득 지원 등 - (인도네시아) 계량공무원(중앙/지역) 적합성평가 심화교육, OIML 기준 시험실 컨설팅, 산업계 이해관계자 대상 법정계량 활동 전파 등 - (베트남) 공동합의체 구성·운영, 시험·인증 제도 기초(안) 마련, 연구원 운영 인력양성(초청), 태양광모듈 시험인증센터 운영 컨설팅 등 <p>▶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표준 및 에너지효율등급제도 컨설팅) ISO 5151 국제표준 기술 사항, 우즈베크 에너지효율등급인증 개선을 위한 ISO 16358 기반 기술 데이터 산출 컨설팅 - (시험장비 구축 지원) 시험장비 관부가세 면제 합의(우즈베크 관세당국), 에어컨 시험소 건물 리모델링 및 시험장비 기초 구조물 제작/현지 설치 - (전문인력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 관리자 및 실무자 초청연수(10명 규모), 한-우즈베크 표준/적합성 분야 공동세미나 개최 <p>▶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 제품 시험 인프라 구축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기관(인도네시아 산업부, 표준청, 시험기관) 관리자급 9명(중앙부처 차관 보급 1명, 과장급 3명 포함) 국내 초청 연수 - 한국형 마스크 시험인프라(Particle Photometer 외 7개 시험 장치) 구축 - 국내 표준에 부합화된 인니 마스크 시험 표준 제개정(안) 마련 <p>▶ 라오스 국가표준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인프라 구축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마크, L-마크 인증제도 운용방안 및 근거 법령 개정방안 컨설팅 - L-마크 검사 및 교정장비 설치·구축 - Q마크, L-마크 전문가 파견을 통해 해당 분야 관리자·실무자 대상 교육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어컨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산출 확대 연구 - ISO/IEC 17025 품질문서 작성 및 시험장비 교정 ▶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 제품 시험 인프라 구축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청정기 및 에어필터 현지도입 표준 선정 - 인니 시험기관에 최적화된 품질문서 및 시험 불확도 추정보고서 개발 ▶ 라오스 국가표준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인프라 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시스템 구축 및 장비 유지 보수 이론/실습 교육 - DOSM 담당관 초청연수(Q마크 5명, L마크 5명, PM 1명) ▶ (표준체계 전수협력) 3개국 대상 협력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르완다) 현지 제품품질인증제도 현황 조사 및 양국 공동협의체 구성 제안 - (우즈베키스탄) 현지 표준인증체계 정책조사, 전문가 파견 교육 및 교재 제작 - (인도네시아) 인니 전기차 충전기 관련 법령 현황 조사분석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인시험소 인정 획득 및 에어컨 국제공인시험소 개소식('25.3.) 등 ▶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 제품 시험 인프라 구축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O/IEC 17025 마스크 국제공인시험소 인정 획득('25.05) 등 ▶ 라오스 국가표준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인프라 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L마크 관련 법령 컨설팅 및 경영시스템 문서 구축 등 ▶ (표준체계 전수협력) 3개국 대상 협력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르완다) 르완다 표준청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자료 제작(교안 14종, 영상교재 5종) - (우즈베키스탄) 산업계 자문위원회 운영 및 섬유시험·검사 교육 동영상 제작 - (인도네시아) 인니 전기차 충전기 관련 이해고나계자 인식제고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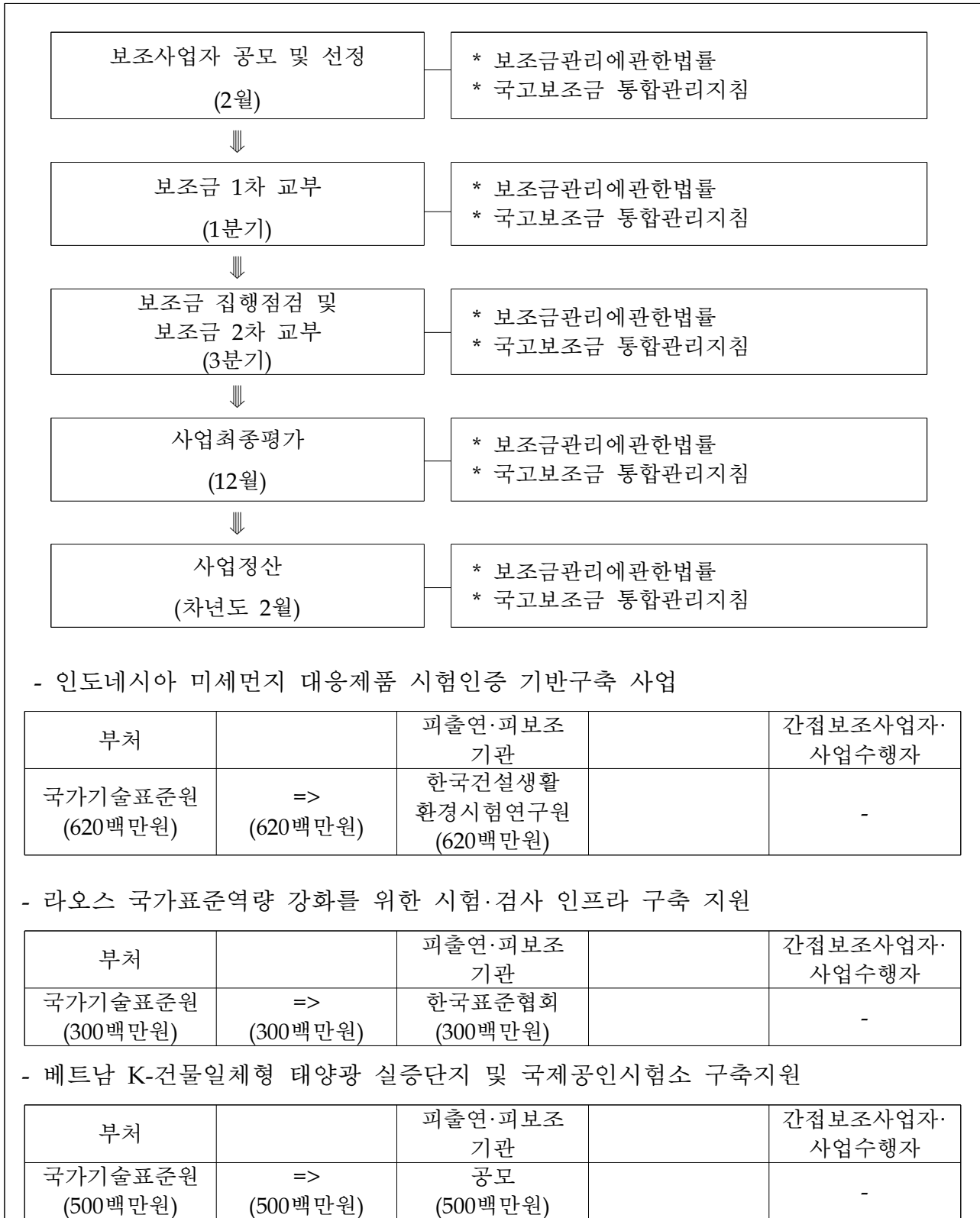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 한국형 표준, 인증제도, 법정계량 등 표준체계 전수협력 및 국제공인 시험센터 구축지원을 통해 개도국 산업발전 지원
- ▶ 한국 표준체계의 확산을 통한 사전 기술규제 대응 및 수출시장 확대 기대
 - 수원국 내 한국형 표준·인증체계 시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인증기관 수출시장 확대
 - 신남방, 신북방, 아프리카 등 표준 및 기술규제 공무원대상 역량강화 교육(초청, 전문가 파견 또는 영상교재 제작을 통한 비대면 교육) 추진
 - *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표준·시험인증·계량 체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우리나라의 인증마크를 별도 시험인증 절차 없이 개도국이 수용하도록 추진
- ▶ ISO/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
 - 수원국 내 국가대표 표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활동 위상 제고
 - 협력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국제표준 제안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 의장국 및 간사국 진출확대 등을 통해 국제표준 강국으로 도약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표준체계 전수협력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국가기술표준원 (600백만원)	=> (600백만원)	FITI시험연구원 (200백만원)		-
		KATRI 시험연구원 (100백만원)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200백만원)		
		공모 (100백만원)		

8) 중기재정계획 상 년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890	2,019	2,020	3,505	3,680	
2025~2029		2,019	2,020	2,540	2,667	2,8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한국형 제도 전수를 통해 개도국에 만들어지는 시험검사시장에 국내 시험기관이 진출하기 위해 공동시험소, 시험검사 대행, 성적서 인정 등을 추진
 - * 개도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수출시 외국에 의존하던 시험검사업무를 현지에서 실시하여 비용·시간을 절감, 가격경쟁력 확보 가능
- 개도국을 대상으로 우리의 표준·인증체계를 전수하는 맞춤형 협력사업 추진
 - * 협력 타당성조사, 표준체계 전수협력, 인프라구축 등 체계적인 개도국 표준·인증 지원
 - (1단계) 우리의 표준·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한 지원 가능한 개도국 협력사업 조사
 - (2단계) 전문가방문을 통해 국가표준화능력 제고를 위한 기본적 컨설팅 제공
 - (3단계) 공동연구,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통한 제도도입 지원 및 시험인프라 구축지원
- 초청교육, 공동연구를 통한 제도컨설팅 등 표준·인증체계 도입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시험인증산업 진출을 위한 시험소 설립 등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발굴하여,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제고
 - 특히 ODA 중점협력국 및 전략적 신흥시장국을 대상으로 긴밀한 협력 사업 발굴 확대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 결과 : (사업방식 변경) 효율적인 사업(ODA사업)추진을 위해 내역사업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이후 보조사업자를 지정사업자로 등록하여 내역사업을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 개선 : 내역사업 개시년도에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후 지정사업자로 등록하여 계속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사업의 효율성을 확보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년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143	-	2,143	-	-	-	2,143	1,382	64.5	64.5	-	761
2023	2,036	-	2,036	-	-	-	2,036	2,036	100	100	-	-
2024	2,890	-	2,890	-	-	-	2,890	2,890	100	100	-	-
2025	2,019	-	2,019	-	-	-	2,019	2,019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2,143	2,143	1,382	1,382	-	1,382	1,382	-	-	64.5
2023	2,036	2,036	2,036	2,036	-	2,036	2,036	-	-	100
2024	2,890	2,890	2,890	2,890	-	2,890	2,890	-	-	100
2025. 12월기준	2,019	2,019	2,019	2,019	-	2,019	2,019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액 761백만원(집행잔액) - 미얀마 군부 쿠데타(21년 2월)장기화로 인해 미얀마 ODA 사업(미얀마 섬유분야 국제공인 시험센터구축 지원, 미얀마 국제공인 건설재료 시험센터 설립 / 총 761백만원) 지원 중단 ※ 미얀마 사태 장기화 여부 불투명으로 인해 예산 미집행(21년과 동일)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1

관련법령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국제표준의 조사·연구·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참고2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제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사업

□ 사업개요

- (수원국) 인도네시아, 반둥 (Indonesia, Bandung)
- (사업기간/ 예산) '23~'26(4년), '26년 6.2억원 (총예산 20.3억원)
- (지원내용) 미세먼지 대응 제품(공기청정기, 에어필터, 마스크) 관련 ①국가표준 제개정, ②시험소 구축, ③역량강화 지원 및 국제공동세미나 개최

년도별	예산(원)	주요 사업내용
'23년도	3억	▶ 공동합의체 구성 및 운영, ▶ 시험·인증 제도(안) 마련 ▶ 시험 인프라 구축 지원(기초설계, 장비선정) 등
'24년도	6.3억	▶ 공동합의체 운영, ▶ 마스크 시험소 구축 ▶ 공기청정기 시험 인프라 입찰, 국내검수 ▶ 마스크 시험 인력 양성 교육 및 국제공동세미나 개최
'25년도	4.8억	▶ 공기청정기 표준 제정 및 시험소 구축 ▶ 마스크 국제공인시험소(ISO/IEC 17025) 인정 ▶ 공기청정기 시험 인력 양성 교육 및 국제공동세미나 개최
'26년도	6.2억	▶ 에어필터 표준 제정 및 시험소 구축 ▶ 공기청정기·에어필터 국제공인시험소(ISO/IEC 17025) 인정 지원 ▶ 에어필터 시험 인력 양성 교육 및 국제공동세미나 개최

□ 추진계획

- (표준·제도 컨설팅) 에어필터 국가표준 제정 및 **ISO/IEC 17025** 국제 공인시험소 인정 지원
- (시험 인프라 구축) 에어필터 시험소 구축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
- (역량강화 및 성과확산) 국내 전문가 현지 파견을 통한 3개 품목별 시험자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전수, 국제공동세미나 개최

□ 기대효과

- (수원국) 정부 주도 미세먼지 대응 제품 품질관리를 통한 저가·저품질 제품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국민 안전 확보
- (공여국) 표준·인증 관련 국제적 영향력 확대 및 상호 위탁 시험 체결을 통한 우리 기업 현지 진출(인증 애로사항 해소) 지원

참고3

리오스 국가표준 역량강화를 위한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

□ 사업개요

- (수원국) 라오스, 비엔티안 (Laos, Vientiane)
- (사업기간/ 예산) '23~'27(5년), '26년 3억원 (총예산 23.15억원)
- (지원내용) ① Q마크 인증제도(제품안전관리제도), ② L마크 인증제도 (포장상품 정량표시인증제도)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년도별	예산(원)	주요 사업내용
'23년도	5억	(공통) 마스터플랜 수립, 시험장비 구축, 역량강화 교육
'24년도	7억	▶ ISO/IEC 17067 및 IAF 교육, 인증제도 시험·검사 환경 구축 ▶ 정량인증제도(품목/단위별) 검사기준 제정 지원, 역량강화 교육, 시험장비 및 시스템(현장검사용설비) 구축
'25년도	5.15억	▶ 시험장비 및 시스템(전기시험평가시스템) 구축, 인증제도 스킴·국제표준 컨설팅 ▶ 정량 인증 적용업체 선정, 역량강화 교육, 시험 장비 및 시스템(부피측정용 장비) 구축
'26년도	3억	▶ 인증제도 스킴 컨설팅, 시험장비 및 시스템(주파수/자기장) 구축 ▶ 정량상품 검사기준 고시 제정 지원, 정량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시험장비 및 시스템(부피측정용 장비) 구축 및 교정
'27년도	3억	▶ 부처별 인증마크 통합 방안 지원, 시험 장비 및 시스템 (신뢰성 시험시스템 장비) 구축 ▶ 정량상품 검사기준 고시 제정 완료, 정량관리자 실습 교육

□ 추진계획

- (Q마크 인증제도) 마스터플랜 수립, 제품인증기관 기초교육 실시, 전기시험 평가시스템 기반 마련 장비 구입(항온항습 챔버)
- (L마크 인증제도) 마스터플랜 수립, 정량담당자·정량인증 평가사 인력양성, 시험장비 구입 등

□ 기대효과

- 체계화된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을 통해 불량·위해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 및 시장 유통을 방지하여 수입 제품에 대한 품질 제고
- 위해제품 사건·사고, 시험검사 데이터 등 체계적인 통계 관리의 중요성 인식을 통해 시험·검사 전문가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참고4

베트남 K-건물일체형 태양광 실증단지 및 국제공인시험소 구축지원

□ 사업개요

- (수원국) 베트남, 하노이 탄쭈언군 (Vietnam, Hanoi Thanh Xuan)
- (사업기간/ 예산) '26~'30년(5년) / '26년 5.0억원 (총예산 45.85억원)
- (지원내용) ①BIPV 시험평가 장비 및 품질관리제도 구축, ②BIPV 국제공인 시험소 운영 시스템 구축 컨설팅, ③국제공인시험소 자격 획득 컨설팅, ④건물일체형 태양광 실증단지 구축 및 기업진출 지원 ⑤역량강화 및 전문가 양성

년도별	예산(원)	주요 사업내용
'26년도	5.0억	▶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 시험평가 장비 구축 착수 ▶ 베트남 시험소 건물 리모델링(리모델링 설계 지원/리모델링 베트남 실사)
'27년도	11.95억	▶ BIPV 국제공인시험소 건물 리모델링 및 기초 인프라 공사 완료 ▶ 건물일체형 태양광모듈 제품 시험장비 구축(10종 이상) ▶ 국제공인시험소 자격 컨설팅(시험 장비별 SOP, 기술문서 작성 등)
'28년도	10.8억	▶ BIPV 국제공인시험소 경영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컨설팅 ▶ 건물일체형 태양광모듈 제품 시험장비 구축(8종 이상)
'29년도	10.1억	▶ 건물일체형 태양광 실증단지 현지 구축 착수 ▶ 건물일체형 태양광모듈 제품 시험장비 구축(2종 이상)
'30년도	8.0억	▶ 건물일체형 태양광 실증단지 현지 구축 완료(BIPV 및 ESS 등) ▶ 국제공인시험소 인정평가(ISO/IEC 17025) 및 자격 획득

□ 추진계획

- (표준·제도 컨설팅) 한-베 사업수행위원회(PIU) 구성·운영 및 베트남 BIPV 품질관리제도 제·개정 컨설팅
- (시험 인프라 구축)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 시험장비 구축(22종 이상) 및 국제공인시험소 자격 획득 컨설팅(시험 장비별 SOP, 기술문서 작성 등)
- (역량강화 및 성과확산) 전문가 양성 및 국내 제품의 태양광 실증 단지 현지 구축, 한-베 기업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 기대효과

- 베트남 태양광 설비 품질관리제도 확립 및 지속가능 운영을 통한 재생에너지 경제적 가치 향상 및 보급 확대, 국내기업 베트남 진출 지원

참고5**페루 수소산업 분야 시험인증 및 정책 역량강화 지원****□ 사업개요**

- (수원국) 페루, 리마 (Peru, Lima)
- (사업기간/ 예산) '26~'28년(3년) / '26년 1억원 (총예산 5억원)
- (지원내용) ①수소산업 시험·인증 역량 강화, ②수소산업·기술 시험인증 전문가 양성 체계 수립, ③세계수소산업연합회 가입 및 참석지원 등

년도별	예산(원)	주요 사업내용
'26년도	1억	▶ 협력기관 시험·인증·정책 전문역량 분석 및 협력계획 수립 ▶ 한-페루 양국 간 수소산업 표준인증 기술교류회 개최 ▶ 전문가파견
'27년도	2억	▶ 초청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세계수소산업연합회(GHIAA) 총회 참석 등 국제협력 지원
'28년도	2억	▶ 초청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한-페루 양국 간 수소산업 표준인증 기술교류회 개최

□ 추진계획

- (표준·제도 컨설팅) ①협력기관 시험·인증·정책 전문역량 분석 및 협력계획 수립, ②세계수소산업연합회(GHIAA) 가입 및 참석 지원 등
- (역량강화 및 성과확산) ①교육자료 제작 및 전문가 파견 교육, ②한-페루 수소산업 표준인증 기술교류회 개최(한국) 등

□ 기대효과

- 한국형 수소 품질관리체계 전수를 통한 수원국 국민 안전 확보 및 국내 수소전문기업의 페루 新시장 진출 등 상생의 협력 체계 구축
- * 양국 시험소 간 상호인정을 통한 국내 수출기업 인증비용 약 3억 원/년 절감 효과
- * 수소생산·운송·저장 시스템 설비 및 제품 수출 확대를 통한 매출액 약 300억 원 증가 예상, 수출기업 생산유발 효과를 통한 약 20인/년 일자리 창출

참고6**르완다 섬유·가죽분야 시험·검사 역량강화 지원****□ 사업개요**

- (수원국) 르완다, 키갈리 (Rwanda, Kigali)
- (사업기간/ 예산) '24~'26년(3년) / '26년 2억원 (총예산 5.3억원)
- (지원내용) ①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지원, ②섬유·가죽 분야 표준 시험 역량강화 지원(초청 및 파견교육), ③제품안전관리제도 개선 지원, ④표준화·적합성평가 선진화, ⑤한-르 공동성과확산 세미나 개최

년도별	예산(원)	주요 사업내용
'24년도	2억	▶ 섬유·가죽 분야 실무자 역량강화 지원(시험법, 적합성, 표준화 등) ▶ 양국 공동세미나 개최 및 사업 추진성과 공유
'25년도	1.3억	▶ 실무자 역량강화 및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컨설팅 지원 ▶ 양국 관계기관 대상 성과공유 및 사업 홍보
'26년도	2억	▶ 실무자 역량강화 지원 및 지원성과 검증 ▶ 3개년 사업성과 공유 및 양국 정부·산업 간 교류 지원

□ 추진계획

- (역량강화 및 성과확산) 현지 실무자 초청연수 및 전문가 파견교육 지원, 사업 추진성과 공유 및 양국 교류를 위한 공동행사 개최
- (제도개선 및 기관인정) 현지 제품안전관리제도 개선 및 표준화, 적합성평가 선진화 지원으로 국제시장에서도 기관 신뢰성 확보
- (산업기반 구축) 보유 인프라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현지 섬유·가죽 산업의 성장을 위한 전문 컨설팅 및 교류 증진 지원

□ 기대효과

- (수원국) 시험·인증·표준 실무자의 역량강화로 역내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확보 지원
- (공여국) 신규 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및 대외 협력이미지 제고

참고7**우즈베키스탄 섬유분야 표준·인증 역량강화 지원****□ 사업개요**

- **(수원국)**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Uzbekistan, Tashkent)
- **(사업기간/ 예산)** '24~'26년(3년) / **'26년 1억원** (총예산 4.3억원)
- **(지원내용)** ①섬유제품 품질·안전관리체계 기반 조성 지원, ②섬유시험 및 의류 완제품 검사 역량 강화 교육 ③한-우즈벡 공동 세미나 개최

년도별	예산(원)	주요 사업내용
'24년도	2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년 인력양성 추진계획 수립 ▶ 섬유 품질·안전관리제도 교육(파견교육 2회, 30명) ▶ 섬유 유해물질 분석 시험 역량강화 교육(초청교육 2회, 10명) ▶ 한-우 공동 세미나 개최(1회)
'25년도	1.3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 품질·안전관리제도 교육(현지교육 1회, 15명) ▶ 섬유시험(물리, 이화학, 기능성) 역량 강화 교육(초청교육 1회, 5명) ▶ 한-우 공동 세미나 개최(1회)
'26년도	1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 품질·안전관리제도 개선 컨설팅 결과 설명회(파견교육 1회 10명) ▶ 의류 완제품 검사 역량 강화 교육(초청교육 1회, 5명) ▶ 한-우 공동 세미나 개최 1회

□ 추진계획

- **(표준·제도 컨설팅)** 섬유 품질·안전관리체계 기반조성 지원을 위한 교육 지원, 수원국 제도 개선을 위한 컨설팅 보고서 작성 및 설명회 개최
- **(역량강화 및 성과확산)** 시험 역량강화 교육, 현지 진출 국내기업 애로 지원 간담회, 세미나 개최, ISO COPOLCO 연계 국제 커뮤니티 홍보

□ 기대효과

- **(수원국)**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시험 역량 강화를 통해 자국 내 섬유제품 품질관리 체계 안정화 및 고부가가치 수출 품목 육성 기반 마련
- **(공여국)** 섬유제품 시험·검사 및 품질관리제도 기반조성 지원을 통한 현지 진출 국내기업의 무역장벽 해소 및 비용 절감 효과 창출 기대

참고8**인도네시아 전기차 충전기 관리시스템 역량강화 지원****□ 사업개요**

- (수원국) 인도네시아 (Indonesia)
- (사업기간/ 예산) '24~'26년(3년) / '26년 2억원 (총예산 5.2억원)
- (지원내용) 전기차 충전기 관련 ①계량법 선진화 방안 현지 교육, ②형식승인·검정 장비 교육, ③정책관리자 초청 교육

년도별	예산(원)	주요 사업내용
'24년도	1.5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충전기 관리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의 선진화 방안 교육 ▶ 전기차 충전기 형식승인·검정을 위한 장비구성 기본 교육(현지 교육 2회 15명) ▶ 전기차 충전기 관리 정책 담당자 초청교육(1회 5명)
'25년도	1.7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충전기 관리를 위한 계량법 하위법령 및 관련 규정의 선진화 방안 교육 ▶ 전기차 충전기 형식승인·검정을 위한 시험소 구축방안 교육(현지교육 2회 15명) ▶ 전기차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 실무담당자 초청교육(1회 8명)
'26년도	2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 기술기준, 운영 관리제도 교육(현지 교육 2회 15명) ▶ 전기차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 실무담당자 초청교육(1회 10명) ▶ 사업 최종 성과 공유회 개최

□ 추진계획

- (표준·제도 권설텍) 전기차 충전기 시험소 구축방안 마련,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 운영방안 교육,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지원 등
- (역량강화 및 성과확산) 형식승인 및 검정 교육컨텐츠 마련 및 실무담당자 초청연수, 사업성과 공유 워크숍 개최 등

□ 기대효과

- 인니 전기차 충전기 관리체계 선진화를 통해, 급속충전 충전량 오차 관리(5% 이상 → 2.5%이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약 694억 절감
- 인니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안정적 관리에 따른 국민 신뢰도 향상에 따른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를 통해 연간 300만톤의 CO2 감축 기대

사 업 명						
(6)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37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2	국가기술표준원		110	117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제품안전정책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03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최형기	류지영 연구관	-
		제품안전정책국	043-870-5420	043-870-5421	
	사업시행주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제품시장관리실	신영철 실장	070-5223-1428
시중유통제품안전성조사(내역사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최형기	박순영 연구관	류지영 연구관
		제품시장관리과	043-870-5420	043-870-5427	043-870-5421
	사업시행주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제품시장관리실	신영철 실장	070-5223-1428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구축 및 확산(내역사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최형기	이광은 연구관	-
		제품시장관리과	043-870-5420	043-870-5428	
	사업시행주체	대한상공회의소	데이터정보팀	김성열 팀장	02-6050-148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7,211	4,364	4,364	4,374	4,374	10	0.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211	7,211	7,211 [7,211]	-	-	4,364	4,364	4,364 [4,364]	4,364	4,364 [4,364]	-	-	4,374	
·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3,466	3,466	3,466 [3,466]	-	-	4,024	4,024	4,024 [4,024]	4,024	4,024 [4,024]	-	-	4,034	
· 위해상품판매차단시 스템구축 및 확산	340	340	340 [340]	-	-	340	340	340 [340]	340	340 [340]	-	-	340	
· 불법·불량제품단속	1,595	1,595	1,595 [1,595]	-	-	-	-	-	-	-	-	-	-	
· 리콜이행점검	531	531	531 [531]	-	-	-	-	-	-	-	-	-	-	
·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등	500	500	500 [500]	-	-	-	-	-	-	-	-	-	-	
· 안전기준준수대 상감시체계 구축	779	779	779 [779]	-	-	-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7,211	7,211	7,211 [7,211]	-	-	4,364	4,364	4,364 [4,364]	4,364	4,364 [4,364]	-	-	4,374	
· 시 험 연 구 비 (210-13)	3,134	3,134	3,134 [3,134]	-	-	3,684	3,684	3,684 [3,684]	3,684	3,684 [3,684]	-	-	3,684	
· 사 업 추 진 비 (240-01)	20	20	20 [20]	-	-	20	20	20 [20]	20	20 [20]	-	-	20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4,057	4,057	4,057 [4,057]	-	-	660	660	660 [660]	660	660 [660]	-	-	67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211	7,211	7,211 [7,211]	-	-	4,364	4,364	4,364 [4,364]	4,364	4,364 [4,364]	-	-	4,374	
·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3,466	3,466	3,466 [3,466]	-	-	4,024	4,024	4,024 [4,024]	4,024	4,024 [4,024]	-	-	4,034	
- 시 험 연 구 비 (210-13)	3,134	3,134	3,134 [3,134]	-	-	3,684	3,684	3,684 [3,684]	3,684	3,684 [3,684]	-	-	3,684	
- 사 업 추 진 비 (240-01)	20	20	20 [20]	-	-	20	20	20 [20]	20	20 [20]	-	-	20	
- 민간경상보조 (320-01)	312	312	312 [312]	-	-	320	320	320 [320]	320	320 [320]	-	-	330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위해상품판매차단시 스템구축 및 확산	340	340	340 [340]	-	-	340	340	340 [340]	340	340 [340]	-	-	340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340	340	340 [340]	-	-	340	340	340 [340]	340	340 [340]	-	-	340
· 불법·불량제품단속	1,595	1,595	1,595 [1,595]	-	-	-	-	-	-	-	-	-	-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1,595	1,595	1,595 [1,595]	-	-	-	-	-	-	-	-	-	-
· 리콜 이행점검	531	531	531 [531]	-	-	-	-	-	-	-	-	-	-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531	531	531 [531]	-	-	-	-	-	-	-	-	-	-
·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등	500	500	500 [500]	-	-	-	-	-	-	-	-	-	-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500	500	500 [500]	-	-	-	-	-	-	-	-	-	-
· 안전기준준수대 상감시체계 구축	779	779	779 [779]	-	-	-	-	-	-	-	-	-	-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779	779	779 [779]	-	-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시중에 유통중인 어린이제품·생활용품·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와 유통매장으로부터 리콜제품 실시간 차단 등을 통해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시중 유통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를 시험·검사하여,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리콜처분, 개선조치 권고 등 행정조치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09년 시스템을 구축, 환경부, 식약처 등과 연계하여 공동 운영 중으로, 각 부처별 안전성조사에서 적발된 위해제품(리콜제품) 정보를 시스템에 즉시 등록하여 동 시스템과 연계된 전국 약 28만여개('25년 11월 기준) 유통매장에서 실시간 유통차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 제9조(안전성조사 등)
 - 제9조의4(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 제10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 제19조(제품안전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5조(안전인증 등)
 - 제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 제10조(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등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제6조(안전성조사)
 - 제9조(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 제10조(어린이제품 수거등의 명령)
 - 제17조(안전인증 등)
 -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 제25조(공급자적합성 확인 등)

② 추진경위

- '03. 5월 대통령 「어린이 안전원년」 선포, 어린이 안전사고 경감 지시
- '04. 4월 감사원은 공산품안전관리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 지적
- '04. 6월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 수립
- '05.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05.12.23. 공포)
- '06. 1월 공산품안전망구축사업(세부사업) 시작
- '06.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
- '06.12월 공산품안전관리종합 5개년계획 수립
- '08. 5월 대통령 대국민담화 “식품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도록 모든 조치강구”

- '08. 9월 대통령 “성인용품보다 어린이용을 빨리 조치하여 유통을 중단해야함”
- '09. 1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09.1.1.)
- '09. 7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 '10.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확산 본 사업 추진
- '11. 2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11.2.5.)
- '11. 3월 제1차 제품안전종합 3개년계획 수립
- '16. 5월 제1차 어린이안전종합 기본계획 수립
- '16. 6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
- '17. 2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 '17.12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전기준준수대상 신설)
- '18. 3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설)
- '19. 12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리콜이행점검, 보완명령 등 규정 신설)
- '23. 9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
- '25. 12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해외직구 제품 안전성조사 근거 마련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6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844	7,211	7,211	4,364	4,374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민간보조사업자(한국제품안전관리원, 대한상공회의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보조	한국제품 안전관리원	330백만원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4 (운영재원)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보조	대한상공 회의소	340백만원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19조 (제품안전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 (2025 본예산) 4,364백만원 → (2026 예산) 4,374백만원, 10백만원 증액

① 시중유통제품안전성조사

: (2025 본예산) 4,024백만원 → (2026 예산) 4,034백만원, 10백만원 증액

- (요구) 해외직구 제품 및 시중 유통제품 대상 안전성조사를 통한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① 시험연구비(210-13) 3,684백만원(안전성조사 5,650건 시료구입비 및 시험수수료 3,593백만원+ 일반수용비 67백만원, 국내여비 24백만원) ※ 해외직구 1,000건, 국내유통제품 5,650건(전년동)
- ② 사업추진비(240-01) 20백만원 (전년동)
- ③ 민간경상보조(320-01) 330백만원, 10백만원 증액
 - 시료구입 및 인계 인건비 278백만원(5명×55.6백만원), 출장비 17백만원(5명×66회×5만원), 차량유지비 23백만원(임차료 18, 유류비 5) 운영비 13백만원

②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구축 및 확산

: (2025 예산) 340백만원 → (2026 예산) 340백만원, 전년동

- (요구) 리콜제품 정보를 전국 유통매장에 통보하여 실시간 판매 차단하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및 활용 매장수 확산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민간경상보조(320-01) 340백만원
 - * 시스템유지보수 88백만원, 사업운영비 14백만원, 중소유통매장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138백만원, 시스템 홍보 10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364,000	○ 시험연구비(210-13) : 3,684,099천원 가. 시료구입비 (785,350천원) • 5,650건×139,000원=785,350천원 나. 시험수수료 (2,808,050천원) • 5,650건×497,000원=2,808,050천원 다. 일반수용비 (66,680천원) • 안전성조사결과 분석 보고서(7,560천원) : 12,000원×70부×9개 분야=7,560천원 • 안전성조사결과 위해 내용 홍보(8,000천원) : 2,000,000원×2종×2회=8,000천원 • 제품안전관련 회의 수당(36,000천원) : 150,000원×10명×24회=36,000천원 • 리콜제품 리플렛 및 신중 위해제품 현황 보고서(15,120천원) : 12,000원×140부×9개 분야=15,120천원 라. 국내여비 (23,760천원) • 근무지내 출장(4,000천원) : 20,000원×10개 제품 품목×2명×10회=4,000천원 • 근무지외 출장(19,760천원) : 76,000원×13개 제품 품목×2명×10회=19,760천원 마. 조정재원 (259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9,901천원 가. 제품안전자문위원회 간담회(9,200천원) • 400,000원×23회=9,200천원 나. 실무회의 및 리콜제품전시회(10,800천원) • 400,000원×27회=10,800천원	4,374,000	○ 시험연구비(210-13) : 3,684,099천원 가. 시료구입비 (785,350천원) • 5,650건×139,000원=785,350천원 나. 시험수수료 (2,808,050천원) • 5,650건×497,000원=2,808,050천원 다. 일반수용비 (66,680천원) • 안전성조사결과 분석 보고서(7,560천원) : 12,000원×70부×9개 분야=7,560천원 • 안전성조사결과 위해 내용 홍보(8,000천원) : 2,000,000원×2종×2회=8,000천원 • 제품안전관련 회의 수당(36,000천원) : 150,000원×10명×24회=36,000천원 • 리콜제품 리플렛 및 신중 위해제품 현황 보고서(15,120천원) : 12,000원×140부×9개 분야=15,120천원 라. 국내여비 (23,760천원) • 근무지내 출장(4,000천원) : 20,000원×10개 제품 품목×2명×10회=4,000천원 • 근무지외 출장(19,760천원) : 76,000원×13개 제품 품목×2명×10회=19,760천원 마. 조정재원 (259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9,901천원 가. 제품안전자문위원회 간담회(9,200천원) • 400,000원×23회=9,200천원 나. 실무회의 및 리콜제품전시회(10,800천원) • 400,000원×27회=10,800천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다. 조정재원 (-99천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660,000천원 1)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지원(320,000천원) 가. 시료구입 및 인계 인건비(268,000천원) • 53,600,000원×5명=268,000천원 나. 출장비(16,500천원) • 66회×5명×50,000원=16,500천원 다. 차량유지비-임차료(18,000천원) • 2대×750,000원×12개월=18,000천원 라. 차량유지비-유류비(5,415천원) • 2대×25,000km/대×108.3원/km=5,415천원 마. 운영비(12,000천원) • 12,000,000원×1식=12,000천원 바. 조정재원 (85천원) 2)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340,000천원) 가. 시스템유지보수비(88,000천원) • 88,000,000원×1식=88,000천원 나. 사업운영비(14,000천원) • 14,000,000원×1식=14,000천원 다. 시스템기능고도화(51,000천원) • 51,000,000원×1식=51,000천원 라. 중소유통매장용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87,000천원) • 87,000,000원×1식=87,000천원 마. 시스템 홍보 지원(100,000천원) • 100,000,000원×1식=100,000천원		다. 조정재원 (-99천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670,000천원 1)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지원(330,000천원) 가. 시료구입 및 인계 인건비(278,000천원) • 55,600,000원×5명=278,000천원 나. 출장비(16,500천원) • 66회×5명×50,000원=16,500천원 다. 차량유지비-임차료(18,000천원) • 2대×750,000원×12개월=18,000천원 라. 차량유지비-유류비(5,415천원) • 2대×25,000km/대×108.3원/km=5,415천원 마. 운영비(12,000천원) • 12,000,000원×1식=12,000천원 바. 조정재원 (85천원) 2)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340,000천원) 가. 시스템유지보수비(88,000천원) • 88,000,000원×1식=88,000천원 나. 사업운영비(14,000천원) • 14,000,000원×1식=14,000천원 다. 중소유통매장용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138,000천원) • 138,000,000원×1식=138,000천원 라. 시스템 홍보 지원(100,000천원) • 100,000,000원×1식=10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률 (단위: %)	목표	-	-	-	신규	22.0	최근 3년간 평균치(22.0%)로 설정 (하향지표)	(부적합제품수)/ (조사수)×100	내부통계자료
	실적	-	-	-	-	-			
	달성도	-	-	-	-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운용점포수 (단위: 개)	목표	228,000	250,000	252,000	266,000	270,000	대형 유통매장(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은 사실상 보급이 완료·포화상태 전년 대비 매장증가수는 매년 감소, 최근 3년간 평균감소율 46.9%를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Σ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 설치 점포	운용매장으로 부터 확인 (내부자료)
	실적	248,478	259,523	265,513	287,911	-			
	달성도	111.5	103.8	101.0	108.2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p>① 시중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성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4,811개 제품에 대해 조사 실시 - 유해 화학물질 초과 검출 등 238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 <p>②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단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불법의심제품 신고건에 대해 7,889개 업체를 조사하고 3,941개 업체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지자체에 행정조치 요청 등을 실시 * 형사고발(746), 지자체 통보(610), 판매금지요청(2,579), 인증기관통보 (6) <p>③ 제품안전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등 3개 분야에 대해 127,847건 모니터링 실시 - 불법 의심제품 14,434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등 실시 - 온라인 리콜제품 감시 전담요원제 운영 <p>④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총 248,478개 매장(누적)에 시스템 설치 * 시스템 설치매장 수 : '21년(222,481개) → '22년(248,478개) <p>⑤ 안전기준 준수대상 감시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기준 준수대상 안전실태조사 : 780개 제품 안전실태조사 실시 - 부적합 사업자 점검 및 제도 : 519개 업체 - 안전기준준수대상 사업자 제도 홍보 : 1,812개 업체
2023	<p>① 시중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성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4,645개 제품에 대해 조사 실시 - 유해 화학물질 초과 검출 등 234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 <p>②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단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불법의심제품 신고건에 대해 9,744개 업체를 조사하고 4,516개 업체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지자체에 행정조치 요청 등을 실시 * 형사고발(637), 지자체 통보(643), 판매금지요청(3,231), 인증기관통보(5) <p>③ 제품안전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등 3개 분야에 대해 161,483건 모니터링 실시 - 불법 의심제품 12,285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등 실시 - 온라인 리콜제품 감시 전담요원제 운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 <p>④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총 259,523개 매장(누적)에 시스템 설치 * 시스템 설치매장 수 : '22년(248,478개) → '23년(259,523개) <p>⑤ 안전기준 준수대상 감시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기준 준수대상 안전실태조사 : 800개 제품 안전실태조사 실시 - 부적합 사업자 점검 및 제도 : 522개 업체 - 안전기준준수대상 사업자 제도 홍보 : 1,911개 업체

2024	<p>① 시중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성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4,696개 제품에 대해 조사 실시 - 유해 화학물질 초과 검출 등 240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 <p>②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단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불법의심제품 신고건에 대해 9,255개 업체를 조사하고 4,556개 업체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지자체에 행정조치 요청 등을 실시 * 형사고발(790), 지자체 통보(841), 판매금지요청(2,924), 인증기관통보(1) <p>③ 리콜이행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콜대상 사업자의 리콜이행 계획서 작성 상담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1,458건 상담) - 리콜이행점검 1,598건 실시 <p>④ 제품안전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판매여부 170,460건 모니터링 - 불법 의심제품 9,915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등 실시 <p>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총 265,513개 매장(누적)에 시스템 설치 * 시스템 설치매장 수 : '23년(259,523개) → '24년(265,513개) <p>⑥ 안전기준 준수대상 감시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기준 준수대상 안전실태조사 : 700개 제품 안전실태조사 실시 - 부적합 사업자 점검 및 제도 : 454개 업체 - 안전기준준수대상 사업자 제도 홍보 : 2,215개 업체
2025	<p>① 시중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성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5,701개 제품에 대해 조사 실시 - 유해 화학물질 초과 검출 등 222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 <p>②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총 287,911개 매장(누적)에 시스템 설치 * 시스템 설치매장 수 : '24년(265,513개) → '25년(287,911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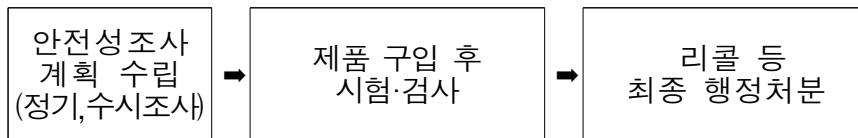
-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통해 위해 제품 적발 및 유통을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 부적합률이 높은 제품을 중점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강화하는 등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강화
 - 지속적인 해외직구제품 안전성조사로 불량제품 국내 유입 방지 및 국민 안전 확보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보급을 확대하여 위해제품(리콜제품)의 실시간 유통차단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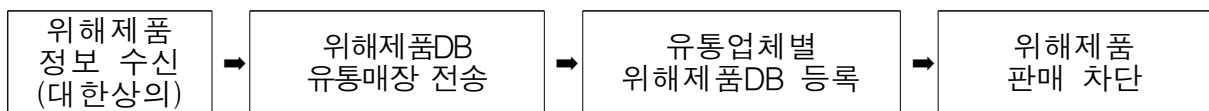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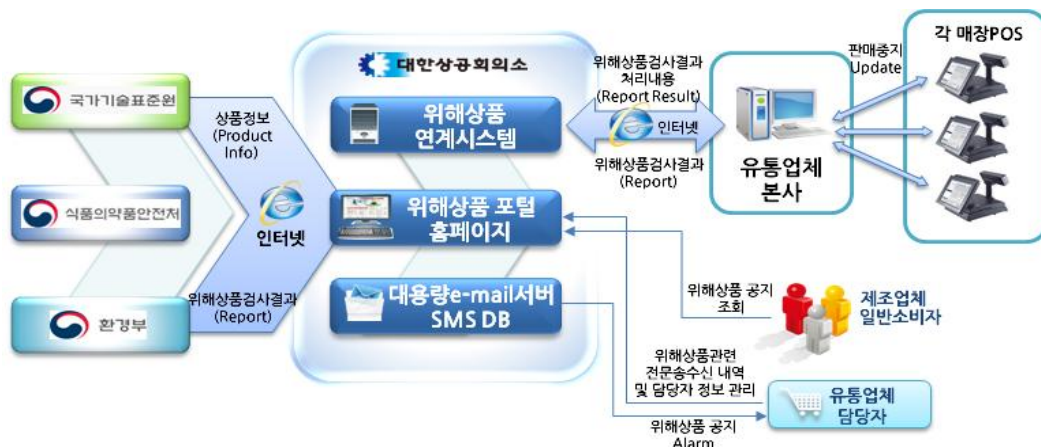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①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등)



- (계획 수립) 연간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조사품목, 조사시기 등)
- (시험·검사) 시중유통 제품을 구입하여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적합 여부 조사
- (행정처분) 리콜명령 등 행정조치
 - 최초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및 재시험 등 신청 기회 부여 후 최종 행정처분

②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제품안전기본법 제19조 등)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7,211	7,932	8,929	8,745	9,182	
2025~2029		4,364	5,198	6,180	7,354	8,75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외직구제품의 안전관리단계를 간소화하고, 산업통상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안전성조사 결과 대외공표 근거 마련(산중위, 국정감사)
-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외직구제품에 대한 산업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안전성조사 결과 대외공표 근거 마련 등 해외직구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원입법으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26.6.3시행)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시중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등 행정조치로 소비자 보호
- 특히 해외직구 시장 확대*에 따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전기·생활·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추진하여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
 - * 해외직구 거래액(통계청): ('22)5.3조 → ('23)6.8조 → ('24)8조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미구축 중소·영세 유통사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 보급을 확산·지원하고,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위해제품(리콜제품) 유통을 실시간 차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보조사업 연장평가('25.5)

- (결과) 사업운영 개선
- (결과 요약) 위해 제품의 시장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민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지속적 정책 지원 필요, 성과지표 달성도는 매년 100%를 상회하므로 보다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및 성과지표 개선 등 검토 필요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재원분담 적정성, 사업방식의 적정성, 사업추진주체의 명확성,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 등이 모두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재원분담 적정성, 사업방식의 적정성, 사업추진주체의 명확성,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 등이 모두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제품안전과 시장감시를 위한 사업목적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성과지표와 계량화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예산집행률이 우수하고 예산집행 효율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091	△ 247	6,844	-	-	-	6,844	6,843	99.9	99.9	-	1
2023	7,211	-	7,211	-	-	-	7,211	7,211	100.0	100.0	-	-
2024	7,211	-	7,211	-	-	-	7,211	7,211	100.0	100.0	-	-
2025	4,364	-	4,364	-	-	-	4,364	4,364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3,245	3,245	3,245	3,245	-	3,245	3,245	-	-	100.0
2023	4,057	4,057	4,057	4,057	-	4,057	4,057	-	-	100.0
2024	4,057	4,057	4,057	4,057	-	4,057	4,057	-	-	100.0
2025. 12월기준	660	660	660	660	-	660	66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제2차 추경 편성시 '22 본예산중 절감 가능한 경상경비 일부 감액: △ 247백만원 * 시험연구비 246백만원, 사업추진비 1백만원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제품안전관리제도 개요

- (개요)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출시 전·후의 **안전관리제도**를 운영 중

* 관련법 :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시장출시 前)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은 **위해도***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할 경우 시장 진입 및 유통 허용 등 **사전안전관리**

*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안전기준준수)로 관리

< 안전관리 수준, 절차 및 품목현황 >

구분		인증 등 준수절차	안전관리품목		
			전기	생활	어린이
인증	①안전인증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인증기관)→KC 표시	36	5	4
	②안전확인	제품시험(안전확인시험기관)→KC 표시	64	26	17
	③공급자적합성	자체 제품시험 可→KC 표시	76	16	14
	④안전기준준수	KC 표시 안함(별도 사전 인증 규제 없음)	-	27	-
	합계	285개 [전기·생활(250개)/어린이(35개)]	176	74	35
검사	안전성검사 (2개) [재사용전지 2개 품목]	제품 안전성검사(안전성검사기관)→KC 표시	2	-	-
	합계	287개 [전기·생활(252개)/어린이(35개)]	178	74	34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

- (시장출시 後) 시중 제품에 대한 **위해요인** 확인 시 제품수거, 유통차단, 개선 권고, 소비자주의보 발령 등 **사후안전관리**

* 안전성 조사, 제품사고조사, 불법제품조사, 해외리콜제품 대응 등

01	안전성조사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법적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조사후 조치(리콜처분, 개선권고 등)
02	제품사고조사	동일 유형의 제품사고 재발방지 및 위해 확산방지 등을 위해 사고발생 제품에 대한 사고원인규명 조사후 조치(소비자주의보 등)
03	불법제품조사	미인증·허위표시 제품에 대해 불법제품 신고 내용확인 및 제품정보 검색 등 조사후 조치(판매금지 등)
04	해외리콜제품대응	해외 리콜제품 등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정보 분석후 조치(수입통관 차단 등)

참고 2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①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25년)

※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6~'28년)은 '26년 초 발표예정

비전

국민생활 안심을 위한 체계적인 제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목 표	소비자의 안전성은 UP!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DOWN!	(안전인증 품목수) 45 개('22년) (170개 세부품목) → 10% 축소 조정('25년)
		(안전기준 정비) 52 건('22년) → 전수 검토·개정('25년)
		(제품사고조사) 73 개사('22년) → 150 개사('25년)
		(위해차단시스템) 235,129 개('22년) → 246,000 개('25년)
		(제품안전 모니터링) 127,847 건('22년) → 150,000 건('25년)
		(제품안전정보 활용) 350,000 건/일('22년) → 380,000 건/일('25년)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1	[제도] 기업·소비자 Win-Win을 위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전관리대상 규제수준 정비 ② 안전기준 전면 재검토 및 일제 정비 ③ 민간주도 안전관리 기반 마련 ④ 국제적 환경변화 신속 대응
2	[사전] 소비자 안전강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관리제품 규제공백 해소를 위한 체계 정비 ② 신기술·신수요제품 안전관리 ③ 사회적 배려계층 안전관리 지원 ④ 제품 리스크평가 활성화
3	[사후] 충충한 시장관리를 위한 사후관리의 디지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데이터 기반 제품사고조사 추진 체계 구축 ② 위해상품 유통·판매 차단 강화 ③ 안전성조사 원스톱 업무처리시스템 구축 ④ 온라인쇼핑몰 위해우려 유통제품 안전관리
4	[기반] 효율적인 제품안전 관리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내외 제품안전 채널 협력 확대 ② 제품안전 기술개발 및 역량강화 ③ 맞춤형 제품안전정보 제공 및 활용 확대 ④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역량강화

②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5~'27년)

비전 · 목표

선제적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로 어린이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저감

- 어린이제품 인증간수 대비 사고건수 비율 20% 이하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안전관리

-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조사 연간 500건 이상
- 유해제품 공표 및 국내유입 차단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 안전기준 정비 (제·개정 10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 안전친화기업 10개社 선정
- 어린이제품안전교육 로드맵 수립

4대 전략 · 9대 과제

1.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 ① 어린이 제품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제도 고도화
- ②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선

2.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안전관리 강화

- ①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 ② 국내에서의 안전한 어린이제품 유통환경 조성

3.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 ①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도입
- ② 융복합·신기술 제품 대응을 위한 안전기준 조사연구센터 신설

4.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 ①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우수기업 지원
- ② 기업 친화적 인증 기반 제도 개선
- ③ 어린이제품 안전인식 제고

참고 3

사업성과 및 관련 통계

①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및 리콜 현황

(단위: 건(모델))

구분		2022				2023				2024				2025			
		전기 용품	생활 용품	어린이 제품	계	전기 용품	생활 용품	어린이 제품	계	전기 용품	생활 용품	어린이 제품	계	전기 용품	생활 용품	어린이 제품	계
전체 조사		1,640	721	2,450	4,811	1,604	704	2,337	4,645	1,584	762	2,350	4,696	1,796	1,058	2,847	5,701
처분건수	리콜명령	45	59	129	233	45	57	122	224	55	49	130	234	46	44	128	218
	리콜권고	1	4	0	5	2	8	0	10	1	4	1	6	1	2	1	4
	개선권고	297	167	354	818	211	183	255	649	191	182	322	695	172	156	322	650
	합계	343	230	483	1,056	258	248	377	883	247	235	453	935	219	202	451	872

* 리콜명령과 리콜권고 건수 : 안전성 조사 발표일 기준

※ 연도별 리콜조치 상위 10대 품목 (자발적 리콜 포함)

(단위: 건, %)

순위	2023		2024		2025	
	품목	조치수	품목	조치수	품목	조치수
1	완구	29 (10.7)	완구	21 (8.8)	아동용 섬유제품	39 (15.4)
2	기타 어린이제품	19 (7.0)	아동용 섬유제품	21 (8.8)	완구	27 (10.7)
3	아동용 섬유제품	15 (5.5)	어린이용 가죽제품	17 (7.1)	플러그 및 콘센트	20 (7.9)
4	기타 생활용품	15 (5.5)	어린이용 장신구	11 (4.6)	전지	10 (4.0)
5	가구(762mm 이상 서랍장등)	11 (4.1)	플러그 및 콘센트	9 (3.8)	어린이용 가죽제품	9 (3.6)
6	어린이용 가죽제품	11 (4.1)	방한용 패션용, 스포츠용 마스크	9 (3.8)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9 (3.6)
7	플러그 및 콘센트	8 (3.0)	학용품	8 (3.3)	방한용 패션용, 스포츠용 마스크	8 (3.2)
8	속눈썹 열 성형기	8 (3.0)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8 (3.3)	어린이용 가구	7 (2.8)
9	전동 키포드	7 (2.6)	어린이용 안경테 (선글라스 포함)	7 (2.9)	유아용 섬유제품	6 (2.4)
10	방한용 패션용 스포츠용 마스크	7 (2.6)	휴대용 레이저용품	6 (2.5)	직류전원 장치	6 (2.4)
...	기타	141 (52.0)	기타	149 (51.2)	기타	112 (44.3)
계		271 (100)		266 (100)		253 (100)

* 어린이제품은 품목, 생활 및 전기용품은 세부품목 기준으로 작성

②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현황

-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총 287,911개 매장(누적, '25년말 11월기준)에서 시스템 활용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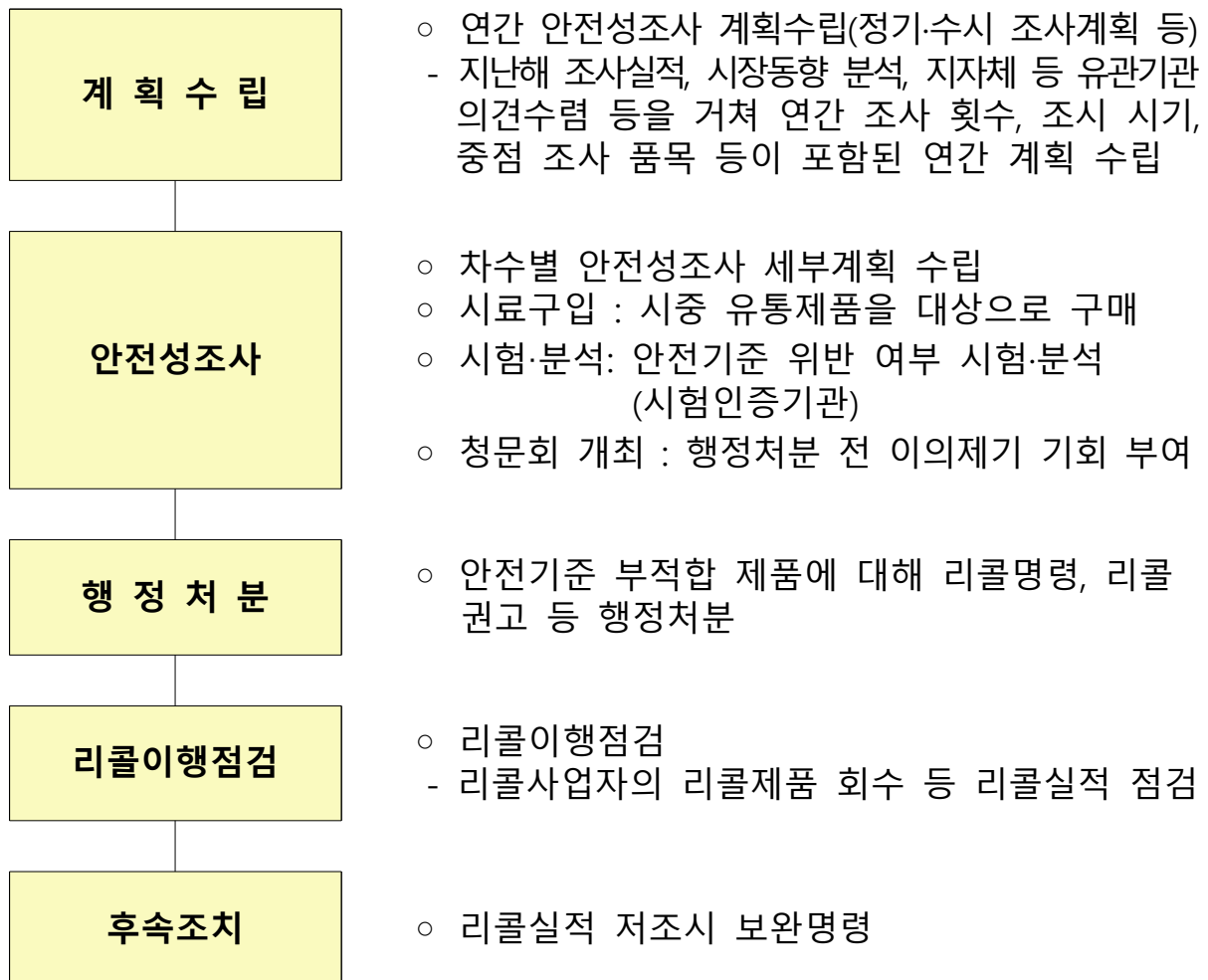
참고 4

안전성 조사 내용 설명

□ 개요

- 유통 중인 제품을 구매하여 제품인증을 받을 당시의 품질과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조사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 조사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리콜 명령 등 행정처분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
- * 제품과 관련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여부에 관하여 검증·검사 또는 평가

□ 안전성 조사 절차



참고 5

제품 리콜 내용 설명

□ 제품 리콜 개요(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제품에 취하는 **제품결함 시정조치*** (이하 ‘리콜’이라 함)

*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로 규정되어 있으나, 통상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의미

< 제품 리콜의 주요 방법 >

- 수리 : 결함제품의 부품을 새로운 부품으로 교환하는 등의 조치로 결함의 완전한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실시하는 방법
- 교환 : 결함이 없는 신제품으로 바꿔주는 방법
- 환급 : 제품의 구입가를 되돌려주는 방법
- 파기 : 판매가 금지되거나 회수된 제품을 소멸시키는 방법

□ 리콜의 종류

- 리콜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
 - **(리콜 명령)** 중앙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라 사업자가 리콜 실시
 - **(리콜 권고)** 중앙행정기관의 권고에 따라 사업자가 리콜 실시
 - **(자발 리콜)** 사업자가 제품의 위해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리콜 실시

구분	리콜명령 (공표 포함)	리콜 권고	자발 리콜
주체	사업자(중앙행정기관 명령)	사업자(중앙행정기관 권고)	사업자
조건	① 안전성조사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② 리콜권고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③ 중대한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부품등을 임의 변경한 경우	① 결함 등으로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중대한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리콜 계획이 미흡할 경우 보완 요구 가능
보고	① 결과보고서 제출	① 수락 통지서(리콜계획 등) 제출 ② 결과보고서 제출	① 위해성 인지시 즉시 보고 ② 리콜계획서 제출 ② 결과보고서 제출

사 업 명
(7)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 (3736-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	110	117
명칭					산업·중기·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6	304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무역기술장벽대응기반강화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IT기반기술 표준정보화 체계구축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노재홍	유용재	-
		기술규제대응국			
	사업시행주체	기술규제협력과	043-870-5550	043-870-5562	-
		직접수행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IT기반기술표준 정보화체계구축	2,366	806	806	1,452	1,328	522	64.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 액	불용 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 예상 액	불용 예상 액		
									이월액 예상 현액	제외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89	2,389	2,366	-	23	806	806	802	806	802	-	4	1,328	
·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480	480	476	-	4	480	480	476	480	476	-	4	1,004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85	185	182	-	3	166	166	166	166	166	-	-	166	
· 전산장비 및 SW구매	160	160	159	-	1	160	160	160	160	160	-	-	158	
· 자·능·형·표·준·인·증·플·랫폼·구·축	1,564	1,564	1,549	-	15	-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2,389	2,389	2,366	-	23	806	806	802	806	802	-	4	1,328	
· 관리용역비(210-15)	665	665	658	-	7	646	646	642	646	642	-	4	1,170	
· 일반용역비(260-01)	1,514	1,514	1,499	-	15	-	-	-	-	-	-	-	-	
· 자산취득비(430-01)	210	210	209	-	1	160	160	160	160	160	-	-	15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389	2,389	2,366	-	23	806	806	802	806	802	-	4	1,328	
·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480	480	476	-	4	480	480	476	480	476	-	4	1,004	
- 관리용역비(210-15)	480	480	476	-	4	480	480	476	480	476	-	4	1,004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85	185	182	-	3	166	166	166	166	166	-	-	166	
- 관리용역비(210-15)	185	185	182	-	3	166	166	166	166	166	-	-	166	
· 전산장비 및 SW구매	160	160	159	-	1	160	160	160	160	160	-	-	158	
- 자산취득비(430-01)	160	160	159	-	1	160	160	160	160	160	-	-	158	
· 자·능·형·표·준·인·증·플·랫폼·구·축	1,564	1,564	1,549	-	15	-	-	-	-	-	-	-	-	
- 일반연구비(260-01)	1,514	1,514	1,499	-	15	-	-	-	-	-	-	-	-	
- 자산취득비(430-01)	50	50	50	-	0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범부처 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기업이 시장진출시 필요한 국가별·제도별·품목별로 ❶국내·외 표준인증 데이터 확충, ❷
지능검색·챗봇서비스 제공, ❸협업환경 조성을 통해 현장 중심 맞춤형 표준인증 정보서비스 제공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업무포털·홈페이지 등 5개 시스템)에 대한 기능개선·유지
보수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대국민 정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기술표준원
직원들의 행정·정책업무 수행 지원

- (전산장비 및 SW 구매)

국가기술표준원 업무포털 및 홈페이지 구현을 위한 PC 백신 라이선스 비용, 사무용
SW 및 전산 인프라 도입·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② 추진경위

- '07.12월 : IT 기반의 국가표준 정보화 전략('08~'12) 수립
- '09.2월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부처별 실행계획('09~'12)에 반영
- '12.7월 :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VIP 보고(국경위)
* 국가표준·인증 선진화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필요성 공감 및 조속히 구축 지시
- '13.5월 : 국정과제 '정부3.0'(행자부 주관)의 세부 사업과제로 반영
- '14.3월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VIP 지시 및 후속조치 이행

- *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불합리한 것은 의견제시 가능토록 실시간 정보 제공할 것
- '14.5월 :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
 - *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운영체계 도입방안 보고 시 범부처 통합정보시스템 조기구축 요구
- '14.6월 : 총리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 *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 보고 시 범부처 통합정보시스템 중요성 언급
- '15.11월 : 총리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인증제도 혁신방안)
- '21. 7월 : 국정현안점검회의 보고(기업활력제고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혁신방안)
 - * 현장중심의 지능형 기술규제 정보서비스 추진
- '24. 2월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고(인증규제 정비방안)
 - * 정부 인증제도 관리 시스템 강화(범정부 인증제도 정보 등록관리 - 이나라표준인증)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850	2,759	2,389	806	1,32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기업(중소기업 및 신생벤처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1) 범부처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2025) 480 → **(2026예산) 1,004백만원, 524백만원**
 -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e-나라표준인증 포털) 관제 및 통합 DB 운영관리 지원
 - 산출 :
 ① 지능형표준인증플랫폼운영(524백만원) : 434백만원(지능화개발비4,338백만원×요율10%)+52백만원(상용SW389백만원×요율13.5%)+38백만원(표준인증빅데이터대응6.25백만×6.1MM)
 ② 정부표준인증협업시스템운영(480백만원) : 426백만원(협업시스템개발비5,530백만원×요율7.7%)+54백만원(상용SW797백만원×요율6.9%)
- (2)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2025) 166 → **(2026예산) 166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전문업무포털(5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지원
 - 산출 : 시스템 및 인프라 유지보수인건비 166백만원(3명×12개월×4.61백만)
- (3)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구매 : (2025) 160 → **(2026예산) 158백만원, △2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서버·PC 등 보안관리 SW 라이선스 비용 및 장비 구매
 - 산출 : 14백만원(PC백신500개×0.028백만원)+9백만원(윈도우서버 백신30개×0.3백만원)+5백만원(리눅스서버백신5개×1백만원)+17백만원(보안SW라이선스 500개×0.034백만원)+15백만원(SSL3개×5백만원)+65백만원(백업장비1대×65백만원)+33백만원(스토리지교체1대×33백만원)

806

20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 관리용역비(210-15) : 646백만원

가.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480백만원

- 유지보수 인건비 : 426백만원(개발비5,530백만원×요율7.7%) + 54백만원(상용SW797백만원×요율6.9%)

나.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66백만원

- 유지보수 인건비 185백만원(3명×12개월×4.61백만)

○ 자산취득비(430-01) : 160백만원

가. 전산장비 및 업무용SW도입 160백만원

구분	단가(백만)	수량	금액(백만)
PC 백신(V3) 라이선스	0.028	500개	14
보안 SW(내·외망) 라이선스	0.034	500개	17
윈도우 서버백신 라이선스	0.3	30개	9
리눅스 서버백신 라이선스	1	5개	5
웹보호 라이선스(SSL)	3	5개	15
한글 워드프로세서(최신판)	0.1	250개	25
MS 워드프로세서(최신판)	0.3	250개	75
합 계(백만단위 미만 반올림)			160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 관리용역비(210-15) : 1,170백만원

가.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1,004백만원

- 지능형 유지보수 인건비 : 524백만원((지능개발비4,338백만원×요율10%)+52백만원(상용SW389백만원×요율13.5%)+38백만원(표준인증빅데이터대응6.25백만×6.1MM))
- 협업시스템 유지보수 인건비 : 426백만원(개발비5,530백만원×요율7.7%)+54백만원(상용SW797백만원×요율6.9%)

나.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66백만원

- 유지보수 인건비 185백만원(3명×12개월×4.61백만)

○ 자산취득비(430-01) : 160백만원

가. 전산장비 및 업무용SW도입 158백만원

구분	단가(백만)	수량	금액(백만)
PC 백신(V3) 라이선스	0.028	500개	14
보안 SW(내·외망) 라이선스	0.034	500개	17
윈도우 서버백신 라이선스	0.3	30개	9
리눅스 서버백신 라이선스	1	5개	5
웹보호 라이선스(SSL)	3	5개	15
백업장비 도입	65	1대	65
스토리지 교체	33	1대	33
합 계(백만단위 미만 반올림)			158

1,328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표준인증 정보서비스 이용건수 (단위: 만건)	목표	668	785	864	951	1,155	최근 3개년 실적치 평균 및 전년도 실적 증가율 감안	연간 포털검색 이용건수 (로그기록 기준)	e-나라표준인증 로그분석을 통한 데이터 수집 합산
	실적	1,112	1,167	1,167	1,186	-			
	달성도	166.5	148.6	148.6	124.7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①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표준인증 정보서비스 안정적 유지보수 시행(가동율 99.9% 목표) ②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행(가동율 99.9% 목표) ③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서버 등 HW 구매, 백신 등 업무용 SW 구매 운영 ④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구축(1차) -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서비스 개시(스마트 검색·챗봇 상담 서비스 등, '23.5~)
2023	①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표준인증 정보서비스 안정적 유지보수 시행(가동율 99.9% 목표) ②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행(가동율 99.9% 목표) ③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서버 등 HW 구매, 백신 등 업무용 SW 구매 운영 ④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구축(2차) - 사업계획 수립, 보안성 검토, 사전협의(행안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등 조달발주 - 정보화 사업 위탁감리 조달발주 및 SW분리 발주 -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사업자 선정(6월) 및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24.1월~)
2024	①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표준인증 정보서비스 안정적 유지보수 시행(가동율 99.9% 목표) ②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행(가동율 99.9% 목표) ③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서버 등 HW 구매, 백신 등 업무용 SW 구매 운영 ④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구축(3차) - 사업계획 수립, 보안성 검토, 사전협의(행안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등 조달발주 - 정보화 사업 위탁감리 조달발주 및 SW분리 발주 -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사업자 선정(6월) 및 시스템 개발 추진 중('24.12월 완료)
2025	①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표준인증 정보서비스 안정적 유지보수 시행(가동율 99.9% 목표) - 지능형 표준인증 챗봇·검색 서비스 제공(IP기준 접속건수 : 1,186만건) ②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행(가동율 99.9% 목표) ③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서버 등 HW 구매, 백신 등 업무용 SW 구매 운영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이나라표준인증) 이용자수 **연간 1,000만건 이상 상회(로그기록 기준)** 달성
- 기업 시장진출 촉진을 위해 국내외 표준인증 데이터 확충, 정보 접근성·가독성 확대 운영
- 해외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서비스 세일즈 및 수출 적극 추진

* 국가기술표준원 ODA 지원사업, 국제표준화기구(ISO) 개도국 지원사업 등 활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국가기술지원원	-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 및 이행과제 작성 * 시스템 수요분석 및 사업환경 분석 등을 통해 이행과제 발굴·분석 및 수행전략 마련
↓		
② 사업자 선정 및 착수보고회	국가기술지원원 사업자	-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및 당해연도 사업 수행계획 발표
↓		
③ 중간보고	국가기술지원원 사업자	-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 중간점검
↓		
④ 사업결과 보고	국가기술지원원 사업자	-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조사 - 연간 시스템 운영 결과 평가 및 피드백

* 관련법령 : 소프트웨어진흥법, 전자정부법,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운영지침 등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389	806	1,328	2,750	2,750	
2025~2029		806	1,328	1,463	1,463	1,46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국회 / 감사 등 지적 및 조치사항 없음
- '20년 언론보도(e-나라표준인증 포털 1억페이지뷰 돌파 등)
- '23년 언론보도(e-나라표준인증 포털 지능형 서비스 개편, '23.5)
-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협업 우수 포상(장려상, 이나라표준인증-전자관보연계, '23.10)
-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우수 과제 선정('23.11)
- '24년 언론보도(e-나라표준인증 포털 빅데이터 서비스 개편, '24.2)
- '24년 언론보도(e-나라표준인증 포털 기업 시연회 개최, '24. 4)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는 지능형 표준인증 통합 플랫폼 구축
 - 국내 표준인증 정보수요 충족, 해외 표준인증 정보수요 확대를 위해 신규 DB 구축
 - 정형 데이터 수집 체계에서, 정형+비정형 데이터 수집 등 빅데이터 체제 구축
 - 부처간 표준인증 정보공유 및 활용확산을 위한 협업시스템 고도화 및 연계확산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지능형 서비스 도입 및 비대면 서비스 확산
 - * 실시간 표준인증 상담수요 충족을 위해 인공지능 상담서비스(챗봇) 구축 추진
 - *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 및 수출 진흥을 위한 국내외 인증 맵 서비스 지원
 - *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표준인증 정보서비스 제공

* 표준인증 분야 전문 생성형 AI 서비스 도입 ISP 및 구축 예산 확보 추진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수요자 중심 기능개선으로
원내 행정·정책업무 지원 및 맞춤형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연중)
 - * 표준·제품안전·해외기술규제·시험인증 정책 및 관련정보의 신속한 제공 추진

* 정부 클라우드 전환계획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센터로 전산실 이전 등 고려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 우수사업 : 장관상(2017년)
- 산업부 혁신우수사례 선정(2023년)
- 공무원 우수제안 수상 : 장관상(2023년)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2022년 통합재정사업자율 평가결과 : 우수
- 2023년 통합재정사업자율 평가결과 : 보통
- 2024년 통합재정사업자율 평가결과 : 보통
- 2025년 통합재정사업자율 평가결과 : 보통

13) 부처 건의사항

- 생성형 AI 시대 표준인증 특화형 버티컬 AI 서비스 구축 추진 필요
- * ISP 사업 및 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 추후 증액 요구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850	-	2,850	-	-	-	2,850	2,307	80.9	80.9	461*	82
2023	2,759	-	2,759	461*	-	-	3,220	3,145	113.9	97.6	-	75
2024	2,389	-	2,389	-	-	-	2,389	2,366	99.0	99.0	-	23
2025	806	-	806	-	-	-	806	802	99.5	99.5	-	4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적정사업기간) 준수를 위해 용역잔금 이월(정보화 용역사업 2건) 및 사업 완수에 따라 전액 집행('23.1월)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 이월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5조)에 따른 정보화사업 적정사업기간 준수를 위하여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구축' 사업기간 만료일('23.1월말) 검수 후 잔액 지급예정
2023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2024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2025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별첨 참조

□ 추진배경

- 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인증획득 및 관련 표준(기준) 준수**가 시장 진입의 관문 역할
 - 국가별(해외), 부처별(국내) 산재하여 정보 수집에 애로* 호소
 - * 하나의 품목 인증에도 다수의 연결된 표준·인증기준 정보 종합지원 필요
- 국정현안 점검회의 기술규제 혁신방안('21.8, 총리보고) 추진과제*로 기업 현장 중심으로 **표준·인증 정보획득 접근성·편의성 혁신 추진**
 - * 지능화 기반구축('22) → 지능형 서비스 개발('23) → 지능형 서비스 확충('24)

□ 주요 핵심 서비스

“초보자도 전문가 수준으로 이용 가능한 혁신통합 플랫폼 구축”

- **(빅데이터 구축)** 국가표준, 기술기준, 인증제도 정보를 기계가독* 데이터로 전환하여 빅데이터 서비스 인프라 구축**
 - * 문서 내 구조 및 의미를 기계(컴퓨터)가 인식하고 이해하기 쉬운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
- **(지능형 서비스)** 스마트(SMART) 서비스 구축을 통해 **표준·인증 정보의 접근성·가독성·연결성·신속성* 확충** 및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 * 품목 유사도 검색(Search) / 챗봇(Messenger) / 신속맞춤 알람(Alarming) / 검색정보 추천(Recommend) / 지식그래프·맵(Tree) 등
 - ** 사용자 이용 검색 통계, 분야별·기간별 표준·인증 제·개정 통계 등 빅데이터 분석지원
- **(차세대 협업시스템)** 표준·인증 업무처리 효율화 및 부처·기관간 협업 추진을 위한 **범정부 표준·인증 종합정보망 구축**
 - * COMPASS(국제환경규제), TradeNavi(비관세요건), 해외인증시스템, TBT 포털(통보문), 전자관보 시스템(행안부), 국제표준(ISO, IEC) 시스템(국제표준문서) 등 연계 지원

□ 추진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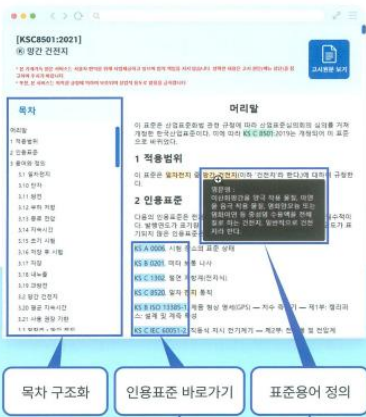
-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공공기관 우수혁신사례 수상('23.10)
- 2023년 행정안전부 우수 공무원제안과제 장관상('23.11)
- 2024년 기획재정부 기술이전·우수사업화 혁신사례 선정('24.3)

<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주요 서비스 현황 >

현장중심의 맞춤형 S.M.A.R.T 서비스

Search 스마트 검색

추진내용
검색어를 입력하면 인증지능이 법정 인증제도 품목(300만여종) 및 표준 **기계가독화** 정보를 활용하여 표준인증 관련 정보를 최적화 된 검색 결과를 제공합니다.



개선효과
기업은 실제 생산·판매하는 품목별 표준인증 정보를 더욱 빠른 시간안에 정보수집이 가능합니다.

현장중심의 맞춤형 S.M.A.R.T 서비스

Messenger 스마트 상담

추진내용
1. 인증대상 여부, 인증 평가기준, 인증 절차 등 인증 획득 과정별 궁금한 사항을 문답식으로 상담합니다.
2. 공산품 전기용품 KS 표준제도 어린이제품 인증제도 관련 상담도 가능합니다.

e나라표준인증 챗봇

안녕하세요! 저는 e나라표준인증 챗봇이에요.
인증제도, 기술기준, 국가표준, 인증절차, 리플, 표시사항, 산업표준제도 및 제품 안전관리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상담해드립니다.
(※ 본 상담자료는 참고용으로 활용되며,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상담을 원하는 **메뉴**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개선효과
표준인증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듯 온라인 상담(챗봇)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장중심의 맞춤형 S.M.A.R.T 서비스

Alarming 스마트 알림

추진내용
국내·외 표준인증 기관으로부터 입수된 최신 뉴스 및 정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합니다.
(150개국 300여개 기관에서 자동 수집된 정보를 품목별로 맞춤 제공)

개선효과
최근 표준인증 기술동향 파악 및 기술장벽에 대응하도록 지원합니다.

국내외 표준인증 기관 누리집(웹사이트)으로 부터 자동 데이터 수집 > 분석 > 저장 > 알림
* 사용자는 간편 메일 등록으로 최신 표준인증 정보 획득 가능



현장중심의 맞춤형 S.M.A.R.T 서비스

Alarming 스마트 알림

추진내용
국내·외 표준인증 기관으로부터 입수된 최신 뉴스 및 정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합니다.
(150개국 300여개 기관에서 자동 수집된 정보를 품목별로 맞춤 제공)

개선효과
최근 표준인증 기술동향 파악 및 기술장벽에 대응하도록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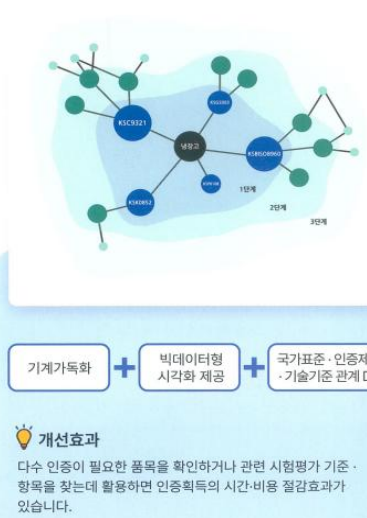
국내외 표준인증 기관 누리집(웹사이트)으로 부터 자동 데이터 수집 > 분석 > 저장 > 알림
* 사용자는 간편 메일 등록으로 최신 표준인증 정보 획득 가능



현장중심의 맞춤형 S.M.A.R.T 서비스

Recommen & Tree 스마트 추천 & 스마트 연결

추진내용
부처별·제도별로 상호 연관된 표준인증 정보를 **빅데이터 기법**으로 추천하여 초보인증 담당자도 검색 한 번으로 품목별 통합 정보 분석이 가능합니다.
* 사회연결망 기법(Social Network Analysis)



개선효과
다수 인증이 필요한 품목을 확인하거나 관련 시험평가 기준·항목을 찾는 데 활용하면 인증획득의 시간·비용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맞춤형 S.M.A.R.T 서비스

해외 기술규제 및 인증 정보 연계 제공

추진내용
TBT 통보문 및 해외 인증 정보를 TBT 포털과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 150여개국 2,000여건의 해외인증 정보 제공
- 국가별 TBT통보문 45,000여건 정보 제공

개선효과
시간·비용 절감 효과

해외인증·기술규제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해외 시장진출을 촉진합니다.



□ 정부 표준·인증 협업시스템 구축배경

- 행안부 전자정부지원사업('14~'16)으로 범부처 차원의 종합정보관리 및 부처간 협업 지원을 위한 「국가표준 인증 통합정보시스템(사업명)」 구축

* 정부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에 대한 통합정보 관리체계 구축으로 표준·인증 중복해소 필요성 강조(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시 애로과제, '14.3.20.)

□ 정부 표준·인증 협업시스템 운영현황(총 7개 시스템 운영 중, '15.3~)

구분	정보시스템 구성·기능	활용부처
① 국가표준 협업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표준(KS) 개발 업무프로세스 지원 - 전문(기술)위원회 기술검토·기록관리 - 국가표준 (예고)고시 관리 / 전자관보연계 - (권한)담당자 / 전문가 / 위원회 관리 * 기계가독형 국가표준 정보체계 고도화 완료('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만여종 * 10개 부처 * 50개 기관
② 국제표준 연계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표준(ISO/IEC) 문서연계 관리 - ISO 문서시스템과 API 연계 - IEC 문서시스템과 API 연계 - 국제표준 문서 검색 및 원문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만여종 * 10개 부처
③ 기술기준 협업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기술기준 문서 통합 정보관리 - 부처별 기술기준(고시) 원문 DB 관리 - 표준 / 인증 DB 연계 데이터 관리 * 기계가독형 기술기준 정보체계 고도화 중('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0여종 * 20여개 부처
④ 정부인증 협업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인증제도 통합 정보관리 - 부처별 인증제도 현황 DB 관리 - 표준 / 인증기준 DB 연계 데이터 관리 * 기계가독형 인증제도 정보관리 고도화 완료('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0여종 * 20여개 부처
⑤ 중복성 검증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기술기준·인증 유사도(%) 제공 - 국가표준 개발시 유사도 검증 지원 - 인증제도 도입시 유사도 검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기관 (표준인증)
⑥ 규제동향 수집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표준인증 동향 정보 수집관리 - 표준인증 동향정보 자동수집·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여건(월간) (메일등록·알림)
⑦ 품목분류 관리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품목 정보수집 관리 - 표준·인증·기술기준 품목 DB 수집·관리 - 품목 분류 및 검색 색인(Inde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만여종

첨부 3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서비스 현황

○ 사업 추진경위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개편 등 기능 고도화, 오픈 플랫폼을 이용한 콘텐츠 확장으로 추가 재원 없이 정책 정보 채널 확대
 - * 국가기술표준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표준·안정 정책 콘텐츠 제작·보급
- 국가기술표준원 정책정보 전달력 확산을 위해 홈페이지 개편 등 대국민 만족도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추진

○ 사업 추진성과

- 국가기술표준원 핵심정책 포토뉴스, 카드뉴스 제작·보급, 각종사업 고시·공고 등 대국민 정책홍보·정보제공 수단으로 활용

< 카드뉴스 제작·보급 >



- 디지털 아카이브(블로그, 유튜브, 포스트 등) 신설 등 국민과 소통을 위한 접점 대폭 확대 추진

- * 국가기술표준원 정책 뉴스를 알기 쉽고 찾기 쉽게 콘텐츠 제작·보급

국가기술표준원 블로그	국가기술표준원 포스트	국가기술표준원 유튜브

참부 4

「백업장비」 및 「스토리지」 도입 필요성

○ 장비도입 추진경위

최근 랜섬웨어 등 보안침해 사고 발생 증가 추세에 따라 이중화·백업정책 개선 필요성 지적에 따라 보완 추진

① 백업시스템 개선사항

- **(현재)** 백업 어플라이언스 장비에만 1차 백업만 진행하여 해당장비 장애발생시 백업데이터를 복구 불가능
 - * 디스크 기반 백업데이터로 랜섬웨어 대비 취약
 - ** 2차 백업 및 데이터 소산을 시급히 조치하도록 보안감사시 연속 지적
- **(개선)** 신규 PTL(Physical Tape Library) 장비 도입하여 2차 백업 저장공간 확보 및 장애시 데이터 복구가능 환경 구성
 - * PTL 도입을 통해 백업저장 공간 구성 및 데이터 소산·장기보관 가능
 - ** 백업데이터에 대한 랜섬웨어 대응

② 스토리지 이중화(견적별첨, 33백만원)

- **(현재)** 기존 2종 중 1종은 스토리지 장애(14년 도입, 노후연한 7년 경과)로 사용불가 상황에서 모든 VM 데이터 보유로 리소스 과부하 발생
 - * 현재 기관내 스토리지 1대로 운영 중으로 본 스토리지 장애발생시 당장 운영 가능한 스토리지 없어 신규 도입 시급
- **(개선)** 신규 스토리지를 시급히 도입하여 리소스 분산 추진
 - * 2대 이상 스토리지 운영으로 스토리지 장애 대응



사 업 명						
(8) 안전제도기반조성 (3732-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04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안전제도기반조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안전제도 기반조성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오유천		김묘경
		제품안전정책과	043-870-5410		043-870-541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
안전제도기반조성	3,881	1,685	1,685	1,635	1,635	△50	△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12월 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888	3,888	3,881 [3,881]	-	7	1,685	1,685	1,685 [1,685]	1,685	1,685 [1,685]	-	-	1,635	
· 안전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586	586	579 [579]	-	7	586	586	586 [586]	586	586 [586]	-	-	586	
·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957	957	957 [957]	-	-	959	959	959 [959]	959	959 [959]	-	-	959	
· 제품안전정책· 정보 안내시스템운영	90	90	90 [53]	-	-	140	140	140 [140]	140	140 [140]	-	-	90	
○ 비목별 분류(합계)	3,888	3,888	3,881 [3,881]	-	7	1,685	1,685	1,685 [1,685]	1,685	1,685 [1,685]	-	-	1,635	
· 일 반 수 용 비 (210-01)	351	376	376 [376]	-	-	351	387	387 [387]	387	387 [387]	-	-	351	
· 임차료(210-07)	41	54	54 [54]	-	-	41	43	43 [43]	43	43 [43]	-	-	41	
· 재료비(210-11)	38	0	0 [0]	-	-	38	0	0 [0]	0	0 [0]	-	-	38	
· 관 리 용 역 비 (210-15)	90	90	90 [90]	-	-	90	90	90 [90]	90	90 [90]	-	-	90	
· 국내여비(220-01)	18	18	18 [18]	-	-	20	20	20 [20]	20	20 [20]	-	-	20	
· 국 외 업 무 여 비 (220-02)	28	28	28 [28]	-	-	28	28	28 [28]	28	28 [28]	-	-	28	
· 사 업 추 진 비 (240-01)	15	15	15 [15]	-	-	15	15	15 [15]	15	15 [15]	-	-	15	
· 일 반 연 구 비 (260-01)	586	586	579 [579]	-	7	636	636	636 [636]	636	636 [636]	-	-	586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2,255	2,255	2,255 [2,255]	-	-	-	-	-	-	-	-	-	-	

	2024					2025.12월 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466	466	466 [466]	-	-	466	466	466 [466]	466	466 [466]	-	-	46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888	3,888	3,881 [3,881]	-	7	1,685	1,685	1,685 [1,685]	1,685	1,685 [1,685]	-	-	1,635
· 안전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586	586	579 [579]	-	-	586	586	586 [586]	586	586 [586]	-	-	586
- 일 반 연 구 비 (260-01)	586	586	579 [579]	-	7	586	586	586 [586]	586	586 [586]	-	-	586
·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957	957	957 [957]	-	-	959	959	959 [959]	959	959 [959]	-	-	959
-일반수용비(210-01)	351	376	376 [376]	-	-	351	387	387 [387]	387	387 [387]	-	-	351
-임차료(210-07)	41	54	54 [54]	-	-	41	43	43 [43]	43	43 [43]	-	-	41
-재료비(210-11)	38	0	0 [0]	-	-	38	0	0 [0]	0	0 [0]	-	-	38
-국내여비(220-01)	18	18	18 [18]	-	-	20	20	20 [20]	20	20 [20]	-	-	20
- 국 외 업 무 여 비 (220-02)	28	28	28 [28]	-	-	28	28	28 [28]	28	28 [28]	-	-	28
-사업추진비(240-01)	15	15	15 [15]	-	-	15	15	15 [15]	15	15 [15]	-	-	15
-민간위탁사업비 (320-02)	466	466	466 [466]	-	-	466	466	466 [466]	466	466 [466]	-	-	466
· 제품안전정책· 정보 안내시스템 운영	90	90	90 [90]	-	-	90	140	140 [140]	140	140 [140]	-	-	90
-관리용역비(210-15)	90	90	90 [90]	-	-	90	90	90 [90]	90	90 [90]	-	-	90
-일반연구비(260-01)	-	-	-	-	-	50	50	50 [50]	50	50 [50]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제품(전기용품·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의 생산·유통·사용 전(全) 과정에서 제품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제품안전정책·정보제공시스템 운영

- (안전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사고우려·사고 다발 제품의 안전사고 및 신기술·신수요 제품의 위해에 대응하여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기업·소비자를 위한 제품안전 교육과 콘텐츠 개발·보급 및 시장변화를 반영한 법·제도개선과 국제기구 교류·협력채널 구축
 - ① 제품안전 보급·확산 : 제품안전 사고예방 및 선제대응을 위한 대국민 제품안전 교육과 참여형 프로그램, 유공자 발굴·포상 및 국내외 제품안전 협의체·포럼 등 운영
 - ② 제품안전 문화확산 및 국제협력 : 제품안전관리제도 및 안전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명회 등 운영 및 제품안전 국제기구 간 교류·협력 채널 구축
- (제품안전정책·정보안내 시스템운영) 제품위해정보, 리콜정보 등 제품안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들에게 보급하는 제품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제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국가는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품의 제조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국민의 권리)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시행에 참여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7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3년마다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와 그 근로자 및 소비자의 제품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조·유통 또는 사용과정에서 제품안전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그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20조(국제협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제품안전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교류
2. 제품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교류

3.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등 각종 국제활동 참가
4.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추진경위

- '04. 6월 :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 수립
- '05.12월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전부 개정
- '06.12월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
- '07.12월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 개정
- '10. 1월 : 전기용품 제조자시험결과 인정제도 시행
- '10. 2월 : “제품안전기본법” 제정
- '11. 2월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 '11. 3월 : 제1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2. 5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 '14. 2월 : 제2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4. 6월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 및 시행
- '15. 1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 '15. 5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 '16. 1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정
- '16. 3월 : 제1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공고
- '17. 1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 '17. 3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 '17.12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 '17.12월 : 제3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8. 3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 '19.12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 '19.12월 :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공고
- '20. 7월 : 제4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22. 1월 :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공고
- '23. 4월 :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49	2,915	3,888	1,685	1,63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기업·소비자 등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안전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25) 586백만원 → ('26) 586백만원, 전년동일

-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제품의 안전사고에 대응한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법(제도) 개선을 감안한 연구용역 예산
- (산출) 45백만원(연구용역 평균단가) × 13종(1년 필요 수요 과제)

②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25) 959백만원 → ('26) 959백만원, 전년동일

- 온라인쇼핑 구매(해외직구 등) 증가 등 제품환경 변화에 제품안전 법·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소비자 대상 제품안전 교육·홍보 활동을 위한 예산

- (산출①) 제품안전 교육·홍보: ('25) 466백만원→ ('26) 466백만원, 전년동일

- * 맞춤형 제품안전 교육, 체험형 프로그램 등 : 466백만원
 - . 기업·소비자 대상 제품안전관리제도 등 맞춤형 제품안전 교육 : 138백만원
 - . 제품안전 인식제고를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 공모전 운영 등 : 201백만원
 - . 제품안전 협의체·포럼 구성·운영 및 제품안전관리 유공자 발굴·포상 : 107백만원
 - . 정보관리 운영 및 지원 : 20백만원

- (산출②) 제품안전 문화확산 및 국제협력 등: ('25) 493백만원 → ('26) 493백만원, 전년동일

- * 제품안전 관련 회의(자문위, 자료제작·인쇄, 강사수당 등), 재료비, 국제회의 등

· 일반수용비 351, 임차료 41, 재료비 38, 국내여비 20, 국외업무여비 28, 사업추진비 15백만원

③ 제품안전정책·정보제공 시스템운영: ('25) 140백만원 → ('26) 90백만원, 50백만원 감액

- 제품위해정보, 리콜정보 등 제품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

- (산출④) 제품안전정보포털(safetykorea.kr) 유지·보수 등 관리 용역 비용 : 9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85	○ 일반수용비(210-01) : 350,543천원 가. 제품안전 자료제작, 제도홍보 등(40,547천원) · 설명회 자료인쇄서 및 홍보물제작 : 3,682천원x11종=40,511천원 나. 회의 및 강사수당(130,000천원) · 제품안전기준개발회의 수당 : 150천원x40회x10명=60,000천원 · 제품안전자문위원회 회의수당 : 150천원x20회x10명=30,000천원 · 기술세미나 강사수당 등 : 200천원x20회x10명=40,000천원 다. 제품조사 및 평가수수료(180,000천원) 라. 조정 : △4천원	1,635	○ 일반수용비(210-01) : 350,543천원 가. 제품안전 자료제작, 제도홍보 등(40,547천원) · 설명회 자료인쇄서 및 홍보물제작 : 3,682천원x11종=40,511천원 나. 회의 및 강사수당(130,000천원) · 제품안전기준개발회의 수당 : 150천원x40회x10명=60,000천원 · 제품안전자문위원회 회의수당 : 150천원x20회x10명=30,000천원 · 기술세미나 강사수당 등 : 200천원x20회x10명=40,000천원 다. 제품조사 및 평가수수료(180,000천원) 라. 조정 : △4천원
	○ 임차료(210-07) : 41,000천원 가. 제품안전 국제 및 국내워크숍(41,000천원) · 행사장 임차 : 41,000천원		○ 임차료(210-07) : 41,000천원 가. 제품안전 국제 및 국내워크숍(41,000천원) · 행사장 임차 : 41,000천원
	○ 재료비(210-11) : 38,000천원 가. 안전기준개발용 시험제품구입 : 38품목x1,000천원=38,000천원		○ 재료비(210-11) : 38,000천원 가. 안전기준개발용 시험제품구입 : 38품목x1,000천원=38,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90,000천원 가. 제품안전정보포털시스템 유지 및 보수관리 : 1식 x 90,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90,000천원 가. 제품안전정보포털시스템 유지 및 보수관리 : 1식 x 9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0,338원 가. 제품 안전기준 개발 : 9,442천원 나. 안전성조사 및 위해성 평가방법 개발 : 8,957천원 다. 조정 : △61천원		○ 국내여비(220-01) : 20,338원 가. 제품 안전기준 개발 : 9,442천원 나. 안전성조사 및 위해성 평가방법 개발 : 8,957천원 다. 조정 : △61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28,467천원 가. 제품안전국제협력(28,369천원) · CPSC 국제회의 참석 : 8,204천원 · ICPHSO 국제회의 및 심포지움 참석 : 12,306천원 · OECD CCP 및 소비자협력 국제회의 참석 등 : 12,306천원 · 조정 : △4,349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28,467천원 가. 제품안전국제협력(28,369천원) · CPSC 국제회의 참석 : 8,204천원 · ICPHSO 국제회의 및 심포지움 참석 : 12,306천원 · OECD CCP 및 소비자협력 국제회의 참석 등 : 12,306천원 · 조정 : △4,349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4,652천원 가. 제품 안전기준 개정 간담회 등 : 30천원x14회x20명=8,400천원 나. 제품안전정책개발 간담회 등 : 30천원x9회x20명=5,400천원 다. 제품안전의 날 사업추진 : 10천원x1회x100명=1,000천원 라. 조정 : △148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4,652천원 가. 제품 안전기준 개정 간담회 등 : 30천원x14회x20명=8,400천원 나. 제품안전정책개발 간담회 등 : 30천원x9회x20명=5,400천원 다. 제품안전의 날 사업추진 : 10천원x1회x100명=1,000천원 라. 조정 : △148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636,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586,000천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가.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13중x45,000천원=586,000천원 나. 제품안전정보포털시스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비용: 1식 X 50,000천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466,000천원 가. 민간위탁(466,000천원) · 제품안전 교육·홍보 등 : 1식x466,000천원=466,000천원		가.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13중x45,000천원=586,000천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466,000천원 가. 민간위탁(466,000천원) · 제품안전 교육·홍보 등 : 1식x466,000천원=466,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제품안전포털 정보이용건수 (건)	목표	41,754	45,000	49,767	49,374	46,000	최근3년간평균 접속건수와 외부환경변화	제품안전포털 일평균방문건수 =년 방문건수/365	제품안전포털 통계확인 (SafetyKorea.kr)
	실적	41,990	49,313	48,589	47,700	-			
	달성도	100.5	109.5	97.6	96.6	-			
제품안전교육 수료자수(명)	목표	2,800	3,000	5,200	6,500	6,825	최근3년평균과 전년 교육자수 반영	제품안전관련 교육 수강인원 합계	교육주관 기관확인 및 온라인교육 접속자수 확인
	실적	3,860	5,147	6,450	6,505	-			
	달성도	138%	172%	124%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①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소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제품안전관리 정책방향 및 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안) 마련” 등 13개 연구용역과제를 통한 정책연구 및 제도정비 ②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 제품안전 교육 및 콘텐츠 개발 보급 - 제품안전교육이 미비했던 청소년 및 취약 계층(노인, 장애인 등) 대상의 제품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제품안전 순회교육 실시(15회 883명) - 위해제품 확인 및 신고 등을 위한 제품안전정보센터 활용 교육을 소비자 단체와 협력하여 일반 국민 대상 제품안전 교육 실시(18회 1,923명) - 사업자 인식개선을 통한 불법·불량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 중·소상공인 및 기업체* 대상 온라인교육 11회(총 1,054명) 실시 - 제품안전 정책 인터뷰를 통한 제품안전관심 유도 및 KC 인증 중요성 전파 (연합뉴스TV “출근길인터뷰”, ‘22.11.9.) ○ 제품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게시 - 제품안전정보센터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제품안전 정책, 동향 및
------	--

- 리콜정보 등 콘텐츠 제작 확대 ('21) 59회 → ('22) 82회
- 유튜브 채널 내 “가정내 리콜제품찾기” 등 영상 2건 게시(조회수 11만회)
 - 대학생 제품안전지킴이 프로그램 운영
 - 제품안전관리제도, 리콜제도 및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소개 등 지킴이 운영을 통해 콘텐츠 408개 제작 및 674회 배포
 - 활동우수자에 대한 장관상 1점 등 표창('22.11.8. 제품안전의 날 수여)
 -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 공모전 개최
 - 공모전 접수 확대를 위해 알립장애포 및 공모전 사이트 홍보로 공모전 접수 확대 ('21) 354점 → ('22) 674점
 - 공모전 우수작품에 대한 장관상 2점 등 표창('22.11.8. 제품안전의 날 수여)
 - “2022 제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
 - 일시/장소 : '22.11.8.(화) / 코엑스
 - 제품안전관리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훈포장 등 정부포상
 - * 접수 건수 : ('21) 98건 → ('22) 107건
 - ** 포상 규모 : 정부포상 6점 등 42점 시상
 - 산업단지공단, 시험인증기관 등 유관기관 협조 요청 및 제품안전정보센터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포상 안내(접수 107건)
 - 대학생 제품안전지킴이 및 어린이 제품안전그림공모전 우수자 시상
 - 제품안전성 강화 기업의 우수 사례 발표(대통령표창 기업)
 - 제품안전혁신 포럼 운영
 - 제품안전제도 및 안전성 기술에 대한 제도·분과위원회 4회 개최
 - 2022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 온라인 개최
 - : ‘디지털 전환(DX)을 통한 효율적 제품안전 관리’에 대한 주제로 미국 CPSC, 호주 ACCC, 중국 DPAC, 영국 등 해외 제품안전 전문가 참여 (22.11.8. 코엑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책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제품안전제도 개선 및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부담완화 추진
 - (제3차 어린이제품 기본계획)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강화하여 어린이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구현
 - * ❶ 안전사고예방, ❷ 불법제품 근절, ❸ 기업·소비자 지원강화, ❹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 (규제개선) 물가·환율·금리 3고 시대,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개발·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 추진
 - * ❶ 공장심사 수수료를 한시적 인하('22.11.) ❷ 2륜 전기자전거, 운동용 슬라이더 불합리한 요건 개선 등 ❸ 영세기업지원을 위한 ‘無니켈 도금 공정’ 보급, 제품안전관리제도 가이드 보급 등
 - (안전기준) 개인형이동장치(PM), 이동식 전기차충전기 등 안전기준 마련, 완구 등 수입제품 표시사항 개선, 운동용 안전모 시험법 단일화, 전기용품 국제표준 부합화 등 규제 정비(56건)
 - 국표원-소비자단체 간 간담회 운영('22.5., '22.11.)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1개 기관, '22년 제품안전 관련 주요계획 공유
 - 국제협력 활동 강화
 - 글로벌 포럼, OECD 제품안전정책 회의 등 다자 협의체를 통해 글로벌 동향 파악(OECD WPCPS 정례회의)
 - 한-미, 한-일 등 양자 협의 채널을 기반 국내 안전 정책품질 제고
 - * 국표원-CPSC(美), 국표원-경산성(일) 등 5차례 회의 참석
 - ③ 제품안전 「정책·정보 안내 시스템(SafetyKorea.kr)」 운영
 - 소비자, 기업의 제품안전정보 수집 및 안전정보 활용을 위한 제품안전정보센터 유지·관리
 - * 홈페이지 1일 평균 접속건수: ('21) 50,887건 → ('22) 41,990건
 - ** 제품안전정보(OPEN API) 제공건수: ('21) 25.3만건 → ('22) 30만건

2023

①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제품안전 국내외 정책동향 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등 16개 연구용역과제를 통한 제품안전 정책 및 제도정비 연구

②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 제품안전 교육 및 콘텐츠 개발 보급
 - 사업자, 소비자 및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제품안전교육 (‘22) 44회 3,860명 → (‘23) 72회, 5,147명
- 제품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게시
 - 유튜브 채널 내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등 영상 3건 게시(조회수 5.3만회)
 - 제품안전정보센터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제품안전 정책, 동향 및 리콜정보 등 콘텐츠 제작 확대 (‘22) 82회 → (‘23) 96회
 - 제품안전 정책홍보 및 대국민 제품안전 관심 유도를 위한 TV인터뷰(연합 뉴스TV, 1차관님 “행사리포트”, ‘22.11.9. 녹화, 11.10.방송)
- 대학생 제품안전지킴이 프로그램 운영
 - 제품안전관리제도, 리콜제도 및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소개 등 지킴이 운영을 통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22) 674회 → (‘23) 726회
 - 활동우수자에 대한 장관상 1점 등 표창(‘23.11.9. 제품안전의 날 수여)
-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 공모전 개최
 - 공모전 접수 확대를 위해 알립장애편 및 공모전 사이트 홍보로 공모전 접수 확대 (‘22) 674점 → (‘23) 1,555점
 - 공모전 우수작품에 대한 장관상 2점 등 표창(‘23.11.9. 제품안전의 날 수여)
- “2023 제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
 - 일시/장소 : ‘23.11.9.(목) / 건설회관
 - 제품안전관리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훈포장, 장관표창 등 45점 포상
 - * 접수 건수 : (‘22) 107건 → (‘23) 127건
 - 대학생 제품안전지킴이 및 어린이 제품안전그림공모전 우수자 시상
 - 제품안전성 강화 기업의 우수 사례 발표(동탑산업훈장 엘지전자(주))
- 제품안전 혁신포럼 운영
 - 제품안전 혁신포럼 운영위원회(‘23.9.26.,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제도·기술분과 통합위원회(23.12.11.~14. 건설회관)
 - 2023 글로벌 제품안전혁신포럼 개최(‘23.11.9., 건설회관)
- 국표원-소비자단체 간 간담회 2회 개최(‘23.4.14./12.14. 서울)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기관 대표를 대상으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23년 제품안전 관련 주요계획 공유
- 신제품 출현 및 온라인시장 확대 등 제품환경변화를 위한 제품안전 관리 제도 개선 및 규제 합리화
 -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발표(‘23.4.), 제품안전기본법, 전안법 등 제품안전관련 법령 정비 및 안전기준 정비(71건)
- 국제기구 협력 강화
 - 글로벌 포럼, OECD 등 다자회의, 한-미 등 양자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제품안전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정책 품질 제고 추진(7회)
 - * 국표원-CPSC 간 양자회의(‘23.1.12.) 및 세미나(‘23.7.16.), OECD 소비자제품안전작업반 정례회의(‘23.4.11.~13. / 11.13.~15. 비대면), ISO COPOLCO 총회(‘23.5.23.~25.), GS1 CEO 간담회(‘23.9.6.) 등

③ 제품안전 「정책·정보 안내 시스템(SafetyKorea.kr)」 운영

- 소비자, 기업의 제품안전정보 수집 및 안전정보 활용을 위한 제품안전정보센터 유지·관리

④ 제품안전관리원 기관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부서(기획조정, 전략기획, 인사 등) 인건비 지원 ○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 확장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서울 금천구에서 (신)서울 서초구로 확장·이전하여 근무환경 개선
2024	<p>①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제품안전 사후관리 중장기 실행계획 마련 연구” 등 14개 연구용역과제를 통한 제품안전 정책 및 제도정비 연구 <p>②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교육 및 콘텐츠 개발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소비자 및 취약계층(노인) 등 제품안전교육 ○ 제품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튜브 채널 내 “크리에이터 우수콘텐츠등” 등 영상 16건 게시(조회수 1.1천회) - 제품안전 관련 정책 및 정보 등 카드뉴스 제작 및 SNS 채널 게시 ○ 대학생·고등학생 제품안전 크리에이터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대학생·고등학생 50명 대상 운영, 현재 5개 미션(콘텐츠 185회 배포), 정책홍보 ○ 유치부 및 초등부 대상으로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 공모전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전 계획수립(‘24.7.) 및 접수(‘24.7.3.~8.30. 총 2,397점) ○ “2024 제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 (11.12.) (엘타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24.3.) 및 포상요령 공고(‘24.3.~4.) - 제품안전 유공자 및 단체 포상 실시 ○ 제품안전 혁신포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혁신포럼 운영위원회 및 통합분과위원회(6월) - 2024 글로벌 제품안전혁신포럼 개최(11.8.) ○ 국표원-소비자단체 간 간담회 운영(‘24.3.22. / ‘24.1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기관, ‘24년 제품안전 관련 주요계획 공유 ○ 국제협력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표원-CPSC 간 양자회의(‘24.5.) - OECD 소비자제품안전작업반 정례회의(‘24.4. 비대면) <p>③ 제품안전 「정책·정보 안내 시스템(SafetyKorea.kr)」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기업의 제품안전정보 수집 및 안전정보 활용을 위한 제품안전정보센터 유지·관리
2025	<p>①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제품안전 사후관리 중장기 실행계획 마련 연구” 등 12개 연구용역과제를 통한 제품안전 정책 및 제도정비 연구 <p>②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교육 및 콘텐츠 개발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소비자 및 취약계층(노인) 등 제품안전교육 ○ 제품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튜브 채널 내 “크리에이터 우수콘텐츠등” 등 영상 63건 게시(조회수 1.1천회) - 제품안전 관련 정책 및 정보 등 카드뉴스 제작 및 SNS 채널 게시 ○ 대학생·고등학생 제품안전 크리에이터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대학생·고등학생 50명 대상 운영, 현재 3개 미션(콘텐츠 3회 배포), 정책홍보 ○ 유치부 및 초등부 대상으로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 공모전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전 계획수립('25.7.) 및 접수('25.7.7.~8.22. 총 987점) ○ “2025 제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 (11.11.예정) (코엑스) - 기본계획 수립('25.3.) 및 포상요령 공고('25.3.~4.) - 제품안전 유공자 및 단체 포상 실시 ○ 제품안전 혁신포럼 운영 - 제품안전혁신포럼 운영위원회 및 통합분과위원회('25.9.) - 2025 글로벌 제품안전혁신포럼 개최('25.11. 예정) ○ 국표원-소비자단체 간 간담회 운영('25.7.4. / '25.11.예정)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기관, '25년 제품안전 관련 주요계획 공유 ○ 국제협력활동 강화 - 국표원-BSMI 간 양자회의('25.4.) - ISO/COPOLCO 총회('25.5.) - ICPHSO 심포지엄('25.2) - OECD 소비자제품안전작업반 정례회의('25.4. 비대면) <p>③ 제품안전 「정책·정보 안내 시스템(SafetyKorea.kr)」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기업의 제품안전정보 수집 및 안전정보 활용을 위한 제품안전정보센터 유지·관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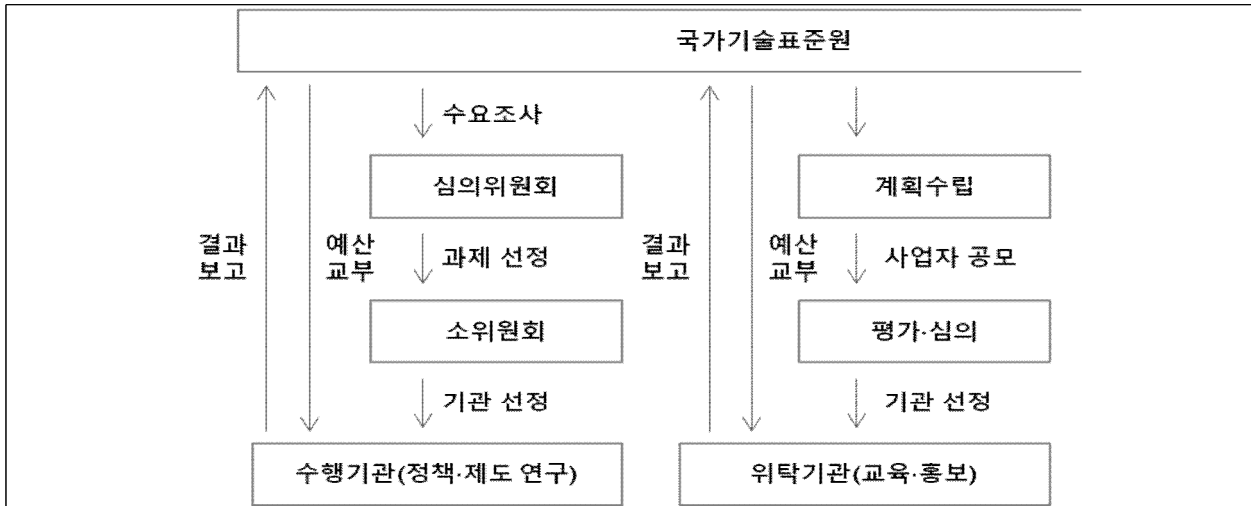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제품안전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 국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관련 연구용역 과제 연간 12건 이상 수행
- 제품안전문화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확대
 - 신기술 제품 및 소비자 요구에 따라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에 대한 전문가·인증 기관·업계 간 자문회의, 공청회 등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 안전기준의 국제기준 부합화, 제품안전관리 선진화 등을 위하여 제품안전 국제기구(OECD, CPSC 등) 간 교류·협력 채널 구축
 - 기업·소비자 대상 제품안전 교육을 연간 7,000회 이상 실시하고 선진화된 제품안전관리를 위해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 확대
 - 제품의 인증, 리콜정보 등 제품안전 정보를 카드뉴스 등 콘텐츠로 제작 및 SNS 채널에 게시하고 참여형 프로그램(대학생·청소년 제품안전크리에이터, 그림공모전 등)를 통해 제품 안전의식 제고
- 제품안전정보시스템(SafetyKorea) 운영
 - 국민의 제품 사고 예방 및 소비자·생산자의 제품안전 인식 개선을 위한 제품안전 정보 OPEN API 활용 일 평균 46만건 이상 제공
 - 제품안전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제품안전 정보(인증, 리콜 등)의 수집·보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888	1,685	1,635	1,947	2,044	
2025~2029		1,685	1,635	1,947	2,044	2,14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3년 예산 산중위 검토보고서('22.11.)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
 - '23년 결산 산중위 검토보고서('24.9.)
 - 제품안전 교육·홍보 사업 추진에 재위탁구조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 방안 강구 필요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3년 결산) 신규 사업수행시 재위탁에 따른 추가 예산집행 방지를 위해 공동 계약 등을 통해 사업구조 개선 추진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제품안전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 제품 시장 환경과 사회·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지속 추진
- 제품안전문화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확대
 - 제품안전관리 선진화와 안전기준의 국제기준 부합화 등 제품안전 관련하여 국제기구(OECD, CPSC 등) 간 협력 관계 구축
 - 산업·기술 발전 및 사회·환경의 변화 등 소비자 요구에 출현하는 제품, 시장 환경을 반영한 제품에 대한 산업·전문가·인증기관과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 기업·소비자 대상 제품안전 교육 및 참여형 홍보프로그램 운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품안전 콘텐츠를 개발하고 SNS에 게시하여 제품 안전의식 제고
- 제품안전정보포털(SafetyKorea.kr) 운영
 - KC인증정보 및 국내·외 리콜 정보 등 제품 안전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사용자(소비자, 사업자) 중심의 대국민시스템 제공
 - 제품안전정보포털 DB와 연계하여 제품의 안전인증, 리콜 등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OPEN API 서비스 운영 강화, 제품안전 관련 기업 및 소비자·유관기관에 신속 제공 함으로써 제품 안전사고에 예방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549	-	1,549	-	±84	-	1,549	1,530	98.8	98.8	-	19
2023	2,915	-	2,915	-	±54	-	2,915	1,641	98.7	98.7	-	38
2024	3,888	-	3,888	-	±38	-	3,888	3,881	99.8	99.8	-	7
2025	1,685	-	1,685	-	±38	-	1,685	1,685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416	416	416	416	-	416	416	-	-	100
2023	1,266	1,266	1,266	1,266	-	1,266	1,266	-	-	100
2024	2,255	2,255	2,255	2,255	-	2,255	2,255	-	-	100
2025	-	-	-	-	-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조정: ±84백만원, 사업수행을 위한 자문료, 회의수당 등 일반수용비 부족(62백만원)으로 임차료(△27백만원), 재료비(△35백만원)를 조정하고 국내여비 부족(22백만원)으로 국외여비(△22백만원)를 조정 - 불용: 19백만원, 학술연구용역(14백만원)과 관리용역비(2백만원)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국제 회의, 대면교육·회의 제한에 따른 국외여비(1백만원), 임차료(1백만원) 등 미집행액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조정: ±54백만원, 사업수행을 위한 자문료, 회의수당 등 일반수용비 부족(31백만원)으로 임차료(△7백만원), 재료비(△38백만원)를 조정하고 국내여비 부족(16백만원)으로 국외여비(△16백만원)를 조정 - 불용: 38백만원, 학술연구용역(25백만원)과 관리용역비(12백만원) 낙찰차액 및 일반수용비(1백만원) 등 집행잔액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조정: ±38백만원, 사업수행을 위한 자문료, 회의수당 등 일반수용비 부족(25백만원), 임차료 부족(13백만원)으로, 재료비(△38백만원)를 조정 * ±0.5백만원: 국내여비 부족(0.5백만원 / 503천원)으로 국외여비 잔액(△0.5백만원 / △503천원) 조정 - 불용: 7백만원, 학술연구용역(7백만원) 낙찰차액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조정: ±38백만원,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수당 등 일반수용비 부족(36백만원), 임차료 부족(2백만원)으로, 재료비(△38백만원)를 조정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025.11.19)	안전제도기반조성 (304)	운영비- 재료비 (210-11)	36	안전제도기반조성 (304)	운영비- 일반수용비 (210-01)	회의수당 등 사업량 증가로 인한 세목 조정
조정 (2025.11.19)	안전제도기반조성 (304)	운영비- 재료비 (210-11)	2	안전제도기반조성 (304)	운영비- 임차비 (210-07)	임차료 사업량 증가로 인한 세목 조정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첨부] 참고

첨부 1

제품안전관리제도

- **(개요)** 제품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출시 전·후의 **안전관리제도**를 운영

* 관련법 :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시장출시 前)**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은 **위해도***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할 경우 시장 진입 및 유통 허용 등 **사전안전관리**

*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안전기준준수)로 관리

** 정부는 안전관리품목 282개에 대한 610여개의 안전기준을 관리(안전기준은 강제 의무사항)

< 안전관리 수준, 절차 및 품목현황 >

관리수준	인증 등 준수절차	안전관리 품목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① 안전 인증 (45개 품목)	제품수입 절차 → 신청 → 안전인증기준 → 제품검사 → 공장심사 → 인증서 발급 (인증번호) → 인증마크	36	5	4
② 안전 확인 (107개 품목)	제품수입 절차 → 신청 → 시험검사기준 → 제품검사 → 안전인증기준 → 신고서류검토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번호) → 인증마크	65	26	16
③ 공급자적합성 (106개 품목)	제품수입 절차 → 자체 또는 제3자 시험기관 → 제품검사 → 인증마크	75	17	14
④ 안전기준준수 (24개 품목)	제품수입 절차 → 자율시험 → 제품검사 → 인증마크	-	24	-
총 282개 품목		176	72	34

- **(시장출시 後)** 시중 제품에 대한 **위해요인 확인** 시 제품수거, 유통 차단, 개선권고, 소비자주의보 발령 등 **사후안전관리**

* 안전성 조사, 제품사고조사, 불법제품조사, 해외리콜제품 대응 등

01	안전성조사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법적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조사후 조치(리콜처분, 개선권고 등)
02	제품사고조사	동일 유형의 제품사고 재발방지 및 위해 확산방지 등을 위해 사고발생 제품에 대한 사고원인규명 조사후 조치(소비자주의보 등)
03	불법제품조사	미인증·허위표시 제품에 대해 불법제품 신고 내용확인 및 제품정보 검색 등 조사후 조치(판매금지 등)
04	해외리콜제품대응	해외 리콜제품 등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정보 분석후 조치(수입통관 차단 등)

첨부 2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25년)

비전

국민생활 안심을 위한 체계적인 제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목 표	소비자의 안전성은 UP!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DOWN!	(안전인증 품목수) 45 개('22년) (170개 세부품목) → 10% 축소 조정('25년)
		(안전기준 정비) 52 건('22년) → 전수 검토·개정('25년)
		(제품사고조사) 73 개사('22년) → 150 개사('25년)
		(위해차단시스템) 235,129 개('22년) → 246,000 개('25년)
		(제품안전 모니터링) 127,847 건('22년) → 150,000 건('25년)
		(제품안전정보 활용) 350,000 건/일('22년) → 380,000 건/일('25년)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1	[제도] 기업소비자 Win-Win을 위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전관리대상 규제수준 정비 ② 안전기준 전면 재검토 및 일제 정비 ③ 민간주도 안전관리 기반 마련 ④ 국제적 환경변화 신속 대응
2	[사전] 소비자 안전강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관리제품 규제공백 해소를 위한 체계 정비 ② 신기술·신수요제품 안전관리 ③ 사회적 배려계층 안전관리 지원 ④ 제품 리스크평가 활성화
3	[사후] 촉촉한 시장관리를 위한 사후관리의 디지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데이터 기반 제품사고조사 추진 체계 구축 ② 위해상품 유통·판매 차단 강화 ③ 안전성조사 원스톱 업무처리시스템 구축 ④ 온라인쇼핑몰 위해우려 유통제품 안전관리
4	[기반] 효율적인 제품안전관리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내외 제품안전 채널 협력 확대 ② 제품안전 기술개발 및 역량강화 ③ 맞춤형 제품안전정보 제공 및 활용 확대 ④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역량강화

사 업 명
(9) 한국인 인체데이터 조사 및 활용기반 구축 (37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117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4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한국인 인체데이터 조사 및 활용기반 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한국인 인체데이터 조사 및 활용기반 구축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정의용	조하니(연구사)	김정훈
		표준정책국 바이오화학 서비스표준과	043-870-5390	043-870-5391	043-870-5401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한국인 인체데이터 조사 및 활용기반 구축	1,685.77	1,849	1,849	1,876	1,849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예 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25	1,725	1,685.77	-	39.23	1,849	1,849	1,849	1,849	1,849	-	-	1,849
· 인체치수측정	865	865	838.82	-	26.18	1,119	1,119	1,119	1,119	1,119	-	-	1,119
· 인체정보보급	360	360	353	-	7	310	310	310	310	310	-	-	310
· 휴먼빅데이터구축	500	500	493.95	-	6.05	420	420	420	420	420	-	-	420
○ 비목별 분류(합계)	1,725	1,725	1,685.77	-	39.23	1,849	1,849	1,849	1,849	1,849	-	-	1,849
· 시험연구비(210-13)	47.13	47.13	47.13	-	-	47.13	47.13	47.13	47.13	47.13	-	-	47.13
· 사업추진비(240-01)	1.87	1.87	1.87	-	-	1.87	1.87	1.87	1.87	1.87	-	-	1.87
· 일반연구비(260-01)	1,296	1,296	1,263.92	-	32.08	1,470	1,470	1,470	1,470	1,470	-	-	1,470
· 민간위탁사업(320-02)	360	360	353	-	7	310	310	310	310	310	-	-	310
· 자산취득비(430-01)	20	20	19.85	-	0.15	20	20	20	20	20	-	-	2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725	1,725	1,685.77	-	39.23	1,849	1,849	1,849	1,849	1,849	-	-	1,849
· 인체치수측정	865	865	838.82	-	26.18	1,119	1,119	1,119	1,119	1,119	-	-	1,119
-시험연구비(210-13)	47.13	47.13	47.13	-	-	47.13	47.13	47.13	47.13	47.13	-	-	47.13
-사업추진비(240-01)	1.87	1.87	1.87	-	-	1.87	1.87	1.87	1.87	1.87	-	-	1.87
-일반연구비(260-01)	816	816	789.82	-	26.18	1,070	1,070	1,070	1,070	1,070	-	-	1,070
· 인체정보보급	360	360	353	-	7	310	310	310	310	310	-	-	310
-민간위탁사업(320-02)	360	360	353	-	7	310	310	310	310	310	-	-	310
· 휴먼빅데이터구축	500	500	493.95	-	6.05	420	420	420	420	420	-	-	420
-일반연구비(260-01)	480	480	474.1	-	5.9	400	400	400	400	400	-	-	400
-자산취득비(430-01)	20	20	19.85	-	0.15	20	20	20	20	20	-	-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한국인인체데이터조사및활용기반구축) 한국인의 인체치수, 인체형상 등 종합적인 인체정보를 조사하여 관련 산·학·연에 보급함으로써, 제품·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79년 이래 약 5년 주기의 한국인 인체치수·형상 데이터 확보로 우리 국민의 신체변화에 따른 제품·공간설계 등에 기여
- (인체치수측정) 국가통계작성과 산업계의 데이터 수요 대응을 위해 한국인 인체치수·형상 정보를 조사하고 데이터화 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산·학·연에 보급하기 위한 DB 구축
- (인체정보보급) 산·학·연의 서비스·제품 개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즈 코리아센터를 통한 기업 컨설팅 지원, 홍보 및 교육, 측정장비 무상대여 등 온·오프라인 데이터 보급·활용 활동 추진
- (휴먼빅데이터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계의 인체정보 활용도 및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제공을 위한 인체정보 통합체계(휴먼빅데이터)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표준기본법

- 제3조(정의)

6. “참조표준”이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공인된 것으로서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물리화학적 상수, 물성값, 과학기술적 통계 등을 말한다.

-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①정부는 산업과학기술과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참조표준을 제정·평가하고 이를 과학기술계, 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측정데이터의 수집·분석·평가 체계의 확립
 2. 참조표준 제정절차의 수립 및 사후관리
 3. 참조표준과 측정데이터의 축적 및 보급 체계의 확립
 4. 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유지
-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 제14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원으로 하여금 참조표준에 관한 측정데이터의 수집·축적 및 평가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산업통상부고시 제2025-32호)

- 제6조(사업의 주체등)

-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료의 구축 및 제5조 규정에 의한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개발·보급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국가기술표준원의 관리감독 하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통계법

-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주기적으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통계법시행령

- 제7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란 다음 각 호의 통계를 말한다.

1.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도가 높은 통계
2.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3.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중요도 및 활용도가 높은 통계
4.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통계

②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주기”란 5년을 말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79년부터 : 의류치수 규격 마련을 위해서 '79년 처음으로 국민체위조사를 실시한 이후 5~7년 주기로 4차례 측정 사업 수행
- '00년 이후 :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급격한 체형변화로 최신의 인체치수 정보조사 필요성 제기 및 3차원 인체형상, 동적치수 정보 등 다양한 인체치수 정보에 대한 산업계 요구 증가
- '03~'04년 : 전국 남녀(0~70세이상) 2만여명에 대한 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및 인체형상 측정 사업 실시 및 DB 구축
- '05~'09년 : ① 한국인 인체정보 보급 확대를 위한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sizekorea.go.kr) 및 인체표준정보실 개설 ② 통계청으로부터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 ③ 장애인 인체치수 등 다양한 분야로 측정사업 확대
- '10~'14년 :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 측정조사 사업을 통해 유아부터 노인의 계층별 3D 인체형상 측정과 표준인체형상을 개발하여 보급
- '15~'19년 :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 측정조사 사업 및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동적범위를 측정하여 보급하였고, 인체치수 정보의 산업계 보급 확대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14종)을 개발·보급
 - * 안경, 스마트글라스, 머리범용, 학생용책걸상, 장애인 보조기기, 몸통범용, 안마의자, 기능성베개, 손범용, 욕실공간, 퍼스널모빌리티, 다리범용, 핸디형청소기, 캠핑용품
- '20년~'21년 :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사업 제1차 조사('20.6월~'21.2월)를 20세~44세 남녀 3,299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45세~69세 남녀 3,381명에 대한 제2차 조사('21.5월~'21.12월)를 진행하여 만20세~69세 한국인 6,680명의 인체치수 데이터 확보

- '22년 : 70~84세 고령층을 대상으로 직접측정 1,014명(남441명, 여573명) 및 3D측정 429명(남192명, 여237명)의 고정밀 인체데이터를 확보하고,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사업 결과 공식 발표, 성과전시 및 활용확산을 위한 협력 MoU(육군본부, 대한인간공학회 등 5개 단체) 등을 추진
- '23년 : 7~19세 아동 및 청소년 1,118명을 대상으로 3D 측정을 통한 311개 항목의 고정밀 인체데이터를 확보하고, 고령자 대상 인체치수조사 결과 발표 및 시니어산업 유관기관(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등)과 고령자 인체데이터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4년 : 20~60세 이상 휠체어사용 척수손상 장애인 338명을 대상으로 29개 항목 직접측정을 통한 인체데이터를 확보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인체치수조사 결과 발표 및 제9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대비 사업 고도화 추진(데이터 통계처리 및 현장 관리 매뉴얼 제작, 동적측정 시범운영, 인체치수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 '25년 : 20세~69세 성인 대상 '제9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1차년도 추진(3000명 규모), 휠체어 사용 척수손상 장애인 대상 인체치수조사 사업결과 발표 및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한 동적 인체 측정 항목 설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3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832백만원	1,725백만원	1,725백만원	1,849백만원	1,849백만원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기업, 연구소, 학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인체치수측정 : (2025 본예산) 1,119백만원 → (2026 예산) 1,119백만원, 전년 동

- (요구) 정기통계 조사사업인 '제9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2차년도 추진. 승인통계의 통계적 유의성 및 정확도 등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 표본 규모 확보를 위해 조사규모가 확대됨에 따른 1차년도('25년)와 동일한 충분한 자원 필요

* 정기조사는 인체측정에 대한 국제기준 ISO 15535에 따라 상대적 신뢰도 1.7%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2년에 걸쳐 약 6,000명 규모로 측정 예정

- (산출1) 제9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2차년도 연구용역 1,070백만원

(세부산출) [측정인건비] 528백만원 (22명×8개월×3백만원),
[측정경비] 287백만원 (장비시설 이용·유지·관리 182, 교육·재료비 105 등),
[피측정자사례비] 255백만원 (3,000명×8.5만원)

- (산출2) 인체치수조사 부대경비 49백만원

(세부산출) [시험연구비] 47백만원 (수용비 20, 임차·시설유지비 27 등),
[사업추진비] 2백만원 (회의비 2)

② 인체정보보급 : (2025 본예산) 310백만원 → (2026 예산) 310백만원, 전년 동

- (요구) 한국인 인체정보를 사이즈코리아센터 및 사이즈코리아 포털 등을 통해 보급하여 산업계 지원. 최신 인체정보 데이터 수요 대응

- (산출) 사이즈코리아센터 운영 민간위탁 310백만원

(세부산출) [운영인건비] 189백만원 (7명×9개월×3백만원),
[운영경비] 121백만원 (전산 운영·유지관리비 76, 컨설팅·회의비 45 등)

③ 휴먼빅데이터구축 : (2025 본예산) 420백만원 → (2026 예산) 420백만원, 전년 동

- (요구) 3D 인체정보 활용도 제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 창출을 위한 인체정보 빅데이터화 연구 및 실증을 통한 휴먼빅데이터 기반 마련

- (산출1) 휴먼빅데이터구축 연구용역 400백만원

(세부산출) [연구인건비] 240백만원 (10명×8개월×3백만원),
[연구경비] 160백만원 (휴먼빅데이터 기반구축 연구·실증 90, 재료비·회의비 등 70)

- (산출2) 측정장비구입 자산취득 20백만원 (20백만원 x 1종)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49	<p>○ 인체치수측정 : 1,119백만원</p> <p>가. 인체치수측정 1,070백만원</p> <p>- 일반연구비(260-01) : 1,07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인건비] 528백만원 (22명×8개월×3백만원) · [측정경비] 287백만원 (측정장비이용·유지·관리 182, 교육·재료비 등 105) · [피측정자사례비] 255백만원 (3000명×8.5만원) <p>나. 인체치수조사 부대경비 49백만원</p> <p>- 시험연구비(210-13) : 47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비 20백만원 (수수료 납부 10, 소모품·재료 구입 10) · 임차·시설유지 27 (회의실 임차 7, 시설장비유지비 20) <p>- 사업추진비(240-01) : 2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비 2백만원 (0.4백만원×5회) <p>○ 인체정보보급 : 310백만원</p> <p>가. 사이즈코리아센터 운영 310백만원</p> <p>- 민간위탁사업비(320-02) : 31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인력 등 인건비] 189백만원(7명×9개월×3백만원) · [운영경비] 121백만원(센터운영·유지관리비 76, 컨설팅·회의비 등 45) <p>○ 휴먼빅데이터구축 : 420백만원</p> <p>가. 휴먼빅데이터구축 연구 400백만원</p> <p>- 일반연구비(260-01) : 4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인력 인건비] 240백만원(10명×8개월×3백만원) · [연구경비] 160백만원(휴먼빅데이터 기반구축 연구 90, 재료비·회의비 등 70) <p>나. 측정장비구입 20백만원</p> <p>- 자산취득비(430-01) : 2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구입 20백만원 (20백만원 x 1종) 	1,849	<p>○ 인체치수측정 : 1,119백만원</p> <p>가. 인체치수측정 1,070백만원</p> <p>- 일반연구비(260-01) : 1,07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인건비] 528백만원 (22명×8개월×3백만원) · [측정경비] 287백만원 (측정장비이용·유지·관리 182, 교육·재료비 등 105) · [피측정자사례비] 255백만원 (3000명×8.5만원) <p>나. 인체치수조사 부대경비 49백만원</p> <p>- 시험연구비(210-13) : 47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비 20백만원 (수수료 납부 10, 소모품·재료 구입 10) · 임차·시설유지 27 (회의실 임차 7, 시설장비유지비 20) <p>- 사업추진비(240-01) : 2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비 2백만원 (0.4백만원×5회) <p>○ 인체정보보급 : 310백만원</p> <p>가. 사이즈코리아센터 운영 310백만원</p> <p>- 민간위탁사업비(320-02) : 31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인력 등 인건비] 189백만원(7명×9개월×3백만원) · [운영경비] 121백만원(센터운영·유지관리비 76, 컨설팅·회의비 등 45) <p>○ 휴먼빅데이터구축 : 420백만원</p> <p>가. 휴먼빅데이터구축 연구 400백만원</p> <p>- 일반연구비(260-01) : 4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인력 인건비] 240백만원(10명×8개월×3백만원) · [연구경비] 160백만원(휴먼빅데이터 기반구축 연구·실증 90, 재료비·회의비 등 70) <p>나. 측정장비구입 20백만원</p> <p>- 자산취득비(430-01) : 2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구입 20백만원 (20백만원 x 1종)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한국인인체정보 보급 건수 (단위: 건)	목표	8,600	10,000	10,000	10,000	10,000	과거실적 및 증가추세 감안	Σ(보고서 다운로드수+ 인체정보 가공요청 건수)	국가기술표준원 내부통계 및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
	실적	12,559	13,062	10,341	-	-			
	달성도	148%	130%	10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84세 고령층을 대상으로 직접측정 1,014명(남441명, 여573명) 및 3D측정 429명(남192명, 여237명)의 고정밀 인체데이터 확보 * 고령친화 산업제품 생산 및 의료기기, 고령자 생활공간 설계 자료로 제공 ·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사업 결과 공식 발표, 협력 MoU 등을 추진 * KBS, YTN / 조선·중앙·동아, 전자, 한겨레, 헤럴드경제 등 많은 방송, 신문 매체가 8차 조사결과 및 보급사례 중심으로 보도(78건) · 인체데이터 생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 가상공간을 통해 가상착의 등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메타커머스 모델 제안, 설계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9세 아동·청소년 1,118명을 대상으로 311항목의 3D 측정을 통한 고정밀 인체데이터 확보 · 고령자 대상 인체치수조사 사업결과 발표 및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 MoU 등을 추진 * SBS, MBN / 조선·중앙·동아, 전자, 한겨레, 헤럴드경제 등 많은 방송, 신문 매체에서 조사결과에 대해 보도(57건) · 헬스케어분야 인체데이터 활용을 위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 3D형상 데이터를 활용한 자세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을 통한 개인맞춤형 근골격계 건강상태 점검 모델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60세 이상 휠체어 사용 척수손상 장애인 338명을 대상으로 29항목의 실효성 있는 특수계층 인체데이터 확보 · 「제9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에 대비하여 신규 '동적 인체 표면 형상' 시범 운영(156명) · 아동·청소년 대상 인체치수조사 사업결과 발표, 기업 컨설팅 등 데이터보급 활동 * KBS, SBS / 조선·중앙·동아, 문화, 전자 등 많은 방송, 신문 매체에서 조사결과에 대해 보도(61건) · 인체데이터의 건강진단·헬스케어 분야 적용 사업모델 실증 및 신규 BM 수요 발굴 * 실증 : 체형·자세 분석을 통한 예방적 건강서비스, 무릎 관절염 환자 분석 신규BM : 고령자용 재활 자전거, 욕창방지 매트, 재활보조 웨어러블로봇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69세 성인 대상 '제9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1차년도 추진(3000명 규모) ·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한 동적 인체 측정 항목 설계 및 기업 컨설팅 등 데이터보급 활동 · 휠체어 사용 척수손상 장애인 대상 인체치수조사 사업결과 발표 * 장애인 관련 유관기관·협단체 등에서 장애인 인체데이터 측정결과에 대한 높은 관심 확인 및 취약계층 언론, 신문 매체에서 조사결과에 대해 보도(22건) · 휴먼빅데이터 구축 방안 연구 및 국내·외 인체데이터 활용 협력체계 구축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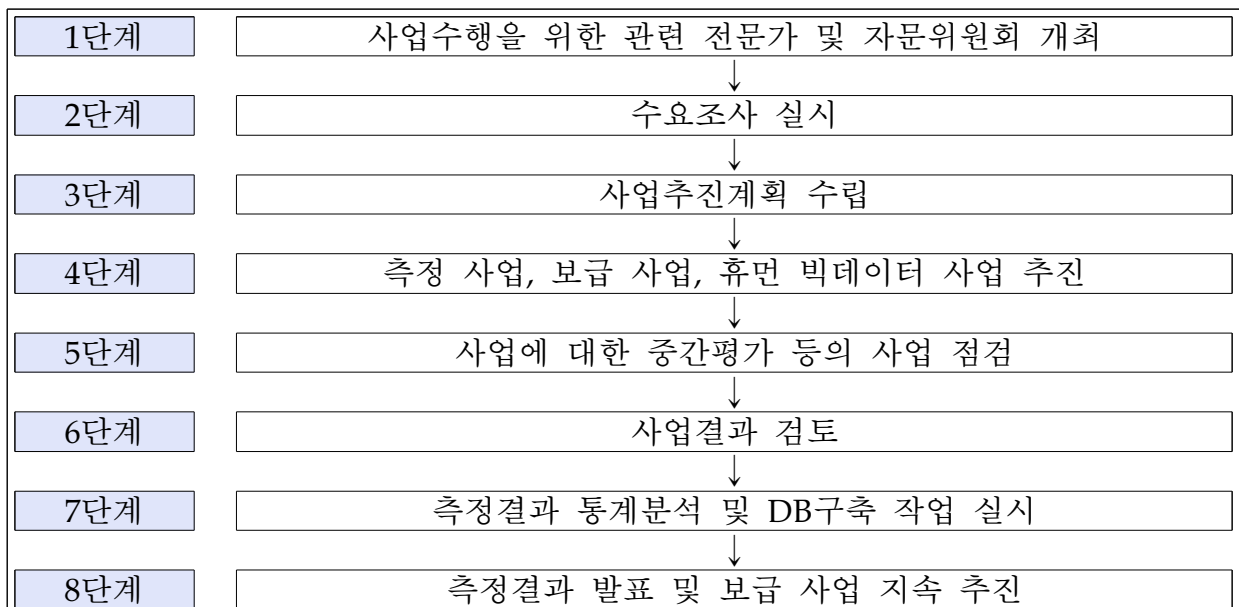
- '25년~'26년 '제9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사업 추진으로 최신화된 고정밀 한국인 인체데이터베이스 구축(목표 6,000명)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인체치수·형상 정보를 보급하고 해당 결과를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한 KS표준 제·개정에 이용, 기업의 제품설계 등에 활용
- 제품 설계에 필요한 인체치수정보 및 3차원 인체형상정보, 동적측정정보 등 종합적인 인체표준정보 DB 구축 및 주기적인 인체정보 업데이트 정보 제공
-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매년 한국인인체관련 정보 보급 추진을 통하여 산업계가 인체 친화적 제품 생산 및 보급에 따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 기업 대상 인체치수 활용 컨설팅 사업 지속 추진으로 의류, 가구, 스마트폰, 자동차, 헬스케어, 유통산업 등 인체치수가 활용되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인체친화적 제품 생산과 서비스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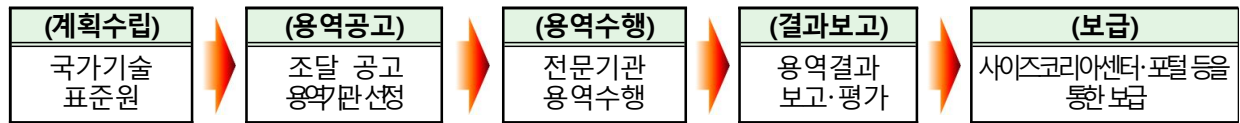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통) 사업 절차도



- (공통) 사업 흐름도



- (내역사업1) 인체치수측정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산업통상부 (1,119백만원)	=> (1,070백만원)	용역공고 (1,070백만원)	=> (1,070백만원)	용역선정기관
	=> (49백만원)	시험연구비 등 부처 직접지출 (49백만원)	=> (49백만원)	부처 직접지출

- (내역사업2) 인체정보보급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산업통상부 (310백만원)	=> (310백만원)	용역공고 (310백만원)	=> (310백만원)	용역선정기관

- (내역사업3) 휴먼빅데이터구축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산업통상부 (420백만원)	=> (400백만원)	용역공고 (400백만원)	=> (400백만원)	용역선정기관
	=> (20백만원)	자산취득비 부처 직접지출 (20백만원)	=> (20백만원)	부처 직접지출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725	1,849	1,849	2,978	2,978	
2025~2029		1,849	1,849	2,840	2,840	2,84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사이즈코리아센터 상시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산중위, 22결산)
 - 사이즈코리아센터는 민간위탁을 통해 기업·업종별 맞춤형 컨설팅 등 인체데이터의 민간 대상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는 기관으로, 연초 사업계획 확정 후 조달공고 및 계약절차에 약 3개월이 소요, 센터의 실제 운영은 약 9개월가량 진행되었음. 공백기가 없도록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인체치수측정 사업 표본설계 개선 및 사이즈코리아센터 지속적 운영방안 마련 필요(산중위, 23결산)
 - '23년 인체치수측정사업은 서울·경기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대상 지역이 전국이 아닌 수도권에 한정됨에 따라 표본의 대표성 확보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서울·경기·강원, 경상권, 전라권 등 3개 권역의 전국 단위 표본으로 조사한 성인 대상 측정과 일관성 유지 필요
 - 매년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사이즈코리아센터의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는 등 사업의 지속성 및 효율성이 저하. 기업 맞춤형 컨설팅, 데이터 분석·가공 등의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기 위하여 다년도 계약 추진 등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수도권 지역에 한정되었던 아동·청소년 조사는 향후 관련 예산의 충분한 확보를 통해 전국으로 확장하여 시행 예정
- 사업계획 수립과 용역공고를 조기에 실시하여 사업자 선정을 앞당김으로써 운영공백 최소화(24년) 및 다년도 계약추진(25년) 등의 개선을 통하여 사이즈코리아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인체치수측정

- 국제기준에 상응하는 고품질의 한국인 최신 인체치수 및 인체형상정보 구축
- 국가표준 및 산업규격의 설정을 위한 과학적 자료의 제공
- 2025년~2029년 5년 주기 제9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사업 수행으로 최신 인체정보를 산·학·연에 보급하기위한 데이터 구축
 - * (1,2차년도) 성인 → (3차년도) 고령자 → (4차년도) 아동·청소년 → (5차년도) 특수계층
- (통계조사) 특히, '25 ~ '26년 성인 대상 '제9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추진에 따라 지출 소요가 큰 폭으로 증가(인건비, 측정장비 대여료, 피측정자 사례비 등)
 - * 5년 주기 정기 통계측정 사업: (15) 7차 조사 → (20~21) 8차 조사 → (25~26) 9차 조사
-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 대한 측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사업 성장 도모
- 기업 실수요 기반 고기능성·고피트성 제품설계를 위한 동적 인체측정 도입

□ 인체정보보급

- 인체치수정보 보급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산업체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체정보 보급 및 활용기술 개발지원 활성화 추진
- Size-Korea DB 개선, 지속적인 기초 통계자료 제공으로 효율적인 DB 관리·운영 및 웹기반 User Interface 시스템을 개발
- 누구나 인체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DB 구축 및 관련 웹사이트 정비
- 측정된 인체정보를 이용하여 연령별 대표 체형, 특이 체형 정보 제공 및 관련된 규격에 최신 정보의 지속적 반영
- 산업군별 응용 통계 및 3차원 모형 제공 서비스 추진으로 연령, 성별에 따른 표준 인체 부위별 분석자료 및 3차원 모형 제공
- 산·학·연·관(軍 포함)의 인체표준 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미국, EU 등의 인체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산업계에 보급함으로써 수출 제품의 경쟁력 강화

□ 휴먼빅데이터구축

-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개인 인체정보를 3차원 디지털 데이터화하여 각종 산업에서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휴먼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
- 휴먼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소비자는 온·오프라인에서 맞춤형 제품, 건강, 최적의 서비스를 향유하는 등 인간 삶의 질 향상
- 3D스캐너로 생성된 디지털 인체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신산업 창출 및 육성
- 초기 휴먼 빅데이터 사업은 민간에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으므로 기술·제도적 인프라 구축, 新BM 창출 등 공공부문에서 추진 후, 민간으로 확대하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 조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832	-	1,832	-	-	-	1,832	1,813.3	99.0	99.0	-	18.7
2023	1,725	-	1,725	-	-	-	1,725	1,720	99.7	99.7	-	5
2024	1,725	-	1,725	-	-	-	1,725	1685.77	97.7	97.7	-	39.23
2025	1,849	-	1,849	-	-	-	1,849	1,849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및 조달차액
2023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및 조달차액
2024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및 조달차액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참고자료 참조

참고 1

한국인 인체데이터 조사 및 활용기반 구축 사업 개요

- (사업목적) 한국인 인체치수·형상 데이터의 수집 및 보급을 통해 국민의 편리 증대 및 기업의 제품·서비스 경쟁력 강화
 -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및 통계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에 따라 5년 주기로 공표하는 국가승인 통계('05년 최초승인)
- (주요내용) '79년 이래 약 5년 주기의 한국인 인체치수·형상 데이터 확보로 우리 국민의 신체변화에 따른 제품·공간설계 등에 기여



- ① (인체치수측정) 국가통계작성과 산업계의 데이터 수요 대응
 - 한국인 인체치수·형상 정보를 조사하고 데이터화 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산·학·연에 보급하기 위한 DB 구축
 - * '79년 국민체위조사(공업진흥청)를 시작으로 '03년 '한국인 인체치수조사(국표원)'로 명칭변경, 5년 주기 정기 및 수요 분야 인체치수측정 실시(직접측정 및 3D측정)
- ② (인체정보보급) 산·학·연의 서비스·제품 개발 경쟁력 향상
 - 사이즈코리아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홍보 및 교육, 측정장비 무상대여 등 민간의 데이터 보급·활용 지원(온·오프라인)



- ③ (휴먼빅데이터) 신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인체정보 통합체계 마련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체정보 활용도 증가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제공을 위한 휴먼빅데이터 구축

참고 2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사업 추진 현황

차수	실시연도	측정	조사대상 (연령)	조사 인원수	측정 항목수	조사용역기관
1차	'79	직접/간접(사진)	0-45	16,977명	117개	한국과학기술원
2차	'86	직접	0-51	21,480명	80개	한국표준연구소
3차	'92	직접	6-50	8,886명	84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차	'97	직접	0-70	13,062명	120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5차	'03-'04	직접	0-90	15,576명	119개	대한인간공학회(주관) 한국의류학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동적	2-70	551명	35개	
		3차원	8-75	5,168명	205개	
6차	'10	직접	7-69	14,016명	139개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3차원	20-39	848명	177개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주관) 동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11	3차원	7-12	1,238명	177개	(재)아이패션비즈센터(주관) 동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12	3차원	40-69	1,228명	182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주관)
	'13	3차원	13-19	1,464명	160개	전남대학교 연세대학교
	'14	3차원	70-85	938명	199개	서울대학교(주관) 동서울대학교 한경대학교
7차	'15	직접	16-69	6,410명	133개	한국디자인진흥원(주관) 동서울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8차	'20-'21	직접	20-69	5,092명	137개	동서울대학교(주관) 충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3차원	20-69	4,545명	293개	
	'22	직접	70-84	1,014명	73개	포항공과대학교(주관) 서울대학교 동서울대학교
		3차원	70-84	476명	293개	
	'23	3차원	7-19	1,118명	314개	KATRI시험연구원
	'24	직접	20~60세 이상	338명	29개	KATRI시험연구원
9차	'25~'26	직접	20-69	6,072	73개-137개	KATRI시험연구원
		3차원	20-69	3,375	307개	

참고 3

기타 참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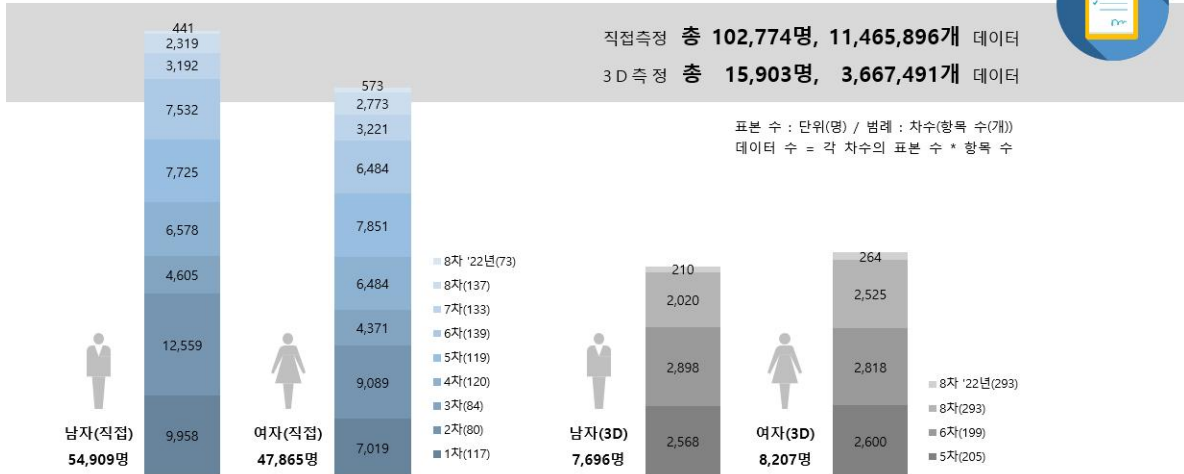
□ 해외 사례

국가/민간	사례내용
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CAESAR proj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 사업명 : Civilian American and European Surface Anthropometry Resource project(CAESAR) ○ 조사기간 / 조사지역 / 2D·3D 피측정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1998.4.~2000.9. / Ames(IA), Atlanta(GA), Ottawa(Ontario, 캐나다) 등 12개 도시 / 2,375명 - (네덜란드) 1999.8.~2000.9. / Soesterberg 1개 도시 / 1,255명 - (이탈리아) 2001.2.~2001.9. / Genova 1개 도시 / 796명 ○ 결과물 및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측정치 및 3차원 영상' 또는 '네덜란드+이탈리아 측정치 및 3차원 영상'에 대한 구입비용은 각각 10,000USD이며, 3차원 형상을 제외한 인체 측정치만 구매하는 경우에는 '미국 측정치' 또는 '네덜란드+이탈리아 측정치'가 각각 3,500USD임
독일 (Size GERMAN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 사업명 : SizeGERMANY - Die deutsche Reihenmessung ○ 조사기간 / 조사지역 / 3D 피측정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7.1.~2008.10.31. / 독일 전역(North Germany, South Germany, New Federal) / 12,331명 ○ 결과물 및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GERMANY에서 결과물 관리(iSize 포털에서 제공) - 인체측정치 전체 자료 구매를 위해서는 15,600€가 소요되며, 3차원 형상 열람을 위해서는 3,200€가 추가 소요
일본 (Size-JP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 사업명 : 人間特性基盤整備事業(인간특성기반정비사업, Size- JPN2004-06) ○ 조사기간 / 조사지역 / 2D·3D 피측정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10.~2006.10. / 도쿄, 오사카, 고베, 모리구치 / 6,707명 ○ 결과물 및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자료를 묶은 세트는 판매하지 않으며, 측정 항목별 및 분석 항목별로 개당 가격이 책정됨(2D : 200~20,000엔, 3D : 10,000~60,000엔) - 외국인에게는 결과물을 판매하지 않으며, 외국 기관과의 결과물 교환은 가능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 사업명 : 중국 미성년 인체측정사업, 중국 성인인체치수에 대한 예비조사, 제2차 중국 성인인체치수 조사항목 ○ 조사기간 / 조사지역 / 2D·3D 피측정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미성년 인체측정사업) 2006년~2007년 / 중국 전역(동북화북지역, 중서부지역, 장강중류지역, 장강하류지역, 광둥·광서·북건지역, 운남·귀주·사천구역) / 19,829명 - (중국 성인인체치수에 대한 예비조사) 2009년 / 시안, 톈진, 상하이, 북경 / 3,100명 - (제2차 중국 성인인체치수 조사항목) 2014.12.1.~2018.1.30. / 중국 전역(동북화북지역, 중서부지역, 장강중류지역, 장강하류지역, 광둥·광서·북건지역, 운남·귀주·사천구역) / 약 24,000명 ○ 결과물 및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수행기관인 China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ization에서 결과물을 관리

□ 관련 도면 및 사진

① 인체데이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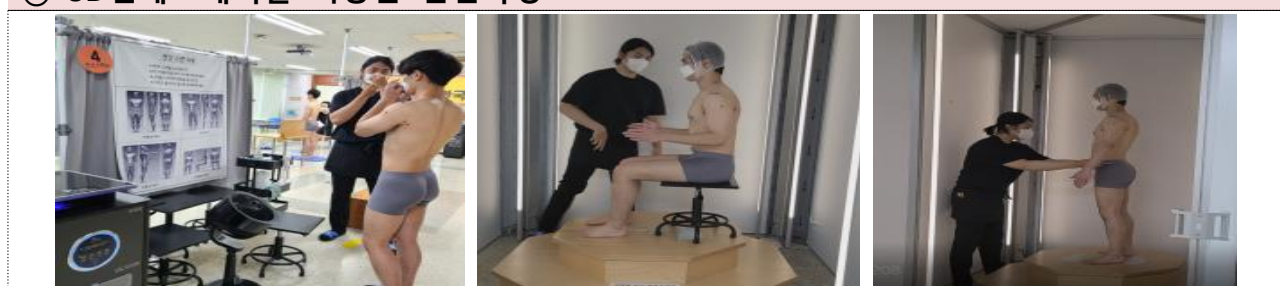
약 11.8만 명, 1,500만 개 이상의 치수(2D) 및 영상(3D) DB 보유



② 인체치수데이터 활용 사례

유아교사용 의자 (무궁유교) 	어린이 머리보호대 (오라운드) 	한국형 노인 보행 보조기 (라이프패킹) 	인체치수활용 의류 (FRU, 홈앤쇼핑)
마스크 사이즈 체계 (LG 생활건강) 	의료용 부목 (코루닷컴) 	웨어블로봇 (혈사휴먼케어) 	검체 채취 부스 설계 (지티사이언)
버스 좌석 설계 (현대자동차) 	대중교통 좌석 개선 (서울교통공사) 	재난구급용 장비 개선 (국민안전처) 	수리온헬기 및 KF-21 보라매 전투기 조종공간 설계

③ 3D인체스캐너를 이용한 전신측정



<div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10px;">사 업 명</div> <div style="font-size: 1.1em;">(10)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R&D) (3731-305)</div>
--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5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표준기술 개발및보급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표준정책국	代배진석	윤승환 연구사	-
		표준정책과	043)870-5340	043)870-5344	-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엔지니어링 /표준실	신정현 PD	053-718-8268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	42,187	53,100	53,100	56,486	56,486	3,386	6.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2,187	42,187	42,187 [42,187]	-	-	53,100	53,100	53,100 [53,100]	53,100	53,100 [53,100]	-	-	56,486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34,910	34,910	34,910 [34,910]	-	-	42,582	42,582	42,582 [42,582]	42,582	42,582 [42,582]	-	-	45,968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3,823	3,823	3,823 [3,823]	-	-	5,097	5,097	5,097 [5,097]	5,097	5,097 [5,097]	-	-	5,097
· 산업데이터표준화 및 인증지원	629	629	629 [629]	-	-	-	-	-	-	-	-	-	-
· R&D사업화표준연계	1,198	1,198	1,198 [1,198]	-	-	2,984	2,984	2,984 [2,984]	2,984	2,984 [2,984]	-	-	3,484
· 국제표준화협력	1,627	1,627	1,627 [1,627]	-	-	2,437	2,437	2,437 [2,437]	2,437	2,437 [2,437]	-	-	1,937
○ 비목별 분류(합계)	42,187	42,187	42,187 [42,187]	-	-	53,100	53,100	53,100 [53,100]	53,100	53,100 [53,100]	-	-	56,486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42,187	42,187	42,187 [42,187]	-	-	53,100	53,100	53,100 [53,100]	53,100	53,100 [53,100]	-	-	56,48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2,187	42,187	42,187 [42,187]	-	-	53,100	53,100	53,100 [53,100]	53,100	53,100 [53,100]	-	-	56,486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34,910	34,910	34,910 [34,910]	-	-	42,582	42,582	42,582 [42,582]	42,582	42,582 [42,582]	-	-	45,968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34,910	34,910	34,910 [34,910]	-	-	42,582	42,582	42,582 [42,582]	42,582	42,582 [42,582]	-	-	45,968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3,823	3,823	3,823 [3,823]	-	-	5,097	5,097	5,097 [5,097]	5,097	5,097 [5,097]	-	-	5,097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3,823	3,823	3,823 [3,823]	-	-	5,097	5,097	5,097 [5,097]	5,097	5,097 [5,097]	-	-	5,097
· 산업데이터표준화 및 인증지원	629	629	629 [629]	-	-	-	-	-	-	-	-	-	-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629	629	629 [629]	-	-	-	-	-	-	-	-	-	-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R&D사업화표준연계	1,198	1,198	1,198 [1,198]	-	-	2,984	2,984	2,984 [2,984]	2,984	2,984 [2,984]	-	-	3,484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1,198	1,198	1,198 [1,198]	-	-	2,984	2,984	2,984 [2,984]	2,984	2,984 [2,984]	-	-	3,484
· 국제표준화협력	1,627	1,627	1,627 [1,627]	-	-	2,437	2,437	2,437 [2,437]	2,437	2,437 [2,437]	-	-	1,937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1,627	1,627	1,627 [1,627]	-	-	2,437	2,437	2,437 [2,437]	2,437	2,437 [2,437]	-	-	1,93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우리 기술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新시장 선점을 위해 표준화 정책 수립, 국제표준(ISO/IEC) 개발·제안 등을 지원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산업·연구·공공분야에서 사업화 연계가 가능한 고품질 참조표준데이터를 개발·보급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R&D사업화표준연계) 국가 R&D와 표준화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 결과의 기술혁신 및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R&D에 따른 표준개발 지원
- (국제표준화협력) 주요 표준 선도국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첨단분야 국제표준 공동 개발, 국제표준 포럼 구성·운영 등을 지원
-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 핵심산업(스마트제조·자율차·로봇)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에서 활용하는 데이터의 표준화 및 실증을 통한 상호운용성 확보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①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 제2항(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② 추진경위

- '96년 : '산업기술개발 5개년 계획' 수립
- '99년 : 국가표준기본법(제27조) 제정으로 표준개발 지원근거 마련
- '00년 : 30억원 예산지원으로 표준화기술개발사업 시작
- '07년 : '표준화기술개발사업'과 '표준화기반구축사업'을 통합
- '09년11월 :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수립
- '09년 5월 : 녹색성장위원회(지경부) '녹색기술 표준화 전략' 발표
- '10년 6월 : 지식경제부 R&D사업구조 개편으로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으로 통합
- '15년 5월 : 산업통상자원부 R&D사업구조 개편으로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으로 분리
- '19년 6월 :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 발표
- '21년 4월 :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 수립
- '21년 11월 :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수립
- '24년 2월 :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2.0 수립
- '24년 5월 : 첨단산업 국제표준화 전략 수립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①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 제2항(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국가등의 책무)
-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② 추진경위

- '99년 :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참조표준에 관한 사항을 최초로 규정
- '06년 : 「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참조표준개발계획 반영·개발 추진
- '06년 8월 :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
- '06년 8월 : 「국가참조표준센터」 설립 및 참조표준 평가·보급
- '11년 :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신규 지원
- '15년 5월 : 산업통상자원부 R&D사업구조 개편으로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으로 분리
- '20년 : 36개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지정·운영
- '21년 : 55개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지정·운영
- '22년 : 63개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지정·운영
- '23년 : 64개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지정·운영
- '24년 : 65개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지정·운영

○ R&D사업화표준연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공통운영요령 제18조(과제기획)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연구개발성과),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 연구성과평가법 제2조(정의)

② 추진경위

- '19년 3월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R&D 단계별 표준연계 체계 구축 등 반영
- '19년 6월 : '4차 산업혁명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R&D 전 주기 표준연계 등 반영
- '19년 12월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용요령' 등 산업부 R&D 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R&D 과제기획시 표준화 동향조사 의무화

- '20년 6월 :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을 통해 표준을 특허, 논문과 같이 R&D 주요 과학기술적 성과로 명시
- '21년 1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표준을 연구개발성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 성과관리유통 전담기관의 역할 정의
- '21년 1월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과기부 제2020-107호)
 - * 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22년 1월 : R&D 사업화 표준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지정 사업 시행
 - * '22~'26년(표준화 전략 컨설팅, 표준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등)
- '22년 7월 : R&D표준연계 활성화를 위한 연구관리 전문기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업무협약(산기평-에기평-표준협회)
- '23년 6월 : 전력에너지 분야 R&D 표준성과 창출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 (국표원-한국전력공사-표준협회)
- '24년 11월 : 중앙일보 대학평가 내 국제표준 연구성과 반영
- '25년 2월 : 2025년 국가표준시행계획 내 초격차 프로젝트 등 R&D 표준연계 지원 강화 반영

○ 국제표준화협력

① 법령상 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② 추진경위

- '23년 5월 : 미국 국가표준화 전략 발표
- '23년 5월 : 韓-美 표준정책 비교·검토를 통한 첨단산업 14개 중점분야 도출
- '23년 6월 : 한-미 고위급 표준화 협력 채널 신설 추진
- '23년 7월 : 한-독 양자 협력 채널 구축
- '23년 11월 : 국내 정책, 미국 표준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12대 국제 표준화협력 중점추진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기획
- '24년 4월 : 국제표준화협력사업 신규과제 지원(인공지능, 스마트제조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7년 ~ 계속(일몰관리혁신)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9,995	74,495	42,187	53,100	56,486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연구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및 관련 산업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표준 기술력향상	출연	기업, 대학, 연구소, 업종별 단체, 시험인증 기관 등	45,968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국가참조 표준데이터 개발·보급	출연	국가참조 표준데이터 센터	5,097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R&D사업화 표준연계	출연	한국표준 협회,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3,484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국제표준화 협력	출연	기업, 대학, 연구소, 업종별 단체, 시험인증 기관 등	1,937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2025 본예산) 42,582백만원 → (2026 예산) 45,968백만원, 3,386백만원 증액

-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제표준·사실상표준, 산업 융합 AI 표준 개발·제안 수행에 따라 45,968백만원 산출

- (산출) 계속과제 : (통합형) 23개×530백만×12/12개월 + (기반조성) 24개×296.1백만×12/12개월 + (연구개발) 73개×115백만×12/12개월 = 27,691백만원

종료과제 : (기반조성) 11개×473.6백만×12/12개월 + (연구개발) 37개×120백만×12/12개월 = 9,650백만원

신규과제 : (통합형) 10개×450백만×9/12개월 + (기반조성) 7개×280백만×9/12개월 + (연구개발) 42개×120백만×9/12개월 = 8,627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2,582	<p>○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42,582백만원</p> <p>가. 계속과제 (19,228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형) 7개×419.3백만×12/12개월 + (기반조성) 20개×401.5백만×12/12개월 + (연구개발) 69개×119.8백만×12/12개월 = 19,228백만원 <p>나. 종료과제 (10,012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반조성) 25개×209.6백만×12/12개월 + (연구개발) 40개×119.3백만×12/12개월 = 10,012백만원 <p>다. 신규과제 (13,342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형) 15개×598.7백만×9/12개월 + (통합형) 1개×600백만×6/12개월 + (기반조성) 12개×286.9백만×9/12개월 + (기반조성) 3개×310백만×6/12개월 + (기반조성) 1개×320백만×3/12개월 + (연구개발) 24개×120백만×9/12개월 + (연구개발) 17개×120백만×6/12개월 = 13,342백만원 	45,968	<p>○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45,968백만원</p> <p>가. 계속과제 (27,691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형) 23개×530백만×12/12개월 + (기반조성) 24개×296.1백만×12/12개월 + (연구개발) 73개×115백만×12/12개월 = 27,691백만원 <p>나. 종료과제 (9,65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반조성) 11개×473.6백만×12/12개월 + (연구개발) 37개×120백만×12/12개월 = 9,650백만원 <p>다. 신규과제 (8,627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형) 10개×450백만×9/12개월 + (기반조성) 7개×280백만×9/12개월 + (연구개발) 42개×120백만×9/12개월 = 8,627백만원

②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 (2025 본예산) 5,097백만원 → (2026 예산) 5,097백만원, 전년 동일

- 산업·연구·공공분야에서 사업화 연계가 가능한 고품질 표준데이터를 개발·보급하여 산업접목 AI 개발 확대 등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해 5,097백만원 산출

- (산출) 종료과제 : 4개×1,274.3백만×12/12개월 = 5,097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097	<p>○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5,097백만원</p> <p>가. 계속과제 (5,097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개×1,274.3백만×12/12개월 = 5,097백만원 	5,097	<p>○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5,097백만원</p> <p>가. 종료과제 (5,097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개×1,274.3백만×12/12개월 = 5,097백만원

③ R&D사업화표준연계

: (2025 본예산) 2,984백만원 → (2026 예산) 3,484백만원, 500백만원 증액

- 산업기술 R&D 단계에서 표준개발을 병행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우리기술의 표준화 선점 추진을 위해 3,484백만원 산출

- (산출) 종료과제 : $2\text{개} \times 1,742\text{백만원} \times 12/12\text{개월} = 3,484\text{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984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2,984백만원 가. 계속과제 (2,984백만원) · $2\text{개} \times 1,492\text{백만원} \times 12/12\text{개월} = 2,984\text{백만원}$	3,484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3,484백만원 가. 종료과제 (3,484백만원) · $2\text{개} \times 1,742\text{백만원} \times 12/12\text{개월} = 3,484\text{백만원}$

④ 국제표준화협력

: (2025 본예산) 2,437백만원 → (2026 예산) 1,937백만원, 500백만원 감액

- 주요 표준 선도국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 공동 개발, 국제표준 포럼 구성·운영 등을 위해 1,937백만원 산출

- (산출) 계속과제 : $7\text{개} \times 276.7\text{백만원} \times 12/12\text{개월} = 1,937\text{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437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2,437백만원 가. 계속과제 (2,160백만원) · $6\text{개} \times 360\text{백만원} \times 12/12\text{개월} = 2,160\text{백만원}$ 나. 신규과제 (277백만원) · $1\text{개} \times 369.3\text{백만원} \times 9/12\text{개월} = 277\text{백만원}$	1,937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1,937백만원 가. 계속과제 (1,937백만원) · $7\text{개} \times 276.7\text{백만원} \times 12/12\text{개월} = 1,937\text{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표준화기구 승인 신규 국제표준안 건수 (단위: 건)	목표	39	40	36	37	38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국제표준안 제안건수를 반영	국제표준화기구 (공적, 사실상) 신규 국제표준안 채택 건수의 합	국제표준화기구 표준화 추진 승인 여부 확인
	실적	43	43	39	-	-			
	달성도	110.3	107.5	108.3	-	-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참조표준 DB 활용도 증가 (단위: 건)	목표	62,000	-	-	-	-	(일물관리혁신사업 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성과지표 변경)	금년도 접속건수- 작년도 접속건수	국가참조표준센 터 홈페이지를 통한 전수조사 (www.srd.re.kr)
	실적	90,351	-	-	-	-			
	달성도	145.7	-	-	-	-			
참조표준 우수성 (단위: 점)	목표	-	80	82	83	83.5	참조표준의 질적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률, 만족도, 사업화 연계 수를 모두 고려한 지표를 개발하고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 (설정근거) 최근 4개년 동안 2번 달성한 점수인 80점을 '23년 목표로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상향	$(\text{이용률 목표/실적}) \times 0.32 + (\text{활용 만족도 목표/실적}) \times 0.34 + (\text{사업화 연계 수 목표/실적}) \times 0.34$ (측정방법) 국가참조표준 플랫폼 및 외부기관 조사 결과(만족도) (측정시기) 매년 1월	국가참조표준 플랫폼 확인 (www.srd.re.kr)
	실적	-	83.56	85.44	-	-			
	달성도	-	104.4	104.2	-	-			

* '22년 일물 평가결과에 따라 전략계획서를 수정하여 기존 접속 건수 위주의 성과지표를 사업화 연계수, 활용만족도 등을 반영한 “참조표준 우수성”으로 변경

○ R&D사업화표준연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R&D 표준연계 과제 건수 (단위: 건)	목표	신규	30	20	25	35	최근 3년간 사업 예산 대비 R&D 표준 연계과제 비율(약 1억원당 1건)을 고려하여 '26년 목표치를 35건 이상으로 설정하고 매년 5 건 씩 상향조정 되는 도전적 목표 설정	기술분야별 R&D 표준연계과제 지정 건수의 합	NIMS(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
	실적	-	30	85	-	-			
	달성도	-	100	425	-	-			

○ 국제표준화협력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표준안 제안건수 (단위: 건)	목표	-	-	신규	6	7	'25년도 국제공동 연구계약 체결된 지원 과제 수(7개)를 기준으로 매년 과 제당 1개 이상의 국제표준제안 목표	국 제 표 준 화 기 구 PWI 제안 건수	총회 공식문서 또는 ISO/IEC번호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과제 : 다수의 API 기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API 중계방식 국제 표준 개발 등 164개 ○ 신규과제 :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 시스템 누설 안전 요구사항 국제 표준개발 등 76개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과제 : 친환경 선박용 고망간 압연강판 및 고망간강 플랜지 국제표준 개발 등 195개 ○ 신규과제 : 자율주행차 5G 통신 기반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 국제 표준 개발 등 51개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과제 : 모바일 및 스마트계약 기반의 디지털 ID 표준 확산 및 기반 조성 등 233개 ○ 신규과제 : 첨단산업 기반, 선도국과의 표준협력, 스마트병원 서비스 표준화 등 국내외 표준기반 조성 등 13개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과제 : AI, 로봇 등 신기술 융합 첨단 하지의지 표준 기반 조성 등 161개 ○ 신규과제 : 인공지능 산업내재화를 위한 국제표준화 기반조성 등 73개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2022	○ 계속과제 : 참조표준데이터를 활용한 냄새물질 유입 예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 13개
2023	○ 계속과제 : 심장질환 진단지원 시스템 및 3채널 웨어러블 심전도기기 개발 등 13개
2024	○ 신규과제 : 한국인 단염기 다형성 참조표준 기반 헬스케어를 위한 고효율 DNA 칩 제작 및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 4개
2025	○ 계속과제 : 국가참조표준 활용 기능성 융복합세라믹 소재, 부품 상용화 개발 등 4개

○ R&D사업화표준연계

2022	○ 신규과제 : R&D 표준연계 강화를 위한 표준화 동향조사 및 전략 창출 등 3개
2023	○ 계속과제 : R&D 표준연계 강화를 위한 표준화 동향조사 및 전략 창출 등 3개
2024	○ 계속과제 : R&D 표준연계 강화를 위한 표준화 동향조사 및 전략 창출 등 2개
2025	○ 계속과제 : R&D 표준연계 강화를 위한 표준화 동향조사 및 전략 창출 등 2개

○ 국제표준화협력

2024	○ 신규과제 : 산업 인공지능 신뢰성을 위한 국제표준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 표준(안) 공동개발 등 6개
2025	○ 계속과제 : 첨단 융·복합 핵심소재 국제표준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표준(안) 공동 개발 등 6개 ○ 신규과제 : 양자기술 표준화 선점을 위한 국제표준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 표준(안) 공동개발 1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新시장 진출 활성화 기대
- (중점분야) 韓·美 산업정책* 비교와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24.5.21)을 통해 선정한 첨단산업 15개** 분야 국제표준화(ISO/IEC) 추진

* (韓)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23.4), (美) 8대 핵심 신기술·6대 응용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화 전략(‘23.5) → 韓-美 정책 검토를 통해 12개 중점 추진 분야 도출 → 기술 발달 및 산업 수요를 반영하여 15개 중점 추진 분야로 확대

** AI, 양자기술, 청정에너지, 첨단제조, 로봇, 디스플레이, 반도체, 미래차, 미래선박, 원자력, 핵심소재,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메타버스, 항공우주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디지털전환 시대 핵심인 참조표준데이터(고품질 빅데이터)를 지속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데이터 기반 신 사업화 연계 지원
- 참조표준 전문생산기관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국가 R&D 결과 데이터를 참조표준으로 연계하여 국가지식 자산화
- 참조표준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신산업 창출 기대

○ R&D사업화표준연계

- 국가연구개발 전 과정에 걸친 표준연계를 통해 R&D 투자 효과성 제고, 도출된 표준성과의 체계적인 관리로 연구성과 확산 및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주도권 강화 기대

○ 국제표준화협력('24년 신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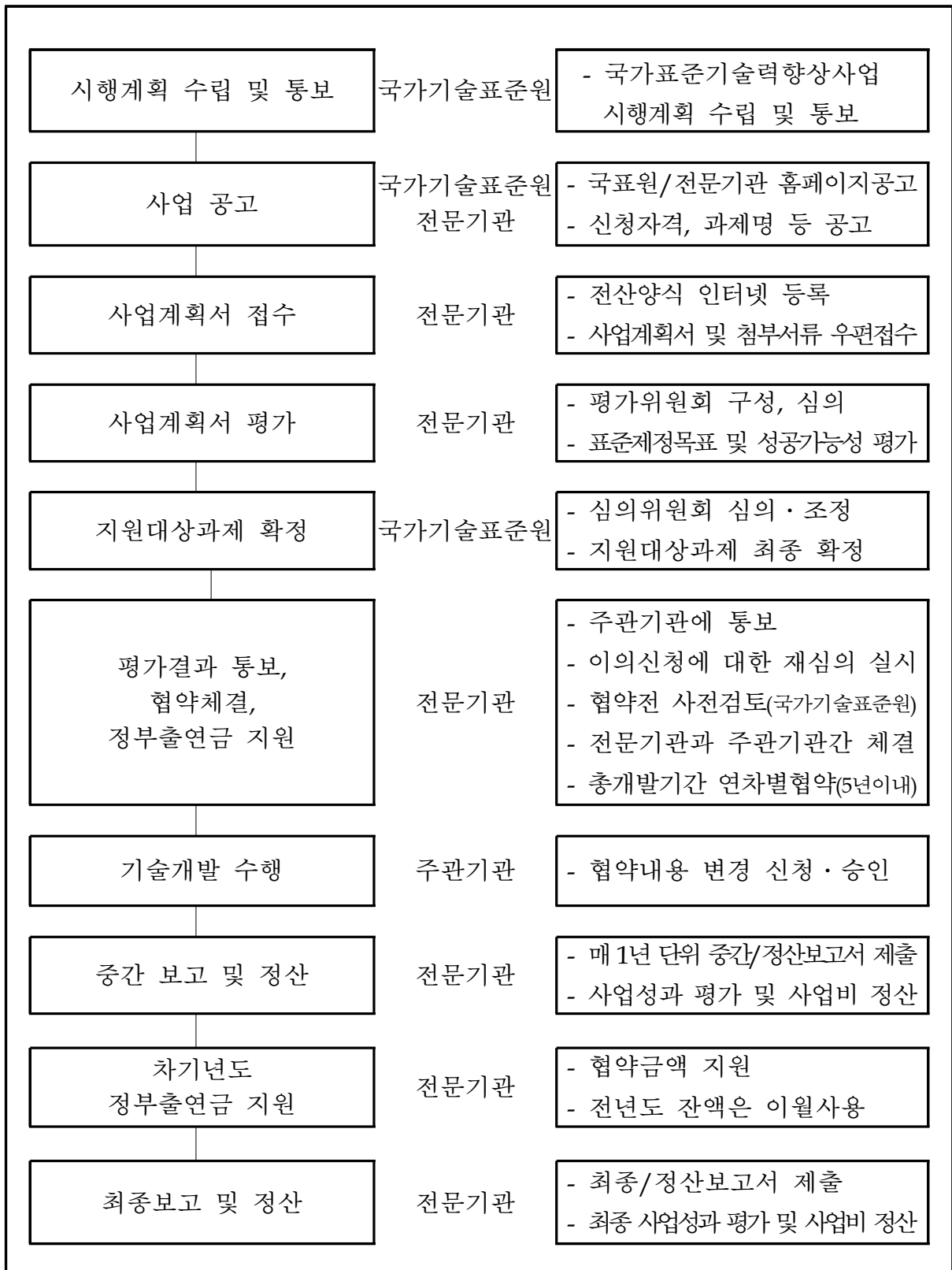
- 한·미, 한·독 등 정부 간 표준협력 및 국제포럼 운영을 통한 첨단산업 표준화 로드맵 마련, 국제표준 공동개발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확대 예상
-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첨단 융복합 분야의 기술교류를 통해 공동의 미래시장 선점 가능·국제표준 개발 추진 용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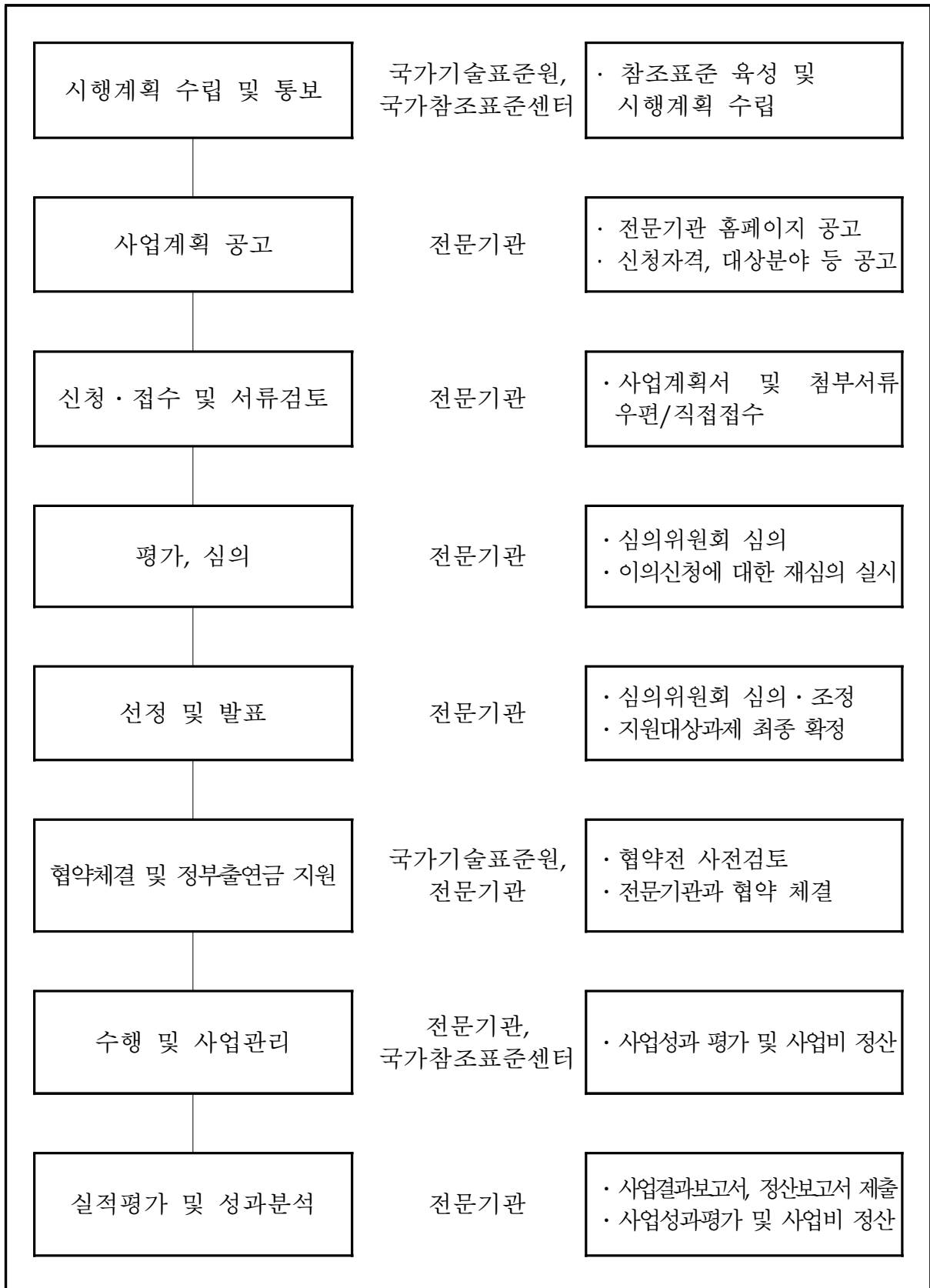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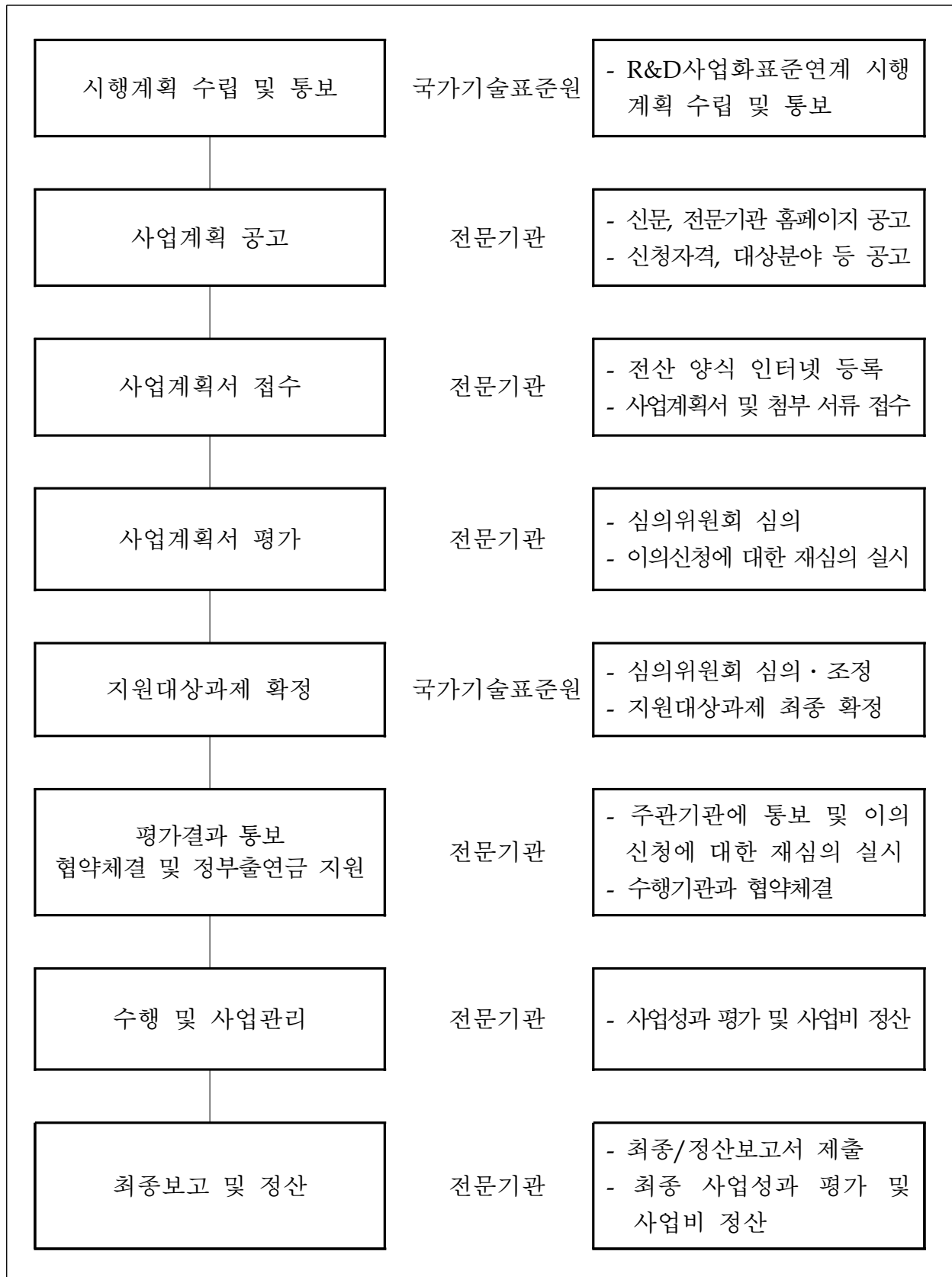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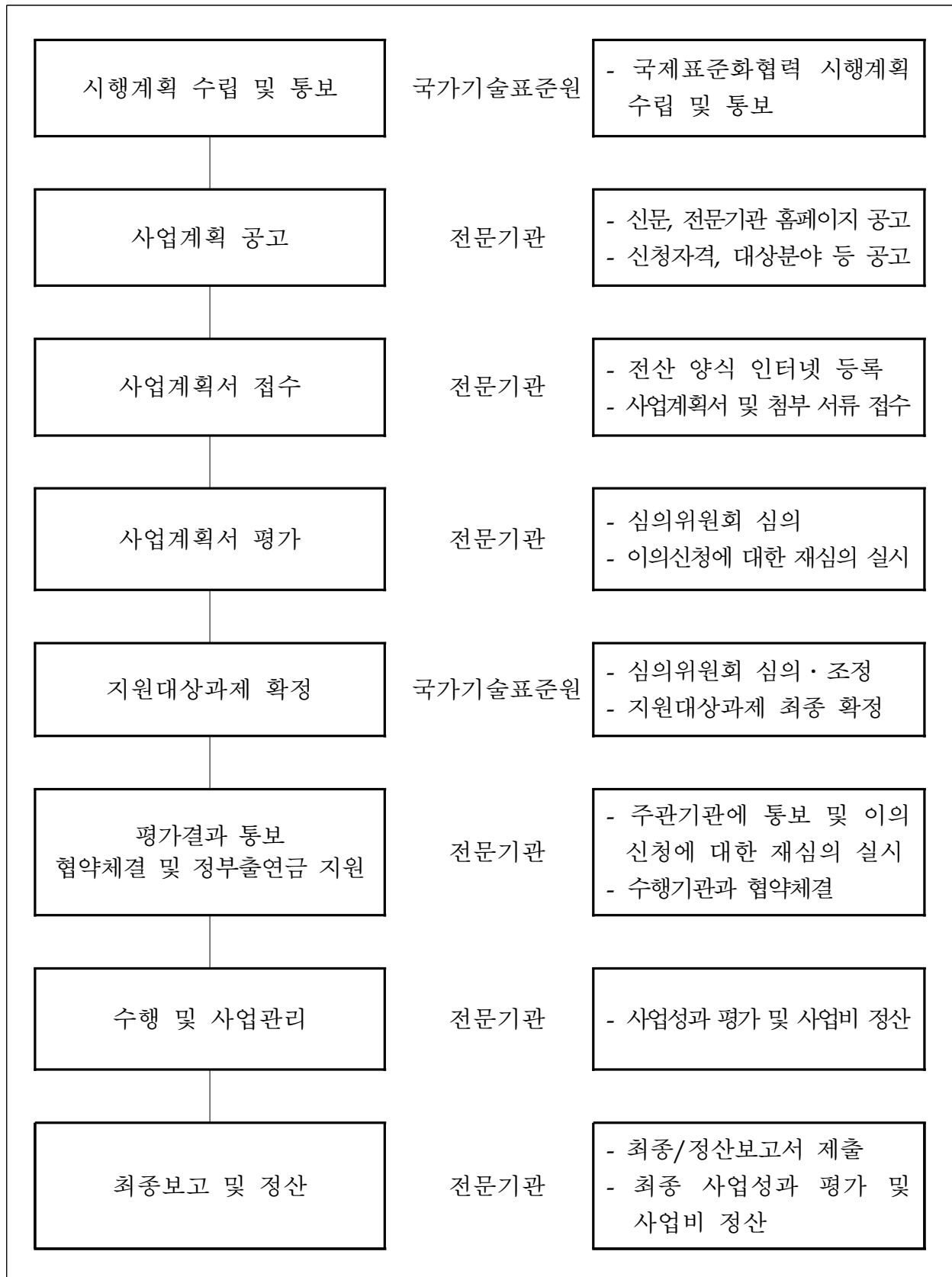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R&D사업화표준연계



○ 국제표준화협력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2,187	53,100	56,486	89,104	98,015	
2025~2029		53,100	56,486	89,104	98,015	107,81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표준 과제 총 239개 중 2개 과제의 일부 내용이 일반교육, 공모전 등으로 R&D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산중위,24결산)
-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 과제는 R&D 성격에 맞게 수행 내용을 변경('24.12월)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 향후추진 방향
 - 국가간 무역거래 활성화를 위해 각 국가의 표준·기술 규정에 국제표준 수용이 확대됨에 따라 전략적 도구로서의 미래 유망 첨단산업 분야 표준 발굴
 - 우리 기술 선도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제안 및 표준화 기반조성 추진
 -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과 중소·중견 기업 보유 기술의 국제표준 개발·제안 확대로 국제적 강소기업 육성
- 세부추진 계획
 - 표준화 정책과 국가 상위계획(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12대 국가전략기술, 국가 탄소중립 기본 계획,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등)에 따른 전략적 국제표준화 추진

②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향후추진 방향
 -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해 데이터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 지정·운영과 데이터센터간 연계율 통해 신뢰성 있는 국가참조표준데이터 제정 및 보급

○ 세부추진 계획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의 필수 기반 참조표준데이터 개발 및 보급 추진

③ R&D사업화표준연계

○ 향후추진 방향

- 산업부 위주의 R&D 표준연계에서 범부처 R&D 표준연계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국가 R&D 사업의 효과성 제고 마련

○ 세부추진 계획

- R&D 사업화 지원을 위해 과제 기획시 표준선행기술조사·전략연구, R&D 표준 성과에 대한 전담 관리·유통 등 R&D 전주기 표준연계 지원

④ 국제표준화협력

○ 향후추진 방향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세계지형이 재편됨에 따라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경쟁력확보를 위해 선도국(美·獨 등)과의 표준 협력을 강화

○ 세부추진 계획

-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 교류, 국제표준 아이템 발굴 등을 통한 국제표준(안) 공동 개발, 국제표준 포럼 구성·운영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 평가 결과(‘23.4월) : 우수(91.2점)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중간평가(91.2점)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
-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최근 “표준”이 연구성과평가법에 따라 과학기술적 연구성으로 인정된 만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이 표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
 - 전 산업분야를 다루는 만큼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사업에 대한 지속 투자 필요

연구성과평가법 제2조 정의 (20.12 개정)

4. “연구성과”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표준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말한다

- 표준이 연구성으로 인정되는 등 그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민간 주도의 표준화 기반이 부족하여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수립 등 지원 필요
 - 개별표준의 경제적 효과 등을 직접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미래 투자임(참고 : 표준의 경제적 효과분석)



※ 출처: ISO paper, "Standards & economic growth"(2021)
KOTIS, 표준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분석(2022)

- WTO/TBT 협정에 따라, 기술 분야별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국가별로 추가적인 기술기준 제정을 금지하고 해당 국제표준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처럼 수출 위주 국가는 “표준” 개발에 국가적 관심이 필요
 - 반도체·양자기술·AI 등 핵심분야에 대한 美·中의 표준·기술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첨단기술 및 미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주도권 확보가 시급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9,995	-	69,995	-	-	-	69,995	69,995	100	100	-	-
2023	74,495	-	74,495	-	-	-	74,495	74,495	100	100	-	-
2024	42,187	-	42,187	-	-	-	42,187	42,187	100	100	-	-
2025	53,100	-	53,100	-	-	-	53,100	53,10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69,995	69,995	69,995	69,995	-	69,995	69,995	-	-	100
2023	74,495	74,495	74,495	74,495	-	74,495	74,495	-	-	100
2024	42,187	42,187	42,187	42,187	-	42,187	42,187	-	-	100
2025. 12월기준	53,100	53,100	53,100	53,100	-	53,100	53,10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불임)

1.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07.~계속)

□ 사업개요

사업기간	'07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주관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업종별단체, 시험인증기관 등		
담당자	국표원 표준정책과 윤승환연구사(☎ 043-870-5344)		

< 관련 국정과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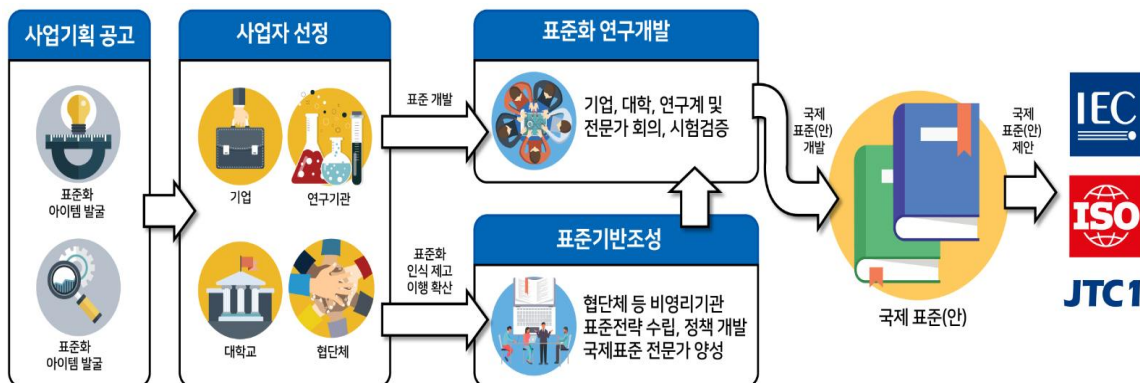
- ◇ (국정과제 23)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사회' 실현
 - (실천과제 4번)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달성 및 K-AI확산 추진 : AI 국제표준 정립
- ◇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 (실천과제 4번) 기술사업화를 위한 성과창출 혁신체제로 대전환 : 국제·사실상표준개발
- ◇ (국정과제 29)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 (실천과제 2번) (A)산업 AI기술개발, 기반구축 및 활용 확산 : AI 융합산업표준화

- 우리 기술을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화하여 국내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

* 민간과 시장이 투자하기 어려운 도전적·차세대 기술에 대해 국가가 전략적으로 표준화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국제표준(ISO/IEC) 개발 지원사업('07년~계속, 일몰관리혁신)

□ 사업내용(지원내용)

- (표준화 연구개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국내기술의 국제표준(안)을 개발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IEC 등)에 제안
- (표준기반조성) 우리기술 및 제품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정책·제도 발굴, 국제동향·이슈 대응, 국제협력 등 국제표준화 기반 구축



□ '26년 주요 추진계획

- **(산업기반 지원)** 우리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 디지털 전환, 저탄소 기술, 서비스 표준화 등 계속 및 신규 과제 지원
- **(첨단산업 집중)** ① AI,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 기술을 반영한 선제적 신규 국제표준 개발 추진, ② 디스플레이 등 국내 첨단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와 수출지원을 위한 사실상표준 개발 추진, ③ AI에 기반한 산업 융합 6개 분야(기계장비, 로봇, 가전, 자동차, 헬스케어, 금융)에 특화하여 AI 적용 표준 개발 확대 추진 ④ 의료, 과학, 환경 등 범부처 표준화 지원 확대 및 공공부문 지속 지원,

* 韓.美 산업 정책 비교를 통해 선정한('23.6월) 12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24.5월)을 발표

** 첨단산업 분야 2030 국제표준 개발계획 수립(2030년까지 첨단산업 15개 분야 508종 개발계획(AI,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첨단산업 15개 분야	AI, 반도체, 로봇,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미래선박, 첨단제조, 양자, 핵심소재, 원자력, 청정에너지, 첨단바이오, 메타버스, 항공우주
----------------	--

① (통합·병렬형* 과제 추진) 첨단분야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및 적시 국제표준화 지원

* 기존 소형·파편형 나열식 과제 → 개발 시너지 효과를 위한 **대형·통합형 과제 추진**

② (세계 최초·도전형 국제표준 개발) 금융·보안 및 산업 활용 AI 표준 등 국내기술을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ISO/IEC)화*하여 기술우위 선점

* (사례) 국내기업이 개발한 롤러블,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 기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여 기술 주도권 확보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 해외 기술사업화 실행

③ (범부처 확대 지원) 과학기술, 생활·의료, 환경 등 필수 산업분야에 대한 범부처 표준화 확대 지원

* 첨단바이오(식약처 협력), 메타버스(과기부 기술 협업), 항공우주(방사·우주청 MoU) 등

□ 표준화 필요성 및 시급성

- **(필요성)** 최근 기술표준을 무역기술장벽으로 활용*하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제표준을 조기에 선점한 국가·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 및 수출 경쟁력 제고 가능

*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추이: ('19) 3,336건 → ('21) 3,966건 → ('23) 4,079건

- **(시급성)** AI·양자기술·반도체 등 핵심분야에 대한 국제경쟁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해서는 美, EU, 中 등과 같이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가 시급

* (美) 민간 중심이었던 미국이 정부 주도의 「국가표준전략」 발표('23.5월, 백악관) : 8대 핵심기술과 6대 응용 분야 기술표준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추진

(中) 2035년까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5G, 인공지능(AI) 분야 표준개발 주도권 확보를 위한 행동계획 발표('22.7)

- **(RISK)** AI*·미래차** 등의 첨단분야는 기술개발 및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 → 우리기술 주도의 국제표준이 제정되지 않으면 첨단 산업에 대한 기업의 초격차 경쟁력 유지와 세계 新시장 주도권 확보 불가

* **(AI)** 현재 美·중·EU 등은 AI 신뢰성, 윤리 분야 등에 대한 국제표준을 중점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가 국제표준 선점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면 국내 제품의 해외 수출 시 설계 변경 등이 필요해져 세계시장('23년 약 4,593억 달러) 진출에 애로 발생

** **(미래차)** 핵심부품 및 V2X 데이터 호환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국제표준을 선점하지 못하면 세계시장('35년 약 1조 1,204억 달러)에서 주도권 확보가 곤란

□ 배경

- AI, 반도체, 로봇 등 첨단분야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우리 기업의 글로벌 新시장 진출을 위해 선제적 국제표준(ISO, IEC 등) 개발 필요

* 표준 선점은 상대국의 기술 추격을 허용하지 않고,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 추진내용

- **(목표)** 2030년까지 첨단산업 15개 분야*, 508종 국제표준 개발

* (첨단 15개 분야) AI, 반도체, 로봇,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미래선박, 첨단제조, 양자, 핵심소재, 원자력, 청정에너지, 첨단바이오(AI, 양자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메타버스 (산업 초기로 글로벌 성장 전망), 항공우주(국표원-방사청-우주청 MoU 체결)

- **(추진)** 분야별 국제표준 개발계획 수립 및 단계적 표준화

□ 첨단분야 국제표준 주요 개발내용(~2030년)

분야	표준개발 내용	분야	표준개발 내용
AI(39종)	시스템·데이터, 산업활용 등	양자(13종)	성능·안전·신뢰성 요소기술
반도체(39종)	패키징, 소·부장, 미래 반도체	핵심소재(60종)	공급망 확보·친환경 소재 등
로봇(35종)	산업, 서비스 로봇 성능·안전	원자력(24종)	SMR 및 원전 안전, 장비·운영
디스플레이(8종)	플렉시블 기술, 친환경 소재	청정에너지(41종)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 상용
이차전지(33종)	고성능 상용전지, 신소재 전지	첨단바이오(21종)	바이오 제품·의료 서비스 확대
미래차(82종)	자율차, 전기차 부품·장비·통신	메타버스(19종)	기술·시스템의 성능 평가
미래선박(60종)	친환경, 스마트 등 고부가선박	항공우주(6종)	드론, UAM 성능, 보안 등
첨단제조(28종)	디지털 트윈, 제조데이터 제어	총 계	508종

□ 첨단산업 분야별 주요 국제표준 개발 내용(~2030년)

① **(AI)** AI 강국 도약을 위한 시스템·데이터 기반 및 산업활용 표준

- AI 적용을 위한 기반 표준 체계화 단계 → AI 신뢰성과 안전성을 위한 시스템·데이터, 금융, 제조 등 산업활용 분야 기술표준 확대

* ▲ AI 생성모델의 안전성 평가, ▲ 금융 특화 AI 관리시스템 등 39종 개발

② **(반도체)** 新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제품의 성능평가 표준

- 미세기술 한계에 따른 패키징 표준 수요와 미래기술 필요성 대두
→ 패키징, 소·부·장 품질평가, 뉴로모픽 등 미래 반도체 성능 표준

* ▲ 접합된 칩 및 웨이퍼의 강도 측정, ▲ 뉴로모픽 소자 신뢰성 평가 등 39종 개발

③ **(로봇)** 산업, 서비스 등 로봇 활용 확대를 위한 안전, 성능 표준

- 제조·서비스 로봇의 정의 등 기반요소 표준화 → 로봇의 상용 확대를 위한 산업용 로봇 성능·안전성, 서비스 로봇 시장 확대 지원

* ▲ 로봇 안전지능 평가, ▲ 재활로봇의 안전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 35종 개발

④ **(디스플레이)** 차세대 제품에 대한 기술 선도 성능검증 표준

- 플렉시블 등 기술 경쟁 심화로 초격차를 위한 선도 중요 → 롤러블, 스트레처블, 무기발광 등 첨단기술 성능, 친환경 소재·부품 표준

* ▲ 롤러블 디스플레이 변형 측정, ▲ 투명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광학특성 등 8종 개발

⑤ **(이차전지)** 상용 이차전지 기술우위 및 차세대 전지 활용 표준

- 이차전지 기반특성 표준화 마련 → 상용 이차전지의 성능 향상, 고성능 신소재 차세대 전지 평가,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요구사항

* ▲ 리튬이온전지 양극재 성분분석, ▲ 재사용 전지 등급 분류 표준 등 33종 개발

⑥ **(미래차)** 자율차 및 커넥티드카, 전기차, SDV 부품·장비·통신 표준

- 미래차 부품, 교통체계 등 주요 기술 분야의 연계 필요 → 미래차 종류별 장비 성능, 안전·보안, 충전, 네트워크 확립을 위한 표준

* ▲ 자율차 핵심 부품 요구사항, ▲ 전기차 양방향 무선충전 표준 등 82종 개발

⑦ **(미래선박)** 친환경 및 스마트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 표준

- 친환경 및 첨단선박에 대한 수요 증가 → 암모니아, 수소 등 대체연료 활용, 자율운항 등 스마트 선박에 대한 성능, 신뢰성 확보

* ▲ 암모니아 선박 핵심기자재 시험, ▲ 스마트선박 소프트웨어 기능 등 60종 개발

⑧ **(첨단제조)** 제조 시스템 지능화를 위한 데이터 및 실현 기반 표준

- AI, 빅데이터 등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 → 첨단제조 산업 지원을 위한 디지털 트윈, 사이버 보안, 제조 데이터 교류·제어 표준 확대

* ▲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핵심 요소, ▲ 첨단 제조 사이버보안 등급 등 28종 개발

⑨ **(양자)** 국내 기술의 글로벌 선도와 점진적 상용화 지원 표준

- 양자 기술에 대한 분류 등 초기 표준화 단계 → 향후 성능·안전·신뢰성 및 활용이 예상되는 요소기술 위주의 표준화 추진

* ▲ 양자 측정 오류 평가, ▲ 양자센서용 단일광자 광원의 품질 유효성 등 13종 개발

⑩ **(핵심소재)** 탄소섬유, 그래핀 등 공급망·친환경소재 확대 표준

- 첨단산업 및 친환경 소재 등의 공급망 안정화 필요 → 원료 물질에 대한 검증부터 신소재 활용성 확대를 위한 분석·평가 표준

* ▲ 그래핀 환원도 평가 및 결합 밀도, ▲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가속평가 등 60종 개발

⑪ **(원자력) SMR 및 원전 안전, 신뢰 확보를 위한 장비·운영 표준**

- SMR 및 원전 에너지 활용 확대에 따른 기반 표준화 필요 → 안전 등급부터 설계, 운영·유지관리, 해체기술, AI 진단까지 표준 개발

* ▲ 노심 반응도 제어 설계, ▲ AI 진단 및 예측 모델 성능지표 등 24종 개발

⑫ **(청정에너지) 수소, 태양광, 풍력 등 新시장·기술 에너지 표준**

- 에너지 공급망 한계 및 친환경 요구 → 수소산업 활성화 및 상용화 지원, 태양광·풍력 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기반 표준 추진

* ▲ 대용량 수전해 성능 평가 방법, ▲ 차세대 태양광 모듈 표준 등 41종 개발

⑬ **(첨단바이오) 바이오 소재 및 의료 서비스 기술 확대지원 표준**

- 바이오 소재 적용 확대 및 의료 분야의 AI 접목 상용화 → 안전한 바이오 제품·의료 서비스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디지털 연계 표준

* ▲ 오가노이드 제작 및 배양 조건, ▲ 생성형 AI 디지털 건강 표준 등 21종 개발

⑭ **(메타버스) 新기술의 조기 안정화 지원을 위한 성능평가 표준**

- 산업 및 생활에 활용 가능한 메타버스의 수요 증가 → 관련 기술 및 시스템의 정확도, 성능 검증에 대한 표준화 추진

* ▲ 메타버스 용어, ▲ 가상/증강/혼합현실용 단말의 내구성, 환경시험 등 19종 개발

⑮ **(항공우주) 드론 및 UAM 등 우주산업 기술의 확대·상용화 표준**

- 산업 활용과 도심 교통체계 개선, 우주산업을 위한 차세대 모빌리티 확대 → 드론, UAM 등에 대한 기능, 보안 및 요구사항 표준

* ▲ 드론 사이버 보안, ▲ UAM 안전비행을 위한 전파환경분석기술 등 6종 개발

참고2

시장 지배력이 큰 사실상 표준화 기구 본격 대응

□ 개요 및 현황

- 최근 기술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장요구를 빠르게 반영한 기업 주도 사실상표준의 중요성이 증가*

* 표준제정 소요기간 : 국제표준화기구^{ISO/IEC}(2~3년), 사실상표준화기구(0.5~1년)

** 국제표준화기구는 사실상표준을 Fast Track을 통해 국제표준으로 신속 제정(Dual-Logo)

미래차	반도체	이차전지	통신
			
ISO/SAE 21434 (자동차의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 등	IEC TS 62686-1(JESD471참조) (항공우주용 반도체 요구사항) 등	IEC/UL 62133-2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 등	ISO/IEC/IEEE 8802-3 (유선 네트워크 표준) 등

- 현재 로봇 등 7개 산업 분야* 사실상표준화기구를 대상으로 일부 전문가의 회의참가 지원(예산 : 5억원)을 통한 모니터링 중

* 로봇, 조명, 디스플레이, 전자제조, 스마트홈, 해양플랜트, 사이버보안 등 7개

□ 문제점

- 일부 분야에 단편적 지원만 하고 있어 첨단산업 분야의 사실상표준의 국제표준과의 전략적 연계**가 부족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 미흡

* 반도체, AI, 미래차,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 사실상표준화기구 활동 지원 필요

** 표준 제정 기간 단축 및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先 사실상표준화 → 後 국제표준화

- 국제표준 중심의 다자(PASC, APEC)·양자(매년 한-미, 한-독 표준포럼) 협력은 활발하나 사실상표준화기구와 표준 외교는 미미한 상황

□ 대응 및 향후 조치계획

- 지원 대상 첨단산업 분야 사실상표준화기구를 점차 확대*하고 R&D와 사실상표준(안) 연계*를 통해 사실상표준 개발 지원

* 지원 대상 사실상표준화기구(개) : ('25)7 → ('26)20 → ('30)50

** R&D 과제 수행자에게 사실상표준화 동향 정보 및 표준전문가 컨설팅 제공('25~)

- UL, IEEE 등 주요 사실상표준화기구와 표준협력 MoU 체결 및 정례적인 양자회의 등을 통해 전략적 협력 강화

참고3

국제표준화 우수사례

1

RAPIEnet - 산업용 이더넷 기반 통신 네트워크

스마트제조-RAPIEnet(라피넷)

산업용 통신 네트워크 - 필드버스 사양 (IEC 61158-5-21, IEC 61158-6-21) 산업 통신망 - 프로파일 (IEC 61784-2 CPF 17)

- ▶ 과 제 명 : 스마트 공장을 위한 기간시스템-플랫폼-설비간 상호운영성(정보 및 RAPIEnet) 표준화 기반조성
- ▶ 과제기간 : 2016. 6. 1.~2019. 5. 31.
- ▶ 과제예산 : 900백만원



배 경

- 산업 현장의 스마트제조 전환과 함께 고속·고신뢰 통신 인프라의 필요성이 대두
- 외산 산업용 이더넷 중심의 시장에서 국산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이 요구

표준내용

- IEC 61158-5-21 / 6-21 : RAPIEnet(라피넷)의 어플리케이션 계층 통신 규칙과 실제 동작 방식을 규정
- IEC 61784-2 CPF 17 : RAPIEnet(라피넷)을 포함한 산업용 이더넷 통신 기술군의 성능 기준과 프로파일을 정의

기대효과

스마트팩토리 전환 비용 절감

외산 기술 대비 로열티 비용 절감 및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

국산 기술 상용화 성공 사례 확보

GGM(광주 글로벌모터스) 생산라인에 적용,
현대자동차의 신차 '캐스퍼' 제조에 활용

시장 성장 기반 마련

국내 산업용 이더넷 시장
(2030년 약 3,950억원 규모)에서
국산 점유율 확대 기대

'24년 RAPIEnet(라피넷)
매출액 약 200억원

한국의 산업용 이더넷 시장
(단위: 백만 달러)



KEIT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장치 -
롤러블 디스플레이의 변형도 측정
(IEC 62715-6-43 ED1)

- ▶ 과 제 명 : 뉴 폼팩터 디스플레이 표준화 기반조성
- ▶ 과제기간 : 2021. 4. 1~2024. 12. 31.
- ▶ 과제예산 : 1,414백만원



배 경

- 롤러블 디스플레이는 롤링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변화가 품질과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침
- 반복적인 롤링 후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뢰성 확보가 필수

표준내용

- 롤링 후 제품의 변형과 지지 특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
- 반복 롤링 시 성능 유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 방법 제공하여 제품개발 초기부터 성능 검증을 수행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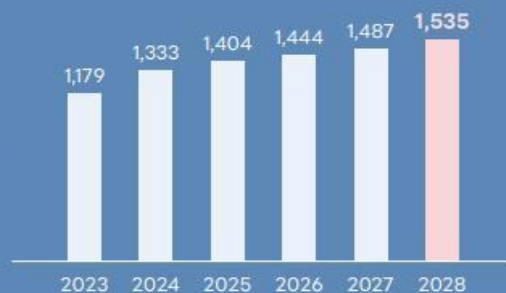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 현황 및 전망2위
2023년
시장점유율
33.4%1위
2030년
시장점유율
40%

미래형 하이엔드 기술에 포커스를 맞춰 R&D에 집중하고
국제표준을 선점하여 경쟁국과의 격차를 유지하는 전략 구축

폴더블, 플렉서블 등 미래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주도권 확보 가능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및 전망(금액기준)

(단위: 억달러)



핵심소재

이차원 소재(그래핀) 전하농도 측정방법 (IEC/TS 62607-6-16:2022)

- ▶ 과 제 명 : 수출규제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소재 융복합 제품의 국제표준화 기반조성
- ▶ 과제기간 : 2020. 4. 1.~2023. 12. 31.
- ▶ 과제예산 : 2,474백만원



배경

- 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발전으로 고성능 반도체 소재 수요가 증가하나, 기존 실리콘 기반 소재는 한계가 있음
- 이차원 소재인 그래핀은 뛰어난 물성을 지녔지만, 신뢰성 있는 측정방법의 부재로 상용화에 제한이 있었음

표준내용

- IEC/TS 62607-6-16:2022는 그래핀 전하 농도 측정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품질관리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 기반 제공

기대효과

품질 신뢰성 확보

전하 농도 품질관리 체계를 통해
그래핀 소재의 상용화 가속

신규시장 창출

고성능 반도체와 첨단 디바이스 제조를 위한
신규 소재시장 형성

국내 기술력 활용

우리나라는 이차원 소재, 특히 그래핀 기술에서
세계 Top 5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첨단소재 시장 진출에 유리한 조건 제공

결과적으로 그래핀은 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의 핵심소재로 자리매김하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글로벌 그래핀 소재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2019년
0.15조원

2030년
31.4조원

지능형 교통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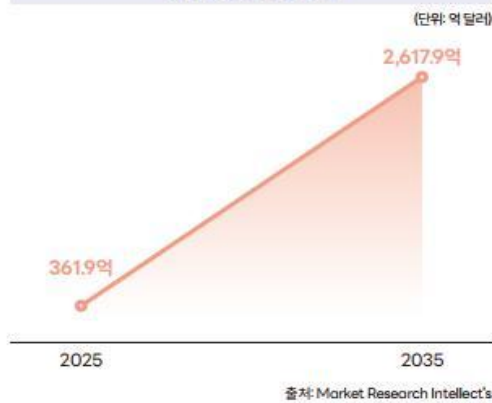
대중교통 자율주행 버스의 안전성과
연결성 성능평가 및 시험 Part 1: 일반적인
프레임워크(ISO 21734-1:2022)

- ▶ 과 제 명 : 자율주행버스 안전성과 연결성 성능평가 및 시험 국제표준 개발
- ▶ 과제기간 : 2018. 4. 1~2022. 6. 30.
- ▶ 과제예산 : 548백만원



국내 시장

자율주행차 시장 동향



배 경

-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자율주행 버스의 이용자 안전 사고 예방과 긴급상화 대응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필요

표준내용

- 교통 정보 제공, 관제 및 모니터링, 긴급 상황 대응 서비스 등의 필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자율주행 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기대효과

편의성 증대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이동 효율성을 제고

안전성 확보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여
사고 피해를 최소화

경제적 효과

국내 기업이 보유한 첨단 자율주행 서비스 기술의
국제적 신뢰도를 향상시켜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자율주행 버스 시장은
기술 발전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
관련 국제표준의 도입은 시장 확대와 안전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우리 기업의 자율주행 버스 시스템 기술력이 높다는 점에서,
국내 기술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

선박 및 잠수함 기술

로터세일 품질 평가방법
(ISO/AWI 25181)

- ▶ 과 제 명 : 친환경 선박추진보조장치(로터세일) 성능시험절차 국제표준개발
- ▶ 과제기간 : 2023.04.01.~2027.12.31.
- ▶ 과제예산 : 56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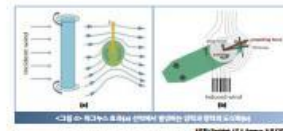


배 경

-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와 탄소배출 저감 노력에 따라 글로벌 해운산업계는 친환경 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
- 그중 로터세일은 선박의 연료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풍력 보조 추진 장치로 주목

표준내용

- ISO/AWI 25181은 풍력을 활용한 로터세일 장비의 성능과 품질을 검증하는 체계적인 시험 절차 제시



기대효과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기술인 로터세일의 상용화와 글로벌 시장 확산을 촉진하며,
한국이 친환경 선박 기술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환경 보호

로터세일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선박의 연료 소비를 줄이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촉진



품질 및 신뢰성 향상
표준화된 품질 평가를 통해 로터세일의 신뢰성과 성능을 보장



안전성 확보

명확한 안전성 평가 절차를 통해 로터세일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시장 경쟁력 강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로터세일 제품 개발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

2.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 · 보급사업('11~계속)

□ 사업개요

사업기간	'11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담당자	국표원 표준정책과 윤승환연구사(☎ 043-870-5344)		

□ 사업내용(지원내용)

- **(참조표준 개발·보급)** 산업·연구·공공 영역에서 활용 가치가 높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高품질 국가공인데이터 개발*·보급**

* AI,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 보건·의료와 같은 국민생활(공공) 접점 분야 등 폭넓은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참조표준 중점 개발

- **(활용·확산 지원)** 기업 등 수요자의 참조표준 활용을 위한 정책*을 개발 및 지원하고 인식제고·수요발굴을 위한 참조표준 홍보** 실시

* (정책) 참조표준 가치평가 실시, 활용 가이드 개발, 이해관계자 간 협업 확대

** (홍보) 우수사례집 발간, 기업·학회·전시회 현장 홍보, 기고 등 인식 제고

- **(사업화 지원)** 참조표준을 활용하여 제품·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데이터·AI 등 첨단산업 기반의新산업 창출*

* AI 알고리즘에 신뢰성 있는 데이터(참조표준)을 결합한 솔루션 개발

□ '26년 주요 추진계획

- **(산업지원 확대 지속)**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가공인데이터(참조표준) 개발 및 활용 생태계 조성 확대
- **(첨단 AI 집중)** 고품질 데이터(참조표준) 개발 집중, AI, 반도체 등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의 확대 추진

□ 표준화 필요성 및 시급성

- **(필요성)** 생성형 인공지능을 필두로, AGI(범용인공지능) 및 온디바이스 AI의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AI 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신뢰성 데이터* 확보 필수

* 참조표준: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공인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반복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데이터

- 국가전략기술, 초격차 프로젝트 등 첨단산업 분야와 국민 생활분야에 AI를 효과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 필요

* (예시) 반도체용 가스 물성, 융복합세라믹 소재, 한국인 인체치수, 혈압, 중력 가속도 참조표준 등

- **(시급성)** 국가전략기술 지원을 통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기반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각 분야별 참조표준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 **(RISK)** AI 개발의 핵심이 되는 입력데이터(input)의 신뢰성 하락으로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비용*이 선진국조차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됨 → 정확도·신뢰도를 검증·공인한 참조표준 개발·확산 필요

* 저품질 데이터로 인해 회사마다 평균 약 \$12.9백만 손실 발생('21년 Gartner)

* 미국에서 저품질 데이터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 비용을 3조달러로 추산('16년 IBM)

- 특히, 연일 화두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의 국내 개발 애로·문제점 해소에 참조표준이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

* 기업들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데이터의 양 부족(26.5%)과 더불어 낮은 정확성(17.7%)을 지적 ('23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 행안부)

참고

참조표준 개발·보급 주요 성과

- 서울대병원, 표준과학연구원, 세라믹기술원 등 분야별 데이터센터에서 '07년도부터 누적 78,000여 건의 참조표준 개발
- * '24년 환경·에너지·자원, 물리·화학,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6,547건의 참조표준 개발

< '24년 개발된 참조표준 주요사례 >

보건·의료 (1,358건)	뇌경색환자 뇌허혈 병변 MR영상, 정상 한국인의 청력 역치, 한국인 균형능력(한발서기, 두발서기), 한국인 인체치수(사이즈 코리아) 등
물리·화학 (2,163건)	위성 교정용 기준물의 BRDF 데이터, 유기화합물 기체-액체 상평형, 무기화합물 고정물성(끓는점, 녹는점, 임계압력·온도), 무기화합물 변수의존물성 및 유도물성 등
환경·에너지·자원 (2,618건)	해수 중 환경방사능, 광역정수장 원수 중 질산성 질소 농도, 댐상류 지역 일강수량, 위성영상 기반 일사량, 핵연료재료(피복관 재료)의 비열 등

< 분야별 참조표준 개발 현황 >

(단위 : 건)

분 야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계
보건·의료	16,126	2,899	3,597	733	1,358	24,713
물리·화학	16,121	1,608	149	125	2,163	20,166
항공·천문	14,508	0	0	0	0	14,508
환경·에너지·자원	2,517	1,136	2,775	3,666	2,642	12,736
재료	4,428	318	164	452	275	5,637
생명·농림·수산	485	22	25	75	13	620
기계·전기·전자	225	66	90	73	144	598
합 계	54,410	6,049	6,800	5,124	6,595	78,978

— <참조표준 데이터 활용(사업화) 사례> —

- ① ‘플라즈마 물성’ 참조표준 기술이전(‘11)으로 (주)KWT솔루션은 해외 제품에 의존해 온 반도체 공정해석 핵심기술의 국산화에 성공(‘13)

 - * KWT솔루션, 두뇌역량우수기업 선정(‘16, 산업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21. 중기부)
 - * ‘K-Speed’ 개발하여 삼성전자 등에 납품한 KWT 솔루션, 지난 3년 매출 137억원
- ② ‘한국인 뇌 MR 영상’ 참조표준 기술이전(‘17), 참조표준 기반 뇌혈관질환 진단 및 예측용 의료기기 개발(‘18)

 - * JLK, 인공지능 뇌경색 분석 솔루션 등 유럽 CE의료기기 인증 7건(‘19)
 - * JLK, AI 뇌 노화 측정 솔루션 등 4건 식약처 의료기기 인증(‘19)
 - * JLK, 5개 벤처케피탈로부터 200억 투자유치 및 기술특례 상장예비심사통과 및 코스닥 상장(‘19)
 - * JLK, 혁신의료기기 지정(‘22), 건강보험 수가 적용(‘23) 및 미국 FDA 승인(‘24)
 - * ‘JBS-01K’ 개발한 JLK, 지난 3년 매출 73억원
- ③ ‘한국인 뇌파’ 참조표준 기술이전으로 (주)아이메디신은 뇌파 자동분석 솔루션 플랫폼 iSyncBrain[®] 개발(‘18)

 - 뇌파 참조표준을 이용한 경도인지장애(치매 前 단계) 확률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제공
 - * 아이메디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제조 허가(‘18)
 - * 아이메디신, 미국 FDA 인증(‘23)
 - * ‘iSyncBrain’ 개발한 아이메디신, 지난 3년 매출 69억원
- ④ ‘기상데이터’ 참조표준을 활용하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이 ‘신재생에너지 종합평가 솔루션’ 개발(‘19)

 - * 기상데이터 참조표준을 사용가능한 형태로 가공해주는 웹변환 서비스 개발(‘20)하여 사업화 추진
- ⑤ ‘유기화합물 열역학물성’ 참조표준을 활용하여 (주)스마트잭은 실험실 내 위험인자 식별 솔루션 개발(‘19) 및 고도화(‘23)

 - 연구 자원의 생애주기 관리 및 물성, 물질 및 안전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
 - * ‘랩매니저’ 개발한 스마트잭, ‘23년 매출 20억원
- ⑥ ‘자동차용 강판’ 동적물성 참조표준을 활용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은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하고, 회원제 서비스로 제공(포항공대, 삼성전자 등)(‘23)

 - * 구독형 서비스를 운영하여 지속 매출 발생

3. R&D사업화표준연계사업('22 ~ '26)

□ 사업개요

사업기간	'22년 ~ '26년	총사업비	해당없음
주관기관	한국표준협회		
담당자	국표원 표준정책과 최영철 연구관(☎ 043-870-5346)		

< 주요정책 부합성 >

- ◇ 국가별 R&D투자, 특히, **표준 등을 통해** 글로벌 기술경쟁력 조사하여 최적의 **기술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R&D-표준-특허-사업화 등 통합 관점에서의 **전략적 연계 지원** 추진(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 24.11)
- ◇ 산업 AI 확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설계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AI 표준 리더십 구축 및 확보** 추진(제3차 AI산업정책위원회, '25.1)
- ◇ 차세대 신산업 시장 조기 선점을 위한 **선제적 표준 개발 지원**과 글로벌 표준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표준 기술력 확보** 지원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25.3)

- **(사업목적)** 첨단기술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R&D 단계에서 연구기관의 표준개발 지원
- **(주요정책 부합성)** '산업기술혁신계획' 등 주요정책에서 기술확보와 시장 선점을 위하여 연구개발과 동시에 국제표준 선점의 중요성을 강조

□ 사업내용(지원내용)

- 표준동향분석 및 표준전략수립을 통해 R&D 연계 표준개발, R&D를 통해 개발된 표준성과 관리 등
 - **(표준연계지원)** R&D 기획단계에서 “표준동향”을 분석하여 표준 선점이 시급한 기술분야를 발굴하고, 수행기관 대상 표준화를 위한 컨설팅 수행
 - * 신기술 및 기술발전이 빠른 분야는 국제표준(IEC, ISO 등)을 선점한 기업이 시장을 지배
 - **(표준성과관리)** 연구성과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표준으로 연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표준성과관리전담기관 운영
 - * (제28조)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은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관리, 공동활용체계를 구축운영해야하며, 해당성과를 유지, 보관, 관리해야한다.

□ '26년 주요 추진계획

- **(표준화 선제적 검토)** R&D 기획단계부터 표준화 필요성/가능성을 검토하고, R&D 수행단계에서 국제표준 병행개발로 표준 선점 지원
- **(산업정책 연계)** 반도체·로봇·인공지능 등 기술 패권이 치열한 분야를 비롯한 초격차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R&D 단계의 국제표준 개발 병행이 시급한 **첨단산업 분야***를 집중 투자

*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SMR, 첨단바이오

□ 표준화 필요성 및 시급성

- **(필요성)** 첨단산업은 기술 패러다임 전환 속도가 빠르므로, 연구 초기부터 표준화를 병행해야 경쟁 우위 확보 가능

* 연구개발 이후 표준개발시, 경쟁국의 국제표준선점 발생시 글로벌 시장진출 지체

- **(시급성)** 첨단산업에 대한 美·中·日 등 주요국의 표준·기술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기술의 글로벌 표준의 선제적 대응 지원 시급

* (美) 핵심 신기술의 전략적인 표준개발을 위한 「국가표준전략 실행 로드맵」 발표('24.7)
(中) 미래산업 표준선점을 위한 「신산업 표준화 실시방안」 발표('23.8)
(日) AI, 양자기술 등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추진 발표('25.3)

- **(RISK)** 반도체, AI 등 분야에서 경쟁국이 국제표준 선점시 우리나라의 기술 주도권 상실 및 R&D 투자 효율성 저하, 글로벌 시장 진출 한계* 예상

* (반도체) 미국은 NSTC 설립을 통하여 첨단반도체 표준을 선도하고 기술블록화 형성
(AI) 중국은 26년까지 AI분야 50개 표준 개발을 위한 “국가 AI산업 종합 표준화 개발 지침” 발표

참고1

R&D 표준연계 사례

□ 디스플레이 분야 R&D 표준연계 국제표준 개발 우수사례

- (표준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장치-주름 및 굴곡 측정방법 (IEC 62715-6-22)
- (경제적효과) 국내기술을 반영한 국제표준 제정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 확대와 품질향상으로 등 약 360억원 경제적 가치 기대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내용) 잦은 사용으로 표면 변형이 쉬운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접힘 자국과 굴곡을 측정하는 시험조건 및 방법을 규정 ■ (제정절차) 삼성디스플레이는 2021년 '뉴 폼팩터 디스플레이' 연구개발을 통해 국제표준개발에 착수하여 2023년 제정 ■ (표준활용) 유연 디스플레이가 사용되는 전자기기(핸드폰, TV 등)의 품질측정 및 연구개발 등 활용 ■ (기대효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확대와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불량률 개선 등으로 품질 경쟁력 확보 	 
------------------	--	--

□ 연료전지 분야 세계최초 개발 기술 상용화 지연사례 : 국내 A사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연료전지 파워팩 관련 기술개발에 국내 A사와 일본 도요타 및 자동차협회는 각각 기술개발에 착수 ■ (2012년) 일본은 자사기술을 반영한 '연료전지 파워팩 안전요건' 국제표준 NP를 제안하여 승인 ■ (2016년) 국내 A사는 세계최고 수준의 지게차용 연료전지 파워팩을 일본보다 1년 앞서 개발 완료, 그러나 안전성 입증 방법이 없어 상용화지연 * 2015년 관련분야 신기술인증 획득 ■ (2017년) 일본은 기술개발 완료와 함께 국제표준 (IEC 62282-4-102) 제정 완료, 즉시 상용화 ■ (그 후) 국내 A사는 국제표준에 맞추어 시스템 재설계, 2020년 '우수개발 혁신제품 선정', 2021년부터 제품 상용화 	
------------------	--	---

참고2

R&D 표준연계 부처간 협업 사례('24년 말 기준)

구분	주관부처 (전문기관)	수행기관	과제명	수행내용
1	과기부 (연구개발특구)	영남대학교	유연 인쇄전자 신전자산업 기술개발	('22)표준화 추진 전략 수립 →('22)IEC PWI 발표
2	과기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레티널	경량 AR 디바이스 구현을 위한 신호처리 및 영상표시장치 개발	('22)표준화 아이템발굴 및 국제표준화 대응 등 →(현재)IEC 국제표준(TR문서 승인) 개발 추진 중
3	과기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제윤메디컬	비대면 환자 관리를 위한 복약 및 생체징후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개발	('22)표준화 아이템발굴 및 표준화 추진 전략 수립
4	과기부 (한국연구재단)	건국대학교	무인이동체 안전운용을 위한 운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22)표준화 아이템발굴 및 표준화 추진 전략 수립 →('23)PWI 발표
5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미래 모빌리티 동작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고주파/고출력 전자파 솔루션 소재·부품 기술 개발	('23)표준화 아이템 발굴 및 표준안 작성 지원 →('24)PWI 발표
6	과기부 (연구재단)	인천대학교	금속-산화물 초월성 반도체 특성 기반의 도심형 투명 에너지 변환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개발	('24) 표준화 전략 수립 및 표준화 아이템 발굴 등 →('25) PWI 1건 발표 추진
7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재)범부처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 사업단)	제이피아이 헬스케어	차세대 이동형 토모신세시스 시스템 개발	('23)표준화 추진 전략 수립 및 PWI(안) 도출
8	중소벤처부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사단법인 한국산업 지능화협회	설비산업과 주요산업의 스마트제조 생태계 지원을 위한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 개발	('23)표준화 추진 전략 수립
9	중소벤처부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태양ENG	산업분야별 용도에 적합한 버블크기 조정용 마이크로버블펌프 및 시스템 수입대체 국산화 개발	('23)표준화 추진 전략 수립 및 국가표준안 작성 지원
10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진흥원)	한국해양과학 기술원부설 선박해양 플랜트연구소	1MW급 친환경 대체연료 해상실증 기술개발	('23) 표준역량강화 교육, 국 제표준대응 및 PWI(안) 작성 지원 등 →('24) ①ISO 23120 개정안 제출 및 승인,(KS로 부합화 제안) ② ISO18962 CD승 인 및 DIS 제출
11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진흥원)	스펙스	IMO 환경규제 EEDI/EECI 대응용 주기관 출력계측 및 출력제한 Shaft Power Limitation을 위한 Shaft Power Meter 국산화 개발	('24) 표준화 전략 수립 및 표준화 아이템 발굴 등 →('25)PWI 1건 발표 추진
12	방사청 (국방기술품질원)	건국대학교	민·군 겸용 드론 소음 등급 및 시험평가 절차 표준화 연구	('22)표준화 아이템발굴 및 표준화 추진 전략 수립 →('23)PWI 발표

4. 국제표준화협력 ['24 ~ '28]

사업기간	'24년 ~ '28년	총사업비	해당없음
주관기관	시험인증기관, 업종별 단체 등		
담당자	국표원 표준정책과 박정민연구사 (☎ 043-870-5343)		

< 주요정책 부합성 >

- ◇ 우리나라 연구성과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국제표준 개발도 글로벌 R&D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 확대 추진(글로벌R&D추진전략, '23.11)
- ◇ 공급망다변화를 위하여 주요국가들과 공동표준 마련을 위해 협력

- **(사업목적)** 선도국과의 첨단산업 분야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술표준 주도권 확보 및 우리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지원
- **(주요정책 부합성)** 주요정책에서 주요국가들과 공동표준 마련을 위한 협력 필요성 강조

□ 사업내용(지원내용)

- 국제표준 공동개발 및 주요국 합의를 위한 국제포럼 운영
 - * 주요선도국(美·獨)과의 표준 협력이 시급한 인공지능, 차세대선박, 지능형 로봇, 핵심소재, 첨단소재, 수소, 양자기술 7개 분야 운영

□ '26년 주요 추진계획

- **(국제포럼)** 첨단분야 국제표준 공동개발 및 주요국 합의를 위한 국제포럼 운영
- **(선도국과의 협력)** 한·미, 한·독 등 정부 간 표준협력에 합의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표준화 로드맵 마련, 국제표준 공동개발 등 국가간 협력 강화
 - * (韓-美) 양자기술, 반도체, AI 등 원천기술 분야 강국으로 표준개발·선점을 위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정부간 실무협의('23.8), 고위급 협력 채널 신설('24.1))
 - (韓-獨) 미래모빌리티(배터리 등), 스마트제조 등에 대한 양자간 협력 채널 구축 ('23.10)
 - 국제표준공동개발(표준아이템 선정, 작업반 운영 등), 국제표준포럼 운영 (신규아이템 발굴, 표준화 로드맵 개발, 신규기술위원회 신설 협력 추진 등)

□ 표준화 필요성 및 시급성

- **(필요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기술블록화가 심화됨에 따라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선도국(美·獨 등)과의 표준 협력 강화가 필수**
- **(시급성)** 주요국들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첨단산업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술교류를 포함해 선도국과의 표준 공동개발이 시급한 상황

* 주요국가별 표준개발 협력 사례

- ① (미-EU) 핵심유망기술 분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국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AI, 반도체, 양자기술 등의 상호운용 가능한 공동의 기술표준 개발 공동성명(23.5)
- ② (EU-일) 첨단소재, 반도체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공동연구 추진(24.4)
- **(RISK)** 첨단 기술표준 분야의 선도국과 선제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핵심 신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가속화 곤란**
 - 결국 첨단산업 분야의 우리나라 국제표준 경쟁력이 뒤처져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지연 우려**
- * (타국 견제로 국제표준 미승인 사례) 국내 기술을 반영한 반도체 표준오염도 측정 표준을 국제표준기구에 제안했으나, 미국, 유럽 등 타국의 견제로 미승인

□ 글로벌 협력 현황

구분	내용																								
추진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 연구성과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국제표준 개발도 글로벌 R&D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 확대 추진(글로벌R&D추진전략, '23.11)■ 공급망다변화를 위하여 주요국가들과 공동표준 마련을 위해 협력																								
협력유형	<div><div>☐ 국제공동연구</div><div>☐ 인력교류</div><div>☐ 협력거점·플랫폼</div><div>☐ 해외 사업화·실증·수출</div><div>☒ 국제표준개발</div><div>☐ 분담금</div><div>☐ 기타</div></div>																								
협력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협력 상대 국가(기관)* 스위스(캐나다(CERTX), 영국(LR, MRO Insyte, Versarien PLC), 노르웨이(DNV, Jotne), 미국(ABS, RESNA, NIST, AMI, FCHEA, ISI), 이탈리아(RINA), 일본(SIT, JFCA), 스페인(CSIC), 독일(Fraunhofer, BAM, TUV), 덴마크(Danish Standard), 스웨덴(RISE)																								
협력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표준 Top tier 기관(美 NIST 등)과 국제표준공동개발- 표준아이템 발굴, 작업반 운영, 표준화 로드맵 개발, 신규 기술위 신설 협력 등- 국제표준 주 제안자는 국내주관기관(국외기관은 공동제안)																								
	<table><tr><th>분야</th><th>국내기관</th><th>개발 표준(안)</th></tr><tr><td>인공지능</td><td>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화여자대학교, 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조직의 프로세스를 심사할 수 있는 모델■ AI 기반 EV 화재 위험성 검출시스템■ AI 시스템의 품질에 대한 정량적인 측정방법</td></tr><tr><td>차세대선박</td><td>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운항선박 사이버 보안■ 지능항해 S/W 안전성 검증</td></tr><tr><td>지능형로봇</td><td>한국로봇사업협회, 동의대학교, 강원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세종대학교, 경희대학교</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로봇 모듈화 정보모델■ 웨어러블 로봇 동적안정성</td></tr><tr><td>스마트제조</td><td>한국산업지능화협회, 한국산업데이터표준협회</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품질관리시스템 요건■ 데이터 거버넌스 품질 관리</td></tr><tr><td>첨단소재</td><td>한국탄소산업진흥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주식회사 하이마</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래핀 물질 소재 결함 평가■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측정</td></tr><tr><td>수소</td><td>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 튜브트레이일러용 고압호스■ 액체수소 충전소 초저온 고압펌프</td></tr><tr><td>양자기술(예정)</td><td>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자 토모그래피■ 양자 분광 센서의 기술 요구 사항 및 성능평가 표준</td></tr></table>	분야	국내기관	개발 표준(안)	인공지능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화여자대학교, 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조직의 프로세스를 심사할 수 있는 모델■ AI 기반 EV 화재 위험성 검출시스템■ AI 시스템의 품질에 대한 정량적인 측정방법	차세대선박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운항선박 사이버 보안■ 지능항해 S/W 안전성 검증	지능형로봇	한국로봇사업협회, 동의대학교, 강원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세종대학교, 경희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로봇 모듈화 정보모델■ 웨어러블 로봇 동적안정성	스마트제조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한국산업데이터표준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품질관리시스템 요건■ 데이터 거버넌스 품질 관리	첨단소재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주식회사 하이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래핀 물질 소재 결함 평가■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측정	수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튜브트레이일러용 고압호스■ 액체수소 충전소 초저온 고압펌프	양자기술(예정)	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자 토모그래피■ 양자 분광 센서의 기술 요구 사항 및 성능평가 표준
	분야	국내기관	개발 표준(안)																						
	인공지능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화여자대학교, 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조직의 프로세스를 심사할 수 있는 모델■ AI 기반 EV 화재 위험성 검출시스템■ AI 시스템의 품질에 대한 정량적인 측정방법																						
	차세대선박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운항선박 사이버 보안■ 지능항해 S/W 안전성 검증																						
	지능형로봇	한국로봇사업협회, 동의대학교, 강원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세종대학교, 경희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로봇 모듈화 정보모델■ 웨어러블 로봇 동적안정성																						
	스마트제조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한국산업데이터표준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품질관리시스템 요건■ 데이터 거버넌스 품질 관리																						
	첨단소재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주식회사 하이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래핀 물질 소재 결함 평가■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측정																						
수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튜브트레이일러용 고압호스■ 액체수소 충전소 초저온 고압펌프																							
양자기술(예정)	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자 토모그래피■ 양자 분광 센서의 기술 요구 사항 및 성능평가 표준																							
협력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야별 협력 추진현황/계획																								
	<table><tr><th>분야</th><th>해외 연구기관</th><th>소재지</th><th>참여기간(년)</th><th>수행역할</th></tr><tr><td>인공지능</td><td>CERTX</td><td>스위스/캐나다</td><td>2024~2028</td><td rowspan="4">국제표준 공동개발</td></tr><tr><td rowspan="3">차세대선박</td><td>영국선급협회(LR)</td><td>영국</td><td>2024</td></tr><tr><td>노르웨이선급협회(DNV)</td><td>노르웨이</td><td>2025</td></tr><tr><td>미국선급협회(ABS)</td><td>미국</td><td>2026</td></tr></table>	분야	해외 연구기관	소재지	참여기간(년)	수행역할	인공지능	CERTX	스위스/캐나다	2024~2028	국제표준 공동개발	차세대선박	영국선급협회(LR)	영국	2024	노르웨이선급협회(DNV)	노르웨이	2025	미국선급협회(ABS)	미국	2026				
	분야	해외 연구기관	소재지	참여기간(년)	수행역할																				
	인공지능	CERTX	스위스/캐나다	2024~2028	국제표준 공동개발																				
	차세대선박	영국선급협회(LR)	영국	2024																					
노르웨이선급협회(DNV)		노르웨이	2025																						
미국선급협회(ABS)		미국	2026																						

		이탈리아선급협회(RINA)	이탈리아	2027	
	지능형로봇	RESNA	미국	2024, 2027	
		Shibaura Institute of Technology	일본	2024~2025, 2027~2028	
		CSIC	스페인	2025~2026	
		Danish Standard	덴마크	2026	
		NIST	미국		
		Fraunhofer	독일		
	스마트제조	MRO Insyte	영국	2024~2028	
		RISE	스웨덴		
		Jotne	노르웨이		
	첨단소재	Advanced Microwave Imaging	미국	2024~2028	
		Japan Fine Ceramics Association	일본		
		Versarien PLC	영국		
	수소	BAM	독일	2024, 2026, 2028	
		TUV Rheinland	독일		
		Fraunhofer	독일	2025, 2027	
		FCHEA	미국		
	양자기술 (예정)	ISI(Information Sciences Institut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미국	2025~2028	
기타					

사 업 명						
(11)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373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6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100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제상호인정 협정체결유지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연구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적합성평가과	김 종 윤 043-870-5490	박 응 조 043-870-5473	강 수 경 043-870-5345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조직명	이 름	연락처
숙련도시협 개발·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연구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적합성평가과	김 종 윤 043-870-5490	박 응 조 043-870-5473	한 정 민 043-870-5491
	사업시행주체	한국계량측정협회	적합성평가지원센터	양 승 배	02-3489-1373
국제공인기관 인정업무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연구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적합성평가과	김 종 윤 043-870-5490	박 응 조 043-870-5473	강 수 경 043-870-5345
	사업시행주체	한국계량측정협회	적합성평가지원센터	양 승 배	02-3489-137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국제적합성평가 기반구축	2,002.5	1,620	1,620	1,669	1,533	△ 87	△ 5.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예상)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88	2,088	2,002.5	-	85.5	1,620	1,620	1,544.6	1,620	1,544.6	-	75.4	1,533	
·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유지	1,064	1,064	978.5	-	85.5	750	750	674.6	750	674.6	-	75.4	663	
· 숙련도시험 개발· 운영	724	724	724 [724]	-	-	570	570	570	570	570	-	-	570	
· 국제공인기관 인정 업무지원	300	300	300 [300]	-	-	300	300	300	300	300	-	-	300	
○ 비목별 분류(합계)	2,088	2,088	2,002.5	-	85.5	1,620	1,620	1,544.6	1,620	1,544.6	-	75.4	1,533	
· 일반수용비(210-01)	442.6	352.8	298.7	-	54.1	292	292	226.1	292	226.1	-	65.9	205	
· 임차료(210-07)	50	139.8	130.3	-	9.5	30	30	29.7	30	29.7	-	0.3	30	
· 관리용역비(210-15)	98	98	97	-	1	98	98	97.5	98	97.5	-	0.5	98	
· 국외여비(220-02)	76	76	69.8	-	6.2	52.5	52.5	49.4	52.5	49.4	-	3.1	52.5	
· 사업추진비(240-01)	11.4	11.4	11.4	-	-	11.4	11.4	11.4	11.4	11.4	-	-	11.4	
· 일반연구비(260-01)	386	386	371.3	-	14.7	266.1	266.1	260.5	266.1	260.5	-	5.6	266.1	
· 민간경상보조 (320-01)	300	300	300 [300]	-	-	300	300	300	300	300	-	-	300	

	2024					2025(2025.12월 말 예상)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사업출연금(350-02)	724	724	724 [724]	-	-	570	570	570	570	570	-	-	570
○ 가능비목별 분류(합계)	2,088	2,088	2,002.5	-	85.5	1,620	1,620	1,544.6	1,620	1,544.6	-	75.4	1,533
·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유지	1,064	1,064	978.5	-	85.5	750	750	674.6	750	674.6	-	75.4	663
- 일 반 수 용 비 (210-01)	442.6	352.8	298.7	-	54.1	292	292	226.1	292	226.1	-	65.9	205
-임차료 (210-07)	50	139.8	130.3	-	9.5	30	30	29.7	30	29.7	-	0.3	30
- 관 리 용 역 비 (210-15)	98	98	97	-	1	98	98	97.5	98	97.5	-	0.5	98
- 국 외 여 비 (220-02)	76	76	69.8	-	6.2	52.5	52.5	49.4	52.5	49.4	-	3.1	52.5
- 사 업 추 진 비 (240-01)	11.4	11.4	11.4	-	-	11.4	11.4	11.4	11.4	11.4	-	-	11.4
- 일 반 연 구 비 (260-01)	386	386	371.3	-	14.7	266.1	266.1	260.5	266.1	260.5	-	5.6	266.1
· 숙련도시험 개발· 운영	724	724	724 [724]	-	-	570	570	570	570	570	-	-	570
-사업출연금(350-02)	724	724	724 [724]	-	-	570	570	570	570	570	-	-	570
· 국제공인기관 인정 업무 지원	300	300	300 [300]	-	-	300	300	300	300	300	-	-	300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300	300	300 [300]	-	-	300	300	300	300	300	-	-	3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국내 공인(시험·교정 등)기관이 발급한 성적서(시험·교정 등)가 국제인정기구(ILAC, IAF)**에 가입한 회원국(약 116개국)간 상호통용이 되도록 국제상호인정협정(MRA/MLA) 체결과 유지하고 공인기관의 신뢰성에 기반이 되는 숙련도시험 개발·운영 등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국제인정기구와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는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설립·운영 중

** ILAC(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Int'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IAF(국제인정기구포럼, Int'l Accreditation Forum)

-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유지)** 국제인정기구(ILAC/IAF)와의 국제상호인정협정(MRA/MLA)* 유지를 위한 인정제도와 공인기관 관리, 국제상호인정분야 유지·확대 및 국제동등성평가** 대응
 - * 국제인정기구의 회원국은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각 국의 인정기구가 인정한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시험 등의 성적서를 국제적으로 상호인정
 - ** 국제인정기구는 국제상호인정을 받은 분야에 대해 정기(4년주기) 및 수시(국제개정시 국제기준의 준수 이행여부) 평가
- **(숙련도시험 개발·운영)** 국제기준은 숙련도시험을 통해 인정기구가 인정한 공인기관에 대해 시험측정능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공인기관이 국제적인 업무 역량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한 수준 높은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 시험기관 간 비교 등을 통해 시험기관의 시험측정능력을 비교·평가하는 것
- **(국제공인기관 인정업무 지원)** 한국인정기구(KOLAS, 국가기술표준원)의 공인기관 인정·관리 업무를 지원(평가계획 수립, 평가반 구성 등)하는 지원기관에 대한 민간보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국가표준기본법>

○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① 정부는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간의 소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국적 교정망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측정현장에 주기적인 교정과 선진측정 과학기술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교정제도 확립을 위하여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① 정부는 측정기기의 교정, 정밀측정, 물성평가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고 인증하여 이를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표준물질의 인증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의 인정 및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정 및 인증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시험·검사기관 인정

4. 교정기관의 인정

5.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6.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

9. 그 밖에 체제 인증 등 신규 인증제도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등) ① 정부는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① 정부는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 촉진을 위하여 품질경영체제(ISO 9000 표준시리즈) 및 환경경영체제(ISO 14000 표준시리즈)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민간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① 정부는 국내 인정기구와 국제인정협력기구 간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협정이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과 조화를 이루며 관련 국제기준에 규정된 공정관행(公正慣行)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관련 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 제21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사업

제28조(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① 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초정밀 측정, 시험, 검사, 교정 및 관련 기기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교정 및 관련 기기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3. 국가교정기관의 지정 평가에 관한 지원사업 및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업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3. 그 밖에 적합성평가 개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인정기구의 설치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률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공인하는 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인정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공인기관의 인정 또는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
2. 공인기관의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공인기관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인기관 인정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인정기구는 법률과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④ 그 밖에 인정기구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조(인정기구의 설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8조(공인기관의 인정 등) ①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 설비, 기술 요건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구의 장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 제3항의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 신청을 한 자를 공인기관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공인기관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 신청절차, 인정요건,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⑤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공인기관은 제7조 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관계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국제협력)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관련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와 적합성평가기관 등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적합성평가 업무와 관련된 정보 및 기술 교환,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술개발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제도의 동향 및 적합성평가 수요조사
2. 적합성평가 수요에 대비한 적합성평가 기준 개발 및 활용
3. 적합성평가에 관한 응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4. 적합성평가에 관한 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5. 적합성평가 관련 표준물질, 시험장비의 개발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제20조(적합성평가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산업분야와 관련된 적합성평가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확충계획

2.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계획

3.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고도화계획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적합성평가기관이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고도화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92. 12월 :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설립
- '98. 6월 : APLAC-MRA 체결(시험 분야)
- '00. 8월 : APLAC-MRA 체결(교정 분야)
- '00. 11월 : ILAC-MRA 체결(시험 분야)
- '01. 2월 : 제품인증기관 인정기구(KAS) 운영체계 도입
- '01. 2월 : PAC 정회원 가입(제품인증 분야)
- '01. 5월 : ILAC-MRA 체결(교정 분야)
- '02. 3월 : 국가시험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02. 9월 : IAF 정회원 가입(제품인증 분야)
- '04. 4월 : 시험·검사능력 고도화대책 수립 및 시행
- '04. 5월 : 권역별 종합교정기관 육성대책 수립(장관 보고)
- '04. 10월 : APLAC-MRA 갱신평가 수검(시험·교정 분야)
- '07. 4월 : 한국인정기구(KOLAS)로 개칭
- '07. 10월 : PAC-MLA(IAF-MLA) 체결(제품인증 분야)
- '08. 10월 : APLAC-MRA 갱신평가 수검(시험·교정 분야)
- '10. 7월 : PAC-MLA 갱신평가 수검(제품인증 분야)
- '12. 5월 : 국가단일인정체계 구축방안 마련
- '12. 6월 : APLAC-MRA 갱신평가 수검(시험·교정 분야)

- '14. 8월 : PAC-MLA 갱신평가 수검(제품인증 분야)
- '16. 6월 : APLAC-MRA 갱신평가 수검(시험·교정 분야) 및 MRA 확대(메디컬 분야)
- '18. 5월 : PAC-MLA 갱신평가 수검(제품인증 분야)
- '18. 9월 : KOLAS 공인기관 전환(ISO/IEC 17025:2017) 계획 수립 및 시행('19. 4월)
- '20. 4월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21. 4월)
- '21. 3월 : APAC-MRA 갱신평가 수검(시험·교정 및 메디컬 분야)
- '21. 5월 : KOLAS 공인시험·교정기관 전환 완료
- '22. 4월 : KOLAS-KAS 통합 및 생물자원은행 신규 인정제도 시범도입 실시
- '22. 8월 : ILAC-MRA/IAF-MLA 갱신(제품인증) 및 확대(숙련도시험, 표준물질생산, Global G.A.P.) 평가 수검
- '23. 1월 : 검증분야 신규 인정제도 도입
- '24. 5월 : APAC-MRA 갱신 및 확대 평가 수검(시험·교정·제품인증 Global G.A.P·메디컬 시험·숙련도시험운영, 표준물질생산기관 분야 및 검증분야 확대)
- '24. 9월 : 메디컬시험 및 숙련도시험운영기관 전환평가 계획 수립 및 공고('24.10월)
- '24. 11월 : 교정, 시험 등 7개분야 ILAC-MRA/IAF-MLA 지위 유지 국제기구 승인
 - * ILAC-MRA(5개분야) : 시험, 교정, 표준물질생산, 메디컬시험 및 숙련도시험운영기관
 - ** IAF-MLA(2개분야) : 제품인증(GLOBALG.A.P포함) 및 검증기관
- '25. 1월 : KOLAS 메디컬 시험·숙련도시험운영 전환평가 시행('25.1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3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95	2,029	2,088	1,620	1,53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직접수행), 한국계량측정협회(출연, '24년 보조)
- 사업 수혜자 : KOLAS(시험, 교정, 검사, 메디컬, 숙련도, 표준물질, 생물자원은행, 제품인증, 검증 등) 공인기관, 성적서를 활용·수출하는 기업·연구소 및 소비자, 정부 및 공공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숙련도시험 개발·운영	출연	한국계량 측정협회	57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9. 제21조 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 제 구축사업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교정 및 관련 기기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3. 국가교정기관의 지정 평가에 관한 지원사업 및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업
국제공인기관 인정업무 지원	민간 보조	공모선정 (‘25 : 한국계량 측정협회)	30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적합성평가체 제의 구축),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 평가 등), 제24조(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유지 : 663백만원

(‘25) 750백만원 → (‘26) 663백만원, △87백만원, △11.6%

- 인정위원회 등 축소에 따른 예산 감액
- (산출) 위원회 등 축소 △87백만원 감액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50 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수용비(210-01) : 292백만원 - 인정위원회 수당 288백만원 : 12명 × 0.15백만원 × 160회 - 국제문서 번역, 법률자문 및 위원회 개최 지원 등 4 	663 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수용비(210-01) : 205백만원 - 인정위원회 수당 201백만원 : 12명 × 0.15백만원 × 112회 - 국제문서 번역, 법률자문 및 위원회 개최 지원 등 4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백만원 : 4백만원 × 1회 ○ 임차료(210-07) : 30백만원 - 세계인정의 날 및 평가사 교육 30백만원 : 5백만원 × 6회 ○ 관리용역비(210-15) : 98백만원 - 인정정보통합시스템 유지관리 98백만원 : 98백만원 × 1건 ○ 국외여비(220-02) : 52.5백만원 - 국제회의 참석·대응 52.5백만원 : 3명 × 3.5백만원 × 5회 ○ 사업추진비(240-01) : 11.4백만원 - 국내 시험인증산업 발전방안 협의 11.4백만원 : 0.025백만원 × 10개 기관 × 5분야 × 9회 ○ 일반연구비(260-01) : 266.1백만원 - 국제동등성유지 및 국제기구 개편에 따른 운영기준 정비 266.1백만원 = 33.3백만원 × 8과제		백만원 : 4백만원 × 1회 ○ 임차료(210-07) : 30백만원 - 세계인정의 날 및 평가사 교육 30백만원 : 5백만원 × 6회 ○ 관리용역비(210-15) : 98백만원 - 인정정보통합시스템 유지관리 98백만원 : 98백만원 × 1건 ○ 국외여비(220-02) : 52.5백만원 - 국제회의 참석·대응 52.5백만원 : 3명 × 3.5백만원 × 5회 ○ 사업추진비(240-01) : 11.4백만원 - 국내 시험인증산업 발전방안 협의 11.4백만원 : 0.025백만원 × 10개 기관 × 5분야 × 9회 ○ 일반연구비(260-01) : 266.1백만원 - 국제동등성유지 및 국제기구 개편에 따른 운영기준 정비 266.1백만원 = 33.3백만원 × 8과제

② 숙련도시험 개발·운영 : 570백만원

(‘25) 570백만원 → (‘26) 570백만원, 0.0%

- ‘25년 대비 동일 예산(570백만원)
- (산출)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보급(30백만원×19건)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70 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570백만원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570백만원 : 30백만원 × 19건	570 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570백만원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570백만원 : 30백만원 × 19건

③ 국제공인기관 인정업무 지원 : 300백만원

(‘25) 300백만원 → (‘26) 300백만원, +0.0%

- ‘25년 대비 동일 예산(300백만원)
- (산출) 국제공인기관 인정업무 지원(300백만원×1건)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00 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300백만원 - 국가인정체계 운영지원 300백만원 : 300백만원 × 1건	300 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300백만원 - 국가인정체계 운영지원 300백만원 : 300백만원 × 1건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숙련도 프로그램 평균 이용 기업수 (단위: 개)	목표	40	40	-	-	-	·사업비 증감과 숙련도 프로그램 최근 3년간 개발건 고려하여 산출	·당해연도 총 숙련도 프로그램 참여기관수 /총 숙련도프로그램 운영건수	·국 가 기 술 표 준 원 내부 통계 및 학술 연구용역 수행 결과 보고서
	실적	41	40	-	-	-			
	달성도	103	100	-	-	-			
숙련도 프로그램 합격률 (단위: %)	목표	80	80	-	-	-	·사업비 증감과 숙련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들의 합격률 감안	·(숙련도프로그램의 합격기관수/숙련도 프로그램 참여 기 관수)×100	·숙련도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및 KOLAS 시스템 자료
	실적	90	92	-	-	-			
	달성도	113	115	-	-	-			
인정 공인기관 수 (단위: 건)	목표			1,212	1,260	-	·공인기관 연평균 증가율(최근 10년간)을 고려하여 산출	·해당 년도 말(12월 기준) 인정 공인기 관 수(누적)	·KOLAS 인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산출
	실적			1,287	-	-			
	달성도			106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 태블릿 PC의 접촉 온도 측정 숙련도시험 등 25건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 : 염기성 용액 중 베타 방출 핵종 방사능 분석 등 시험, 교정, 메디컬시험 분야별 숙련도시험 등 70건 운영 • 인정기구 통합(KOLAS+KAS) 및 홈페이지(www.knab.go.kr/kolas) 개편 완료 • 생물자원은행 신규 인정제도 시범인정 도입 • 2022년 APLAC/PAC-MRA 확대(숙련도시험, 표준물질생산, Global G.A.P)를 위한 국제동등성평가 수검 • 탄소 검증 분야 신규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 창호의 기밀성 시험 등 24건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 :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현장시험등 시험, 교정, 메디컬시험 분야별 숙련도시험 등 73건 운영 • 숙련도시험, 표준물질생산, Global G.A.P 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 확대 완료 • 검증 분야 신규 인정제도 도입 및 국제상호인정협정(MLA) 확대 신청 • KOLAS 국제동등성평가 수검대비를 위한 절차, 기준개정 및 전략수립 등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동등성평가 대응을 위한 KOLAS 규정·품질문서 개정 및 영문화 - 국제표준 개정(메디컬시험, 숙련도운영)대응을 위한 전환계획 수립 등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 대기배출가스 중 금속화합물질 등 20건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 : 마스크 흡기저항 시험 등 시험, 교정, 메디컬시험 분야별 숙련도시험 등 82건 운영 •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해 국제상호인정협정(APAC-MRA) 유지 및 확대*를 위한 2024년 국제동등성평가 수검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인정기구로부터 4년 주기 재평가(시험, 교정 등 6개분야) 및 확대(검증분야) 평가 수검 • 국제동등성 유지를 위해 국제표준 전면개정에 따라 메디컬 및 숙련도시험운영기관 전환평가("25.) 추진 준비 예정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 머신러닝 분류시험 등 16건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 : 철 합금 화학성분 시험 등 시험, 교정, 메디컬시험 분야별 숙련도시험 등 79건 • KOLAS 메디컬시험·숙련도시험운영기관 전환평가 시행("25.3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제기준에 따른 안정적인 인정체계를 통한 국제상호인정협정(MRA/MLA) 효력 유지, 공인기관이 발행한 성적서 및 검/인증서의 지속적인 국제통용성 확보
 - * 국제기구(ILAC, IAF)는 각 국의 인정기구와 상호인정협정(MRA/MLA)을 통하여 인정기구가 인정한 공인기관의 시험·검/인증 등의 결과를 국제적으로 상호인정하고, 인정기구에 대해 주기적(4년)으로 동등성평가 실시
- MRA/MLA 효력이 유지됨에 따라 국내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성적서가 국제기구(ILAC, IAF)와 MRA/MLA를 체결한 116개국에서 추가·중복시험 없이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수출기업 지원

-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공인기관의 신뢰도와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신수요, 신산업분야에 대한 공인기관 인정 확대*(연평균 약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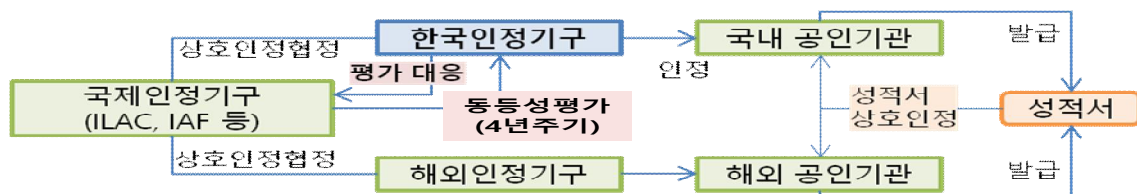
* 공인기관 수(개) : ('21) 1,049 → ('22) 1,140 → ('23) 1,218 → ('24) 1,287 →('25.현재) 1,312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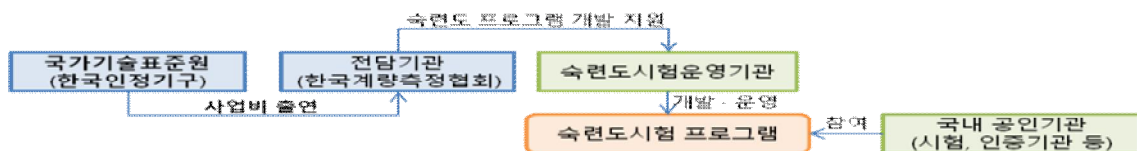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①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유지 (직접)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상호인정협정(MRA/MLA) 체결	산업부 및 국제기구	교정, 시험 등 적합성평가 분야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 * MRA/MLA 체결국은 성적서 등 상호인정을 위해 국제기준 준수/유지 필요
② 국제평가 수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인정기구로서 인정체계 국제수준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4년마다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국제동등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부적합이 없는 경우 MRA/MLA 유지

② 숙련도시험 개발·운영 (출연)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조사/분석	산업부	국내외 공인기관의 시험, 교정 등 적합성평가 능력, 평가 분야 국내외 규정, 표준 등 기술문서, 숙련도시험 수요 등에 대한 조사/분석 실시
↓		
② 기본계획 수립	산업부	시험평가용 숙련도 시료 개발 및 보급체계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		
③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기관 선정	산업부	숙련도시험(시험능력 비교평가) 프로그램 개발기관 선정 및 개발
↓		
④ 숙련도시험운영	숙련도시험운영기관 및 참여기관	개발시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비교 숙련도시험 실시 (국내·외)
↓		
⑤ 후속조치	참여기관	시험능력 비교평가에 대한 결과보고, 분석 및 시정조치를 통한 적합성평가능력 제고

③ 국제공인기관 인정업무 지원 (보조)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

예산
보조

↓

**협력기관
(보조사업 수행기관)**

공인기관 인정 및 시험, 인증 등
적합성평가 능력의
국제수준 유지 여부 관리 등

↓

**국내 적합성평가기관
(시험, 인증기관 등)**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 공고	산업부	국가인정체계 운영지원 보조사업 공고
↓		
② 수행기관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산업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보조금 지급
↓		
③ 국가인정체계 운영지원	보조사업 수행기관	인정업무 및 평가사 등록 업무 지원 - (기관 관리지원) 현장평가 후보군 구성, 평가 일정 조율, 인정위원회 심의자료 검토, 인정서 발송 등 - (평가사 관리 지원) 심의 대상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자격검토 및 등록증 발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088	1,620	1,533	2,532	2,659	
2025~2029		1,620	1,533	2,267	2,441	2,62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제동등성평가 수검을 통한 국제상호인정협정(MRA/MLA) 효력 유지 및 공인기관이 발행한 성적서, 검/인증서의 지속적인 국제통용성 확보
 - 지속적 국제동향 파악 및 대응을 통한 국제기준 부합화 추진
- 국제동등성 유지를 위해 국제표준 전면개정에 따라 메디컬 및 숙련도시험운영기관 전환평가 준비 및 성공적 전환 추진('25.)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① '20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최종의견 및 점수) 보통(69.2)
- (결과 요약)
 -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국제동등성평가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탄력적 대응 인정
 - 전체사업에 대한 상반기 집행을 미흡
 - 예산절감 노력 필요

② '21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최종의견 및 점수) 보통(80.0)
- (결과 요약)
 -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사업을 중단시키지 않고 비대면평가 진행 등 탄력적 대응 등 노력 인정

③ '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 (최종의견 및 점수) 보통(75.1)
- (결과 요약)
 - 예산 보조 법적 정비 필요
 - 세부사업명(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과 실질 내역사업명(국가인정체계 운영지원)이 일치하지 않아 내역사업명 변경 필요

④ '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 (최종의견) 사업운영 개선
- (결과 요약) 성과지표의 구체적 계량화
 - 국제협력 특성을 고려한 사후관리 및 현장 모니터링 체계의 지속적 환류 및 개선 체계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009	△14	1,995	-	-	-	1,995	1847.9	92.6	92.6	-	147.1
2023	2,029	-	2,029	-	±32	-	2,029	1,991	98.1	98.1	-	38.0
2024	2,088	-	2,088	-	±89.8	-	2,088	2,002.5	95.9	95.9	-	85.5
2025	1,620	-	1,620	-	-	-	1,620	1,544.6	95.3	95.3	-	75.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300	300	300	300	-	300	300	-	-	100
2023	1,124	1,124	1,124	1,124	-	1,124	1,124	-	-	100
2024	1,024	1,024	1,024	1,024	-	1,024	1,024	-	-	100
2025. 12월기준	870	870	870	870	-	870	87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집행잔액 147백만원 (코로나 19로 인한 국제평가 및 회의가 원격회의로 전환되어 국외여비 (66백만원) 절감. 또한 국제기구 동등성평가 수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정책용역비를 예비로 확보하였으나 평가 수검결과, 정책용역 및 기준개정 등이 필요한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관련 비용(연구비 등)을 절감)
2023	- (불용)집행잔액 38백만원(학술연구용역 낙찰차액, 정산잔액 등 집행잔액) - (전용)자체전용 32백만원(국제상호인정협정 유지를 위한 국제동등성평가 수검("24.5월)대비 관련 국제기구 규정변경사항 파악·대응, 한국인정기구 대표자의 국제기구 총회참석 및 의견제출(투표 등) 등 필수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일반수용비를 국외 업무여비로 자체전용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 집행잔액 150백만원(학술연구용역 낙찰 및 정산잔액, 국제동등성평가의 성공적 수검에 따른 관련 비용(번역비 등)을 절감) - (조정) 국제동등성평가에 대비한 국제평가반 인원, 평가일수 등의 변경에 따라 임차료가 증가되어 필수적인 회의, 행사 등에 대한 필수 임차료 지급이 어려워 일부 일반수용비를 임차료로 세목간 조정함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 집행잔액 75백만원(학술연구용역 낙찰차액, 정산잔액 등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12)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 (3732-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2	국가기술표준원		110	117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제품안전정책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06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제품사고조사 및수입제품 안전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박해범		이주현
		제품안전정보과	043-870-5430		043-870-5439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	1,652	1,527	1,527	1,474	1,474	△53	△3.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 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79	1,679	1,652 [1,652]	-	27	1,527	1,527	1,502 [1,502]	1,527	1,502 [1,502]	-	25	1,474	
· 사고조사제도이행	904	904	889.3 [889.3]	-	14.7	864	864	849 [849]	864	849 [849]	-	15	814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284	284	282.7 [282.7]	-	1.3	172	172	172 [172]	172	172 [172]	-	-	172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491	491	480 [480]	-	11	491	491	481 [481]	491	481 [481]	-	10	488	
○ 비목별 분류(합계)	1,679	1,679	1,652 [1,652]	-	27	1,527	1,527	1,502 [1,502]	1,527	1,502 [1,502]	-	25	1,474	
· 일반수용비(210-01)	20	20	20 [20]	-	-	20	20	20 [20]	20	20 [20]	-	-	20	
· 시험연구비(210-13)	95	95	94.9 [94.9]	-	0.1	70	70	68 [68]	70	68 [68]	-	2	70	
· 사업추진비(240-01)	5	5	5 [5]	-	-	5	5	5 [5]	5	5 [5]	-	-	5	
· 일반연구비(260-01)	758	758	743.5 [743.5]	-	14.5	794	794	781 [781]	794	781 [781]	-	13	744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	-	-	-	-	-	-	-	-	-	-	-	635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801	801	788.6 [788.6]	-	12.4	638	638	628 [628]	638	628 [628]	-	10	-	
○ 가능비목별 분류(합계)	1,679	1,679	1,652 [1,652]	-	27	1,527	1,527	1,502 [1,502]	1,527	1,502 [1,502]	-	25	1,474	
· 사고조사제도이행	904	904	889.3 [889.3]	-	14.7	864	864	849 [849]	864	849 [849]	-	15	814	
- 시 험 연 구 비 (210-13)	95	95	94.9 [94.9]	-	0.1	70	70	68 [68]	70	68 [68]	-	2	70	
- 일 반 연 구 비 (260-01)	758	758	743.5 [743.5]	-	14.5	794	794	781 [781]	794	781 [781]	-	13	744	
-민간위탁사업비 (320-02)	51	51	50.9 [50.9]	-	0.1	-	-	-	-	-	-	-	-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284	284	282.7 [282.7]	-	1.3	172	172	172 [172]	172	172 [172]	-	-	172	
- 일 반 수 용 비 (210-01)	20	20	20 [20]	-	-	20	20	20 [20]	20	20 [20]	-	-	20	

	2024					2025('25.12월말)							2026 예 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사 업 추 진 비 (240-01)	5	5	5 [5]	-	-	5	5	5 [5]	5	5 [5]	-	-	5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	-	-	-	-	-	-	-	-	-	-	-	147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259	259	257.7 [257.8]	-	1.3	147	147	147 [147]	147	147 [147]	-	-	-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491	491	480 [480]	-	11	491	491	481 [481]	491	481 [481]	-	10	488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	-	-	-	-	-	-	-	-	-	-	-	488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491	491	480 [480]	-	11	491	491	481 [481]	491	481 [481]	-	10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 안전관리)**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 사고조사 제도이행,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및 통관단계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제품사고조사 제도이행)** 사고·결함 제품에 대한 사고조사를 통해 제품 결함 발견 시 행정조치(리콜 등)를 실시하고, 사고다발 제품 등 안전 취약제품에 대한 심층조사 및 분석을 통해 관련 안전기준 보완 등 전주기적인 제품 안전관리 수행

*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한 제품사고조사를 통해 결함 확인 시 제10조, 11조에 따른 제품 수거 등의 안전조치 추진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제품 인증정보, 리콜정보, 사고·위해정보 등 각종 제품안전정보를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분석하여 소비자, 기업, 관련 단체 등에 보급**함으로써 소비자 안전과 기업의 안전 품질경쟁력 제고

* (정보원) 안전 인증기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

** (위해정보 보급) 제품안전정보포털 및 제품사고정보콜센터 운영, 제품안전 정보지 발간 등

- **(통관단계 수입제품안전관리)** 국표원-관세청간 정부3.0협업사업*의 일환으로 통관단계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를 통해, 위해 우려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관세청과의 수입제품관리 협업과제 상정·확정('14.8,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시범사업 시작('14.9)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한 사고조사 이행

제15조(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5.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제품종류, 부상부위 등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한정한다)
 6.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제품종류, 부상부위 등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제품사고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제품사고조사센터로 지정하여 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한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
 2. 제10조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11조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에 관한 정보
 - 2의2. 제13조에 따라 사업자가 행한 수거등의 조치에 관한 정보 및 제13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한 정보
 - 2의3.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
 3.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3”에 근거한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이행

제9조의3(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세청장과 합동으로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이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통관절차 완료 전에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하기 위하여 불법·불량제품 유통 사업자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 그 조사 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관 전의 수입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통관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0조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제11조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1.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조사 내용과 결과의 보관·열람,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14.2.26 “제2차 제품안전종합계획” 발표
- ‘14.8.21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관세청과의 수입제품관리 협업과제 상정·확정
- ‘14.9.15 “수입제품 안전관리” 시범사업 실시(인천본부세관 협업사무소 설치)
- ‘15.3.25 “수입제품 안전관리” 본사업 실시(세관 확대 : 인천본부, 인천공항, 부산)
- ‘15.5.18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제9조의3 신설: 수입제품 안전성조사 근거마련)
- ‘16.1.27 “4개 세관 협업사무소” 상시 운영(평택세관 파견 인원 고정배치)
- ‘17. 1월 “세관협업사무소 파견인원” 증원(4→5명, 인천본부세관 1명 추가)
- ‘19. 3월 “세관협업사무소 파견인원” 증원(5→6명, 인천신항 추가)
- ‘23. 4월 “세관협업사무소 파견인원” 증원(6→7명, 부산신항 추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5 ~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 편성한 연도에는 추경 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862	1,244	1,865	1,679	1,527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 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보조	한국제품 안전관리원	172백만원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보조	한국제품 안전관리원	488백만원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제품 사고조사 제도 이행

: (2025 본예산) 864백만원 → (2026 예산) 814백만원, 50백만원 감액

- (요구) 사고제품의 고도화·첨단화로 인한 시료 구입비 증가, 해외직구 증가로 인한 제품 사고조사 대상 추가 등 지속적인 사고조사 필요성으로 인해 최소 전년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사고접수제품 결함조사 등(70백만원)
사고다발제품 원인분석(744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64,000	<p>○ 시험연구비(210-13) : 70,000천원</p> <p>가. 사고접수 제품 결함조사 등(7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비 : 70건×40만원(시험수수료) + 70건×10만원(재료비) = 35,000천원 · 출장비 및 수당 : 70건×2명×10만원(출장비) + 70건×2명×15만원(수당) = 35,000천원 <p>○ 일반연구비(260-01) : 794,000천원</p> <p>가. 사고 다발 제품 원인 평가·분석(794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다발제품 원인 평가·분석: 26.5백만원×30개 품목(795,000천원) <p>나. 조정재원 (-1,000천원)</p>	814,000	<p>○ 시험연구비(210-13) : 70,000천원</p> <p>가. 사고접수 제품 결함조사 등(7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비 : 70건×40만원(시험수수료) + 70건×10만원(재료비) = 35,000천원 · 출장비 및 수당 : 70건×2명×10만원(출장비) + 70건×2명×15만원(수당) = 35,000천원 <p>○ 일반연구비(260-01) : 744,000천원</p> <p>가. 사고 다발 제품 원인 평가·분석(744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다발제품 원인 평가·분석: 26.7백만원×28개 품목(747,600천원) <p>나. 조정재원 (-3,600천원)</p>

②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 (2025 본예산) 172백만원 → (2026 예산) 172백만원

- (요구) 제품안전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에 따른 제품 위해정보의 적극적인 홍보 예산 요구
- (산출) 정보수집 및 제품사고정보콜센터 운영·홍보(73백만원)
제품안전정보 보급(30백만원)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전파(63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2,000	<p>○ 일반수용비(210-01) : 20,000천원</p> <p>가. 제품안전정보 수집·홍보 및 업무협의 (2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철 홍보 등 : 5,000천원×4회 = 20,000천원 <p>○ 업무추진비(240-01) : 5,000천원</p> <p>가. 제품안전정보 수집·홍보 및 업무협의 (5,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안전정보 홍보 관련 업무협의 : 200천원×25회 = 5,000천원 <p>○ 민간위탁비(320-02) : 147,000천원</p> <p>가. 제품사고정보 콜센터 운영(48,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사고정보 콜센터 운영 : 4,000천원(인건비)×12월 = 48,000천원 <p>가. 제품안전정보 보급(3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지 발간·보급 : 15,000천원×2회 = 30,000천원 <p>나.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전파(69,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리콜 모니터링 : 5,800천원(인건비)×12개월 = 69,600천원 <p>다. 조정재원 (-600천원)</p>	172,000	<p>○ 일반수용비(210-01) : 20,000천원</p> <p>가. 제품안전정보 수집·홍보 및 업무협의 (2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철 홍보 등 : 5,000천원×4회 = 20,000천원 <p>○ 업무추진비(240-01) : 5,000천원</p> <p>가. 제품안전정보 수집·홍보 및 업무협의 (5,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안전정보 홍보 관련 업무협의 : 200천원×25회 = 5,000천원 <p>○ 민간경상보조(320-01) : 147,000천원</p> <p>가. 제품사고정보 콜센터 운영(48,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사고정보 콜센터 운영 : 4,000천원(인건비)×12월 = 48,000천원 <p>가. 제품안전정보 보급(3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지 발간·보급 : 15,000천원×2회 = 30,000천원 <p>나.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전파(69,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리콜 모니터링 : 5,800천원(인건비)×12개월 = 69,600천원 <p>다. 조정재원 (-600천원)</p>

③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2025 본예산) 491백만원 → (2026 예산) 488백만원, 3백만원 감액

- (요구) 통관단계 불법·불량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통해 위해 우려 제품의 국내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요구
- (산출) 인증대상 제품 인증 여부 실물 확인 및 안전성조사(제품시험) 수행(488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91,000	<p>○ 민간위탁비(320-02) : 491,000천원</p> <p>가. 시험·평가 등 (142,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수수료 : 284건×400천원 = 113,600천원 운송비 : 284건×100천원 = 28,400천원 <p>나. 인건비(317,856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건비 : 17.2만원×22일×12개월×7명 = 317,856천원 <p>다. 통관단계 협업검사시스템 운영(31,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업검사시스템 운영 : 31백만원×1식=31,000천원 <p>라. 조정재원 (144천원)</p>	488,000	<p>○ 민간경상보조(320-01) : 488,000천원</p> <p>가. 시험·평가 등 (139,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수수료 : 278건×400천원 = 111,200천원 운송비 : 278건×100천원 = 27,800천원 <p>나. 인건비(317,856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건비 : 17.2만원×22일×12개월×7명 = 317,856천원 <p>다. 통관단계 협업검사시스템 운영(31,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업검사시스템 운영 : 31백만원×1식=31,000천원 <p>라. 조정재원 (144천원)</p>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 건수 (단위: 건)	목표 (건)	4,700	5,640	7,764	7,919	8,788	최근 3년 실적치 평균(8,615건) 대비 2% 상향 목표치 설정	관세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수입제품의 안전성 조사 건수	안전성 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건)	7,318	9,282	9,246	8,460				
	달성도 (%)	155.7	164.5	119.1	106.8				
해외 리콜정보 수집 건수 (단위: 건)	목표 (건)					3,497	최근 3년 실적치 평균(3,428건) 대비 2% 상향 목표치 설정	해외 리콜정보 수집 건수	해외 리콜정보 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서
	실적 (건)	2,943	3,160	4,182					
	달성도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① 제품 결함여부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제도” 이행 : 사고조사 73건 진행 ② 소비자 피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 확충 - 글로벌 제품안전매거진 (계간SafetyKorea) 발간(2회) ③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 - ‘22년말 누계 실적 : 총 7,318건을 선별·조사하여 불법·불량제품 2,019건 적발
2023	① 제품 결함여부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제도” 이행 : 사고조사 94건 진행 ② 소비자 피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 확충 - 글로벌 제품안전매거진 (계간SafetyKorea) 발간(2회) ③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 - ‘23년말 누계 실적 : 총 9,282건을 선별 조사하여 불법·불량제품 2,669건 적발
2024	① 제품 결함여부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제도” 이행 : 사고조사 71건 진행 ② 소비자 피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 확충 - 글로벌 제품안전매거진 (계간SafetyKorea) 발간(1회) ③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 - ‘24년말 누계 실적 : 총 9,246건을 선별 조사하여 불법·불량제품 2,460건 적발
2025	① 제품 결함여부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제도” 이행 : 사고조사 60건 진행 ② 소비자 피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 확충 - 글로벌 제품안전매거진 (SafetyKorea) 발간(2회) ③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 - ‘25년말 누계 실적 : 총 8,460건을 선별 조사하여 불법·불량제품 2,379건 적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사고 다발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기업 및 소비자에 제공함으로써 동일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
- 사고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기준 및 표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체계적인 제품안전제도 확립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
- 통관단계에서 사전 적발을 통해 불법·불량 수입제품의 국내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국내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제품사고조사 제도이행)** 국가기술표준원이 사고정보 수집·관리·보급 및 결함제품에 대한 행정조치를 수행하고, 제품사고조사센터(시험인증기관)는 제품 결함 여부 판단을 위한 평가(제품시험) 업무 수행

<제품사고조사 제도이행 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소비자 신고 및 사고정보 수집	국가기술표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제품사고 신고 접수 ■ 사고사례 정보수집·분석
↓		
② 현장조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조사센터(외부전문가) 선정 ■ 사고내용 확인, 사고제품 수거 등
↓		
③ 제품 결함조사 (제품시험)	사고조사센터 (외부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모델 제품 구매(필요시) ■ 안전기준 등에 따른 제품시험 실시
↓		
④ 사고조사 결과 종합	국가기술표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조사 및 결함조사 결과 분석 ■ 종합 보고서 작성
↓		
⑤ 결과조치 (리콜 등)	국가기술표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조사 결과 통보(신고인) ■ 결함제품 수거 등의 조치(명령, 권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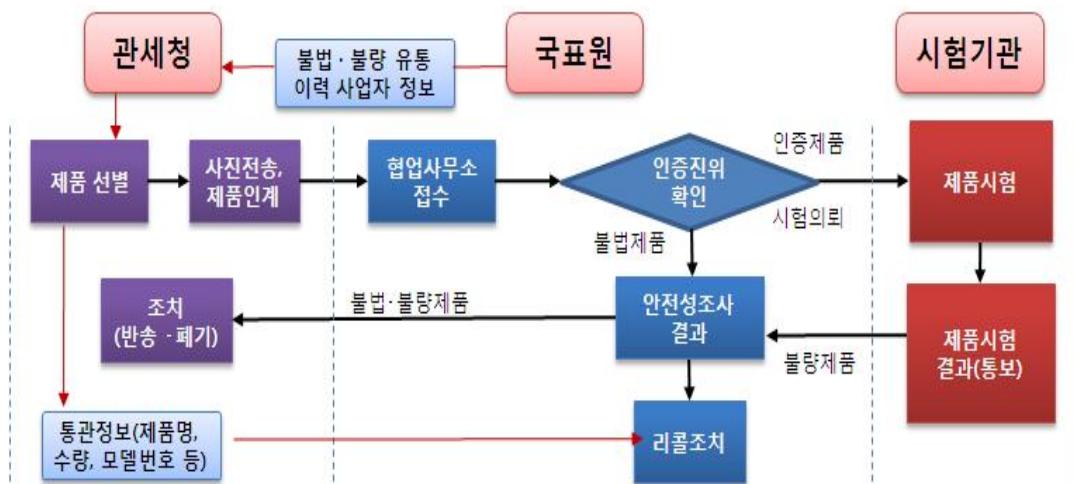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각종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분석하여 소비자, 기업 등에 보급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업무 절차>

추진 절차	시행 주체	절차 내용
사고조사 사례 홍보 등	국가기술 표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사고조사 사례 분석 ■ 제품사고조사 사례집 발간·배포
제품사고정보콜센터 운영	한국제품 안전관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사고정보콜센터 운영 ■ 위해정보 수집
제품안전 정보 보급	한국제품 안전관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정보(Safety Korea 정보지 발간·보급) 보급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전파	한국제품 안전관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위해정보(해외 리콜 정보, 해외직구 플랫폼 위해제품 판매정보) 수집·전파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위해우려 제품의 국내 반입 사전 차단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 업무 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679	1,527	1,474	2,036	2,137	
2025~2029		1,527	1,474	1,848	2,033	2,23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산중위 예산(안) 검토보고서("24)>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고유사무로 보이는 내역사업*의 비목 변경** 필요
 - * ①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②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 ** 민간위탁비 → 민간경상보조
 - 성과지표의 도전적 목표 제시 및 추가 성과지표 개발 필요
-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예산 비목 변경 및 성과지표 도전적 목표제시 및 추가 '26년 예산에 반영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목표)** 제품안전 정보수집을 기반으로 사고조사 제도를 수행하고 통관단계 불법·불량제품 반입을 차단하는 제품 안전 관리제도 추진
- **(제품 사고조사 제도이행)** 제품 사고조사를 통해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 등 행정조치
- **(소비자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제품사고정보콜센터” 운영을 통한 제품의 위해 정보·인증정보 수집·분석 및 보급 체계 마련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관세청과 합동으로 통관단계 수입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통해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단위사업 재정사업 자율평가('22.4)
 - (최종의견 및 점수) 보통, 88
 - (결과요약)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이 안전한 사회구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244	-	1,244	-	-	-	1,244	1,226.7	98.6	98.6	-	17.3
2023	1,865	-	1,865	-	-	-	1,865	1,747	93.6	93.6	-	118
2024	1,679	-	1,679	-	-	-	1,679	1,652	98.4	98.4	-	27
2025	1,527	-	1,527	-	-	-	1,527	1,502	98.4	98.4	-	2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 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세목조정 : 해당 없음 - 불용액 발생 사유 : 집행잔액(조달 공고금액과 낙찰 금액과의 차이로 인한 잔액 등, 민간위탁사업비 약 12.4백만원, 일반연구비 약 1.7백만원, 시험연구비 약 3백만원)
2023	- 세목조정 : 해당 없음 - 불용액 발생 사유 : 집행잔액(조달 공고금액과 낙찰 금액과의 차이로 인한 잔액 등, 민간위탁사업비 약 28백만원, 일반연구비 약 56백만원, 시험연구비 약 34백만원)
2024	- 세목조정 : 해당 없음 - 불용액 발생 사유 : 집행잔액 약 27백만원(조달 공고금액과 낙찰 금액과의 차이로 인한 잔액 등, 민간위탁사업비 약 12.4백만원, 일반연구비 약 14.5백만원, 시험연구비 약 0.1백만원)
2025	- 세목조정 : 해당 없음 - 불용액 발생 사유 : 집행잔액 약 25백만원(조달 공고금액과 낙찰 금액과의 차이로 인한 잔액 등, 민간위탁사업비 약 10백만원, 일반연구비 약 13백만원, 시험연구비 약 2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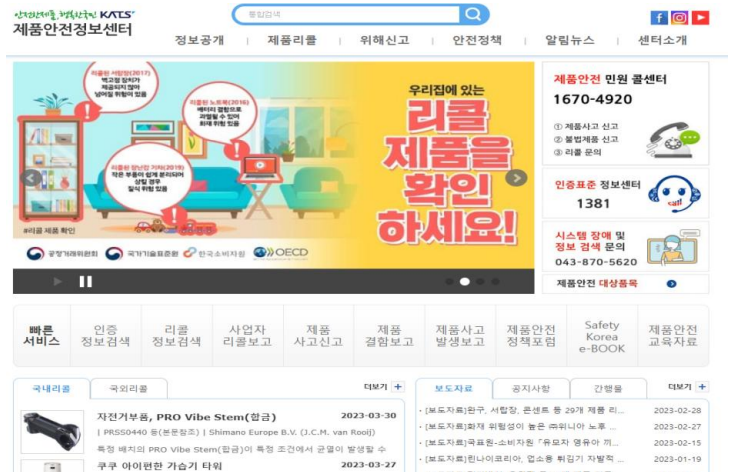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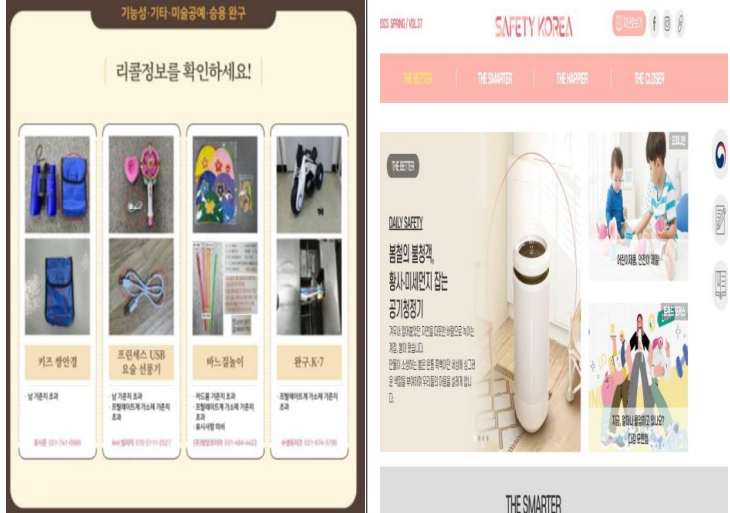
참고 1

제품사고조사 주요 사례

사고제품	주요내용	
 (스타벅스 캐리백)	사고개요	○ 언론보도를 통해 스타벅스 가방에서 발암물질 의혹 제기
	조사 과정	○ 제품사고 신고는 없었으나 사회적 이슈를 감안하여 즉각적인 직권조사 착수
	결과	○ 폼알데하이드 검출로 인한 제조사 자발적 리콜 진행
 (식기세척기)	사고개요	○ 유사모델의 지속적인 화재사고 발생
	조사 과정	○ 직권조사 착수, 사고발생 원인분석 및 타브랜드 제품과 비교분석
	결과	○ 설계상 취약점으로 인한 화재발생 사실 확인 ○ 제조사 자발적 리콜 지원
 (폴딩 유모차)	사고개요	○ 유모차 사용중 폴딩 부분이 접혀, 다시 펴는 과정에서 유아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 발생
	조사 과정	○ 동일제품 및 유사모델 안전기준 전항목 검사
	결과	○ 유사사고 발생 가능성 확인, 주의문구 표시 등 개선 유도
 (드럼 세탁기)	사고개요	○ 세탁기 사용중 세탁물 전면 유리부 폭발사고 발생
	조사 과정	○ 제조사 자체 사고조사 보고서 심층분석 및 전문가 자문, 재현시험 절차 검토
	결과	○ 제조사의 자발적 리콜 실시
 (스마트워치)	사고개요	○ 국내외에서 스마트워치 발열로 인한 화상피해 주장
	조사 과정	○ 제품 위해성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시중 유통중인 스마트워치 발열시험 등 결함조사
	결과	○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

참고 2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 · 분석 · 보급 주요 내용

위해정보 보급	주요내용
 <p>상기위해정보를 수집하고 KATS 제품안전정보센터</p> <p>정보공개 제품리콜 위해신고 안전정책 알릴뉴스 센터소개</p> <p>우리집에 있는 리콜 제품을 확인하세요!</p> <p>제품안전 민원 콜센터 1670-4920</p> <p>① 제품사고 신고 ② 불법제품 신고 ③ 리콜 문의</p> <p>인증표준 정보센터 1381</p> <p>시스템 장애 및 정보 검색 문의 043-870-5620</p> <p>제품안전 대상목록</p> <p>빠른 서비스</p> <p>인증 정보검색 리콜 정보검색 사업자 리콜보고 제품 사고신고 제품 결함보고 제품사고 발생보고 제품안전 정책문의 Safety Korea e-BOOK 제품안전 교육자료</p> <p>국내리콜 국외리콜</p> <p>자전거기부품, PRO Vibe Stem(한글) 2023-03-30</p> <p>특정 배치의 PRO Vibe Stem(한글)이 특정 조건에서 균열이 발생할 수 2023-03-27</p> <p>루루 어린이용 가슴기 타워 2023-03-27</p> <p>보도자료 공지사항 간행물</p> <p>· (보도자료)한글, 서랍장, 문생동 등 29개 제품 리... 2023-02-28</p> <p>· (보도자료)화재 위험성이 높은 쿠쿠니아 노후... 2023-02-27</p> <p>· (보도자료)국표원-소비자청 "유요자 영유아 끼... 2023-02-15</p> <p>· (보도자료)한나이로피아, 압수품 취급기 자발적... 2023-01-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정보포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콜센터(1670-4920)운영 - 인증 · 리콜정보 검색 - 제품사고관련 보고 · 신고 - 사업자리콜, 결함보고, 사고발생보고 - 해외리콜정보 게시
 <p>가습기 기타 미생균제 사용 연구</p> <p>리콜정보를 확인하세요!</p> <p>키즈 방한갑 프린세스 USB 요술 선글라스 바스걸놀이 완구 토끼</p> <p>날 제품적 조차 날 제품적 조차 제품적 조차 제품적 조차</p> <p>SAFETY KOREA</p> <p>THE SMAR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정보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fety korea 정보지 발간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품안전 정보 실시간 제공
<p>리콜(결함보상)정보 검색</p> <p>리콜 공표문</p> <p>국외리콜정보</p> <p>제품명 일러스트 모델명 XW125 (PLS10T)</p> <p>상표명 Woodtec 사업자 구분</p> <p>사업자명 Woodtec 사업자 연락처</p> <p>제조사명 제조국 모닝/모닝/모닝</p> <p>제품설명 제품이 있는 곳의 수송시 및 설치, 사용 중의 안전, 운반/인쇄/도판 제작</p> <p>리콜 종류 결함/불량/불합격 리콜 공표일 2023-03-31</p> <p>리콜 공표기관 유럽 집행위원회 리콜 대상국 미국/유럽/일본/한국</p> <p>조치사항 시장에서 제품회수</p> <p>리콜 내용</p> <p>해당 URL https://ec.europa.eu/safety-gate-alerts/screen/webReport/alertDetail/10008011?lang=en</p> <p>위해정보</p> <p>위해내용 제품이 결함있는 곳의 제품적 조차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품의 결함은 화재 발생 시 화재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p> <p>소변기</p> <p>대체 방법</p>	<p>리콜(결함보상)정보 검색</p> <p>리콜 공표문</p> <p>국외리콜정보</p> <p>제품명 안전이 도끼 모델명 361</p> <p>상표명 FURN FASHION 사업자 구분</p> <p>사업자명 FURN FASHION 사업자 연락처</p> <p>제조사명 제조국 미국/미국/미국/미국</p> <p>제품설명 수레를 대상으로 디자인된 도끼는, 전도제품을 통해 화재의 위험이 있고, 긴 사용시간으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p> <p>리콜 종류 결함/불량/불합격 리콜 공표일 2023-03-31</p> <p>리콜 공표기관 유럽 집행위원회 리콜 대상국 미국/유럽/일본/한국</p> <p>조치사항 시장에서 제품회수</p> <p>리콜 내용</p> <p>해당 URL https://ec.europa.eu/safety-gate-alerts/screen/webReport/alertDetail/10008011?lang=en</p> <p>위해정보</p> <p>위해내용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 인해 화재의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화재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p>

참고 3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성 검사 적발 사례

적발제품	주요내용	
 (충전지)	위반	○ 안전확인 신고한 제품과 단전지, 보호회로 부품상이
	위해	○ 부품 변경으로 충전 중 화재 발생 우려
	조치	○ 통관 보류하고, 수입자 통보 후 폐기 조치
 (완구)	위반	○ 안전 확인 회피 목적으로 최소 사용 연령 표시라벨 임의 변경 * 최소 사용 연령 3세 이상 → 14세 이상
	위해	○ 안전 확인 미실시로 유해 화학물질 위험 우려
	조치	○ 통관 보류, 수입자 통보 후 폐기 조치
 (완구)	위반	○ 유해화학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62.7배 초과 검출
	위해	○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유아의 피부, 눈, 간 손상 우려
	조치	○ 통관 보류, 수입자 통보 후 적출국(중국)에 반송
 (완구)	위반	○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시험 미 실시
	위해	○ 중금속 및 유해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어린이 건강 위험 우려
	조치	○ 제조사의 자발적 리콜 실시
 (노트북)	위반	○ 인증정보 미표시(KC마크, 안전확인, 신고번호 등)
	위해	○ 안전 확인이 되지 않은 전자제품으로 사용 중 화재 우려
	조치	○ 통관 보류 후 수입자 보완 조치 통보

사 업 명
(13)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3731-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117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7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인증제도 혁신기반구축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적합성정책국	이용현	-	지세한울
		인증산업진흥과	043-870-5500	-	043-870-5581
	사업시행주체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1381정보지원팀	함종오 팀장	138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신기술제품인증	947	758	758	969	969	211	27.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947	947	946 [946]	-	1	758	758	755 [755]	758	755 [755]	-	3	969
· 1381인증표준정보 센터 운영·개선	911.863	911.863	911.863 [911.863]	-	-	723	723	721 [721]	723	721 [721]	-	2	934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15.137	15.137	15.137 [15.137]	-	-	15	15	15 [15]	15	15 [15]	-	-	15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20	20	20 [19]	-	1	20	20	19 [19]	20	19 [19]	-	1	20
○ 비목별 분류(합계)	947	947	946 [946]	-	1	758	758	758 [755]	758	758 [755]	-	3	969
· 일반수용비(210-01)	60.863	60.863	60.863 [60.863]	-	-	32	32	30 [30]	32	30 [30]	-	2	32
· 국내여비(220-01)	3.484	3.484	3.484 [3.484]	-	-	3.5	3.5	3.5 [3.5]	3.5	3.5 [3.5]	-	-	3.5
· 사업추진비(240-01)	11.653	11.653	11.653 [11.653]	-	-	11.5	11.5	11.5 [11.5]	11.5	11.5 [11.5]	-	-	11.5
· 일반연구비(260-01)	20	20	20 [19]	-	1	20	20	19 [19]	20	19 [19]	-	1	20
· 민간경상보조(320-01)	851	851	851 [851]	-	-	691	691	691 [691]	691	691 [691]	-	-	90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947	947	946 [946]	-	1	758	758	758 [755]	758	758 [755]	-	3	969
· 1381인증표준정보 센터 운영·개선	911.863	911.863	911.863 [911.863]	-	-	723	723	721 [721]	723	721 [721]	-	2	934
- 일반수용비(210-01)	60.863	60.863	60.863 [60.863]	-	-	32	32	30 [30]	32	30 [30]	-	2	32
- 민간경상보조(320-01)	851	851	851 [851]	-	-	691	691	691 [691]	691	691 [691]	-	-	902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15.137	15.137	15.137 [15.137]	-	-	15	15	15 [15]	15	15 [15]	-	-	15
- 국내여비(220-01)	3.484	3.484	3.484 [3.484]	-	-	3.5	3.5	3.5 [3.5]	3.5	3.5 [3.5]	-	-	3.5
- 사업추진비(240-01)	11.653	11.653	11.653 [11.653]	-	-	11.5	11.5	11.5 [11.5]	11.5	11.5 [11.5]	-	-	11.5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20	20	20 [19]	-	1	20	20	19 [19]	20	19 [19]	-	1	20
- 일반연구비(260-01)	20	20	20 [19]	-	1	20	20	19 [19]	20	19 [19]	-	1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개선)** 국내기업이 제품 출시 또는 수출 시 필요한 제품별, 국가별 인증 정보를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운영·개선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KC마크의 소비자 인지도,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만족도·인지도 등을 조사 분석하여 사업성과 분석 및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법정 의무 인증을 KC마크로 수립하고 KC마크를 국내 대표인증 브랜드로 육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표준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평가를 도입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거나 적합성평가의 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①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등에 마크를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조약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 간 협정을 준수하거나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 7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등) 제15조의7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등)①법 제22조의4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 추진경위

- '04.10. 국정감사 : 인증제도 난립에 따른 통합 필요성 제기
- '05.5.~'06.5. : 「인증제도 혁신 T/F팀」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 * 12차에 걸친 전문가회의 및 공청회 개최 (산업자원부)
 - * 국내 인증업체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실시 (500여 기업)

< 「국가표준·인증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주요내용 >

- ① 부처별 인증업무를 종합·조정할 총괄관리 체계 구축
- ② 국가통합인증마크 및 모듈방식 인증제도 검토
- ③ 인증기관의 시설·인력 강화 및 인증정보 네트워크 구축
- ④ 국제적 인정기구 육성 및 인증기준의 국제부합화, 규격간 통일화

- '09.4.1. : 「국가표준기본법」 개정공포(KC마크 도입 등 규정)
- '09.7.1. : 산업부 소관 9개 의무인증제도에 KC마크 도입
- '10.6.30. :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고시
 - * 복수의무인증제품에 대한 시험성적 상호인정 및 일괄신청제 도입
- '11.1.1. : 산업부 등 5개 부처 13개 법정 의무인증제도에 KC마크 전면 시행
- '13.8.7. : “수출기업 해외인증 획득 지원 활성화 계획” 장관님 보고시 “해외인증 지원 콜센터” 구축을 지시
 - * 1380 FTA 콜센터와 같은 138Y 계열의 해외인증 지원 콜센터 구축을 지시
- '13.10.28. : “해외인증 지원 콜센터 추진 계획” 장관님 보고 시 4자리 특수번호 및 운영기관을 확정

<추진방안 확정결과>

- 운영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특수번호 : 1381

- * 산업부 무역실, 중기청, 무역협회, KOTRA, 중진공, 시험연구원 등 협업 확인

- '14.1.27. : “인증표준정보제공콜센터” 운영기본계획을 수립

- 사용번호 : 1381 • 서비스시간 : 8:00~19:00, 주5일
- 관리주체 : 국가기술표준원(“인증·표준 정보제공 콜센터”설치)
- 운영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조 직 : 12명 [국표원 1명(총괄), KTR(운영실무,상담) 11명]
- 제공정보 :
 - 인증 : 350여개의 해외인증(110여개국) 및 300여개 국내인증
 - 표준 : 43천여종 국가표준 & 국제표준(ISO, IEC, ITU 등)

- '14.3.19. : KATS - KTR “1381” 인증표준정보제공콜센터 운영협약 체결

- '14.3.20. : VIP지시 '정부 콜센터 홍보 강화' 지시
- '14.3.26. : "1381" 인증표준콜센터 개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7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52	1,052	947	758	96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기업 또는 소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1381인증표 준정보센터 운영·개선	보조	한국화학 융합시험 연구원	902	100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위탁운영)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개선

: (2025 본예산) 723백만원 → (2026) 934백만원, 211백만원 증액

- 다양하고 복잡한 인증·표준 환경에 대응하고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 도입 및 상담 전문성 강화

- (산출)

- 인건비 보조 (320-01, 민간경상보조) : 720백만원

* ('25) 14명 × (3.33백만원 × 12개월) → ('26) 16명 × (3.75백만원 × 12개월)

- 대면상담 전문가 수당 (320-01, 민간경상보조) : 20백만원

* ('25) 80회 × 0.25백만원 → ('26) 80회 × 0.25백만원

- 유지보수, 관리비 등 (320-01, 민간경상보조) : 102백만원
* ('25) 12개월 × 8.5백만원 → ('26) 12개월 × 8.5백만원
- 보안·시스템 개선 (320-01, 민간경상보조) : 51백만원
* ('25) - → ('26) 1식 × 51백만원
- 상담원 재교육 (320-01, 민간경상보조) : 9백만원
* ('25) 9회 × 1백만원 → ('26) 9회 × 1백만원
- 1381 이용 유도 및 활성화 (210-01, 일반수용비) : 32백만원
* ('25) 3회 × 10.67백만원 → ('26) 3회 × 10.67백만원

(2)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2025 본예산) 15백만원 → (2026) 15백만원, 전년동

-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범부처 확산을 위해 협의체 운영 및 실태조사 예산

- (산출)

- 인증제도 실태조사 (220-01, 국내여비) : 3.5백만원
* ('25) 2명 * 0.097백만원 * 18회 → ('26) 2명 * 0.097백만원 * 18회
- 인증제도 혁신 관련 회의 (범부처 실무자 협의 등) (240-01, 사업추진비) : 11.5백만원
* ('25) 25명 * 0.03백만원 * 15회 → ('26) 25명 * 0.03백만원 * 15회

(3)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2025 본예산) 20 → (2026) 20백만원

- 사업 효과 개선을 위한 사업성과 분석과 차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 (산출) ('25) 1개과제 × 20백만원 → ('26) 1개과제 × 20백만원 (260-01, 일반연구비)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58	(1)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개선 : 723백만원 (1-1) 인건비 보조 : 560백만원 - 14명 × 40백만원 (1-2) 대면상담 전문가 수당 : 20백만원 - 0.25백만원 × 140회 (1-3) 유지보수, 관리비 : 102백만원 - 8.5백만원 × 12개월 (1-4) 상담원 재교육 : 9백만원 - 1백만원 × 9회 (1-5) 1381 정보센터 이용유도 및 활성화 : 32백만원 - 10.6732백만원 × 3건	969	(1)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개선 : 934백만원 (1-1) 인건비 보조 : 720백만원 - 16명 × 45백만원 (1-2) 대면상담 전문가 수당 : 20백만원 - 0.25백만원 × 140회 (1-3) 유지보수, 관리비 : 102백만원 - 8.5백만원 × 12개월 (1-4) 시스템 개선 : 51백만원 - 51백만원 × 1식 (1-5) 상담원 재교육 : 9백만원 - 1백만원 × 9회 (1-6) 1381 정보센터 이용유도 및 활성화 : 32백만원 - 10.6732백만원 × 3건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15백만원		(2)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15백만원
	(2-1) 인증제도 실태조사 : 3.5백만원 - 0.97백만원 x 2명 x 18회		(2-1) 인증제도 실태조사 : 3.5백만원 - 0.97백만원 x 2명 x 18회
	(2-2) 인증제도 혁신 범부처 회의 : 11.5백만원 - 30천원 x 25명 x 15회		(2-2) 인증제도 혁신 범부처 회의 : 11.5백만원 - 30천원 x 25명 x 15회
	(3)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20백만원 - 20백만원 x 1건		(3)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20백만원 - 20백만원 x 1건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381인증표준정보 센터 상담건 (단위: 건)	목표	67,326	63,783	64,023	-	-	센터개소 이후의 실적추이를 감안 하여 목표치 산출	1381인증표준정보 센터 온·오프라인 상담 건수 합계	1381인증표준정 보센터 통계
	실적	57,024	51,726	53,116	-	-			
	달성도	84.7	81.1	82.9	-	-			
1381인증표준정보 센터 상담 만족도 (단위: 점)	목표	-	-	-	75	75	만족에 해당하는 점수인 75점으로 목표치 산출	만족도 조사 점수 (100점 만점 기준 으로 만족도 측정)	1381인증표준 정보센터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①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 유튜브 스트리밍, 포털사이트, 산업단지 승강기, KTX 역사 광고 추진 ②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 - 안정적 서비스 제공 환경을 위해 노후 전산 인프라 고도화 작업 추진 - 이용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챗봇 상담 도입 추진(카카오픈플러스)
2023	①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 유튜브 스트리밍, 포털사이트, 대형디지털 전광판, 지하철 역사 광고 추진 ②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 - 서비스 제공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전산 인프라 고도화 작업 추진 - KC인증 관련 인터넷 상담 자료집 제작
2024	①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 유튜브 스트리밍, 포털사이트, 버스 외부 광고 추진 ②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 - 이용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챗봇 상담 활성화 추진 - KC인증 관련 인터넷 상담 자료집 배포
2025	①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 유튜브 스트리밍, 포털사이트, 버스 외부 광고 추진 ②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시스템 보안 강화 추진 - 장비, 소프트웨어, 방화벽 등 최신 업데이트 추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 및 개선을 통해 인증·표준 관련 정보취득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국내 시장출시에 필요한 국내 인증 관련 정보와 수출지원을 위한 해외인증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
- 특히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 선호 추세에 따라 다양한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 도입 등 온라인 서비스를 고도화함으로써 이용자 접근성 제고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	국가기술표준원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② 보조금 교부 ↓	국가기술표준원	공모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③ 사업 수행 ↓	보 조 사 업 자	각 내역사업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④ 사업 점검 및 평가	국가기술표준원	사업 실적 및 집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947	758	969	1,135	1,169	
2025~2029		758	969	1,089	1,122	1,15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국내 시장출시 및 해외수출 관련 인증표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의 서비스 고도화 추진 및 對기업 인지도 제고
 - 안정적인 상담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시스템 노후 장비 단계적 교체
 - KC인증 관련 인터넷 상담 자료의 D/B구축(자료집 제작)을 통한 고객의 활용성 증대
 -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인지도 향상
 - 전화상담 뿐만 아니라 비대면 상담서비스(챗봇, 인터넷 상담 등) 활성화 유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보조사업 연장평가(24년)

- 지원방식을 다변화하고 있지만 소비자 편의성 높은 전화상담 비중이 높은 편
- 수요자 측면의 성과측정방식 개선이 필요하며, 시대 변화에 맞게 정보전달 방법을 다원화·고도화할 필요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052	-	1,052	-	-	-	1,052	1,051	99.9	99.9	-	1
2023	1052	-	1052	-	-	-	1052	1,051	99.9	99.9	-	1
2024	947	-	947	-	-	-	947	946	99.9	99.9	-	1
2025	758	-	758	-	-	-	758	755	99.6	99.6	-	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944	944	944	944	-	944	944	-	-	100
2023	944	944	944	944	-	944	944	-	-	100
2024	851	851	851	851	-	851	851	-	-	100
2025	691	691	691	691	-	691	691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1백만원, 학술연구용역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
2023	- 불용 (1백만원, 학술연구용역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
2024	- 불용 (1백만원, 학술연구용역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
2025	- 불용 (3백만원,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참고 1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 배 경

○ 국내·외 다양한 인증·표준 운용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 해소 필요

* 대부분 기업이 제품·품목·국가별 인증 및 획득절차 정보가 가장 필요 ('136 한국무역협회)

- (국외) 선진국은 환경보호·보건안전 등을 이유로, 신흥 개도국은 경제 성장 지원 등을 위해 기술규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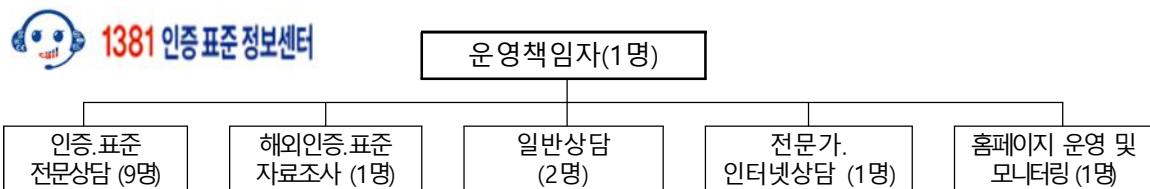
* TBT 통보 건수 지속 증가 : ('15년) 1,988건 → ('24년) 4,079건

- (국내) 품질,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각 부처 및 민간에서 다양한 인증제도 운용 중

* 총 512개 인증제도 운영(법정의무 98개, 법정임의 149개, 지자체 209개, 민간 56개)

□ 사업내용

○ (목적) 기업의 제품 출시 또는 수출시 필요한 국가별·품목별 맞춤형 통합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원활한 시장 진출 지원



○ (서비스 고도화) 전화·인터넷·화상 상담, 온라인 정보제공 등으로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문가 대면상담 등으로 심층 서비스 제공

* [추진경과] 인터넷 상담·정보제공(18), 전문가대면상담(18), 화상상담(21), 신기술·신제품 Help Desk(22)

□ 추진성과

○ '24년 상담 50,982건(207건/일), 페이지뷰 268,533회(735회/일)

* 개소이후('14.3월~) 누적 : 전화상담(555,976건), 인터넷상담(16,044건), 전문가 대면 상담(1,101건), 해외인증자료조사(1,889건)

** 전기·전자 50%, 생활·어린이 39%, 화학·화장품·식품 2%, 기계·자동차 1%, 기타 8%

□ 사례1 - 제품 통관 후 바이어 상담 진행, 수출 진행

- (기업개요) 리OOO사는 헤어샴푸, 헤어에센스 미국 수출을 위해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하고자 함.
- (기업애로) 미국 수출 상담을 위해 바이어에 샘플(무상)을 보내려고 하였음. 운송사를 통해 미국 통관시 FDA인증 번호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당시 신제품이라 FDA 인증이 없는 상태였음.
- (지원사항) 전문가용으로 살롱이나 스파를 통해서만 유통되는 제품이거나 교육용 (institutional use), 혹은 무료샘플이나 호텔 편의용품(amenities)의 경우 제품의 라벨링 (성분표시, 사용법, 경고문구 등) 규제에서 면제되나 돈을 받고 일반 소비자에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함. 이에 따라 미국 세관 통관 시 무료샘플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안내하였으며 통관은 세관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품 발송 시 제품의 용도와 무료 샘플임을 눈에 띄게 표시하고 해당제품의 정보를 포함한 인보이스를 동봉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함.
- (지원성과) 제품 통관하여 미국 바이어와 상담 진행 중이며, 수출 타진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 지원 센터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신청 준비 중에 있음. 사업 신청 예정

□ 사례2 - 1381 제공 정보로 유관기관과 협력,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신청 예정

- (기업개요) M사는 일본으로 육아 용품인 유모차와 아기띠를 수출하고자 하였음.
- (기업애로) 일본에는 우리나라의[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KC인증과 같이 어린이/유아용 제품 전반에 적용되는 강제 규제가 없어 일본 내 판매 촉진을 위해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음
- (지원사항) 일본 제품안전협회에서 부여하는 SG(Safe Goods) 마크에서 유모차와 아기띠가 대상임을 안내하고 임의인증으로써 제조자가 인증 획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일본 내 소비자의 인지도 및 신뢰도가 높은 인증임을 고려하여 판매 촉진에 유리함을 안내. 또한, SG마크 획득 기준과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경로를 첨부하였음. 하지만 유아용품의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인증기관이 부재하며 기업 내 해당 언어에 대한 인력이 없어 직접 인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 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신청을 안내.
- (지원성과) S-Mark는 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으로 2022년 1차 참여기업 모집에 신청하여 선정 시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고 인증 및 시험비용 등을 지원받아 수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 외에도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교육 과정 등을 1381로부터 안내받아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에도 수출을 확대할 예정임.

사 업 명						
(14)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 (3732-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07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생태계조성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김진준		김용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043-870-5450		043-870-5455
	사업시행주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안전기반팀	이준행 팀장	070-5223-1434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생태계조성	1,543	1,247	1,247	1,272	1,272	25	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43	1,543	1,543 [1529.5]	-	13.5	1,247	1,247	1,247 [1,240]	1,247	1,247 [1,240]	-	7	1,272	
·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지원	787	787	787 [773.5]	-	13.5	601	601	601 [594]	601	601 [594]	-	7	626	
·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 역량강화	468	468	468 [468]	-	-	358	358	358 [358]	358	358 [358]	-	-	358	
· 어 리 이 제 품 안 전 교육프로그램운영	288	288	288 [288]	-	-	288	288	288 [288]	288	288 [288]	-	-	288	
○ 비목별 분류(합계)	1,543	1,543	1,543 [1529.5]	-	13.5	1,247	1,247	1,247 [1,240]	1,247	1,247 [1,240]	-	7	1,272	
· 일반수용비(210-01)	10	10	10 [10]	-	-	10	10	10 [10]	10	10 [10]	-	-	10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746	746	746 [746]	-	-	636	636	636 [636]	636	636 [636]	-	-	636	
· 민 간 위 탁 사 업 비 (320-02)	787	787	787 [773.5]	-	13.5	601	601	601 [594]	601	601 [594]	-	7	62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543	1,543	1,543 [1529.5]	-	13.5	1,247	1,247	1,247 [1,240]	1,247	1,247 [1,240]	-	7	1,272	
·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	787	787	787 [773.5]	-	-	601	601	601 [594]	601	601 [594]	-	-	626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787	787	787 [773.5]	-	13.5	601	601	601 [594]	601	601 [594]	-	7	626	
·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역량강화	468	468	468 [468]	-	-	358	358	358 [358]	358	358 [358]	-	-	358	
- 민간경상보조 (320-01)	468	468	468 [468]	-	-	358	358	358 [358]	358	358 [358]	-	-	358	
· 어린이제품 안전 교육프로그램운영	288	288	288 [288]	-	-	288	288	288 [288]	288	288 [288]	-	-	288	
- 일반수용비 (210-01)	10	10	10 [10]	-	-	10	10	10 [10]	10	10 [10]	-	-	10	
- 민간경상보조 (320-01)	278	278	278 [278]	-	-	278	278	278 [278]	278	278 [278]	-	-	27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의 건강을 유지·증진
-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 강화)** 어린이제품에 대한 선제적 유해성 검증 분석을 통한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통해 제품안전확보 역량을 강화
 -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신규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유해성을 검증·분석하여 안전관리 방안 도출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어린이제품 안전교육을 통해 범국민적 안전의식 고취
 - 안전교육 선도학교: 유치원·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제품안전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 선도학교를 지정하여 학교별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안전교육: 권역별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사각지대 해소
 -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제품 관련 위해요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제품안전 체험시설 구축
-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 영세·소기업의 어린이제품 시험인증 부담을 완화하고 어린이제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 관련 기업의 시험인증 비용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 5, 27, 31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3.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예방 및 대책
4.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의 기준 및 실시에 관한 사항
5.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에 대한 규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제27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 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는 제품의 조사·감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분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장려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 제25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 제22조, 제25조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 확대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4. 6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15. 6월 시행)
- '16. 2월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공고
- '17년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 사업 시작
- '19. 11월 「제2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공고
- '22. 11월 「제3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공고
- '25. 1월 「제4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공고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1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70	1,857	1,543	1,247	1,272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사업 수혜자 : 어린이(13세 미만) 및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	보조	한국제품 안전관리원	358백만원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2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운영	보조	한국제품 안전관리원	278백만원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2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

: ('25) 601백만원 → ('26 예산) 626백만원, 25백만원 증액

- (요구) 안전한 어린이제품 제조·유통을 위해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이 가장 부담으로 체감하는 시험·인증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어린이제품 관련 시험인증 비용 및 컨설팅 지원 626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01 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601백만원 가.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 (601백만원) · 382개사 × 1,574천원 = 601,000천원	601 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626백만원 가.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 (626백만원) · 398개사 × 1,574천원 = 626,000천원

②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

: ('25) 358백만원 → ('26 예산) 358백만원

- (요구) 신규 유해물질 모니터링 등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 수행 필요에 따른 예산 요구
- (산출)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358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58 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10-01) : 358백만원 가.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358백만원) · 9개품목 × 40,000천원 = 358,000천원	358 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10-01) : 358백만원 가.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358백만원) · 9개품목 × 40,000천원 = 358,000천원

③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25) 288백만원 → ('26 예산) 288백만원

- (요구) 연구학교, 찾아가는 안전교육,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구축·유지를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안전교육 연구학교 135백만원
 찾아가는 안전교육 53백만원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10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88 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288백만원	288 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288백만원
	가. 안전교육 연구학교 (135백만원) • 24개교 × 5,700천원 = 135,000천원		가. 안전교육 연구학교 (135백만원) • 24개교 × 5,700천원 = 135,000천원
	나. 찾아가는 안전교육 (43백만원) • 18개교 × 3,000천원 = 53,000천원		나. 찾아가는 안전교육 (43백만원) • 18개교 × 3,000천원 = 53,000천원
	다.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100백만원) • 1개소 × 100,000천원 = 100,000천원		다.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100백만원) • 1개소 × 100,000천원 = 100,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0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0백만원
	가. 찾아가는 안전교육 물품 구입 (10백만원) • 20개교 × 500천원 = 10,000천원		가. 찾아가는 안전교육 물품 구입 (10백만원) • 20개교 × 500천원 = 1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추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참가자(단위: 명)	목표	5,500	6,100	6,710	7,381	8,119	매년 성과목표를 적극적으로 상향조정 해왔으며, 국민관심도 등을 고려, 전년 목표의 약 10%를 높인 최대 목표치 설정	Σ 연간 교육이수 인력	연구학교 및 찾아가는 안전교육 참여자 명단
	실적	10,006	15,091	15,737	14,321	-			
	달성도	181.9	247.4	234	194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어린이용 가구, 유아용 섬유제품, 바닥재 등 13개 품목에 대해 안전기준 적정성 검토 및 신규 유해물질 조사 등 진행 - (제조기업 지원)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시험·인증비용 지원(131개) - (안전교육교재 등 콘텐츠 개발) 국내·외 어린이 안전 교육 관련 콘텐츠 조사·분석을 통해 어린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교육 자료 개발(4건) -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강사 대상 교육 실시(272명) - (어린이제품 선도학교) 27개(유치원 24개, 초등학교 3개) 지정·운영(6,473명) - (찾아가는 제품안전교육) 55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방문교육 추진(3,533명) -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119안전체험관(부산)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후 구축
------	---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유아용 섬유제품(유아 침구류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추가), 어린이공동안전기준(간이시험방법 추가) 등 13개 품목에 대해 안전기준 적정성 검토 및 신규 유해물질 조사 등 진행 - (제조기업 지원)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시험·인증비용 지원(557개) - (안전교육교재 등 콘텐츠 개발) 국내·외 어린이 안전 교육 관련 콘텐츠 조사·분석을 통해 어린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교육 자료 개발(3건) -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강사 대상 교육 실시(196명) - (어린이제품 선도학교) 33개(유치원 26개, 초등학교 7개) 지정·운영(9,966명) - (찾아가는 제품안전교육) 69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방문교육 추진(5,125명) -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충북안전체험관(청주)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후 구축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유해성 검증이 필요한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개선을 위해 학용품, 유아용 침대 등 12개 품목에 대해 안전기준 적정성 검토 및 신규 유해물질 조사 등 진행 중 - (제조기업 지원)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시험·인증비용 지원(599개) -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강사 대상 교육 실시(292명) - (어린이제품 선도학교) 30개교(유치원 20개, 초등학교 10개) 지정·운영(10,587명) - (찾아가는 제품안전교육) 77개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방문교육 추진(5,150명) -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경남안전체험관(합천)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후 구축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유해성 검증이 필요한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개선을 위해 스노클링 마스크, 어린이용 물안경,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등 9개 품목에 대해 안전기준 적정성 검토 및 신규 유해물질 조사 등 진행 중 - (제조기업 지원)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시험·인증비용 지원(383개) -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강사 대상 교육 실시(641명) - (어린이제품 선도학교) 24개교(유치원 8개, 초등학교 16개) 지정·운영(10,156명) - (찾아가는 제품안전교육) 79개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방문교육 추진(4,165명) -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전북119안전체험관(임실)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후 구축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안전 기반 구축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품안전 사고의 선제적인 예방·관리로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조사·분석 등을 통한 선제적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린이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 및 제품안전 인식 함양
 - (어린이제품 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시험·인증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어린이제품 제조·유통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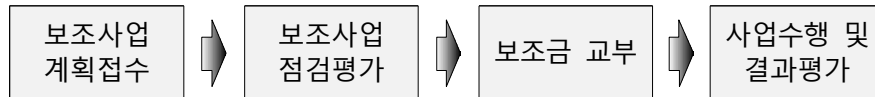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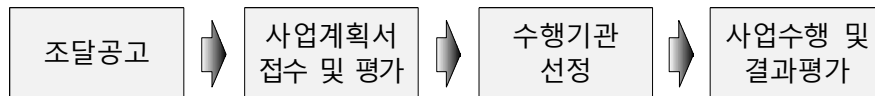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민간경상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제품안전기본법(제21조의2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을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추진



☐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민간위탁): 일반경쟁입찰(조달공고)을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543	1,247	1,272	5,130	5,925	
2025~2029		1,247	1,272	5,675	7,378	9,59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최근 지적사항 반드시 업데이트
- 지적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요망
- 보고서명·감사명 등 출처 기재

* 지적사항 말미에 괄호()로 기관명 및 출처 표시(예: (예결위,25예산), (예정처,24결산) 등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2년도)

- o 기업 수요대비 지원기업 비율이 저조(20% 수준)하여 예산 확대 필요(‘22년 결산)
→ (조치) ‘23년 예산 확보(신규내역, 787백만원)

(‘23년도)

- o 내역사업인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2억 8,800만원)은 교육 대상 및 체험시설 확대를 위해 11억 7,000만원 증액 필요(상임위, 24예산)
- o 내역사업인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7억 8,700만원)은 신청기업 수 대비 지원기업 수가 제한적이므로, 어린이제품 제조기업의 시험인증 비용 지원을 위해 3억 1,500만원 증액 필요(상임위, 24예산)
- o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을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치할 필요(상임위, 24예산)
- o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등 다양한 사업방식 개선계획을 마련할 필요(상임위, 24예산)

(‘25년도)

- o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이 미설치된 지역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설치(상임위, 24결산)
- o 산업부는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 사업을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 방안을 강구할 것 (상임위, 24결산)
- o 내역사업인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을 통해 영세·소규모 업체의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500백만원 증액 필요(상임위, 예결위, 26예산)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 강화
 - 어린이제품에 대한 신규 유해물질 모니터링, 선제적 유해성 검증·분석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통해 제품안전확보 역량을 강화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선제적 예방 및 제품안전 인식 함양
-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
 - 영세·소기업의 어린이제품 시험인증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어린이제품 보급을 위해 기업 수요를 반영한 시험인증 비용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1)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2) 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3) 그 외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평가 시행 결과
 - 보조사업연장평가('23년)
 - (평가결과) 사업방식변경
 - (결과요약) 현재의 사업내용으로 사업을 지속하기보다는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사업효과를 제고 할 수 있는 사업방식 개선 필요, 특히 융복합 신규 제품의 출시 등 새로운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 및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안전성 검증 강화 및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방안 필요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에 따른 전주기의 빈틈없는 어린이제품 안전 관리를 위한 동 사업 지속 확대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070	-	1,070	-	-	-	1,070	1,070	100	100	-	-
2023	1,857	-	1,857	-	-	-	1,857	1,843	99.2	99.2	-	14
2024	1,543	-	1,543	-	-	-	1,543	1529.5	99.1	99.1	-	13.5
2025	1,247	-	1,247	-	-	-	1,247	1,240	99.44	99.44	-	7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070	-	830	830	-	830	830	-	-	100
2023	1,857	-	830	830	-	830	830	-	-	100
2024	1,543	-	746	746	-	746	746	-	-	100
2025. 12월기준	1,247	-	636	636	-	636	636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불용액(14백만원) 발생 : 조달 낙찰차액(14백만원)
2024	- 불용액(13.5백만원) 발생 : 조달 낙찰차액(13.5백만원)
2025	- 불용액(7백만원) 발생 : 조달 낙찰차액(7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참고 2]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 사업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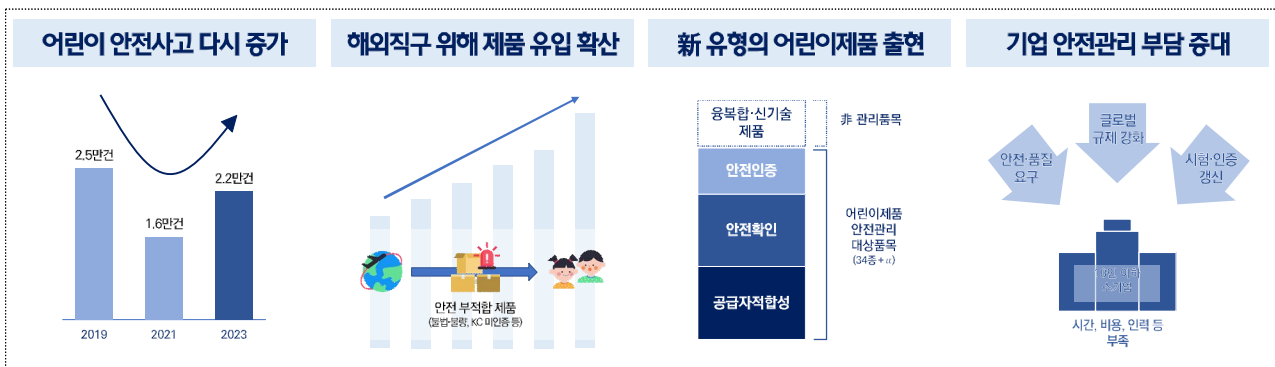
참고 1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5~'27)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현황

- (안전사고) 어린이제품 인증건수 대비 안전사고 건수 비율은 '19년 ~ '21년 감소하였으나, '22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
 - * ('20) 28.4% → ('21) 19.3% → ('22) 21.5% → ('23) 21.9%
-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해외직구 금액은 최근 4년 연평균('20~'23년) 897억원(전체 해외직구 금액의 약 1.6%)로 '17~'19년 평균 606억원 대비 약 43% 증가
 - 어린이제품 유통규모는 연 19.3조원('20~'23년 추정)으로 연평균 5.3% 성장
- (융복합·신기술)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이 다수 출현하여 어린이제품 안전에 새로운 위해 요인 증가
- (생태계) 어린이제품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부족* 및 개선을 요하는 인증제도 다수 존재

* 어린이제품 관련 기업은 대부분 영세기업으로 안전규제에 대한 인력·비용 등 부족



□ 제4차 기본계획 비전·목표

< 선제적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로 어린이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저감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안전관리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인증건수 대비 사고건수 비율 2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조사 연간 500건 이상 - 위해제품 공표 및 국내유입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기준 정비 (제·개정 10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친화기업 10개社 선정 - 어린이제품안전교육 로드맵 수립

□ 제4차 기본계획 주요내용 [4대 전략·9대 과제]

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 (어린이 제품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제도 고도화)

- 어린이와 성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관리 확대 및 가정 내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선)

- 안전관리 필요 신종 어린이제품(예: 야외운동기구 등)에 대해 신규 품목 지정 및 안전기준 부적합 처리기준 개선*

* 품목별·검사항목별 위해 정도를 재검토하여 「부적합시 처리기준」의 결함내용(최중·중·경결함)을 조정하고, 「부적합시 처리기준」 작성 가이드라인 개발

- 안전기준에 규정된 시험검사항목 중 안전과 관련이 낮은 항목은 완화·정비 및 기준이 상이한 일부 시험검사항목을 정비

②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안전관리 강화

○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 해외에서 직접 배송되는 어린이제품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성조사 실시·공표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근거 조항 마련하고, 위해제품 통관단계 차단

○ (국내에서의 안전한 어린이제품 유통환경 조성)

- 국내에서 유통되는 해외 리콜제품 모니터링 및 조치 강화와 온라인쇼핑몰 협의체 내 어린이제품 분과 신설 및 쇼핑몰 운영사 대상 제품안전관리 교육 확대
- KC미인증 구매대행 어린이제품 등 불법제품 안전관리 강화 및 어린이제품 안전 정보(Open API) 제공·활용 활성화

③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도입)

-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제·개정* 및 신규 위해요소에 대응한 안전관리 체계 개선

* 융복합 어린이제품(야외 운동기구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규 도입하고, 신기술 적용 어린이제품(자외선 이용 완구 등)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

○ (융복합·신기술 제품 대응을 위한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 신설)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內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를 신설, 안전 기준 관리를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운영

④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우수기업 지원)

- 제품 리스크평가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 및 보급, 사용자 교육 실시, 어린이제품 표시사항 자동생성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4개) 및 안전확인(16개) 품목에 대해 표시사항 및 주의사항 자동생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에 제공('25년~)
- 안전인증 시험검사주기 연장, 시험검사비용 우선지원 등 우대사항을 통해 우수 어린이제품 우수기업 발굴·포상 및 제도 활성화 추진

○ (기업 친화적 인증 기반 제도 개선)

- 안전확인신고(5년) 유효기간 폐지 및 어린이제품안전법 과태료를 전기생활용품 과태료와 동일 수준으로 개선
- KC인증 면제 절차 간소화 (「어린이제품안전법」 시행령 개정)
- 본품 이외 제품(편의제공 부분품)의 안전평가인증 단계적 확대 추진
- * 제품 케이스, 인쇄 띠지, 제품 보관 주머니 등 제품에 딸린 편의제공 부분품을 본품과 함께 인증이 진행되도록 업계에 홍보하여 단계적 유도
- 시험검사기관 숙련도 제고를 위해 시험·검사 일련의 절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하고, 시험검사방법의 일원화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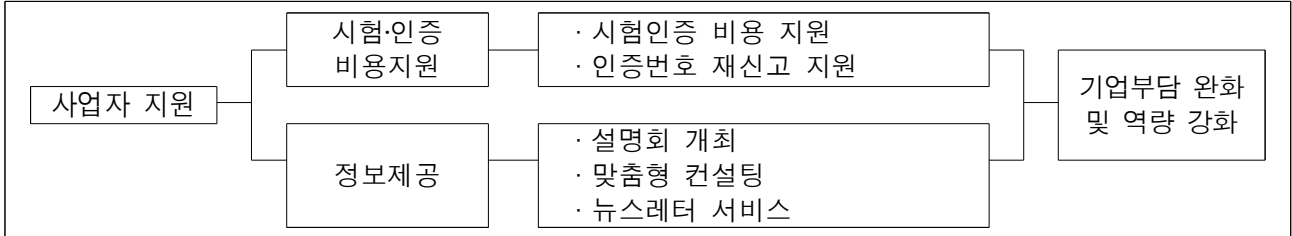
○ (어린이제품 안전인식 제고)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확대를 위한 체계 구축
- * 제품 위험요소를 체험할 수 있는 지역별 안전체험관 활용도 제고하고,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로드맵 수립하여 대국민 안전인식 확대
- 어린이제품의 개발·제조·유통 단계에 있는 관계자의 안전인식 제고
- * 시험·검사 항목이 많은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인증기준·인증절차 등 관련 정보 제공(제품안전 뉴스레터 발송) 추진

참고 2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 체계 >



□ 어린이제품 시험·인증 비용 지원

- (시험·인증 비용지원) 안전한 어린이제품 제조·유통을 위해 우리 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시험인증 비용 부담을 해소
 - * 어린이제품의 특성상 다품종 소량 제작 상품이 많고, 유행 주기가 짧아 제품의 시험·인증 비용이 기업 부담으로 작용

< 지원비용 >

구분	국내제조	국내제조 외
비용	최대 1.5백만원	최대 1백만원

- (인증번호 재신고 지원) 소비자의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어린이제품 대상으로 시험·인증 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제품안전 관리 유도
 - *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5년) 만료 예정으로 재신고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여 기존 인증번호 유지·사용 → 라벨 교체 등 비용 절감 효과

□ 어린이제품 시험·인증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 (설명회 개최) 어린이제품 사업자 대상으로 시험·인증 관련 법령·제도 안내, 품목별 안전기준 해설 등 정보공유를 위한 설명회 개최
- (컨설팅) 어린이제품 품목별 시험·인증 전문가와의 일대일 상담으로 안전하게 어린이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뉴스레터 제공) 어린이제품 관련 법령, 안전기준 제·개정사항 등 제품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뉴스레터 발송

사 업 명
(15)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 (3731-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2	국가기술표준원	-	110	117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적합성정책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8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법정계량 선진화 기반구축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적합성정책국	홍순파	김소미	최대현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0	043-870-5512	043-870-5515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법정계량선진화기반 구축	1509.04	1,161	1,161	1,157	1,157	△4	△0.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안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517	1,517	1509.04 [1509.04]	-	7.96	1,161	1,161	1,098.17 [1,098.17]	1,161	1,098.17 [1,098.17]	-	62.83	1,157
·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581.025	581.025	576.625 [576.625]	-	4.4	581.18	581.18	526.03 [526.03]	581.18	526.03 [526.03]	-	55.15	581.18
· 계량·측정 공 공데이터 활 용·지원	221	221	217.45 [217.45]	-	3.55	221	221	213.35 [213.35]	221	213.35 [213.35]	-	7.65	217
· 계량기·정량표시상 품 시장감독 및 사 후관리	714.975	714.975	714.965 [714.965]	-	0.01	358.82	358.82	358.79 [358.79]	358.82	358.79 [358.79]	-	0.03	358.82
○ 비목별 분류(합계)	1,517	1,517	1509.04 [1509.04]	-	7.96	1,161	1,161	1,098.17 [1,098.17]	1,161	1,098.17 [1,098.17]	-	62.83	1,157
일반수용비(210-01)	17.4	17.4	17.4 [17.4]	-	-	17.25	17.25	17.24 [17.24]	17.25	17.24 [17.24]	-	0.01	17.25
임차료(210-07)	7.51	7.51	7.51 [7.51]	-	-	8	8	8 [8]	8	8 [8]	-	-	8
시험연구비(210-13)	684.005	684.005	683.995 [683.995]	-	0.01	328	328	328 [328]	328	328 [328]	-	-	328
관리용역비(210-15)	176	176	172.45 [172.45]	-	3.55	176	176	172.45 [172.45]	176	172.45 [172.45]	-	3.55	176
국내여비(220-01)	13.57	13.57	13.57 [13.57]	-	-	13.57	13.57	13.55 [13.55]	13.57	13.55 [13.55]	-	0.02	13.57
국 외 업 무 여 비 (220-02)	15.57	15.57	13.42 [13.42]	-	2.15	15.57	15.57	15.52 [15.52]	15.57	15.52 [15.52]	-	0.05	15.57
사업추진비(240-01)	4.61	4.61	4.61 [4.61]	-	-	4.61	4.61	4.61 [4.61]	4.61	4.61 [4.61]	-	-	4.61
일반연구비(260-01)	91.34	91.34	89.09 [89.09]	-	2.25	91	91	82.67 [82.67]	91	82.67 [82.67]	-	8.33	91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506.995	506.995	506.995 [506.995]	-	-	-	-	-	-	-	-	-	-
민 간 위 탁 사 업 비 (320-02)	-	-	-	-	-	507	507	456.13 [456.13]	507	456.13 [456.13]	-	50.87	503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안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전년도 이월액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제외				
	당초	수정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517	1,517	1509.04 [1509.04]	-	7.96	1,161	1,161	1,098.17 [1,098.17]	1,161	1,098.17 [1,098.17]	-	62.83	1,157
·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581.025	581.025	576.625 [576.625]	-	4.4	581.18	581.18	526.03 [526.03]	581.18	526.03 [526.03]	-	55.15	581.18
-임차료(210-07)	7.51	7.51	7.51 [7.51]	-	-	8	8	8	8	8	-	-	8
- 국 외 업 무 여 비 (220-02)	15.57	15.57	13.42 [13.42]	-	2.15	15.57	15.57	15.52 [15.52]	15.57	15.52 [15.52]	-	0.05	15.57
- 사 업 추 진 비 (240-01)	4.61	4.61	4.61 [4.61]	-	-	4.61	4.61	4.61 [4.61]	4.61	4.61 [4.61]	-	-	4.61
- 일 반 연 구 비 (260-01)	91.34	91.34	89.09 [89.09]	-	2.25	91	91	82.67 [82.67]	91	82.67 [82.67]	-	8.33	91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461.995	461.995	461.995 [461.995]	-	-	-	-	-	-	-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462	462	415.23 [415.23]	462	415.23 [415.23]	-	46.77	462
·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221	221	217.45 [217.45]	-	3.55	221	221	213.35 [213.35]	221	213.35 [213.35]	-	7.65	217
- 관 리 용 역 비 (210-15)	176	176	172.45 [172.45]	-	3.55	176	176	172.45 [172.45]	176	172.45 [172.45]	-	3.55	176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45	45	45 [45]	-	-	-	-	-	-	-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45	45	40.9 [40.9]	45	40.9 [40.9]	-	4.1	41
· 계량기·정량표시 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714.975	714.975	714.965 [714.965]	-	0.01	358.82	358.82	358.79 [358.79]	358.82	358.79 [358.79]	-	0.03	358.82
- 일 반 수 용 비 (210-01)	17.4	17.4	17.4 [17.4]	-	-	17.25	17.25	17.24 [17.24]	17.25	17.24 [17.24]	-	0.01	17.25
- 시 험 연 구 비 (210-13)	684.005	684.005	683.995 [683.995]	-	0.01	328	328	328 [328]	328	328 [328]	-	-	328
- 국 내 여 비 (220-01)	13.57	13.57	13.57 [13.57]	-	-	13.57	13.57	13.55 [13.55]	13.57	13.55 [13.55]	-	0.02	13.5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 선진화된 법정계량제도의 관리·운영을 위한 기반 확충 및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생성·활용을 지원하여 공정상거래 질서 확립

-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계량기 기술기준·지침 개발, 계량공무원/사업자 교육, 불법계량기 신고제도 및 소비자감시원 운영,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와의 국제협력 등을 통한 법정 계량제도 관리
-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지자체, 검정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계량기 검사·단속 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계량기·정량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법정계량기(13종) 및 정량표시상품(27종)에 대한 시판품 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피해예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 6, 14, 41, 54, 57, 60, 61, 65조
- 제1조(목적)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정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 단위"라 한다)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형식승인) ①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1조(정량표시상품) ① 정량표시상품을 제조, 수입,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정량표시상품사업자"라 한다)는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성명 및 정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54조(소비자감시원)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계량관리를 위하여 계량에 관한 지식이 있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및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및 직원,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

자를 소비자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7조(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계량 산업 정책, 제도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업
 2. 계량 산업 관련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
 3. 계량 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사업
 4. 계량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
 5. 제60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업
 6.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기술기준 개발에 관한 사업
 7. 형식승인 및 검정 평가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계량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0조(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수출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외국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1조(계량정보의 종합관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량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기업의 신기술 계량기 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65조(한국계량측정협회) ①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계량 산업의 발전 및 측정의 정밀도 향상을 위한 지도, 조사, 통계관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계량·측정 산업의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
 3. 계량기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에 관한 사업
 5. 계량·측정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관련 단체와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업
 6. 계량기 사후관리 및 비법정단위 사용 단속 업무 지원에 관한 사업

7.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8. 그 밖에 계량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사업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계량에 관한 법률』은 국제단위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여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을 금지(1961년)
 - * 면적의 단위에 대하여 평(坪)단위는 1983년부터 사용을 금지
-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06.05)에 따라 법정단위 정착을 추진
 - '07년 7월부터 “평”, “돈”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사전 홍보 부족 및 부정적 여론 등으로 인해, 홍보·계도(경고) 위주로 추진
 - '10.6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 안내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게 「과태료 부과」를 병행 추진
- “계량제도 선진화 종합계획” 수립(장관/'12.16) : '12년부터 현장 중심의 홍보·계도와 국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불법제품 단속을 실시하고 우리나라 법정계량 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정계량선진화 추진
- 「계량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추진 및 시행('15.1.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9~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 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단위: 백만원)	1,386	1,886	1,517	1,161	1,15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계량기 사용 전국민 및 관련 기업, 유관기관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6년 예산 산출 내역 : 1,157백만원(△4백만원, 0.3% ↓)

-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25) 581.18백만 → ('26) 581.18백만(전년대비 동일)
 - * 정책·기술기준·표준·지침 개발: 91백만=4건×22.75백만
 - * 계량공무원 및 사업자 교육: 104백만=260명×0.4백만
 - * 불법계량기 신고 제도 운영: 90백만=37.5건×2.4백만
 - * 소비자 감시원제도 운영: 268백만=200명×1.34백만
 - * 국제법정계량기구 대응 및 국제협력 : 28.18백만
 - 국제회의 참석: 15.57백만(5회×3.114백만)
 - 국제회의 개최: 8백만(1회×8백만)
 - 간담회: 4.61백만(3회×10명×0.154백만)
-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25) 221백만 → ('26) 217백만(△4백만원, 1.8% ↓)
 - * 계량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76백만=1식×176백만
 - * 계량검사정보 사전알림서비스: 41백만=8,200건×5천원
- 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 ('25) 358.82백만 → ('26) 358.82백만(전년대비 동일)
 - *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 조사: 179.42백만(60종×0.9968백만×3개)
 - * 검정기관·자체검정사업자 사후관리: 2.135백만
 - 전문가 수당: 1.2백만(2명×0.15백만×2개 기관×2일)
 - 출장비: 0.935(2명×0.117백만×2개 기관×2일)
 - * 사용중인 계량기 오차검사: 28.685백만원
 - 전문가 수당: 16.05백만(4개 권역×0.1486백만×3명×9일)
 - 출장비: 12.635백만(4개 권역×0.117백만×3명×9일)
 - *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148.58백만(2,477품목×5천원×3개+2,477품목×45천원)
-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선진 법정 계량체계 확립 581.18	<p><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 581.18백만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기술기준·표준·지침 개발: 91백만 - 연구 및 조사 용역 : 91백만 (일반연구비)4건x22.75백만=91백만 · 지자체 계량공무원 및 사업자 교육: 104백만 - 교재 제작, 강사료, 임차료, 워크숍 개최 등 : 104백만 (민간위탁) : 260명x0.4백만=104백만 ·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제도 운영신고센터 운영비, 조사단 활동비 및 신고포상금 등: 90백만 (민간위탁) 37.5건x2.4백만=90백만 · 소비자감시원 운영: 268백만 - 감시원 수당, 교육, 운영비 등: 268백만 (민간위탁)200명x1.34백만원=268백만 · 국제법정계량기구 대응 및 국제협력 : 28.18백만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아시아태평양법정계량기구포럼 (APLMF) 등 국제회의 참석 : 15.57백만 (국외업무여비) 5회x3.114백만=15.57백만 - 일본, 중국 등 양자 협력 회의 개최: 8백만 (임차료) 1회x8백만=8백만 - 국제기구 대응 등 간담회 개최 : 4.61백만 (사업추진비) 3회x10명x0.153백만원=4.61백만 	선진 법정 계량체계 확립 581.18	<p><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 581.18백만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기술기준·표준·지침 개발: 91백만 - 연구 및 조사 용역 : 91백만 (일반연구비)4건x22.75백만=91백만 · 지자체 계량공무원 및 사업자 교육: 104백만 - 교재 제작, 강사료, 임차료, 워크숍 개최 등 : 104백만 (민간위탁) : 260명x0.4백만=104백만 ·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제도 운영신고센터 운영비, 조사단 활동비 및 신고포상금 등: 90백만 (민간위탁) 37.5건x2.4백만=90백만 · 소비자감시원 운영: 268백만 - 감시원 수당, 교육, 운영비 등: 268백만 (민간위탁)200명x1.34백만원=268백만 · 국제법정계량기구 대응 및 국제협력 : 28.18백만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아시아태평양법정계량기구포럼 (APLMF) 등 국제회의 참석 : 15.57백만 (국외업무여비) 5회x3.114백만=15.57백만 - 일본, 중국 등 양자 협력 회의 개최: 8백만 (임차료) 1회x8백만=8백만 - 국제기구 대응 등 간담회 개최 : 4.61백만 (사업추진비) 3회x10명x0.153백만원=4.61백만
계량측정 공공 데이터 활용지원 221	<p>< 계량 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 221백만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량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DB구축: 176백만 (관리용역비)1식x176백만=176백만 · 계량검사정보 사전알림 서비스: 45백만 (민간위탁) 9,000건x5천원=45백만 	계량측정 공공 데이터 활용지원 217	<p>< 계량 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 217백만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량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DB구축: 176백만 (관리용역비)1식x176백만=176백만 · 계량검사정보 사전알림 서비스: 41백만 (민간위탁) 8,200건x5천원=41백만
계량기· 정량 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358.82	<p>< 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358.82백만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승인계량기 시판품조사: 179.42백만 - 시료구입 및 시험수수료: 179.42백만 (시험연구비) 60종x0.997백만x3개 ·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 사업자 사후관리: 2.135백만 - 전문가 수당: 1.2백만 (일반수용비) 2명x0.15백만x2개기관x2일 - 출장비: 0.935백만 (국내여비) 2명x0.117백만x2개기관x2일=0.935백만 · 사용중인 검정계량기 오차검사: 28.685백만원 - 전문가 수당: 16.05백만원 (일반수용비) 4개권역x0.1486백만원x3명x9일=16.05백만원 - 출장비: 12.635백만 (국내여비) 4개권역x0.117백만x3명x9일=12.635백만 ·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148.58백만 - 시료구입 및 시험수수료: 148.58백만 (시험연구비) 2,477품목x5천원x3개+2,477품목x45천원=148.58백만 	계량기· 정량 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358.82	<p>< 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358.82백만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승인계량기 시판품조사: 179.42백만 - 시료구입 및 시험수수료: 179.42백만 (시험연구비) 60종x0.9968백만x3개 ·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 사업자 사후관리: 2.135백만 - 전문가 수당: 1.2백만 (일반수용비) 2명x0.15백만x2개기관x2일 - 출장비: 0.935백만 (국내여비) 2명x0.117백만x2개기관x2일=0.935백만 · 사용중인 검정계량기 오차검사: 28.685백만원 - 전문가 수당: 16.05백만원 (일반수용비) 4개권역x0.1486백만원x3명x9일=16.05백만원 - 출장비: 12.635백만 (국내여비) 4개권역x0.117백만x3명x9일=12.635백만 ·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148.58백만 - 시료구입 및 시험수수료: 148.58백만 (시험연구비) 2,476품목x5천원x3개+2,476품목x45천원=148.58백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계량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건수 (단위: 건) / < '26년 신규 > 불법신고센터 민원 처리건수(건)	목표	150,000	160,000	165,000	170,000	205건	최근 3년(22~24*) 실적의 평균의 3% 증가율 반영 * 22년: 158건, 23년: 148건, 23년: 291건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센터 접수후 처리 건수	불법·불량계량기 신고센터 운영보고서
	실적	181,662	164,259	170,389	210,000	-			
	달성도	121%	103%	103%	124%	-			
계량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단위: 점) / < '26년 신규 > 법정계량 국민인식 변화율 (%)	목표	82.5	84.0	84.4	84.5	74.2%	최근 3년(22~24*) 법정계량 인식 제고율 평균의 3% 증가율 반영 * 22년: 68.6%, 23년: 71%, 24년: 76.6%	연도별 목표치= 최근 3년 법정계량 인식제고율* 평균 실적 × 1.03 *법정단위 사용 계량기 재검정 등에 대한 소 비자감시원 모니터 링을 통해 계량제도 에 대한 국민의 인 식이 달라진 비율 (=B/A × 100%) A: 1차 모니터링 시, 비법정단위 사용, 재검정 유효기간을 초과한 계량기 사용자(2차 모니 터링 대상) B: 2차 모니터링 시, 계도사항을 이행 했거나, 이행할 의사가 있는 계 량기 사용자 수	소비자감시원 모니터링 활동 운영보고서
	실적	84.0	85.9	85	87.4	-			
	달성도	102%	103%	101%	103%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계량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 개발 • 스마트전력량계 프로토콜 권고안 개발 등 연구용역 3과제 수행 완료('22.4~11월) ☐ 소비자감시원 운영 및 사전알림 서비스 • 22개 지역 200여명 활동으로 판매업소 5,000개소 1900여 제품 수검확인 • 정기검사 안내문 배포(지자체 및 시장상인회 등 1,049개소), 재검정 대상 사업자 SMS 알림 ☐ 사후관리 •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 접수/처리 : 158건/행정처분35건(고발 17건, 과태료 11건, 사용중지 7건) •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조사 : 전력량계, 적산열량계 등 등 4개 품목 25개 모델 • 정량표시상품 시판품조사 실시(시중 유통상품 702개 제품)
2023	☐ 계량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 개발 • OIML Digitalisation 추진에 따른 현황 파악 및 국내 디지털 계량측정기술 대응 방안 마련 등 연구용역 4개 과제 수행 ('23.4~10월)

	☐ 법정단위 제도·홍보관련 : 대학생 법정단위 홍보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조사 : 전력량계, 적산열량계 등 등 개 5개 품목 27개 모델 • 정량표시상품 시판품조사 실시(시중 유통상품 700여개 제품)
2024	☐ 계량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계량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및 행정규칙 정비 방안 연구 등 연구용역 2개* 과제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법정계량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및 행정규칙 정비 방안 연구, ②국가 등록문화재 보존관리, 전시환경 개선 및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 ☐ 법정단위 제도·홍보관련 : 대학생 법정단위 홍보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전(어린이포스터, 유튜브쇼츠, 수기) 홍보(23,341건) 및 서포터즈(20명) 선발 • 온·오프라인 법정단위 모니터링(149건), 오프라인 계량기 모니터링(8,948건) ☐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 접수/처리 : 324건/행정처분16건(고발 4건, 과태료 10건, 사용중지 2건) • 정량표시상품 시판품조사 실시(시중 유통상품 식품류, 위생용품 등 27종 천여 개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27종 총 1,030개 대상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완료 •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조사 : 계량기 품목별 성장추세, 민원동향 및 그간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품목, 관리대상 등을 고려하여 계량기 4개품목 35업체 40형식 조사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수도계량기(9업체10형식), ▲전기차충전기(4업체4형식), ▲전력량계(19업체23형식), ▲저울(3업체3형식)
2025	☐ 계량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개정(안) 활용 및 제도 개선사항 도출 등을 위한 연구용역 3개* 과제 수행(25.0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가정용 저울 표시사항 개선방안 마련, ②calibration(교정)과 industrial metrology(산업 계량) 산업의 발전·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③법정단위 관리 개선을 위한 현황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 법정단위 제도·홍보관련 : 소비자 감시원 및 대학생 홍보 서포터즈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감시원(22개 지역 200여명)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4,410 개소, 전통시장 비법정 단위 사용업소 8,820 개소 제도 및 홍보 활동 실시 - 대학생 서포터즈 4기(20명) 선발하여 법정단위 관련 SNS, 현장 홍보 활동 실시 ☐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접수/처리 : 363건/347건, 행정조치 261건 : 고발 1건, 과태료 15건, 사용중지 30건, 판매중지 215건 - 온라인 유통 불법저울 선제적 단속 : 46,600건 모니터링, 1069건(2.3%) 판매중지 • 정량표시상품 시판품조사 : 고가 또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27개 품목, 총 1,003개 시중 유통 정량상품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조사 : 불법계량기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유통 중인 계량기* (2개품목 14업체 14형식)에 대한 시판품 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미터(10업체10형식), 비자동저울(4업체4형식)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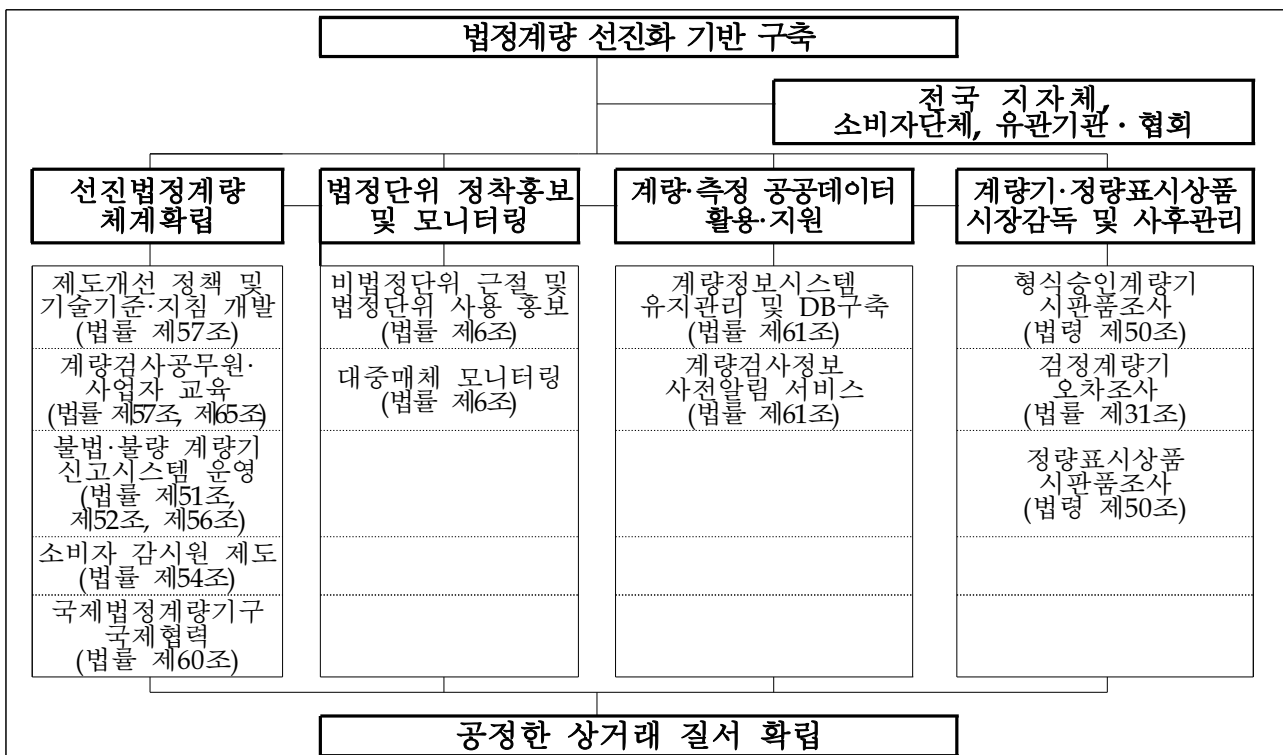
- 불법·불량 계량기 단속 강화: 크롤링 기반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유통 감시 확대를 통해 5만 건 이상 모니터링, 불법유통율을 10%미만 목표로 선제적 단속 시행
- 불법불량계량기 신고센터 운영 내실화 :연간 신고·처리 건수 200건 이상 안정적 달성, 행정처분(고발·과태료·사용중지) 20건 이상 이행
- 정량표시상품 관리 강화 : 연간 1,000개 이상 시판품 조사 수행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

-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 조사 확대: 신기술 계량기(디지털 계량기, 전기차 충전기 등) 포함 연간 20개 업체·20형식 이상 조사
- 법정단위 사용 확산 및 홍보효과 : 소비자 감시원·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대국민 홍보·교육을 통한 법정단위 국민인식변화율을 74% 이상 달성
- 제도개선 연구 성과 확산 : 연간 2개 이상 연구용역 수행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법령·기술기준 개선 반영으로 행정 효율성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509.04	1,161	1,752	2,540	1,932	
2025~2029		1,161	1,382	2,093	2,005	2,4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국제무역 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법정계량제도 운영

- 전세계 나라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값을 결정하는 체계의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법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 법정계량기를 통한 국내 상거래 규모(계량기 사용 산업 총 매출액)는 약 1,384조원이며, 이중 오차가 1% 발생 할 경우 13조원의 불량거래가 발생하므로, 모든 경제활동의 바탕이 되는 기반 산업으로 지속적인 사업 운영 확대 필요

< 계량기 사용 상거래 규모 >

구분	계량기	'21년 거래금액 (백만 원)	'22년 거래금액 (백만 원)	출처
상품	비자동저울	1,057,971,304	1,192,703,230	통계청(제조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도·소매업)
수돗물	수도미터	4,096,525	4,189,677	한국상하수도협회(상수도통계)
가스	가스미터	15,885,141	28,782,972	한국도시가스협회(연도별 공급량) 추정
유류	주유기	51,400,483	64,020,513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
차량용 LPG	LPG미터	4,182,155	4,856,310	석유공사 석유정보망(petronet.co.kr)
열	적산열량계	4,971,925	5,987,895	한국에너지공단(집단에너지사업 편람)
전력	전력량계	51,020,800	84,376,739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epsiskpx.or.kr)
소계		1,189,528,333	1,384,917,336	전년 대비 9.39% 증가

* '22년 법정계량산업 기초통계조사 참고('23년 수행, 한국계량측정협회)



☐ 불법·불량 계량기 사후관리 대응체계 강화

- 시판품 조사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판품 조사 부적합 계량기의 철저한 제조사 및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현장조사단 운영을 확대

☐ 비법정단위사용 거래관행 변화를 위해 국가주도의 국민 인식전환을 지속 추진

- 비법정 단위사용 홍보를 확대하고, 고의성일 경우만 단속을 추진했던 '인치', '파운드' 등 국제적인 비법정단위에 대해서도 사용금지 홍보 및 단속 정책을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보조사업 연장평가 ('24.)

- (평가결과) ❶보조사업을 민간위탁사업으로 비목전환 필요, ❷공무원 및 사업자 교육을 비롯한 내역사업이 국가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으로의 비목전환 필요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386	-	1,386	-	1,386	1304.08	94.09	94.09	-	81.92
2023	1,886	-	1,886	-	1,886	1849	98.03	98.03	-	36.89
2024	1,517	-	1,517	-	1,517	1509.04	99.47	99.47	-	7.96
2025	1,161	-	1,161	-	1,161	1098.17	94.60	94.60	-	62.8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2	540	540	540	540	-	540	540	-	-	100
2023	544	544	544	544	-	544	544	-	-	100
2024	506.995	506.995	506.995	506.995	-	506.995	506.995		-	100
2025	보조사업의 민간위탁사업으로 비목전환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출장 및 행사 취소(27.9백만원), 낙찰 차액 등의 집행 잔액(27.5백만원)
2023	- 불용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출장 및 행사 취소(24.6백만원), 낙찰 차액 등의 집행 잔액(56.55백만원)
2024	- 불용 사유 : 용역 낙찰 차액 등의 집행 잔액(36.89백만원)
2025	- 불용 사유 : 용역 낙찰 차액 등의 집행 잔액(62.83백만원)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025.11.18)	법정계량선진 화기반구축 (3731-308)	220-01	2	법정계량선진 화기반구축 (3731-308)	220-02	국외여비 부족
조정 (2025.12.18)	법정계량선진 화기반구축 (3731-308)	220-01	2.2	법정계량선진 화기반구축 (3731-308)	220-01	지출 착오로 발생한 잔여액을 국내여비로 재조정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계량에 관한 법률』 요약

- 계량은 경제활동의 근간으로써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 모든 나라에서 법제화하고 있음



< 계량에 관한 법률 구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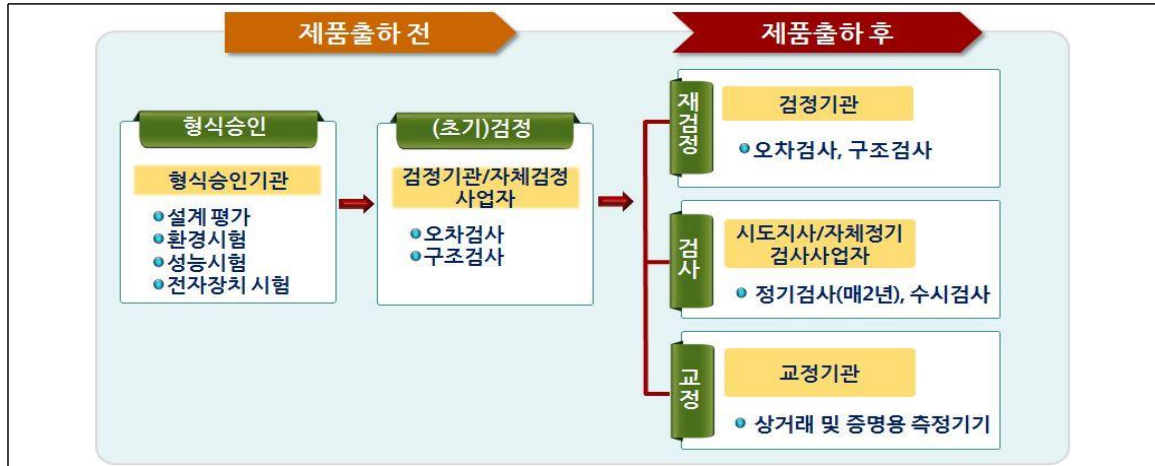
- ① **(법정단위)** 상거래 기본수단으로 7개 기본단위* 등의 법정단위를 규정하고, 상거래 및 증명에서 비법정단위 사용을 금지

* m(길이), kg(질량), s(시간), K(온도), mol(물질량), A(전류), cd(광도)

- ② **(법정계량기)**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값의 오차관리가 필요한 계량기를 법으로 정하여, 사전관리(형식승인·검정) 및 사후관리(재검정·정기검사) 의무화

<법정계량기 13종>





< 법정계량기 관리 체계 >

- ③ (정량표시상품) 포장 개봉없이 실제량 확인이 어려운 상품을 법으로 정하여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

* 곡류, 과자류, 육류, 유제품, 음료 및 주류, 위생용품, 생활용품 등 27종



참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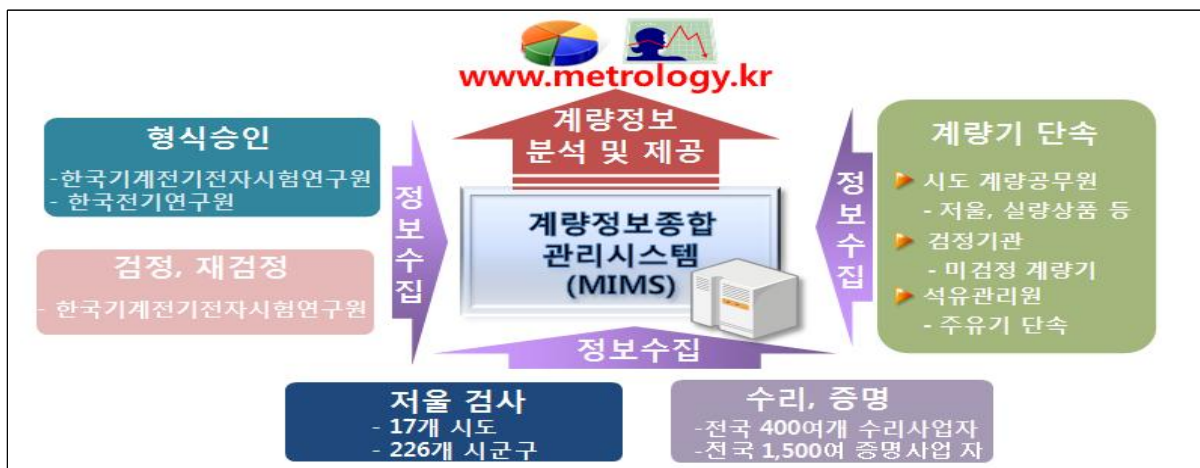
계량정보시스템 현황

- **(배경)** 전국 지자체 및 시험기관 등 이해관계자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계량기 시험·검사·단속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계량업무 처리의 체계화

* 2개의 형식승인, 1개의 검정기관,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등에서 계량 관련 정보가 전자·비전자문서 형태로 연간 약 900만건 이상 발생

Before	Af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체계화 계량업무처리 · 이해관계자들간의 정보단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체계화 및 계량기의 생애주기 관리체계* 마련 · 이해관계자들간 정보 공유

* “최초시험(형식승인)→검정→정기검사(재검정)→폐기”에 대한 추적·관리가 가능



< 계량정보시스템 개념도 >

- **(법정계량기 관리)** 계량정보시스템(www.metrology.kr)을 통해 승인 및 검정·재검정 등 시험 진행상황과 최종승인 여부 등 계량기 이력정보의 관리 및 공유

* 시스템의 일평균 이용건수: '21(7,624건)→'22(181,662건)→'23(164,259건)→'24(170,389건)

- **(수입계량기 관리)** 법률로 규정된 수입계량기 형식승인·검정 여부가 통관 단계에서 관리되도록 계량정보시스템과 전자통관시스템(관세청)을 연계
- **(사전알람)** 계량기 사용자에게 재검정·정기검사 일정 알람을 제공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Métrologie Légale)

- (설립목적) 계량기의 국제적 통일로 무역장벽의 해소를 위해, 1955년 24개국이 참가한 프랑스 파리에서 OIML 협약 체결
 - ※ OIML 협약: Convention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
- 회원국 현황('24년 기준)
 - 정회원국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63개국, 준회원국은 필리핀, 이란, 북한, 우크라이나 등 64개국
 - 우리나라는 법정계량제도의 국제적 통일을 위해 1978년 가입
- (주요활동) 회원국 간 법정계량제도의 통일을 위한 법·제도·기술관련 국제기준 제정 및 국제상호인정제도 운영
 - 상거래, 안전, 보건 및 환경 분야에서 소비자 등 일반국민의 보호를 위한 법정계량제도 규제 및 개발도상국의 법정계량기관을 지원 등

□ 아태 법정계량 포럼(APLMF, Asia-Pacific Legal Metrology Forum)

- (설립목적)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국가의 정부 간 회의로, 회원국 간 법정계량제도의 국제적 조화로 기술장벽 해소 및 국제교역 촉진을 위해 1994년 설립
- 회원국 현황('24년 기준)
 - 정회원국: 20개국(한국, 호주, 캄보디아, 캐나다,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북한,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아,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
 - 준회원국: 6개국(부르나이,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라오스)
- (주요활동) 아태 지역 내의 법정계량기관들 사이의 상호 신뢰 유지 및 개발 / 법정계량분야에서 무역에 대한 기술 및 행정 장벽 제거 등

□ 한·일 계량협력위원회

- (배 경) 1975년 양국의 계량측정분야 상호 기술협력을 위해 「한·일 계량 계측표준협력위원회」를 구축, 이후 2016년 법정계량중심의 「한·일 법정계량협력위원회」로 전환하여 개최
- (추진경위) 한일과학기술장관회담에서 위원회 설립 합의('75.8월) / (韓) 공진청 국립공업시험원—(日)공업기술원 계량연구소간 회의('76~' 00) / (韓) 산업부 기술표준원—(日)계량표준종합센터간 회의('01~현재)
- (주요활동) 상설 대화기구로 계량협력위원회를 구축하여, 계량 및 기술 정보교환 등 상호협력, 계량 기술 및 법규 등 양국 관심사항 논의

* 개최방식 : 매년 하반기 짝수년은 우리나라 홀수년은 일본에서 개최

□ 한·중 계량협력위원회

- (배 경)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역할 확대, 양국 간 계량기 교역 증대로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등 법정계량분야의 협력 채널 필요에 따라, 2016년 한중법정계량협력 양해각서 체결
- (추진경위) 산업통상부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간한중 계량협력 양해각서 체결하고, 제1회 한중 법정계량협력위원회 회의 개최('16.3월) / (韓)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中)시장관리감독총국(SAMR)간 회의(' 18~현재)
- (주요활동) 계량 및 기술 정보교환 및 R&D 공동 수행, 국제 및 지역별 기구에서의 상호협력 등을 도모

* 개최방식 : 매년 상반기 홀수년은 우리나라 짝수년은 중국에서 개최

참고 4

2026년 계량측정제도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6년 중점 추진 목표

- ▶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계량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 ▶ 미래 모빌리티 기술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및 계량제도 기반 조성
- ▶ 초격차 계량 기술개발을 위한 신규 R&D 예산확보 추진
- ▶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 차단 등 면밀한 사후관리를 통한 공정거래 확립

세부 추진계획

1 법정계량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 ① 계량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법령 개정
- ② 계량기 전주기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2 국제협력 활동 강화 및 국제 표준화 대응

- ③ 전기차 충전기 국내 기술기준 등 정책 홍보 및 국제 표준화 추진

3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계량 기술 변화 대응

- ④ 전기차 충전기(전력량계 포함) 기술기준 개정 추진
- ⑤ 수소차 충전기 법정 계량 제도 기반 고도화

4 초격차 계량 기술개발을 위한 신규 R&D예산('26년) 확보 추진

- ⑥ 초격차 계량R&D 예산확보를 위한 新 사업 기획 추진

5 면밀한 사후관리를 통한 공정거래 확립

- ⑦ 계량제도 운영 지정기관 사후관리 강화
- ⑧ 상거래 유통 법정계량기 사후관리 강화
- ⑨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및 제도 개선
- ⑩ 시중 유통 저울의 정기검사를 통한 신뢰성 제고
- ⑪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센터 운영 내실화
- ⑫ 소비자 감시원 활동 강화

6 계량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 ⑬ 계량산업 종사자 역량 제고 및 협력 강화
- ⑭ 국민 참여를 통한 법정단위 정착
- ⑮ 「계량측정의 날」 정부 포상 및 기념행사 개최
- ⑯ 계량유물 보존관리 및 중장기 홍보 강화

사 업 명
(16) 국가표준활성화 (3731-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9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국가표준활성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표준정책국 표준정책과	代배진석 043)870-5340	최영철 연구관 043)870-5346	
	사업시행주체				
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표준정책국 표준정책과	代배진석 043)870-5340	최영철 연구관 043)870-5346	
	사업시행주체	한국표준협회	표준R&D센터	김단비 위원	02)6240-4584
표준화 실태조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표준정책국 산업표준혁신과	배진한 043)870-5380		하정아 연구사 043)870-5389
	사업시행주체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표준정책국	배진한	이재준	
	산업표준혁신과		043)870-5380	043)870-5388	
	사업시행주체				
민간주도 첨단산업 표준기반조성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표준정책국	배진석	이보하 연구관	
	표준정책과		043)870-5340	043)870-5341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국가표준활성화	5,971	6,278	6,278	6,338	6,338	60	1.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000	6,000	5,970.7	-	29.3	6,278	6,278	6,272.5 [6,272.5]	6,278	6,272.5 [6,272.5]	-	5.5	6,338
·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1,088	1,088	1,061.6	-	26.4	800	800	795.5	800	795.5	-	4.5	800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3,862	3,862	3,862 [3,862]	-	-	3,978	3,978	3,978 [3,978]	3,978	3,978 [3,978]	-	-	3,978
· 표준화실태조사	70	70	67.1	-	2.9	70	70	70	70	70	-	-	70
· K S 인 증 제 품 시판품조사	980	980	980	-	-	980	980	980	980	980	-	-	980
· 민간주도 첨단산업 표준기반조성	-	-	-	-	-	450	450	449	450	449	-	1	510
○ 비목별 분류(합계)	6,000	6,000	5,970.7	-	29.3	6,278	6,278	6,272.5 [6,272.5]	6,278	6,272.5 [6,272.5]	-	5.5	6,338
· 일 반 수 용 비 (210-01)	88.3	88.3	86.2	-	2.1	88	88	88	88	88	-	-	88
· 시 험 연 구 비 (210-13)	1,329	1,329	1324.6	-	4.4	1,328	1,328	1,328	1,328	1,328	-	-	1,326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일 반 용 역 비 (210-14)	-	-	-	-	-	450	450	449	450	449	-	1	510
· 국내여비(220-01)	13.2	13.2	13.2	-	-	13	13	13	13	13	-	-	13
· 국외여비(220-02)	5.1	5.1	4.8	-	0.3	5.1	5.1	4.6	5	4.6	-	0.5	5
· 사 업 추 진 비 (240-01)	28.4	28.4	28.4	-	-	28.9	28.9	28.9	29	28.9	-	-	28
· 일 반 연 구 비 (260-01)	604	604	584.4	-	19.6	317	317	313	317	313	-	4	320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70	70	67.1	-	2.9	70	70	70	70	70	-	-	70
· 사 업 출 연 금 (350-02)	3,862	3,862	3,862 [3,862]	-	-	3,978	3,978	3,978 [3,978]	3,978	3,978 [3,978]	-	-	3,978
○ 가능비목별 분류(합계)	6,000	6,000	5,970.7	-	29.3	6,278	6,278	6,272.5 [6,272.5]	6,278	6,272.5 [6,272.5]	-	5.5	6,338
·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1,088	1,088	1,061.6	-	26.4	800	800	795.5	800	795.5	-	4.5	800
- 일 반 수 용 비 (210-01)	88.3	88.3	86.2	-	2.1	88	88	88	88	88	-	-	88
- 시 험 연 구 비 (210-13)	349	349	344.6	-	4.4	348	348	348	348	348	-	-	346
- 국 내 여 비 (220-01)	13.2	13.2	13.2	-	-	13	13	13	13	13	-	-	13
- 국 외 여 비 (220-02)	5.1	5.1	4.8	-	0.3	5.1	5.1	4.6	5.1	4.6	-	0.5	5
- 사 업 추 진 비 (240-01)	28.4	28.4	28.4	-	-	28.9	28.9	28.9	28.9	28.9	-	-	28
- 일 반 연 구 비 (260-01)	604	604	584.4	-	19.6	317	317	313	317	313	-	4	320
· 표준개발협력 기관 지정운영	3,862	3,862	3,862 [3,862]	-	-	3,978	3,978	3,978 [3,978]	3,978	3,978 [3,978]	-	-	3,978
- 사 업 출 연 금 (350-02)	3,862	3,862	3,862 [3,862]	-	-	3978	3978	3,978 [3,978]	3,978	3,978 [3,978]	-	-	3,978
· 표준화실태조사	70	70	67.1	-	2.9	70	70	70	70	70	-	-	70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70	70	67.1	-	2.9	70	70	70	70	70	-	-	70
· K S 인 증 제 품 시 판 품 조 사	980	980	980	-	-	980	980	980	980	980	-	-	980
- 시 험 연 구 비 (210-13)	980	980	980	-	-	980	980	980	980	980	-	-	980
· 민간주도 첨단산업 표준기반조성	-	-	-	-	-	450	450	449	450	449	-	1	510
- 일 반 용 역 비 (210-14)	-	-	-	-	-	450	450	449	450	449	-	1	5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표준활성화)** 헌법상(제127조제2항) 국가 임무인 국가표준체계 확립을 위한 유일한 국가 예산으로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국가표준활성화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과 기업 지원
 - *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국가 간 상호협력 확대를 위한 국제표준 수준의 국가표준 개발·정비
- ①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국가표준(KS) 검토·심의 등을 위한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표준관련 법령·제도 개선 및 표준화 정책연구 등
- ②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국가표준 개발·정비 등의 표준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지정 및 운영(표준안 개발)
- ③ **(표준화 실태조사)** 「산업표준화법」제30조2에 따라 매년 정부가 의무로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표준화 실태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사업
- ④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산업표준화법」제20조에 따라 KS인증 제품에 대해 매년 불시 점검을 실시, 불량 KS인증 제품의 시중 유통 근절 및 소비자 보호 추진
- ⑤ **(민간주도 첨단산업 표준기반조성)** 민간주도 표준화체계 강화를 위한 ‘첨단산업 표준화 리더십 포럼’, 표준 교육, 유공자 포상, 국제표준올림픽아드 등을 실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헌법 제127조 제2항

* 제127조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국가표준기본법」제18조(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등),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 제18조(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 ① 정부는 제품등의 품질·생산효율·생산기술의 향상, 단순화·공정화(公正化)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성문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등 제품등의 표준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 *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① 정부는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국가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국제표준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를 도입할 경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표준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화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④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법령에 관한 자료 제공, 훈령 및 규정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국가표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표준의 제정 등을 위한 표준서식 및 작성방법, 중복성 확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의 제정 및 보급
 2. 제품인증체제 구축
 3. 시험·검사기관 인정
 4. 교정기관의 인정
 5.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6.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
 7. 민간단체의 규격 및 기준에 대한 승인
 8.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운영
 9. 그 밖에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
- *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평가를 도입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거나 적합성평가의 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적합성평가가 국제기준에 맞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규제개혁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제협력
3. 제7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의 운영 및 지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6. 제16조제1항에 따른 참조표준의 제정·보급
7.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8. 제20조제2항·제3항에 따른 국가표준의 제정, 총괄관리를 위한 기획 및 조사 연구
9. 제21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사업
10. 제28조제1항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11. 그 밖에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정부는 국가표준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표준화법」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5조의2(출연금), 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협의), 제15조(제품의 인증), 제20조(시판품 조사 등),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제30조의2(실태조사), 제31조(보조금)

*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① 산업통상부에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적부(適否)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광공업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서비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6. 그 밖에 산업표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표준회의, 전문분야별 기술 심의회, 특별심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표준회의(심의회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산업표준 개발인력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4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산업표준 개발을 하지 아니한 때

⑥ 그 밖에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2(출연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 개발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제5조 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협의)** ①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준이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5조(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포장·용기·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그 사실을 알고 판매·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 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받은자(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부 사업장에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서비스 품질 보증에 대한 종합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받은자의 다른 사업장 및 주된 사무소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국제표준의 조사·연구·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제30조의2(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에는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의 활용 실태,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정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인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 WTO/TBT협정 제2조 제4항(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기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

* **2.4** 기술규정이 요구되고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 회원국은 예를 들어 근본적인 기후적 또는 지리적 요소나 근본적인 기술문제 때문에 그러한 국제표준 또는 국제표준의 관련부분이 추구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국제표준 또는 관련부분을 자기나라의 기술규정의 기초로서 사용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0.11.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2006.5.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2007.5. 「산업표준화법」 개정(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민간의 표준 참여확대 등에 대한 규정 마련
- 2010.11.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2012.7.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수립(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VIP보고)
- 2016.4.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2017.12. '유망 신산업(12대 분야) 표준화 로드맵' 수립
- 2018.9.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Ⅲ)' 개선과제 발표
 - * 기업애로 해소 : 기술·제품에 대한 인증부담 완화(LED 조명 제품 관련 원스톱 창구 마련 및 유사·동일 시험항목의 절차 비용 면제 추진)
- 2019.3.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수립
: 2023년까지 10대 신산업 분야 고유표준 300종 개발 목표
- 2019.4.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경제관계장관회의) 수립
- 2019.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수립 : 「300-60 프로젝트」 - 2023년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 국제표준 300종 개발,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60명 배출 목표
- 2021.4. '서비스 표준화 추진 전략'(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
수립 : 2025년까지 유망·생활안전·사회안전 분야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 개발
- 2021.6.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2021.11. 『2050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수립
: 2050년까지 신규 국가표준 100종 개발, 국제표준 400종 도입 목표
- 2022.9. 『2050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이행계획』 수립
- 2023.4. 『희토류 표준화 전략』 수립(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
: 2030년까지 신규 국가표준 12종 개발, 국제표준 8종 신규 제안 목표
- 2024.2.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2.0』 수립
: 2050년까지 신규 표준 150종, 국제표준 500종 도입 목표
- 2024.5.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 수립
: 2030년까지 신규 국가표준 350종 제정 목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0~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024	6,834	6,000	6,278	6,33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국가표준 활용 산업체 등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운영	출연	한국표준 협회	3,978백만원	100	「산업표준화법」제5조3항, 5조의2, 「국가표준기본법」제27조
표준화 실태조사	민간 위탁	미정	70백만원	100	「산업표준화법」제30조의2,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20조의2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가표준활성화 : (2025 본예산) 6,278백만원 → (2026 예산) 6,338백만원, 60백만원 증액

①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 (2025 본예산) 800백만원 → (2026 예산) 800백만원, 전년동

- (요구) 표준정책 연구를 위한 학술연구용역 및 국가표준심의를 위한 산업표준심의회 운영을 위한 800백만원
- (산출) 800백만원 = 학술연구용역 320백만원 +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346백만원 + 기타 수용비
여비 등 134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00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88,048천원	800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88,000천원
	가. 신산업, 신수요분야 관련 세미나, 워크숍 등(34,243천원)		가. 신산업, 신수요분야 관련 세미나, 워크숍 등(34,195천원)
	· 발표수당 : 150,000원×10명×8회=12,000천원		· 발표수당 : 150,000원×10명×8회=12,000천원
	· 자료인쇄 : 12,150원×60p×5분야×6회=21,870천원		· 자료인쇄 : 12,150원×60p×5분야×6회=21,870천원
	· 조정재원 : 373천원		· 조정재원 : 325천원
	나. 국가표준화 전략 자문회의, 설명회 등(53,805천원)		나. 국가표준화 전략 자문회의, 설명회 등(53,805천원)
	· 회의수당 : 150,000원×10명×14회=21,000천원		· 회의수당 : 150,000원×10명×14회=21,000천원
	· 자료인쇄 : 12,150원×60p×5분야×9회=32,805천원		· 자료인쇄 : 12,150원×60p×5분야×9회=32,805천원
	○ 시험연구비(210-13) : 348,000천원		○ 시험연구비(210-13) : 346,000천원
	가. 신규표준 및 신제품의 기술기준 개발(348,000천원)		가. 신규표준 및 신제품의 기술기준 개발(346,000천원)
800 백만원	· 산업표준심의회 개최 : 145,000원×12명×200회=348,000천원	800 백만원	· 산업표준심의회 개최 : 145,000원×12명×199회=346,260천원
	· 조정재원 : -260천원		· 조정재원 : -260천원
	○ 국내여비(220-01) : 13,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3,000천원
	가. 표준개발협력기관 현장평가(6,000천원)		가. 표준개발협력기관 현장평가(6,000천원)
	· 시내 : 20,000원×3명×20분야=1,200천원		· 시내 : 20,000원×3명×20분야=1,200천원
	· 시외 : 120,000원×2명×20분야=4,800천원		· 시외 : 120,000원×2명×20분야=4,800천원
	나. 분야별 표준화 간담회, 설명회 등 참석(3,000천원)		나. 분야별 표준화 간담회, 설명회 등 참석(3,000천원)
	· 시내 : 20,000원×3명×10회=600천원		· 시내 : 20,000원×3명×10회=600천원
	· 시외 : 120,000원×2명×10회=2,400천원		· 시외 : 120,000원×2명×10회=2,400천원
	다. 표준안 개발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등(4,000천원)		다. 표준안 개발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등(4,000천원)
800 백만원	· 시내 : 20,000원×2명×7분야×3회=840천원	800 백만원	· 시내 : 20,000원×2명×7분야×3회=840천원
	· 시외 : 120,000원×2명×4분야×3회=2,880천원		· 시외 : 120,000원×2명×4분야×3회=2,880천원
	· 조정재원 : 280천원		· 조정재원 : 28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5,101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5,000천원
	가. 해외표준화 기구 표준화 정책 현황 조사(5,101천원)		가. 해외표준화 기구 표준화 정책 현황 조사(5,000천원)
	(DIN(독일, 베를린, 5급, 2.7일))		(DIN(독일, 베를린, 5급, 2.7일))
	· 항공료 : 2,000,000원×0.85×2명=3,400천원		· 항공료 : 2,000,000원×0.85×2명=3,400천원
	· 일비 : \$30×7일×2명=546천원(\$420)		· 일비 : \$30×7일×2명=580천원(\$420)
	· 숙박비 : \$137×5일×2명=1,781천원(\$1,370))		· 숙박비 : \$137×5일×2명=1,891천원(\$1,370))
	· 식비 : \$59×7일×2명=1,074천원(\$826)		· 식비 : \$59×7일×2명=1,140천원(\$826)
800 백만원	· 조정재원 : -1,700천원	800 백만원	· 조정재원 : -2,011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8,851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8,000천원
	가. 표준심의 관련 사업추진비 : 17,951천원		가. 표준심의 관련 사업추진비 : 17,100천원
	나. 분야별 간담회 및 공청회 사업추진비 : 2,800천원		나. 분야별 간담회 및 공청회 사업추진비 : 2,800천원
	다. 자료수집 관련 사업추진비 : 8,100천원		다. 자료수집 관련 사업추진비 : 8,100천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일반연구비(260-01) : 317,000천원 가.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317,000천원) · 신산업 발전을 위한 표준정책개발 및 법제 연구 : 39,625,000원×8개 과제=317,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320,000천원 가.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320,000천원) · 신산업 발전을 위한 표준정책개발 및 법제 연구 : 40,000,000원×8개 과제=320,000천원

②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 (2025 본예산) 3,978백만원 → (2026 예산) 3,978백만원, 전년동

- (요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을 통한 KS 개발정비를 위한 3,978백만원
- (산출) 3,978백만원 = 고유표준개발 860백만원 + 국제표준부합화 200백만원 + 국가표준정비 2,358백만원+ 기관운영비 440백만원 + 대표기관운영비 12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978 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3,978,000천원 가.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3,978,000천원) · 고유표준개발 : 38종×20,000,000원=760,000천원 · 국제표준부합화 : 135종×1,000,000원=135,000천원 · 국가표준 정비(확인, 개정, 폐지) : 3305종×750,000원=2,478,000천원 · 기관별 TC, SC 대응 : 81개×5,000,000원=405,000천원 · 대표기관운영비 : 1개×200,000,000원=200,000천원	3,978 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3,978,000천원 가.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3,978,000천원) · 고유표준개발 : 43종×20,000,000원=860,000천원 · 국제표준부합화 : 200종×1,000,000원=200,000천원 · 국가표준 정비(확인, 개정, 폐지) : 3,144종×750,000원=2,358,000천원 · 기관별 TC, SC 대응 : 88개×5,000,000원=440,000천원 · 대표기관운영비 : 1개×120,000,000원=120,000천원

③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 (2025 본예산) 70백만원 → (2026 예산) 7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70백만원
- (산출) 70백만원 = 70천원 × 1,000개 업체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0 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70,000천원 가. 표준화실태조사(70,000천원) · 표준화실태조사 : 70,000원×1,000개 업체=70,000천원	70 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70,000천원 가. 표준화실태조사(70,000천원) · 표준화실태조사 : 70,000원×1,000개 업체=70,000천원

④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 (2025 본예산) 980백만원 → (2026 예산) 980백만원, 전년동

- (요구) 불법 KS제품 시중유통 근절을 위한 시판품조사 예산 980백만원
- (산출) 980백만원 = 1.44백만원 × 680개 업체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80 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 980,000천원 가.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980,000천원) · 시판품조사 : 1,440,000원×680개 업체=980,000천원 · 조정재원 : 800천원	980 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 980,000천원 가.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980,000천원) · 시판품조사 : 1,440,000원×680개 업체=980,000천원 · 조정재원 : 800천원

⑤ 민간주도 첨단산업 표준기반조성 : (2025 본예산) 450백만원 → (2026 예산) 510백만원, 60백만원 증액

- (요구) '첨단산업 표준화 리더십 포럼', 민간 우수 표준활동에 대한 포상·격려, 표준교육 등 민간 주도 표준화체계 강화를 위한 510백만원
- (산출) 510백만원 = 첨단산업 표준화 리더십 포럼 총회 160백만원 + 첨단산업 표준화 리더십 포럼 150백만원 + 세계표준의 날 40백만원 + 표준교육 및 시범학교 40백만원 + 국제표준올림픽피드 12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50 백만원	<p>○ 일반용역비(210-14) : 450,000천원</p> <p>가. 포럼총회(24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운영비 : 90,000천원 · 임차비 : 72,000천원 · 연사수당 : 20,000천원 · 인쇄비 등 : 10,000천원 · 인건비 등 : 48,000천원 <p>나. 리더십포럼(70,000천원×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비 : 20,000천원×3 · 위원수당 : 9,000천원×3 · 연사수당 : 3,000천원×3 · 운영비 : 5,000천원×3 · 포털 유지보수 : 2,000천원×3 · 기획홍보 : 5,000천원×3 · 전략전문가검토 : 12,000천원×3 · 인건비 등 : 14,000천원×3 	510 백만원	<p>○ 일반용역비(210-14) : 510,000천원</p> <p>가. 첨단산업 표준 리더십 포럼 총회(16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운영비 : 50,000천원 · 임차비 : 48,000천원 · 연사수당 : 20,000천원 · 인쇄비 등 : 10,000천원 · 인건비 등 : 32,000천원 <p>나. 첨단산업 표준 리더십 포럼(50,000천원×3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비 : 15,000천원×3 · 위원수당 : 7,500천원×3 · 연사수당 : 2,500천원×3 · 운영비 : 3,000천원×3 · 포털 유지보수 : 1,000천원×3 · 기획홍보 : 3,000천원×3 · 전략전문가검토 : 9,000천원×3 · 인건비 등 : 9,000천원×3 <p>다. 세계표준의 날(4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등 : 30,000천원 · 기획홍보 : 10,000천원 <p>라. 표준교육 및 시범학교(4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수당 : 3,000천원 · 연사수당 : 7,000천원 · 2,000,000원×15개 학교=30,000천원 <p>마. 국제표준올림피아드(12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비 : 20,000천원 · 인쇄비 등 : 10,000천원 · 운영비(과제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 : 60,000천원 · 회의비 등 : 10,000천원 · 기획홍보 : 10,000천원 · 인건비 등 : 1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신산업·신수요 분야의 국가표준 개발율(단위: %)	목표	75	75	75	75	75	국제표준화 동향 및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표준화 우선 순위, 예산 등을 감안하여 신산업· 신수요 분야의 국가표준 개발율 목표치 설정	신산업신수요 분야 국가표준 개발수 / 소국가표준 개발수*100	국가기술표준원 내부 통계자료,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
	실적	75.3	75.6	75.8	-	-			
	달성도	100	100	101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표준(KS) 개발 및 국제표준 부합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356종, 개정 1587종, 확인 3,227종, 폐지 130종 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우수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USB-C타입 전원 데이터 접속 표준화로 환경보호 및 비용절감, 국민편익 증진 ② 전기차 충전기 통신방식 국가표준화 - 충전스테이션 관리시스템의 통신 방식 표준화 ③ KS X 9101 국가표준 제정 - 고객 맞춤형 다품종 소량 생산 가능 (동아일보 언론보도) ④ 건축물 내구성 강화를 위한 KS D 3034 제정으로 국민안전 확보 ⑤ 높은 난연 등급 외장전력케이블 요구사항 KS C 3993 제정으로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 최초 ISO 회장 당선(현대모비스 조성환 대표)으로 국제표준기구 내 표준 강국 입지 강화 및 우호국 확보로 우리나라 영향력 확대('22.9)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운영 확대 및 내실화, 민간 표준화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4개 기관 지정, KS 중 약 78%(16,000여 종) 관리 이양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KS인증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 공공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효과가 발생되어, 중소기업의 국내시장 진출 및 매출 확대, 기업의 표준 개발 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표준 생태계 조성 가능</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표준화 실태조사 ('22.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체 대상 KS표준·인증 활용 실태조사(1,000개)로 표준정책 수립에 활용 ○ KS인증제품 583개에 대한 품질시험을 통해 150건의 부적합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안전 확보 (인증취소 15건, 표시 및 판매정지 55건, 개선명령 80건) ○ 국가표준화혁신생태계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표준포럼 운영) 국제표준포럼 및 국내패널 등 네트워크 기반 조성 - (세계표준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및 기념행사 개최 :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 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4점, 장관표창 30점 수여, 대국민 표준인식 제고 - (국제표준올림픽아드) 일본, 싱가포르,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르완다, 한국 등 7개국 중·고등학생 및 지도교사 총 300여 명 참여, 온라인 예선 및 본선 대회 개최 - (초중고 표준교육) 표준교육 시범학교 운영(25개교 2,330명), 찾아가는 표준교육 실시(170개교 29,700명), 교원연수 개최(진행중) 등 표준교육 확대 ○ 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인증 원스톱 처리 시나리오 개발('24년까지 5개 신규품목 추가, 총 25개 품목) - 다수인증 지원 품목에 대한 원스톱처리 지원센터 운영 및 참여기관 확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국조실 요청으로 규제혁신 우수정책 홍보 프로그램 촬영 및 방영 - KTV 정책다큐에서 원스톱 다수인증 처리 서비스를 소개하고 LED 제품 사례 홍보</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정책다큐K 숨은 일꾼을 찾아서 매주 수, 목요일 16시 00분</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원스톱 다수인증 시나리오, 시간과 비용이 확 줄었어요!</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x-small;">회차 : 18회 방송일 : 2022.12.15 재방송 : 25:34</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 연장평가('22년 실시) 결과에 따라 '23년 예산안부터 타 세부사업으로 이관(3731-312 시험인증산업경쟁력및신뢰성제고)
------	---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제정, 정비 및 국제표준 부합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361종, 개정 861종, 확인 2,494종, 폐지 89종 등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운영 확대 및 내실화, 민간 표준화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9개 기관 지정, KS 중 약 78%(16,000여 종) 관리 이양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우수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로봇-서비스 로봇 모듈용 정보 모델-제1부: 공통 정보 모델 ② 브레이크 다이내모미터를 이용한 브레이크 아모 입자 측정 시험방법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표준화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체 대상 KS표준·인증 활용 실태조사 추진(1,000개) ○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83여개 인증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추진(인증취소 13건, 표시 및 판매정지 60건, 개선명령 177건) ○ 국가표준화혁신생태계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표준포럼 운영) 국제표준포럼 및 국내패널 등 네트워크 기반 조성 추진 - (세계표준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및 기념행사 추진 :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 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4점, 장관표창 30점 수여, 대국민 표준인식 제고 - (국제표준올림픽아드) 일본, 싱가포르,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르완다, 한국 등 9개국 참가한 제18회 국제표준올림픽아드 개최 완료 - (초중고 표준교육) 표준교육 시범학교 운영(25개교 2,358명), 찾아가는 표준교육 실시(151개교 16,143명) 등 표준교육 수행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제정, 정비 및 국제표준 부합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313종, 개정 956종, 확인 2,256종, 폐지 104종 등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운영 확대 및 내실화, 민간 표준화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2개 기관 지정, KS 중 약 80%(18,000여 종) 관리 이양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우수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폐배터리 재활용 소재의 성분분석 방법 ② 클라우드 기반 로봇 서비스를 위한 모듈 간 연결 규칙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표준화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 첨단산업 분야 대상 기업의 표준화 실태파악 및 기초통계 조사(1,000개) ○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30여개 인증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추진 * 인증취소 18건, 표시 및 판매정지 48건, 개선명령 80건, 진행중 99건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제정, 정비 및 국제표준 부합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352종, 개정 995종 등 3,500여 종의 표준 개발·정비 진행 중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운영 확대 및 내실화, 민간 표준화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6개 기관 지정, KS 총 22,529종 중 18,016종(약 80%) 관리 이양('25.12월 중순 기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25년도 표준개발협력기관 우수표준 사례</p> <p>①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시스템의 고장식별체계(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p> <p>② 발전용 바이오중유(한국석유관리원)</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표준화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분야 대상 기업의 표준화 실태파악 및 기초통계 조사(1,000개) ○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30여개 인증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추진 * 인증취소 8건, 표시 및 판매정지 43건, 개선명령 82건, 진행 중 102건
------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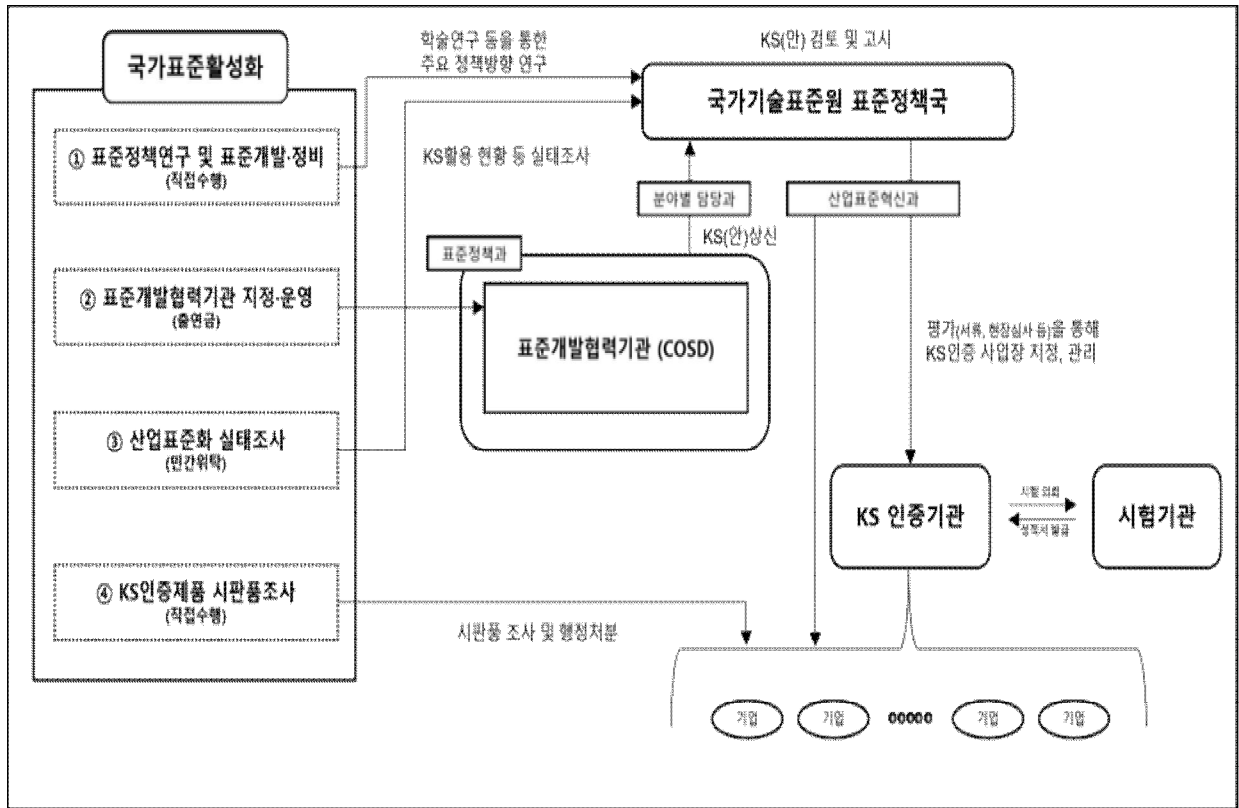
2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표준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로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가표준 제·개정을 위한 산업표준심의회 199회 운영 ○ 국가표준화 정책 수립에 필요한 8건의 학술연구용역 수행 ○ 86개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으로 민간 표준화 역량 강화가 기대되며, 국가 표준 제정 및 현행화(개정, 확인, 폐지) 등 3,387건 정비 추진 ○ '26년 표준화 실태조사 : 1,000개 기업 대상 KS표준·인증 활용 실태조사 ○ 680여개 KS인증제품 대상 시판품조사를 수행하여 부적합 제품에 대한 유통 근절을 국민 안전 확보 ○ 첨단산업 표준화 리더십 포럼 운영으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 이행 점검 및 첨단산업 분야 표준화 로드맵 현행화 ○ 국제표준올림피아드, 청소년 표준교육 및 시범학교, 세계표준의 날 등을 통한 민간 주도 표준화 활동 확대 및 인식 제고 기대
------	--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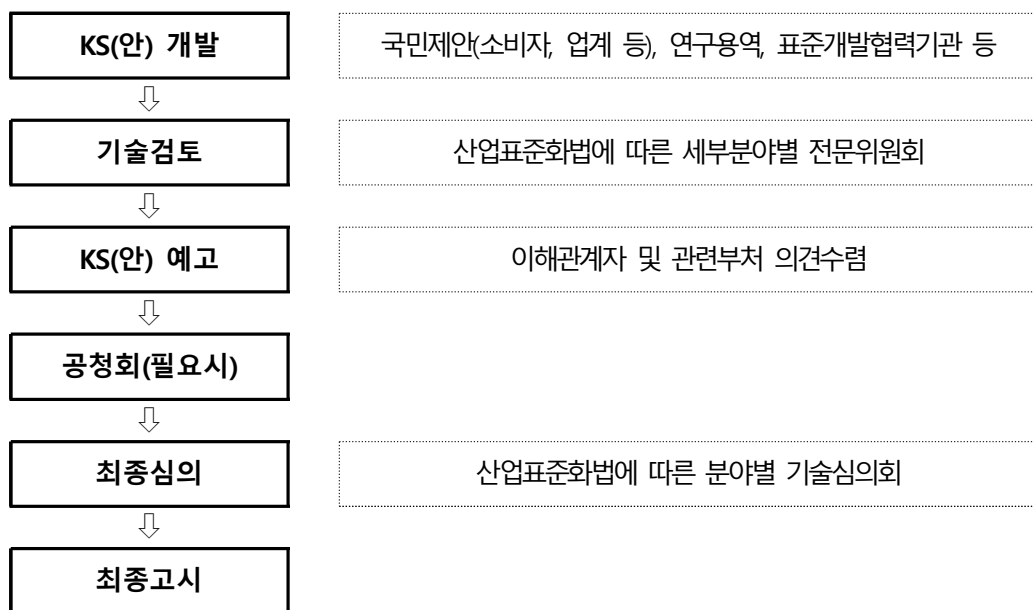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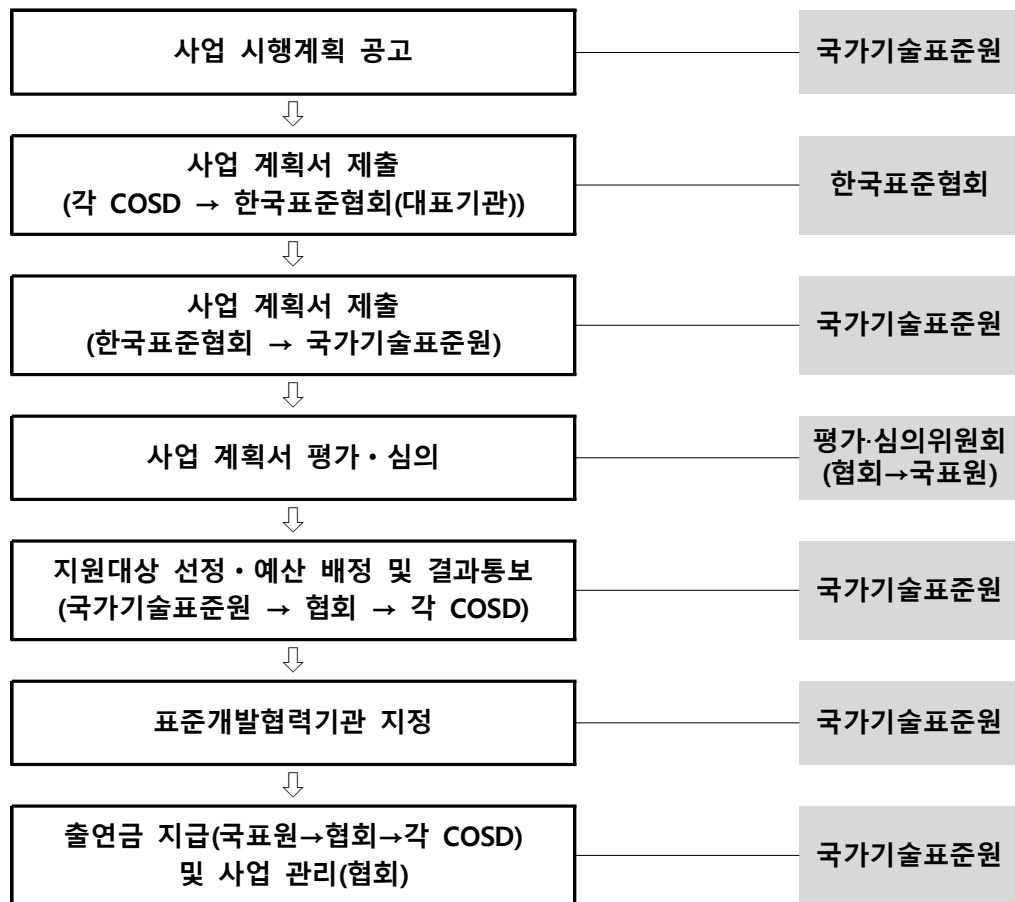
■ 국가표준활성화 사업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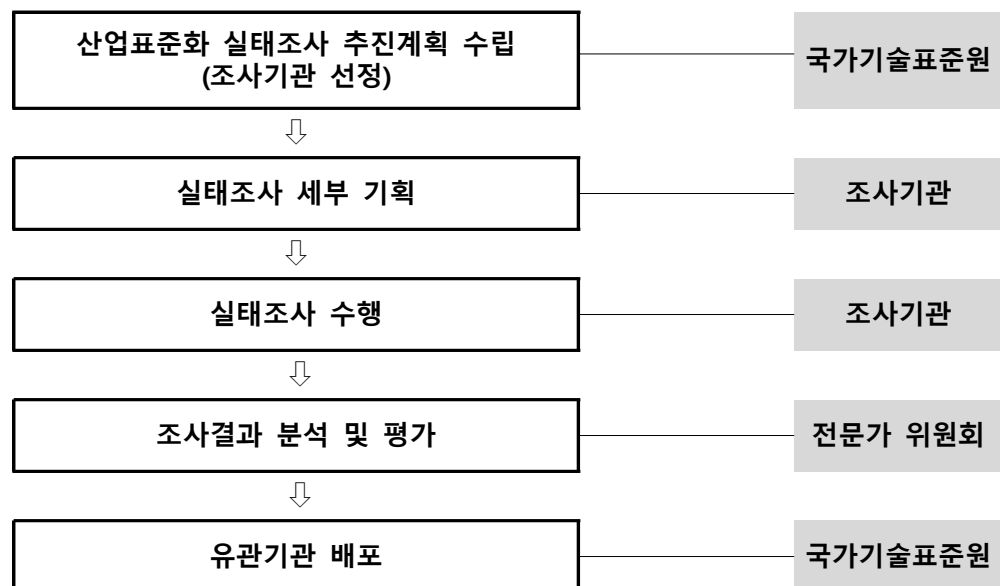
■ 국가표준 제·개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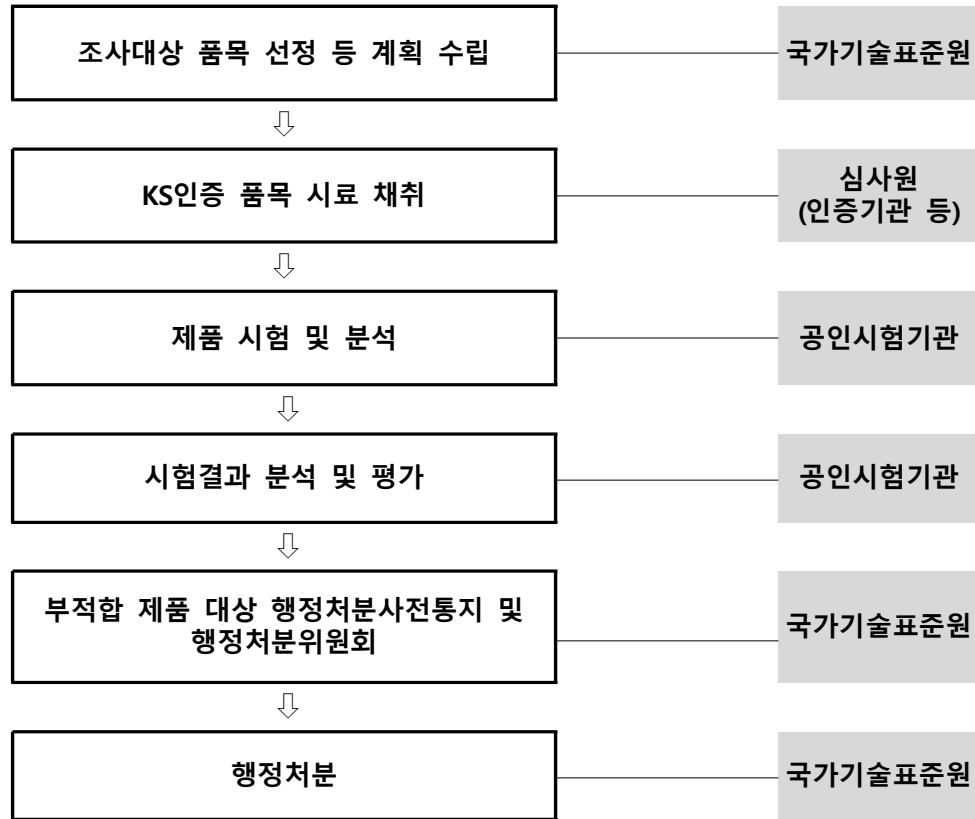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추진체계



■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 KS 인증제품 시판품조사



■ 민간주도 첨단산업 표준기반조성(일반용역 수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6,000	6,278	6,338	6,669	7,002	
2025~2029		6,278	6,338	9,118	10,037	11,16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지적사항) 표준화실태조사 사업의 비목을 변경할 것 (산중위, '21년 결산)
 - (내용) 해당 사업의 비목은 공공기관에 집행해야 하는 사업출연금(350-02)으로 민간기관에 집행하기 위해 비목을 출연금(350-02)에서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변경할 것
 - (조치결과) '23년 예산안 내 민간위탁사업비로 비목을 변경하여 반영
- (지적사항) '23년도 산업표준심의회 정상 운영을 위한 증액 필요 (예결위, '23년 예산)
 - (내용)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9억 3,700만원)의 시험연구비(산업표준심의회 수당 1억 7,400만원)는 산업표준심의회 개최 횟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7억원 증액 필요
 - (조치결과) '23년 예산 확정 시 증액되어 348백만원 반영
- (지적사항) 리더십 포럼 운영 관련 중복 편성 예산 조정 필요 (산중위, '25년 예산)
 - (내용) '첨단산업 표준화 리더십 포럼' 등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국가표준기술력 향상' 사업에 중복적으로 편성(3억 3,000만원)되어 있으므로 관련 예산의 조정이 필요
 - (조치결과)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사업 내 중복예산을 제외하여 반영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국회 지적 사항에 조치결과 포함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국가표준정책 추진,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24.5월)에 따라 표준을 적기 개발하여 국제표준 주도권 확보 및 민간 주도 표준화 체계 구축
- 효율적 국가표준 개발·정비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 주도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운영하여 기업의 기술혁신과 글로벌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국가표준 개발 및 표준화 활동 지원
-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을 위해 표준·인증 제품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저품질 KS인증제품의 시증유통 방지를 위한 시판품 조사 강화
- 민간 주도 국가표준 체계 구축을 위해 청소년 표준교육, 세계표준의 날, 국제표준 올림피아드 등을 통한 민간의 표준화 활동 참여 강화 및 인식 제고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2022 회계연도) 자율평가 결과: 보통
 - 사업 내용이 적정, 추진 방식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예산집행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성과지표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하나 산정 방식이 모호하며, 매년 동일한 목표치는 개선이 필요함
-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2023 회계연도) 자율평가 결과: 우수
 - 사업 내용이 중요하고, 목적이 명확하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예산 불용 최소화 등 예산집행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23년도 외부 지적 사항에 대한 충실한 조치를 이행하여 개선 노력이 인정됨
-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2024 회계연도) 자율평가 결과: 우수
 - 국가표준체계 확립을 위한 것으로 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사업 구성과 내용이 적절하며 예산 절감 노력도 인정됨. 다만 성과지표에서 정량지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3) 부처 전의사항

- 국가표준체계 운영을 위한 유일한 국가예산으로 지속적인 증액 필요
 - 국가대표 기술기준인 국가표준* 관련 신제품·서비스의 표준 제정, 국가표준의 주기적 정비, 고품질 KS인증제품 유통 등을 수행
 - * 국가표준(KS) 소분야 2만여종 이상 유지되고 있으며,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 검토를 통해 제정, 개정, 확인, 폐지 절차를 진행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 국가표준 개발·정비를 통해 기술·사회적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기업과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증액 필요
- AI·반도체 등 미래전략기술 및 글로벌통상 대응이 중요해짐에 따라 세계 시장 선점, 국민안전 담보 등에서 표준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적극적인 사업 추진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135	△111	7,024	-	+80	-	7,104	7,076	100.7	99.6	-	27
2023	6,834	-	6,834	-	-	-	6,834	6,763	98.9	98.9	-	71
2024	6,000	-	6,000	-	-	-	6,000	5,971	99.5	99.5	-	29
2025	6,278	-	6,278	-	-	-	6,278	6272.5	99.9	99.9	-	5.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3,932	3,932	3,932	3,932	-	3,932	3,932	-	-	100
2023	4,317	4,317	4,317	4,317	-	4,317	4,317	-	-	100
2024	3,862	3,862	3,862	3,862	-	3,862	3,862	-	-	100
2025	3,978	3,978	3,978	3,978	-	3,978	3,978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추경 감액 : 코로나-19로 인한 공공부문의 사회적 고통분담 감액(시험연구비(210-13) 66,400천원, 일반용역비(210-14) 43,279천원, 사업추진비(240-01) 1,705천원) - 전용 :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는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사업 수행을 위해 국제표준활동지원(3731-302) 사업의 일반연구비(260-01) 80백만원을 국가표준활성화(3731-309) 사업의 시험연구비(210-13)으로 전용 80백만원 - 불용 : 용역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27백만원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 : 용역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70.4백만원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 : 용역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29.3백만원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 : 용역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5.5백만원('25.12월 기준 예상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붙임

내역사업별 세부 설명자료

1.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 정비

□ 사업개요

사업기간	'00~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최영철 연구관(☎ 043-870-5346)		

- 시장·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표준 심의검토를 위한 심의회를 운영하고, 표준화 정책 사전연구 수행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 사업내용

- **(심의회 운영)** 국가표준 체계 운영의 핵심사항인 국가표준 재개정 심의 등 정비를 위한 기술심의회 등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 **(정책연구)** 국가표준 체계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연구, 분야별 표준화 정책, 전략 로드맵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 '26년 사업계획

- **(심의회 운영)** 국가표준(KS) 심의를 위한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 '26년 심의회 운영 요구 예산(346백만원)으로 199회 운영이 가능하며, 부족한 수당은 국표원 기본경비 등 다른 예산 활용

* (참고자료) 최근 4개년 전문위원회 및 산업표준심의회 개최 건수 및 예산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심의회 개최 건수	685	710	805	750
편성 예산(백만원) (A)	348	348	348	348
집행 예산(백만원) (B)	874	943.8	1060.1	1104.1
초과예산(백만원) (B-A)	526	595.8	712.1	756.1

- **(정책연구)** 국가표준 정책연구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8건 추진

2.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 사업개요

사업기간	'08~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최영철 연구관(☎ 043-870-5346)		

- 국가표준의 개발·정비 등의 표준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기관을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 지정하여 운영

* COSD : 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 법적근거 :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및 시행규칙 제2조(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

□ 사업내용

- 산업계의 표준화 수요를 신속히 발굴·반영하기 위해 민간 표준개발 협력기관 운영을 통한 민간주도형 국가표준화 생태계 운영
- **(추진체계)** 사업총괄(국표원) - 대표협력기관(한국표준협회) -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협력기관 지정(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86개 기관)
 - **(대표협력기관)** 협력기관과 사업협약 체결, 사업비 지급 등 실무 전담
 - **(협력기관)** 국가표준(KS) 제정 및 정비(개정·확인·폐지 등) 수행

□ '26년 사업계획

- **(기관운영)** 대표협력기관 및 분야별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 **(표준개발)** 고유표준 43종 제정 등 총 3,387종의 표준 제정·정비 목표
 - AI, 반도체, 자율주행 등 중점 표준화 분야에 대한 산업계 표준수요를 발굴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표준을 적기 개발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 **(성과공유)** 우수 표준 사례 공유를 위한 성과공유회 개최('26.12)

3. 표준화 실태조사

□ 사업개요

사업기간	‘15~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하정아 연구사 (☎ 043-870-5389)		

- 정부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표준화 실태조사 실시

* 법적근거 : 「산업표준화법」제30조의2(실태조사)

□ 사업내용

-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한 표준정책 수립을 위해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표준 및 인증제품의 활용 실태 등을 조사

□ '26년 사업계획

- (국가표준 현황조사) 표준활용 기업, 활용표준 종류, 표준화 활동 등
- (단체표준 현황조사) 단체표준 제·개정 현황, 인증기업 및 활용 현황 등
-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1,000여개 기업 대상 실태조사 실시

- (모집단) 10인 이상 제조업*(약 7만 개사) 중 1,000개사

* 식료품, 음료, 섬유제품, 펄프·종이,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등 제조업종 24개 분야

■ ' 24년 실태조사 시사점

- ① 비대면화·디지털화의 확산으로 온라인 표준보급 서비스 활용 활성화 정책 추진 필요
- ② 국제표준 보급 및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추진 필요
- ③ 인증기업의 애로사항 조사에 따른 정책 개선 방안 마련
→ 표준·인증 분야 산업계 참여 확대 기획 추진
- ④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첨단산업 분야 기초 통계 확보

4.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 사업개요

사업기간	'00~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이재준 사무관(☎ 043-870-5388)		

○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인증 제품에 대해 매년 불시 점검 실시

* 법적근거 : 「산업표준화법」제20조(시판품조사)

□ 사업내용

- 온·오프라인 유통 등에서 채취한 KS 제품의 표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부적합 제품에 대해 인증취소, 표시·판매정지 등 처분
 - 불량 KS인증 제품의 시중 유통 근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매년 시판품조사 등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가 직접 주관·실시

□ '26년 사업계획

- **(조사계획)** 66개 KS인증 품목, 68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판품조사 실시
 - 중점관리 품목(레미콘, PVC/PE관, LED 조명), 일반관리 품목(배선용 꽃음접속기 등) 등 연간 조사 계획에 따라 정기조사,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민원 발생품목에 대해서 수시조사 실시
 - 시판품조사 결과 부적합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안전 확보
- **(행정처분)** 부적합 제품 생산 업체에 대해 사전 처분통지, 업체 의견 접수·검토 및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행정처분 실시

5. 민간주도 첨단산업 표준기반조성

□ 사업개요

사업기간	'25~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이보하 연구관(☎ 043-870-5341)		

- 민간주도 표준화체계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표준화 리더십 포럼', 세계 표준의 날, 표준 교육, 국제표준올림픽아드 등을 실시

□ 사업내용

- 미·중 등 첨단산업 표준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표준화전략을 검토하는 '첨단산업 표준화 리더십 포럼' 운영(年 4회)
 - * (첨단산업 표준화 리더십 포럼)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 임채민 前장관 등 사회 각계 주요인사가 참여하여 우리나라 표준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표준 전략의 검토·확정
- 민간 주도 국가표준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학생 대상 표준교육, 표준화 공로에 대한 포상, 국제대회 등을 실시하여 민간 참여 확대

□ '26년 사업 계획

- **(리더십 포럼)** 국가표준화전략 검토 및 추진방향 점검을 위해 매 분기 리더십 포럼을 개최하되, 1분기는 포럼 총회로 개최
- **(세계표준의날)** 표준화를 통해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포상 및 기념식을 개최하여 대국민 표준인식 제고
- **(표준교육)**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표준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표준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초·중·고 표준교육 실시
 - * (찾아가는 표준교육) 120개 초·중·고교 / (표준교육 시범학교) 15개 중·고교
- **(국제표준올림픽아드)** 글로벌 표준 리더 양성을 위해 세계 각국 청소년들이 참가('25년 12개국 120명)하는 표준화 경진대회 개최

사 업 명
(17) 제품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 (3732-3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10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제품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제품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	산업통상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박해범	박수진	
		제품안전정책과	043-870-5430	043-870-533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제품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	937	592	-	589	589	△3	△0.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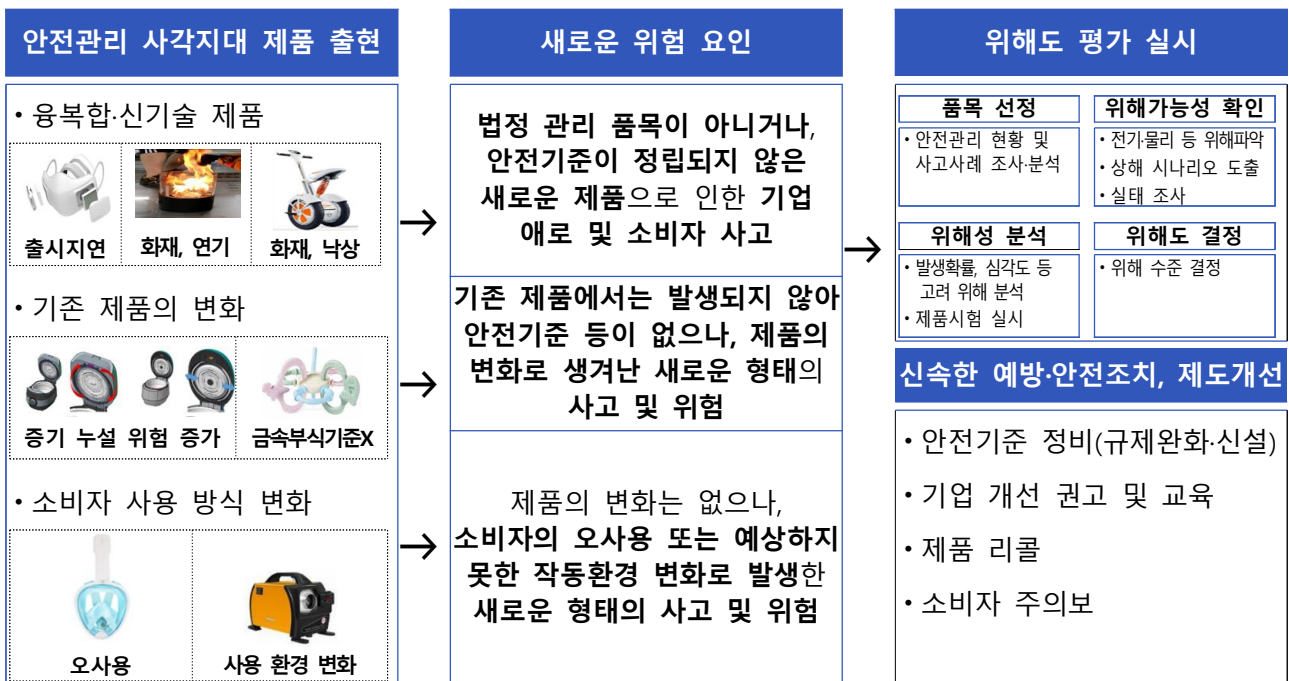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954	954	937	-	17	592	592	582 [582]	592	582 [582]	0	10	589
· 위해제품 소비자 안내·계도 및 운영	9	9	9	-	0	9	9	9 [9]	9	9 [9]	0	0	9
· 위해정보를 바탕 으로 한 제품 위해성 평가	945	945	928	-	17	583	583	573 [573]	583	573 [573]	0	10	580
○ 비목별 분류(합계)	954	954	937	-	17	592	592	582 [582]	592	582 [582]	0	10	589
· 일 반 수 용 비 (210-01)	9	9	9	-	0	9	9	9 [9]	9	9 [9]	0	0	9
· 일 반 연 구 비 (260-01)	945	945	928	-	17	583	583	573 [573]	583	573 [573]	0	10	58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954	954	937	-	17	592	592	582 [582]	592	582 [582]	0	10	589
· 위해제품 소비자 안내·계도 및 운영	9	9	9	-	0	9	9	9 [9]	9	9 [9]	0	0	9
- 일 반 수 용 비 (210-01)	9	9	9	-	0	9	9	9 [9]	9	9 [9]	0	0	9
· 위해정보를 바탕 으로 한 제품 위해성 평가	945	945	928	-	17	583	583	573 [573]	583	573 [573]	0	10	580
- 일 반 연 구 비 (260-01)	945	945	928	-	17	583	583	573 [573]	583	573 [573]	0	10	5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한 제품 위해성 평가)** 융·복합 신기술 제품, 소비자 사용패턴 변화 제품 등 사각지대 제품에 대하여 안전관리 필요성 및 여부(기준 제·개정)를 판단하고 규제의 수준(강제인증, 자율규제 등)을 조정하는데 필요한 조사, 제품시험, 전문가 자문 등 위해성 평가를 실시
- **(위해제품 소비자 안내·제도 및 운영)** 제품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른 소비자 보호조치(리콜, 소비자 안전주의보 안내 및 제도 등)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 및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제품안전기본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품안전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제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품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의무 등) ①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

② 추진경위

- '10. 2월 : 제품안전기본법 제정 공포
- '11. 2월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 '11. 3월 : 제1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4. 2월 : 제2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5. 6월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
- '17.11월 : 제3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20. 7월 : 제4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21. 1월 : 제품 위해성 평가 사업 기획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60	1,060	954	592	589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및 관련 산업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한 제품 위해성 평가

: (2025) 583백만원 → (2026) 580백만원, -5% (3백만원 감액)

- (요구)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출현, 제품 소비패턴의 변화 등으로 안전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한 7개 품목의 위해 수준(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25) 583백만원 → ('26) 580백만원

- (산출) 580백만원(85.6백만원*/품목 X 7 품목)

* 제품 위해성 평가(85.6백만원/품목) = 15백만원(평균 시료 구입비) + 30백만원(시험·평가비) + 40.6백만원(조사·분석)

② 위해제품 소비자 안내·계도 및 운영

: (2025) 9백만원 → (2026) 9백만원, (전년동)

- (요구) 위해성 평가 후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주의보* 등 안내·홍보를 위하여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25) 9백만원 → ('26) 9백만원

- (산출) 9백만원(소비자주의보 등 안내·홍보)

* (예)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무시동히터, 에탄올 화로 안전사용 캠페인 등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92	<p>○ 일반수용비(210-01) : 9백만원</p> <p>- 위해제품 소비자 안내·계도 및 운영(9백만원)</p> <p>· 위해성 확인 제품에 대한 소비자주의보 등 안내·홍보 비용</p> <p>○ 일반연구비(260-01) : 583백만원</p> <p>-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한 제품 위해성평가(583백만원)</p> <p>· 86백만원 X 7 품목</p>	589	<p>○ 일반수용비(210-01) : 9백만원</p> <p>- 위해제품 소비자 안내·계도 및 운영(9백만원)</p> <p>· 위해성 확인 제품에 대한 소비자주의보 등 안내·홍보 비용</p> <p>○ 일반연구비(260-01) : 580백만원</p> <p>-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한 제품 위해성평가(580백만원)</p> <p>· 85.6백만원 X 7 품목</p>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위해성평가 품목 발굴 건수 (단위: 건)	목표	10	13	11	7	7	'22~'24년도 위해성 평가 목표 건수 및 '25년도 예산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26년 목표치 산출	위해성 평가 실시 품목 건수	위해성 평가 결과보고서
	실적	12	15	12	-	-			
	달성도	120	115	109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①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한 제품 위해성평가 : 12회 (에탄올난로, 전기마사지기 등 신기술·신소비 트렌드 제품) ② 소비자 안내 계도 및 운영 : 안전주의보 등 언론을 통한 소비자 계도 2회 (스타벅스 여행용 가방 유해물질, 유아용 치발기 녹물 등)
2023	①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한 제품 위해성평가 : 15회 (가열식 가습기, 무시동 히터 등 신기술·신소비 제품) ② 소비자 안내 계도 및 운영 : 안전주의보 등 언론을 통한 소비자 계도 2회
2024	①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한 제품 위해성평가 : 12회 (전동식 가구, 무선 충전기, 가정용 기저귀 교환대 등 신기술·신소비 제품) ② 소비자 안내 계도 및 운영 : 안전주의보 등 언론을 통한 소비자 계도 4회 (전동킥보드, 식품모방완구, 에탄올 화로 등 안전 이슈 제품)
2025	①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한 제품 위해성평가 : 7회 (휴대용 마사지기, 영유아 수면용품, 유아 안전문 등 신기술·신소비 제품) ② 소비자 안내 계도 및 운영 : 안전주의보 등 언론을 통한 소비자 계도 3회 (무선충전기, 기저귀교환대, 전동식 가구 등 안전 이슈 제품)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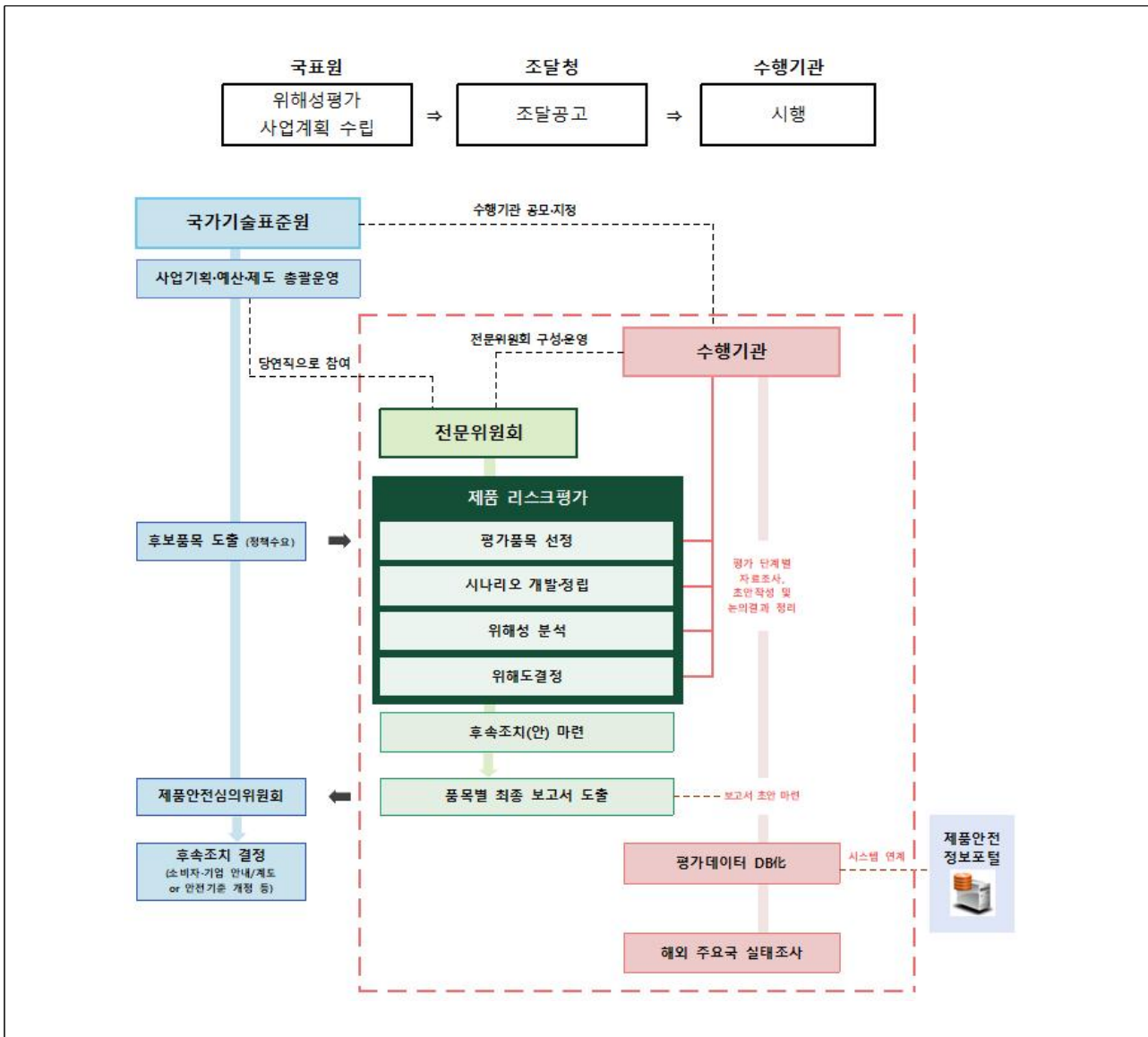
- **제품 위해성 평가 (7건)** : 국내외 제품 위해사례 등 실태조사, 위해 심각도파악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위해수준 결정 및 위해도 평가 실시 (규제 완화, 안전사각지대 해소)
 - *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등 안전 유관기관 수요조사('25.1~3월) 결과, 60여개 품목 확인
- **소비자 안내·계도 (2회)** : 위해성 평가결과에 따른 제품 안전사용 안내 콘텐츠 개발 및 언론매체를 활용한 계도
 - * '25년 결과가 중대위험인 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주의 캠페인 등
- **유관기관 협업조치** : 소비자원, 소방청 등 타부처 간 사고·위해정보를 모니터링 하고 공유하여 위해요인 DB 구축 실태조사
 - * 소비자위해정보시스템, 화재정보시스템의 통계를 활용하여 안전관리대상 전 품목 리스크 평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인 경우 작성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954	592	589	1,157	1,215	
2025~2029		592	589	831	985	1,16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향후 추진방향
 - 식약처, 소비자원, 소방청 등 타부처 간 사고·위해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공유하여 위해요인 DB 구축에 대한 실태조사
 - 전문가, 전담기관, 시험기관 등을 활용하여 위해 가능성 제품 선정과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 등 제품 위해성평가
 - 각 위해분야별 평가를 위한 기관 지정 및 운영
- 세부 추진계획
 - 제품 위해성 평가 실태조사 및 위해수준결정, 위해성 평가를 위한 각 기관 및 전문가를 활용한 컨소시엄을 통한 제품위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등장과 비관리제품의 증가 등 국민의 제품 위해에 대한 노출이 심해지고 있어 선제적 제품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을 위한 제품 위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 사업 지원을 요청 드림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60	860	-	-	-	-	860	835.6	97.2	97.2	-	24.4
2023	1,060	1,060	-	-	-	-	1,060	1,049.1	99.0	99.0	-	10.9
2024	954	954	-	-	-	-	954	937	98.2	98.2	-	17.0
2025	592	592	-	-	-	-	592	582	98.3	98.3	-	10.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단위: 백만원,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조달공고 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액(24.4백만원)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조달공고 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액(10.9백만원)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조달공고 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액(17백만원)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조달공고 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액(10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첨부1 제품 위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 관련 참고자료 [기재부 제출]

□ 위해성평가 개요

- **(개념)** 위해·사고정보를 수집하여 제품의 위험한 요소에 사람이 노출 시 발생 가능한 부정적 영향과 발생확률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과정
- **(필요성)** 정부 당국의 제한된 자원으로 방대한 제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품의 위험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과 우선순위 선정 필요
- **(활용)** 美, EU 등에서 제조회사는 시장출시 전, 감독기관은 시장출시 후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 리스크평가 활용

< (EU 사례) 제품안전을 위한 평가의 종류 및 구분 >

구분	안전관리 감독기관	제품인증기관	제조사 등 기업
제품 출시 전	-	▶ 적합성평가	▶ 적합성평가 ▶ 리스크평가
제품 출시 후	▶ 안전기준 준수평가 ▶ 리스크평가	▶ 적합성평가	▶ 적합성평가

· (적합성평가) 시장출하 이전 시험.인증, (준수평가)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시장 사후관리

< 미국의 리스크평가 운영사례 >

▶ 리스크평가 추진체계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위험식별저감국(Hazard Identification & Reduction)은 **위해관리 그룹(Risk Management Group)**과 **자문패널**을 운영하여 리스크평가 실시
 - **(위해관리그룹)** ①어린이, ②전기, ③화재·연소, ④기계·스포츠·노인, ⑤화학·나노기술·신소재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분야별로 프로그램 리스크 매니저들을 구성.운영
 - **(자문패널)** 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교수, 전문가 등으로 위험자문 패널(CHAP*) 구성

* Chronic Hazard Advisory Panel : 위험성(Hazards), 리스크평가(Risk assessment) 수행

▶ 리스크평가 처리절차

- ① **(위해·사고 정보수집)** 소비자제품과 관련하여 위해정보, 사고정보, 잠재적 위해가능 정보 및 사망정보 등 4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수집
 - * ① 위해감시시스템, ② 사망확인서, ③ 상해·잠재적 위해사고, ④ 심층조사
- ② **(위해·시험 평가대상 선별)** 소비자 등으로부터 신고된 제품 등에 대한 리스크 시험평가·분석이 필요한지 여부 검토(美CPSC는 상근직원 20명, 비상근 직원 20명 정도가 담당)
- ③ **(리스크 평가·분석)** 위해발생 가능 시나리오에 따른 위해와 법령상 의무기준, 표준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
- ④ **(소비자보호 안전조치 및 제도개선)** 평가결과를 기초로 유통금지, 리콜 등의 적합한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안전기준 제정이 필요한 경우 안전기준이나 규칙 제정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국가/민간	사례내용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제품 출시 시 리스크 평가 실시 의무화('24.12월~) ○ 리콜 방법(수리, 환불 등) 결정 시 리스크 평가 요구('24.12월~) ○ 사고 발생 시 기업이 규제당국에 리스크 평가 결과 제출('19년~)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제품 출시 및 사고 발생 시 보고(EU와 동일) ○ 리콜 방법 결정 시 리스크 평가 실시 요구(기업·규제당국) -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리콜 방법 협의·조정('23년)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발생 보고 및 리콜 방법 결정 단계에서 규제당국이 기업에게 리스크 평가 자료 요구(사실상 강제화) ○ CPSC Strategy Plan('23-'26)에 따라 기업 의무 강화 추진 중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리콜을 실시하거나, 제품 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기업이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작성·제출 의무('23.4월)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를 하거나, 리콜 등 소비자 안전 조치 방법을 결정할 때 제품 리스크 평가 활용을 권고('11년~)

국가 (규제기관)	기업 의무	'10년	'15년	'20년	'25년 ('24년)	근거
EU (Safety Gate)	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년) 제품 위험 통보 시 리스크 평가(RAPEX) / EU회원국 규제기관 ('19년) 사고 발생 시 기업이 리스크 평가 결과 제출 / 기업 ('24년) 신제품 출시 전 리스크 평가 실시 및 리콜 시 리스크 평가 결과 제출 / 기업 및 규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gulation (EC) 2008/765 GPSR(Regulation (EU) 2023/988)
영국 (OPS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년) 사고 발생 시 규제당국의 리스크 평가 실시 권고 / 규제기관 ('23년) 리스크 평가 결과 제출 시 리콜 수준 완화 고려 /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duct Safety Risk Assessment Methodology(PRI SM)(22.12)
미국 (CPSC)	사실상 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년) 수입제품대상 리스크평가(RAM) / CPSC staff ● ('06년) 리콜 등 안전조치 결정 시 리스크평가(RIDM) / CPSC Staff ('23년~'26년) 리스크 평가 관련 방법론 체계 강화 추진(CPSC Strategy Pl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SIA section 222 C P S A - 1 6 CFR1009.8 CPSC directive 0606.1
호주 (ACCC)	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4월) 사고보고 및 리콜 시 리스크 평가 자료 제출 의무 / 기업 ('23.4월) 제품 개발 시 리스크 평가 활용 권고 /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guideline for suppliers The Australian Consumer Law
일본 (NITE)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년) 리콜 시, 사고원인 분석 및 안전조치 수준 결정에 리스크 평가 활용 /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평가 핸드북 ('11)

□ 제품 위해성 평가 주요 사례

①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새로운 출현

전자식 마스크 예비 안전기준 마련 ('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에 공기청정 기능과 유해물질 차단성능(KF 94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존 관리품목에 부합하지 않아 시장출시 지연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필터 기능, 유해물질 및 배터리 등 안전요건을 규정하여 예비 안전기준 공고 및 시행('21.12.22~)
전동 이륜차, 전동 킥보드 안전기준 마련 ('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발진, 과속 등으로 인한 충돌 사고, 내장 배터리의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언론 등을 통해 다수 이슈화 ○ 급발진·속도제한 임의해제·충전 중 화재 등이 리스크 평가 결과 중대위험으로 분류 → 안전기준 개정 근거로 활용(개정, 22.9.6.)
에탄올 난로 화재 사고 관련 안전기준 마련 추진 ('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캠핑(불멍) 유행·확산 → 가정 등 실내에서 분위기를 위해 사용 ○ 관리 외 제품, 에탄올을 연료로 하는 장식용 화로의 화재 사고가 2년 3개월간 13건 발생되어 15명 상해, 5,000만원 이상 재산 피해 ○ 전도 또는 연료 누수로 인한 화재 등이 리스크평가 결과 중대위험으로 분류 → 안전기준 제정 및 신규 안전관리 추진('24~)

② 제품 사용 형태·방식의 변화

스노클링 마스크 누수 사고 ('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상단에 공기흡입구를 부착하여 마스크만으로도 스노클링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물놀이용품이나 누수로 인한 위해 사례 발생 ○ 안전관리 비대상(어린이용은 관리대상)이나 잠수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자 제품 개선 권고 실시(표시사항 및 사용 설명 보완 등, '24.2)
무시동 히터 CO중독 사고로 인해 안전기준 마련 추진 ('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핑 유행·확산 → 차량(화물차)에 설치되는 제품에서 텐트 및 캠핑용 차량의 난방을 위한 제품으로 용도 확대 ○ 안전관리 외 제품이나 CO중독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지속 발생하는 등 리스크 평가 결과 중대위험으로 분류 → 소비자 안전 사용 캠페인 실시('24.3월) 및 안전기준 제정 추진(행정예고, 24.5.16.)

③ 기존 시장 유통 제품의 다변화

쿠첸 압력밥솥 뚜껑 체결방식 변화로 인한 증기 누설 사고(화상) 우려 ('22년)



- 기존 압력밥솥은 회전형으로 뚜껑을 고정하는 구조이나, 슬라이드-락 방식의 뚜껑 고정 구조로 **변화된 제품이 새롭게 출시** 됨에 따라, **부품불량발생 시 증기누설사고 위험성 확대**
- 위해도 평가 등을 통해 기업의 신속한 리콜 유도('22.2월)

유아용 치발기 구조 변화 ('22년)



- 기존 유아용 치발기는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 지고 있었으나, 복잡한 형상을 가진 제품 출시를 위해, **기존에 없던 나사 등 금속 물질이 사용** → **녹 발생 등 우려**
- 위해도 평가 등을 통해 기업의 신속한 리콜 유도('22.6월)

④ 해외 리스크 평가 제도 관련 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 해외 안전관리 제도의 리스크평가 확대에 대응하여 기업을 위한 전기·생활·어린이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 구축 및 시범배포('23.11.7)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제품 리스크평가 플랫폼(kipsrisk.co.kr) 통해 무료 제공

- △ 국내 사고발생(신고) 및 안전기준 관련 위해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 △ 사용자 편의를 위해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



- 리스크 평가 보고서 자료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 실습 등 기업 실무자 교육 2회 실시('23년 2회, '24년 2회)

I

추진 배경

□ 기술 발전과 소비 환경의 변화로 급변하는 소비자 제품 시장

- ^①융복합·신기술 제품 출현, ^②기존 제품의 다변화, ^③규제 합리화에 따른 산업계의 애로사항에 신속한 대응 필요

< 1. 융복합·신기술 제품 출현 > 전동식 기능이 포함된 '가구'



- 美 전동식 리클라이너 가구에 깔려 영유아 사망 사고사례 보고('22.5.)
- 현행 관련 부속서상 가구에는 전동식 기능에서 파생 가능한 위해 요인에 대한 관리 기준 부재

< 2. 기존 유통 제품의 변화 > 새로운 형태의 '가정용 기저귀 교환대' 출시



- 기존 가정용 기저귀 교환대는 거치식이 대부분이나, 낮은 위해성으로 인해 관리 대상(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에서 제외된 바 있음
- 최근 가정용으로 직립식 교환대의 소비 증가와 이로 인한 안전 사고 발생이 다수 보고됨에 따라 관리 필요성 제기

< 3. 규제 합리화 > 기술 발전에 따른 유통 품목의 품질 향상



- 제품 출시 후 기술 고도화에 따른 유통 품목의 품질 수준의 향상으로 부적합률이 낮고 최근 3년간 비데 관련 위해 사례가 적음
- 다만, 현행법상 비데는 '안전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업계에서 규제 완화 수요가 있음

□ 제품안전 규제합리화('25년까지 인증품목 10%축소) 추진 등에 필요한, 現 안전기준·규제수준 적정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요구

- 안전기준 제·개정 근거자료 마련, 안전관리품목 재검토(매2년), 한-EU FTA 전기용품 관리수준 검토(매3년) 시, 단발성 연구용역에 의존

* 전안법 시행규칙 제61조(규제 재검토), 어린이제품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한-EU FTA 부속서 2-나-3 전자제품(상품무역위원회에서 위해평가 검토)

- 美, EU 등은 한정된 자원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방대한 제품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과학적 방법으로 위해요인을 식별·평가*

* (美) 위해성평가관리(Risk Assessment Management), (EU) 위해성평가지침 (Risk Assessment Guideline), (日) R-MAP 기반 제품 위해성 평가

◆ 제품 리스크 평가 ◆

□ 제품 리스크 평가

- 시중 유통 중이거나 유통 준비 중인 품목 및 제품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위해 수준*) 평가하는 기법

* 중대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4단계로 위해 수준을 구분

□ 제품 리스크 평가 방법 분류

구분	대상	위해 시나리오	발생 빈도	위해의 심각성	유사 위해 평가 방법	후속조치
포괄적 품목 리스크 평가	안전관리 대상 全 품목	사고 발생, 위해 보고 (신고) 시나리오	위해 보고 건수 / 유통현황 (통계 등)	경상~사망 (4단계) 구분	R-Map	안전관리 수준 조정 심층 리스크 평가 항목 발굴
심층 품목 리스크 평가	신제품, 규제완화 수요 등 주요 관심 품목	전문가의 정성적 시나리오 유추 + 유사 품목 기준 및 사고사례 참고	시나리오 각 단계별 발생 확률의 조합 (관련 제품시험 및 실태조사 실시)	경상~사망 (4단계) 구분	RAPEX RAG	안전기준 제·개정 소비자 안전사용 홍보
특정 제품 리스크 평가	사고·위해 신고 제품	사고 발생, 위해 보고 (신고) 시나리오	위해 건수/유통량 또는 시나리오 발생확률	경상~사망 (4단계) 구분	R-Map RAPEX RAG	제품 리콜 등 안전조치 소비자 안전사용 홍보
제품 리스크 자가진단	기업 출시 준비 제품 소비자불만 다수 제품	사업자의 정성적 시나리오 유추 + 정부가 사고·위해 사례 등 정보(DB) 지원	시나리오 각 단계별 발생 확률의 조합 (사업자 추론)	경상~사망 (4단계) 구분	RAPEX RAG ISO 12100 CENELEC 32	출시 전 제품 개선 출시 후 문제 제품 자율조치

□ 국외 리스크 평가 제도 현황

국가	방법론	관련 기관	특이사항	비고
EU	RAPEX RAG	EC 및 EU 회원국	RAPEX RAG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성적+관련 위해 사례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유추	심층 품목 리스크 평가 유사
일본	R-MAP	METI + NITE	사고 보고제도 활성화로 일본 내 사고 발생 데이터가 충분 → R-MAP	특정 제품 리스크 평가 유사
미국	Risk Assessment	CPSC	사고 보고자료, 상해 위해정보, 사고조사 등을 통해 쌓은 DB로 위해 시나리오 분석 실시 → 리스크 평가 수행	포괄적 품목리스크 평가 유사

II

'24년 사업 성과 및 '25년 추진 방향

1

'24년 사업 주요 성과

- 전안법 및 어린이제품법 안전관리대상 품목(262개)*에 대한 국내 위해 사례 및 화재 모니터링 자료 확보('20년~'23년) [상세: 붙임1]

* 안전관리 대상 전 품목 282개 중 부품 및 부속품으로 사고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제품 제외

				최종 리스크		
				2020년	2021년	2022년
연번	구분	인증구분	품목명			
1	생활용품	안전인증	화장실용 전기기기	B1	C	C
2	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	바퀴달린 운동화	R1	C	C
				제품 유행에 따른 사용감소에 따라 세부적인 실태조사 후 규제완화 가능성 판단 필요		
				감전사고 저감으로 인한 리스크 감소로 물 주변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지속 모니터링 필요		
연번	구분	인증구분	품목명	2020년	2021년	2022년
1	생활용품	안전확인	이불자전거	B3	A1	A1
2	생활용품	안전확인	헬스기구	B3	A1	A1
3	생활용품	안전확인	실내용 바닥재	B2	B2	B3
4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	라디오 수신기	C	C	B1
5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유아용 침대	B3	A1	A1
6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유아용 캐리어	B3	A1	A1
				홀트레이닝 등 헬스 사용 변화에 따른 사고발생 증가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캐리어 사고가 22년이 앞년도들보다 2배 증가하였으며, 끈 풀림 또는 후크 파손 등 확인에 따라 품목 안전성조사 필요		

- 융복합·신제품 내 위해 요인 검토 및 기존 관리품목의 규제 수준 조정을 위해 '24년 12개 품목을 선정, 심층 리스크 평가 실시 [상세: 붙임2]

- 화장실용 전기기기(인증), 수유패드(확인), 가 속눈썹(공급자), 교류 어댑터(인증)은 현행 규제수준 완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저위험)
 - 합성수지제 바닥매트*(폼아마이드), 온열팩(일산화탄소 방출)은 신규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규제 도입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 * 합성수지제 바닥매트의 경우 시험방법의 문제가 확인되어 시험방법 개정검토 필요
- 가정용 기저귀 교환대, 무선충전기, 타투스틱커 2개 품목은 소비자 계도(주의보) 및 시장감시 강화(사업자 계도)로 위해 저감 가능(중,고위험)
- 소형변압기, 전기용접기 2개 품목은 현행 유통제품의 부적합률 및 위해 수준을 고려 시 현행 안전관리 수준(안전인증) 유지 필요(중대위험, 고위험)
- 전동식 가구, 유아용 의자 2개 품목은 위해 저감을 위한 안전 관리 대책 수립에 대한 검토 필요(중대위험, 고위험)

□ '24년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실시

- 무시동히터, 식품모방완구 등 '24년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국립 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등과 소비자 안전사용 캠페인 실시

* 무시동히터(1월), 전동킥보드(9월), 식품모방완구(11월), 에탄올화로(12월)



< 무시동히터 화재예방 캠페인 >



< 식품모방완구 안전사용 캠페인 >

□ 제품 리스크 평가 제도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 제품 안전관리 제도 내 리스크 평가 활성화를 위해 개발된 리스크 평가의 제도 이행 지침(안)*개편 및 세부 매뉴얼** 개발

* 자료수집(기본법 15조, 16조), 조사(기본법 9조), 위해기반 리콜(기본법 10조, 11조) 등 현행법을 근거로 「소비자 제품의 리스크 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안) 마련('23년)

** 시장 출시 전·후 제품 리스크 평가 주체별 역할 구체화 및 표준절차 제시

- 미국, 영국 등 해외 리스크 평가 관련 기관과 교류*하고 관련 학회를 통해 제품 리스크 평가 관련 연구성과 공유**를 통해 전문 역량 강화

* 미국 CPSC 양자회의('24.12.18), 영국 OPSS 방문('24.11),

** 한국안전학회 추계 학술대회 내 '제품 리스크 평가' 특별 전문세션 개최('24.11.1)



< 영국 OPSS 방문 ('24.11) >



< 한국안전학회 특별 전문세션 개최 ('24.11)>

- 리스크 평가 기반의 제품안전 정책 의사결정 지원
- 산업계 활성화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평가 품목 범위 확대

□ 리스크 평가에 기반한 제품안전 정책 의사결정 지원

- 소관 부처가 불명확한 비관리 제품의 발굴 및 리스크 평가를 통해 비관리 제품의 소관 부처 조정을 위한 협의* 시 정책지원

* 제품안전 관계부처는 관리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비관리 제품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제품안전 정책협의회'를 운영('17년~) 중이나, 품목선정 및 부처 지정 절차 개선 필요

- 위해 우려제품(사회 이슈)에 대한 사고조사, 리콜 시 리스크 평가 활용을 확대하여 후속 조치 지원 및 기업의 안전관리 활동 계도

* 언론 이슈, 소비자 신고 다발 제품 등에 대해 사고조사와 연계하여 신속한 리스크 추정 및 안전조치가 필요한 제품의 평가 결과에 따라 리콜, 소비자 안내 등 실시

□ 제품 리스크 평가에 대한 산업계 대응 역량 강화

- 제품 리스크평가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 및 국제표준 기반의 평가 보고서 작성 도구 품목의 추가 확대를 통해 기업 편의·활용 확대

* 온라인 플랫폼(kipsrisk.kr)을 통해 국내 사고사례, 안전기준 등을 기반으로 구성한 리스크 평가 자가진단 프로그램과 국제표준 기반의 리스크 평가 보고서 작성 도구 무료 제공 중

- 수출기업 대상 리스크 평가 관련 맞춤형 컨설팅 및 방문 교육을 실시하여 리스크 평가에 대한 산업계 인식 제고 및 역량 증대

□ 리스크 평가에 따른 후속조치 활성화

- 제품안전 기관 및 관련 협·단체와 협력*하여 위해요소 저감을 위한 리스크 평가 결과 기반의 후속 조치 활성화 방안 수립

* '24년 소방연 소비자원 소비자 단체, 품목별 협·단체 등과 함께 소비자 안전 캠페인 실시

- 소비자 계도, 안전기준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따른 위해저감 효과 분석

* 사고저감, 인식 제고 등 위해 저감 효과 분석에 따라 향후 후속조치 방안 개선 등에 반영

Ⅲ

'25년 제품 리스크 평가 세부 추진 과제(案)

추진 목표

제품 리스크 평가 활용 확산을 통해
제품안전 정책지원 및 산업계 안전관리 역량 강화

추진 방향

- ◇ (품목평가) 품목 단위 포괄적·심층 리스크 평가 및 후속조치 지속 추진
- ◇ (정책지원) 비 관리제품 및 사회적 이슈 제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 시 리스크 평가를 활용한 정책 의사결정 지원
- ◇ (기업지원) 유럽 제품안전 정책 변화를 고려한 리스크평가 프로그램 확대와 찾아가는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통한 산업계 활성화 지원

세부 추진 과제

품목 단위 리스크 평가 내실화	안전 이슈 제품 리스크 평가	기업 리스크 평가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① 포괄적 리스크 평가 기반 위해경향 분석 [안전관리대상 <small>全</small> 품목]	③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 [비관리 제품 부처 협의 등]	⑤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 범위 확대 [완구, 가전기기 등]
② 심층 리스크 평가 및 후속조치 활성화 [24년도 평가 체계 준용]	④ 위해 우려 품목의 리스크 평가 지원 [사고조사 지원]	⑥ 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교육 등]

1 (계속) 품목단위 리스크 평가 내실화

① 안전관리대상 전 품목에 대한 위해경향 분석 지속 추진('24년~)

-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등 우리원 안전관리 대상 **전** 제품 (부품류 外)의 **포괄적 리스크평가***를 통해 위해 경향을 분석 매년 실시

* **포괄적 리스크 평가** : 품목 유통량(인구대비 사용률 추정) 및 위해 건수와 심각성 (소비자원 병원데이터, 소방청 화재데이터)을 활용해 제품 위험 등급을 단순 정량 평가

연번	인증구분	품목명	위해 수준				
			2020	2021	2022	2023	2024
1	안전확인	전기청소기	중위험	중위험	중위험	중위험	평가 예정
2	안전확인	구강청결기	중위험	중위험	저위험	저위험	
3	안전확인	전동보드	고위험	고위험	고위험	중대위험	

- 사회적 관심 품목이나 범주가 넓은 경우 리스크 평가 품목의 **세분화**를 통해 위해 경향 분석에 대한 실효성 확보

* ('24년) 완구 및 학용품 품목 세분화, ('25년) 놀이기구, 가전기기 등으로 세분화 확대

< 포괄적 리스크 평가 품목 세분화 사례(예시) >

연번	인증구분	품목명	위해 수준			
			2020	2021	2022	2023
1	안전확인	학용품	고위험	고위험	고위험	고위험

↓ 품목 세분화

1	안전확인	크레용류 학용품	중위험	중위험	중위험	중위험
2	안전확인	종이류 학용품	중위험	중위험	중위험	중위험
3	안전확인	기타 학용품	고위험	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4	안전확인	연필류학용품	중위험	중위험	중위험	중위험

- 기존 소비자원 위해정보 外, **화재 및 폭발 등 소방청(화재)데이터**를 확보해 전기용품의 포괄적 리스크평가 체계 보완

< 화재 데이터 활용한 심각도 구분 >

심각도	화재	상해
4	화재, 건물 소손	사망
3	화재	중상, 입원 치료
2	제품 발화, 제품 소손	통원치료
1	제품 발연	경상

일본 R-map 심각도 기준

심각도	화재로 인한 피해
4	사망
3	부상
2	화재
1	피해 없음

화재 데이터 (화재, 부상, 사망)



심각도	화재로 인한 피해
4	사망
3	부상
2	화재
1	피해 없음

화재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심각도 기준 정립

② 수요조사 결과 기반 심층 리스크 평가 및 후속조치 활성화

- (심층 평가) 융복합·신기술 또는 소비 환경 변화 품목 등에 대해 안전관리 필요성 및 현행 관리수준의 적절성 검토 시 과학적 근거 제공

* 소비자, 관련 기관 및 부처 등 이해관계자 수요를 통해 평가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시중 유통제품의 시험·분석 및 소비자 사용 실태조사를 통한 리스크 결과 산정

< 심층 리스크 평가 추진체계 >



- (후속 조치) 심층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소비자·업체 대상 안전 홍보 및 안전기준 제·개정에 대한 정책 제언 등을 통해 위해 저감 추진

* 소방연,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등 유관 기관 및 협·단체와 협력한 대국민 안전 캠페인 지속
- 후속 조치 이후 사고 발생 현황, 소비자 인식 제고 등 위해저감 효과 분석을 통한 성과 측정 및 후속 조치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과거 후속조치 지원 결과 >



(a) 에탄올 화로



(b)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화재예방

③ 안전관리 사각지대 제품에 대한 부처 협의 시 정책 지원

- 리스크 평가를 활용하여 ‘제품안전 정책협의회’에서 협의가 필요한 위해우려 비관리 제품 선정을 위한 정성·정량적 근거 제공

*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의2에 근거하여 제품안전 관리 기준이 없는 비관리 품목에 대한 소관부처 지정 등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17년~) 중

- **(정보 수집)** 부처·유관 기관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비관리 제품 조사
- **(위해 분석)** 제품의 위해 요인을 식별하고, 위해도를 산출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위해우려 비관리 제품(안) 마련 및 논의 근거 제공

* (기존) 유해성(Hazard) 조사 → (개선) 제품의 위해성(Risk) 기반 평가·검토

①비관리 제품 목록화	②위험요소 평가검토	③정책협의회 개최	④소관부처 지정·안전관리
전담 기관의 조사 (범부처·관계기관 대상)	위해성 기반 위해 우려 비관리 제품 목록 도출	도출된 위해 우려 비관리 제품 대상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지정된 부처에서 안전관리방안 마련

④ 제품 사고 등 위해 우려 제품의 리스크 평가 지원

- 사회적 이슈, 소비자 신고 다발 제품 등에 대한 사고조사와 연계하여 신속한 위해도 추정 및 안전조치가 필요한 제품 평가

- **(제품선정/시나리오)** 이슈 발생 제품 / 해당 사고 시나리오

* 예) UV네일 램프 광안전성, 스타벅스 서머캐리백 유해물질 등

- **(시험/평가)** 기본적으로 시험 미 실시* / 특정 제조·유통사의 판매량, 위해 건수 (VOC, 신고 등)를 바탕으로 ISO GUIDE 51에 따라 평가

* 필요 시 제품안전 기관과 협력하여 재현 실험 등을 통해 리스크 저감 방안 마련

- **(후속조치)** 평가 결과에 따라 업계 안전조치 협조 및 소비자 안내 등

- 이슈 제품의 신속한 평가 지원을 위한 품목 특성을 반영한 평가계수 (노출계수 등) 기본값 설정(안) 제안

* 현행 리스크 평가는 위해도 산출을 위해 관련 계수의 실태조사를 통해 계수를 적용 중이나, 이슈 제품 특성상 실시간 평가가 필요하므로 대비책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기업 리스크 평가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⑤ 해외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의 품목 확대

- **(방법 개발)** 국제표준에 기반하여 현재 제공 중인 기계류 외 가전 기기류, 완구류 등 리스크평가를 위한 방법 연구·개발
 - * 온라인 플랫폼(kipsrisk.co.kr)상 현재 제공 중인 기계류(ISO 12100) → 가전기기류 (LVD, CENELEC Guide32), 완구(TD, Toy directive) 등 추가 확장
- **(프로그램 확대)** 개발된 평가방법에 따라 기업이 수출 시 활용 가능한 리스크평가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의 품목 추가 및 서비스 제공

< 가전기기류(LVD) 리스크평가 템플릿(예시) >



리스크 평가 보고서 (요약)

CENELEC GUIDE 32

출판 연도 : 2004-2003



리스크 평가 보고서 (상세내용)

CENELEC GUIDE 32

출판 연도 : 2004-2003

‘저전력제품’
CENELEC GUIDE 32

출판 연도 : 2004-2003

리스크 평가 기법 정보

기법명	기법 대표번호
기법 주소	
담당자명	담당자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E-mail

리스크 평가 계층 정보

계층명	계층 설명	
	요청명	제품 설명
기층 설명		
제품 서진		

* 리스크계층명 : 계층 30~100, 계층 75~1,800을 계층으로 정의.

리스크 평가 결과

위험 상태	유역 범위	사나리오	S	F	P	리스크 지수
1 고장 작동	감전	충전 중 감전	S2	F2	-	③
2 고장 작동	스파크	직접 충전 때 스파크 발생	S2	F1	P1	②
3 정상 작동	화상	담배로 인한 화상	S1	F2	P1	②

사고 발생

위험 상태 ③

위험 상태	유역 범위	사나리오	S	F	P	리스크 지수
1 고장 작동	감전	충전 중 감전	S2	F2	-	③
2 고장 작동	스파크	직접 충전 때 스파크 발생	S2	F1	P1	②
3 정상 작동	화상	담배로 인한 화상	S1	F2	P1	②

* 리스크 지수는 충전 상태 및 스파크 발생 단계로 분류한 결과로, 높은 리스크 값을수록 우선 검토된다.

위험 상태 상세 내용

위험 상태	유역 범위	사나리오	S	F	P	리스크 지수
1 고장 작동	감전	충전 중 감전	S2	F2	-	③
2 고장 작동	스파크	직접 충전 때 스파크 발생	S2	F1	P1	②
3 정상 작동	화상	담배로 인한 화상	S1	F2	P1	②

위험 상태 상세 내용

위험 상태	유역 범위	사나리오	S	F	P	리스크 지수
1 고장 작동	감전	충전 중 감전	S2	F2	-	③
2 고장 작동	스파크	직접 충전 때 스파크 발생	S2	F1	P1	②
3 정상 작동	화상	담배로 인한 화상	S1	F2	P1	②

위험 상태 상세 내용

위험 상태	유역 범위	사나리오	S	F	P	리스크 지수
1 고장 작동	감전	충전 중 감전	S2	F2	-	③
2 고장 작동	스파크	직접 충전 때 스파크 발생	S2	F1	P1	②
3 정상 작동	화상	담배로 인한 화상	S1	F2	P1	②

위험 상태 상세 내용

위험 상태	유역 범위	사나리오	S	F	P	리스크 지수
1 고장 작동	감전	충전 중 감전	S2	F2	-	③
2 고장 작동	스파크	직접 충전 때 스파크 발생	S2	F1	P1	②
3 정상 작동	화상	담배로 인한 화상	S1	F2	P1	②

위험 상태 상세 내용

위험 상태	유역 범위	사나리오	S	F	P	리스크 지수
1 고장 작동	감전	충전 중 감전	S2	F2	-	③
2 고장 작동	스파크	직접 충전 때 스파크 발생	S2	F1	P1	②
3 정상 작동	화상	담배로 인한 화상	S1	F2	P1	②

위험 상태 상세 내용

위험 상태	유역 범위	사나리오	S	F	P	리스크 지수
1 고장 작동	감전	충전 중 감전	S2	F2	-	③
2 고장 작동	스파크	직접 충전 때 스파크 발생	S2	F1	P1	②
3 정상 작동	화상	담배로 인한 화상	S1	F2	P1	②

위험 상태 상세 내용

위험 상태	유역 범위	사나리오	S	F	P	리스크 지수
1 고장 작동	감전	충전 중 감전	S2	F2	-	③
2 고장 작동	스파크	직접 충전 때 스파크 발생	S2	F1	P1	②
3 정상 작동	화상	담배로 인한 화상	S1	F2	P1	②

위험 상태 상세 내용

위험 상태	유역 범위	사나리오	S	F	P	리스크 지수
1 고장 작동	감전	충전 중 감전	S2	F2	-	③
2 고장 작동	스파크	직접 충전 때 스파크 발생	S2	F1	P1	②
3 정상 작동	화상	담배로 인한 화상	S1	F2	P1	②

위험 상태 상세 내용

6 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설명회)** 기업의 제품 개발 단계 및 출시 전 자발적인 리스크 평가 인식 제고 및 활용 확산을 위해 **기업 대상 설명회 등 지속 추진**
 - * '23년 기업 설명회 만족도 조사결과 심층 교육과 컨설팅 필요 응답 기업 40% 이상
- **(컨설팅·교육)** CE 인증 등 기업이 수출 시 필요한 리스크 평가 보고서 작성 방법 및 활용에 대한 **방문 컨설팅 및 교육 실시**
 - * 해외인증지원단, TBT 종합지원센터 등 해외 인증 및 규제 관련 기관과 협력

사 업 명
(18)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 (3731-3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12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제고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적합성정책국	박형민	노학엽 연구관	이진구
		시험인증정책과	043-870-5480	043-870-5487	043-870-5482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조직명	이 름	연락처
		한국제품안전 관리원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센터	박종수 센터장	070-5223-3839
		한국표준협회	KS인증센터	권영상 센터장	02-6240-4639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엔지니어링/ 표준실	장근영 실장	053-718-849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	4,755	3,818	3,818	3,778	3,778	△ 40	△ 1.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760	4,760	4,755	0	5	3,818	3,818	3,808 [3,808]	3,818	3,808 [3,808]	0	10	3,778	
·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300	300	295 [295]	0	5	400	400	390 [390]	400	390 [390]	0	10	500	
·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1,125	1,125	1,125 [1,125]	0	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0	0	1,100	
· 항바이러스 국제 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2,785	2,785	2,785 [2,785]	0	0	1,718	1,718	1,718 [1,718]	1,718	1,718 [1,718]	0	0	1,563	
· 한제품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 운영	550	550	550 [550]	0	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0	0	555	
· 시험인증산업 실태조사	-	-	-	-	-	-	-	-	-	-	-	-	60	
○ 비목별 분류(합계)	4,760	4,760	4,755	0	5	3,818	3,818	3,808 [3,808]	3,818	3,808 [3,808]	0	10	3,778	
· 일반연구비 (260-01)	-	-	-	-	-	-	-	-	-	-	-	-	60	
· 민간경상보조 (320-01)	550	550	550 [550]	0	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0	0	555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300	300	295 [295]	0	5	400	400	390 [390]	400	390 [390]	0	10	500	
· 사업출연금 (350-02)	3,910	3,910	3,910 [3,910]	0	0	2,818	2,818	2,818 [2,818]	2,818	2,818 [2,818]	0	0	2,663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가능비목별 분류(합계)	4,760	4,760	4,755	0	5	3,818	3,818	3,808 [3,808]	3,818	3,808 [3,808]	0	10	3,778
·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300	300	295 [295]	0	5	400	400	390 [390]	400	390 [390]	0	10	500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300	300	295 [295]	0	5	400	400	390 [390]	400	390 [390]	0	10	500
·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1,125	1,125	1,125 [1,125]	0	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0	0	1,100
- 사업출연금 (350-02)	1,125	1,125	1,125 [1,125]	0	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0	0	1,100
· 항바이러스 국제 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2,785	2,785	2,785 [2,785]	0	0	1,718	1,718	1,718 [1,718]	1,718	1,718 [1,718]	0	0	1,563
- 사업출연금 (350-02)	2,785	2,785	2,785 [2,785]	0	0	1,718	1,718	1,718 [1,718]	1,718	1,718 [1,718]	0	0	1,563
· 한제품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운영	550	550	550 [550]	0	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0	0	555
- 민간경상보조 (350-01)	550	550	550 [550]	0	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0	0	555
· 시험인증산업 실태조사	-	-	-	-	-	-	-	-	-	-	-	-	60
- 일반연구비 (260-01)	-	-	-	-	-	-	-	-	-	-	-	-	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 시험인증산업 고도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및 역량을 제고하고, 부정성적서 발행·유통·사용을 방지하여 적합성평가체계 신뢰성 강화
-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제품·서비스의 안전기준, 성능 미달 사례 등 부정 성적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및 적합성평가*의 신뢰 저하를 방지하고자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센터’ 운영
- * 적합성평가: 제품·서비스·공정 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시험, 검사, 인증 등의 활동
-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미래 유망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서비스* 개발(기반 조성, 공인성적서 발행 등)을 통해 신뢰성·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의 조기산업화 및 시장창출을 지원하기 위함
- * 객관적인 제3자가 표준 혹은 안전기준에 기반한 시험·인증 평가 결과를 제공
-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구축)** 국민생활과 밀접한 항바이러스 생활용품에 대한 민간 국제인증체계 구축지원을 통해 제품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안전과 수출기업 및 시험인증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함
- **(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운영)** 단일제품에 관리부처 및 목적이 다른 다수의 인증 취득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부담(시간·비용)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국내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함
- **(시험인증산업 실태조사)** 시험인증 분야의 시장규모, 고용 및 양성현황, 국내외동향 등 실태조사를 통해 시험인증산업 및 제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부정행위 조사 등)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를 위반한 성적서가 발행·유통·사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부정 성적서 발행·유통·사용 등 신고의 접수·상담

2. 사실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에 성적서 관련 자료 요구
4. 성적서 관련 사업장 조사
5. 그 밖에 부정행위 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적합성평가의 실태조사)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적합성평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적합성평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행정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의 장 또는 적합성평가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술개발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제도의 동향 및 적합성평가 수요조사
2. 적합성평가 수요에 대비한 적합성평가 기준 개발 및 활용
3. 적합성평가에 관한 응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4. 적합성평가에 관한 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5. 적합성평가 관련 표준물질, 시험장비의 개발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적합성평가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산업분야와 관련된 적합성평가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확충계획
 2.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계획
 3.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고도화계획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적합성평가기관이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고도화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사업자와 공인기관에 관계 물품·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부정 또는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합성평가사업자와 공인기관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관계 물품·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해당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 시간,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부정행위 조사 업무의 위탁)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기관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부정행위조사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 1. 비영리법인일 것
 - 2.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부정행위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 3.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출 것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정행위조사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③ 부정행위조사기관 소속 직원은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수행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부정행위조사기관에 대하여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행위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부정행위조사기관이 수행하는 부정행위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 8. (생략)
 - 9. 제21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사업 (이하 생략)

< 산업표준화법 >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략)
2. 산업기술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3. ~ 6. (생략)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자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4.01.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 '14.04. : '2015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선정
- '18.09 :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 규제혁신 방안으로 'LED제품 인허가 간소화 과제' 채택
- '20.04.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
- '20.05. :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하여 관련 생활용품 시험인프라 지원 검토
- '21.04.08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시험인증 기관의 역량 강화 지원
- '21.05.18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 지정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한국제품안전관리원)
- '21.07.29 :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 및 「다수인증 원스톱 처리 협약식」 개최
(산업부장관 주관)
- '22.09.15 : 한수원 및 발전5社 간 부정성적서 신고·조사 협력 업무협약 체결
- '23. : 다수인증 원스톱 기업지원 제품군 확대(총 25개 제품군)
- '23.05 : 항바이러스 민간 인증시스템 구축 및 제품인증 시범운영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595	6,345	4,760	3,818	3,77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민간위탁,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민간위탁), 한국표준협회(보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출연/전담기관)
- 사업 수혜자 : 적합성평가기관 및 사업자, 일반 국민(소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년)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출연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1,100백만원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출연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1,563백만원	89.7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운영	보조	한국표준협회	555백만원	100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 ('25) 400백만원 → ('26) 500백만원

- (요구) '적합성평가관리법'(21.04.08 시행)에 따라 적합성평가 사업자의 부정성적서 발행·유통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해 기획특별조사 등 직권조사 기능 강화 등 부정행위 조사 활성화 필요
- (산출)
 - 조사센터인건비 : 268백만원 = 40백만원 x 12명 x 56%
 - 조사센터출장비 : 24백만원=0.1백만원×4명×60회
 - 외부전문가 조사수당 : 138백만원
= 현장조사 48백만원(0.4백만원×2명×60회) + 자문회의 90백만원(0.3백만원×5명×60회)
 - 시험수수료 : 30백만원 = 1백만원×30회
 - 홈페이지 유지 및 홍보 : 40백만원

②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 ('25) 1,100백만원 → ('26) 1,100백만원

- (요구) 탄소중립, 첨단산업 등 시험인증서비스 기반이 미약하거나 없는 유망분야의 시험절차서, 치공구(지그) 등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 (산출)
 - 과제수행비 : 1,071백만원 = 7개(과제선정 수)×153백만원(지원금액)
 - 사업관리비 : 29백만원

③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 ('25) 1,718백만원 → ('26) 1,563백만원

- (요구) 항바이러스 제품의 초기 기능성 뿐 아니라 효과의 지속성 및 유효성에 대한 인증기준 및 기반을 구축하여 생활제품의 신뢰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 (산출)
 - 국제민간인증체계 구축 및 운영 : 1,105백만원
= 운영체계 마련 300백만원 + 인증기준 마련 450백만원(150백만원×3품목)
+ 국내외유효성 검증 210백만원(70백만원×3품목) + 지속성 국제기반 마련 145백만원
 - 시험인프라 구축 : 420백만원 = 3품목 x 200백만원 x 70%(인프라구축에 대한 지원율)
 - 사업관리비 : 38백만원

④ 한 제품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운영

: ('25) 600백만원 → ('26) 555백만원

- (요구) 단일품목 다수인증 취득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원스톱처리 플랫폼(다수인증 지원센터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서비스 고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지원 필요
- (산출)
 - 다수인증 지원센터 운영 : 555만원
= 원스톱처리 서비스 200백만원(25품목×8백만원) + 전문창구 운영 200백만원(8개기관×25백만원)
+ 다수인증 플랫폼 운영 및 서비스 고도화 155백만원

⑤ 시험인증산업 실태조사

: ('26) 60백만원

- (요구) 국내외 시험인증 산업의 방향 및 수요 등을 분석하여 제조기업들의 시장 진출, 관련분야의 역량강화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데이터 확보
- (산출)
 - 시험인증산업 실태조사 6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760 백만원	<p>○ 민간경상보조(320-01) : 600백만원</p> <p>가. 한 제품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운영 (6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인증 지원센터 운영 : 600만원 = 원스톱처리 서비스 250백만원=25품목x10백만원 + 전문창구 운영 200백만원=8개기관x25백만원 + 다수인증 플랫폼 운영 및 서비스 고도화 150백만원 <p>○ 민간위탁사업비(320-02) : 400백만원</p> <p>가.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4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센터인건비 : 200백만원 = 35백만원 x 10명 x 57.1% 조사센터출장비 : 15백만원 = 0.1백만원x3명x50회 외부전문가 조사수당 : 105백만원 = 현장조사 30백만원=0.3백만원x2명x50회 + 자문회의 75백만원=0.3백만원x5명x50회 시험수수료 : 25백만원 = 1백만원x25회 홈페이지 유지 및 홍보 : 55백만원 <p>○ 사업출연금(350-02) : 2,818백만원</p> <p>가.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1,1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수행비 : 1,071백만원 = 7개(과제선정 수)x153백만원(지원금액) 사업관리비 : 29백만원 <p>나.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구축 (1,718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인증체계 구축 및 운영 : 945백만원 = 운영체계 마련 : 210백만원 + 인증기준 마련 : 450백만원(150백만원x3품목) + 유효성 검증 : 150백만원(150백만원x3품목) + 지속성 평가 기반마련 : 150백만원 시험인프라 구축 : 735백만원(3품목x350백만원x70%) 사업관리비 : 38백만원 		3,818 백만원	<p>○ 민간경상보조(320-01) : 555백만원</p> <p>가. 한 제품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운영 (555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인증 지원센터 운영 : 555만원 = 원스톱처리 서비스 200백만원=25품목x8백만원 + 전문창구 운영 200백만원=8개기관x25백만원 + 다수인증 플랫폼 운영 및 서비스 고도화 155백만원 <p>○ 민간위탁사업비(320-02) : 500백만원</p> <p>가.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5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센터인건비 : 268백만원 = 40백만원 x 12명 x 56% 조사센터출장비 : 24백만원 = 0.1백만원x4명x60회 외부전문가 조사수당 : 138백만원 = 현장조사 48백만원=0.4백만원x2명x60회 + 자문회의 90백만원=0.3백만원x5명x60회 시험수수료 : 30백만원 = 1백만원x30회 홈페이지 유지 및 홍보 : 40백만원 <p>○ 사업출연금(350-02) : 2,663백만원</p> <p>가.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1,1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수행비 : 1,071백만원 = 7개(과제선정 수)x153백만원(지원금액) 사업관리비 : 29백만원 <p>나.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구축 (1,563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민간인증체계 구축 및 운영 : 1,105백만원 = 운영체계 마련 : 300백만원 + 인증기준 마련 : 450백만원(150백만원x3품목) + 국내외 유효성 검증 : 210백만원(70백만원x3품목) + 지속성 평가 기반마련 : 145백만원 시험인프라 구축 : 420백만원(3품목x200백만원x70%) 사업관리비 : 38백만원 <p>○ 일반연구비(260-01) : 60백만원</p> <p>가. 시험인증산업 실태조사 (6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인증산업 실태조사 1건 x 6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추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KOLAS 인증 시험절차서· 시험성적서 발행 (단위 : 건)	목표	7	7	7	7	7	당해연도 선정과제 수 7개	시험절차서 및 기술로드맵 개발 또는 시험성적서 발행 과제 수	시험절차서 및 성적서 발행 과제 집계 (수행기관)
	실적	7	7	7	진행중	-			
	달성도	100	100	100	-	-			
유망시험서비스 교육·세미나 개최 (단위 : 건)	목표	7	7	7	7	7	당해연도 선정과제 수 7개	신규 개발 유망시험서비스 관련 산업계 대상 교육·세미나 개최 과제 수	개발 시험서비스 교육·세미나 개최 과제 집계 (수행기관)
	실적	7	7	7	진행중	-			
	달성도	100	100	100	-	-			
다수인증 지원센터 전문상담 (단위 : 건)	목표	-	-	230	230	230	당해연도 선정과제 수 7개	다수인증 지원센터 온·오프라인 전문 상담 건수 합계	다수인증 지원창구 및 온라인플랫폼 통계
	실적	-	-	245	진행중	-			
	달성도	-	-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유입 (초)미세먼지 차단망 성능평가개발」 등 새로운 시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및 관련 시장 창출에 기여('14~'21 동안 총 28개 시험서비스 개발)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운영, '22년도 15건 접수·처리 * 부실·부정 성적서 유통 및 사용을 방지하여 국민(소비자) 보호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발전사*와 부정·부실 시험성적서 신고·조사체계 구축 MoU 체결 * 한수원 및 발전5社 간 부정성적서 신고·조사 협력 업무협약 체결 - 다수인증 지원센터 개소 운영 통합창구 11개소, 전문창구 6개소 운영을 통해 기업 맞춤형 기본·심화 상담 및 인증 취득 시나리오 제공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 착용형 IoT 융합 제품의 사용 환경 내구성 시험인증 서비스」 등 새로운 시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및 관련 시장 창출 기여('14~'22 동안 총 35개 시험 서비스 개발)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운영, '23년도 16건 접수·처리 - 적합성평가기관 및 성적서 수요처 등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 개최(2회) - 다수인증 지원센터 확충 및 온라인 플랫폼 개시 (오프라인) 전국 기업 대상 다수인증 제품 관련 인증제도 안내, 상담, 기술지도 등을 위한 다수인증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통합창구 11개소, 전문창구 7개소) (온라인) 다수인증 온라인 플랫폼 개시('23.7월~, 누적방문 8,703건)를 통해 온라인 상담(1,055건), 다수인증 시나리오 생성(967건) 등 다수인증 지원 서비스 제공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형 원전 안전 등급기기 전자파 적합성 검증요건 시험인증 서비스」 등 새로운 시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및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여('14~'23년 동안 총 42개 시험서비스 개발)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민원조사(30건) 및 특별조사(1건) 수행 - 출연연 등 적합성 평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 개최(2회) - 다수인증 지원센터 운영 및 홍보 다각화 (오프라인) 전국 기업 대상 다수인증 25개 제품군 관련 인증제도 안내, 상담, 기술지도 등을 위한 다수인증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통합창구 11개소, 전문창구 8개소) (온라인) 다수인증 온라인('24년 방문 5,071건)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상담(35건), 다수인증 시나리오 생성(476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기능 개발 등 기능 고도화 (홍보) 다양한 홍보채널(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수인증 사업을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와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성과 공유회 개최를 통한 우수사례 홍보 - 항바이러스 민간인증 시범운영 성과교류회 개최 국제 항바이러스 연구기관 등 동향 교류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시범운영을 통한 인증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적합성평가 신뢰성 제고)** 시험인증서비스 분야 대상으로 부정행위 조사센터를 운영하여 신뢰성* 강화
- * 부정성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제품·서비스의 성능·안전 미확보, 성적서에 대한 신뢰 저하 등의 문제 방지
- **(산업 및 소비자 지원)** 신수요 시험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조기에 상용화 지원함으로써 산업발전*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움
- * 조기사장 진출 및 시장경쟁력 확대 및 국제 상호인정 성적서를 통한 수출 지원
- **(국민 안전 확보)** 국민생활과 밀접한 항바이러스 생활용품에 대한 민간 국제인증 체계를 구축하여 제품 신뢰도 및 국민 안전 확보
- **(인증업무 지원)** 한제품에 적용되는 다수의 법정인증 취득으로 인한 기업의 시간·비용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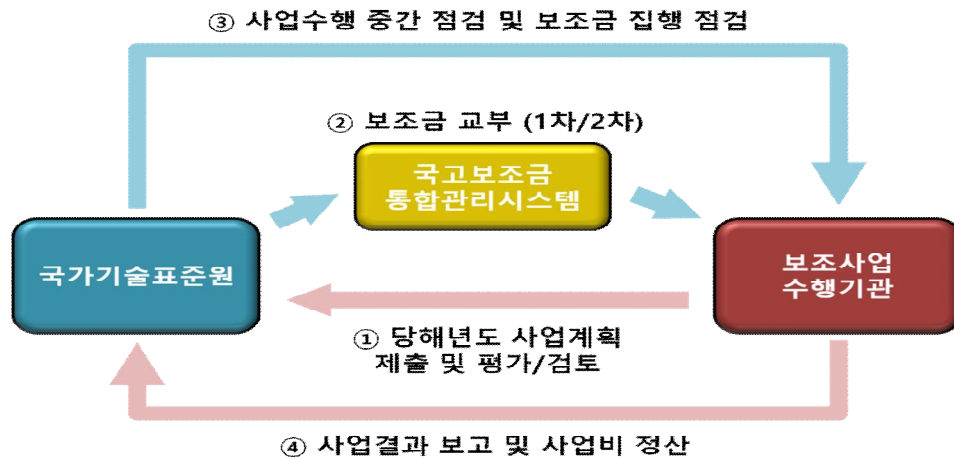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한 제품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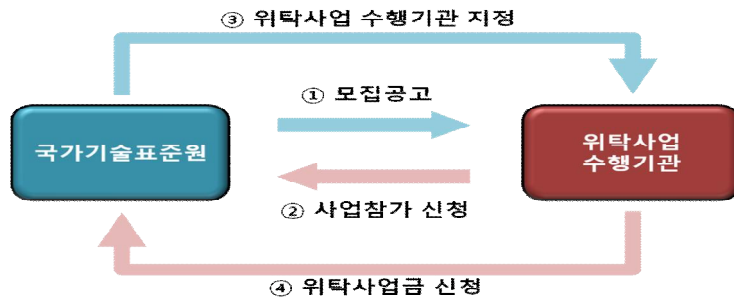
- (320-01)민간경상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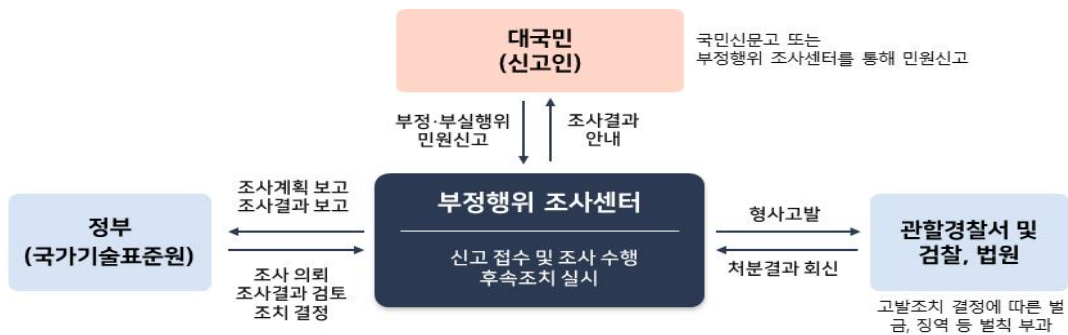
부처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산업부 (555백만원)	=>	한국표준협회 (555백만원)	-	-

□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 (320-02)민간위탁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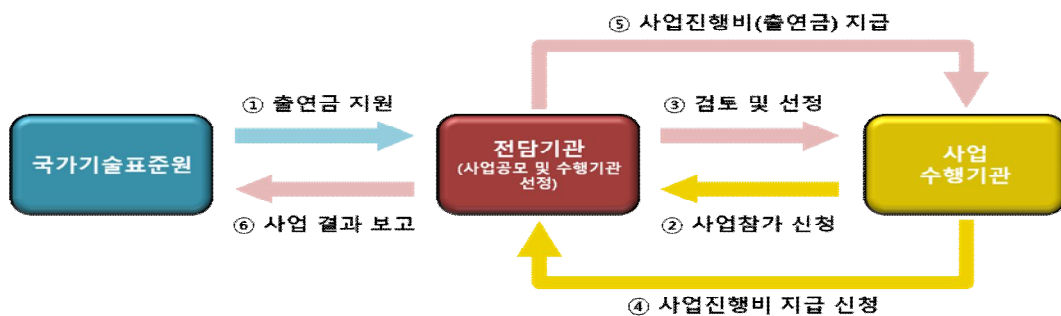
-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체계



부처	적합성평가관리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3조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산업부 (500백만원)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500백만원)	-	-

□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 (350-02)사업출연금



부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산업부 (2,663백만원)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663백만원) *사업관리비 67백만원	=>	수행기관 (2,596백만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760	3,818	7,137	7,279	7,650	
2025~2029		3,818	3,778	6,440	6,605	7,69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부정행위 조사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부정성적서의 발행·유통·사용 등에 대한 사전 조사 방안 및 센터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여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 (예결위,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 「적합성 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행위조사센터 조사범위가 확대되었고 적합성 평가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기반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음. (산중위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시험인증산업 고도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 역량을 제고하고, 부정성적서 발행 등을 감시하는 등 신뢰성 강화를 위한 사업목적에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우수사례들을 발굴하여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2024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부정행위 조사센터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신고제도 교육, 설명회 개최 및 다매체 홍보 활용
 - 전문성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교육 및 필요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별조사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
- 지속적으로 부정행위 조사범위 확대 등 적합성 평가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신기술에 대한 시험인증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확보 지속 추진 중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향후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계획 기술
- 사업의 전체 계획 및 중장기 재정소요와 재원조달계획 등의 예산조치 가능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과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이 인정되며, 예산 증액에 대한 근거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신기술 개발 증가에 따른 시험인증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관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에 맞추어 기반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 전문인력 사전확보와 신기술·신제품 시험인증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예산 확보 필요
-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시험인증산업 고도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역량을 제고하고, 부정성적서 발행등을 감시하는 등 신뢰성 강화를 위한 사업목적에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우수사례들을 발굴하여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3) 부처 건의사항: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595	-	5,595	-	-	-	5,595	5,587	99.9	99.9	-	8
2023	6,345	-	6,345	-	-	-	6,345	6,332	99.8	99.8	-	13
2024	4,760	-	4,760	-	-	-	4,760	4,755	99.9	99.9	-	5
2025	3,818	-	3,818	-	-	-	3,818	3,808	99.7	99.7	-	1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5,245	5,245	5,245	5,245	-	5,245	5,245	-	-	100
2023	5,820	5,820	5,820	5,820	-	5,820	5,820	-	-	100
2024	4,460	4,460	4,460	4,460	-	4,460	4,460	-	-	100
2025. 12월기준	3,418	3,418	3,418	3,418	-	3,418	3,418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사업의 조달청 계약과정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 8백만원 발생
2023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등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 13백만원 발생
2024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등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 5백만원 발생
2025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등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 10백만원 발생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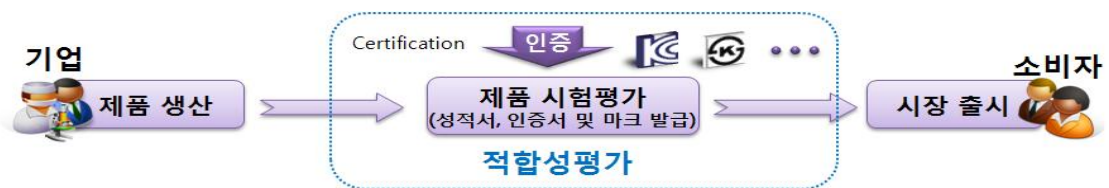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적합성평가의 정의 및 종류

□ 적합성평가의 정의

- 『적합성평가』는 기업이 만든 제품·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인증,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행위
 - ① 제품출시를 위한 성능검증, ② 국민안전, 환경 등 정부정책 이행, ③ R&D 성공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



- 신뢰성이 핵심요소로, 부정·부실시험 등이 있을 경우 ① 소비자 피해 발생, ② 성능 및 안전 미확보, ③ 시험·인증 자체의 공신력 상실 우려

□ 적합성평가의 종류

- 적합성평가에는 시험·검사·교정·인증 등이 있으며, 적합성평가기관이라 함은 교정기관·인증기관·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을 말함



① 적합성평가의 신뢰성 제고

- 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 위반시 처벌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된 기관, 성적서 등을 공표하여 유통을 차단
- 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시험인증 관련 자료제출 및 조사 권한 명시

② 국제 공인기관 관리 강화

- 인정취소, 정지 등 징벌적 행정처분 사항을 법에 명시하고, 과징금제도 도입
- 인정정지에 해당하나, 시험기관 이용자의 업무불편을 유발하는 경우 해당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 * 다만, 해당 기관이 지적받은 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만 적용

③ 시험인증산업 역량강화 지원

- 신제품 시험 수요 대응 등을 위해 시험기준 개발, 시험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 역량 강화 지원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내용 >

- (1장) 총칙(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장) 적합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업무, 성적서 발급, 부정행위 조사)
- (3장) 인정기구의 설치 및 공인기관(인정기구, 정기검사, 인정취소, 과징금)
- (4장) 적합성평가 업무 역량강화 지원(실태조사, 인력양성, 국제협력, 기술개발의 추진, 시설·장비 고도화)
- (5장) 보칙(자료요구 및 검사, 청문, 권한 위임·위탁)
- (6장) 벌칙(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참고 3

부정행위 조사제도 도입 배경 및 개요

□ 추진배경

- 부정성적서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 제품·서비스의 성능·안전 미확보, 성적서에 대한 신뢰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부정성적서 확산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기관의 부정성적서 유통 차단 제도 필요

< 참고 : 부정·부실행위 사례 >

- ◇ 증간소음 왜 심한가 했더니... 인증등급 96% 부실 ('19.5.3., 동아일보 등)
 - 감사원 조사결과 시공업체 A는 공인 받지 않은 기관에서 발급한 '허위성적서' 를 제출, 시공업체 B는 품질 시험성적서 위조했으나 인정기관이 성능인정서 발급
- ◇ 원전 납품 발전차 성적 조작해 66억 챙겼다. ('20.12.30., 조선일보)
 - C사는 한수원이 발주한 비상용발전차 4대의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

□ 주요내용

- 적합성평가관리법은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의 부정성적서 발급을 금지하고 있음

법 제5조(성적서 발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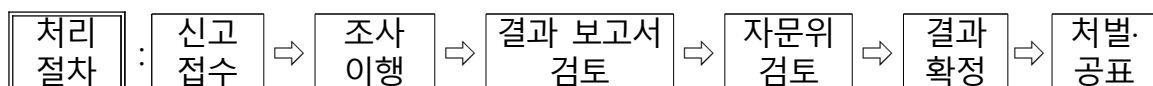
- ③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성적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1. 평가 결과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
 2.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법 제6조(부정행위 조사 등)

- ⑤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하여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된 성적서가 유통되지 않도록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동 법령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부정행위 조사를 이행하고 부정행위 사업자에 대한 조치 이행

< 조사추진 순서 >



사 업 명						
(19) 한국제품안전관리원지원 (3732-3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12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한국제품안전관리원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관운영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오유천 과장	이동진 연구관	조아윤 연구사
		제품안전정책국	043-870-5410	043-870-5415	043-870-5412
	사업시행주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경영지원실	송지환 실장	070-5223-1429
제품안전 관리사업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최형기 과장	류지영 연구관	-
		제품안전정책국	043-870-5420	043)870-5421	-
	사업시행주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경영지원실	송지환 실장	070-5223-1429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한국제품안전 관리원지원	-	5,657	5,657	7,646	7,646	1,989	35.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657	5,657	5,657 [5,657]	5,657	5,657 [5,657]	-	-	7,646
· 기관운영 지원						4,387	4,387	4,387 [4,387]	4,387	4,387 [4,387]	-	-	6,386
· 제품안전관리 사업 지원						1,270	1,270	1,270 [1,270]	1,270	1,270 [1,270]	-	-	1,260
○ 비목별 분류(합계)						5,657	5,657	5,657 [5,657]	5,657	5,657 [5,657]	-	-	7,646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5,657	5,657	5,657 [5,657]	5,657	5,657 [5,657]	-	-	7,64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657	5,657	5,657 [5,657]	5,657	5,657 [5,657]	-	-	7,646
· 기관운영 지원						4,387	4,387	4,387 [4,387]	4,387	4,387 [4,387]	-	-	6,386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4,387	4,387	4,387 [4,387]	4,387	4,387 [4,387]	-	-	6,386
· 제품안전관리 사업 지원						1,270	1,270	1,270 [1,270]	1,270	1,270 [1,270]	-	-	1,260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1,270	1,270	1,270 [1,270]	1,270	1,270 [1,270]	-	-	1,2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지원) 제품(전기·생활·어린이제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사업 및 운영 지원
- (기관운영지원)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예산 및 제품안전관리 신뢰도 확보를 위한 제품안전관리 통합업무시스템 구축예산 지원
- (제품안전관리사업지원) 온라인 시장 등에 따른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통 차단 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 ① (불법·불량 제품단속) 국민신문고, 소비자단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접수된 KC 미인증, 도용 등 각종 불법·불량제품 신고건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형사고발, 과태료 등 행정조치 및 시정권고
- ② (리콜이행점검) 안전성조사 결과 리콜조치된 제품 사업자의 본사, 물류창고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리콜이행실적(수리, 교환, 환불 등)을 진도점검(업체당 2~6회)하고, 실적이 부진한 사업자에게는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조치
- ③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등)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소비자 안전감시원(약 200명)을 활용,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 대해 리콜제품, 불법의심제품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연중 상시 모니터링 실시
- ④ (안전기준준수대상감시체계구축) 전안법 개정('18.7)에 따라 사전규제가 완화되어 사후관리만 가능한 26개 품목에 대해, 시장현황조사, 안전기준 준수율 조사를 거쳐 부적합제품 사업자 대상 재발방지 제도·홍보 등을 통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제4조(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제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품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품의 제조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① 제10조·제11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조치의 결과를 보고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제21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의 결과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서 작성·제출의 절차와 방법, 이행점검·출입, 보완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1조의3(관리원의 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2. 안전기준의 제정·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3.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보급
4.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5. 수입·유통 제품의 안전성조사
6. 제품의 수거등의 이행점검
7. 제품사고 정보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통계작성·관리
8. 제품사고조사분석 및 위해도평가
9. 기업 및 단체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한 협력 및 지원 사업
10.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② 추진경위

- '04. 6월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 수립
- '05.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
- '06.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 '07.12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
- '10. 1월 “전기용품 제조자시험결과인정제도” 시행
- '10. 2월 “제품안전기본법” 제정
- '11. 2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 '11. 3월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공고
- '14. 2월 “제2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공고
- '14. 6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정
- '15. 6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
- '16. 1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정
- '16. 3월 “제1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공고
- '17. 1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
- '17. 3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 '17.11월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공고
- '18. 3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설)
- '19.12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 '19.12월 “제2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공고
- '20. 7월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공고
- '22. 1월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공고
- '22. 2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 '23. 4월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 '23. 9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제품안전관리원 보조사업 지원의 법적근거 명확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5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5,657	7,64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사업 수혜자 : 기업·소비자 등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관운영 지원	보조	한국제품 안전관리원	6,386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제품안전관리 사업 지원	보조	한국제품 안전관리원	1,260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4 (운영재원)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기관운영 지원

: ('25 예산) 4,387백만원 → ('26 예산) 6,386백만원, 1,999백만원 증액

- (요구)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영 예산과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예산 요구
- (산출) 인건비 3,081백만원, 경상비 1,473백만원, 제품안전관리 통합업무시스템 구축 1,832백만원

② 제품안전관리 사업지원

: ('25 예산) 1,270백만원 → ('26 예산) 1,260백만원, 10백만원 감액

㉠ 불법·불량제품 단속 : ('25 예산) 200백만원 → ('26 예산) 200백만원, 전년 同

- (요구)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단속·행정조치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출장비 97.7백만원, 차량유지비 53.3백만원, 사업운영비 49백만원

㉡ 리콜이행점검 : ('25 예산) 81백만원 → ('26 예산) 81백만원, 전년 同

- (요구)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리콜대상제품에 대한 사업자방문 및 이행점검·독려를 통해 국민 생명 및 재산을 안전사고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출장비 31.5백만원, 차량유지비 32백만원, 사업운영비 17.5백만원

㉢ 안전모니터링 구성·운영 등 : ('25 예산) 410백만원 → ('26 예산) 410백만원, 전년 同

- (요구) 안전감시원이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불법·불량제품 유통여부를 감시하고 안전감시원 교육 등 역량 제고를 위해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제품안전감시원 관리 120백만원, 제품안전감시원 수당 260백만원, 사업운영비 30백만원,

㉣ 안전기준준수대상감시체계 구축 ('25 예산) 579백만원 → ('26 예산) 569백만원, 10백만원감액

- (요구) 사전인증의무 등이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출장비 32백만원, 시료구입비 100백만원, 시험수수료 347백만원, 제도홍보비 9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기관운영 지원 4,387	<p>< 기관운영 지원 4,387백만원 ></p> <p>가. (인건비) 2,914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인력 : 50.08백만원 × 13명 = 651.04백만원 · 사업인력 : (불법불량제품단속) 31명 × 46.38백만원 + 3명 × 6개월/12개월 × 41.34백만원 + (리콜이행점검) 10명 × 46.4백만원 +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 2명 × 46.5백만원 + (안전기준준수대상 감시체계 구축) 4명 × 51.5백만원 = 2,262.79백만원 · 조정재원 : 0.17백만원 <p>나. (경상비) 1,473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운영비 : 12개월 × 4.92백만원 = 59백만원 · 임차관리비 : 12개월 × 117.83백만원 = 1,414백만원 	기관운영 지원 6,386	<p>< 기관운영 지원 6,386백만원 ></p> <p>가. (인건비) 3,081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인력 : 51.84백만원 × 13명 = 673.92백만원 · 사업인력 : (불법불량제품단속) 31명 × 48.01백만원 + 3명 × 42.79백만원 + (리콜이행점검) 10명 × 48.03백만원 +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 2명 × 48.13백만원 + (안전기준준수대상 감시체계 구축) 4명 × 53.31백만원 = 2,406.48백만원 · 조정재원 : 0.6백만원 <p>나. (경상비) 1,473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운영비 : 12개월 × 4.92백만원 = 59백만원 · 임차관리비 : 12개월 × 117.83백만원 = 1,414백만원 <p>다. (제품안전관리 통합업무시스템 구축) 1,832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시스템 : 1식 × 1,832백만원 = 1,832백만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제품안전 관리 사업지원 1,270	<p>< 제품안전관리 사업지원 1,270백만원 ></p> <p>가. (불법불량제품단속) 2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출장비 : 63회 × 31명 × 50천원 = 97.65백만원차량유지비 : (임차료) 5대 × 12개월 × 660천원 + (유류비) 5대 × 25,000km × 108.3원 = 53.14백만원사업운영비 : 1식 × 49백만원 = 49백만원조정재원 : 0.21백만원 <p>나. (리콜이행점검) 81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출장비 : 63회 × 10명 × 50천원 = 31.5백만원차량유지비 : (임차료) 3대 × 12개월 × 660천원 + (유류비) 3대 × 25,000km × 108.3원 = 31.88백만원사업운영비 : 1식 × 17.5백만원 = 17.5백만원조정재원 : 0.12백만원 <p>다.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 41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제품안전감시원 관리 : 6개단체 × 20백만원 = 120백만원제품안전감시원 수당 : 160명 × 32.5일 × 50천원 = 260백만원사업운영비 : 1식 × 30백만원 = 30백만원 <p>라. (안전기준준수대상 감시체계 구축) 579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출장비 : 160회 × 4명 × 50천원 = 32백만원시료구입비 : 1,000개 × 100천원 = 100백만원시험수수료 : 1,000개 × 347천원 = 347백만원안전기준준수 가이드북 제작 및 홍보 : 1식 × 100백만원 = 100백만원	<p>< 제품안전관리 사업지원 1,260백만원 ></p> <p>가. (불법불량제품단속) 2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출장비 : 63회 × 31명 × 50천원 = 97.65백만원차량유지비 : (임차료) 5대 × 12개월 × 660천원 + (유류비) 5대 × 25,000km × 108.3원 = 53.14백만원사업운영비 : 1식 × 49백만원 = 49백만원조정재원 : 0.21백만원 <p>나. (리콜이행점검) 81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출장비 : 63회 × 10명 × 50천원 = 31.5백만원차량유지비 : (임차료) 3대 × 12개월 × 660천원 + (유류비) 3대 × 25,000km × 108.3원 = 31.88백만원사업운영비 : 1식 × 17.5백만원 = 17.5백만원조정재원 : 0.12백만원 <p>다.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 41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제품안전감시원 관리 : 6개단체 × 20백만원 = 120백만원제품안전감시원 수당 : 160명 × 32.5일 × 50천원 = 260백만원사업운영비 : 1식 × 30백만원 = 30백만원 <p>라. (안전기준준수대상 감시체계 구축) 569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출장비 : 160회 × 4명 × 50천원 = 32백만원시료구입비 : 1,000개 × 100천원 = 100백만원시험수수료 : 1,000개 × 347천원 = 347백만원안전기준준수 가이드북 제작 및 홍보 : 1식 × 90백만원 = 9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불법제품 현장조사수 (단위: 건)	목표				2,100	2,260	전년 불법제품 현장조사수 대비 5% 상향	Σ 현장조사수	불법제품 단속 실적 보고서 (내부자료)
	실적				-	-			
	달성도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5	<p>① 제품안전관리원 기관운영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정원 증원(3명)에 따른 인건비 지원(총 63명) <p>②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단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불법의심제품 신고건에 대해 10,685개 업체를 조사하고 5,110개 업체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지자체에 행정 조치 요청 등을 실시('25.11월 기준) * 형사고발(829), 지자체 통보(1,135), 판매차단 요청(3,145), 인증기관통보(1) <p>③ 리콜이행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콜 이행, 리콜 계획서·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 1,327건 상담('25.11월 기준) - 리콜이행점검 1,462건 실시('25.11월 기준) <p>④ 제품안전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불법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판매 여부 133,994건 모니터링('25.11월 기준) - 불법제품 15,733건에 대해 판매차단 요청 등 조치('25.11월 기준) <p>⑤ 안전기준 준수대상 감시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기준 준수대상 안전실태조사 : 700개 제품 안전실태조사 실시 - 부적합 사업자 점검 및 제도 : 421개 부적합 업체 중 366개 업체 제도 - 안전기준준수대상 사업자 제도 홍보 : 2,352개 업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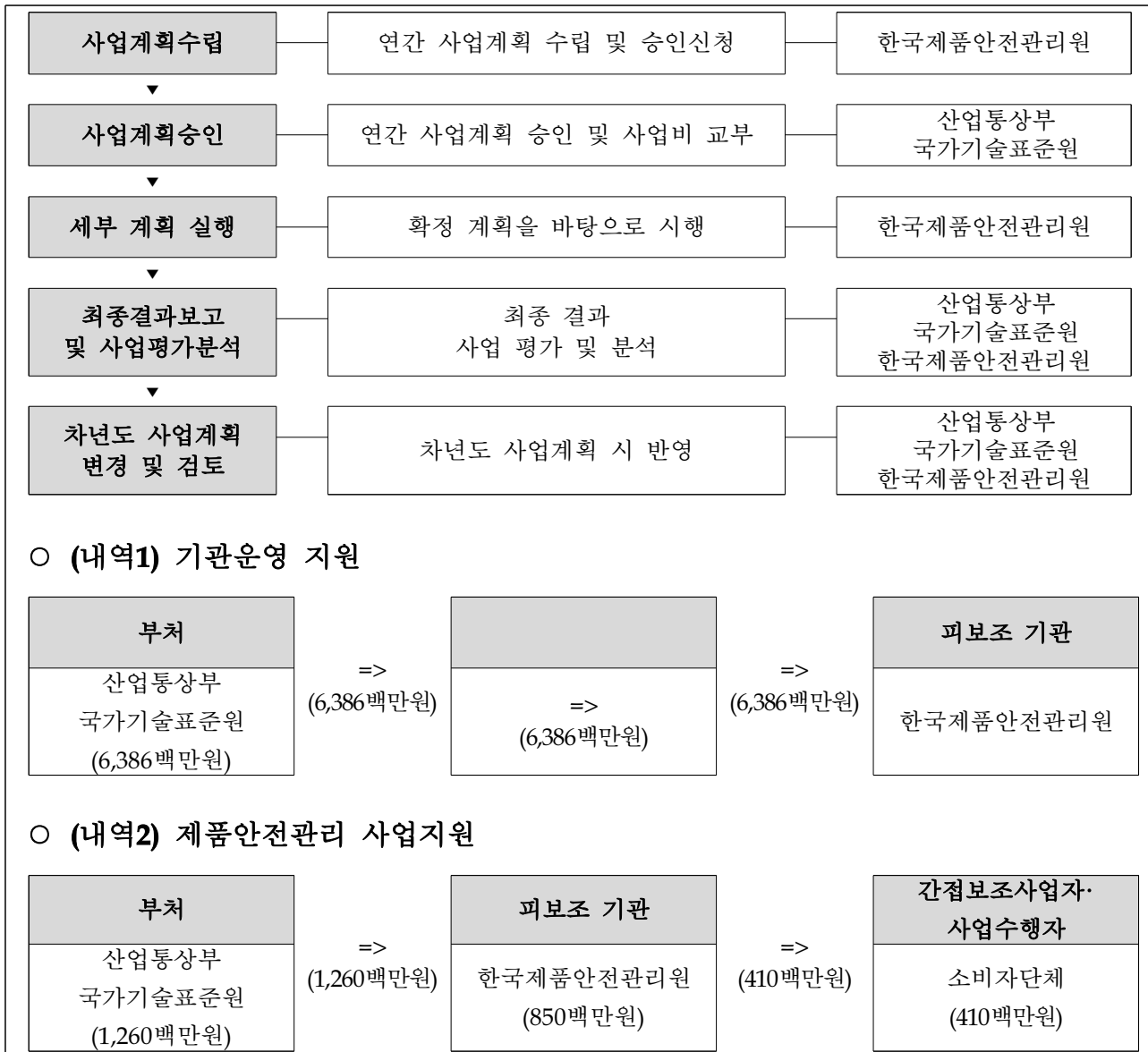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클라우드 기반 보안 인프라 및 내·외부 연계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인 기관 관리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온라인 등 유통시장에서 불법·위해제품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여 위해제품 유통 차단 효과를 높이고,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안전 제고
-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확대하여 합동단속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리콜 이행 점검 지원을 통해 지역 단위 안전관리 역량과 제도의 실효성 향상
- 지속적인 리콜 이행 점검으로 리콜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 온라인 쇼핑몰과의 협의체 운영 및 기업 자율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여 리콜 회수율 제고와 함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정착
- 소비자단체 감시원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영세 사업자 대상 홍보 활성화를 통해 상시 감시체계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 시중에 유통되는 다양한 제품 중 안전취약 품목을 선별하여 실태조사와 현장 계도를 강화함으로써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 차단 및 안전한 유통환경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5,657	8,925	9,371	9,840	
2025~2029		5,657	8,215	8,100	7,455	7,82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4년 예결위(서일준, 임미애 위원)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정보화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품 안전관리 통합업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보화 예산 15억원 증액 필요

○ '25년 예결위(장철민, 오세희, 이종욱 위원)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정보화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품 안전관리 통합업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보화 예산 15억원 증액 필요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6년 클라우드 기반 정보보안체계 및 제품안전관리 통합업무시스템 구축 예산 반영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기관운영 지원

-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안정적인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제품안전 업무 추진

○ 제품안전관리 사업지원

- 시중 유통중인 불법·불량제품을 현장조사하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판매중지 등의 실질적인 단속을 통해 소비자 안전 확보
- 리콜 조치된 위해제품에 대한 철저한 리콜이행점검으로 사업자의 신속한 리콜제품 회수를 유도하여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보호
- 제품안전감시원을 통해 KC마크 미부착, KC허위표시, 표시사항 위반 제품을 모니터링 하여 불법제품 및 리콜제품의 시중유통을 감시 및 방지
- 시중 유통되는 안전기준준수대상제품에 대해 안전실태조사, 사업자 계도 등 시장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소비자에게는 위해한 제품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5,657	-	5,657	-	-	-	5,657	5,657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12월기준	5,657	5,657	5,657	5,657	-	5,657	5,657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1

제품안전관리 통합업무시스템 구축 설명자료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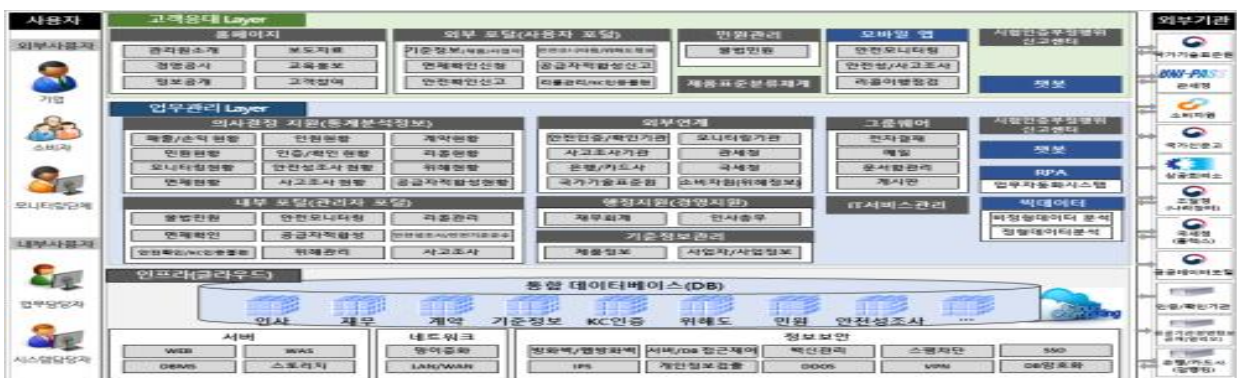
- (목적)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안정적인 기관운영 및 정보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제품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
 - * 관리원은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하여 '18.9월 설립, '22.2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
- (추진경과) '25년 산중위 예산소위 15억 반영 후 예결위 미반영
 - ※ 시스템 구축 계획 관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기재부(정보통신예산과) 검토('24.8월)

□ 현황 및 문제점

- (정보보안) 그룹웨어 및 외부 홈페이지를 사설 인터넷 업체가 관리하고 내·외부망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정보보안 취약* 및 개인정보 관리 미흡**
 - * 랜섬웨어 공격으로 그룹웨어 데이터 손실('24.2월)
 - ** '23~'24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D등급으로 개인정보위 과태료 및 과징금('25.2월) 처분
- (사업관리) '18년 구축 이후 시스템의 빈번한 수정 등으로 관리원 홈페이지 및 업무시스템의 오류가 증가하고, 국민안전을 위한 제품안전정보* 연계 부족
 - * 불법민원조사, 안전성조사, 면제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신고, 안전확인신고 정보
- (ERP System) 관리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수행 업무 및 사무행정*처리의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비효율적 업무수행
 - * 규정관리, 인사관리, 계약관리, 감사관리, 이사회관리 등

□ 주요 개선방안

- 클라우드 기반 보안 인프라 및 내·외부 연계 통합시스템 목표모델



참고2

제품안전관리 사업 추진절차

□ 불법·불량제품 단속(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3 등)



- (신고접수) 국민신문고, 제품안전관리원 직접신고 등을 통해 민원 접수
- (계획통지) 조사대상업체에 조사계획 통지
 - 필요에 따라, 통지없이 불시 방문조사
- (방문조사) 신고건에 대해 실제 불법·불량제품 여부 확인
 - 확인서 및 증빙서류 확보
- (조사업체 조치) 불법제품 확인 시 고발 및 행정조치

□ 리콜이행점검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의3 등)



- (계획 수립) 연간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조사품목, 조사시기 등)
- (시험·검사) 시중 유통제품을 구매하여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적합 여부 조사
- (행정처분) 리콜명령 등 행정조치
 - 최초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및 재시험 등 신청 기회 부여 후 최종 행정처분
- (이행점검) 리콜이행 점검 후 후속조치 실시(고발, 보완명령 등)

□ 안전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등 (제품안전기본법 제19조 등)

구 분	운영주체	기능 및 역할
주 관	국가기술표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감시 정책·지침 마련 · 분야별 모니터링 운영주체 선정 등
운 영	모니터링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 운영(제품안전감시원포함) · 제품안전감시원 교육·관리 등
시장감시	모니터링요원(감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 유통제품의 위해정보 수집·보고

* 관리가 취약한 문방구, 소매점 등을 중심으로 KC 마크 미부착, 표시사항 위반 제품 등을 집중 단속

- (체계) 위촉된 제품안전감시원이 전국 오프라인 판매처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쇼핑몰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품시장 감시 실시
- (모니터링대상) 불법제품(KC마크 미부착, 표시사항 미비 등) 및 리콜제품

□ 안전기준준수대상감시체계 구축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3 등)



- (계획수립) 안전기준준수대상 24개 품목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 (시장현황조사) 품목별 제품 유통현황, 사업체 현황 등 시장현황 파악
- (안전실태분석) 품목별 업체규모별 안전기준 준수율, 부적합 부위 등 실태분석
- (홍보 및 계도) 취약원인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후 계도 실시

참고3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6~'28년, 수립중)
-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25년)

비전		국민생활 안심을 위한 체계적인 제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목 표	소비자의 안전성은 UP!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DOWN!	(안전인증 품목수) 45 개('22년) → 10% 축소 조정('25년) (170개 세부품목)
		(안전기준 정비) 52 건('22년) → 전수 검토·개정('25년)
		(제품사고조사) 73 개사('22년) → 150 개사('25년)
		(위해차단시스템) 235,129 개('22년) → 246,000 개('25년)
		(제품안전 모니터링) 127,847 건('22년) → 150,000 건('25년)
		(제품안전정보 활용) 350,000 건/일('22년) → 380,000 건/일('25년)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1	[제도] 기업·소비자 Win-Win을 위한 제도 개선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전관리대상 규제수준 정비 ② 안전기준 전면 재검토 및 일제 정비 ③ 민간주도 안전관리 기반 마련 ④ 국제적 환경변화 신속 대응
2	[사전] 소비자 안전강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관리제품 규제공백 해소를 위한 체계 정비 ② 신기술·신수요제품 안전관리 ③ 사회적 배려계층 안전관리 지원 ④ 제품 리스크평가 활성화
3	[사후] 충충한 시장관리를 위한 사후관리의 디지털 전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데이터 기반 제품사고조사 추진 체계 구축 ② 위해상품 유통·판매 차단 강화 ③ 안전성조사 원스톱 업무처리시스템 구축 ④ 온라인쇼핑몰 위해우려 유통제품 안전관리
4	[기반] 효율적인 제품안전 관리 기반 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내외 제품안전 채널 협력 확대 ② 제품안전 기술개발 및 역량강화 ③ 맞춤형 제품안전정보 제공 및 활용 확대 ④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역량강화

②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5~'27년)

비전 · 목표

선제적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로 어린이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저감**

- 어린이제품 인증간수 대비 사고건수 비율 20% 이하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안전관리**

-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조사 연간 500건 이상
- 유해제품 공표 및 국내유입 차단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 안전기준 정비 (제·개정 10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 안전친화기업 10개社 선정
- 어린이제품안전교육 로드맵 수립

4대 전략 · 9대 과제

**1.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 ① 어린이 제품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제도 고도화
- ②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선

**2.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안전관리 강화**

- ①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 ② 국내에서의 안전한 어린이제품 유통환경 조성

**3.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 ①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도입
- ② 융복합·신기술 제품 대응을 위한 안전기준 조사연구센터 신설

**4.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 ①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우수기업 지원
- ② 기업 친화적 인증 기반 제도 개선
- ③ 어린이제품 안전인식 제고

참고4

제품안전관리제도

- (개요)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출시 전·후의 안전관리제도를 운영 중

* 관련법 :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시장출시 前)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은 위해도*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할 경우 시장 진입 및 유통 허용 등 사전안전관리

*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안전기준준수)로 관리

< 안전관리 수준, 절차 및 품목현황 >

구분			안전관리품목		
			전기	생활	어린이
인증	①안전인증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인증기관)→KC 표시	36	5	4
	②안전확인	제품시험(안전확인시험기관)→KC 표시	64	26	17
	③공급자적합성	자체 제품시험 可→KC 표시	76	16	14
	④안전기준준수	KC 표시 안함(별도 사전 인증 규제 없음)	-	27	-
	합계	285개 [전기·생활(250개)/어린이(35개)]	176	74	35
검사	안전성검사 (2개) [재사용전지 2개 품목]	제품 안전성검사(안전성검사기관)→KC 표시	2	-	-
	합계	287개 [전기·생활(252개)/어린이(35개)]	178	74	35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확인신고

- (시장출시 後) 시중 제품에 대한 위해요인 확인 시 제품수거, 유통차단, 개선권고, 소비자주의보 발령 등 사후안전관리

* 안전성 조사, 제품사고조사, 불법제품조사, 해외리콜제품 대응 등

01	안전성조사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법적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조사후 조치(리콜처분, 개선권고 등)
02	제품사고조사	동일 유형의 제품사고 재발방지 및 위해 확산방지 등을 위해 사고발생 제품에 대한 사고원인규명 조사후 조치(소비자주의보 등)
03	불법제품조사	미인증·허위표시 제품에 대해 불법제품 신고 내용확인 및 제품정보 검색 등 조사후 조치(판매금지 등)
04	해외리콜제품대응	해외 리콜제품 등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정보 분석후 조치(수입통관 차단 등)

사 업 명						
(20) 해외인증지원체계기반구축 (3731-32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117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28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해외인증지원체계기반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해외인증 지원체계 기반구축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박형민	양희찬 연구관	황상훈
	사업시행주체	해외인증지원단	043-870-5480	02-6240-4771	02-6240-4769
		한국표준협회	KS인증센터	권영상 센터장	02-6240-4620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성능개선 및 현지실증지원 내역사업	소관부처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엔지니어링표준실	장근영 실장	053-718-8493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이용현	-	오병규
		인증산업진흥과	043-870-5500	-	043-870-5503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엔지니어링표준실	장근영 실장	053-718-849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해외인증지원체계 기반구축	1,860	1,070	1,070	1,060	1,060	△10	△0.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60	1,860	1,860 [1,860]	-	-	1,070	1,070	1,070 [1,070]	1,070	1,070 [1,070]	-	-	1,060	
· 해외인증 종합 지원체계 구축 운영	320	320	320 [320]	-	-	370	370	370 [370]	370	370 [370]	-	-	360	
· 해외인증지원 시험인프라 구축	1,540	1,540	1,540 [1,540]	-	-	600	600	600 [600]	600	600 [600]	-	-	600	
· 해외인증취득을 위한 성능 개선 및 현지실증	-	-	-	-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100	
○ 비목별 분류(합계)	1,860	1,860	1,860 [1,860]	-	-	1,070	1,070	1,070 [1,070]	1,070	1,070 [1,070]	-	-	1,060	
· 민간경상보조 (320-01)	320	320	320 [320]	-	-	370	370	370 [370]	370	370 [370]	-	-	360	
· 사업출연금 (350-02)	1,540	1,540	1,540 [1,540]	-	-	700	700	700 [700]	700	700 [700]	-	-	7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860	1,860	1,860 [1,860]	-	-	1,070	1,070	1,070 [1,070]	1,070	1,070 [1,070]	-	-	1,060	
· 해외인증 종합 지원체계 구축· 운영	320	320	320 [320]	-	-	370	370	370 [370]	370	370 [370]	-	-	360	
-민간경상보조 (320-01)	320	320	320 [320]	-	-	370	370	370 [370]	370	370 [370]	-	-	360	
· 해외인증지원 시험인프라 구축	1,540	1,540	1,540 [1,540]	-	-	600	600	600 [600]	600	600 [600]	-	-	600	
-사업출연금 (350-02)	1,540	1,540	1,540 [1,540]	-	-	600	600	600 [600]	600	600 [600]	-	-	600	
· 해외인증취득을 위한 성능 개선 및 현지실증	-	-	-	-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100	
-사업출연금 (350-02)	-	-	-	-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해외인증지원체계기반구축)** 자국 우선주의 확산, 기술규제(인증) 심화에 대응하는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해외 인증취득 애로 해소 및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
-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해외인증 관련 지원사업 및 기관을 종합·연계하는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인증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 기업의 신속한 해외인증 취득 지원
- **(해외인증지원 시험인프라 구축)**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비용 저감 및 기간 단축)하는 시험 인프라 구축
 - * 해외인증 취득에 필요한 시험·검사 항목을 국내 시험인증기관 이용을 통해 가능하도록 시험 인프라 구축·고도화 추진
-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성능개선 및 현지실증지원)** 산업융합 신제품 등 중소·중견 기업 제품의 적시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인증 맞춤형 성능개선 및 수출 대상국 현지화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9조(기술개발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제도의 동향 및 적합성평가 수요조사
2. 적합성평가 수요에 대비한 적합성평가 기준 개발 및 활용
3. 적합성평가에 관한 응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4. 적합성평가에 관한 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5. 적합성평가 관련 표준물질, 시험장비의 개발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조(적합성평가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산업분야와 관련된 적합성평가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1.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확충계획
 - 2.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계획
 - 3.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고도화계획
 -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적합성평가기관이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고도화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국가표준기본법

- 제26조의 2(무역기술장벽 대응시책의 추진)

- ① 정부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및 국내외 협력
 - 2.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 3.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교육·훈련·조사·연구·개발 및 홍보
 - 4. 그 밖에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무역 및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 8. (생략)
 - 9. 제21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사업 (이하 생략)

○ 산업표준화법

-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1. 제29조제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 4.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 제3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2. 국제표준·외국표준, 그 밖의 각종 표준의 수집·보급
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조사·연구·개발·진흥·진단·지도 및 교육
4.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촉진하는 인증·평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략)
 2. 산업기술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3. ~ 6. (생략)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자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산업융합촉진법

-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융합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융합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 및 융자

- 제29조(산업융합 표준화)

① 정부는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략)
 2. 산업융합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2.11.23. : 제1차 수출전략 회의,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 소기관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정보제공부터 컨설팅, 사업신청까지 원스톱 지원 추진
- '22.12.27. : 산업부 업무보고, 「해외인증지원단」(국표원) 신설을 통한 소 주기 인증지원체계 확충 추진 보고
- '22.12.29. : 산업부-복지부 합동 업계 간담회, 해외인증 취득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해외인증 지원기관(12개) 협의체를 국표원이 총괄) 체결

- '23.1.18. :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1차 회의, 지원사업기관 및 시험인증기관 간 연계·협력 방안, 해외인증 지원단 구성·운영방안 등 논의
- '23.2.23. : 제4차 수출전략 회의,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 발표를 통해 해외인증 지원 강화 방안 전략 수립
- '23.2.23. : 해외인증 기업 간담회 개최, 수출기업 해외인증 애로사항 청취 및 종합 지원포탈 소개·시연회
- '23.3.13. : 수출투자 책임관 회의, 정보제공·컨설팅·취득비용 등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 창구를 구축(4월 예정)하여 지원대상 기업의 편의 제고 추진
- '23.4.4. : “해외인증지원단” 개소, 해외인증 소주기 종합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23.5.16. :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 마련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성능개선 및 현지실증 지원)

- o 제4차 수출 전략회의('23.2.23) 시 '신기술·융합제품' 기업의 해외 인증 애로사항 확인 후 '수출 기업을 위한 해외 인증 종합지원 전략' 마련('23.5.16)
- 중점 추진과제에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성능개선 등) 포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4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1,860	1,070	1,060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보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출연/전담기관)
- 사업 수혜자 : 수출 중소·중견기업, 시험인증기관, 적합성평가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보조	한국표준협회	360백만원	100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해외인증지원 시험인프라 구축	출연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600백만원	7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성능개선 및 현지실증지원	출연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100백만원	수행기관 유형별 달리 적용	산업융합촉진법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운영요령 제24조(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 ('25본예산) 370백만원 → ('26예산) 360백만원

- 해외인증 관련 지원사업 및 기관을 종합·연계하는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방안 고도화를 통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반영 요청

- (산출)

■ 인건비 : 150백만원

- 책임연구원 : 42백만원 (7백만원x12개월x1명x50%(참여율))
- 연구원 : 64.8백만원 (5.4백만원x12개월x1명)
- 연구보조원 : 43.2백만원 (3.6백만원x12개월x1명)

■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 : 210백만원

- 종합 정보플랫폼 구축·운영 : 85백만원
- 해외인증취득지원 : 125백만원
 - 회의수당 5백만원(0.2백만원x5명x5회) + 맞춤형 컨설팅 70백만원(0.35백만원x200회)
 - + 업계 설명회 10백만원(5백만원x2회)+ 품목별 가이드라인 40백만원(5백만원x8개)

② 해외인증지원 시험인프라 구축

: ('25본예산) 600백만원 → ('26예산) 600백만원

-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 지원을 위해 국내 시험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 기업의 시험비용 절감 및 시험기간을 단축하여 해외인증 취득 애로해소 및 수출경쟁력 강화

* (사례) 전기차충전기 분야에서 북미 인증(NRTL, 에너지스타) 대상 출력 용량이 상향('26년 예정, 350→850kW 이하) 되어 인증 취득시 요구되는 추가/강화 시험·검사에 대한 국내 시험기반을 구축하여 인증 애로 해소 및 기업수요 대응

- (산출)

■ 시험 인프라 구축 : 600백만원

- 인프라구축 : 580백만원(828백만원x1식x70%(매칭율))
- 사업관리비 : 20백만원

③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성능개선 및 현지실증지원

: ('25본예산) 100백만원 → ('26예산) 100백만원

-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제품 성능개선 : 100백만원

- (산출) (성능개선) 1개 과제x90백만원 = 90백만원
(사업관리비) 10백만원(총 사업비의 10%)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70	○ 민간경상보조(320-01) : 370백만원 가.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37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 150백만원 ■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 : 22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정보플랫폼 구축·운영 85백만원 • 해외인증취득지원 13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수당 5백만원(0.2백만원x5명x5회) + 맞춤형 컨설팅 70백만원(0.35백만원x200회) + 업계 설명회 10백만원(5백만원x2회) + 품목별 가이드북 발간 50백만원(5백만원x10개) 	1,060	○ 민간경상보조(320-01) : 360백만원 가.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36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 150백만원 ■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 : 21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정보플랫폼 구축·운영 85백만원 • 해외인증취득지원 12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수당 5백만원(0.2백만원x5명x5회) + 맞춤형 컨설팅 70백만원(0.35백만원x200회) + 업계 설명회 10백만원(5백만원x2회) + 품목별 가이드북 발간 40백만원(5백만원x8개)
	○ 사업출연금(350-02) : 700백만원 가. 해외인증지원 시험인프라 구축 600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700백만원 가. 해외인증지원 시험인프라 구축 600백만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인증 수요 분야 시험인프라 구축 : 600백만원 • 시험인프라 장비 구축 580백만원 = 828백만원x1건x70% • 사업관리비 : 20백만원 <p>나.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성능개선 및 현지실증지원 1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제품 성능개선 : 90백만원 • 성능개선·시험검증 : 90백만원 = 1개x90백만원 • 사업관리비 : 10백만원(총 사업비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인증 수요 분야 시험인프라 구축 : 600백만원 • 시험인프라 장비 구축 580백만원 = 828백만원x1건x70% • 사업관리비 : 20백만원 <p>나.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성능개선 및 현지실증지원 1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제품 성능개선 : 90백만원 • 성능개선·시험검증 : 90백만원 = 1개x90백만원 • 사업관리비 : 10백만원(총 사업비의 1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현장 컨설팅 및 기술자문 기업 수 (단위 : 개)	목표	-	신규	130	145	145	신규사업 수행 후 최근 평균 실적을 고려하여 설정	설명회 상담부스 운영 등을 통한 상담 기업 수 및 기업 방문을 통한 기술자문 기업 수	상담 및 자문 지원 기업 수 집계(수행기관)
	실적	-	-	130	172	-			
	달성도	-	-	100	118.6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미 방폭기기 인증을 위한 국내 시험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국내 시험기관과 해외 인증기관간 방폭분야 시험에 관한 상호협약 확대 ○ 해외인증 원스톱 정보제공 및 통합 상담 창구 역할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인증지원단 홈페이지(globalcerti.kr)를 통해 136개국 639개 해외인증 정보제공 ○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별·품목별 해외인증 제도 설명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수주지원단 합동 권역별 해외인증 제도 설명회(5회) 등 ○ 해외인증 유관기관간 협의체 구성·운영(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협회, 코트라, 산단공, 보건산업진흥원, 7개 시험연구원 등 13개 기관 참여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분야의 유럽인증 강화(MDD→MDR)에 따라 해외인증 취득시 요구되는 추가 시험·검사에 대한 시험평가 기반 및 해외인증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 해외인증 원스톱 정보제공 및 통합 상담 창구 역할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인증지원단 홈페이지(globalcerti.kr)를 통해 136개국 667개 해외인증 정보제공 ○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별·품목별 해외인증 제도 설명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수출품목 수출규제 및 인증제도 설명회 및 교육(11회) 등 ○ 해외인증 유관기관간 협의체 구성·운영(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협회, 코트라, 산단공, 보건산업진흥원, 7개 시험연구원 등 13개 기관 참여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기업 수출경쟁력 제고)** 해외인증 정보제공, 상담 등의 지원사업 및 관련 기관을 연계한 소주기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
- **(수출기업 애로해소)**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해외인증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맞춤형 자문 등을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해외인증 취득 가능
- **(해외인증 취득 비용·시간 절감)** 국내 의료기기 해외인증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험인증 수요 충족 및 인증 시간·비용을 절감하여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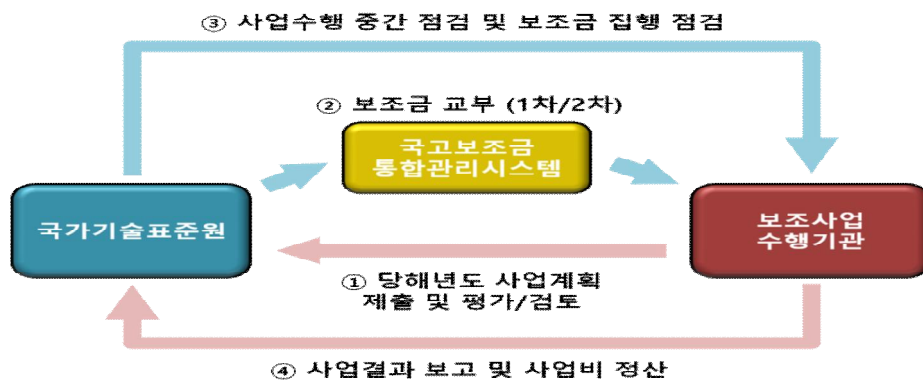
* 물리·화학적 시험을 요구하는 의료기기 표준(ISO-10993) 개정, 유럽 등 선진국 의료기기 안전성 규제 강화(MDR)에 따른 수출기업 인증애로 발생 증으로 생물학적 시험평가에 적용되는 화학적 특성 평가에 필요한 시험장비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인증 애로 해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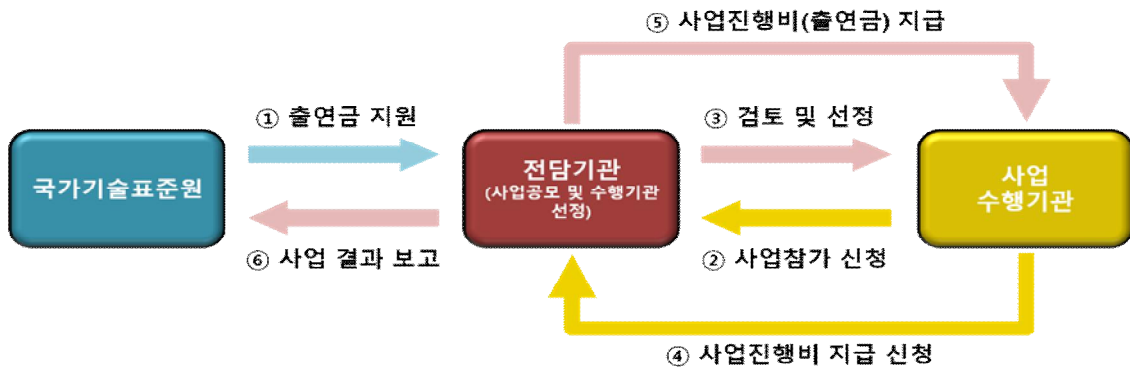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 (320-01)민간경상보조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산업부 (360백만원)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 (360백만원)	한국표준협회 (360백만원)	-	-

□ (350-02)사업출연금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산업부 (700백만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 산업융합촉진법 제17조 => (700백만원)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700백만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운영요령 => (670백만원)	수행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860	1,070	1,060	6,447	6,447	
2025~2029		1,070	1,060	6,447	6,447	6,44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지적) '24년 예산안 검토시 유사사업*과 연계·차별화 방안검토(산중위, '24년 예산)
 - *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기획재정부 수출수주지원단 사업
 - (조치) 기재부 수출수주지원단과 공동으로 해외인증제도 및 지원사업 관련 설명회 등 개최,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인증 콜센터)는 기본 전화상담 후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외인증지원단으로 이관하여 심층 상담·자문 지원
 - * 기획재정부 수출수주지원단 공동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25.4~7월)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종합정보 제공)** 기업 중심의 일원화된 정보제공을 위해 해외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AI 서비스* 도입, 주요 수출품목 심층 가이드북 보급
 - * 해외인증 특화 AI 모델 구축 후 ①AI 상담, ②종합리포팅 서비스, ③인증 뉴스 제공
- **(현장 애로발굴)** 수출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설명회 및 상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해외인증 관련 애로를 발굴하고 해소 지원
- **(맞춤형 지원)** 해외인증에 어려움이 있는 수출기업에 대해 온라인 상담 및 기업방문 등을 통한 해외인증 유형별 맞춤 상담·자문 제공
- **(협력체계 구축)** 해외인증·수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채널 구축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AI 서비스를 통한 해외인증 종합정보제공 및 상담('26년 개시예정) 등의 지원사업과 유관기관과 연계한 소주기 종합지원체계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인증 애로 해소*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편성 요청
 - * 해외인증 취득은 수출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나,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중 약 20%를 차지하는 주요 애로사항
- 해외인증 지원 관련 기관·사업 연계를 통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해외인증 정보제공,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 인증 대응 역량 강화, 상호협약 활용 비용·시간 절감 등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인증 애로 해소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편성 요청
- 해외인증을 위한 국내 시험기반이 부족하고,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 등으로 정부 정책 지원이 필요하고 신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의 시험장비 구축지원 예산증액 편성 요청
 - * (기술수요 사례①) 미국 정부의 K-조선 협력 확대에 따라 국내 기업의 미국선급(ABS) 해외인증 수요 증가 중으로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한 강제규정인 선체보호도장 성능평가기준에 따라 특정 대형 선박을 대상으로 인증 필요하나 기존 시험평가 인프라의 노후화 및 장비부족 문제 발생 중
 - * (기술수요 사례②) 자율주행 통신기기(C-V2X) 시장 중 미국과 유럽은 가장 적극적인 지역으로 수출을 위해 북미(FCC + OmniAir Consortium*), 유럽(CE RED) 인증 필수로 C-V2X 통신단말의 강제 및 민간 시험인증 대응을 위한 장비 및 시험환경 구축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1,860	-	1,860	-	-	-	1,860	1,860	100	100	-	-
2025	1,070	-	1,070	-	-	-	1,070	1,07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1,860	1,860	1,860	1,860	-	1,860	1,860	-	-	100
2025. 12월기준	1,070	1,070	1,070	1,070	-	1,070	1,07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해당 없음
2023	해당 없음
2024	해당 없음
2025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예비비 배정 사유(날짜)
합 계				

라. 기타 추가자료

(1) 내역사업 별 사업 계획서 및 설명자료 첨부

참고 1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 추진배경

- 수출기업은 복잡한 해외인증에 대해 정보검색부터 인증획득까지의
 전 과정에서 애로를 호소*하고 **통합지원을 지속 요구****

* KOTRA 수출기업 상담('24년, 25,569건) : ①관세·통관(4,690건, 18.3%), ②바이어발굴
(4,422건, 17.3%) ③**규격·인증 (4,055건, 15.9%)**, ④비즈니스정보(3,016건, 11.8%)

**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해외인증 취득 단계별 정보 부족, 비용부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인증 취득 전반에 대한 지원 요구('24.12월, 표준협회 만족도조사)

-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애로해소를 위해 **‘해외인증지원단’을 발족**
 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22.12, 산업부 업무보고)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해외인증지원단
 발족('23.4.) ⇒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 마련('23.5.)

□ 주요내용

- **(종합정보 제공)** 각 부처·기관에 산재한 해외인증 정보를 **AI 기반**
 원스톱 종합 제공*, 주요 수출품목 대상 실무 가이드북 보급

*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globalcerti.kr)에서 136개국 667개 인증정보 및 가이드북(55종) 제공

** 「해외인증 공공특화 AI 서비스('26.上 오픈예정)」를 통해 인증정보제공 고도화 예정(붙임1)

- **(현장 애로발굴)** 수출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설명회 및**
 상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해외인증 관련 애로를 발굴하고 해소** 지원

* ('25) 기재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합동 권역별 해외인증 설명회 등(11회, 붙임2)

- **(맞춤형 컨설팅)** 해외인증에 어려움이 있는 수출기업에 대해 **온라인**
 상담 및 기업방문 등을 통한 해외인증 **유형별 맞춤 상담·자문** 제공

* ('25) 전화온라인 상담(205건), 상담부스 운영(17회, 161개사), 기업방문 자문(93개사) 등

- **(협력체계 구축)** 해외인증·수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채널 구축**

* ('25)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6개) 및 K-시험원(7개) 등 13개 기관과 정례 협의(2회)

□ 사업설명

- (AI 종합정보 플랫폼) 기업 중심의 일원화된 정보제공을 위해 「해외인증 종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서비스 도입 추진(‘25년 과기부 공모사업)

- 각 기관의 인증 DB 연계·통합* 후 학습을 통한 AI 서비스 구축(‘25년말)

* 25개 기관(코트라 등) 20만여 자료 확보 및 AI 학습 데이터(RAG) 생성 완료

- AI를 통한 인증·규제 AI 신속 상담, 자동 리포팅* 등 종합정보 제공(‘26년)

* 해외인증 정보, 시장동향, 지원사업 등을 자체 DB학습 및 AI 추론을 통해 종합 리포트 제공

< ‘26년 AI 종합정보 서비스 고도화 계획 >

- ▶ (DB 최신화) 각 기관과 AI 챗봇 서비스 연계 확대를 통해 기존 DB 최신화 추진
- ▶ (협력 확대) K-소비재 등 수출지원기관과 인증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AI 학습데이터 추가 확보 및 챗봇 서비스 공유 확대

- (맞춤형 컨설팅) 기존 원포인트 자문 외 전주기 종합 멘토링 지원

- 기업과 해외인증 전문가를 1:1로 매칭하여 원포인트 상담 외 인증 준비, 신청심사 대응지원 등 전(全)주기(준비-신청-심사) 종합 멘토링 제공

< 전주기 종합 멘토링 프로세스 >



- (해외인증 설명회) 수시로 변하는 해외인증 제도의 신속 전파 및 현장 상담 등 수출기업과 현장 소통을 위한 설명회 개최(붙임2)

- K-소비재 등 수출 유망품목 중심의 설명회 개최를 통한 정보제공 및 인증전문가 현장상담을 통해 해외인증 소통 창구 마련

- (품목별 가이드북) K-소비재 등 수출 유망 품목 및 인증 수요가 많은 분야 중심으로 8개 품목의 해외인증 가이드북 발간 및 보급 추진

- 해외 인증 정보 동향 및 정보수집, 정부정책 및 해외인증 지원 사업 분석 등을 통한 실무형 인증 관련 상세 정보 제공*

* 국가별 인증개요, 인증 세부정보(법규, 기준/인증/시험기관, 대응절차 등), 관련 정부지원사업 정보 등

□ 추진배경

- 기업 중심의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과기부의 '25년 행정기관 대상 **AI 공모사업***에 「**해외인증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안·선정*(8.8억원)

* ('25.2월) 수요 제출 → (4월) 최종 선정 → (5~7월) 조달청 입찰 준비 → (8~12월) 구축

< (과기부) 「'25년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지원 공모사업」 개요 >

- ▶ (목적) 공공기관 대상 민간의 AI를 활용한 행정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전개
- ▶ (주관/전담기관) 과기부(디지털융합촉진과)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 (과제/예산) 5개 과제 / 총 56.4억원 이내

□ 개발내용

- (AI 구축) 초거대 LLM 기반 **AI 모델**에 검색·증강·생성(RAG)* 기능을 추가하여 각 기관의 **해외인증 DB**를 통합 후 AI 학습을 통한 서비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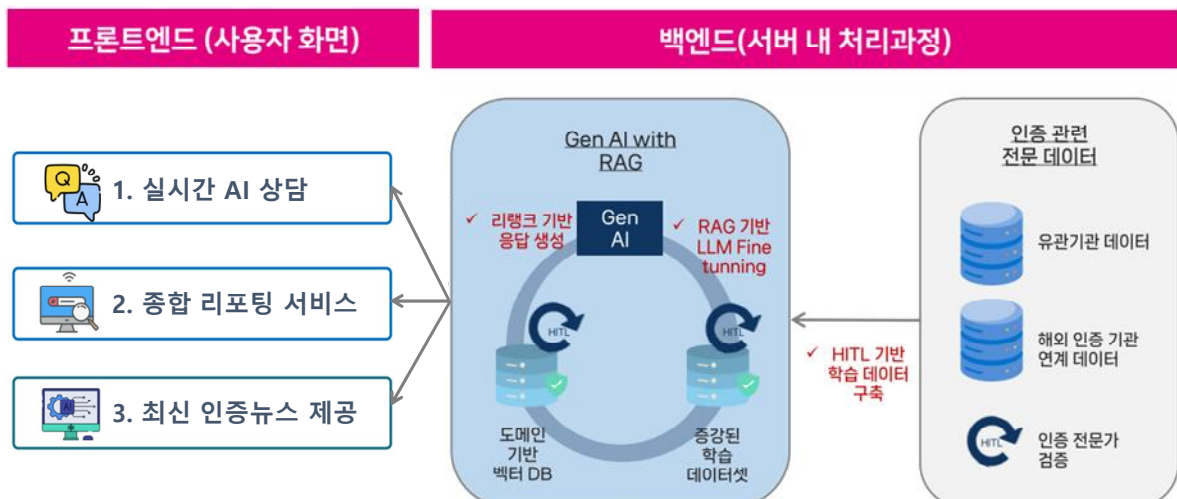
* 기존 학습데이터(AI모델) + 외부 검증자료(인증·규제정보 등) 참고 ⇨ AI 답변 정확도 향상

- (AI 서비스) 해외인증 통합정보시스템에서 **AI 챗봇**을 통한 인증·규제 상담 지원, **종합 리포팅***, **최신 인증뉴스** 등 종합정보 제공 가능

* 해외인증·규제 정보, 시장동향, 지원사업 등을 종합 리포트 형식으로 제공

□ 시스템 개요

- (개요) AI 모델에 국내 **25개** 기관 해외인증 정보를 통합·학습하여
①실시간 AI 상담(+전문가 연계), ②종합 리포팅, ③최신 인증뉴스 제공



붙임2

‘25년 해외인증지원단 현장활동 실적

- **(설명회)** 해외인증 설명회(9회, 현장상담 부스운영), 세미나 및 교육(2회) 등 기업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활동 수행

순번	일시	제목	지역	주관기관	참석자	현장상담
1	3.25	2025 미국 인증제도 최신동향 설명회	서울	해외인증지원단	67개사 (111명)	17개사
2	4.15	(수도권) 주요 수출품목 수출규제 및 인증제도 설명회	서울	해외인증지원단,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66개사 (95명)	18개사
3	5.8	(충청권) 주요 수출품목 수출규제 및 인증제도 설명회	대전	해외인증지원단,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25개사 (37명)	9개사
4	6.10	(대경권) 주요 수출품목 수출규제 및 인증제도 설명회	대구	해외인증지원단,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35개사 (43명)	7개사
5	6.25	(부울경) 주요 수출품목 수출규제 및 인증제도 설명회	부산	해외인증지원단,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27개사 (32명)	8개사
6	7.16	(광주·전라) 주요 수출품목 수출규제 및 인증제도 설명회	광주	해외인증지원단,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31개사 (39명)	7개사
7	8.27	유럽 MDR 인증획득 기반 구축사업 세미나	서울	해외인증지원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0명	-
8	9.25	주요국 IoT 제품 보안성 평가 의무화 동향 교육	서울	해외인증지원단, 한국표준협회	26개사 (42명)	-
9	11.5	2025 해외인증 트렌드	서울	해외인증지원단	100개사 (181명)	12개사
10	12.9	전북지역 식품/화장품 해외인증 설명회	서울	해외인증지원단	18개사 (22명)	-
11	12.11	AI 해외인증 종합정보 서비스 설명회	서울	해외인증지원단	18개사 (61명)	-

- **(부스 운영)** 주요 행사에 상담부스를 설치하여 기업 애로발굴 및 현장 상담 진행

순번	일시	제목	장소	주관기관	현장상담
1	1.23	KOTRA CES 2025 혁신포럼	코엑스	KOTRA	6개사
2	3.6~7	2025년 코리아 나라장터엑스포	킨텍스	조달청	9개사
3	3.20~21	2025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상담회 (GMEP 2025)	코엑스	KOTRA	6개사
4	3.26	통상환경 전환기 수출지원 종합설명회	코엑스	KOTRA	18개사
5	4.16	2025 소비재·서비스 수출대전	코엑스	KOTRA	8개사
6	6.26	2025 스포츠산업 수출상담회	서울올림픽 파크텔	국민체육진흥공단	7개사
7	9.12	2025년 2차 스포츠산업 수출상담회	서울올림픽 파크텔	국민체육진흥공단	8개사
8	10.21~22	2025 북업코리아 수출상담회	킨텍스	KOTRA	9개사
9	11.6	2025년 3차 스포츠산업 수출상담회	서울올림픽 파크텔	국민체육진흥공단	8개사
10	11.27	2025 GPPM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서울 풀만호텔	KOTRA	4개사

□ 추진배경

- 국내기업, 수출에 필요한 인증 획득에 어려움 호소(‘23.2, 수출 전략회의)
 - 해외인증은 기업이 겪는 ‘수출 3대 애로’(관세통관, 바이어발굴, 인증)에 포함
- 이에, 정부는 『수출 기업을 위한 해외 인증 종합지원 전략』 마련(‘23.5)

※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 인증 종합지원 전략」 중점 추진과제 :

- ① 국내외 기관간 상호인정 ② 해외 인증 정보 통합제공 ③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자문, 인력, 디버깅·성능개선) ④ 지원체계·거버넌스 강화

- 해외 인증규제 강화 등으로 인증애로가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시험 인프라 구축 및 국내외 기관간 협력체계 수립* 등을 통해 인증지원 추진(‘24년~)

* 해외인증 취득에 필요한 시험·검사를 국내기관을 통해 가능토록 시험기반·협력체계 구축

□ 주요내용

- (인프라구축) 신설·강화되는 해외인증 규제로 新수요가 예상되는 분야에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국내 시험기관의 시험인프라 구축

- (장비구축) 해외 인증 규격에 따른 시험이 가능한 시험 설비 등 구축

* (예) 북미 UL 인증 방폭기기 시험 장비, 의료기기의 화학적 특성화 분석 장비 등

- (평가체계 수립) 해외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통한 시험·평가체계 수립

* (예) NRTL(美 국가인정시험소 인증) 입회시험 자격(WTDP) 확보, KOLAS 인정 확대 등

< (기술수요 사례) 전기차 충전기 분야 시험인프라 구축 >

- (현황)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연평균 27%의 고성장 전망, 美 전기차충전기의 에너지 스타 인증 출력 용량 기준이 350kW에서 850kW로 개정 예정(‘26)
- (필요성) 미국의 인증기준 개정에 따른 국내 시험기반 부재로 인하여, 수출기업(115개사 추산)의 해외인증(NRTL, 에너지스타) 획득의 시간·비용 부담 가중 우려
- (내용) 북미 수출용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에너지스타 인증 시험평가 장비 고도화(350kW → 850kW 증설) 및 평가 체계 구축

□ 사업설명

- **(필요성)** 시험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업의 시험 비용·기간 단축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전인하고, 시험인증 분야 산업생태계 육성 필요
- **(비용·기간 단축)** 국내 시험기관에 시험인프라를 구축하여 해외 시험 시 발생하는 해외운송비 절감 및 시험대기 기간 단축 가능

< 전기차 충전기 해외인증 시험인프라 구축 효과(예시) >



- (시험장소) 해외 현지 ⇨ **국내 시험기관**
- (비용) 약 1억원 ⇨ 약 3천만원 (**비용 최대 70%(7천만원) 절감**)
- (기간) 4개월 이상 ⇨ 2개월 (**시험기간 2개월 단축**)

- **(수출경쟁력 강화)** 글로벌 인증시험 역량을 확보하여 통상·규제 강화 등에 따른 新수요가 예상되는 분야에 **인증으로 시 신속 대응 필요**
 - * **(사례① EU 의료기기)** EU 강화 규정(MDR, '26년 적용) 대응을 위한 화학적 특성화 장비 구축 및 KOLAS 인정 확대를 통해 EU 의료기기 수출 시 신속한 대응 서비스 구축 중('25.5~)
- **(산업생태계 지원)** 국내 시험기관의 해외인증·시험 시장 개척을 위해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국내 시험인증 산업생태계 육성 지원**
 - * **(사례② 북미 방폭기기)** 북미 UL인증 장비구축 및 NRTL 인증기관과 업무협력('25.9)으로 美 공장 증설에 필요한 북미 방폭기기 시험 관련 국내 산업기반 구축 완료
- **(사업내용)** 신설·강화되는 해외인증 취득에 필요한 시험인프라 구축 및 평가체계를 수립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국내 시험인프라 구축 전·후 비교 >

구 분	국 내				해 외			
구축 전	제조	→			시험	→	인증	→ 수출
구축 후	제조	→	시험	→			인증	→ 수출

- **(사업추진)** 기술수요조사 후 기획위원회*를 통해 과제 기획 후 수행기관 공모 및 사업 수행(1건)

* 기술수요조사 과제를 대상으로 표준 PD 및 외부 전문가가 RFP 최종안 작성

1. 북미 수출용 방폭기기 시험평가 기반구축(KTL, 15.4억원, ‘24.5~‘25.9)

□ 추진배경

- (배경) 북미 지역 內 반도체·전기차 등의 생산설비 증설에 따른 방폭기기 수요확대가 예상되나, 이를 지원할 국내 시험인프라 미흡
- (목적) NRTL 대상의 방폭기기 시험기반 구축 및 KOLAS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해 수출기업에 인증·시험 서비스 제공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구축결과

- (시험인프라 구축) 북미 및 국제 방폭인증에 대한 인증시험 자격을 획득한 북미 방폭인증 시험센터 구축 완료(‘25.9, KTL)
 - (장비구축) UL 1203*, UL 121201* 시험장비 및 예비 장비 등
- (지원체계 구축) NRTL 인증기관(UL社) 입회시험 자격(WIDP)* 확보 및 KOLAS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한 방폭시험 업무협약** 체결 등

* WIDP(Witnessed Test Data Program) : 인증기관 직원 감독 하에 시험기관 설비로 시험을 진행하는 제도

** NRTL 인증기관(LabTest社)과 KOLAS 인정분야(UL 1203 규격 등)의 시험결과 업무 협약

□ 기대효과

- (시간·비용 절감) 시험 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으로 국내 방폭기기 수출기업의 인증시험 단계에서 시간·비용절감(30% 이상) 기대
- (방폭기기 기술지원) 북미 기술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품 설계부터 인증까지 방폭기기 개발단계별 맞춤형 기술서비스 제공 가능
- (북미 협력체계 마련)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북미인증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해외 협력(기관 간 업무협약 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북미 방폭인증 시험장비 구축 결과 >

장비명	사용용도	비고
① 저온 환경용 폭발시험 설비	<p>[UL 1203, IEC 60079-1] UL 1203 규격의 시험을 위한 폭발시험 설비, 화학적 적합성 시험 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측정 가능 압력 : 250 bar - 설비 작동 온도 : 최저 -60 °C 조성 가능 	 
② 북미 방폭인증 외함 등급 시험 시스템	<p>[UL 121201, UL 50, NEMA 250, IEC 60529] UL 121201 규격의 시험을 위한 외함등급 시험 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미(UL, NEMA) 외함등급: Type 4, 4X, 6, 6P 시험 가능 - IP등급: IP5X~IP6X(방진) 시험 가능 IPX3~IPX6(방수) 시험 가능 	 
③ 북미 방폭인증 시험 진행에 필요한 기타 장비 등 6종		

2. 의료기기 분야 해외인증 시험평가 기반구축(KTR, 6억원, '25.5~'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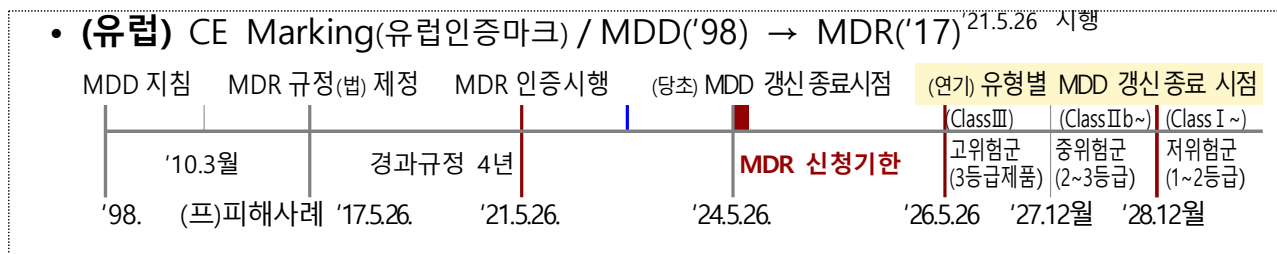
□ 추진배경

- (배경) 유럽 의료기기 인증제도 강화*로 기존 수출제품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애로로 수출에 어려움 호소

* ('21.5) MDD(지침) → MDR(규정) 강화, '26~'28년까지 위험도에 따라 단계적 적용

- (목적) 의료기기의 화학적 특성화 시험평가기반 및 해외인증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출기업에 인증·시험 서비스 제공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의료기기분야 유럽인증 관련 현황>



□ 구축현황

- (시험인프라 구축) EU 의료기기 규정(MDR, '26년 적용) 대응을 위한 국내 시험장비 구축 지원 및 의료기기 업무협약 확대
- (현황) 생물학적 평가기준(ISO 10993)에 따른 의료기기 화학적 평가를 위한 시험인프라 구축 중

< 의료기기 시험장비 구축(안) >

구분	장비명	용도/역할
1	HS-GC-Orbitrap-MS	- 의료기기 미량분석을 통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평가(VOC, SVOC), 프탈레이트계 평가, 멸균 의료기기의 EO멸균제의 잔류량, 생성물질 등 평가
2	증발 광산란 검출기	- 조직수복용 생체재료, 콜라겐 및 히알루론산 함유 흡수성 의료기기의 분해산물 평가, 비흡광성 화합물(당류, 지질 등)의 함량 평가
3	겔-투과 크로마토그래피	- 흡수성고분자(PLA, PCL 등), 흡수성생체고분자(콜라겐, 히알루론산 등)의 분해산물 평가, 의료기기 고분자 재료(PP, PC, PDO 등)의 분자량 정성 평가
4	병렬증발농축기	- 의료기기 극미량분석을 위한 전처리 및 농축, 저농도 분석물의 정량/정성 가능성 확보(FDA 및 ISO 요구사항)
5	오비탈 셰이커	- 화학적 특성화(ISO 10993-18) 용출 및 분해산물 평가(ISO 10993-13) 용출
6	의료기기 화학적 특성화 평가실 구축	- 의료기기 용출 및 추출, 시약 제조 및 농축 등 화학적 특성화 전용 실험실 구축(극미량 분석물의 오염 방지)

붙임4
‘26년 시험인프라구축 사업 기술수요조사 결과(23건)

번호	기술수요명	기업명	접수일자
1	원샷(One-shot) 정맥 확보를 위한 핸드헬드형 온디바이스 AI 기반 정맥 천자 네비게이션 시스템 개발	(주)한소노	2025-12-12
2	암호 모듈 수출을 위한 국내 업체용 CAVP 및 CMVP 보안수준을 만족하는 평가인증 지원 체계 구축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25-12-12
3	북미 수출용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에너지스타 인증시험 평가 장비 고도화 및 평가 체계 구축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25-12-12
4	해외인증 지원체계 기반구축 타당성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25-12-12
5	EU PPWR 대응 포장재 재활용성 등급 평가 인프라 구축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25-12-12
6	신설된 전기자동차 충전기 국제표준 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40차 고조파 시험, 영하55℃ 극한환경, 설치환경에서의 0.1급 정밀도 시험의 고도화 기술개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25-12-12
7	글로벌 선체 도장 신뢰성 평가 프론티어 시스템 구축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25-12-12
8	해외 수출 K-방산용 현수장치(HSU/ISU) 성능시험을 위한 고성능 유압가력기 시험장비 구축	명지대학교산학협력단	2025-12-12
9	풍황자원 계측용 부유식 라이다(Floating LiDAR) 모션 보정 모듈의 신뢰도 향상 및 국제 표준 적용 기술 개발	비전플러스주식회사	2025-12-12
10	디지털 의료기기 SBOM(AIBOM(Software & AI Bill of Materials) 기반 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시험인프라 구축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025-12-11
11	UL1740, UL3100, EN3691-4 대응 자동화기계자율이동장치 해외 인증 현장시험 인프라 구축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25-12-11
12	건축 마감재 등의 글로벌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화재시험 장비 구축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025-12-11
13	AI 반도체 수율향상을 위한 세정용 초순수(UPW) 분석 인프라 구축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25-12-11
14	의료기기 FDA 승인을 위한 무선공존 시험인프라 구축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25-12-10
15	자동차 사이버보안(CSMS) 국제인증 대응을 위한 국내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025-12-09
16	스포츠 바닥재 해외인증을 위한 시험평가 기반 구축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025-12-08
17	ISO/SAE 21434 기반 전동화 차량 배터리충전시스템(BMS/EVCC/SECC) 사이버보안 KOLAS 시험인프라 구축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25-12-08
18	위험성평가-기능안전 One-Step 학습 설계 인증 통합 모듈 개발	티유브이노르트코리아 주식회사	2025-12-08
19	바이오플라스틱 소재부품 해외인증 시험평가 및 상호인정 시스템 구축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025-12-06
20	전기차 고전압 케이블(차내충전용) 유럽 및 북미 해외인증 시험평가 인프라 및 체계 구축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25-12-04
21	디지털 제품 여권(DPP) 대응을 위한 해외인증 시험인프라 구축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25-12-02
22	해외 생분해 인증 기준 강화에 따른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및 제품의 친환경 인증 지원 시험 인프라 구축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025-12-01
23	글로벌 전장 규제 대응을 위한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및 CMS 복합 신뢰성 평가 인프라 구축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25-11-28

참고 3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성능개선 및 현지 실증 지원

□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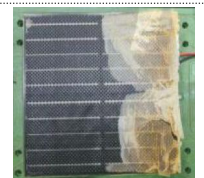
- VIP 업무보고에 따른 '수출 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23년 6월)을 마련하여 산업융합 신제품 등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 촉진
 - * 중점 추진과제: ① 국내외 기관간 상호인정 ② 해외 인증 정보 통합제공 ③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 (자문, 인력, 디버깅·성능개선) ④ 지원체계 거버넌스 강화

□ 주요 현황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며 산업융합 신제품 등을 개발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증가
 - * 해외인증 신청현황: ('18) 1,130, ('19) 1,848, ('20) 3,480, ('21) 3,042, ('22) 3,130건(산업인, '23.7)
 - * 해외 진출 추진 기업의 89%가 해외 인증 취득의 중요성 응답(한국생산기술연구원, '23.12)

<산업융합 신제품 해외시장 요구기준 충족 실패 사례(노면 블록형 태양광발전 모듈)>

- 노면 블록형 태양광발전 모듈은 '보도블록'과 '태양광발전 모듈'을 융합하여, 공원·광장·옥상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 및 태양광발전을 가능하도록 개발된 제품
- 장기 내구성 및 신뢰성 확인을 위한 Thermal cycling test(온도사이클시험) 및 Damp heat test(고온고습시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련 분야 해외기준(IEC 61215-2) 충족 불가**
- ⇒ 성능개선을 위한 기업의 추가 기술개발 지원 및 해외 현지 환경에서의 실증 필요



온도 사이클 시험 결과 고온 고습 시험 결과

□ 필요성

-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의 중점 분야는 산업융합기술 분야이며,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진출 전주기(인증, 실증 등)에 걸쳐 중단없는 지원 필요
 - * '新성장제조업'(이차전지, 전기차 등), '주력제조업'(로봇, 디스플레이 등), '新수출 유망산업'(스마트팜, ICT 서비스 등) 등
- 산업융합 신제품 등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적시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시장 맞춤형 성능개선* 및 수출 대상국 현지화 실증** 필요

* 인증은 기업이 겪는 '수출 3대 애로'(무역금융, 인증, 마케팅)에 포함

** 수출 시 '시장 최초 진입자'의 경우, 해외 현지 실증 및 트랙레코드를 요구받는 경우가 다수

□ 추진 내용

① (성능개선) 성능개선·시험검증: 100백만원(1개 과제 x 100백만원)

- 산업융합 신제품 등을 개발하는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기관과 해외시장 맞춤형 성능개선 추진
- 해외기준이 부재하거나 모호한 산업융합 신제품으로 적합성 인증기준 마련 시 기준 충족을 통해 국내외 시장 진출이 가능토록 기준제정 지원
- 전문기관(시험·연구기관 등)은 특정 시험항목 또는 인증기준 충족을 위해 요구되는 제품설계, 구조 개선 및 소재 변경 등 전문역량 지원
- 성능개선 결과를 산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국내외 통합기준 제정에 활용(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제도 활용)

② (사업관리비) 10백만원(총 예산의 10%)

□ 예산 내역

세부항목	25년	26년	주요 항목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성능개선 및 현지 실증 지원	100백만원	100백만원	- 성능개선·시험검증: 90백만원(1개 x 90백만원) - 사업관리비: 10백만원(총 예산의 10%)

□ 주요 결과물

- (성능개선) 해외시장 요구사항 및 기준 충족 성능개선 제품, 공인 시험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해외시장 활용이 가능한 인증기준(안) 등

□ 기대 효과

-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선도가 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 등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성능개선 및 현지화 실증 지원을 통한 수출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붙임5
‘25년 성능개선 관련 기술수요조사 결과(37건)

번호	기술수요명	기업명	접수일자
1	저온식품 판매점용 냉각기기용 IoT 기반으로 전력량과 가동안전 모니터링 기능을 갖는 냉각효율 향상 시스템	주식회사 이지엑스	2025-01-22
2	시트러스 부산물을 활용한 Green Solvent 개발	주식회사 비유	2025-01-22
3	ITS(지능형 교통 시스템) 정보 제공을 위한 AI 기반 레이더 & 카메라 센서 융합 기술	주식회사 비트센싱	2025-01-22
4	IoT 스마트 자물쇠 수출 지원을 위한 성능 개선 및 인증기준(안) 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25-01-22
5	비행장 등대형 LED 항공등화의 수출 지원을 위한 성능 개선 및 인증기준(안) 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25-01-22
6	LED투명 접합유리(전자배너전자현수막) 수출 지원을 위한 성능개선 및 인증기준(안) 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25-01-22
7	비소세포폐암의 11종 종양 유발 유전자 돌연변이 동시 검출을 위한 패널 개발	젠큐릭스	2025-01-22
8	해외인증 취득 및 맞춤형 해외진출을 위한 사료첨가제용 고흡수율 아연아미노 킬레이트 제조 기술 개발	(주)동우티엠씨	2025-01-22
9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성능 최적화 및 해외 인증 대응 기술, AI 기능의 관리 시스템이 적용된 성능개선 기술 개발	성풍솔레드주식회사	2025-01-22
10	VGP 규제 대응을 위한 생분해도 80% 이상 Wire Rope용 친환경 생분해성 Grease의 개발 및 인증	(주)제씨콤	2025-01-22
11	TSO C127c 인증 획득을 위한 AAV좌석용 사용자 확장형 에너지 흡수 시스템 개발	(주)에이엔에이치스 트럭쳐	2025-01-22
12	해외 시장 맞춤형 RTO(재생열산화기) 시스템의 유해가스 평가 기술 및 글로벌 인증		2025-01-22
13	해외 시장 맞춤형 RTO(재생열산화기) 시스템의 유해가스 평가 기술 및 글로벌 인증		2025-01-22
14	해외 시장 맞춤형 RTO(재생열산화기) 시스템의 유해가스 평가 기술 및 글로벌 인증		2025-01-22
15	시력 손실 환자의 시력을 보완해주는 증강현실 기반의 스마트 보조안경 인증을 위한 EMC 기술기준(안) 개발	주식회사 셸리코	2025-01-22
16	PLC 프로그램 공용형식 변환과 제어특성 분석을 위한 CUI 처리 보안 기능 개발	주식회사유디엠텍	2025-01-22
17	흉부CT영상 기반 폐암 발생 위험 예측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바이오링크 주식회사	2025-01-22
18	과불화합물 제거가 가능한 냉장고정수기용 압출방식 정수카본블록 필터개발	(주)쓰리에이씨	2025-01-22

번호	기술수요명	기업명	접수일자
19	화재 연기유독가스를 흡입 제거하는 기술이 융합된 물분무헤드의 해외 인증을 위한 기술기준 개발	주식회사 에스피앤이	2025-01-22
20	EU 인증 기준(EU 2019/1009) 규제 대응 친환경 코팅 비료 소재 개발 및 적용	(재)FITI시험연구원	2025-01-21
21	페그물, 어망 등 폐 플라스틱 재활용 기반 토압 분산용 인터로킹 블록 성능 개선		2025-01-21
22	멍게껍질에 함유된 콘드로이친황산의 기능성 인증을 위한 기준규격, 안정성 및 기능성 확보 기술기준(안) 개발		2025-01-21
23	1MW, 30초백업이 가능한 슈퍼캐패시터 기반 FR-ESS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고도화 및 해	비나텍(주)	2025-01-21
24	와이어로프 진단 및 유지관리와 모니터링 방법을 적용한 통합운영시스템 개발과 AI를 위한 DB 구축	수자원기술주식회사	2025-01-22
25	소형 이동자 구동이 가능한 리니어모션시스템	(주)저스텍	2025-01-21
26	유니버설 지그의 스마트그립패드의 개발	잼스	2025-01-20
27	의료용 세포배양 최적화를 위한 천연물 조성 배양액 기술기준 개발	주식회사 유스바이오글로벌	2025-01-20
28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한국 철도차량 및 부품의 국외 환경성적표지 인증 취득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25-01-21
29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시설물 관리를 위한 AI자율진단기반 GIS구축 및 기술표준규정 개발	주식회사 뉴럴디	2025-01-20
30	AI 얼굴 객체 인식 및 sLLM 탑재 성능 개선 기술 개발	시너인	2025-01-20
31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AI분석, 질환 판독 알고리즘 및 6-Lead 포터블 심전도기기 개발	(주)메디팜소프트	2025-01-17
32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무선 통신 통합 가정용 에너지 시스템	(주)엔지아커넥트	2025-01-17
33	이동식 산불 진화 및 재난 대피소	주식회사 솔메카	2025-01-15
34	친환경 바이오매스 기반 세라믹 소재 개발		2025-01-15
35	PSR(Public Safty Repeater) 신호 모니터링 시스템	(주)알에프닛시	2025-01-15
36	말레이시아 수출용 스마트 자동화 곤충 사육 및 가공시설 개발	농업회사법인 푸디웜주식회사	2025-01-15
37	누구나 신속 착용이 가능한 화재대피마스크	와이지에프 주식회사	2025-01-17

사 업 명						
(21) 국가전략기술표준물질개발(R&D) (3731-33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30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국가전략기술표준물질개발(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전략기술표준 물질개발(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표준정책국	배진석	윤남식	-
		표준정책과	043-870-5340	043-870-5348	-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엔지니어링표준실	장근영 실장	053)718-849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국가전략기술표준물질개발 (R&D)	-	3,300	3,300	6,800	6,800	3,500	106.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	-	6,800
·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	-	- [-]	-	-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	-	6,8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	-	6,800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	-	- [-]	-	-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	-	6,8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	-	6,800
·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	-	- [-]	-	-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	-	6,800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	-	- [-]	-	-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	-	6,8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목적)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재부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지원

* 국가전략기준물질 :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의 품질 검증을 위해 필요한 물질로서, 소재 등의 특성값을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표준물질

- (내용)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 분야*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중, 국내 기준물질 부재로 수급 불안정 시, 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4개 산업 분야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

** 사례) '19년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23년 중국 희토류, 미국 첨단반도체 수출규제 등
日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불화수소 등 공급 차질 피해규모 : 약 20조원(KERI, '23)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 제2항(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② 추진경위

- '09년 4월 : 국가표준기본법에서 표준물질에 관한 사항을 최초로 규정
- '19년 8월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관계부처 합동)
- '20년~'23년 : 선행사업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 '23년 10월~'24년 5월 : 신규사업 기획 추진
- '24년 12월 : 「국가전략기초물질개발」 사업 '25년 예산 33억 확정
* (목표) KOLAS 국가전략기초물질 10종 개발('25년 6종, '26년 4종)
- '25년 과제기획위원회 1차~3차('25.1.16~2.7)
- '25년 사업심의위원회 및 10개 과제 선정('25.2.14)
- '25년 과제 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25.4)
- '25년 11월~12월 : '26년 기술 수요조사 및 시행계획 수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5년 ~ '28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3,300	6,80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연구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첨단산업 분야 산업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전략 기준물질 개발	출연	기업, 대학, 연구소, 표준물질생 산기관 등	6,800	100% 이내 정부매칭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공동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지원

: (2025) 3,300백만원 → (2026예산) 6,800백만원

- (요구)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지원을 위한 4건 계속예산 및 15건 신규개발을 위한 신규예산 요구

- (산출) 국내기관 R&D 과제(신규 11건) 3,300백만원

국제공동연구 연계 R&D 과제(신규 4건, 계속 4건) 3,50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300	<p>○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3,300백만원</p> <p>가. 국내기관 중심 R&D 과제 (1,8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6개×300백만원×12/12개월 = 1,800백만원 · (인건비) 4명 * 22.5백만원 = 90백만원 · (연구재료비) 표준물질개발 생산 재료 5건 * 30백만원 = 150백만원 · (시험·인증비) 3건 * 10백만원 = 30백만원 · (간접비) 30백만원 <p>나. 국제공동연구 연계 R&D 과제 (1,5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4개×500백만원×9/12개월 = 1,500백만원 · (인건비) 6명 * 25백만원 = 150백만원 · (연구재료비) 표준물질개발 생산 재료 5건 * 50백만원 = 250백만원 · (국내외 시험·인증비) 5건 * 10백만원 = 50백만원 · (간접비) 50백만원 	6,800	<p>○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6,800백만원</p> <p>가. 국내기관 중심 R&D 과제 (3,3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11개×300백만원×12/12개월 = 3,300백만원 · (인건비) 4명 * 22.5백만원 = 90백만원 · (연구재료비) 표준물질개발 생산 재료 5건 * 30백만원 = 150백만원 · (시험·인증비) 3건 * 10백만원 = 30백만원 · (간접비) 30백만원 <p>나. 국제공동연구 연계 R&D 과제 (1,5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 4개×500백만원×12/12개월 = 2,000백만원 · (신규) 4개×500백만원×9/12개월 = 1,500백만원 · (인건비) 6명 * 25백만원 = 150백만원 · (연구재료비) 표준물질개발 생산 재료 5건 * 50백만원 = 250백만원 · (국내외 시험·인증비) 5건 * 10백만원 = 50백만원 · (간접비) 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건 수 (단위:)	목표	-	-	-	신규	10	당해연도 개발 완료된 국가전략기준물질 건 수	Σ 4대 중점분야별 개발 완료된 국가전략기준물질	결과보고서
	실적	-	-	-	-	-	(4대 중점분야 개발 완료된 국가전략기준물질)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2024	-
2025	·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을 위한 신규과제 10건 지원(3,300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전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4대 중점분야 관련 국가전략기준물질 50건 이상 개발

- 국외 의존도가 높은 표준물질 개발, 보급을 통해 표준물질 관련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국내산업의 측정 정밀도 향상 효과 기대
- 산업계의 니즈 파악을 통한 중장기적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및 보급 체계 수립으로 다양한 산업분야 활용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가전략기술표준물질개발(R&D)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산업통상부 (6,800백만원)	=> (6,800백만원)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6,800백만원)	=> (6,800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국가기술표준원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사업계획 공고		전담기관		- 신문, 전담기관 홈페이지 공고 - 신청자격, 대상분야 등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 전산 양식 인터넷 등록 -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전담기관		- 심의위원회 심의 -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실시
지원대상과제 확정		국가기술표준원		-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지원대상과제 최종 확정
평가결과 통보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전담기관		- 주관기관에 통보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실시 - 수행기관과 협약체결
수행 및 사업관리		전담기관		- 사업성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최종보고 및 정산		전담기관		- 최종/정산보고서 제출 - 최종 사업성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3,300	6,800	6,500	5,000	
2025~2029		3,300	6,800	6,500	5,000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 '26년 1월 :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공고 과제 선정
- '26년 1~3월 : 사업 공고 및 선정
- '26년 4~12월 : 사업수행 및 진도점검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3,300	-	3,300	-	-	-	3,300	3,30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12월기준	3,300	3,300	3,300	3,300	-	3,300	3,30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2022	-
2023	-
2024	-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용 (2025.2.1.)	-	-	-	-	-	-
전용 (2025.2.3.)	-	-	-	-	-	-
조정 (2025.2.5.)	-	-	-	-	-	-
이체 (2025.2.9.)	-	-	-	-	-	-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예비비 배정 사유(날짜)
-	-	-	-	-
-	-	-	-	-
합 계			-	-

라. 기타 추가자료

□ 사업개요

- **(목적)**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재부품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지원
- **(추진방향)** 첨단산업 관련 산업계 수요 기반으로 수립한 RM(Road-Map)에 근거하여 연차별 국가전략기준물질 과제를 지원
 - * 과제별 지원규모(예산, 기간) 차별화
- **(지원과제 기간)** 과제당 지원기간 1~2년
 - * ① 국내 기관 중심의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형(1년), ② 국제공동연구 연계 국가전략기준 물질 개발형(2년)
 - ※ 단, 국내 기관 중심의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형도 과제 성향에 따라 2년까지 확대지원 가능
- **(지원 규모)** 4년간 총 216억 원

□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사업 지원내용

-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재부품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보급 추진
 - (지원유형1) 국내기관 중심의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형
 - (지원유형2) 국제공동연구 연계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형

□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사업 추진체계

- 내역사업1, 2* 공통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 국가전략물질 기획·관리,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내역사업1) :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시험·인증기관 (수행기관) 산·학·연 등

□ 국가전략기존물질 개발 사업 소요예산

○ (지원) 출연(정부-민간 매칭, 기관유형에 따라 20~100% 민간부담

○ ('25년 예산) 3,300백만 원

* 유형1 (신규) 6개 × 300백만 원 × 12/12개월 = 1,800백만 원

* 유형2 (신규) 4개 × 500백만 원 × 9/12개월 = 1,500백만 원

○ ('26년 예산) 6,800백만 원

* 유형1 (신규) 11개 × 300백만원 × 12/12개월 = 3,300백만원

* 유형2 (계속) 4개 × 500백만원 × 12/12개월 = 2,000백만원

(신규) 4개 × 500백만원 × 9/12개월 = 1,500백만원

○ ('27년 예산) 6,500백만원

* 유형1 (신규) 10개 × 300백만원 × 12/12개월 = 3,000백만원

* 유형2 (계속) 4개 × 500백만원 × 12/12개월 = 2,000백만원

(신규) 4개 × 500백만원 × 9/12개월 = 1,500백만원

○ ('28년 예산) 5,000백만원

* 유형1 (신규) 10개 × 300백만원 × 12/12개월 = 3,000백만원

* 유형2 (계속) 4개 × 500백만원 × 12/12개월 = 2,000백만원

참고 2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수요 품목

- 핵심 소재로 대체재가 없을 시 국내 첨단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품목 67종 예시

분류	No	품목	용도
반도체 (13)	1	질화 갈륨	반도체 소재용
	2	Tantalum(V) ethoxide	용액 및 기체 증착 전구체
	3	강유전체 물질	반도체용 유전체
	4	On wafer 측정용 임피던스 기준물질	반도체 패키징 특성 평가용
	5	금속 전기 전도도 기준물질	비파괴 검사 등 전기전도도 측정용
	6	Silicon carbide	반도체 소재용 산화물 및 세라믹
	7	On-Site 교정용 임피던스 측정표준	저항, 커패시턴스 등 측정용
	8	Niobium(V) ethoxide	용액 및 기체 증착 전구체
	9	Graphene FET chip	기판 및 사전조립식 전자부품
	10	Tetrakis(dimethylamido) hafnium(IV)	전자 화학물질 및 부식제
	11	고출력 Green LED	전자 화학물질 및 부식제
	12	반도체 공정장비용 YF3	반도체 공정장비 관리
	13	SiNx내 Hydrogen, SiGe내 B.P SiC 3-5 내 미량성분원소(도펀트) 기준물질	반도체 친환경 소재
디스플레이 (12)	14	Indium tin oxide coated glass slide, square	디스플레이 소재용
	15	Poly-TPD	OLED 및 PLED 소재용 고분자
	16	Hexagonal boron nitride ink	인쇄 전자 소재
	17	Indium tin oxide coated PET	디스플레이 소재용
	18	Silver nano ink	인쇄 전자 소재
	19	QD blue	인쇄 전자 소재
	20	Graphene fet chip	디스플레이 소재용
	21	IGZO (indium gallium zinc oxide) 박막	디스플레이 소재용
	22	Zinc oxide nanoparticle ink	인쇄 전자 소재
	23	광변성코팅용액	전자 화학물질
	24	전기변성코팅용액	전자 화학물질
	25	polyaniline	디스플레이 소재용
이차 전지 (22)	26	Lithium nickel cobalt aluminium oxide	배터리 소재
	27	Lithium nickel manganese cobalt oxide	배터리 소재
	28	Silicon	배터리 소재
	29	Lithium hydroxide	양극재 합성용
	30	양극재 잔류리튬 기준물질	양극재 분석용
	31	이차전지 NCM계 및 LFP계 양극재 도핑소재	양극재 분석용
	32	Lithium hydroxide monohydrate	고순도 염류

분류	No	품목	용도
	33	Lithium carbonate	배터리 소재용
	34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기준물질	고체 전해질 분석용
	35	SiOx	리튬 이차전지 음극 물질 분석용
	36	전고체전지용 황화물 고체전해질	배터리 소재
	37	Lithium iron(II) phosphate	배터리 소재
	38	Lithium phosphorus sulfur chloride(LPSCl)powder	배터리 소재
	39	LHM	배터리 소재
	40	Lithium 고순도금속분석	고순도 금속 및 합금
	41	이온전도도 측정 기준물질	배터리 소재용
	42	양극재용 리튬코발트산화물	양극재 분석용
	43	잔류리튬	양극재 분석용
	44	양극재용 리튬철인산염	양극재 분석용
	45	음극재용 흑연	리튬 이차전지 음극 물질 분석용
	46	음극재용 금속산화물	리튬 이차전지 음극 물질 분석용
	47	양극재 전극용 TiO2 나노튜브	양극재 분석용
첨단 바이오 (20)	48	Amino Acids Mix Solution	아미노산, 펩타이드 단백질 표준
	49	의료영상기기용 유수분비율 기준물질	MRI 및 X선 촬영 기준 표준
	50	HPLC peptide standard mixture	아미노산, 펩타이드 단백질 표준
	51	Heavy Metals in Pharmaceuticals	중금속 분석용 숙련도 표준
	52	의료영상 분석용 팬텀	의료영상품질 측정용
	53	Gold nanoparticles	무기 및 금속 나노 소재
	54	Tau	의료용 표준물
	55	골무기질량 기준물질	의료용 표준물
	56	자기공명 이완시간 기준물질	MRI 및 X선 촬영 기준 표준
	57	VitaminD metabolites in frozen human serum	의료용 표준물
	58	아미노산, 펩타이드 기준물질	아미노산, 펩타이드 단백질 표준
	59	아미노산 표준용액	아미노산 표준
	60	타겟특이적핵산	생체 의료용 고분자
	61	교정용 아미노산 기준물질	의료 분석(아미노산)
	62	혈장분석용 아미노산 기준물질	의료 분석(아미노산)
	63	3D 프린팅용 인산칼슘	의료 장비
	64	이온크로마토그래피 기준물질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표준
	65	3D 프린팅용 질화규소	의료 장비
	66	bio glass	의료 장비
	67	FDA 기준 45S5조성 위한 균질 기준물질	의료/의료기기용 표준물

참고 3

사업의 필요성 등

□ 사업 필요성

- **(기준물질 개발)**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67개 핵심 소재의 경우 국내 기준물질이 부재한 상황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4개 산업 분야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

- 전량 수입하여 사용하거나 국내 납품사들이 제시하는 기준에 의지

* 일본 등에서 만들었던 불화수소는 그간 반도체 소재 등을 제작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므로 검증없이 사용하였으나, '19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규제로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피해 발생 (약 20조원, 한국전기연구원, '23)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된 소재를 ① 분석하는 '분석기기 및 분석방법'을 교정하는데 있어 기준물질로 활용되거나 ② 개발된 소재와 비교하여 완성도를 확인하는데 사용됨

- **(안정적 보급)**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성으로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기준물질이 많아 민간 자체적으로 생산·보급체계를 유지하는데 한계

-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수급 불안정* 시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국가전략기준물질은 표준과학연구원 등 공공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공급망 관리 要

*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거나, 경제성 등의 사유로 국내 기준물질 생산·보급망 소실 우려가 있는 기준물질의 국내 재고량은 약 2~3개월로 추정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소재부품사업과의 관련성

- 소재부품개발사업(R&D) 등을 통해 개발된 소재를 분석하는 분석기기 및 분석방법을 교정하고, 개발된 소재의 완성도를 확인하는데 사용됨

참고 4

국가전략기준물질

- **(용어)** 다양한 ‘표준물질’ 중 동 사업의 방향성(국가전략산업 경쟁력 제고)에 맞는 표준물질을 구분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준물질”**로 표현을 정의*

※ ‘국가전략기준물질’이란, **국가전략 첨단산업 소재·부품의 신뢰성 확보, 공급망 안정화, 정부주도 공급** 등에 필요한 물질로서 다른 물질의 양의 값과 측정 불확도를 설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표준물질**

※ ‘표준물질’이란 장치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물질의 물성값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성치가 충분히 균질하고 잘 설정된 재료 또는 물질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 **국가전략** : **국가전략**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 소재·장비 기술개발 및 검증에 필수적인 물질 개발이라는 동 사업의 방향성* 반영

* 국가전략기준물질을 통한 신뢰성 확보 → 첨단산업 소재·부품의 조기 상용화
(예: 국내 이차전지 소재 제조업체들의 양극재 조성비 성능 검증에 필요한 국내·외 기준물질 부재 → 세계 최초의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표준물질 개발·활용)

- **공급망 안정화** : 우리산업(특히 첨단분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발생 시 산업피해 측면 중요성 높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하는 기준물질

* ('19년, 日) 對韓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23년) 中 희토류 vs 美 첨단 반도체 수출규제
(예 반도체, 디스플레이분야 제조 핵심 공정(식각)에 필요한 불화수소 ('19년 日화이트리스트) 순도 측정 국가전략기준물질(가스) 개발 → 고순도불화수소 국산화 기여로 반도체산업 위기 극복)

- **정부 주도 공급** : 국내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국내 시장이 작고,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성 상 경제성 등 사유로 **민간보다 국가 주도 공급이 필요**한 국가전략기준물질

* LGC에 따르면, 전세계 약 22만종의 국가전략기준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중 **NIST(미국), BAM(독일) 등 정부산하 연구소 등에서 약 80% 개발 및 보급** 중

- **(낮은 인지도)** 최근 표준물질의 중요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표준물질’ 등 표현에 대한 국민 이해도 및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

사 업 명
(22) 국제표준기반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R&D) (3731-33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117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31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국제표준기반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제표준기반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적합성정책국	박형민	노학엽 연구관	
		시험인증정책과	043-870-5480	043-870-5487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엔지니어링/ 표준실	장동규 수석	053-718-8354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국제표준기반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	-	3,600	3,600	5,170	5,170	1,570	43.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	-	5,170
· 국제표준기반 시험 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	-	-	-	-	-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	-	5,17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	-	5,170
· 연구개 발 활동비 등(360-05)	-	-	-	-	-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	-	5,17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	-	5,170
· 국제표준기반 시험 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	-	-	-	-	-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	-	5,170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	-	-	-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	-	5,17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 첨단산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의 시험평가 장비개발을 통한 첨단제품의 품질 확보로 수출 증대 및 국제 경쟁력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기술개발의 추진)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1.4월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 '23.4월 :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발표
- '23.4월 : 2023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시행계획 수립
- '23.5월 :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 발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5~'29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3,600	5,17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기업, 시험연구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제표준기반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	출연	한국산업 기술기획 평가원	3,600	총사업비의 3/4 이내 정부매칭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공동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제표준기반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

: (2025 본예산) 3,600백만원 → (2026 예산) 5,170백만원, 1,570백만원 증액

- (요구) 국제표준에 기반한 첨단제조, 전력반도체,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 첨단기술 상용화에 필수적인 실증단계에서 필요한 시험평가 장비 개발을 위해 '26년 5,170백만원 요구
- (산출) 계속 : 5개 x 1,034백만원 x 12/12개월 = 5,17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600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3,600백만원 가. 신규과제 (3,600백만원) · 5개x960백만x9/12개월 = 3,600백만원	5,170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5,170백만원 가. 신규과제 (5,170백만원) · 5개x1,034백만x12/12개월 = 5,17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시제품 제작 건수 (단위: 건)	목표	-	-	-	신규	신규	신규과제	시험장비	개발된
	실적	-	-	-	진행중	-		시제품 제작	시험장비의
	달성도	-	-	-	-	-		건수의 합	교정 성적서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5	첨단제조, 전력반도체,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 첨단기술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장비 개발 5개 과제 지원
------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전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국제표준별 다양한 유형의 장비들을 발굴하여, 동일 혹은 이상의 성능의 장비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 기반 확보
- 장비개발 기업과 첨단기술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시험장비 개발을 통해 각 기업의 기술력 향상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주도의 첨단기술력 확보
- 국내 시험장비 개발 기업의 기술력 성장으로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지원
- 첨단기술 보유 기업의 설계·제작·시험·양산을 위하여 국제표준 기반의 시험평가 장비를 개발하고, 개발된 장비의 고도화를 통한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공고	국가기술표준원	- 전담기관 홈페이지공고 - 신청자격, 과제명 등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 전산양식 인터넷 등록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우편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구성, 심의
지원대상과제 확정	국가기술표준원	-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지원대상과제 최종 확정
심의결과 통보	전담기관	- 주관기관에 통보 -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실시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전담기관	- 협약전 사전검토(국가기술표준원) -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간 체결 - 총개발기간 연차별협약
기술개발 수행	주관기관	- 협약내용 변경 신청·승인
중간 보고 및 정산	전담기관	- 매 1년 단위 중간/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성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차기년도 정부출연금 지원	전담기관	- 협약금액 지원 - 전년도 잔액은 이월사용
최종보고 및 정산	전담기관	- 최종/정산보고서 제출 - 최종 사업성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국제표준기반 시험장비기술개발 및 고도화지원사업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산업통상부 (5,170백만원)	=> (5,170백만원)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5,170백만원)	=> (5,170백만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5개 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3,600	5,170	5,000	5,000	
2025~2029		3,600	5,170	5,000	5,000	5,0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향후 추진방향
 - 국내 초격차 첨단기술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시험장비를 발굴하여 개발을 지원
 - * 국제표준(ISO, IEC 등)에 기반한 첨단기술 분야 국제적 수준의 시험장비 개발을 통해 시험인증서비스 인프라 구축
 - 국내 시험장비 개발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내외 시장진출 및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시험인증산업은 대표적인 장비 의존형 사업이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앞세운 미국·유럽 등 외산장비에 의존하며, 국내에서도 대부분 외산 장비를 구축 中
- 국내 시험장비 시장을 국제표준에 기반한 국내 개발 장비로 대체하고, 국내 개발 장비의 수출까지 연계하여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미래 투자 분야임
- 국내 시험인증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시장 공략 등을 위해서는 국산 시험평가 장비 개발이 시급
-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표준 기반 자국의 장비를 개발하여 자국 기업의 장비 시장을 확대하고 있어 국내 시험인증산업의 발전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
- * 현재 시험장비 시장의 약 95%를 해외기업이 점유하고 있어, 국내 기업이 스스로 안정적 수요 확보가 불확실한 첨단기술 시험평가 장비개발에 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시험인증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한 사업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3,600	3,600	3,600	-	-	-	3,600	3,60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12월기준	3,600	3,600	3,600	3,600	-	3,600	3,60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사업 개요

□ 배경 및 필요성

- 세계적으로 환경, 안전 분야 등에서 인증(기술규제) 도입 증가 및 전기차(배터리, 충전기) 등에 대한 새로운 시험인증 요구가 증대
 - 해외 인증에 대한 적기 대응 및 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험인증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수
 - * 시험인증산업은 장비 의존형 산업으로 우리 기업이 첨단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에 기반한 첨단기술 분야 시험평가 장비가 필요
- 미래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서는 적시에 시험평가 서비스를 지원하고,
 -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시험평가 장비를 국내 개발 장비로 대체하고, 국산 장비의 수출 및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필요
 - *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기업이 시험장비 시장의 약 95% 점유

□ 사업내용

- 시험인증산업의 성장에 따른 시험장비 개발 수요분야에 대한 장비를 개발하고, 개발 장비의 국내 제작·보급을 통한 제품의 수출 확대에 기여
 - * 국내 시험인증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여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국제표준에 기반한 첨단제조 시스템 구현 및 조기 상용화에 필수적인 실증단계에서 필요한 시험평가 장비를 개발, 우리 산업의 초격차 성장 지원
 - 산업용 IoT, 미래차, 전력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의 내구성·신뢰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비 개발

참고 2

사업의 비전, 전략 및 중장기 계획

□ 국제표준기반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

사업 비전

우리 산업의 우월한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고
고성장하기 위한 첨단기술 실증 지원

목표 및 기대효과

목 표

첨단기술 시험인증을 위한 국제표준 기반 시험장비 개발 및 고도화

- ▶ 첨단제조 시스템 구현 및 조기 상용화에 요구되는 실증단계에서 필요한 시험평가 장비를 개발하여 산업의 초격차 성장 지원

기대 효과

초격차 첨단기술 기반의 국내 기업 수출 역량 향상

- ▶ 첨단기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 서비스를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와 시장의 주도권 강화에 기여

추진전략

추진전략 ①

첨단산업의 혁신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평가 기반조성

추진전략 ②

장비의 고도화를 통한 국내 장비개발 기업 기술력 성장 지원

추진전략 ③

초격차 유지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추진과제	세부내용
① 국제표준에 기반한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	▶ 표준화 전문가와 장비 개발 기업의 매칭을 통한 시험서비스 기반 구축
② 첨단기술의 성능 검증을 위한 장비 고도화	▶ 첨단산업 분야의 초격차를 위한 산업 트렌드에 맞는 고도화된 시험인증 서비스 기반 구축

사 업 명
(23) 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및실증(R&D) (3731-33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0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39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및실증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제품안전관리 기술개발및 실증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제품안전정책국	오유천	-	조아윤
		제품안전정책과	043-870-5410	-	043-870-5412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엔지니어링표준실	장동규 수석	053-718-8354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제품안전관리기술 개발및실증	-	-	-	5,370	5,370	5,37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5,370
· 제품안전기준 개발	-	-	-	-	-	-	-	-	-	-	-	-	-	3,570
· 사고다발제품 안전성실증	-	-	-	-	-	-	-	-	-	-	-	-	-	750
· 제품안전관리체계 기술개발	-	-	-	-	-	-	-	-	-	-	-	-	-	1,05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5,370
· 연구개발활동비 (360-05)	-	-	-	-	-	-	-	-	-	-	-	-	-	5,37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5,370
· 제품안전기준 개발	-	-	-	-	-	-	-	-	-	-	-	-	-	3,570
-연구개발활동비 (360-05)	-	-	-	-	-	-	-	-	-	-	-	-	-	3,570
· 사고다발제품 안전성실증	-	-	-	-	-	-	-	-	-	-	-	-	-	750
-연구개발활동비 (360-05)	-	-	-	-	-	-	-	-	-	-	-	-	-	750
· 제품안전관리체계 기술개발	-	-	-	-	-	-	-	-	-	-	-	-	-	1,050
-연구개발활동비 (360-05)	-	-	-	-	-	-	-	-	-	-	-	-	-	1,0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및실증

- ① **(제품안전기준개발)**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의 안전기준을 적시에 개발하기 위해 전기·생활 및 취약계층 제품 안전기준 개발 지원
- ② **(사고다발제품안전성실증)** 이차전지 내장 제품 등 사고다발제품의 안전성 실증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여 기업이 안전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
- ③ **(제품안전관리체계기술개발)** 해외직구, 온라인 시장 등에서 신속하게 위험한 제품을 찾고 리콜하기 위해 위해제품 신속 식별 기술 및 제품 이력관리 기술 개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제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8.12월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 '10. 2월 : “제품안전기본법” 제정('10.2.4), 시행('11.2.5)
- '11. 1월 :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 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병합
- '11. 3월 : 제1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4. 2월 : 제2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4. 6월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14.6.3), 시행('15.6.4)
- '16. 1월 : 표준안전기반구축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재기획
- '17.12월 : 제3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8. 1월 : 안전인증역량강화사업으로 재기획
- '20. 7월 : 제4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20.12월 : 안전인증역량강화사업 종료

- '21. 4월 :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사업으로 재기획
- '23. 4월 : 제5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25.12월 :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사업 종료 예정
- '26. 2월 : 제6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예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6년 ~ '30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5,37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
- 사업 수혜자 : 기업·소비자 등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제품 안전기준 개발	출연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인증 기관 등	3,570	100%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사고다발제품 안전성실증	출연	한국 제품안전 관리원	750	100%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제품안전 관리체계 기술개발	출연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인증 기관 등	1,050	100%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 및 실증 : (2026 예산안) 5,370백만원, 순증

① 제품 안전기준 개발 : (2025 본예산) 0 → (2026 예산안) 3,570백만원, 순증

- (요구) 국내 실정에 최적화된 안전기준(안) 개발을 위해 '21년 평균 기준 개발 과제 단가 수준으로 예산 요구
- (산출) 17개 과제 x 280백만원 x 9/12개월 = 3,570백만원

② 사고다발제품 안전성 실증 : (2025 본예산) 0 → (2026 예산안) 750백만원, 순증

- (요구) 사고다발·사고원인 불명 제품의 실증을 통한 안전성 개선(안) 도출을 위해 예산 요구
- (산출) 1개 과제 x 1,000백만원 x 9/12개월 = 750백만원

③ 제품 안전관리체계 기술개발 : (2025 본예산) 0 → (2026 예산안) 1,050백만원, 순증

- (요구) 위해제품 신속 식별 기술 및 제품 이력관리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예산 요구
- (산출) 4개 과제 x 350백만원 x 9/12개월 = 1,05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3,570	○ 연구개발활동비(360-05) : 5,370백만원 가. 제품 안전기준 개발 (3,570백만원) • 전기·생활용품 안전기준 개발 : 9개x280백만원x9/12=1,890백만원 • 취약계층 제품 안전기준 개발 : 8개x280백만원x9/12=1,680백만원 나. 사고다발제품 안전성 실증 (750백만원) • 실증 방법 개발 : 1개x1,000백만원x9/12개월=750백만원 다. 제품 안전관리체계 기술개발 (1,050백만원) • 위해제품 신속 식별기술 및 제품 이력관리 기술 등 개발 : 4개x350백만원x9/12개월=1,0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안전기준 채택률 (단위: %)	목표	-	-	-	-	신규	신규	(개발된 안전기준(안) 중 당해년도 재개정 고시건수/안전기준 (안) 개발건수)×100	제품안전관련 통계자료
	실적	-	-	-	-	-			
	달성도	-	-	-	-	-			
안전성 실증결과 활용 건수 (단위: 건)	목표	-	-	-	-	신규	신규	도출된 실험방법 가이드라인 안전기준 제품설계변경(안) 등 안전성 실증 결과 공식 활용수	제품안전관련 통계자료
	실적	-	-	-	-	-			
	달성도	-	-	-	-	-			
제품 안전관리 기술 도입 건수 (단위: 건)	목표	-	-	-	-	신규	신규	(현장 적용한 요소 기술 건수/개발한 요소기술 건수)×100	제품안전관련 통계자료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제품 안전기준 개발)** 전기·생활 및 취약계층 제품 안전기준 개발(55개)
- **(사고다발제품 안전성 실증)** 이차전지 내장 제품 등 사고다발제품 안전성 실증(10건)
- **(제품 안전관리체계 기술개발)** 위해제품 신속 식별 기술 및 제품 이력관리 기술 개발
⇒ 안전한 제품 사용 환경 조성으로 사회적 신뢰도 향상, 제품안전사고 예방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신유형 제품의 안전기준 신속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내역사업(①제품 안전기준 개발, ②사고다발제품 안전성 실증, ③제품 안전관리체계 기술개발) 동일

사업계획 수립·공고	산업통상부	시행기관
과제 신청·접수	전담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기술성·사업성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지원과제선정	산업통상부	조정위원회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전담기관	시행기관
사업수행·관리	전담기관, 수행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진도점검 및 보고(중간평가)	전담기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최종점검·최종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전담기관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	-	-	-	
2025~2029		-	5,370	6,200	6,000	6,1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향후 추진방향

- ① 제품의 국내 실정 및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여 과학적·체계적으로 안전기준 개발
- ② 사고다발제품의 원인 규명을 위한 실험평가방법 구축 및 사고제품 실증 연구
- ③ 위해제품 신속 식별 기술 및 제품 이력관리 기술 개발

☐ 세부 추진계획

- ① 전기·생활 및 취약계층 제품 안전기준 개발
- ② 이차전지 내장 제품(전동킥보드, 보조배터리 등) 안전성 확보 평가를 위한 실증 방법 개발
- ③ 위해제품 평가·관리 기술(비파괴) 개발 및 제품 이력 추적 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25년 종료 예정인 R&D사업*의 후속 신규사업 기획으로 국가의 책무인 제품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제품안전 관련된 유일의 R&D 사업
 - * ('18)안전인증역량강화사업 → ('21)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사업 → ('26)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및실증
- ※ 관련법령: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 제품안전기본법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및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 이차전지 내장 제품의 화재·폭발 사고 및 해외직구 등 유통형태 다변화로 안전한 제품 생산·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 필요
 - ※ 전기스쿠터용 배터리 충전 중 폭발 화재 발생('25.8.19. 서울 마포 아파트 화재)
 - 보조배터리 폭발로 인한 아파트 화재 발생('25.5.12. 의정부 아파트 화재)
 - 에어부산 보조배터리 화재사고 관련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표준안 시행('25.3.1)
 - ('24.8월)258개 해외직구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률: 17%(국내 부적합률의 약 3배)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내역사업별 상세 설명자료

1. 제품 안전기준 개발 사업('26. 4. ~ '30. 12.)

☐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6 ~ 2030	총사업비	167.7억원(국비: 167.7억)
주관기관	시험인증기관, 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조아윤 연구사(☎ 043-870-5412, 010-4892-9803)		

☐ 사업내용(지원내용)

- 국제 안전기준 부합화 및 국내 실정에 최적화된 제품 안전기준(안) 개발

☐ '26년 예산내역 : 3,570백만원

- (전기·생활용품/취약계층제품 안전기준 개발) 제품의 국내 실정 및 국제적 동향을 반영한 과학적·체계적 안전기준 개발을 위한 사업비 3,570백만원
 - 전기용품, 생활용품에 대하여 국제 안전관리 부합화 및 국내 실정 최적화를 통한 안전기준 개발: **1,890백만원**
⇒ 9개 과제 × 210백만원 × 12/12개월
 - 어린이, 고령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행동·생활패턴, 신체적 요건, 사용 환경 등을 고려한 안전기준 개발: **1,680백만원**
⇒ 8개 과제 × 210백만원 × 12/12개월

2. 사고다발제품 안전성 실증 사업('26.4. ~ '30.12.)

☐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6 ~ 2030	총사업비	47.5억원(국비: 47.5억)
주관기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조아윤 연구사(☎ 043-870-5412, 010-4892-9803)		

☐ 사업내용(지원내용)

- 사고원인 규명 및 예방을 위한 이차전지 내장 제품 등 사고제품의 안전성 검증

□ '26년 예산내역 : 750백만원

- (실증 방법 개발) 사고다발제품의 원인 규명을 위한 실험평가방법 구축 및 사고제품 실증*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비 **750백만원**

* 제품의 실제 사용환경을 고려한 실험을 통해 안전성 검증(시료구매-사용환경조성-실험조건설정-실험)

- 사고다발제품*을 대상으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하여 실험·평가를 할 수 있는 실증** 방법 연구: **750백만원**

⇒ 1개 과제 × 1,000백만원 × 9/12개월

* 화재폭발 등이 발생한 이차전지 내장 제품 ex)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보조배터리 휴대용선풍기 전기찜질기 등

3. 제품 안전관리체계 기술개발 사업('26.4.~'30.12.)

□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6 ~ 2030	총사업비	79억원(국비: 79억)
주관기관	시험인증기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조아윤 연구사☎ 043-870-5412, 010-4892-9803)		

□ 사업내용(지원내용)

- 위해 제품 신속 식별 및 제품 이력관리 기술 개발

□ '26년 예산내역 : 1,050백만원

- (위해제품 신속 식별 및 제품 이력관리 기술 개발) 신속한 위해 제품 차단 방법 및 시험법 개발, 제품 위해 정보의 수집·공유 및 제품 이력관리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비 **1,050백만원**

- 비관리·해외직구제품 등 다양한 위해 유통제품의 신속한 식별을 위한 품목별 판단 모델 및 시험법 개발: **262.5백만원**

⇒ 1개 과제 × 350백만원 × 9/12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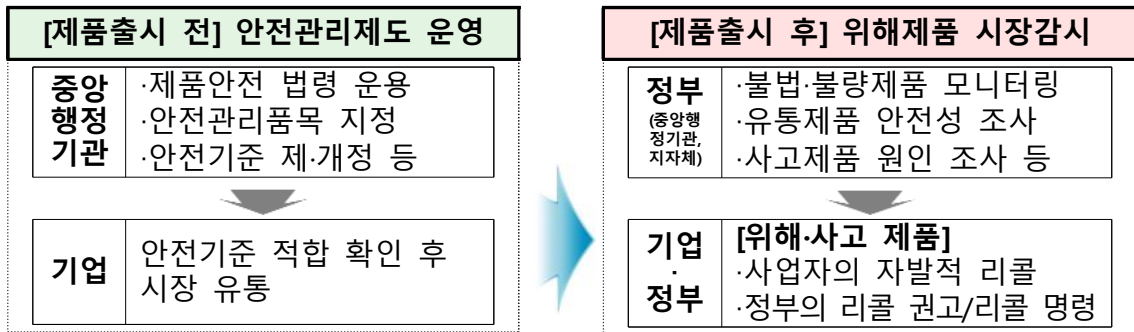
- 기업과 소비자의 자발적 안전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유통기업, 리콜사고 정보의 실시간 이력조회 기술 등 제품안전관리 기술 개발: **787.5백만원**

⇒ 3개 과제 × 350백만원 × 9/12개월

참고 2 제품안전관리제도

- (개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전기용품·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의 시장 출시 전·후에 제품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 중

< 제품출시 전·후 제품안전관리체계 >



*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품출시 쏴) 인증제도를 운영하여 안전관리 대상품목이 안전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 후, 안전한 제품만 시장에 출시하도록 관리

* 제품 위해정도에 따라 4단계로 안전 관리

안전인증대상 (45종, 15.7%)	안전확인대상 (107종, 37.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106종, 36.9%)	안전기준준수/안전성검사 (29종, 10.1%)
높 음	(위 해 도)		낮 음

구 분	마 크	대상품목(287) (전기/생활/어린이)	절 차
안전인증대상		45종(36/5/4)	제품시험(인증기관) + 공장심사 → 인 증 → 판 매
안전확인대상		107종(64/26/17)	제품시험(시험검사기관) → 신 고 → 판 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106종(76/16/14)	제품시험(기업 스스로) → 신 고(전기용품) → 판 매
안전기준준수/안전성검사	없음	29종(2/27/-)	제품시험의무없음 → 판 매

- (제품출시 後) 안전성조사, 리콜*제도 운영 등으로 시중 유통 중인 위해(우려)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 확산 방지

*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유통/통관단계 제품 안전성조사	제품 위해정보 수집·분석	제품 리콜	위해상품판매차단
불법·불량제품 모니터링	제품사고 조사	리콜이행점검	해외리콜제품차단

참고 3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6~'28년, 수립중)
-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25년) 주요내용

비전

국민생활 안심을 위한 체계적인 제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목표	소비자의 안전성은 UP!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DOWN!	(안전인증 품목수) 45 개('22년) (170개 세부품목) → 10% 축소 조정('25년)
		(안전기준 정비) 52 건('22년) → 전수 검토개정('25년)
		(제품사고조사) 73 개사('22년) → 150 개사('25년)
		(위해차단시스템) 235,129 개('22년) → 246,000 개('25년)
		(제품안전 모니터링) 127,847 건('22년) → 150,000 건('25년)
		(제품안전정보 활용) 350,000 건/일('22년) → 380,000 건/일('25년)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1	[제도] 기업·소비자 Win-Win을 위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전관리대상 규제수준 정비 ② 안전기준 전면 재검토 및 일제 정비 ③ 민간주도 안전관리 기반 마련 ④ 국제적 환경변화 신속 대응
2	[사전] 소비자 안전강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관리제품 규제공백 해소를 위한 체계 정비 ② 신기술·신수요제품 안전관리 ③ 사회적 배려계층 안전관리 지원 ④ 제품 리스크평가 활성화
3	[사후] 총총한 시장관리를 위한 사후관리의 디지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데이터 기반 제품사고조사 추진 체계 구축 ② 위해상품 유통·판매 차단 강화 ③ 안전성조사 원스톱 업무처리시스템 구축 ④ 온라인쇼핑몰 위해우려 유통제품 안전관리
4	[기반] 효율적인 제품안전관리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내외 제품안전 채널 협력 확대 ② 제품안전 기술개발 및 역량강화 ③ 맞춤형 제품안전정보 제공 및 활용 확대 ④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역량강화

○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5 ~ '27년) 주요내용

비전 · 목표

선제적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로 어린이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저감**

- 어린이제품
인증건수 대비
사고건수 비율
20% 이하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안전관리**

-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조사
연간 500건 이상
- 유해제품 공표 및
국내유입 차단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 안전기준 정비
(제·개정 10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 안전문화기업 10개社
선정
- 어린이제품안전교육
로드맵 수립

4대 전략 · 9대 과제

**1.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 ① 어린이 제품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제도 고도화
- ②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선

**2.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안전관리
강화**

- ①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 ② 국내에서의 안전한 어린이제품 유통환경 조성

**3.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 ①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도입
- ② 융복합·신기술 제품 대응을 위한 안전기준
조사연구센터 신설

**4.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 ①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우수기업 지원
- ② 기업 친화적 인증 기반 제도 개선
- ③ 어린이제품 안전인식 제고

사 업 명						
(24)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 (71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116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4	301
명칭	산업통상부행정지원	국가기술표준원정책수립운영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박상철	염동석	유연철
	사업시행주체	지원총괄과	043-870-5320	043-870-5328	043-870-5334
		꿈나래어린이집	백진영	이다영	043-533-2017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	1,655	1,469	1,469	1,560	1,550	81	5.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02	1,702	1,655 [1,655]	-	47	1,469	1,444	1,414 [1,414]	1,414	1,414 [1,414]	-	30	1,550	
·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	1,702	1,702	1,655 [1,655]	-	47	1,469	1,444	1,414 [1,414]	1,414	1,414 [1,414]	-	30	1,550	
○ 비목별 분류(합계)	1,702	1,702	1,655 [1,655]	-	47	1,469	1,444	1,414 [1,414]	1,444	1,414 [1,414]	-	30	1,550	
· 상용임금(110-03)	695	695	695 [695]	-	-	717	692	692 [692]	692	692 [692]	-	-	783	
· 일반수용비(210-01)	40	40	38 [38]	-	2	10	10	10 [10]	10	10 [10]	-	-	10	
· 임차료(210-07)	360	360	357 [357]	-	3	380	380	365 [365]	380	365 [365]	-	15	380	
· 유류비(210-08)	9	9	9 [9]	-	-	9	9	9 [9]	9	5 [5]	-	4	9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359	359	359 [359]	-	-	122	122	122 [122]	122	122 [122]	-	-	122	
· 복리후생비(210-12)	10	10	10 [10]	-	-	10	10	10 [10]	10	10 [10]	-	-	10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8	8	8 [8]	-	-	8	8	8 [8]	8	8 [8]	-	-	8	
· 포상금(310-03)	2	2	2 [2]	-	-	2	2	2 [2]	2	2 [2]	-	-	2	
· 민간경상보조 (320-01)	81	81	48 [48]	-	33	70	70	59 [59]	70	59 [59]	-	11	70	
· 고용부담금(320-09)	136	136	127 [127]	-	9	140	140	140 [140]	140	140 [140]	-	-	155	
· 자산취득비(430-01)	2	2	2 [2]	-	-	1	1	1 [1]	1	1 [1]	-	-	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702	1,702	1,655 [1,655]	-	47	1,469	1,444	1,414 [1,414]	1,414	1,414 [1,414]	-	30	1,550	
·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	1,702	1,702	1,655 [1,655]	-	47	1,469	1,444	1,414 [1,414]	1,414	1,414 [1,414]	-	30	1,550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상용임금(110-03)	695	695	695 [695]	-	-	717	692	692 [692]	692	692 [692]	-	-	783
-일반수용비(210-01)	40	40	38 [38]	-	2	10	10	10 [10]	10	10 [10]	-	-	10
-임차료(210-07)	360	360	357 [357]	-	3	380	380	365 [365]	380	365 [365]	-	15	380
-유류비(210-08)	9	9	9 [9]	-	-	9	9	9 [9]	9	5 [5]	-	4	9
-시설장비유지비 (210-09)	359	359	359 [359]	-	-	122	122	122 [122]	122	122 [122]	-	-	122
-복리후생비(210-12)	10	10	10 [10]	-	-	10	10	10 [10]	10	10 [10]	-	-	10
-관서업무추진비 (240-02)	8	8	8 [8]	-	-	8	8	8 [8]	8	8 [8]	-	-	8
-포상금(310-03)	2	2	2 [2]	-	-	2	2	2 [2]	2	2 [2]	-	-	2
-민간경상보조 (320-01)	81	81	48 [48]	-	33	70	70	59 [59]	70	59 [59]	-	11	70
-고용부담금(320-09)	136	136	127 [127]	-	9	140	140	140 [140]	140	140 [140]	-	-	155
-자산취득비(430-01)	2	2	2 [2]	-	-	1	1	1 [1]	1	1 [1]	-	-	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 국가기술표준원은 충북혁신도시(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독립 청사로서, 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 및 청사 내·외 시설장비 유지 등을 위한 기관운영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② 추진경위 -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을 위해 95년도부터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5~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28	1,665	1,702	1,469	1,55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꿈나래어린이집(보조)
- 사업 수혜자 : 충북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 보육지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	보조	꿈나래 어린이집	70	10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69 백만원	<p>○ 상용임금(110-03) : 717,249천원</p> <p>가. 기계, 전기, 조경, 미화 전문직 인건비 (717,249천원)</p> <p>· 전문직 인건비 : 3,146천원×19명×12개월=717,249천원</p> <p>○ 일반수용비(210-01) : 10,000천원</p> <p>가. 안전 보건 관련 용역비 (5,000천원)</p> <p>·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성평가 용역 : 5,000천원×1식=5,000천원</p> <p>나. 소모품 구매 (5,000천원)</p> <p>· 시설장비유지보수 소모품 : 1,000천원×5회=5,000천원</p> <p>○ 임차료(210-07) : 380,000천원</p> <p>가. 버스 임차료 (260,000천원)</p> <p>· 버스 임차료 : 650천원×2대×200일=260,000천원</p> <p>나. 물품 임차료 (60,000천원)</p> <p>· 공기청정기 등 : 60,000천원×1식=60,000천원</p> <p>다. 사무실 임차료 (60,000천원)</p> <p>· 사무실 : 10,000천원×6개월=60,000천원</p>	1,550 백만원	<p>○ 상용임금(110-03) : 783,403천원</p> <p>가. 기계, 전기, 조경, 미화 전문직 인건비 (717,249천원)</p> <p>· 전문직 인건비 : 3,435천원×19명×12개월=783,403천원</p> <p>○ 일반수용비(210-01) : 10,000천원</p> <p>가. 안전 보건 관련 용역비 (5,000천원)</p> <p>·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성평가 용역 : 5,000천원×1식=5,000천원</p> <p>나. 소모품 구매 (5,000천원)</p> <p>· 시설장비유지보수 소모품 : 1,000천원×5회=5,000천원</p> <p>○ 임차료(210-07) : 380,000천원</p> <p>가. 버스 임차료 (380,000천원)</p> <p>· 버스 임차료 : 475천원×4대×200일=380,000천원</p> <p>○ 유류비(210-08) : 9,000천원</p> <p>가. 소형승용(코나 등) (1,500천원)</p> <p>· 소형승용 유류비 : 1,500천원×1대=1,500천원</p> <p>나. 소형버스(에어로타운) (1,000천원)</p>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p>○ 유류비(210-08) : 9,000천원</p> <p>가. 소형승용(코나 등) (1,5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형승용 유류비 : 1,500천원x1대=1,500천원 <p>나. 소형버스(에어로타운) (1,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형버스 유류비 : 1,000천원x1대=1,000천원 <p>다. 소형화물(봉고) (1,5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형화물 유류비 : 1,500천원x1대=1,500천원 <p>라. 중형승합(쏘라티 등) (5,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쏘라티 유류비 : 2,500천원x1대=2,500천원 카니발 유류비 : 2,500천원x1대=2,500천원 <p>○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21,535천원</p> <p>가. 점검용역비 (44,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설비성능점검 등 : 22,000천원x2식=44,000천원 <p>나. 유지보수용역비 (48,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 소방, 승강기, 방역 : 12,000천원x4식=48,000천원 <p>다. 기타수선유지비 (29,535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장비 보수 등 : 2,953천원x10회=29,535천원 <p>○ 복리후생비(210-12) : 9,994천원</p> <p>가. 기계, 전기, 조경, 미화 전문직 복리후생비 (9,994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직 복리후생비 : 526천원x19명=9,994천원 <p>○ 관서업무추진비(240-02) : 8,000천원</p> <p>가. 시설안전평가회의 (4,5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안전평가회의 : 500천원x9회=4,500천원 <p>나. 시설안전기관간담회 (1,4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안전기관간담회 : 280천원x5회=1,400천원 <p>다. 시설분야별직원간담회 (2,1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분야별직원간담회 : 300천원x7회=2,100천원 <p>○ 포상금(310-03) : 2,000천원</p> <p>가. 포상금 및 상금 (2,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 포상금 : 2,000천원x1식=2,000천원 <p>○ 민간경상보조(320-01) : 70,000천원</p> <p>가. 공동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비 (7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비 : 833천원x7명x12개월=70,000천원 <p>○ 고용부담금(320-09) : 140,222천원</p> <p>가. 기계, 전기, 조경, 미화 전문직 고용부담금 (140,222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직 고용부담금 : 7,380천원x19명=140,222천원 <p>○ 자산취득비(430-01) : 1,000천원</p> <p>가. 기타시설장비 구매 (1,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 구매 : 1,000천원x1식=1,000천원 		<p>· 소형버스 유류비 : 1,000천원x1대=1,000천원</p> <p>다. 소형화물(봉고) (1,5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형화물 유류비 : 1,500천원x1대=1,500천원 <p>라. 중형승합(쏘라티 등) (5,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쏘라티 유류비 : 2,500천원x1대=2,500천원 카니발 유류비 : 2,500천원x1대=2,500천원 <p>○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21,490천원</p> <p>가. 점검용역비 (44,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설비성능점검 등 : 22,000천원x2식=44,000천원 <p>나. 유지보수용역비 (48,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 소방, 승강기, 방역 : 12,000천원x4식=48,000천원 <p>다. 기타수선유지비 (29,49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장비 보수 등 : 2,949천원x10회=29,490천원 <p>○ 복리후생비(210-12) : 9,994천원</p> <p>가. 기계, 전기, 조경, 미화 전문직 복리후생비 (9,994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직 복리후생비 : 526천원x19명=9,994천원 <p>○ 관서업무추진비(240-02) : 8,000천원</p> <p>가. 시설안전평가회의 (4,5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안전평가회의 : 500천원x9회=4,500천원 <p>나. 시설안전기관간담회 (1,4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안전기관간담회 : 280천원x5회=1,400천원 <p>다. 시설분야별직원간담회 (2,1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분야별직원간담회 : 300천원x7회=2,100천원 <p>○ 포상금(310-03) : 2,000천원</p> <p>가. 포상금 및 상금 (2,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 포상금 : 2,000천원x1식=2,000천원 <p>○ 민간경상보조(320-01) : 70,000천원</p> <p>가. 공동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비 (7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비 : 833천원x7명x12개월=70,000천원 <p>○ 고용부담금(320-09) : 155,113천원</p> <p>가. 기계, 전기, 조경, 미화 전문직 고용부담금 (155,113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직 고용부담금 : 8,163천원x19명=155,113천원 <p>○ 자산취득비(430-01) : 1,000천원</p> <p>가. 기타시설장비 구매 (1,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 구매 : 1,000천원x1식=1,000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702	1,469	1,550	2,063	2,166	
2025~2029		1,469	1,550	1,697	1,782	1,87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청사 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 및 내·외 시설물 지속적인 기능 개선(예방 및 유해·위험 요소 발굴) 등 안정적인 시설 운영
-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단체를 지원, 직원들의 보육부담을 경감하여 경력 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도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628	-	1,628	-	-	-	1,628	1,312	80.6	80.6	-	316
2023	1,665	-	1,665	-	-	-	1,665	1,346	80.8	80.8	-	319
2024	1,702	-	1,702	-	-	-	1,702	1,655	97.2	97.2	-	47
2025	1,469	-	1,469	-	25	-	1,444	1,414	96.3	97.9	-	3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70	70	51	51	-	51	51	-	-	72.9
2023	72	72	59	59	-	59	59	-	-	81.9
2024	81	81	48	48	-	48	48	-	-	59.3
2025. 12월기준	70	70	59	59	-	59	59	-	-	84.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이·전용 등 사유 : 산업부(본부) 기본급 상승, 현원 및 명퇴자 증가 등 인건비 수요 전년대비 증가, 12월 인건비(보수) 부족으로 인건비 부족액 중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상용임금) 집행잔액 자체전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2.8.)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 (7134-301)	110-03	25	본부 인건비 (7101-101)	110-01	본부 인건비 부족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자체전용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25) 기술표준정책 (7134-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116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4	302
명칭	산업통상부행정지원	국가기술표준원정책수립운영	기술표준정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품질경영 대회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시험인증정책과	과 장 박형민	사무관 김상태	주무관
			043-870-5480	043-870-5481	
		사업시행주체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	과 장 박상철	사무관 염동석	주무관 김혜린
전문관 고용 포상금 운영 청년인턴 고용			043-870-5320	043-870-5328	043-870-5332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기술표준정책	889	800	800	880	862	62	7.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949	949	889	-	60	800	800	782	800	782	-	18	862
· 전문관 고용	637	637	623	-	14	657	657	648	657	648	-	9	717
· 국가품질경영대회 운영	205	205	205	-	-	57	57	57	57	57	-	-	57
· 포상금 운영	4	4	4	-	-	4	4	4	4	4	-	-	4
· 청년인턴고용	103	103	57	-	46	82	82	73	82	73	-	9	84
○ 비목별 분류(합계)	949	949	889	-	60	800	800	782	800	782	-	18	862
· 상용임금(110-03)	526	526	520	-	6	543	543	534	543	534	-	9	591
· 일용임금(110-04)	97	97	55	-	42	69	69	63	69	63	-	6	71
· 일반수용비(210-01)	142	142	141	-	1	11	11	11	11	11	-	-	11
· 복리후생비(210-12)	8	8	8	-	-	8	8	8	8	8	-	-	9
· 일반용역비(210-14)	64	64	64	-	-	47	47	47	47	47	-	-	47
· 국내여비(220-01)	5	5	2	-	3	4	4	2	4	2	-	2	4
· 포상금(310-03)	4	4	4	-	-	4	4	4	4	4	-	-	4
· 고용부담금(320-09)	103	103	95	-	8	114	114	113	114	113	-	1	12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949	949	889	-	60	800	800	782	800	782	-	18	862
· 전문관 고용	637	637	623	-	14	657	657	648	657	648	-	9	717
-상용임금(110-03)	526	526	520	-	6	543	543	534	543	534	-	9	591
-복리후생비(210-12)	8	8	8	-	-	8	8	8	8	8	-	-	9
-고용부담금(320-09)	103	103	95	-	8	106	106	106	106	106	-	-	117
· 국가품질경영대회 운영	205	205	205	-	-	57	57	57	57	57	-	-	57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일반수용비(210-01)	141	141	141	-	-	10	10	10	10	10	-	-	10
-일반용역비(210-14)	64	64	64	-	-	47	47	47	47	47	-	-	47
· 포상금 운영	4	4	4	-	-	4	4	4	4	4	-	-	4
-포상금(310-03)	4	4	4	-	-	4	4	4	4	4	-	-	4
· 청년인턴고용	103	103	57	-	46	82	82	73	82	73	-	9	84
-일용임금(110-04)	97	97	55	-	42	69	69	63	69	63	-	6	71
-일반수용비(210-01)	1	1	-	-	1	1	1	1	1	1	-	-	1
-국내여비(220-01)	5	5	2	-	3	4	4	2	4	2	-	2	4
-고용부담금(320-09)	-	-	-	-	-	8	8	7	8	7	-	1	8

※ 동 사업은 직접 수행 사업으로 집행액과 실집행액이 동일함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술표준정책) 국가기술표준원의 표준·제품안전·적합성·기술규제대응 정책·업무 지원
- (전문관 고용) 국가기술표준원 정책·업무(표준·제품안전·적합성·기술규제대응)를 지원하는 전문관(16명) 인력 운영을 통해, 업무 능률 향상 및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 (국가품질경영대회 운영)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에서 품질향상, 가격경쟁력 제고, 생산성 향상 등의 혁신활동 성과 포상을 통해, 품질경영 문화를 활성화하여 국가 품질경쟁력을 강화
- (포상금 운영) 국가기술표준원 우수 부서 연말 포상을 통해 조직의 활성화와 개인 역량 제고 유도
- (청년인턴 고용)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의 실무경험 및 국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인턴 고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표준기본법 >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18조(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 산업표준화법 >

○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품질경영의 지원)

- ①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기업등이 품질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정부는 품질경영을 통하여 품질향상,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또는 서비스품질개선 등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업등 및 개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0조의4(품질경영에 관한 포상 및 지원)

- ①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포상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등: 다음 각 목의 상
 - 가. 국가품질대상 나. 국가품질경영상 다. 국가품질혁신상
 - 2. 품질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개인: 국가품질명장 및 품질경영유공자
 - 3. 품질향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소집단: 우수품질분임조상(금상, 은상 및 동상으로 구분하여 포상한다)
-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수상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상(副賞) 및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의 선정방법, 선정절차, 포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또는 소집단의 임직원이나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품질경영 관련 내용을 강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강의로 지원
 - 2. 품질경영에 관한 국내외 연수 경비의 지원(수상자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속한 소집단인 경우와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국가표준화체계 운영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 2000.11.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수립
- 2006.05.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2010.11.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2012.07.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수립(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VIP보고)
- 2016.04.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2017.12. 『유망 신산업(12대 분야) 표준화 로드맵』 수립
- 2019.06.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 수립」(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국가품질경영대회 : 1975년 10월 ‘제1회 전국품질관리 및 표준화대회’로 시작

< 최근 3년간 정부포상 수여 규모 >

구분	종류	'23년	'24년	'25년
정부 포상	훈 장	3	3	3
	포 장	3	2	2
	대통령표창	18	18	18
	국무총리표창	13	13	13
정부포상 소계		37	36	36
장관	산업통상부장관표창	25	25	28
	산업통상부장관상	5	5	7
원장	국가기술표준원장표창	10	10	10
협회	협회장표창	13	12	19
기타 포상	우수품질분임조	272	298	316
	국가품질명장	10	9	12
선정	품질경쟁력우수기업	43	56	59
기타 포상 소계		378	415	451
총계		415	451	487

- 역대 주요 참석인사

- 1975. 제1회 전국품질관리 및 표준화대회(김종필 국무총리)
- 1992. 제18회 전국품질경영대회(노태우 대통령)
- 1994. 제20회 전국품질경영대회(김영삼 대통령)
- 2019.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이낙연 국무총리)
- 2020. 제46회 국가품질경영대회(정세균 국무총리)
- 2023. 제49회 국가품질경영대회(한덕수 국무총리)
- 2024.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한덕수 국무총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75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23	739	949	800	862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기술표준원 전문관, 청년인턴, 품질경영 우수기업 및 개인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기술표준정책

: (2025 본예산) 800백만원 → (2026 예산) 862백만원, 62백만원 증액

① 전문관 고용: ('25) 657→ ('26 예산) 717백만원, +9.1%

- (요구) 전문관 고용을 위한 인건비로서 최저임금·통상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수당 단계 상승을 감안, '25년 대비 +9.1% 증액 요구

*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라 통상임금에 명절휴가비도 포함('24.12.19. 전원합의체 판결) → 통상임금 상승에 따라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상승

- (산출) 상용임금 591백만원(16명×3,079,125원×12개월)
+ 복리후생비 9백만원(16명×541,000원) + 고용부담금 117백만원(16명×7,316,063원)

② 국가품질경영대회 운영: ('25) 57→ ('26 예산) 57백만원, 전년동

- (요구) 국가품질경영대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자 2,000여명 참석 대회로서 포상물 제작 및 480여점의 포상심사를 위한 필수예산 반드시 필요(현재 약130백만원 부족)

- (산출) 심사수당 10백만원(20만원×3개 분야×1.5일×11명)
+ 포상물제작비 47백만원(1,677개×28,000원)

③ 포상금 운영: ('25) 4→ ('26 예산) 4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포상금 운영을 통해 품질향상, 원가절감 등을 위한 활동 또는 표준화, 생산성향상, 서비스 품질개선 등과 관련된 성과 평가

- (산출) 4백만원(개인·기관40명×10만원)

④ 청년인턴 고용: ('25) 82→ ('26 예산) 84백만원, +2.4%

- (요구) 청년의 일경험 확대를 위한 청년인턴 인건비로서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 단계 상승을 감안, '25년 대비 +2.4% 증액 요구

- (산출) 일용임금 71백만원(1명×2,156,880원×3개월 + 5명×2,156,880원×6개월)
+ 일반수용비 1백만원 + 국내여비 4백만원 + 고용부담금 8백만원(6명×1,372,668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관 고용 : 65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임금(110-03) : 543백만원(16명×283만원×12개월) - 복리후생비(210-12) : 8백만원(16명×54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106백만원(16명×663만원) ○ 국가품질경영대회 운영 : 5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수용비(210-01) : 10백만원(심사수당) - 일반용역비(210-14) : 47백만원(포상물 제작비) ○ 포상금 운영 : 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상금(310-03) : 4백만원(개인·기관40명×10만원) ○ 청년인턴 고용 : 8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임금(110-04) : 69백만원 (1명×210만원×3개월 + 5명×210만원×6개월) - 일반수용비(210-01) : 1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4백만원(5만원×80회) - 고용부담금(320-09) : 8백만원(6명×129만원) 	8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관 고용 : 71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임금(110-03) : 591백만원(16명×308만원×12개월) - 복리후생비(210-12) : 9백만원(16명×54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117백만원(16명×732만원) ○ 국가품질경영대회 운영 : 5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수용비(210-01) : 10백만원(심사수당) - 일반용역비(210-14) : 47백만원(포상물 제작비) ○ 포상금 운영 : 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상금(310-03) : 4백만원(개인·기관40명×10만원) ○ 청년인턴 고용 : 8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임금(110-04) : 71백만원 (1명×216만원×3개월 + 5명×216만원×6개월) - 일반수용비(210-01) : 1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4백만원(5만원×80회) - 고용부담금(320-09) : 8백만원(6명×137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전문관 16명 고용, 품질경영 우수 기업 및 개인에게 훈·포장 등 402점 수여
2023	전문관 16명 고용, 청년인턴 3명 고용, 품질경영 우수 기업 및 개인에게 훈·포장 등 415점 수여
2024	전문관 16명 고용, 청년인턴 7명 고용, 품질경영 우수 기업 및 개인에게 훈·포장 등 451점 수여
2025	전문관 16명 고용, 청년인턴 9명 고용, 품질경영 우수 기업 및 개인에게 훈·포장 등 487점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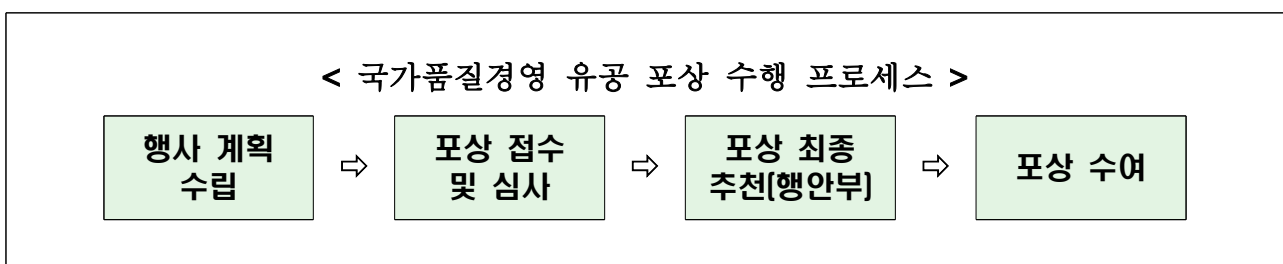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전문관의 안정적 고용(16명) 및 청년인턴 할당인원 고용
- 국가품질경영대회 지속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 수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949	800	862	1965	2028	
2025~2029		800	862	851	911	975

※ (2025~2029) 국가품질경영대회 운영 내역사업은 '26년부터 '시험인증 산업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이관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현행 유지 결정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가기술표준원 업무지원을 위한 전문관 인건비 및 청년의 실무경험 및 국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인턴 인건비 지출
- 품질경영 유공자를 포상·격려하는 국가품질경영대회 운영을 위해 지출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23	-	723	-	-	-	723	627	86.7	86.7	-	96
2023	739	-	739	-	30	-	769	683	92.4	88.8	-	86
2024	949	-	949	-	-	-	949	889	93.7	93.7	-	60
2025	800	-	800	-	-	-	800	782	97.8	97.8	-	18

※ 23년도 청년인턴 고용에 따라, 30백만원 전용하여 인건비 집행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 없음 - 불용 사유 : 전문관 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96백만원 불용
2023	- 이·전용 등 사유 : 청년인턴(3명) 인건비 지급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인건비에서 30백만원 전용 - 불용 사유 : 전문관 휴직 및 연도중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86백만원 불용
2024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 없음 - 불용 사유 : 전문관 휴직 및 청년인턴 지원자 미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60백만원 불용
2025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 없음 - 불용 사유 : 전문관 휴직 및 청년인턴 근무일수 조정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8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참고자료 첨부

참고1

국가품질경영대회운영 개요

□ 개요

- **全 산업분야에서 품질경영 활동을 통해 국가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우수 단체 및 공로자를 선정·포상하여 기업의 기술·생산 혁신 촉진**

* 법적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4(품질경영 포상)

구분	종 류	'25년		'24년			'23년	'22년
				개인	단체	계		
정부포상	훈장	3	-	3	-	3	3	3
	포장	2	-	2	-	2	2	3
	대통령표창	18	-	11	7	18	18	18
	국무총리표창	13	-	6	7	13	13	13
	소계	36	-	22	14	36	37	37
장관포상	산업통상부장관표창	28	+3	18	7	25	25	24
	산업통상부장관상	7	+2		5	5	5	5
원장포상	국가기술표준원장표창	10	-	10	-	10	10	10
정부명인선정	우수품질분임조	316	+18	-	298	298	272	266
	국가품질명장	12	+3	9	-	9	10	9
	품질경쟁력우수기업	59	+3	-	56	56	43	39
기타	한국표준협회장표창	19	+7	12	-	12	13	12
총 계		487	+36	71	380	451	415	402

□ 예산 구성

- **①포상심사비**(유공자 및 유공단체 선발을 위한 전문가 평가·출장비)
+ **②포상물제작비**(트로피, 메달, 상패 등 2,2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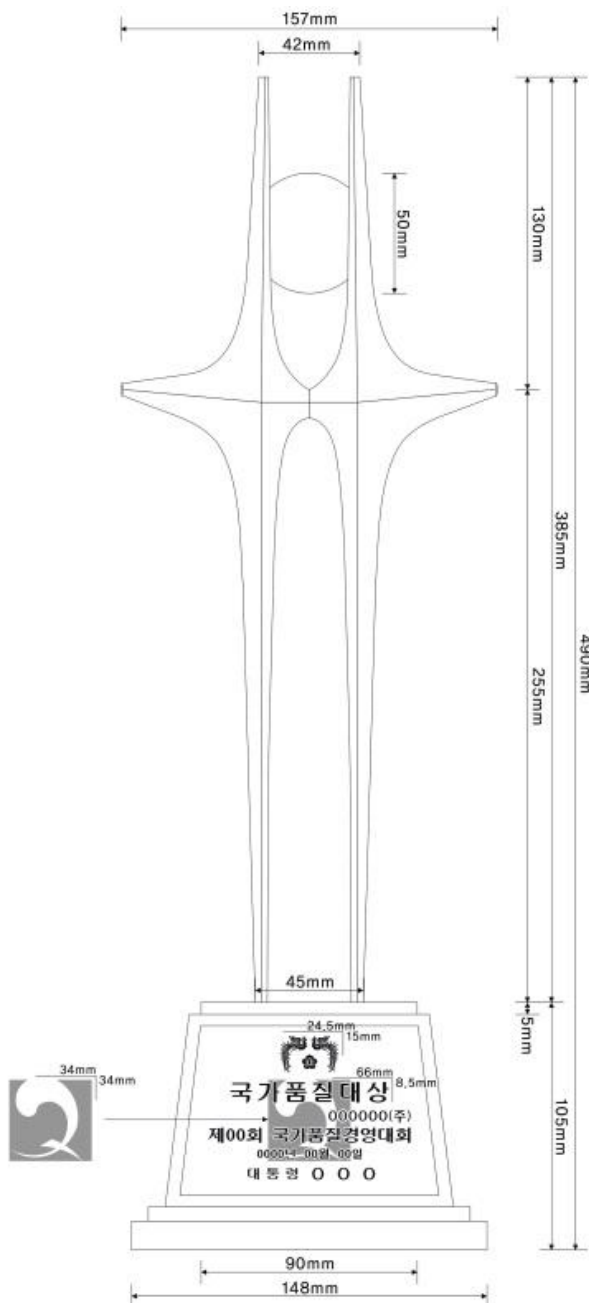
□ 국가품질경영대회 개최 효과

- **新 기술·산업 등장에 따른 시장 선점을 위한 품질 조기 안정화 및 전통산업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경영 활동의 재부흥**
 - **(수준진단)** 포상 신청 및 심사과정(서류·현지심사)을 통해 기업의 품질경영 활동 분석 및 향후 개선방향 제시
 - **(기술혁신)** 포상 대상 품질혁신 분야(AI, ESG, DX 등 12개) 선정을 통해 기업 산업전환 대응 및 신기술 개발·도입 촉진
 - **(인력양성)** 현장 근로자들(분임조) 간의 '품질혁신 활동 경진 대회'을 통해 선발된 우수분임조 포상 및 품질명장 선정을 통해 숙련공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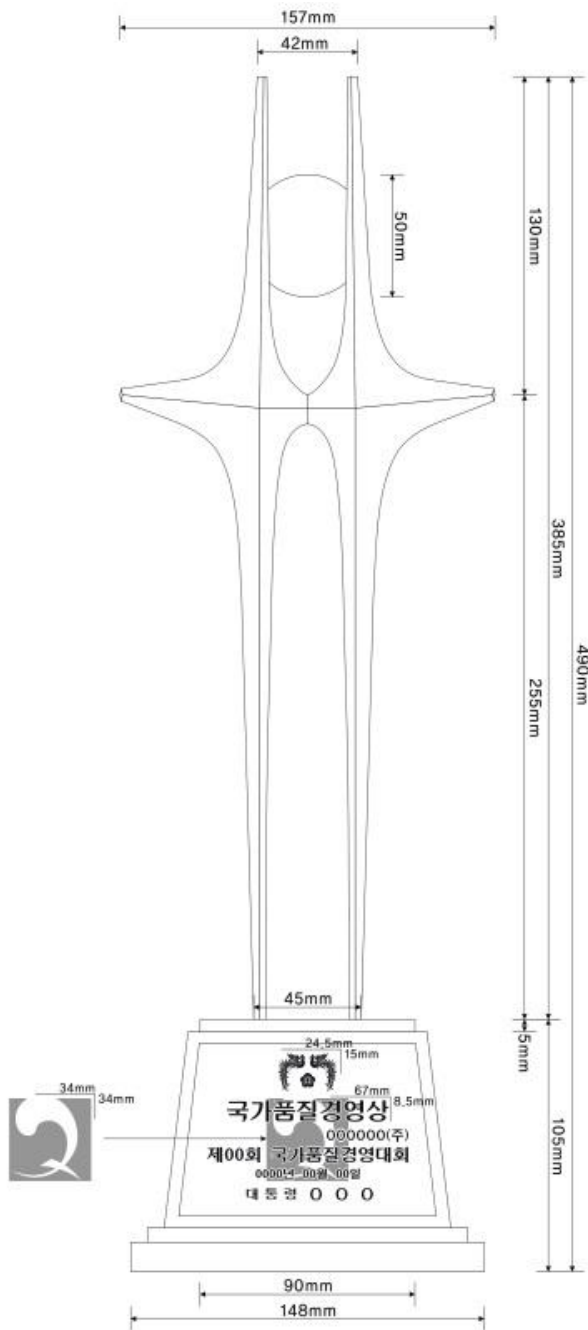
참고2

트로피, 패 및 메달 (샘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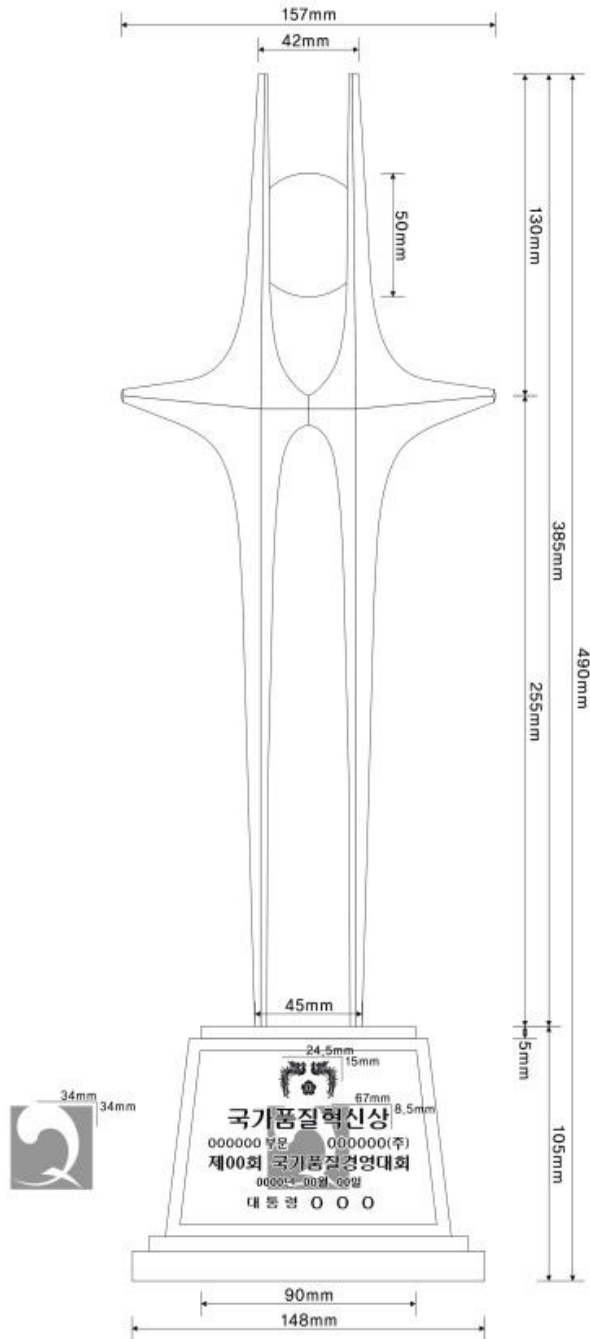
1. 국가품질대상 트로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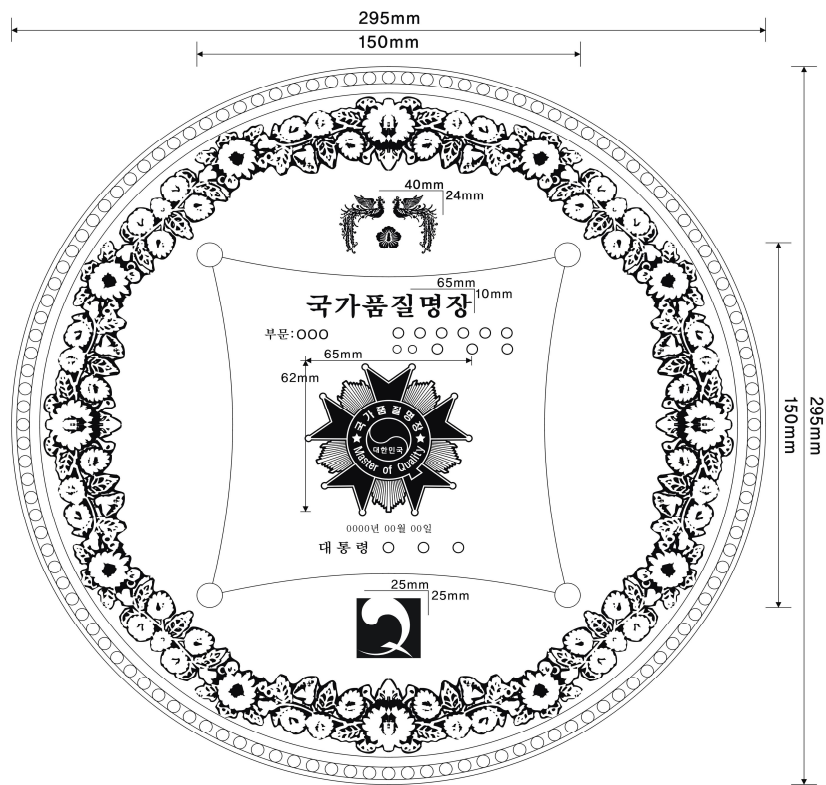
2. 국가품질경영상 트로피



3. 국가품질혁신상 트로피



4. 국가품질명장 패



5. 우수품질분임조상 메달



참고3

국가품질경영대회 개최 현황

연도	대 회 명 칭	일 자	장 소	인원	VIP
'75	제1회 전국품질관리 및 표준화대회	10.30(목)	국립극장	1,500	김종필 총리
'76	제2회 전국품질관리 및 표준화대회	10. 7(목)	시민회관	1,900	장예준 장관
'77	제3회 전국품질관리 및 표준화대회	11. 3(목)	세종문화회관	1,900	장예준 총리
'78	제4회 전국품질관리 및 표준화대회	10. 7(토)	세종문화회관	1,600	최규하 총리
'79	제5회 전국품질관리 및 표준화대회	11.22(목)	세종문화회관	1,600	최각규 장관
'80	제6회 전국품질관리 및 표준화대회	11.19(수)	세종문화회관	1,500	남덕우 총리
'81	제7회 전국품질관리 대회	11.11(수)	세종문화회관	4,000	서석준 장관
'82	제8회 전국공장새마을 품질관리.표준화대회	11.11(목)	세종문화회관	4,200	김동휘 장관
'83	제9회 전국공장새마을 품질관리.표준화대회	11.11(금)	세종문화회관	1,200	진의중 총리
'84	제10회 전국공장새마을 품질관리.표준화대회	11. 9(금)	세종문화회관	1,200	신병현 부총리
'85	제11회 전국공장새마을 품질관리.표준화대회	11. 8(금)	세종문화회관	1,200	신병현 부총리
'86	제12회 전국공장새마을 품질관리.표준화대회	11. 7(금)	세종문화회관	1,200	나웅배 장관
'87	제13회 전국공장새마을 품질관리.표준화대회	11.11(수)	국립극장	1,700	나웅배 장관
'88	제14회 전국품질관리.표준화대회	11.11(목)	국립극장	1,500	나웅배 부총리
'89	제15회 전국품질관리.표준화대회	11.10(목)	세종문화회관	1,500	한승수 장관
'90	제16회 전국품질관리.표준화대회	11.14(수)	COEX	700	박필수 장관
'91	제17회 전국품질관리.표준화대회	11.14(목)	COEX	700	정원식 총리
'92	제18회 전국품질경영대회	11.20(금)	세종문화회관	4,000	노태우 대통령
'93	제19회 전국품질경영대회	11.18(목)	세종문화회관	4,000	황인성 총리
'94	제20회 전국품질경영대회	11.25(금)	세종문화회관	4,000	김영삼 대통령
'95	제21회 전국품질경영대회	11.24(금)	세종문화회관	4,000	이홍구 총리
'96	제22회 전국품질경영대회	11. 4(월)	세종문화회관	4,000	이수성 총리
'97	제23회 전국품질경영대회	11. 4(화)	세종문화회관	4,000	고 건 총리
'98	제24회 전국품질경영대회	11.12(목)	세종문화회관	4,000	김종필 총리
'99	제25회 전국품질경영대회	12.22(수)	힐튼호텔	1,700	김종필 총리
'00	제26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1.21(화)	힐튼호텔	1,700	이한동 총리
'01	제27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1. 7(수)	COEX	1,300	장재식 장관
'02	제28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1.15(금)	COEX	1,300	김석수 총리
'03	제29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1.14(금)	COEX	1,400	고 건 총리
'04	제30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1.19(금)	COEX	2,000	이해찬 총리
'05	제31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2. 7(수)	KINTEX	1,800	이희범 장관
'06	제32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1.24(금)	COEX	1,800	한명숙 총리
'07	제33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1.23(금)	COEX	1,800	김영주 장관
'08	제34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1.20(목)	COEX	1,600	임채민 차관
'09	제35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1.25(수)	COEX	1,600	정운찬 총리
'10	제36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1.23(화)	COEX	1,600	박영준 차관
'11	제37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2.13(화)	COEX	1,600	김형식 총리
'12	제38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1.21(수)	COEX	1,600	김형식 총리
'13	제39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1.28(목)	한국전력공사	1,800	정홍원 총리
'14	제40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1.19(수)	COEX	1,800	정홍원 총리
'15	제41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1.18(수)	COEX	1,800	황교안 총리
'16	제42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1.23(수)	COEX	1,800	정만기 차관
'17	제43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1.8(수)~9(목)	COEX/삼성호텔	2,000	정동희 원장
'18	제44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1.28(수)	COEX	2,000	성윤모 장관
'19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1.13(수)	COEX	2,000	이낙연 총리
'20	제46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1.19(목)	COEX	50	정세균 총리
'21	제47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1.11(목)	COEX	100	이상훈 원장
'22	제48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1.23(수)	KINTEX	2,000	장영진 차관
'23	제49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1.22(수)	COEX	2,000	한덕수 총리
'24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1.20(수)	COEX	2,000	한덕수 총리
'25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1.19(수)	COEX	2,000	김대자 원장

참고4

품질경영 주요성과

□ 품질경영으로 만든 '산업 부가가치 (5위) · 수출 (6위) 강국, 대한민국'

- 제조업 기반 수출 강국인 대한민국 경제성장 신화의 숨은 주역은 국가품질상('75년~)을 중심으로 품질경영 정책 추진 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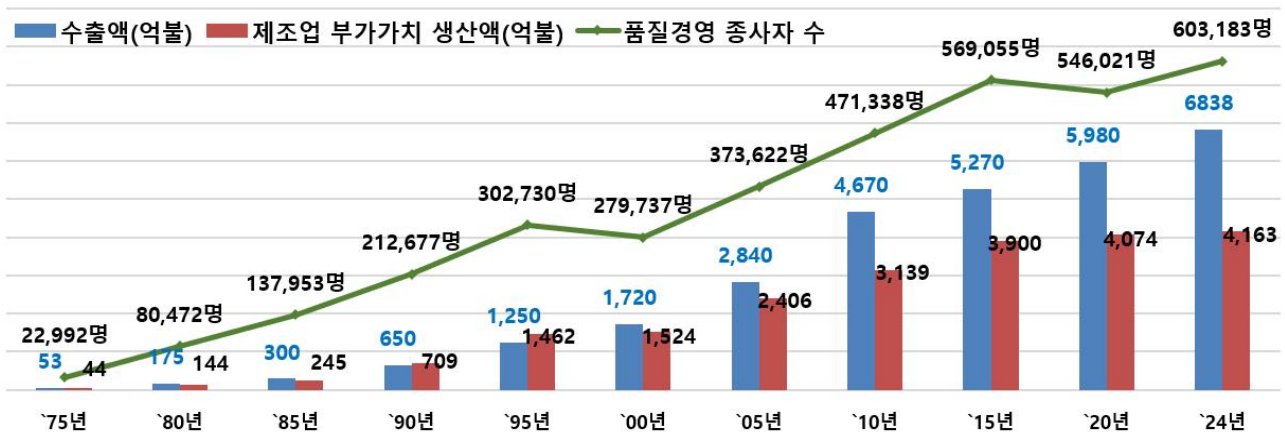
* 주요활동 : 품질경영추진본부 및 시도별 조직 설치, 품질분임조 활성화, 포상제도 운영, 우수사례발표 및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품질경영 문화 확산

- 실제로 '75년 이후, 품질경영 활동 성과의 간접 지표인 품질경영 종사자 수가 25배 성장*2만3천명('75) → 60만3천명('24)하였으며,

- 이와 연계된 산업·무역 관련 경제지표 및 세계 순위도(제조업 부가가치 5위, 수출액 6위) 품질경영 활동과 함께 동반 성장

* (수출액) '24년 6,838억 달러, 세계 6위('75년 29위 59억 달러 대비 규모 115배 성장)
(제조업 부가가치) '24년 4,163억 달러, 세계 5위('75년 34위 44억 달러) 94배 성장

< 품질경영 종사자 및 관련 경제지표 성장률 추이 >



* (출처) 대한민국 국가통계포털, K-stat, 한국표준협회 등록 품질경영 종사자, UNIDO&WorldBank 데이터

□ 산업현장 품질혁신 활동 '직접 경제효과 연간 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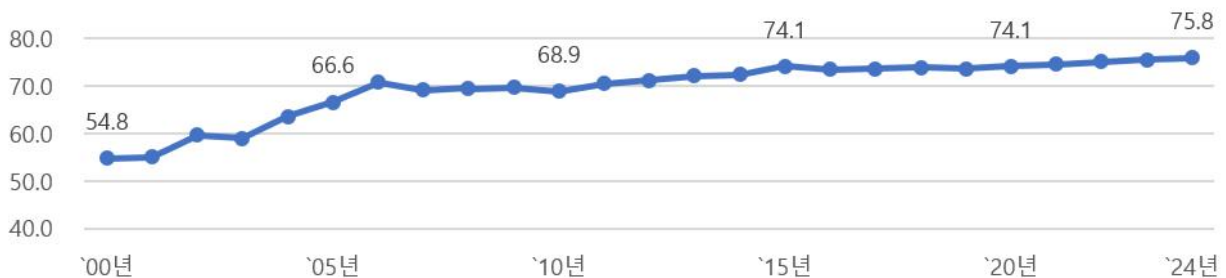
- 기업 현장 근로자들(품질분임조)이 연간 18만건의 개선 활동을 실행,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등 약 6조원의 경제효과 창출

* 전국 9,900개 사업장, 6.2만개 분임조가 제출한 품질경영 활동 결과 추산액('25.6월)

□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서비스 산업 고도화에 기여

- (제조업) 품질경영은 산업 생산·효율성 향상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
 - 新기술·산업 분야에서 품질은 '신뢰받는 기술'의 기준으로 작용, K-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에 핵심적인 역할 수행
 - * (삼성) 6시그마 및 초격차 확보 전략, (현대차) 협력사 5스타 품질 등급제도, (LG전자) 고객경험 중심 품질경영체계(CXM) 구축·운영 중
 - * (UNIDO제조업 경쟁력 순위) '90년 세계 16위에서 '21년 4위로 도약 후 유지 중
- (서비스업) 무형의 서비스 분야에 표준화, 측정·효율화 등 품질경영 개념을 도입하여 서비스산업의 체계화와 고도화를 견인
 - * (금융) 고객민원(VOC) 통계·분석 시스템 도입, (의료) 의료품질 인증제 JCI 도입, (유통·물류) 배송·물류 6시그마 관리기법 도입 등

< 국내 서비스산업 품질 및 고객만족도 향상 추이 >



* 출처: 한국표준협회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2024)

□ 산업 혁신 및 인프라 구축의 마중물 역할 수행

- 품질경영을 통해 산업혁신 환경·문화를 조성하고,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유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질적 성장에 기여
 - * 품질경영종합시책(3년 단위) 수립·시행하여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제시 중

< 제6차 품질경영 종합시책('24-'26) >

- (비전) 디지털 혁신을 통한 품질 강국 실현
- (4대 목표) ①디지털전환 ②중소기업 역량 강화 ③미래대응 ④혁신성장 기반 마련
- (추진과제) 산업별 인프라 고도화, 글로벌 품질표준 대응, 탄소중립 대응 등

참고5

주요기업의 품질경영 추진 우수사례

□ 제조 · 생산 기업 우수사례

기업명	내용
<p>[전기·전자]</p>  <p>삼성전자</p>	<p>품질을 기반으로 초격차를 완성하는 '전략적 품질경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가치와 행복을 위한 초일류 품질 추구'을 품질 비전으로 수립하여 임직원이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최우선에 두고 제품을 생산 • 6시그마, DMAIC, 통합 품질관리 시스템(QMS) 등을 통하여 SCM, Market Driven Change/Contents, 원가 경쟁력의 혁신활동을 전개 • 초격차 전략을 통한 초정밀 품질 안정성과 생산 신뢰성 확보를 핵심 기반으로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사적 품질경영 체계를 전략적으로 연계 추진중
<p>[전기·전자]</p>  <p>LG전자</p>	<p>7단계 품질 게이트부터 등대공장까지, '정밀 품질경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 문제는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본전제 아래 총 7단계의 품질 게이트를 거쳐 단계별 기본 품질 및 안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만 출하시키는 품질, 안정성 평가 체계를 구축·운영 • 고품질 제품의 고객 신뢰도 향상을 위해 6시그마·TPM 등 품질 기법을 도입하여 불량을 감소 및 설비종합 효율과 생산성 향상 추진 • 디지털트윈, 3차물류시스템, AI기반 로봇 자동화 등을 통해 2022년 3월, LG 스마트파크가 세계경제포럼(WEF)으로부터 '등대공장으로 선정
<p>[자동차]</p>  <p>현대자동차</p>	<p>고객 중심·현장 실천·공급망 연계를 통한 '전과정 품질경영 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년대부터 천여 개가 넘는 1차 협력사들의 부품 품질 지속 향상을 위해 5스타 평가제도 도입 등 공급사슬 품질경영 시스템 구축 • 고객 중심의 품질마인드와 현장 위주의 실천 지향적 품질활동 (Quality Excellence & Customer Focus)을 통해 품질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스타 평가제도 : 협력사의 품질수준에 대해 불량 현황, 클레임 비용, 품질경영 활동 등을 매년 평가하여 협력사 선정·육성과 구매 정책에 반영 • 품질 콘퍼런스(2023)를 통해 '품질 최우선' 철학 공유 및 실천
<p>[철강]</p>  <p>포스코</p>	<p>철강 최초 통합 품질경영으로 이룬 '스마트 제조혁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세스 혁신을 품질혁신의 기반으로 삼아, 업무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여 2000년대 철강사 최초로 전사 통합 시스템(POSPIA) 구축 • 2000년대 후반부터는 스마트 품질경영 업무환경을 추진하여, '17년 세계 최초 스마트 제철소 구축 및 '19년 국내 최초 '등대공장' 선정

□ 서비스 기업 우수사례

기업명	내용
[금융]  신한은행	고객신뢰 기반의 전사 품질경영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 기반 고객가치 혁신 금융' 이라는 비전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고객경험 품질을 중심에 두고, 전사적 품질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금융서비스의 정확성, 응답성, 고객신뢰를 향상시키는데 집중 • '신한 품질혁신 2.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고객 불만 사전 예측 및 개선, 모바일 오류율 개선, 대기시간 절감, 고객의 소리(VOC) 분석 시스템, NPS(순추천지수) 도입, 업무 프로세스 품질지수 정량화 추진 <p>* 고객불만 연평균 15% 감소, 서비스품질지수(KS-SQI) 7년 연속 1위 달성</p>
[의료]  삼성서울병원	국제인증 기반 의료 품질 시스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중심의 초일류 의료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 안전 제공을 품질의 핵심가치로 내세우며, 의료 분야에 대한 품질경영을 선도 • 국제 표준의료 서비스 체계인 JCI 인증 취득(2014) 및 유지 중이며, 환자경험조사(PX) 기반 개선활동, 진료 전 과정 위험기반 평가 시스템 도입, 3C 활동(Communication, Cooperation, Care) 등 추진 중 <p>* 응급진료 대응속도 30% 단축, 입원환자 만족도 92점, 진료 중단율 감소</p>
[유통·물류]  CJ대한통운	고객경험 기반 스마트 물류 품질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S 기반 스마트 물류 품질 혁신' 라는 비전을 필두로 정확도·신속성·고객 신뢰를 핵심 품질 요소로 정의하고 AI·빅데이터 기반의 품질 시스템을 도입하여 물류 서비스의 고도화와 차별화 추진 <p>* TES(Technology, Engineering, System&Solution): 첨단 미래물류 시스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시그마 기반 배송 품질지표(DQI) 정량화, VOC 즉시 응답 시스템, 자동화 설비 확대, 품질 리스크 사전예방 체계 구축 운영 중 <p>* 오배송률 35% 감소, 고객 불만 20% 감소, 택배 만족도 업계 1위</p>
[숙박·레저]  롯데호텔	프리미엄 호텔 서비스의 품질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에게 기대 이상의 서비스를 일관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서비스 전 과정에 걸친 품질 표준화 및 실시간 개선체계를 구축 • 'L9 서비스 프로토콜' 제정: 체크인, 룸서비스, 청결, 안내 등 고객 접점 9개 영역에 대한 응대 품질 기준을 수립하여 전 지점 일관된 품질 제공, 고객 체류 전·중·후 프로세스의 품질 체감을 지수화(CXI)하여 관리 중 <p>* 고객만족도 95점 이상 유지, 외국고객 대상 추천지수 30% 향상 등</p>

□ 대한민국 국가품질상(KNQA : Korea National Quality Award)

- 품질경영 활동 유공자(단체, 개인, 품질분임조, 품질명장, 품경우수기업)를 선정하여 서훈·표창하는 정부포상 제도('75년 1회 ~ 현재 51회)
- 선발된 모든 유공자들에게 국가품질상을 수여하고 국가적 품질경영 결의를 다지는 '국가품질경영대회' 매년 개최

<국가품질상 포상부문별 운영현황>

구 분	대 상	연도별 수상			비 고
		'23	'24	'25	
단체	세계적 품질경쟁력을 갖춘 단체	27	21	16	훈포장, 표창
개인	품질경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자	58	62	20	
국가품질명장	산업현장 품질역량·기능 우수자	10	9	12	패(대통령)
품질분임조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입상팀	272	298	316	메달(대통령)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품질경영 활동이 우수한 기업 또는 단체	43	56	59	패(장관)

□ 포상 분야별 운영 개요

① 단체 부문

- (대상) 품질경영 활동을 통해 ①세계시장 선도, ②산업발전 기여, ③기술혁신 등의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업 및 단체

* 대상/경영상 : 기업 경영 전반에 품질경영을 내재화하여 뛰어난 성과를 거둔 기업

** 혁신상 : 12개 혁신분야(AI, DX, ESG 등)별로 품질혁신 활동 성과가 뛰어난 기업

- (절차) 경영진단 모델인 美 말콤볼드리지(MB)기법을 적용하여 기업의 품질경영 활동 분석 및 평가, 이후 개선피드백 보고서 제공

* 포상 심사과정을 통해 기업의 품질경영 활동 분석 후 강점·약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피드백 보고서 제공(삼성전자, LG화학 등 '24년까지 누적 787社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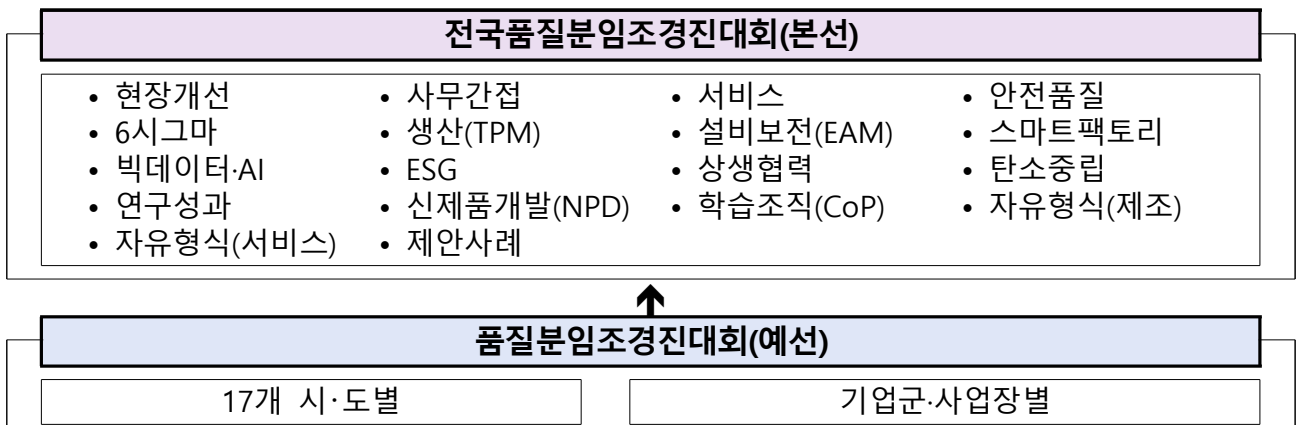
- (전파) 수상기업 우수사례는 중소·중견기업, 동종·이종업계 등이 자유롭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공개

② 유공자 부문

- **(대상)** 산업현장에서 ①품질향상, ②원가절감, ③생산성 향상 등의 품질경영 공적이 우수한 모범 근로자 및 관리자
- **(요건)**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품질경영 성과 창출 및 확산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 **(절차)**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적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품질혁신 활동 검증 및 평가

③ 품질분임조

- **(대상)** 자주적 개선활동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여 품질향상에 기여한 우수분임조를 경진·선발(매년 약 300개 이상의 팀 참가)
 - * 분임조란 기업의 현장 근로자들로 구성된 품질혁신 활동 소그룹으로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조직
- **(절차)** 18개 부문별로 활동사례 PT발표를 실시하며 예선대회(17개 시도(광역시·도)별)를 거쳐 본선대회를 통해 최종 순위(금·은·동상) 결정
 - * 현장근로자들이 부문별 혁신 우수사례를 발표 및 경진하는 산업계의 전국체전 개최



- **(효과)** 창의개선 활동으로 전국 1만여사, 61만 분임원이 연간 약 6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

(25.9.1. 기준)

등록업체	분임조수	분임원수	개선건수	경제적 효과
9,904사	62,369팀	611,381명	186,894건/년	6조원/년

④ 국가품질명장

- **(대상)** 경력 **15년** 이상의 모범 근로자 중 산업현장에서 품질혁신 활동에 헌신하여 현장 근로자들의 귀감이 되는 자를 선발
- **(절차)** 공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능력 필기시험 및 질의 평가 면접 등의 검증을 거쳐 선정(연간 10명 내외)
- **(현황)** '91년부터 현재까지 **1,583명**의 국가품질명장 배출

(단위: 명)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대기업	1,212	11	8	4	5	3	10	1,253
중견기업	33	1	4	0	2	1	0	41
중소기업	137	1	0	1	0	1	0	140
공기업	122	10	4	4	3	4	2	149
합 계	1,474	23	16	9	10	9	12	1,583

- **(효과)** 생산현장 혁신활동의 리더로써 기업 경영성과에 기여하고 현장 근로자 및 협력업체를 지도하는 전문가 역할을 수행

* 현장 근로자, 특성화고 학생들의 멘토 및 롤모델 등으로 활동하며 품질활동 확산 전파

⑤ 품질경쟁력우수기업

- **(개요)** 신청 기업에 대해 매년 품질수준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선정·유지하는 준 인증제도
- **(절차)** 현지심사(9등급, 1,000점 만점)를 통해 대기업·공공기관 3등급(850점) 이상, 중견 4등급(800점) 이상, 중소 5등급(750점) 이상 기업을 선정
- * '과거 10회 + 당해 1등급(11회째)' 선정 → 명예의 전당에 헌정('24년까지 34사)
- **(현황)** '94년 '품질경영 100선' 제도 실시 이래 총 **1,760사** 선정

(단위: 사)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대	507	7	1	3	4	4	4	530
중견	123	21	16	16	19	24	22	241
중소	632	14	3	8	11	17	17	702
공공	213	17	9	12	9	11	16	287
합 계	1,475	59	29	39	43	56	59	1,760

□ 부문별 포상 종류 및 훈격

부문	종 류		훈 격	포상 대상 및 내용
단체	종합상	대상	대통령표창	해당 단체의 사업 전반에 대한 품질경영 활동 평가하여 선정 * 제조, 서비스, 공공, 교육, 의료 등
		경영상	대통령표창 ~ 장관표창	
	부문상	12개 분야별 혁신상	대통령표창 ~ 협회장표창	해당 단체의 특정 분야와 관련된 품질 경영 활동만 평가하여 선정 * 제품품질, 생산, 서비스, 디지털전환, 인재개발, 인공지능(AI) 등
	특별상	지속가능 경영상	대통령표창 ~ 장관표창	'대한민국지속가능성대회'에서 수상한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
		우수 지자체상		분임조대회 개최 등 품질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지자체에 수여
개인			훈장, 포장 및 대통령표창 ~ 협회장표창	품질경영 활동을 통해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금탑, 은탑, 석탑 등)
국가품질명장			대통령 명의 패 및 증서	현장근무 15년 이상의 근로자 중 품질경영 성과가 우수한 자
품질분임조			대통령 명의 메달 및장관 명의 증서	'국가품질혁신활동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우수 분임조(금상, 은상, 동상)
			장관상	우수분임조 중 최우수팀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장관 명의 패 및 증서	신청기업에 대해 매년 품질경영 활동을 평가하여 선정(준 인증제도)